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3**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 1980년대 단체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사업

---

최종 보고서

---

성 공 회 대 학 교 민 주 자 료 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

2003년 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연구용역(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2003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 백원담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

<연구참여자>

- ◇ 공동연구원 : 조현연 (성공회대 연구교수)
- ◇ 공동연구원 : 강병익 (성균관대 박사과정 수료)
- ◇ 공동연구원 : 서복원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사업의 기본 목적 및 활용방안

- ※ 본 연구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으로, 향후 사전에 수록될 항목의 대상이 되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및 단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 정리 자료는 향후 사전에 수록될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의 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고의 집필과 검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 기초조사 연구작업 진행경과

- ※ 2003년 6월 : 기초조사 연구사업 용역계약 체결
- ※ 2003년 9월 : 1차 중간보고회
- ※ 2003년 10월 : 2차 중간보고회
- ※ 2003년 11월 30일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2003년 12월 : 최종보고회 (예정)

---

(제1부 : 단체편)

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조사 최종보고

---



◇ 연도별 단체 전체 항목 ◇

<~1980년>

- \* 청계피복노동조합(70.11.27~)
- \* 원풍모방노동조합(72.07.07~)
- \* 콘트롤데이타노동조합(73.12.20~)
- \* 무궁화메리야스노동조합(76.01.11~)

- 01.15 남화전자노동조합
- 04.19 한국지퍼(YKK)노동조합
- 05.05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 05.10 롯데제과노동조합
- 05.17 서통노동조합

<1981년>

- 02. 전국민주학생연맹(민학련)

<1982년>

- 05. 한국공해문제연구소(공문연)

<1983년>

- 06.18 여성평우회
- 09.30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1984년>

- 01.06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
- 03.30 에스콰이어노동조합
- 04.14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
- 04.17 대한마이크로전자노동조합
- 05.21 금강제화노동조합
- 06.07 가리봉전자노동조합

- 06.09 대우어패럴노동조합
- 06.11 선일섬유노동조합
- 06.29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
- 07.14 효성물산노동조합
- 07.24 대왕제지노동조합
- 08.07 라이프제화노동조합
- 09.01 유니전노동조합
- 09.18 협진양행노동조합
- 10.07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일명 ‘깃발’그룹)
- 10.19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
- 11.03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
- 12.15 협진화섬노동조합
- 12.19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 12.26 대우자동차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1985년>

- 01.14 경동산업노동조합
- 01.23 진도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
- 03.03 성원제강노동조합
- 03.03 동일제강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
- 03.09 해태제과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 03.29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 03. 반공해운동협의회
- 04.10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
- 04.17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 04.17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 05.04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 05.31 공해문제성직자협의회
- 06.01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구민련)
- 06.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
- 08.25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 11. 민족미술협의회(민미협)
- 12.2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1986년>

- 01.21 박종만추모사업회
- 02.07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 03.08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
- 03.29 구국학생연맹(구학련)
- 04.29 전국반제반과소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민민학련)
- 05.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전노추)
- 06.21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한출협)
- 06.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 08.09 제현의회(CA)그룹
- 08.12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 08.16 동일기업노동조합
- 09.04 서울시 20개 재개발지역 주민연합
- 09.08 고려대 애국학생회(애학회)
- 09.13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 09.15 연세대 반미구국학생동맹(구학동)
- 10.18 서울영상집단
- 10.21 미·일경제침략저지범국민운동연합
- 10.28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 <1987년>

- 01.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 02.15 87서울노동자 임금투쟁공동실천위원회
- 02.18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 02.26 전국농민협회
- 03.21 한국여성노동자회(여노회)
- 04. 한국사회경제학회(한사경)
- 04.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 05.08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
- 05. 노동계급그룹
- 05.15 KBS시청료거부여성연합
- 05.27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
- 05.29 호헌철폐와 민주개헌쟁취를 위한 서울지역학생협의회
- 06.26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 06.26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 07.06 민주헌법쟁취 전국노동자공동위원회(민헌노위)
- 07.12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노민위)

- 07.17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서철협)
- 07.19 서울지역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서해투)
- 07.19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인해협)
- 08. 한국정치연구회(한정연)
- 08.13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지하철노조)
- 08.18 한신대직원노동조합
- 08.19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 09.12 한국여성민우회(여성민우회)
- 09.17 민족문학작가회의(작가회의)
- 09.27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 09.27 전국산업재해노동자연맹(산재노련)
- 09. 문학예술연구회(문예연)
- 10.16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 10.19 도시노점상연합회
- 10.27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 11.03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서울노련)
- 11.2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 11. 서울지역 비상학생협의회(서비협)
- 11.23 군정중식·단일화쟁취 국민협의회(국협)
- 11.25 민중대표백기완선생선거운동본부(백본)
- 11.26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11.27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금노련)
- 12.02 서울지역제화공노동조합
- 12.12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원노협)
- 12.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 12. 한물결청년회
- 12.(?)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KPF)

(날짜미상)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

(날짜미상)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

### <1988년>

- 01.15 구로구청부정부표함 밀반출 및 경찰폭력 희생자 공동대책위원회
- 01.17 서울지역인쇄공노동조합
- 01.29 (안기부 발표일자) 반미청년회
- 01. 성남청년회
- 01. 해누리청년회
- 02.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 02. 인천지역노동자그룹
  - 02.01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 02.11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협의회(민출노협)
- 03.06 민중의당
  - 03.11 야권통합을위한청년학생공동위원회
  - 03.12 연구·전문기관 노동조합협의회
- 03.29 한겨레민주당
  - 03. 인천민주청년회(인민청) 건설준비위원회
  - 03. 수원사랑민주청년회(수민청) 준비위원회
  - 03.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 04.06 전국언론노동조합협의회(언노협)
  - 04.14 반민정당총선투쟁연합(총투련)
  - 04.12 서울지역대학생총연합 건설추진위원회(서진추)
- 04. 한국사회연구소(한사연)
  - 04. 수원여민회
- 05.13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 05.17 광주학살, 부정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지역 민주투쟁연합(서민투련)
  - 05.18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5월공동투쟁위원회
  - 05.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05.29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
- 06.07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 06.18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
- 06.18 사월혁명연구소
  - 06.25 성남지역노동조합협의회(성남노협)
- 07.06 서울운수노동조합협의회(서운노협)
  - 07.11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한민연)
  - 07.16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연전노협)
  - 07.17 한국공간환경연구회
- 08.03 전국대학강사협의회(전강협)
  - 08.10 삼청교육대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 08.(중순경)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인천노동상담소)
  - 09.03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 09.03 한국역사연구회(한역연)
  - 09.10 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
  - 09.11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 09.12 전국화물운동노동조합연맹
  - 09.14 진보정당건설을위한정치연합(진보정치연합)
  - 09.15 용인민주청년회
- 10.06 88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노투본)
  - 10.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 10. 동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 10.28 부정비리주범전·이구속처벌및광주학살5적처단을위한서울지역학생투쟁연합(학투련)
- 10.30 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농협)
- 11.05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 11.12 구로역사연구소
- 11.26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 12.01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극협)
- 12.04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통불협)
- 12.07 서울지역아파트노조
- 12.10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건설노협)
- 12.22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전국회의)
- 12.23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 12. 자주민주통일(자민통)그룹

(날짜미상)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안양PD그룹)

(날짜미상) 신갈기흥청년회

#### <1989년>

- 01.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 01.20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청대협)
- 01.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 01. 부천여성노동자회
- 02.10 전국해직언론인원상회복쟁취협의회
- 02.11 (구속일자)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부>노회)
- 02.25 인천여성노동자회(인여노)
- 02. 전국시설관리노조협의회
- 02. 부천지역 임금인상 및 노동법개정투쟁본부
- 02. 민족해방활동가조직(사건)
- 03.01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
- 03.25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철연)
- 03. 인천노동자대학(노대)
- 04. 한국교육연구소(한교연)
- 04.23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전일노)
- 05.01 성남지구노동조합총연합(성남노련)
- 05.16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 건설을 위한 서울지역민주주의학생연맹(서민학련)
- 0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 05.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
- 07.22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부노협)
- 07.31 (구속일자)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회(사건)(전해투)

- 08.20 (구속일자) 한미문제연구소
- 08.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 09.23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노문연)
- 10.14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 10.28 한국여성연구회(여성연)
- 11.04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천주교전국공동위원회(천공위)
- 11.0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11.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애청)
- 11.11 전국빈민연합(전빈련)
- 11.12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12.14 (구속일자) 반제애국청년회
- 12.16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건설노련)
- 12.16 교육문예창작회
- 12.18 전국여성농민위원회
- 12.28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맹(경기노련)

(날짜미상)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날짜미상) 성남터사랑청년회

### <1990년>

- 01.09 오산 다함께일어서는사람들(다섬)
- 01.16 전노협지원공동대책위원회(전노협지원공동대위)
- 01.2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 01.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 02.13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
- 02.15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기문노련)
- 03.21 한국노총직원노동조합
- 03. 부친사랑청년회(부사청)
- 04.28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
- 04.13 민중의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 04.14 민족문화사연구소(민문연)
- 04.21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국민연합)
- 04.24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 05.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 06.01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 07.10 한국정신대연구소
- 07.13 (구속일자) 아라리연구원
- 07.18 성남지역노조탄압분쇄공동대책위원회

- 07.19 서울지역대학생문예연합
- 08.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 09.05 전노협후원회
- 09.25 단협변경명령철회 및 노조활동자유사수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 10. 상계어머니교실
- 11.10 민중당
- 11.1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 12.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연대회의)

### <1991년>

- 01.23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 02.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
- 02.07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 03.14 (구속일자) 경수지역노동자연합
- 03. 반핵평화운동연합(반평)
- 04.27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범국민대책회의)
- 05. 강경대군 구타치사 범국민대책회의
- 05.06 고박창수위원장 옥중살인규탄과 노동운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책위원회
- 05.25 고김귀정열사 폭력살인대책위원회
- 07.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창준위)
- 07. (안기부 발표일자) 애국동맹
- 07.14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 08.26 (구속일자)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제파그룹)
- 09.19 살기좋은구로지역만들기여성회
- 10.09 ILO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
- 10.13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합(의보총련)
- 11. 국제사회주의자들(IS그룹)
- 11.12 (구속일자)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
- 12.0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 12.15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정연)

### <1992년~1993년>

- 01.10 (구속일자) 노동자권력쟁취를위한국제사회주의자일동(일동그룹)
- 01.13 안양사랑청년회(안사청)
- 01.19 한국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 01.21 (구속일자) 안산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 02.07 통합민주당
- 02.10 빈민여성교육선교원(빈여교선)
- 02.12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 02.20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선감연)
- 02.23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 02.26 부천시흥공동대책위원회(부천시흥공대위)
- 07.12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08.15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
- 08.29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대학노련)
- 09.27 (구속일자) 노동자문화마당 ‘일터’
- 10. 혁명적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혁사노)
- 11.05 주한미군의윤금이씨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11.23 (구속일자) 노동자정치활동센터
- 12. 평화와통일을위한남북나눔운동

93. 02.18 시민환경연구소



---

---

〈~1980년〉

- \* 청계피복노동조합(70.11.27~)
- \* 원풍모방노동조합(72.07.07~)
- \* 콘트롤데이타노동조합(73.12.20~)
- \* 무궁화메리야스노동조합(76.01.11~)

- 01.15 남화전자노동조합
  - 04.19 한국지퍼(YKK)노동조합
  - 05.05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 05.10 롯데제과노동조합
  - 05.17 서통노동조합
- 
-



O1

청계피복노동조합 (☞ 70년대 조사자료집 참조)

O2

청피노조

O3

O4

O5

1970.11.27~

O6

서울

O7

공개 / 합법-법외(불법)-합법

O8

O9

O10

O11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결성된 <청피노조>는 이후 숱한 우여곡절과 위기를 견뎌 내면서 을지로 6가에 집중되어 있는 동화상가, 통일상가, 평화상가, 그 밖에 중부시장 등의 8백여개 사업장에서 저임금·장시간·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2만여 노동자들의 권익옹호와 인간적인 삶의 획득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청피노조>는 하루 14~16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10시간대로 단축하여 오후 8시에 작업을 종료하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작업병의 온상인 다락방 작업장을 1975년에 철거하게 했으며, 임금인상, 주휴일제 확립, 퇴직금·상여금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근로조건개선의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 5.17비상계엄하에서 다른 민주노조간부들과 마찬가지로 민중덕 위원장을 비롯한 청피노조간부 7명이 계엄사에 연행되어 노조해산위협을 받았고, 1981년 1월 6일자 서울시는 노조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1월 22일 자정을 기해 정사복경찰에 의한 사무실 폐쇄가 이루어졌다(임정남, 『청계노조 합법성쟁취대회』, 『현실과 전망1』, 풀빛, 1984, pp.248-250). 이에 대항하여 1981년 1월 30일 오후 6시 청피노조의 전태삼 조직부장 등 노조원 21명은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AAFLI)에서 노동법개정, 청피노조의 부활, 부당한 처사를 내린 서울시장의 사퇴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6시간 동안 점거농성을 벌였다(조선일보 1981.2.1;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pp.97-99).

노조가 강제해산 당한 뒤 노동조건은 70년도 전태일 사건 이전의 상태로 후퇴해버렸다.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해산 당시의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은 1984년 4월 8일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청계피복노동조합복구대회’를 가졌는데, 그 동안 노조해산 후 비공식적으로 조합활동을 해왔던 <청계모임>회원 및 조합원 343명과 내빈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소선 여사를 노조고문으로 재추대했으며 전 노조위원장 민중덕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임정남, pp.250-252). 그리고 이어 1984년 4월 14일 오후 8시 30분 노조원 80여명과 문익환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신당동 노조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민중덕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81년 1월 서울시가 청계피복노조에 대해 강제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하고 이의 철회를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노조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선일보 1984.4.17). 4월 8일 청피노조복구대회가 열린 이후부터 조합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

하자 노동부는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조합활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주장을 조합측에서 일축해 버리자 정부당국과 청피노조 사이에 노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쟁의 원인과 앞으로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1일 형제교회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개의 민주·민권·종교단체 대표들이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합법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복구대회 이후 6개월여 동안이나 청피노조 합법성에 대한 정부당국의 답변이 없자 마침내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9월 19일 오후 1시에 전태일이 분신한 인간시장 바로 그 장소에서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쟁취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회 개최 장소인 평화시장 앞길이 경찰차 수십 대와 수백 명의 경찰이 봉쇄하자, 노동자와 학생 약 2천여명은 청계천 6가 고가도로 위에서 그리고 동대문 일대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청피노조 조합원 17명을 비롯하여 노동자, 학생 등 122명이 연행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구타와 최루탄 파편으로 부상당했다. 이어 제2차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대회를 10월 12일 평화시장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다시 무산되자 오후 1시 10분 경 을지로 5가 로터리, 광희동 등지에서 청계천 노동자들과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서울시내 대학생 2천명은 노동법개정과 청계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임정남, pp.254-269;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pp.126-127).

(그러다가 마침내) 지난 81년 전두환정권이 들어선 뒤 강제해산되었던 청계피복노조(조합장 김영대 金榮大)가 1988년 5월 2일 관할종로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아 해산 7년만에 다시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청계피복노조는 87년 12월 노조를 재조직, 노조설립신고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했으나 그동안 지역노조에 대한 불인정방침에 따라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었다. (『조선일보』, 1988. 5. 3)

O12

민중덕(위원장), 신광용·황만호·김향숙·김영선(부위원장), 김영대(사무장)

O13

O14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임정남, 「청계노조합법성쟁취대회」, 『현실과 전망1』, 풀빛, 1984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청계피복노동조합복구선언」, 61쪽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조선일보, 1981.2.1, 4.17

O1

원풍모방노동조합 (☞ 70년대 조사자료집 참조)

O2

원풍노조

O3

O4

O5

1972.7.7~1982.9.27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원풍모방은 1953년 8월 21일에 설립된 한국건방주식회사(1958년에 한국모방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를 모태로 하고 있다. 1960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노동조건들이 저하함으로써 누적된 노동자들의 불만은 활발한 노동쟁의로 표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정권은 1963년 4월 17일 쟁의권 부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모방의 노동자들도 노조설립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회사의 여러 가지 방해공작을 통해 회사가 주도하는 어용노조가 1963년 9월 28일에 결성되었다. 당시 한국모방은 동일업종의 평균임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은 상태였고, 조합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도 결여되어 있어 노조 자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도 누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70년 초 국세청에 의한 세무사찰 결과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되자 회사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 결과 박용운이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박용운은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지낸 바 있는 군인출신으로 노조에 대한 이해나 협력의 의사를 찾아 볼 수 없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인물이었다. 한편 정영오를 지부장으로 하는 노조는 섬유노조본부에 대한 의무금 미납 사실과 퇴직금 및 임금인상문제를 둘러싼 대의원들에 의한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원풍모방의 민주노조운동의 노동자들의 소모임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원풍모방 노동자들은 1971년 10월경부터 가톨릭의 도요한 신부, 영등포산업선교회, 경수산업선교회의 안광수 목사, 조지송 목사 등과 친교를 맺고 소그룹을 만들어 나갔다. 이들 소모임 활동가들은 주축으로 1972년 5월로 예정된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지 않자 7월 2일 63명이 모여 한국모방 1천2백명 조합원 구제위원회를 조직하고 1천47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섬유노조에 한국모방노조 197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요구투쟁을 전개하다가 7월 7일 '한국모방 노동조합 정상화 투쟁위원회'로 발족시켰다. 투쟁위원회는 호소문과 농성투쟁을 통해 섬유노조로부터 대의원대회 개최를 이끌어 냈고, 지동진을 지부장으로 하는 민주노조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O11

1979년 8월 11일, YH사건을 계기로 박정희정권은 이른바 '외부세력 실태조사'라는 명분을 세워 노동운동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조사내용은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용공성 여부와 노동조합이

나 개별 노동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였다. 원풍모방 노조는 바와 같이 <JOC>·<도시산업 선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표적이 되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두 달 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살해되자, 그의 죽음은 민주화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바람은 노동계에도 이어졌다. 원풍모방 노조원들은 11월 24일에 YWCA에서 개최된 ‘통대선출 저지 국민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고, 노총회관에서 열린 ‘노동기본권확보 전국궐기대회’에 참여하여 농성을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신군부는 노총회관 농성을 해산한 지 3일 후이자, 서울역 학생시위 해산 2일 만인 5월 17일 밤 12시를 기해 전국에 계엄확대조치를 발표하고, 광주항쟁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으로 민주운동세력과 노동운동세력에 엄청난 탄압을 자행하게 된다.

신군부는 안기부와 합수부를 동원하고 회사의 협조하에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원풍모방에 대한 본격적인 파괴공작에 착수했다. 신군부는 이른바 ‘노동계 정화조치’라는 명목으로 원풍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주도했다. 결국 방용석지부장과 박순희부지부장은 수배를 받았고 계엄사에 48명이 연행되어 4명은 순화교육, 14명은 사표강요에 의한 해고조치를 받게 된다.

신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직면한 노조내부에 설상가상으로 조직분열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1981년 2월 18일에 개최된 연차대의원대회를 통해 새 집행부가 꾸려졌지만, 전지부장인 이문회를 중심으로 한 이상배, 양병욱, 박영수, 최득수 등은 임원재선출을 주장하며 조합내부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원풍모방노조를 부산소재 원풍타이어노조와 통합시키려는 공작을 시도했다. 하지만 10개월간에 걸쳐 작업한 통합대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는 QC(품질관리)활동을 전개하는 등 탄압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회사는 QC운동방해라는 명목으로 양분옥 조사통계부장과 신필섭대의원을 해고했다. 이러한 해고결정은 수년 동안 지켜온 단체협약 제23조의 징계결정의 노사합의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양분옥과 신필섭의 해고반대투쟁이 좌절되자, 조합원들간에 집행부에 불신이 가중되었고, 이무술조합장의 사퇴를 계기로 조직분열양상은 일반조합원에게 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조는 1982년 3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성순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며 조직의 재정비하고, 회사측에도 작업정상화를 위한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폭력행사와 해고통보, 노동쟁의신고로 대응했다. 이윽고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27일, 경비실에 집결하고 있던 남자담임 등 40여 명이 총무과 사무실에 들어간 지 30여 분이 지난 1시경 우르르 몰려나와 회의중이던 노조사무실의 문을 부수고 한꺼번에 들이닥쳐 조합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몰고 정성순 조합장과 노조사무원 김인숙을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정조합장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수라장이 된 노조사무실 주변에 다시 200여명의 폭력배들이 동원되었고, 노조는 상집회의를 통해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은 추석날인 10월 1일 까지 계속되었지만, 기관과 회사측은 가족까지 동원하여 농성자들을 협박·회유하였고, 이윽고 30일과 1일, 2차례에 걸쳐 폭력배들이 농성장에 난입하여 300여 명의 조합원들을 해산시켰다. 이들은 무자비한 폭력행사로 80여명의 조합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의 경우 72명의 부상자로 기록) 등 이 날 원풍모방과 대립동 일대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10월 7일부터 조합원들과 원풍모방 노동조합 문제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출근투쟁을 전개한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조탈퇴 각서를 거부하자, 정권은 “각서를 거부하는 모두에게 사표장을 받아내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노동부의 조합원 성분분석에 따른 긴급명령은 A, B, C, D급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회사와 경찰은 A급은 구속, B급은 해고 및 구류조치, C급은 각서 및 사표,

D급은 출근하도록 한 것이고, 출근이 가능한 D급 인원은 총 869명 중 방관자에 속한 227명뿐이었다. 각 경찰서와 행정관서에 하달된 명령에 따라 가족까지 동원하여 사표강요, 강제취향, 연행 등 협박이 조직적으로 시작되었다.

9.27사태 이후, 조합간부 8명이 구속되고, 55명이 구류선고를 받고 39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농성과 정에서 약 2백 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고 5백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강제해고를 당했다. 조합원들은 12월 5일부터 광주 한빛교회, 전주 중부교회, 서울 새문안교회, 대전 제일감리교회, 군산 동부교회, 그리고 울산, 대구 등의 교회 집회에 가서 탄압사례를 고발했다. 12월 10일 최영숙, 노금순, 김금자, 황선금, 박혜숙, 양분옥, 임재수 등 노조간부들에게 산업선교회관에 원풍조합원들을 더 이상 있게 할 수 없으니 정리하라는 인명진 목사의 요청에 따라 1983년 1월 19일 1백여 명의 조합원들은 모임을 갖고 조합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구속된 간부들의 뒷바라지를 할 간부 몇 명을 선출하고 그 동안 산업선교회관에서 기숙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해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다.

원풍모방 노동조합사건에 대한 재판은 1983년 2월 5일 차언년, 김숙자의 재판을 시작으로 2월 12일 박순애, 이재호, 그리고 3월 26일에는 정선순, 양승화, 이옥순, 박순희, 방용석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모두 16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는 매 재판 때마다 150~200여 명의 조합원이 방청했다. 감옥에 있던 간부들은 세 차례에 걸친 단식투쟁을 벌였는데, 1차 단식은 2월 17일부터 5일간, 2차 단식은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16일간, 3차 단식은 7월 7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되었다. 요구사항은 1차 때는 책과 편지에 대한 규제완화, 구치소내의 활동자유 등이었으며, 2차 때에는 노동운동 말살정책 중지, 원풍모방 노동조합 정상화, 양정모(국제그룹 회장)와 폭력배 처벌, 구치소내의 차별대우 철폐 등, 3차 때에는 2차 때의 요구사항 이외에 공정한 재판, 국제그룹 상품불매운동 전개 등이었다.

한편 원풍노조 대책위원회는 5월 25일 오후 7시 30분 천주교 홍제동성당에서 1천 5백여 명의 노동자, 청년, 학생 및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를 통하여 원풍노동조합에 가한 당국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야만성을 규탄하였다. 구속된 간부들은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는데, 그 뒤 1983년 8월 12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형집행정지로 모두 석방되었다. 이후 원풍모방 노동조합은 범외노조활동을 하기로 결의하고, 매월 1회의 전체모임과 부서모임, 원풍회보 발행(23호까지 발행)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1984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1985년에는 그 동안 노동조합을 파괴하여 온 정한주 노동부장관 인책요구를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O12

방용석, 차언년, 박순희, 김숙자, 박순애, 이재호, 정선순, 양승화, 이옥순,

O13

O14

원풍모방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민주노조10년: 원풍모방 노동조합활동과 투쟁』, 풀빛, 1988

#### <연구팀 자료>

\* **구지희**(원풍모방노조 회계감사):

원풍모방 노조는 1970년대 대표적인 민주노조였음.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에 의해 추진된 ‘노동조합정화시책(1980. 8. 21.)’에 의거 1980. 10. 16. 이 노조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에 대한 조합

원 제명조치와 같은 달 31일 해고가 있었음. 1980년 12월 계엄사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 48명이 연행되어 이들 중 14명은 강제 사표(신청인 포함)를 내고 4명은 삼청교육대로 보내졌음.

O1

콘트롤데이터노동조합 (☞ 70년대 조사자료집 참조)

O2

O3

O4

한국노총 금속노조 영등포지역지구

O5

1973.12.20~1982.9

O6

서울 영등포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콘트롤데이터 노동조합은 노동자 7명이 1973년 12월 20일 분회를 결성하고 1974년 1월 9일 전국금속노조 영등포지역지구 콘트롤데이터분회의 간판을 달고 활동을 시작했다(이태호 엮음,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p132).

O11

1980년 계엄하에서 노총 평화조치를 통해 이영순 지부장과 유옥순 부지부장이 강제로 간부직을 물러나 조합원으로 현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부지부장이었던 한명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다. 노조는 1980년 겨울부터 단체협약을 크게 개정기로 하고 단체협약 301조(중업원에 대한 징계, 감원, 해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 콘트롤데이터가 보세공장이므로 생산성과 인사관리만 잘하면 놀랄 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독일처럼 노사가 회사운영에 함께 참여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내용의 항목을 넣기로 하고 임금인상률도 12월 14일부터 단체협약 개정들을 중심으로 노사협의를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년이 지난 1982년 1월 19일 제13차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회사는 노사협의 중인 1월 30일 일방적으로 노동쟁의 발생고를 하여 화해무드를 깨고 말았다. 1982년 2월 19일 회사식당에서 노조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대책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태업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는 이영순 전 지부장, 유옥순 전 부지부장, 이태희 총무부장, 박영선 섭외부장, 김미규 운영위원, 박인순 대의원 등 6명을 갑자기 해고했다. 3월14일 노조는 긴급 임시운영회의를 열고 ①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할 것 ②노동쟁의 신고, 남자 관리자 임금 10% 우선 지급 등 시행착오를 중지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임해줄 것 ③조합원이 대동단결하여 모든 것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어서 노조는 철야농성과 정상근무를 반복하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미국 본사에서 부사장 등 6명을 한국으로 보내 6월 3일부터 노조와 협상을 했으나 4일 새벽 2시반 쯤 경찰 기동대 2백여명이 회의장에 몰려들어와 조합원 49명을 강제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국은 콘트롤데이터노조를 도시산업선교회(도산)와 연계시키고자 했고, 언론에 의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합원 50여명이 7월 10일 오전 8시 반쯤 노동부로 물러가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노동부 현관 앞에서 ‘공장철수 반대’, ‘노동부는 해고자의 복직을 반대하지 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이에 대한 장관의 약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오전 10시 40분쯤 들이닥친 전투

경찰과 사복형사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었고, 회사측은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구사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같은 책, pp.132-160).

O12

박명자(초대 분회장), 도우숙·이영순(초대 부분회장), 이영애(초대 총무부장), 한점옥(초대 조직부장), 최영구(초대 교육선전부장), 김지영(초대 쟁의부장), 최영숙(초대 부녀부장), 김영옥(초대 체육부장), 1977.5.30 임시대의원대회: 이영순(지부장), 유옥순·한명희(부지부장), 이부임(사무장), 나향준·김정호(회계감사)

O13

O14

이태호 엮음,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O1

무궁화메리야스노동조합 (☞ 70년대 조사자료집 참조)

O2

O3

O4

O5

1976.1.11~??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무궁화 주식회사는 전체 노동자수가 280명 정도로 남성이 10%, 여성이 90%인 여성 중심의 사업장이었다.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1976년 1월 11일 전국섬유노조 서울지역지부 <무궁화 메리야스 분회> 결성식을 서울지역지부 사무실에서 개최했다(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p89; 이태호 엮음,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p46).

O11

<무궁화 메리야스 전국섬유노조 서울지역지부 분회>는 결성 직후부터 사측의 탄압과 회유로 노조간부들이 사퇴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분회의 요구안을 회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준법투쟁’을 통해 관철해 나갔다. 하지만 1980년 5월 18일 계엄령 확대실시 이후 김주철 당시 분회장이 부당해고되고, 이어 분회장을 맡은 권영숙이 해고되는 등 노조간부들이 다수 해고된 이후 다시 어용화되었다(이태호, pp46-57; 민주노총, pp.89-90).

O12

박춘식(1대 분회장), 김명자(1대 부분회장), 박순남(1대 조직부장), 김주철(1대 총무부장, 3대, 5대 분회장), 조용혁(1대 조사통계부장), 임봉식(3대 부분회장, 분회장 직무대리, 4대 분회장), 김순교(4대 부분회장), 신숙교(부녀회장), 권영숙(4대 부분회장, 분회장 직무대리, 6대 분회장)

O13

O14

이태호 엮음,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O1

남화전자노동조합

O2

O3

O4

O5

1980.1.15~1981.7.11

O6

서울

O7

합법

O8

O9

O10

서울 구로에 위치한 남화전자의 노동자들은 이봉우를 중심으로 그 동안 사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연시켜온 임금과 상여금 인상문제가 조직적 대응을 통해 쟁취된 것을 계기로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야학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그리고 원풍모방, YH 노조, 반도상사 노조의 사례를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노조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눈치챈 회사측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봉우, 성화순, 한성순 등 32명이 모여 1980년 1월 15일 오후 8시 당시 마포구에 있는 연합노조 서울지역지부 사무실에서 연합노조 간부들의 지도로 노조 결성식을 가졌다(이태호 엮음,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pp.171-178;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pp.95-96).

O11

같은 시각 회사 1층에서는 1시간 동안 강제 잔업을 명령하고 사장과 화학노조 간부들이 들어가 노조 결성대회를 가졌다. 임원은 지난 13일 그들이 짠 각본대로 구성되었다. 노조의 상급간부들, 즉 화학노조와 연합노조 서울지역지부에서는 양자의 타협을 계속 주장했지만, 민주노조측은 이를 거부하고 양쪽 상급노조와 회사, 구청을 찾아다니며 노조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회사내에서는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3월 26일 총회를 통해 민주노조 측으로 임원진이 꾸려지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1981년 4월 회사가 갑자기 휴업공고를 낸 데 이어 5월 1일 폐업을 선언하자 노조측은 회사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기까지 했으나 7월 11일 노동부의 폐업조치로 노조는 해체되고 말았다(이태호 엮음,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pp.179-198; 민주노총, pp.96-97).

O12

이봉우(분회장), 성화순·한성순(부분회장)

O13

O14

이태호 엮음,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O1

한국지퍼(Y·K·K)노동조합

O2

O3

O4

O5

1980.4.19~1980.8.17

O6

서울 구로

O7

공개 / 합법

O8

O9

O10

한국지퍼 노조는 1980년 4월 19일 250명을 조합원(전원 여성노동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이태호 엮음,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p161).

O11

한국지퍼 노조는 1980년 4월 19일에 결성되었지만, 5.17 비상계엄 이후 사측은 예정됐던 노조 현판식, 노조사무실, 전임문제, 단체협약체결 등을 위한 모든 노사회의를 미루기만 했다. 게다가 노조간부들에게 탈퇴할 것을 회유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8월 17일 고정열 분회장 등이 순화교육 등급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를 그만 두면서 민주노조는 사실상 와해되고 말았다(같은 책, pp.161-165).

O12

고정열(분회장), 최영숙(쟁의부장)

O13

O14

이태호 엮음,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01

전국민주노동자연맹 ( <사건편>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전국민주학생연합(전민학련)사건: 일명 ‘학림’사건 참조)

02

전민노련·민노련

03

서울지부-구로지회-구로 1,2,3분회-사업장 지반, 양평동 갑·을, 평화시장, 방산시장, 뚝섬

04

05

1980.5.5~1981.7.

06

서울

07

비공개 / 반합법 (이태복, 「내가 겪는 사건: 노동운동 투신 동기와 민노련·민학련 사건」, 『역사비평』 1994 여름, 계간25호, p271)

08

<민노련>의 조직체계는 규약에 명시된 대로 중앙위원회를 지도부로 하여 시·도 단위에 지부, 구·공단 지역 단위에 지회, 사업장 단위에는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운영은 하부는 상부에, 소수는 다수에, 전체는 중앙에 복종하는 민주집중제를 원칙으로 했다. 그리고 회원구성은 정회원과 예비회원으로 나뉘는데, 정회원은 예비그룹의 성원들 중에서 선발했다. 정회원 가입시에는 추천인의 입회하에 별도의 가입 주체자가 정하는 문답과 선서를 통해 노동운동에 임하는 자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들에게는 ‘10대 준수사항’을 실천할 것이 요구된다. 조직 구성에 있어 구로지역의 예를 들면 애초 조직구상에 의하면 서울지부 산하에 구로지회가 있고, 구로지회는 다시 구로 1, 2, 3공단별로 1, 2, 3분회로 나뉘게 된다. 각 분회내에는 사업장 단위로 지반이 조직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구상을 모두 완성하기 전에 와해되었기 때문에 실제의 조직은 꼭 원칙대로 되지는 않았다. 구로지역에서는 몇 개의 지반을 결합하여 이원적으로 예비모임이 구성되었고, 구로지회는 결성 직전에 있었다. 각 지반은 자기 현장 내에 현장소그룹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또 현장소그룹은 대부분 현장활동가가 직접 현장문제에 관한 토론을 이끌어 가는 동시에 별도로 사회과학 교육을 담당하는 예비회원 후보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갔다. 실제 민노련은 구로 1, 2, 3공단 외에 양평동 갑, 을, 중앙의 평화시장, 방산시장, 그리고 뚝섬 등지에 현장 기반을 갖고 있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41; 이태복, 앞의 글, p272).

09

<규약> ①민주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되, 노동3권보장, 8시간노동제의 확립, 최저임금제 실시를 일차적인 투쟁목표로 하여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조직노동자의 민주화를 당면과제로 삼는다. ②조직은 성격은 비공개·반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운영은 민주집중제를 기초로 하고 소수는 다수에게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한다. ④조직방식은 하향식과 상향식을 병행한다. ⑤중앙위원회를 지도부로 하여 시·도 단위에는 지부, 구·공단지역 단위에는 지회, 사업장 단위에는 지반을 각각 조직한다. ⑥조직확대방식은 학습그룹을 조직하여 지도적 인물을 암암리에 개별 입회시킨 후 해산시킴으로써 보안을 유지한다. ⑦회원의 자격을 정회원과 예비회원으로 구분하여 일차로 예비회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킨 후 1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지닌 자를 입회문답을 통하

여 정회원으로 가입시킨다. 특히 정회원의 선발에 있어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 수준, 노동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한 인식도, 자신의 실천의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⑧조직이 지식인이나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출신 회원과 지식인 출신 회원의 비율을 6:1로, 남녀의 비율을 2:1(4:1, 편집부 위임, 『公安事件記錄』, 세계총서, 1986, p265)로 제한한다. ⑨재정은 원칙적으로 회비로 충당하되 자기 수입의 5%이상을 의무적으로 납부한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40).

#### O10

<민노련>은 무엇보다 70년대의 조합주의적·경제주의적 운동을 비판하면서 노동운동을 변혁운동으로 전환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1979년 12월경부터 1980년 4월까지 이태복, 김철수, 도시산업선교회 간사였던 신철영, 서울청계피복노조의 양승조, YH의 박태연, 대구·경북지역의 김병구, 유해용, 유동우, 광주의 윤상원, 울산의 하동삼 등이 노동자조직 구성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같은 해 5월 3일부터 2박 3일 동안의 창립대회를 거쳐 결성되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34, 40; 이태복, 앞의 글, p272).

이들을 축으로 기존 노조의 민주화투쟁, 미조직 노동자의 노조결성운동을 추진해 산업별 조직체제로 전환해가면서 노조운동의 전국적 센터를 건설하려 했다. 이는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학생운동과 연대해 활동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조직 보안 문제 때문에 조직의 중심을 연결고리로 해서 일정한 시기까지 활동하다가 새로운 조직체로 결합시켜 정치운동의 지도부를 구성하려는 계획이었다. 서울과 각 지역을 돌면서 뜻을 확인한 멤버들은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결성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태복이 규약안을, 조합운동 목표와 계획은 유동우, 양승조, 박태연 3인이 준비해 발표하기로 하고 평소 연구해 온 규약안을 작성했다. 이 규약안은 과거 운동과정에서 나타난 당적 강령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 대중조직보다는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 작성됐다. 운동역량의 배치는 관계고지(기간산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당면역량과 장기역량을 세심하게 구분 운영해서 역량의 계획적 축적에 노력하되 노동자와 지식의 조직구성 비율을 평균 6대 1로 제한하고, 그 경우에도 지식인은 반드시 현장노동을 하고 있는 자만이 가입자격을 갖도록 했다. 조직목표는 일단 역량을 충분히 축적할 때까지 노동3권의 완전보장, 최저임금제 실시, 8시간 노동제 확보, 기존 노조의 민주화, 미조직의 조직화에 두기로 한다(이태복, 앞의 글, p272).

#### O11

5.17계엄확대 이후 <민노련>은 양승조, 박태연이 지도해온 소그룹을 중심으로 일단 구로공단의 <삼경복장노조> 민주화투쟁과 <남영나이론> 투쟁을 개시하기로 했다. 삼경복장은 당시 2명의 정·예비회원이 들어가 현장활동을 하고 있었고 대의원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투쟁을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부장으로 내정된 김원복이라는 여성이 외부 불순세력이 침투해 있다고 소란을 떠는 바람에 구로공단민주화투쟁 계획은 전면 수정되고 좀더 준비된 이후에 깃발을 들기로 했다. 정회원들이 운영했던 조직들은 대개 예비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현장문제 토론과 노동이론 연구, 소모임 조직방법과 노조결성 및 운영문제에 관한 학습과 토론, 실천점검이었다(이태복, 앞의 글, pp.272-273).

<민노련>의 활동은 운동권내 운동노선에 따른 갈등으로 조직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80년 11월 하순께부터 조직원들의 위치 이동과 보안 단속 때문에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미스 유니버스 대회 폭파미수사건으로 구속된 권운상과 황인오

가 자신들의 배후가 이태복이라고 영터러 진술을 하여 개인적인 인맥이 철저히 조사되고 흥사 단관계까지 파헤쳐지면서 조직활동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이태복,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다』, 청년사 2002, p121). 하지만 1980년 후반기부터 학생운동으로부터 현장이전을 바라는 예비활동가들이 계속 들어와 각 현장에 계획적인 배치를 진행시켰고, 이들이 조직한 현장소그룹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1981년 3월부터 가칭 <윤상원대학>을 만들어 조직핵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이 윤상원대학의 제1기 입교생은 김상집과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 전용호 등 6-7명이었다. 1981년 초에 부산으로 내려온 이태복은 기왕의 부산대 인맥을 기반으로 현장과 학교쪽의 작업에 착수해서 일정한 거점을 확보해 나갔다. 그러나 이곳에도 서울 지역의 장모 그룹이 퍼뜨린 남민전 잔당설이 돌아다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활동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호철, 노재열, 송병곤을 축으로 하고 송세경, 이상록, 고호석을 배후선으로 한 조직구도는 이상록의 강력한 반발로 이들을 배제한 채 77학번을 전진배치해서 노학전선을 꾸려나갔다. 이 부산조직사건은 경찰이 '부림사건'으로 분리시켜 발표하는 바람에 <민노련>, <민학련>과 무관한 별도의 사건처럼 일반에 인식됐으나, 실제 조직과정은 <민노련>과 <민학련> 활동의 일부였다(이태복, 앞의 글, p274).

조직 내부적인 조직확대 과정에서는 예비회원의 선발과 교육에 노력이 집중되었다. 중앙위원들 각자가 예비그룹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비그룹은 보통 선발기준에 맞는 5~6명의 예비회원으로 구성되며 4~5개월간 노동법, 노동조합론, 노동운동사 및 현장사례 등을 학습하였다. 교육과정안(교안)으로는 중앙위원이 분야별로 작성하거나 광민사에서 발행한 『산업선서』시리즈를 사용했다. 『산업선서』가 책으로 발행되기 전에는 그 교정지를 가지고 교재로 쓰기도 했다. <민노련>의 활동 성과 가운데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잉꼬법랑에서 신규노조를 결성한 것이다. 이것은 1983년까지 지식인이 현장에서 노조를 결성해낸 유일한 사례였다. 한편 구로 삼경북장에서는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이 있었는데, 이런 활동들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조직노동자의 민주화라는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이다. 이외에 학생출신자들로 예비그룹을 조직하여 취직요령, 지역실태, 현장활동가의 태도와 언어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조직실무와 노동법교육 등을 단기간에 마치는 프로그램도 시도되었다. 그리고 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내의 지반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노동야학의 조직활동도 주목할 만 하다. 국제북장의 자취방야학이 선구적 사례이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 41-42)

O12

이태복(李泰馥), 김병구(중앙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신철영, 김철수, 유해우, 박태연, 유동우, 윤상원, 하동삼(이상 중앙위원)(『公安事件記錄』에는 유동우가 빠지고 전점석을 포함해서 10인의 중앙위원으로 기록, p265), 길문숙, 송영인, 송병춘, 노숙영(이상 1981년 2월에 정회원가입), 최규엽, 엄주웅, 오삼석, 전경연

O13

전국민주학생연맹

O14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편집부 엮음, 『公安事件記錄』, 세계총서, 1986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햇불 4』, 가톨릭출판사, 1997

이태복, 「내가 겪는 사건: 노동운동 투신 동기와 민노련·민학련 사건」, 『역사비평』 1994 여름, 25호  
 \_\_\_\_\_,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다』, 청년사, 2002

O1

롯데제과노동조합

O2

롯데제과노조

O3

O4

O5

(민주노조)1980.5.10~

O6

서울 영등포 · 시흥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0년 당시 롯데제과 · 해태제과 등 식품업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12시간 맞고 대의 장시간 노동이었다. 하지만 해태제과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정착시킨 데 반해 롯데제과의 경우는 8시간 노동제가 정착되면서 소위 상박하후(上膊下厚)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임금이 남성들은 5~6%, 여성들은 8~9% 인상되었지만, 사실상 임금은 삭감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5월 10일, 계장출신 지부장이 노동조합을 장악한 지 10년만에 가장 열세에 있던 민주후보 신태웅이 당선되었다(민주노총, 『민주노조, 탄압과 투쟁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p82).

O11

5월 12일 새벽 남성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집단화되기 시작했다. 새 노동조합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 20% 재인상, 상여금 400% 지급을 요구하며 14일까지 관철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으나 사측은 이를 묵살했다. 5월 14일 오후 2시, 정한 시간을 넘기자 즉각 2,700여명의 조합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농성은 5월 16일까지 계속되어 정문점거로 발전했고, 영등포공장은 물론이고 시흥공장 노동자들까지 전원참가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확대조치가 발표되자 비상계엄과 생존권 요구의 갈등속에서 집행부는 농성에서 태업으로 투쟁방법을 바꿨다. 첫날은 20%감소, 다음날은 50%감소계획을 세웠으나 사실상 작업은 중단되었다. 노사협상은 무산되고 결국 유창순 회장에 나서 “회사가 망하면 임금인상분을 환원시키겠다”라는 지부장의 각서와 함께 상여금 400%, 임금 12~15%의 재인상이 이루어졌다. 8시간 노동제로 환산하면 대략 78%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이었다. 5.17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집행부는 정화대상이 되었다. 6월 2일, 계엄당국에 의해 부지부장과 부녀부장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지부장도 20일간의 구류처분 후 정화조치에 의해 강제사직해야 했다. 조합원 중 김수배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갔고, 연행되었던 여성조합원들도 부친의 노동청년연수원에서 순화교육을 받아야 했다(민주노총, 『민주노조, 탄압과 투쟁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pp.82-83).

O12 신태웅(민주노조 1대 위원장)

O14

민주노총, 『민주노조, 탄압과 투쟁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O1

서통노동조합 (☞ <사건편> 노보 '상록수' 발간 관련 서통노조 탄압사건 참조)

O2

서통노조

O3

O4

O5

1980.5.17~?

O6

서울 구로

O7

합법

O8

O9

O10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가발을 생산·수출하는 주식회사 서통은 대부분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14~27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사측은 이들의 90%이상을 기숙사에서 생활시키면서 도급제를 통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1979년 가을 개발과 소속 배옥병이 우연한 기회에 유동우가 지은 『어느 돌맹이의 외침』을 읽고 서통에도 꼭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를 눈치챈 회사는 배옥병을 본사로 발령내고, 어용노조를 조직하려고 했으나 파업농성을 통해 결국 배옥병을 (섬유노조 서통)지부장으로 하는 1980년 5월 17일 민주노조결성에 성공하게 된다(;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pp.86-87).

O11

노조가 결성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계엄령이 확대 실시되었고, 회사는 태도를 바꾸어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강요했으며 섬유노조의 외면, 노동행정기관의 무관심, 경찰의 탄압도 지속되었다.

9월 22일 배옥병 지부장이 '노동조합 정화지침' 강요에 못 이겨 지부장직을 사퇴하게 되자 조합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기가 더욱 곤란해졌다. 12월 8일에는 배옥병, 신순례, 홍양순, 임병숙, 오영자, 이미홍 등 노조간부 6명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조사받고 20일만에 풀려났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서통노조>는 1981년 들어 각종 일상활동을 통한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였다. 5.17이라는 비상조치 상황에서 회사와 조합의 교섭은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관할 노동청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관계당국은 노동조합에 대해 임금인상요구를 철회하라는 등의 압력을 가중시켰다. 결국 5월 9일 단체교섭 석상에 나타난 사장이 회사측의 사정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설득시키겠다고 나섰으나, 성과가 없자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무려 9시간에 걸친 단체교섭 끝에 임금 23%인상에 합의하고 노조는 단체교섭을 끝냈다. 회사 및 관계기관의 협박, 탄압 속에서 조직력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지를 발간, 조합원을 간접적으로 교육시키고자 5월 20일 기관지 「상록수」의 창간호를 발행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남부경찰서는 기관지를 모두 압수하고 그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사건화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자 전 지부장 배옥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전 섬유노조 기획전문위원 이목희를 단체교섭에 관한 3자 개입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서통노조>에 대한 탄압은 극한으로 치달아 8월 7일에는 서울시가 임원개선명령을 내리겠다

는 등의 협박으로 압력을 가했고, 12월 9일에는 불구속 기소되었던 5명의 노조간부를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러한 불법해고와 노조파괴공작에 못 견디 600명의 조합원들이 자진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가 소위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취업한 회사에서 수차례 해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pp.87-89).

O12

배옥병(지부장), 황정숙·정인순(2대 위원장)·이미홍·송정순(부지부장), 신순례(사무장), 홍양순·이경화(회계감사)

O13

O14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 <연구팀 자료>

##### \* 이목희:

\* <사안> 1980년 5월부터 1981년 2월경까지 (주)서통의 노조결성과 노조기관지 창간에 관여하여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유죄판결 및 해직된 건.

##### □ 항거 대상

##### ○ 노태우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

- 제3자개입금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노동기본권제약 과정에서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조항은 노태우정권의 노동운동탄압 수단-지식인과 노동운동세력의 분리-으로 과도하게 적용되어온 대표적 사례였음.

· 노동3권 보장의 본질적 요소인 노동자 상호간의 연대는, 그 연대의 규모와 차원의 결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자주적 선택의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님.

· 또한 소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누구든지 타인에게 적법한 행위 - 예컨대 노조결성,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 등을 하도록 권유하고 조언·개입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 즉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일반행동의 자유, 양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함.

· 현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 노동입법의 보편적 관념은 노동자의 단결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촉진하는 것임.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대립성, 노동자의 약자적 지위와 노동자 상호간의 계급·계층적 동일성에 대한 법적 승인을 전제로 전개된 노동입법의 취지에 반해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자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고립·무력화시키기 위해 악용되어 왔음.(이상 신인령, "제3자개입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심사 판례" 신인령 저, 노동인권과 노동법 <서울: 1999>, 제303~306쪽 참조)

· 위헌소송 등을 통해 많은 논란이 있어오던 중, 제3자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1997. 3.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개정되면서 삭제됨.

##### □ 항거 행위

○ 이목희(1953. 9. 10. 생)는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78. 12. 18.부터 전국섬유노조 본부

- 기획실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 1980년 5월부터 1981년 2월경까지 (주)서통의 노조결성과정에서 노조위원장 배옥병 등과 접촉하며, 노동조합의 기능과 운영방법, 노동운동에 관한 기초지식 등을 교육함.
  - 노조기관지 『상록수』에 “창간사,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라는 원고 초안을 작성해 줌(이상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부 판결」 81고합383, 기록 50-62쪽).
- \* 이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노동기본권제약 과정에서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최초 적용 사례**였음.
- \* (주)서통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가발제조 수출업체로서 일일 평균 18시간의 장시간노동과 당시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 정도의 임금을 주는 회사였음. 노동자들은 대학생들이 주관하는 야학과 이를 발전시킨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하여 노조결성운동이 있던 중, 1980. 5. 15.부터 1,200여 전 종업원이 참석한 가운데 “① 회사는 노조결성을 탄압하지말라 ② 점유노조와 서울의류지부는 공개사과하라 ③ 양성초임 1,100원을 2,100원으로 인상하라 ④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도급제를 철폐하라 ⑤ 18시간 노동을 8시간으로 하고 일요일은 쉬게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걸고 2박3일간의 파업농성을 함. 이를 계기로 1980. 5. 17. 오후10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부장과 노조간부를 선출함. 노조결성직후 2시간만에 비상계엄 전국확대로 노조지부장 배옥병은 ‘노동조합정화지침’에 의거 1980. 9. 22. 지부장직을 사퇴하게되고 같은 해 12. 8. 배옥병을 비롯한 간부 6명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음. 이후 1981. 2. 13. 노동조합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1981. 5. 20. 노동조합 소식지 『상록수』의 창간호를 발행함. 이 과정에 신청인이 위와 같이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제3자개입금지조항) 위반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음(이상 김인동, “제3자 개입금지, 그 성격과 극복”, 『현실과 전망』 2, 풀빛, 1985. 259-280쪽).

□ 민주화운동과 피해(해직)의 관련 여부

- 신청인은 위의 행위과정 중 1980. 5. 17. (주)서통의 노조설립과 같은 달 18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로 도피함으로써 점유노조본부의 기획전문위원직에서 해직되었다고 주장함.
  - 이는 ‘전국점유·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의 재직증명서에 1980. 5.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점과 당시의 품의서 「직원 해면의 건」에 1980. 5. 2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8일간 장기결근함에 따라 해직되었음이 입증됨(기록 100-101쪽).
  - 단, 해직의 사유가 8일간의 무단결근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정황과 이후 신청인이 검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 등을 볼 때 위 (주)서통노조 결성과 관련한 강제해직으로서의 신빙성이 있음.
- 이 사건으로 신청인은 (주)코리아하이탑트(현 주식회사 웨미리)에서 해직됨.
  - 주식회사 웨미리의 「경력증명서」에 노동조합법 위반에 의한 구속으로 해직되었음이 확인됨(기록 93쪽).

□ 민주화에 기여 여부

- 신청인은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 교육’하고 노동운동 탄압에 항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

---

〈1981년~1983년〉

- 81.02. 전국민주학생연맹(민학련)
  - 82.05. 한국공해문제연구소(공문연)
  - 83.06.18 여성평우회
  - 83.09.30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 
-



O1

전국민주학생연맹

O2

민학련, 전민학련

O3

경인지부-남부지회, 중앙지회, 서부지회, 동부지회, 수원지회, 부산지부

O4

O5

1981.2~1981.6

O6

서울

O7

비공개 / 비합법

O8

<민학련>은 조직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위해 조직의 보위력 및 보안이 강조되었다. 즉 상급의 중앙위원회를 비롯하여 하부에 지부, 지회, 분회, 지반을 두는데, 분회와 지반을 복수로 구성하여 어느 한 조직이 수사기관에 노출되더라도 다른 분회, 지반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방식이 강구되었다. 조직체계에 있어 지부는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등 대도시 대학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지회는 그 지역에서 작은 단위로 몇 개 대학을 묶어서 구성했다. 하지만 실제의 조직구성은 회칙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지부는 경인지부와 부산지부가 있었으나 실질적 하부기반은 경인지부만 있었다. 경인지부(지부장 윤성구) 아래 신촌지회(연대, 이대), 관악지회(서울대), 중앙지회(성대, 동국대, 성신여대), 청량리(동부)지회(외대, 경희대) 등이 구성되었다. 각 지회는 과도기적인 조직상태였으므로 지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박성현, 박문식 등 중앙위원에 의해 지도되었다. 회칙에 나와 있는 분회는 실제로 구성된 적이 없었고 지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그리고 조직확대와 회원교육문제를 놓고 광주, 대구 등으로 조직개편작업을 모색하던 중 와해되고 말았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43-44).

O9

<회칙 전문>

광주시민의 민주항쟁을 유린하고 등장한 군사독재정권은 한국사회를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의 과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만과 폭력에 가득찬 현정권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적인 모든 운동을 탄압하고, 특히 가장 기초적인 민족적 양심과 학원의 자유마저 빼앗아 가고 있고, 이러한 민족적 일대 위기 앞에서 우리 청년학도는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기만과 폭력에 가득찬 현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투쟁의 열기를 불태워야 할 것이다. 지난 8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은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다. 따라서 우선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인식하는 민주학생이 조직되어 학생운동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이를 학생대중의 열기에 기반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43).

O10

<민학련>은 1980년 가을의 이른바 ‘무학(무림-학림)논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해나갔다. 무학논쟁이란 1980년 하반기부터 1981년까지 서울대 학생운동 내부에서 80년 상반기 투

쟁을 주도했던 무림그룹과 이에 비판을 가하며 등장했던 그룹(학림 또는 민학련)사이에 학생운동의 투쟁방침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말한다. 이 논쟁은 1980년 5월 15일 이른바 '서울역 회군'의 원인·결과·책임문제에서 발단이 되었으나 이미 1980년 봄 투쟁 과정에서부터 논쟁의 뿌리는 드러나고 있었다. 1980년 5월 투쟁 패배의 원인에 대한 당시 학내 지도부였던 무림의 입장은 통일적 지도부와 대중기반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학생운동은 과도한 투쟁을 지양하고 기층대중에 대한 선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림은 이러한 주장을 조직보존론 혹은 준비론, 결과적으로 패배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학생운동의 대중조직역량의 강화는 선도적인 투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운동가 자신도 투쟁을 통해 단련되어짐으로써 진정한 대중의 전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와중에 1980년 12월 11일 서울대 공개유인물살포사건(반제반교소 학우투쟁선언)을 계기로 무림사건이 터져 이들 다수의 주력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강제 징집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더 이상 협의체 수준의 조직으로는 학생운동을 지속시켜 나갈 수 없다는 학림측의 판단에 따라 1981년 2월 이선근 등 5명의 발기인 및 중앙위원으로 중심으로 <민학련>을 결성하게 되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pp.37-39, 42-43).

즉 광주학생을 겪고 난 뒤, <민노련>의 이태복은 이선근과 박성현으로부터 학내상황을 자세히 듣고 난 뒤 반독재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중심조직이면서 노동자조직과 연대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는 이미 <민노련>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의가 필요했으나, 보안문제 때문에 학생조직 문제를 양승조와 김병구·신철영 등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선근을 접촉선으로 하고 진행된 학생조직 건설작업은 시내 각 대학의 아카데미와 야학팀에 열성적인 인물을 선발해서 하기로 하고, 그 활동내용을 보고 받고 현장이전팀을 인계받아 공장에 분산배치해나갔다. <민학련>은 지방조직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부산의 이호철을 핵으로 하는 부산지역조직을 건설했고 전남대 박관현의 후배였던 신영일과 접촉하고 있었다. <민학련>조직이 단기간에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데는 운동노선이 현장지향적인 학생운동의 핵심 활동가들을 <민노련>이라는 현장조직이 조직적 연대하에서 밀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준비를 위해 투쟁을 기피하는 노선이 설득력을 상실한데 있었다. 그리고 조직내부적으로는 무림지도부였던 박성현이 이전 시기 운동을 반성한 뒤 <민학련>노선을 실천했고, 박문식이 핵심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도 큰 힘이 되었다. <민학련>의 조직원칙과 체계는 <민노련>의 조직방식과 유사했다. 다른 점은 학생운동가들의 정치의식과 사상적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간조직을 하향식으로 편제했다는 것이었다(이태복, 「내가 겪는 사건: 노동운동 투신 동기와 민노련·민학련 사건」, 『역사비평』 1994 여름, 계간25호, pp.276-278).

O11

<민학련> 활동은 1980년 5월투쟁의 패배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내 조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당시 기존 지도그룹(무림)과 그다지 관련성이 없는 2학년(79학번)을 규합하여 예비학습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1981년 상반기 학생운동은 <민학련> 주도로 전개되었다. 서울대에서는 3월 19일 시위를 기점으로 해서 연이어 시위가 계속되었고, 교내시위는 성대, 동국대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1981년 6월 10일 이태복이 연행되고, 이후 이선근과 부산대의 김진모가 구속되면서 <민학련>은 <민노련>과 함께 와해되었다(이태복, 앞의 글, pp.278-279).

O12

이선근(李善根, 서울대), 박문식(서울대), 이덕희(서울대대학원), 홍영희(이대졸), 윤성구(서울대), 경인지

부장), 이호철(부산지부장), 박순섭(남부지회장), 최경환(성대, 중앙지회장), 손형민(연대, 서부지회), 김창기(외대, 동부지회), 동인규(수원지회), 김진철(서울대), 이종구(동대), 민병두(성대), 송영인(서울대)

O13

전국민주노동자연맹

O14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편집부 엮음, 『公安事件記錄』, 세계총서, 1986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 4, 가톨릭출판사, 1997

이태복, 「내가 겪는 사건: 노동운동 투신 동기와 민노련·민학련 사건」, 『역사비평』 1994 여름, 계간25호

\_\_\_\_\_,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다』, 청년사, 2002

#### <연구팀 자료>

##### \* 이덕희:

- 이덕희(1959. 7. 19. 생)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대학원 재학 중,
- 1980년 5월 학생시위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패배를 극복하고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생대중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선근과 공유하여, 1980년 7월부터 이선근, 박문식, 홍영희, 김찬, 박성현 등과 전국적 학생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참여함.
- 1981년 2월 27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단체의 명칭을 「전국민주학생연맹」이라 정하고, 이선근, 박문식, 박성현, 이덕희, 홍영희 등 5인이 동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으로 취임함(반국가단체 결성: 국가보안법 3조).
- 같은 해 3월~6월까지 20회에 걸쳐 동 단체의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확대방침, 조직원 훈련계획, 학생시위계획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보고·토의함(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국가보안법 8조 1항)

O1

한국공해문제연구소

O2

공문연

O3

O4

O5

1982.5~?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O11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1985년 6월 7일 ‘제13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85 반공해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는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속에서 자유·평등,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는 「세계인간환경선언」에 입각,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의 공해현실을 진단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천명”하고자 하였다. 선언에서는 특히 온산공단의 피질이 우리나라의 공해문제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의 해결 여부가 우리나라 공해문제가 개선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고 보았다(『말』 제2호 1985.8.15, p.49).

O12

O13

O14

『말』, 제2호, 1985.8.15

01

‘여성평우회’(The Women for Equality and Peace)

02

‘평우회’

03

04

05

1983.06.18~1987.08.

06

서울(경인)

07

공개 / 합법

08

평우회의 조직체계는 기본적으로 ‘총회-임원회(3인공동대표)-운영위원회(공동대표3인+각 부서장+ 간사)-집행부서(조직 및 교육부, 조사연구부, 출판홍보부, 사회개발부, 재정부, 문화부)’로 짜여졌다. 평우회는 임원구성에 있어 당시 여성단체로는 최초로 할 수 있는 ‘3인 공동대표제’를 채택했다. 공동대표제는 기존의 여성단체가 1인의 장기집권과 그로 인한 폐해로 더욱 여성대중들과 괴리된 여성단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한 비판 속에서 ‘평등·평화’를 지향하는 단체로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새로운 임원구성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선택되었다. 한편, 평우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교육 및 조직부, 조사연구부, 출판홍보부, 사회개발부, 재정부, 문화부 등 6개의 집행부서를 두었다. 이중 주목할 만한 부서는 사회개발부, 재정부, 문화부다. 사회개발부의 경우 평우회의 기층여성중심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창립때부터 공부방 사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의 첫 시작으로 빈민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제공하고 지역빈민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를 제시했다. 문화부의 경우 연극, 탈춤 등 문화사업을 통해 여성운동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고, 84년 10월 ‘제1회 여성문화큰잔치’를 성황리에 치뤘다. 그리고 재정부의 경우 단체의 완전 재정자립을 위해 수익사업으로 티셔츠, 참기름, 여성수첩, 반지 등을 판매했고 계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소기까지 평우회는 완전재정자립을 하였는데, 수입은 회원회비, 사업수익금, 특별모금으로 이루어졌고 이중 회원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이었다고 한다.(이상, 강남식, <여성평우회의 활동과 여성운동사적 의의>, 여성평우회창립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여성평우회 발자취』, 2003, 30~31쪽)

09

평우회의 ‘발기취지문’은 한국사회의 피수탈자로서의 여성의 민중성을 밝히며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에서 소외된 주체로서의 여성 민중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한국 여성은 가부장적 제도의 희생자요, 산업사회의 소외된 계층이고 또한 국토분단의 비극적 피해자다. 한국 여성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여성“으로서, 농사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농촌여성“으로서, 가난과 폭력의 이중질곡에 빠져있는 ”도시빈민여성“으로서, 가정에 고립되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도시주부”로서 존재한다. 바로 이들 여성의 저임노동과 무임노동의 토대위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발기취지문〉, 여성평우회창립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여성평우회 발자취: 여성평우회 자료들 I』, 2003, 3쪽)

둘째, 평우회는 기존 여성운동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여성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구국운동과 봉건적인 남녀차별 철폐를 여성운동의 공동목표로 내세우며 시작된 한국 여성운동은 7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여성들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운동은 일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이어서는 안되며 중산층 이상의 여가선용에 머무른 운동이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여성운동은 전 여성의 인간화 운동이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비인간적 요소를 타파하려는 총체적 운동이어야 한다.”(<발기취지문>, 여성평우회창립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여성평우회 발자취: 여성평우회 자료들 I』, 2003, 3쪽)

O10

강남식은 평우회의 등장배경을 기존 여성운동의 한계 및 새로운 활동주체의 형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강남식, <여성평우회의 활동과 여성운동사적 의의>, 여성평우회창립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여성평우회 발자취』, 2003, 24~26쪽)

첫째, 창립총회에서 평우회는 자신의 창립경위를 기존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창립경위에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이후, 한국에서 각 사회단체의 여성교육을 받은 젊은 층과 여성학을 수강한 젊은 층이 모여 82년 9월 여성단체를 결성할 것을 합의하다. 단체의 목적, 회원구성, 사업내용, 성격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진 뒤, 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로 회원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평우회가 기존 중산층 여성중심의 관변적 여성단체의 봉사, 취미, 여가활동 수준의 활동내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강남식, 같은자료, 24쪽)

둘째, 여성학의 영향에 의해 새로운 여성운동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 여성집단의 형성이다.

여성학은 196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도교육과정에 등장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77년 2학기에 이화여대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여성학 강좌를 통해 서구 여성학 이론과 운동을 접한 여성들은 학부 졸업 후 연구자로서 여성학 교과과정 운영이나 개발에 참여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고 독자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이 평우회 창립을 주도하게 되었고 평우회내에서 선배집단의 주축을 이루었다.

셋째, 학생운동 출신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들은 70년대 중·후반부터 학내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한 여성들로, 연령은 대개 20대 중·후반으로 대부분 기혼이었던 선배그룹과는 달리 미혼이었고, 조직활동에 헌신적이었다. 이들은 대개 사회과학 학습 경험을 소유하고 있어 이념성이 강하고 정치투쟁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이 평우회의 후배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위 둘째 집단과는 차별화되는 정치의식 및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평우회의 이념지향적 배경과 관련하여 김영정은 “여성평우회가 설립되면서 공개적인 여성운동조직에 의한 대중활동이 시작되었다. 여성문제의 근원을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변혁적 여성해방론, 민중적 여성운동론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김영정, 『1980년대 한국여성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19쪽) 라고 평가하고 있다.

O11

■ 주요 활동 일지

- 1983.06.18, 여성평우회 창립 총회
- 1984.02.26, 인천 만석동 ‘큰물 공부방’ 개원
- 06.18, ‘여성평우’ 창간호 발간
- 08.08,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가입

- 09.22~10.14, '제1기 여성학 교실' 개강
- 10.27~28, '제1회 여성문화큰잔치' 공연
- 11.21, '여대생추행사건대책협의회' 결성
- 1985.03.0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개최
- 04.02, '여성차별정년무효소송위원회' 결성
- 06.15~10.18, 톰보이 불매운동(성도섬유 해고여성노동자 연대)
- 09.10~10.08,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대토론회' 3차례 실시
- 11.?, '여성단체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 1986.04.25, '이천만 여성의 시청료폐지운동으로 민주언론 쟁취하자' 성명서 발표
- 06월, 3차총회에서 집행부와 일부 회원들 탈퇴. '여성의 이름으로 제헌의회 소집하자'는 정치선전활동 전개
  - , 신문 '이천만 여성' 제1호 발간
  - , 부친서 권인숙양 여성단체연합 성고문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 09.14, 권인숙양 석방환영 및 86 여성운동인물 선정 기념식 개최
- 1987.08월, 여성평우회 해산

위와 같은 활동 일지를 토대로하여, 창립에서 해산까지를 3개의 소시기별로 구분하면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강남식, 같은자료, 38~55).

①창립에서 위상 정립기

첫째, 조사연구사업.

창립후 최초의 조사연구는 한국여성현실을 다룬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라는 가족법 관련 자료집이었다. 자료집은 호주제 연구시론, 가족법과 성차별 사례, 가족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과 개정운동의 역사를 포함한 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 밖에 학문 분야별 여성관련 연구나 자료들을 모아 '여성관계문헌목록집'을 발간했다. 이 목록집은 당시 대학 도서관에서도 정리하지 못한 여성관련 문헌을 총괄한 것으로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는 연구자들을 위한 길잡이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둘째, 기층여성운동.

평우회의 기층여성중심성을 잘 드러낸 사업은 84년 2월 만석동에서 '큰물 공부방'을 개원하면서 시작한 빈민여성사업이었다. 평우회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가난하고 철거투쟁이 가능한 곳을 물색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셋째, 교육·조직 활동.

평우회는 회원확보와 회원 자질 향상 및 의식개발을 위해 신입회원 강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연 확대 차원에서 직장여성들을 위한 '여성학 교실'을 열어 취업여성들의 의식개발을 도모했다. 이론적 접근도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상호성에 주목한 이념적 지향성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여성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사적고찰을 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현실에서 각 계급계층별 여성문제를 살펴본 후, 여성운동론을 모색하는 과정을 밟았다.

넷째, 여성문화큰잔치.

평우회는 창립 직후부터 문화부 주관으로 여성문화큰잔치를 준비하여 1984년 서울에선 10월27일, 28일, 부산에선 12월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 문화행사에는 약 3,000여명의 참여하여 여성대중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고, 언론에서도 경쟁적으로 기사를 다루어 이 행사가 당시

사회에 큰 문화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행사는 딸놀이 마당, 소형영화마당, 여성문제 사레극 마당, 소슬굿 마당 등 크게 네 가지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②진보적 여성운동의 상징성과 대표성 획득기

첫째, 사무직 여성운동: 25세 조기정년제 철폐운동

이 운동의 계기가 된 것은 이경숙씨 사건이었다.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경숙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85년 4월의 ‘여성정년 25세’ 라는 판결이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평우회는 이경숙의 법정투쟁을 독려하고 성명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전개 등의 활동을 벌인 결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성과를 남기도 했다.

둘째,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85 여성운동선언’

평우회는 85년 3·8여성대회의 대회사에서 밝히듯이 “민족·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야말로 참다운 여성운동이므로 우리의 주제가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새로운 여성운동의 계기를 선언하는 것” 이라고 하며 13개 여성단체가 함께하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85 여성운동선언’을 조직했다.

셋째,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 활동

평우회는 86년 3·8 여성대회(주제: 민주화와 여성생존권)를 기점으로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를 발족시키고 더불어 여성민중이 이 사회의 주체가 되는 민중문화 건설’을 목표로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해 간다. 생대위는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해고 등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렸고 청년활동가들과 여성노동자들에게 여성운동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③내부 이론투쟁기 및 해산

평우회는 85년에서 86년에 걸친 내부 이론투쟁기를 겪은후 자체 해산을 선언한다. 85년 전두환 정부의 학생운동 탄압책인 학원안정법 반대투쟁의 참여정도 및 86년 권력교체기에서의 NL-CA 논쟁은 평우회내에서도 분열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 및 전술을 둘러싼 내부 논쟁의 배후에는 여성운동의 활동방향 및 위상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했던 것이다. 마침내 87년 8월 평우회는 해산하게 된다.

O12

-창립 당시 공동대표 3인

; 조형, 지은희, 이미경

-3차 정기총회(86년 4월25일) 신지도부

; 심복자(회장)

O13

O14

-강남식, <여성평우회의 활동과 여성운동사적 의의>, 여성평우회창립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여성평우회 발자취』, 2003

-김영정, 『1980년대 한국여성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O1

민주화운동청년연합

O2

민청련

O3

민족민주운동연구소

O4

O5

1983.9.30~?

O6

서울

O7

공개 / 반합법(?)

O8

O9

<창립선언문>

- 一. 민족통일의 대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참된 민주정치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 一. 평등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민주자립경제가 이룩되어야 하며 부정부패특권정치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 一. 역동적이고 건강한 민중의 삶을 위하여 자생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교육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 一. 국제평화와 민족생존을 위해 냉전체제의 해소와 핵전쟁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76; 전문은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암흑속의 햇불 5, 가톨릭출판사, 1998, pp.588-589;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편, 『이제 다시 일어나: 김근태 고문 및 옥중기록』, 중원문화, 1987, pp.209-211)

<규약>중 제1장 총칙 제3조 목적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1)인간생명의 존엄성 구현을 그 최고 이상으로 하며 (2)민중생활개선에 주력하여 대중운동발전을 위한 민중참여를 지원하고 (3)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군부파쇼 통치를 종식시켜 민족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4)이 민족의 한결같은 영원인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며 (5)각계각층의 청년대중을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조직하여 청년운동의 전형창출과 사회운동의 구심점 형성에 매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민청련 제9차 총회 보고서, 1987.8.25).

1차개정(1984.4.17), 2차개정(1984.10.20), 3차개정(1985.8.10), 4차개정(1987.8.25)

O10

<민청련>은 1983년 9월 30일 70년대 학생운동 출신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민청련이 창립된 1983년은 12·12쿠데타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집권 3년을 경과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다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정권은 권력의 정통성이 결여되었다는 약점 때문에 계속적인 대학생들의 반정부시위에 부딪쳤고 불안정한 정치적 체제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새로운 통치전술로 전환의 필요성이 필요했고 이것은 1983년 11월 구속학생 석방과 제적학생 복학조치 등의 이른바 ‘유화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83년 9월 30일 <민청련>은 창립총회를 갖고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 상황

은 뿔뿔이 흩어진 민주청년들이 다시 한데 모여 민중운동의 흐름 속에서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노동자, 농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사회 건설에 온몸으로 매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기문을 채택하고 의장 김근태, 부의장 장영달을 비롯 5명의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O11

<민청련>은 출범과 함께 투쟁성의 회복, 청년 내부역량의 체계화, 다른 민주화운동 세력과 굳건한 연대, 대중운동에의 참여와 지원, 운동방향의 모색과 방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과제로 설정했다. 1984년 5월 19일에는 광주항쟁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했고, 1984년 3월부터는 기관지 『민주화의 길』(1-19호), 『민중신문』 등의 간행물을 발행하며 민중운동의 방향제시, 정세분석, 관제언론에 대한 대항선전 폭로 등의 활동을 했다. 1984년 6월말 <민청련>을 비롯한 민중운동단체들이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를 결성했다. <민민협>은 청년, 노동자, 농민 및 재야종교계운동 등 사회 각 민주세력이 그동안 합법영역에서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결성되었다. <민민협>은 이후 재야의 명망가 중심으로 상징적 정치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로 출범한 <민주·통일국민회의>(1984.10)와 통합하여 1985년 3월 29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하게 되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77-78). 한편 전두환정권은 1985년 2.12총선의 실패와 그 해 5월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단을 요구하는 학생, 재야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전정권은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와 아울러 학생운동과 다른 민주세력을 연결고리로 민청련을 지목하여 집중적인 탄압을 가했다. 1985년 7월 초, 민족민주운동 전체에 대한 전정권의 탄압확대음모에 대해 <민청련>이 <EYC>, <전학련>과 함께 '민중민주화운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성명을 발표하자,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김병곤 상임위원장을 구속하고 이범영 집행국장을 수배했다. <민청련>에 대한 탄압은 깃발·<민추위>(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고문을 가하여 <민청련>을 그 배후로 조작해내면서 본격화되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79-80). <민청련>은 1985년 9월 검거사태 이후 자연히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을 상실하게 되어 모든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때부터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까지의 2년 동안 <민청련>은 전두환정권의 허위·왜곡·비방선전에 맞서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한편 구속간부들의 석방을 위해 싸웠다. 1985년 9월 28일 민청련 내에 구성된 <고문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는 10월 17일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고문공대위)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 이 공대위를 통한 공동투쟁의 경험은 1987년 5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민청련>은 『민주화의 길』과 『민중신문』을 계속 발간했고, 5.3인천개헌투쟁, 2.7박종철 고문치사항의 국민대회, 6.10민주헌법쟁취국민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민청련>은 6월항쟁 두 달 후인 1987년 8월 25일 열린 제9차 총회에서 조직의 성격에 대해 소수 선진청년조직 중심에서 청년대중조직으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결의했다. 회원가입에 대한 문호도 넓히는 한편, 서울동부, 서울남부, 성남, 안양 등에 지역조직을 새로이 설치하여 지역단위로 청년대중과의 보다 긴밀한 연결 토대를 다졌다. 1988년 9월 17일 제11차 총회에서는 사무직 노동청년들과 결합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직장청년회 준비위>를 발족시키고, 지역주민운동과의 결합을 위해 <주민청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또한 1988년 9월 29일, 민청련 부설로 <민족민주운동연구소>가 창립되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92-93).

O12

김근태(金權泰, 초대의장), 김병곤(상임위원장), 이을호(상임위부위원장), 김희상(대변인), 김종복(청년부장), 최민화(부의장) 권형택(사회부장) 연성수(상임위부위원장), 한경남(韓慶南, 3기의장), 김희택(金熙택, 부의장, 2기의장), 천영초(상임위위원장), 이범영(집행국장, 4기의장), 박우섭(운영위원장), 윤여연(사무국장), 서원기(집행국장), 장기표, 양재원

O13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

O14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민청련, 『민주화의 길』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암흑속의 햇불 5』, 가톨릭출판사, 1998

조선일보 1985.10.30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편, 『이제 다시 일어나: 김근태 고문 및 옥중기록』, 중원문화, 1987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선언」, 36~37



---

---

〈1984년〉

- 01.06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
  - 03.30 에스콰이어노동조합
  - 04.14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
  - 04.17 대한마이크로전자노동조합
  - 05.21 금강제화노동조합
  - 06.07 가리봉전자노동조합
  - 06.09 대우어패럴노동조합
  - 06.11 선일섬유노동조합
  - 06.29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
  - 07.14 효성물산노동조합
  - 07.24 대왕제지노동조합
  - 08.07 라이프제화노동조합
  - 09.01 유니전노동조합
  - 09.18 협진양행노동조합
  - 10.07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일명 '깃발'그룹)
  - 10.19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
  - 11.03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
  - 12.15 협진화섬노동조합
  - 12.19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 12.26 대우자동차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 
-



O1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O2

한국노협, 노협

O3

O4

O5

1984.1.6(결성) / 1984.3.10(창립선언대회)~?

O6

서울

O7

공개 / 임의단체

O8

O9

1984년 3월 10일에 발표된 「노동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선언」, 「우리의 주장」은 방용석, 「8백만 노동자와 함께」, 『현실과 전망1』, 풀빛, pp.15-16 참조

O10

<한국노협>은 1983년말 대창, 태평특수 해고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을 시발로 1980년에 정화·해고된 노동자들이 모여 1984년 3월 10일 홍제동 성당에서 창립되었다(박승옥, 「8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출발」,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노동운동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1991, p83). 1984년 초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의 한계-개별노동조합주의의 한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운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한국노협>의 창립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노협>은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 콘트롤 데이터, YH, 반도상사, 서통, 고려피혁, 동남전기 등 그간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민주노조건설과 노동운동의 통일적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되었는데, 당시의 탄압 상황을 고려해 1984년 1월 6일에 결성한 후 3월 10일 노동절을 맞아 2,000여 노동자, 학생,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홍제동 성당에서 창립선언대회를 가졌다(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p125; 방용석, pp.13-14).

O11

<한국노협>은 1984년 4월부터 기관지 『민주노동』의 발간을 통해 선전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1984년 하반기에는 노동법개정운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정치주의적 경향이 표면화되면서 조직 내부가 분열하게 된다. 특히 70년대 노동운동을 조합주의, 경제주의로 규정하면서 정치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세력들은 <서노련>, <인노련>결성에 참여한다(한국민주노동자연합, p126; 방용석, pp16-17).

O12

지학순(이사장), 박형규(부이사장), 조지송·안병무·함세웅·최기식·김용택·이효재·이우정·이완영(이사), 방용석(운영위원장), 남상현·박순희·이충각·김문수(부위원장)·이창복(사무국장), 유동우·양승조·최순영·민종덕·조경수·조금분·정선순·배옥병(운영위원), 이영순(간사)(방용석, p14)

O13

O14

박승욱, 「8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출발」,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노동운동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1991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 선언」, 60쪽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임,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방용석, 「8백만 노동자와 함께」, 『현실과 전망1』, 풀빛

O1

에스콰이어노동조합

O2

에스콰이어노조

O3

O4

O5

1984.3.30~?

O6

성남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성남공단내 1, 2공장이 있는 에스콰이어는 70년대 이후 3차례나 조직이 시도되었지만, 그때마다 실패하다가 1984년 3월 30일 철도노조회관에서 46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숙원이었던 노동조합을 만들어 냈다. 위원장에 조동언, 부위원장에 강명화, 김성근, 이재우, 회계감사에 김종우, 김상봉이 피선되었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p.144-145).

O11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1,200여 조합원은 3월 31일 「우리의 결의」를 발표하여 1)부당노동행위 중지, 2)최저임금 보장 및 상여금 600% 지급, 3)말단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 등 7개항을 요구했다(정봉진, p15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조결성 이틀 후에는 전체 종업원 1,500명 중에서 1,212명을 조합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회사측의 방해공작과 기동성을 보여, 결성 직후부터 간부들에게 향응을 베풀며 회유하기, 기숙사내 공중전화 철거, 250명 기숙사생 외출 전면금지, 유언비어 유포, 2명 이상 모임금지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동시에 발생했다. 4월 6일 신고필증이 나오자 조합은 기세를 올렸고 회사의 신임투표 제의에도 응하여 승리를 거두었다(정봉진, p145).

4월 20일에는 화학연맹 최광부 조직국장의 입회 하에 합의서가 작성됐는데, 사무실 2개소 설치, 전임 2명,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이었다. 그후 19차례 단체교섭 끝에 8월 25일 드디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동안 회사측의 무성의에 항의하여 800여 조합원이 중식을 거부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기도 했었다(정봉진, p154).

O12

조동언(위원장), 강명화·김성근·이재우(부위원장), 김종우·김상봉(회계감사)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O1

민중문화운동협의회

(1987.4.11 창립3주년 기념대회에서 <민중문화운동연합>(민문연)으로 개칭)

O2

민문협

O3

O4

O5

1984.4.14~1987.4.11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O11

1986년 9월 6일에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성베다교회에서 <민문협>주최로 '86통일굿'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경들이 출입을 저지하자, 행사에 참가하려던 민문협 회원, 시민 등이 대학로에 운집하여 즉석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미·일외세 배격하고 민족통일 완수하자”, “기만개헌 획책하는 군사독재 타도하자”,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을 배격하자”, “친미사대 강요하는 양키문화 몰아내고, 민족자주 바탕되는 민중문화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민문협>은 같은 날 오전 9시경 <민주교육실천협의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이하 민언협), <민족미술협의회>, <한국출판운동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문화운동단체들과 함께 <민언협>사무실에서 「민족통일의 길목에서 오늘을 바라본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정권과 시국에 대하여 “민중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헌법특위에서 정치체도를 일부 바꾸고 헌법자구 몇 개를 수정하는 따위의 겉치레 민주화가 결코 아니며, 현정권이 더 이상의 반민족·반민족적 행위를 중지하고 진 민족·민중 앞에 사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에 대하여는 “분단 41년의 현시점에서 미국은 분명 다시 생각돼야 할 존재로서, 한반도의 대소전진기지화, 남북분단의 야기 및 고착화정책, 80년 광주학살 용인, 군사독재 비호, 솔츠의 개, 워커 미대사의 망언, 한국수출상품 규제, 시장개방 요구 등을 살펴볼 때 우리민족의 이익과 배치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반대한다”라고 언명했다 (『말』 제8호 1986.9.30, pp.58-59).

O12

O13

O14

『말』, 제8호 1986.9.30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발기문」(84.04.14), 220~221쪽

O1

대한마이크로전자노동조합

O2

KMI노조

O3

O4

O5

1984.4.17~?

O6

인천 부평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대한마이크로전자는 반도체를 생산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100% 외자기업체로서 1970년 3월 13일에 설립되었다. 근로조건 면에서는 같은 지역의 타회사와 비교할 때 다소 나은 편이지만, 동종기업인 <웨이차일드>나 <시그네틱스>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종업원수는 1,200여명으로 연 40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여자 초임이 3,300원이었고, 6개월이 지나야 한 호봉(50원)이 오르며 그것도 5년이 지나면 호봉승급 대상에 제외되므로 7~8년 근속자의 경우 5,000원 내외의 일당만을 받았다. 또한 연·월차휴가의 적치는 허용되거나, 재료부족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고 있었다. 이전에도 두 차례나 노조결성이 시도됐지만 실패했고, 1984년에는 10년 전에 구성·운영되어 온 사원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1984년 4월 17일 19시경 주안의 모 음식점에서 109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 결성식을 가졌는데 위원장에 박순복, 부위원장에 서자숙, 조이식 등이 선출되었다. 이어 서류를 접수시키고 가입원서를 돌렸는데 삼시간에 300여명이 가입했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p.133-134).

O11

노조는 결성 초기에도 노총·연맹 등에서 만들어준 조합교육지와 책자를 회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탈의실과 정문, 가두에서 나누어주고, 이를 구실삼아 3명의 간부를 3개월 징직처분하자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정문을 뚫고’ 들어가 징계철회를 관철시키기도 했다(정봉진, p152). 뒤늦게 노조결성 사실을 안 회사는 노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을 모아놓고 회사가 망하게 됐다며 생계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한편,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탈퇴를 강요하고 23일에 발부된 신고필증도 조합측에 넘겨주지 않은 채, 25일에는 조합간부 7명을 아침 9시부터 회의실에 감금시킨 후 작업장 곳곳에 노조반대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남녀사원에게 붉은 글씨로 된 ‘노조반대’라는 완장을 강제 착용시켰다. 이후에도 회사측의 협박과 폭행을 통한 노조탈퇴 강요는 계속되었는데, 단체교섭을 하루 앞두고 조합측의 교섭위원인 유영애 여성부장이 해고됐고(5.14), 박순복 위원장, 전복순 회계감사, 조현숙 총무부장이 출근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6.16). 결국 금속연맹의 중재에 힘입어 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27일 해고자복직과 사무실 및 전입자 설치, 단체협약 체결 시한 명시, 조합비 일괄사전공제제도(check-off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취하 등의 합의사항에 서명하게 되었다(정봉진, pp.134-136).

하지만 6월 27일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조규탄대회가 열리고 “실정에 맞지 않는 KMI 노조 결사반대”, “외국인 기업체는 노조가 필요없다” 등등의 리본이 종업원들에게 나눠졌다. 이에 노조는 노동부에 호소하여 이틀만에 리본은 모두 수거됐으며 해고된 여성부장은 근로여성대회와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했다. 하지만 사측은 계속해서 6.27합의를 어기고 노조의 「조합소식」3호의 배포를 전면금지시키려는가 하면, 핵심조합원을 작업성적미달을 이유로 해고했다(정봉진, pp.152-153).

O12

곽순복(위원장), 서자숙·조이식(부위원장), 유영애(여성부장), 조현숙(총무부장)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O1

금강제화노동조합

O2

금강제화노조

O3

O4

O5

1984.5.21~?

O6

서울 성동구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서울 성동구 금호 4가에 위치한 금강제화는 종업원 1,3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제화업체로서 사장은 신희철이었다. 1984년 4월 말 5% 임금인상에 실망한 노동자들은 5월 1일 회사 당에 집결, 각 소속별로 34명의 대표를 뽑아 의견을 나눈 끝에 임금 15%인상과 월차수당 지급, 상여금 400%(당시 25%)지급 등 6개항의 요구조건을 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5시경, 임금 10%인상에 상여금 300% 및 노조결성 인정 등의 회사측 타협안이 나왔으나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5월 3일까지 3일간 농성을 계속했다. 회사는 5월 4일부터 휴업공고를 게시하며 맞섰으나 끝내 노동자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결성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던 것이다. 1984년 5월 19일 저녁 10시 40여명의 노동자들이 장충동에 있는 음식점 ‘덕수장’으로 모여들었다. 화학연맹 간부들의 협조하에 노조결성식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노동자가 뛰어들어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 장소를 두 번씩이나 옮겨야 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파출소에 허위신고, 전원이 파출소로 연행당했다. 21일 새벽 파출소에서 풀려난 노동자들은 ‘금천여관’에 집결, 32명의 동지들과 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이상명, 부위원장 노창숙 등 간부를 선출하고 이틀 후 성동구청에 서류를 접수시켰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145).

O11

회사측은 금호동 일대의 건달 출신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했다. 회사간부도 조장·반장을 앞세워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 협박과 회유를 시작했다. 6월 1일에는 외부에서 홍지영을 불러 『이것이 산업선교단』는 책자를 배포한 뒤 방계회사 직원까지 모아놓고 노조비방 교육을 시켰다. 주로 “공산당이 국가전복의 수단으로 노조를 결성한다”라는 내용이었다. 홍지영이 다녀간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대규모 쫓기대회가 열렸다. 현장 직장이 사회를 보면서 모든 종업원에게 머리띠를 두르게 하고 “적색노조는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도 외쳤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146).

O12

이상명(위원장), 노창숙(부위원장)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O1

가리봉전자노동조합

O2

가리봉전자노조

O3

O4

O5

1984.6.8~?

O6

서울 구로

O7

공개 / 합법

O8

O9

O10

<가리봉전자>는 구로공단과 독산동, 가리봉동에 3개의 공장이 있는데, 독산동 공장에서 조합이 설립됐다. 인근의 <롬코리아전자>와는 사장이 같아서 롬코리아노동조합의 활동에 회사가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작업물량을 가리봉전자로 빼돌리기 일쑤였다. 이 회사는 초임이 3,400원 이상이고 근로기준법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근에서는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84년 6월 8일 57명의 노동자들이 금속연맹에 모여 노조결성식을 가지고 지혜숙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 회사측은 여느 회사와 다를 바 없이 노조파괴공작을 시작했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136; 편집부 엮음, 『'85년 임금인상투쟁』, 풀빛, 1986, pp.23-25).

O11

노조결성 소식이 알려지자, 사장은 조합간부들을 구슬리기도 하고, “노조가 생기면 일본에서 자재도 공급해 주지 않는다, 적자만 보는 회사를 포기하고 철산리 아파트도 팔 계획”이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또한 김영철 과장은 영등포역상에 직접 찾아가 가리봉전자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서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무슨 노조냐”면서 탈퇴하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고 호통을 쳤다. 14일과 15일에도 계속 위원장 이하 조합 간부들을 불러다가 “결성식에 온 사람을 대라”, “노조를 탈퇴하라”, “노조는 <도산>과 같은 것인데 사장님이 회사를 포기하시면 우리 종업원 800여명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기도 하다가 다음날은 또 “학생과 아파트 입주자들은 배은망덕한 놈들”이라며 펄펄 뛰기도 했다. 탈퇴서를 쓰는 사람에게에는 품질관리과(QC)로 보내준다, 또는 반장을 시켜준다며 유혹하면서 탈퇴를 완강히 거절한 이미경 회계감사에게는 갑자기 2조 근무(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명령해 학교 갈 길을 막아버리기도 했다. 한편 회사는 반장들을 중심으로 회사내에 <한마음>이라는 씨클을 만들었다. <한마음>회원들은 노조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면서 옥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26일에 제1차 단체교섭이 열렸는데 회사측에서는 마치 개인면담이라도 하듯이 개인적으로 트집을 잡으며 노조를 해산하라고 권유까지 했고, 다음 회의를 계속 지연시켰다. 조합원에 대한 개별적인 압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입사시에 소개해 준 사람이나 친지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7월 9일 노조현판식을 가질 수 있었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p.136-138).

노조결성 이후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이룩한 성과로는 1조 근무자들(대부분 학생들로서 오후2시에 작업을 끝내고 등교)에 대한 중식제공, 의무실 설치, 일요일 강제특근 철폐, 수습사원의 월차휴가 실시, 작업자를 무시하는 관리자들의 태도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별로 조합의 기능, 의미 등 기초교육을 실시했고, 아프리(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의 지원으로 전체 조합원 교육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어서 노조집행부는 1985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작성하고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해 애초 요구안인 26.96%에는 못 미쳤지만 17.5%의 인상안을 쟁취했다(편집부 엮음, 『'85년 임금인상투쟁』, 풀빛, 1986, pp.25-58).

O12

지혜숙(위원장), 이미경(회계감사)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편집부 엮음, 『'85년 임금인상투쟁』, 풀빛, 1986

O1

대우어패럴노동조합

O2

대우어패럴노조

O3

O4

O5

1984.6.9~?

O6

서울 구로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주)대우어패럴은 구로구 가리봉동 60번지에 1,2공장이 있고, 549번지에 3공장이 있다. 대우그룹 산하의 의류 수출업체로 종업원은 2천여명이었고, 초기 조합 가입자는 1천3백여명을 상회했다. 1984년 10월 노조에서 나온 호소문에 의하면, 대우어패럴은 자본금이 25억원으로 1983년 한해 동안 23억의 흑자를 냈으나, 근로조건은 양성공 초임이 2,040원이었고, 본공 초임은 2,400원에 불과하여 남녀 평균임금은 월 2,850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했다. 정상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되어있고 월평균 80여시간의 잔업을 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일일생산목표량에 미달되는 반은 밥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저녁마저 굶기고 일을 시켰다. 특히 야간학교 학생들의 경우 목표량을 채우기 전에는 학교도 보내지 않아 수업을 빼먹지 않으려고 점심시간까지 일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반장 이상의 관리자들과 현장노동자들과의 임금차별현상도 심했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욕설과 폭행 등의 인권유린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은 이러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김준용(위원장) 등 산악회원을 중심으로 105명이 6월 9일 섬유노동조합연맹(섬유노련)회관에서 노조결성식을 가졌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p.126-127; 유경순,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0, p30).

O11

그러나 노조결성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 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은 협박, 해고, 납치·감금의 형태로 지속됐다. 노조는 이러한 폭력적인 탄압에 대응하여 1984년 9월까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의 제출과 한국노총·민한당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내의 농성 등 준법적 투쟁방식으로 노조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회사측의 탄압으로 노조탈퇴자가 속출하여 조합원이 1,400명에서 100여명으로 줄어들자, 간부들은 노조의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회사측의 노조탄압을 폭로하여 사회여론화시키는 투쟁방식으로서 10월 20일 한국노총 점거농성과 10월 31일에는 민한당사에서 ‘노동3권 보장, 김우중 회장 및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이러한 투쟁으로 노조는 김우중과 직접 협상을 하게 되었고, 이후 7회에 걸친 교섭 결과 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위 논문, pp.30-31).

구로지역 노동조합의 경우 노조간의 ‘공동숙박교육’은 노동자간의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섬유노련하의 대우어패럴, 선일섬유, 효성물산 조합원들은 1984년 9월 22일부터 10월 7

일, 연3주간(1박2일)의 숙박교육을 했는데, 노조와 노동운동에 관한 교육 이외에 노조의 어려운 상황을 공동토론하면서 상호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로서의 연대감이 형성되었다(위 논문, pp.36-37).

한편 구로지역 노동조합은 조사활동을 통해 노조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회사에 대한 압력수단과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였는데, 대우어패럴노조는 1984년 10월 1일에 「기숙사실태조사」, 1985년 1월 19일에 「상여금 차별대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대우를 뿌리뽑자”는 운동을 하여 사측으로부터 75%의 추가상여금을 받아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월차(생리휴가), 의료보험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위 논문, p38).

대우어패럴노조는 1985년 임금인상투쟁(임투)을 준비하기 위해 노조소식지와 선전물을 통해서 임금인상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여 조합원들의 열기를 모았다. 노조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제호로 매주 목요일 작업이 끝난 후 경제교육, 이론교육 등 임금인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이 과정을 통해 1,080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또한 1985년 4월 21일 임금인상대회인 등반대회와 4월 22일 라인당 2-3인의 조직원이 작업복에 ‘몸벽보’를 붙이는 투쟁을 했다. 임금인상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기업주의 태도를 규탄했고, 이어 철야농성을 했다. 특히 파업농성은 회사측의 임금교섭태도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우어패럴노조는 27%(일당 824원)와 보너스 2만원 인상을 확보했다. 당시 구로지역 민주노조의 지역적 연대활동을 대우어패럴노조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에 지역정치소모임의 운동가들이 결합되어 지역 노조간의 연대활동을 모색했다(위 논문, pp.40-43; 정봉진, p149).

1985년 임금인상투쟁은 정부의 5.2% 임금동결정책을 유명무실화시키고, 나아가 임금인상의 대중적 요구와 맞물려 신규노조결성, 노동조건개선, 노동악법개정,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대한 폭로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한 정권의 민주노조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파업을 기점으로 다시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민주노조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던 구로지역은 정부의 주요 탄압대상이었고 이는 ‘대우어패럴 간부구속’이라는 합법적 방식을 통해 나타났다.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등 노조지도부 3인이 구속된 사실은 대우어패럴에 1985년 6월 22일 오전에 알려졌다. 조합원 150여 명이 총무부장에게 고발취소를 요구했으나 무시당하자, 4시 40분에서 5시까지 농성을 했다. 그리고 6월 23일 오후 1시 위원장 집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4일 출근 후 파업을 결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노조 사무직원인 박경희는 심상정 등과 논의하여 효성물산 위원장을 만나 간부구속사건을 알리고 연대투쟁을 제기했다. 한편 6월 22일, 안양 기독교 원로원에서 한국노총 지원하에 진행된 ‘조합간부 합동교육’에서 김영미 효성물산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우어패럴 김준용위원장 및 노조간부구속 사건이 전달되었고, 이들은 대책을 논의하여 연대투쟁을 대응하자는 결의를 했다. 이어 23일 대우어패럴 부위원장, 청계피복 사무장, 효성물산 위원장, 선일섬유 위원장, 가리봉전자 위원장, 세진전자 해고자 1인, 심상정 등이 청계피복 사무실에 모여, 대우어패럴 노조가 파업을 하기로 한 6월 24일 오후 2시를 기해 동맹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연대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노조위원장들은 각 사업장에서 조합원들과의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 이른바 ‘구로동맹파업’인데, 동맹파업의 결과 구속자가 43명, 불구속 38명, 구류 47명을 비롯하여 총 1,5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위 논문, pp.49-63).

O12

김준용(위원장), 심상정, 유인해, 민경옥, 최한배, 박경희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유경순,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1

O1

선일섬유노동조합

O2

선일섬유노조

O3

O4

O5

1984.6.11~?

O6

서울 양평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4년 6월 11일 섬유노련 회의실에서 73명이 모여 김현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결성되었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132).

O11

노조결성 후, 6월 17일에는 조합간부 15명이 연맹회의실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7일에는 사내식당에서 250여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교육받기도 했다. 8월 19일에는 경기도 송내에서, 8월 25일과 26일은 일영에서 전체 교육을 가졌다. 그러나 회사측의 무성의로 단체교섭은 담보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이에 전체 조합원들은 7월 31일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8월 28일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성탄절도 유급휴일로 됐으며 임금도 1호봉씩 올라 1.8%의 임금인상 효과를 얻어냈다(정봉진, pp.151-152).

하지만 노조의 7월 4일 현판식이 있던 후에도 계속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받아 왔다. 회사는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비만 떼인다”, “회사문 닫는다”는 등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다가 9월에는 상집간부를 해고시켰는데, 작업복없이 남의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였다(정봉진, p132).

O12

김현옥(위원장)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O1

민중민주운동협의회

O2

민민협

O3

O4

O5

1984.6.29~1985.3.29

O6

O7

공개 / 반합법(?)

O8

O9

<민민협>은 “민중민주선언”을 통해 “자립적인 민족경제”, “인간상호간의 신뢰회복”, “공해문제의 퇴치”, “민중의 정치적 각성”, “자주적 평화통일”, “한반도의 평화정착”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활동방향을 밝히고 조직내부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의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Ⅰ)-자료편』, 1989, p5).

O10

1984년을 경과하면서 <민청련>을 필두로 각계각층의 공개적 민주화운동단체들이 형성됨에 따라 각기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개단체 연대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분의 강화와 전체로의 수렴을 모색하기 위한 연대들로서 <민민협>이 결성되었다. <민민협>은 조직단위 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노동자, 농민, 언론인, 문화인, 청년, 종교인 등 부분운동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대기구로서 출발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p5).

O11

<민민협>은 스스로 인정하듯 국민적 명망성이 떨어지는 반면 조직운동원칙과 기층민중운동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매우 중요시했다. 또한 종교운동과 일반운동의 결합, 지식인 종교인운동과 노동자·농민·청년운동의 결합을 성과로 보는 한편 각 부문과 단일한 집중력 간의 갈등, 대중적 호소력의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1985년 2월 26일 <민민협> 중앙위 결의와 2월 27일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 확대집행위의 결의를 바탕으로 3월 29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으로 양 단체가 통합하게 된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pp.5-6).

O12

김승훈·김동완·이부영(공동대표)

O13

O14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Ⅰ)-자료편』, 1989

O1

효성물산노동조합

O2

효성물산노조

O3

O4

O5

1984.7.14~?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가리봉동 60번지에 소재한 효성물산은 1984년 당시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물량을 하청공장에서 처리하여 본 공장의 종업원은 540여명뿐이었다. 임금은 초임이 2,400원이고 A급 미싱사의 경우도 경우 3,200~3,300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휴일도 4대 국경일과 노동절, 그리고 회사창립기념일 뿐이었으며, 사원들은 400%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현장노동자들은 170%밖에 나오지 않았다. 1978년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80년에 해산되었으며, 그동안 모두 5차례의 조직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해고자가 속출하여 노조결성에 대한 패배의식이 가득차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1984년 7월 14일 19시 30분경 섬유노련(이하 연맹) 회의실에서 59명이 모여 노조결성식을 가졌다. 식이 진행되는 중에 회사 간부 20여명이 회의장에 난입하려 했으나 정문 셔터를 내리고 회의를 진행, 무사히 결성식을 마칠 수 있었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p.131-132; 편집부 엮음, 『'85년 임금인상투쟁』, 풀빛, 1986, pp.59-61).

O11

이틀 후 월요일인 16일 9시 15분 연맹의 조직부장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해 구로구청 민원실에 갔다가 미리 와서 대기중이던 회사간부 외 3~4명에게 서류를 탈취당했다. 다음날부터 노조간부와 조합원은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탈퇴를 강요당했고, 상집위원인 유권열은 회사관부에게 폭행까지 당했는데,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 신영순마저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회사는 조희시간에 전조합원을 모아놓고 “불순세력이 불법적으로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선동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모략·비방하였다. 서류를 되찾긴 했으나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있었고 이를 손질하지 못하고 그대로 접수시켰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보완지시가 떨어졌다. 그리고 7월 25일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회사의 탄압은 계속되었는데, 부위원장 3명 모두와 회계감사 1인이 자진탈퇴를 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임명할 정도였다(정봉진, p132).

효성물산노동조합은 조합결성 직후부터 교육에 열중하였다. 노조가 결성되고 며칠 후인 7월 17일과 21일에 섬유노련 회의실에서 각각 조합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고, 그후에도 운동장이나 옥상, 중국집 등지에서 기회가 날 때마다 교육을 하였다. 8월 7일 점심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노조사무실 설치와 전임을 욕구하며 항의농성하여 3일 후에 이것이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제1차 단체교섭이 열렸던 9월 21일에는 조합원들이 아무도 퇴근하지 않고 회의실 밖에서

노래를 부르며 기다리다가 간부들이 나올 때 박수를 치며 조합사무실로 몰려가 교섭경과를 기다리다가 간부들이 나올 때 박수를 치며 조합사무실로 몰려가 교섭경과를 자세히 듣고야 귀가 하는 단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교섭의 진척도 빨라, 10월 말 유니온 샷제의 채택, 노동조합의 유일 교섭단체 인정, 노조창립일·성탄절·불탄절의 유급휴일화, 조합비 일괄 사전 공제제도 실시 등의 합의에 도달했다(정봉진, p151). 이 외에도 월차·생리·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기숙사자치제도, 연중 유급휴일 11일, 경조휴가 18일, 보너스 70%인상, 잔업을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시킬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것, 식사를 노조의 복지후생과에서 관리, 신협개설, 회사매점의 노조 인수, 사무장 상근 등을 회사측과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효상물산은 1985년 임금인상투쟁을 2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3월 15일 1차 요구안 작성을 위해 1)설문조사를 통한 조합원의 생활실태조사와 현재 임금, 1985년 원하는 임금인상 요구액 등에 대한 의견수렴 2)3개월 전부터 써온 가계부와 섬유노조연맹의 생계비 품목을 기초로 하여 가리봉시장에서 생계비 조사(그 결과 최저 생계비 16만원이 나옴), 3)고아원, 갱생원, 요양원의 최저생계비 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다시 조합원들에게 2차 설문지를 돌렸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종 결정안은 정액제 910원 인상(30%인상)이었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교육했다. 이후 노조는 “내 월급은 내가 올린다”는 표어를 내걸고 전체 조합원 교육, 속보와 소식지 배포, 공개토론,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공개집회, 임금인상에 관한 노래작성·유포 등을 통해 임금인상 910원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갔다. 결국 5월 7일 식대 포함 904원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조합측의 승리로 효상물산 노조의 임투는 막을 내렸다(편집부 엮음, pp.65-71).

O12

김영미(위원장), 유권열(상집위원)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들베개, 1985

편집부 엮음, 『'85년 임금인상투쟁』, 풀빛, 1986

O1

대왕제지노동조합

O2

대왕제지노조

O3

O4

O5

1984.7.24~?

O6

경기도 군포

O7

공개 / 합법

O8

O9

O10

7월 24일 노조결성

O11

회사측은 노조결성 후 8월 2일 “회사의 제품생산량과 연료사용량 통계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위원장 박남홍을 해고시켰다. 박남홍이 이에 항의하자 사장 김창규는 ”나는 회사문을 닫고도 3년간 끄덕없다. 법대로 하라“며, ”해고자가 경비의 제지에 불응하고 사내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나도 부당해고로 벌을 받을테니 너도 벌을 받아라“며 쫓아냈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146). 이에 박남홍 위원장은 손가락을 깨물어 ”노동조합을 지키겠습니다“는 혈서를 쓰기까지 했다. 이를 계기로 『화학노보』에 <대왕제지>기사가 크게 실리고, 화학 경기협회의 지원에 힘입어 9월 25일 복직이 되었으며 노조사무실도 설치하게 되었다(정봉진, p154). 9월 20일에는 사장 조카인 두현표에게 조직부장 홍현식이 폭행을 당해 5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정봉진, pp.146-147).

O12

박남홍(위원장), 김재곤(사무장), 홍현식(조직부장)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O1

라이프제화노동조합

O2

라이프제화노조

O3

O4

O5

1984.8.7~?

O6

경기도 성남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성남공단에 있는 라이프제화는 구두제품 불량률 등으로 따져 전체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그 액수만큼 작업시간 외에 무료로 보충작업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종업원들은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회사는 조회 불참자 40여명 중 5명을 추려 즉각 해고조치했다. 40여명의 노동자들은 밤 10시까지 퇴근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농성하며 복직을 요구했다.

해고자 5명이 출근을 시도하자 회사는 정문을 막았고,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정문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과 노동부가 조정애 나서 저녁쯤에야 복직이 결정됐는데, 이때의 열기를 모아 8월 7일 55명의 노동자들이 상대원동에 있는 음식점에 모여 노조를 결성하였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147).

O11

O12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O1

유니전노동조합

O2

유니전노조

O3

O4

O5

1984.9.1~?

O6

서울 구로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주식회사 유니전(대표: 최석영)은 구로 3공단 내 가리봉동 673번지에 소재해 있는 회사로 종업원은 당시 1,000명이 조금 못되었는데, 작업환경은 대단히 열악했다. 첫째 초임이 3,250원이고 7년 근속자의 경우 3,700원에 불과했다. 둘째 출근시간도 월요일은 조퇴를 이유로 10분 일찍 나오게 하고 저녁은 분임토의한다고 15분씩 늦추었으며, 매주 수요일은 대청소의 날로 정해 30-40분씩 늦게 퇴근하게 했다. 현장은 환기시설의 미비로 납땀 연기가 자욱했고 탈의장도 비좁아 노동자들의 불편함을 더했다. 그리고 당시 무료대여가 원칙인 철산리 아파트 입주자에게서 입주금(5만원)과 관리비(8천원)를 받기도 했다. 또한 1982년 11월 회사는 불황을 이유로 70여명이나 회사를 그만두게 함으로써 남은 동료노동자들까지도 집단감원의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4년 9월 1일 토요일 33명의 노동자들은 금속연맹 사무실에서 금속노련의 지원을 받아 노동조합 결성식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위원장에 현운실, 부위원장에 안인숙, 강정순, 임관수가, 사무장에는 곽효영 등이 선출되었고 설립신고서는 4일 구로구청에 접수되었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138;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31-34).

O11

노동조합 결성사실을 안 회사는 9월 3일부터 노조를 깨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대한 회유, 협박, 납치, 부서이동, 그리고 사내방송을 통해 노조를 불순단체로 몰아부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구로구청은 노조규약 중 탈퇴규정이 없고, 상호기재(규약에 '(주)유니전'이 아니라 '한국유니전'으로 기재된 문제)의 문제 등을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구로구청의 결정에 따라 재결성을 시도하려고 조합원들은 금속연맹 사무실로 몰려갔다. 그러나 회사가 먼저 도착하여 차량으로 건물을 에워싸고 종업원의 출입을 차단했다. 14일에는 임원 모두가 부서이동을 당했다. 이에 노조간부들은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9월 17일 그동안의 경위와 결의를 「노동조합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된 유인물을 나누어주다가 그 날짜로 해고처리되었다(정봉진, pp.139-141;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34-36).

회사측은 10월 25일 회식을 빙자하여 어용노조 결성식을 치루고 김종근계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는

데, 이 결성식에 참석한 노동자들까지도 그것이 노조결성식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도장도 반장이 관리하고 있던 도장을 일괄사용했다. 이에 대항하여 10월 27일 노동자 34명이 독자적으로 금속노련 강당에 모여 노조를 결성했는데, 이때 금속노련측에서는 “어느 쪽이 어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도와주기를 거절했고, 심지어 회사측의 어용노조를 “순수하다”며 지지하기도 했다. 10월 29일 구로구청은 회사측의 어용노조에 신고필증을 교부했고, 11월 3일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그리고 1985년 2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부터 해고자들이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기각판정을 받게 되었다. 11월 5일부터는 똑같이 노조결성투쟁 중 부당하게 해고당한 협진양행과 유니전의 해고자 9명이 아침 일찍 금속노련회관을 점거하고 참문에 플래카드를 붙인 채, 1)해고자 복직, 2)노동조합 신고필증 교부, 3)약탈기업주 이용호(협진양행 회장), 최석영(유니전 사장)의 처벌, 4)노동부장관, 구로구청장, 팽종출 금속노련위원장은 유니전, 협진양행 노동조합사건을 책임지고 물러날 것, 5)어용노조 퇴진할 것(유니전), 6)금속노련 이진우 조직부장은 각성할 것등의 요구를 내걸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자들은 5일간의 조사 끝에 10-20일까지의 구류처분을 받았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pp.36-37; 정봉진, pp.153-154).

O12

현윤실(위원장), 안인순·강정순·임관수(부위원장), 김정자(회계감사)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 <연구팀 자료>

<사안 1> 1985년 7월 13일 유니전(주)에서 임금인상관련 유인물 소지 등을 이유로 해직된 건.

항거대상

○ 전두환 정권과 유니전(주)의 부당노동행위

항거행위

- 신청인 김순천(1962. 2. 6. 생)은 1984년 8월 20일부터 유니전(주)의 생산직 공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장취업'자인 이상주(명예회복 제1241호)와 함께 노조결성 등의 활동 중,
  - "1985년 7월 13일경 임금인상 관련 유인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함(서울형사지방법원 제14부 「판결」 86고합823, 기록 28쪽).
  - 판결문상의 직접적인 해직 사유가 '임금인상 관련 유인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질적 이유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강제 해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민주화에 기여 여부

- 신청인은 노동자의 권익실현과 정치적 각성을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 등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의 회복 및 신장에 기여함.

O1

협진양행노동조합

O2

협진양행노조

O3

O4

O5

1984.9.18~?

O6

서울 구로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68년에 설립된 협진양행은 1979년에는 수출1억불탑을 수상했고, 1984년 당시는 14개의 방계회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회장은 고양군·파주군 출신의 민정당 국회의원인 이용호였다. 중졸 초임 일당이 2,400원이고 5년 근속자가 3,100원에 불과했으며, 연차휴가는 아예 없었다. 관리직의 상여금이 400%인데 반해 현장은 200%만 지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리직은 사내 유니폼이 하복·동복에다 춘추복까지 있는데 생산직은 얇은 가운 하나로 사철을 지내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뜻있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자 동분서주했으나 금속연맹마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회사내에 노조설립 정보가 새는 듯하여 다급해진 노동자들은 금속연맹 시협의 회에 애원, 겨우 결성식을 하기로 했으나 약속된 9월 18일 협의회 주변에는 회사관리자들이 깔려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회사의 제지를 뚫고 모인 63명의 노동자들은 광상순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원진 및 간부 사수를 선출하고 성공리에 결성식을 마쳤다(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pp.141-142; 노동운동탄압저지 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17-19).

O11

다음날부터 회사의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되었는데, 노조임원이자 반장인 광상순, 황경희, 최영자를 감금하고 탈퇴를 종용했고 김두식, 염승복 등에게는 관리자 3-4명이 한 조가 되어 철산리 등으로 끌고 다니며 협박을 가했다. 21일 출근하는 노조간부들을 회사간부들이 저지하고 현장에서 끌어내자 충돌이 발생, 12명의 조합원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속에서도 350여명의 종업원 중에서 300여명이나 조합에 가입하는 등 조합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회사는 노조탄압을 더욱 노골화시켜 탈퇴를 거절하는 조합원은 기숙사에서 내쫓고 “노조가 생기면 회사가 망한다”, “조합비가 5%나 되고 조합 간부들이 조합비를 다 쓴다”는 등 악선전에 열을 올렸다. 한편 구로구청에서 노조설립 신고필증 발급을 계속 미루어 10월 2일 35명이 집결, 구로구청으로 가서 이에 항의하자 남부서 정보과 형사가 나와 해산을 종용했다. 구로구청 측은 1)규약 25조에 2/3로 될 것이 1/3로 적힌 점 2)사무실 소재지 주소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보완지시가 내려졌으며, 보완은 설립총회때 참석했던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2/3의 찬성에 의해 규약개정이 되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일주일 내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측의 계속되는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해고로 임시총회가 이루어지지 못했

고, 결국 협진양행노조 설립은 무산되고 말았다(정봉진, pp.142-143, 154;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pp.19-26).

O12

곽상순(위원장), 최영자·김두식(부위원장), 황경희(회계감사)

O13

O14

정봉진, 「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 『현장2: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돌베개, 1985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O1

민주화추진위원회 (☞ <사건편>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일명 ‘깃발’) 사건 참조)

O2

민추위(일명 ‘깃발’그룹)

O3

1984.10.7(결성 일자는 검찰 추정 발표)~1985.7.18

O4

O5

O6

O7

비공개 / 비합법

O8

위원장 아래 선도적 정치투쟁을 담당하는 민주화투쟁위원회(민투), 노동운동 등 민중운동에 대한 지원 투쟁을 담당하는 노동문제투쟁위원회(노투), 대중에 관한 광범위한 선전·선동활동을 통하여 민투와 노투의 활동을 보조하는 홍보위원회, 민투·노투의 대학 간 연대·연합을 위하여 각 대학 내 조직부의 역할을 하는 학간(學間)연락책 등 4개 기구와 깃발배포팀을 두고 있다. 한편 노투는 그 산하에 반합법투위, 학생회 사회부, 지역선전위를 두고 있다. 좀 더 큰 틀에서 <민추위> 조직의 기본 모형은 학생회(대중조직/합법)-투쟁위원회(선도적 투쟁조직/반합법)-민추위(전위적 지도조직/비합법)라는 3단계 틀로 이루어져 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96-97, 104; 조선일보 1985.10.30 체계도 참조).

O9

O10

1983년부터 학생운동은 학생대중의 참여의 폭을 넓혀가면서 지속적으로 대학간 가두연합시위를 시도했다. 서클과 과 학회, 학도호국단은 이미 민족민주이념에 기초한 학생운동세력이 획득한 상태였다. 노동운동의 경우에도 1984년 대구택시기사들의 대규모 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자발적 요구투쟁이 점차 증가하였고, 사업장 단위의 신규노조결성도 활발해 졌다. 이 시기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응양식과 정책기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학원자율화조치를 필두로 한 일련의 유화조치가 그것이다. 유화조치는 탄압일변도의 통치방식을 부분적으로 약화시킨 전술적인 후퇴의 측면도 있지만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보다 장기적으로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전략적 재정비의 측면도 지니고 있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100).

<민추위>는 ‘학림’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깃발’이라는 팜플릿을 통해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깃발’그룹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유화국면의 원인을 미국과 일본의 정책변화가 종속과시즘의 국내정책에 변화를 초래, 유화국면이 도래했고 따라서 유화국면은 장기화된다는 기존 주류의 학생운동 지도부의 견해와 달리 국내요인우위론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군부정권은 더 이상 폭력적 탄압만으로 민주세력을 누를 수 없어 민주세력과 국민대중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로 유화조치를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1980년 5.17쿠데타 이후 폐지된 학생회를 다시 부활시켜 학생대중을 결집시키고,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여 군부독재로 하여금 다시 폭력적인 탄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편집부 엮음, 『학생운동논쟁사1』, 일송정, 1990, p67, 78).

이와 같은 판단 속에서 민주위는 한국사회운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위조직'의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판단했다. 즉 운동역량을 결집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합법적인 전위조직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의 패배에 대한 교훈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위는 당시 학생운동의 기존 지도부에 대해서 개량주의, 자연발생적 대중추수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종일관 목적의식적 지도를 강조했다. 이는 또 하나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주위를 결성하기 위한 움직임은 1984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었다. 박문식과 문용식은 1984년 2월경부터 한국사회의 모순구조, 운동의 주체설정,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흐름, 당면한 학생운동의 과제 등에 관해 긴밀히 의견교환을 나누었다. 논의 결과 6월경 양자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에서 각각 전위적 기간조직을 건설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조직화할 것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위가 조직되는 데에는 「깃발」의 힘이 컸다. 자신의 투쟁노선을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생운동 활동가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재차 이들을 민주위의 하부조직으로 묶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위는 깃발배포팀(안병룡·윤성주)을 중심으로 1984년 상반기부터 서울대 민중생활조사위원회를 지도하고 있던 황인상, 「깃발」의 노선에 동의하는 남부지역 대학들과 연대사업을 하던 박승현 등으로 구성되었다. 민주위는 결성과 동시에 하부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84년 10월 12일 서울대에 '민투'가 만들어지는데, 이후 연대, 성대, 고대 등에서도 속속 결성되어 1984년 11월 3일 연세대에서 거행된 학생의 날 기념연합집회에서 이들 4개대학 민투가 주축이 되어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을 결성한다. 그리고 선전작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내의 언론매체를 기반으로 홍보위가 구성되었다. 아울러 곧바로 대학 간 연계선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성대와 남부지역대학들 사이에서만 안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101-104).

O11

<민주위>가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기 시작한 것은 1984년 9월초 전두환 방일을 즈음한 반일반전(反日反全)투쟁이었다. 당시 학생운동지도부는 학생회구성, 프락치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방일반대투쟁·일본통합막료장방한반대투쟁을 매개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선명히 벌여나가야 한다는 <민주위>의 주장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위>는 「깃발」을 통해 기존 지도부를 대중추수주의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투쟁을 조직하려고 시도했다. 11월 14일, <민투학련> 소속 대학생 264명(연대·고대·성대)이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하여 '노동악법 개정', '전면해금 실시'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민중생존권 보장과 제반 민주화조치를 열거한 14개항의 요구조건을 발표했다. <민주위>는 12월로 들어서자 곧바로 총선투쟁에 돌입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104-105).

이들은 「총선투쟁지침」이라는 팜플릿을 통해 당시 선거는 지배체제의 재생산과정이라는 명제에 근거하여 우세하게 유포되고 있었던 '선거거부론(총선보이코트진술)'을 반박하고 선거제도는 시민민주주의 혁명을 거친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내부의 계급모순이 격화되자 반체제운동을 체제내화시키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는 지배체제의 재생산과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중의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라는 역사성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거활용론'을 주장했다(편집부 엮음, 『학생운동논쟁사1』, 일송정, 1990, pp.71-72).

실제의 총선투쟁은 12월부터 전국대학연합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민주총선쟁취학생연합, 민정당재집권저지투쟁연합 등의 반합법투쟁조직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선전·집회·가두시위 등이 이어졌고, 선거직전 시기에는 각 유세장에서 반민정당·군부독재 재집권결사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등을 외치며 시위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했는데, 이는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106).

또한 민주위는 노학연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민중지원투쟁(민지투)을 상정하고 이를 수행할 독자적인 산하조직으로 '노투'를 만들었다. 민주위그룹에서는 이미 '노투'의 전신인 '민중생활조사위원회(민조위)'를 서울대 내에서 꾸려나가고 있었다. 민조위는 민중문제를 학생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나아가 공단지역시위를 조직해 내는 대중적 실천단위의 단초였다. 민지투는 1984년 하반기에 본격화되었는데, 9월 19일 청계피복합법성쟁취대회를 시발로, 10월 12일 2차대회, 10월 26일 가리봉 5거리에서의 노동악법개정투쟁, 27일 구로공단·부평역 시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념일에 맞춘 남대문시장·구로공단 시위, 12월 7일 신답역에서의 박종말 열사 추모시위 등 크고 작은 시위가 잇달았다. 1985년 들어 민지투는 더욱 활발해졌다. 3월 성원제강지원 구로역투쟁, 목동빈민지원투쟁, 4월에 청계노조 합법성쟁취 4차대회, 5월 메이데이 노학연대가두시위 등이 행해졌다. 6월 구로연대파업에서 노투는 구로공단내 대우어패럴 농성동참투쟁과 시위를 주도했다. 시위투쟁 이외에도 노투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선전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노투 산하에 별도의 지역선전위를 설치하기도 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108-109).

1985년 5월 23일 삼민투소속 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이후 공안당국은 민주위를 그 배후로 지목, 민주위 핵심간부들이 대거 체포되어 민주위는 사실상 와해되고 만다.

#### O12

문용식(文龍植, 위원장), 박승현(朴勝鉉, 학간연락책), 윤성주(尹聖柱, 홍보위원장), 성명섭(成明燮, 언론협약책), 김영렬(金榮烈, 자유언론책), 이홍균(李弘均, 문화선전책), 우종원(禹鍾元, 학회유인물책), 손병흠(孫秉欽, 「깃발」배포팀), 안병룡(安秉龍, 민투위원장), 조경애·박종운(趙慶愛·朴鍾雲, 민투조직책), 황인상(黃仁相, 노투위원장), 이종원(李鍾源, 지역선전위), 민관홍(閔寬弘, 사회부장), 민병렬(閔丙烈, 반합법특위장), 박문식(朴文植), 한덕희(韓德熙, 인천노투위원장), 박윤배(朴允培, 인천노투지회장)(조선일보 1985.10.30)

#### O13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전국총학생회연합(전학련)

#### O14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편집부 엮음, 『학생운동논쟁사1』, 일송정, 1990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민주화추진위원회의 「깃발」 제2호」, 117~124쪽

O1

민주통일국민회의

O2

국민회의

O3

O4

O5

1984.10.19~1985.3.29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4년 6월에 결성된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에 포함되지 못한(->참가하지 않은: 연구팀) 명망성있는 재야민주인사들의 경우 1984년 9월, "매국방일저지투쟁"을 계기로 10월 19일 <국민회의>를 결성했다. <국민회의>는 "국민각계의 민주민권운동을 대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선전활동을 전개할 단체가 있음으로써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 정책과 통치를 효율적으로 비판, 공격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과 "민족통일문제가 당면한 민족적 과제로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족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 대변할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 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Ⅰ)-자료편』, 1989, p5).

O11

<국민회의>는 나름의 단일한 통합성과 국민적 명망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투쟁력이 부재했다. 따라서 조직운동으로서의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었으나 내적 통합력이 약했던 <민민협>과의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5년 3월 29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으로 통합하게 되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pp.5-6).

O12

문익환(의장)

O13

O14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Ⅰ)-자료편』, 1989

O1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

O2

민투학련

O3

O4

민주화추진위원회

O5

1984.11.3~?

O6

서울

O7

비공개 / 비합법

O8

O9

O10

1984년 10월 7일에 결성된 <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민주위)는 결성과 동시에 하부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84년 10월 12일 서울대에 <민주화투쟁위원회>(민투)가 만들어지는데, 이후 연대, 성대, 고대 등에서도 속속 결성되어 1984년 11월 3일 연세대에서 거행된 학생의 날 기념연합집회에서 이들 4개대학 <민투>를 주축으로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을 결성한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104).

O11

<민투학련>은 <민주위>의 외곽조직으로서 대표적 투쟁으로는 1984년 11월 14일 오후 4시 30분 <민투학련>소속, 264명의 연대·고대·성대생들이 주도한 민정당(민주정의당) 중앙당사 점거농성투쟁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노동악법개정’, ‘전면해금실시’ ‘비례대표 원칙을 무시한 선거법 개정’, ‘최저임금으로 일당 4천원을 보장’, ‘권이혁 문교부장관 문책’, ‘학도호국단 폐지’(필기체는 조선일보 1984.11.15) 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민중생존권 보장과 제반 민주화조치를 열거한 14개항의 요구조건을 <민투학련>명의로 발표했다. 민정당사 점거농성투쟁은 당시 2.12총선을 앞두고 제반 민주화운동을 반군사독재연합전선으로 견인하고, 학생운동에 명확한 정치투쟁의 방향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민정당사 점거계획은 11월 6일 연세대에서의 철야농성 중 거론된 것으로 13일 구체적 계획을 적은 쪽지를 각 학교에 보내 이루어졌는데(필기체는 조선일보 1984.11.15), 이러한 **기습점거식 투쟁방식**은 그 후로 대중투쟁방식과 실천적으로 결합을 모색할 때까지 유행처럼 퍼져나갔다(위의 책, p105).

O12

이재권(李在權, 고대민주위원장, 민투학련공동의장), 최형두(서울대, 공동의장),李志호(성균관대), 신준영(연세대)(조선일보 1984.11.15)

O13

민주화추진위원회

O14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O1

협진화섬노동조합

O2

협진화섬노조

O3

O4

O5

1984.12.15~1985.4.4(민주노조)

O6

경기 성남 제2공단

O7

공개 / 합법

O8

O9

O10

협진화섬은 내수보다는 주로 수출하는 봉제업체로 1984년까지만 해도 종합무역상사의 주문을 받아 독일, 일본 등지에 수출량을 늘려가던 중으로 5개 생산라인에 30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수출부진을 가져왔고 1984년 하반기 이후 생산라인을 4개로 축소했고, 1985년 4월에는 2개라인 120명으로 인원을 줄이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현장노동자들에게 직접 전가하기 위해 도급제 형식으로 임금체제를 전환하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4년 10월 초부터 뜻을 같이 하는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상여금 미지급, 비인격 대우에 대한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조합결성을 준비해 왔다. 1984년 12월 15일 생산직 근로자 230명 중 74명이 회사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모여 섬유연맹 조직부장, 교선부장의 참석 하에 결성식을 거행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102-103).

O11

무사히 노조결성식을 마쳤으나, 결성과정에서 핵심적인 조합간부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이 가해졌다. 위원장에게 200만원을 줄테니 노조가 회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조합 집행부의 간부들에게는 면담을 하자는 구실로 사장 자가용에 태워 서울 시내 불고기집을 전전 하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 그러나 회사측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게 되자 결성신고 11일만인 12월 28일에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성남시청으로부터 교부받게 되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수일 만에 230명 중 190명(80%)이 가입원서를 낼 정도로 조합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사측은 이후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1~2명씩 불러내어 노조탈퇴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고, 현장에서의 공포분위기 조성, 기숙사생들에게 외출·외박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또한 경영난을 빙자로 무더기 인원감소를 노조탄압책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노조이탈을 조장했다. 1985년 3월 말, 그 동안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잘 견뎌왔던 김진숙위원장이 돌연 병가를 신청하고 사라진 후, 조합집행부는 구심점을 잃고 조합원에 대한 지도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4월 4일 노조반대파를 이끌었던 교선부 차장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소집,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어용노조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결국 협진화섬은 섬유연맹에서 인준필증을 재발급해줌으로써 어용노조로 출발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성남지역에 <협진화섬노동조합탄압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협진화심 문제를 지역내 노동자들과 시민에게 알리고 민주노동조합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발생시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103-108).

O12

김진숙(위원장)

O13

O14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O1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98.3.27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으로 개칭)

O2

민언협

O3

O4

O5

1984.12.19~1998.3.27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초기 <민언협>은 의결기구인 총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상설집행기구로 사무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실행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었다(『말』 창간호 1985.6.15, p94).

O9

창립선언문 첨부(『말』 창간호 1985.6.15, pp.88-89)

O10

1975년 유신독제에 맞서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동아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 <조선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조선투위)회원들과 1980년 계엄하에서 역시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80년 해직기자협의회」회원들이 모여 '민족·민주·민중언론'의 실천을 선언하며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 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발족시킨 단체이다(『발간사』, 민언협, 『말 합본호』, 1987, 『말』 창간호 1985.6.15, p87).

O11

<민언협>은 발족 5개월 후인 1985년 6월 기관지 『말』을 창간했다. <민언협>은 1986년 9월 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명동성당 사제관 2층 소강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정권의 언론통제실패를 구체적으로 실증하는 「보도지침자료집」을 『말』 특집호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보도지침자료집은 '권력과 언론의 음모(부제; 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라는 제목아래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약 10개월분의 보도지침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개헌문제를 둘러싼 국회 안팎의 여·야대립과 학생·노동자시위관계, 반체제세력의 활동관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이었다(『말』 제8호 1986.3.30, pp.48-49). 보도지침공개와 관련하여 12월 12일 김태홍 사무국장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신흥범 실행위원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이어 12월 15일 「보도지침」을 제공한 김주연 한국일보기자가 연행되었고,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역시 구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민언협>회원들은 12월 10일부터 농성에 들어갔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족미술협의회>,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민주교육실천협의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연대항의 농성을 벌였다. 한편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위->민주협: 연구팀, 이하 동일)는 12월 23일 태윤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언론자유 및 보도지침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민주협>소속 국회의원과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보도지침과 관련한 언론사태를 심

각한 정치현안으로 규정하고 고문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가족면담조차 거부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말』 제9호 1986.12.31, pp58-61). 하지만 보도지침 공개와 관련한 정권의 탄압은 계속되었는데, 수배중이던 박우정 실행위원이 1987년 3월 6일자로 구속되었고 정상모 사무국장도 농성도중 3월 9일 경찰에 연행되었다(『말』 제10호 1987.3.20, p68).

O12

초대: 송건호(의장), 김인한·최장학·김태홍·김승균(이상 공동대표), 윤활식·신흥범·이부영·성한표·노향기·박우정·이호웅·김도연(이상 실행위원), 이경일·나병식(이상 감사), 성유보(사무국장)(『말』 창간호 1985.6.15, p94)

O13

O14

『말』 창간호 1985.6.15, 제8호 1986.3.30, 제9호 1986.12.31, 제10호 1987.3.20

O1

대우자동차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O2

대우차노조정추위

O3

O4

O5

1984.12.26~1985.1.5

O6

인천, 부평, 양평, 부산, 동래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대우자동차는 노조집행부가 조합을 비공개로 운영해왔고, 조합원에게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음으로써 조합 집행부의 독재에 대한 불만이 전 조합원 사이에 깔려 있었다. 일례로 1980-1982년 상여금 체불시 회사측과 조합 집행부가 비밀리에 체불이 아니라고 합의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한 바 있다. 또한 회사측과 조합 집행부간의 합의사항을 조합원에 공표하지 않았으며, 조합의 최대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대회 및 운영위원회가 거의 소집되지 않았고, 상무 집행회의의 각 부서, 실의활동이 전무하여 조합의 교육기능이 마비되어 있어 조합의 단결력 확보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되어 대 회사투쟁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양도,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84년 8월 초 송경평씨의 신분노출(대학출신)과 회사측의 부당처우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막았던 것을 계기로 군필 복직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이용선과 송경평을 중심으로 군필 복직자 부당처우 문제, 상여금지급규정문제 누락문제, 부서이동문제(회사측의 조합활동탄압), 집행부의 어용성 문제를 제기하며 11월 10일부터 중식시간 및 일과 후 집회 및 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회사측 중간관리자들의 극심한 탄압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 대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나 군필 복직자들의 조직화에 실패하여 이후 대의원 선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12월 21일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으나 대회를 줄속으로 치르려던 김영만 위원장이 부평대의원들로부터 회의를 저지당하자 무기휴회를 선포하고 본조간부, 경비, 경찰의 호위하에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12월 26일 대의원 및 적극적 조합원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85년 1월 5일 해체)를 발족시키고 소식지를 배포했다. 하지만 사측에서 12월 27일과 28일에 이용선과 송경평을 각각 해고하자 이들은 부당해고에 맞서는 출근투쟁을 감행하게 되었다. 1985년 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이후 임금인상투쟁으로 재집결할 것을 결의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147-170; 편집부 엮음, 『'85년 임금인상투쟁』, 풀빛, 1986, pp.140-149).

O11

핵심조합원들은 1월 25일 「새로운 전진을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유인물을 통해 불신임안 부결로 생긴 무기력과 실의를 떨쳐 버리고 집행부 체질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싸움의 대안으로 “집행부가 임금인상 문제에 있어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함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다가오는 임금인상교섭에 대비한 조사통계활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임금인상 요구서안 작성을 위해 회사측의 경영실적 및 조합원들의 생활실태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한 핵심조합원들은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하여 임금교섭의 기본원칙(최저생계비 부족분 연차적으로 보상, 생계비 상승분 반영, 생산성 향상분의 공정한 분배, 정액인상, 호봉승급 임금인상률에서 제외), 임금인상률 27%(54,700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집행부의 16.3%안-이후 위원장 직권으로 18.7%로 일방적 조정-과 대립하여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의원들은 교섭의 상징권자인 집행부와 타협의 필요성과 집행부의 무책임성을 각성시킬 수 있는 조합원의 단결력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집행부측의 18.7%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18.7%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3월 27일, 대의원들은 16명의 서명으로 된 건의서를 집행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 내용은 1)대의원들이 선정한 대의원 1명을 교섭위원에 참여시킬 것, 2)임금교섭 준비를 위해 간부합동회의를 소집할 것, 3)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을 수립할 것, 4)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임금인상에 임하는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집행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로써 대의원과 집행부는 임금인상투쟁을 앞두고 한 고리로 묶여지게 되었고,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열기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중교육 및 홍보·선전작업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집행부는 임금교섭에 초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편집부 엮음, pp.150-155).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우자동차부평공장 노조원 2천여명은 1985년 4월 16일부터 임금인상조건으로 기본급 18.7% 인상, 근로수당·가족수당·품질관리수당 신설·위험수당 등 4년동안 동결된 11개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임금은 10%이상 인상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지난 2월 1일 정기승급때 4.38%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번엔 5.7%만 인상하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 파업투쟁에는 인천공장, 부산의 전포동공장, 동래공장 및 서울 양평동 정비사업소 노조지부장들이 합세했고, 인천공장 노동자 2백여명은 부평공장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동정파업에 들어갔다(조선일보 1984.4.18). 파업농성이 사흘째 계속되자 회사와 정권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대우그룹 총수 김우중이 직접 나서서 해산을 요구했지만, 노동자들은 4월 19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게 된다. 조합원들의 요구에 밀려 파업을 선언하고 어정쩡하게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김영만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가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빠져나갔지만, 이미 실질적인 지도부는 홍영표 대위원을 비롯한 민주파에게 넘어와 있었다(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책, 1999, p80). 회사측은 파업이 장기화되자, 22일부터 휴업을 결정했다. 또한 경찰 1천 5백여명이 회사주위에 배치되어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아 노동자들과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조선일보 1984.4.23). 결국 25일 노사는 기본급 9.5%인상, 전종업원 1호봉 승급, 근속수당 등 1.2%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에 합의하고 26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다(조선일보 1985.4.26; 편집부 엮음, pp.157-166; 1985년 이후는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엮음, 『'87 노동자대투쟁: 7,8월 인천지역사례』, 풀빛, 1988, pp.131-159 참조).

O12

송경평, 이용선, 홍영표(대의원)

O13

O14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 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책, 1999  
편집부 엮음, 『'85년 임금인상투쟁』, 풀빛, 1986  
조선일보 1984.4.18, 4.23, 4.26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엮음, 『'87노동자대투쟁: 7,8월 인천지역사례』, 풀빛, 1988



---

---

〈1985년〉

- 01.14 경동산업노동조합
  - 01.23 진도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
  - 03.03 성원제강노동조합
  - 03.03 동일제강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
  - 03.09 해태제과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 03.29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 03. 반공해운동협의회
  - 04.10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
  - 04.17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 04.17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 05.04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 05.31 공해문제성직자협의회
  - 06.01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구민련)
  - 06.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
  - 08.25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 11. 민족미술협의회(민미협)
  - 12.2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



O1

경동산업노동조합 (☞ <사건편> 경동산업 민주노조 결성투쟁 / 경동산업 노동자 집단분신 사건 참조)

O2

(주)경동산업노조

O3

O4

O5

1985.1.14~?

O6

인천 북구 가좌동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인천시 북구 가좌동에 위치한 경동산업은 주로 스텐레스 양식기(수저, 포크, 나이프)와 기물(그릇, 냄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1960년 6월 27일 창립되었다. 1964년부터는 생산품을 유럽, 미국 등지에 수출하기에 이르면서 대기업으로 자리를 굳히기 시작했으며 1984년에는 생산실적이 4,500만불에 달했고, 노동자수도 3,000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근로조건은 대단히 열악해서 1984년 당시 근무시간은 2교대시 12시간, 많은 14시간은 보통이었고, 특근을 강요당하며 일해야 했다. 하루일당은 여자가 2,650원 정도이고 남자는 3,150원으로 최저생계비를 밑돌았고 국가공휴일, 심지어는 회사창립일까지도 일을 해야했고 휴게실은 물론, 철야작업을 하고 나면 남녀가 함께 건조실에 박스나 종이 부스러기를 모아놓고 눈을 붙이고 한 여름에는 현장바닥에서 나뭇굴고 또 다시 작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상여금은 연200%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호황일 때만 가능했다. 또한 연차는 아예 없고 월차수당은 지급이 되나 휴가로 찾아 쓸 수 있는 제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여자의 경우도 생리휴가를 찾아 쓸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또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재가 빈발했다. 이러한 노동조건속에서 경동산업에서는 해마다 노동조합결성시도가 있었으나 회사에 의해 적당한 해고수당을 받고 권고사직 형태로 주체들이 번번이 그만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1984년 봄부터 B, C, D공장에서 조그마한 노동자들의 모임이 형성되었고 처음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만나다가 만남이 잦아지자 “우리들의 생활실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회복 밖에 없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 노동조합결성을 주도한 노동자들은 김홍섭, 한덕희, 정명자였는데, 사측은 이들에게 부서이동, 사표종용과 구타 및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했는데 결국 1985년 1월 14일 인천시 중구 내동에 소재한 영풍루라는 중국집을 빌려 위원장에 김홍섭, 부위원장에 공성수, 회계감사에 박기원, 배정웅을 선출하고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43-49).

O11

노조결성 이후 회사측은 노조간부들에 대해 회유, 협박은 물론이고 감금과 구타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노조파괴공작을 벌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조파괴공작은 사측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금속

노련, 노동부, 인천시청, 부평경찰서, 안기부 등의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금속 노련은 노조설립에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보이다가, 회사측이 1월 18일 결성한 어용노조에 가맹인준증을 교부함으로써 경동산업 노조원들을 고립시키는데 일조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pp.49-60;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엮음, 『'87노동자대투쟁: 7,8월 인천지역사례』, 풀빛, 1988, p322).

O12

김홍섭(위원장), 공성수(부위원장), 박기원·배정웅(회계감사), 한덕희, 정명자

O13

O14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엮음, 『'87노동자대투쟁: 7,8월 인천지역사례』, 풀빛, 1988

O1

진도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

O2

진도노조결준위

O3

O4

O5

1985.1.23~?

O6

서울 가리봉 · 인천 · 부평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주)진도는 가리봉동의 의류사업부, 인천과 부평의 금속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조결준위는 인천 공장에서 결성되었다. (주)진도는 (주)한국특수연마, (주)국제보세, 영국의 팬서카현지법인 등 4형제가 경영하는 족벌기업으로서 비약적인 발전과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었다. 임금은 일반공 초임 3,500원, 기능공 초임 4,200~4,300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르는 호봉인상 및 임금인상폭이 연간 200원에 불과했다. 작업현장은 먼지와 연기가 가득하고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끊이지 않아 진폐, 난청환자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장노동자의 월평균 잔업시간은 80시간을 초과하며 1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1984년 10월 김건호의 해고와 복직투쟁으로 회사는 긴장상태에 있었으며 사내 요주의인물 탐색 및 감시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김지형은 용접반 소모임을 구성·운영하던 중 1985년 1월 23일 <노조결준위>를 구성한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63-64).

O11

1월 27일 확대결준위를 구성(12명)하고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규약작성 및 연맹방문, 인원동원문제 등을 협의하고 2월 3일을 노조결성대회 날짜로 잠정 결정했다. 사측은 노조결성 움직임을 눈치채고 주도인물인 김지형, 한광희 등에게 정직처분, 부서이동, 해고, 강제사표 등의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고, 3월 2일 어용노조를 결성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pp.64-69).

O12

김지형, 한광희, 변학균

O13

O14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O1

성원제강노동조합

O2

성원제강노조

O3

O4

O5

1985.3.3~?

O6

서울 구로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주)성원제강은 1961년 1월 창립하여 초기에는 무역업을, 1965년 12월 제1압연공장의 조업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강업계에 진출하여, 1985년 당시에는 구로전철역 근처에 대지 7,800평, 종업원 수 240명, 한달생산량 7,000톤, 1984년 매출액 175억에 이를 정도의 비약적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미기능공 초임 3,900원, 기능공은 보통 4,500원에서 출발하는데 10년 경력이상인 자라도 고작 5,500원이 넘을 정도이고, 가장 높은 임금은 6,200원에 불과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위험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전혀 없었고, 상여금도 회사창립 22년만인 1983년 말 처음으로 30%(사무실 직원 50%)지급한 것이 전부였다. 성원제강의 주노동시간은 평균 70시간이었지만, 주야 맞교대반이 있고 주간작업자들은 매일 잔업이 4시간 반이었으므로 평균 70시간이 넘는다. 작업환경과 생산시설 역시 열악하여 산재가 빈발했으며, 후생복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런 와중에 1985년 1월 중순 전기반 박홍식에 대한 징계처분(출근정지 15분)이 내려졌다. 이유는 조회시간에 늦고 떨리는데 너무 길게 끈다고 떠든 것이 발단이 되어 사무직원과 말다툼한 것이었다. 1월 27일 평소부터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던 동료들이 전기반 박홍식에 대한 징계처분 문제를 계기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개인별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했던 방법이 무모했고, 또 직장이나 반장들한테 건의해서 해결되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노동조합준비위’를 만들어 개선할 때가 왔다는 것을 참석자 14명 모두가 동의했다. 준비위원장, 부위원장, 조직부, 교육부, 총무, 서기 등 임원을 선출하고 각자 비밀엄수할 것을 자필로 각서했다. 조직부의 노력으로 준비위 인원을 23명으로 보강하고 2월 3일 2차모임을 가졌다. 요구조건 작성부와 쟁의부를 만들고, 각 부서요원을 선정, 부서별 활동전개방안을 토의했다. 교육부는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노동조합 결성과정’에 대해 큰 차트를 만들어 교육했다. 모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반원 전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 반의 고참근로자를 획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불만거리인 ‘차별식사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3월 3일 금속연맹 교육실에서 81명이 모여 노조결성식을 가졌다. 여기서 송태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71-76).

O11

회사측은 노조결성식에 들이 닦쳐, 참석자들을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3

월 4일, 회사측은 사무실 직원과 직·반장을 동원해 구로구청 근처와 금속연맹을 지키고 서류 탈취작전을 펼쳤다. 오전 9시 구로구청 부근에서 서류접수차 모여있던 야간작업자 권태하(부위원장), 김종덕, 황성익 등 3명은 서봉석 사상 이하 30여명의 회사측 직원들에 의해 노상에서 폭행당하고 신고서류를 탈취당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주간작업자 100여명 전원은 12시 점심시간을 기해 탈취서류를 반환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며 농성을 할 것을 결의, 감행했다. 결국 사측은 서류를, 노조측은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호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노조는 노조신고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로구청 측에서 신고필증 발급을 계속 지연시켰고, 이에 대해 금속연맹측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3월 14일 구청에 파견된 조합원들은 사무실 직원 이종환 대리, 구로경찰서 정보과 정형사 등 3명이 어용노조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있는 조합간부에게 연락했다. 그 날 오후 5시 송위원장은 어용노조임원을 공개하고 “어용노조임원은 7시 40분 전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사과하고 신고서류를 철회할 것” 등 5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14일부터 6일간 식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농성가담자 중 9명이 연행되어 이 중 6명은 훈방조치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구류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회사는 23일자로 위 3명에 대해 해고조치를 내렸고, 13명의 강제사표를 쓰게 하였다. 어용노조는 가맹인준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인준증을 25일 받아내어 28일 필증이 나왔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pp.76-84).

O12

송태규(위원장), 권태하(부위원장)

O13

O14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O1

동일제강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

O2

동일제강노동조합준위

O3

O4

O5

1985.3.3~?

O6

서울 구로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동일제강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에 속하는 동국그룹 소속의 제강공장으로 1959년 설립되어 1985년 당시 700여명의 남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으며 주생산품은 현수교·광산 등에 쓰이는 와이 어로프와 군사용 유행철조망이었다. 동국그룹은 1985년 총선 직후 국제그룹산하의 노른자위 기업인 연합철강을, 국제그룹이 해체되면서 인수하는 등, 날로 사세가 확장되고 있었으며 동일제 강은 1982년 17억원, 1983년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남겨 그룹내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 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그러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경영상태와는 달리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의 기혼 남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제강공장이면서도 초임일당이 현재 3,200원으로 4,000원 이상 5,000원까지 주는 다른 제강공장과 큰 차이가 있었으며 작업시간은 주야 2교대 12시간인데 게 다가 일요일은 24시간 연속작업을 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2주마다 돌아오는 야근과 일요일의 철야를 모두 했을 때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대개 신입공의 경우 18만원, 5년 근무자가 24만원, 10년 근무자가 28만원 수준이나 실제로는 과로로 결근하는 날이 있게 되므로 그보다 훨씬 적어지기 마련이었고 가족수당 등의 생계보장대책도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식사비, 세탁비, 작업복, 작업화의 비용을 모두 노동자가 부담해야 했으며 3일만 결근해도 해고를 시키 고 신입공의 경우는 회사측에서 1주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1주일분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를 강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억누르며 착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군대체제와 같은 철저한 명령식 노무관리제도였다. 1970년대에 두 차례나 있었던 노조결성시도 가 사전에 비밀이 누설되어 실패해 버린 것도 이와 같은 철저한 감시망 때문이었다. 이러한 여 건속에서 1985년 초 2교대 중 A조를 중심으로 철조망반에서 4명, 제강반에서 1명 그리고 B조 에서 철조망반 1명, 포장반 1명, 제강반 2명 등이 몇 차례의 모임 끝에 노조를 결성하기로 의 견을 모았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숫자였기 때문에 노동법 책자를 여러 권 구입하여 함께 법률공부에 들어갔다. 회사근처의 자취방을 이용하여 야간근무가 끝나고 퇴근할 때 3시간씩 2 주일간, 2일에 1회씩 읽고 토론하기를 계속했다. 이때가 1985년 2월 초순이었는데, B조는 그때 까지 준비멤버를 늘리는 작업을 해 오다가 2월말경부터 노동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철조 망반에서 10여명, 제강반 10명, B조 6명이 따로따로 공부팀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노조결성을 위해서 직접 공부에 참여하는 인원이 30여명에 이르게 되었고, 2일에 한 번씩 복습 겸 조직상황의 점검을 해 가면서 모임을 발전시켰다. 이윽고 1985년 3월 3일 관악산에서 노조

결성준비위원회를 발족되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86-89).

O11

하지만 곧 노조결성 준비사실이 사측에 새어나가게 되어 3월 23일 해고 2명, 타공장 전출 1명의 조치가 내려졌고, A조의 모임에도 준비위원장과 회계감사, 총무로 내정된 사람에게도 해고조치가, 2명에게는 부산과 부평으로 전출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노조결성준비위원회는 애초에 예정한 4월 7일을 앞당겨 24일 10시에 결성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실마저 한 두 번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회사측에 알려졌고, 결성식 장소로 정해진 대림역과 그 앞의 한일다방은 60여명이나 되는 회사측 인원들로 점거되어 버렸다. 이로써 1차 결성식은 무참히 깨어지고 해고와 부서이동, 강제사표 등의 무더기 징계로 탄압이 더해졌다. 이에 징계자들은 한편으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종업원 지위 가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또한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노동부에 고소하는 한편, 사장에게 부당징계 철회와 징계사유통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매일 정문에서 경비와 관리직 사원들과 싸우면서 출근을 시도하였고, 3월 28일에는 「해고자 조식 제 1호」를, 4월 4일에는 「제2호」 현장의 동료노동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pp.89-91).

O12

O13

O14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O1

해태제과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O2

해태제과노조민주위

O3

O4

O5

1985.3.9~?

O6

서울 양평동

O7

공개 / 합법

O8

O9

O10

해태제과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고,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이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쉬기는커녕, 교대를 바꾸기 위해 18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현장노동자들은 소그룹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공부하였고, 1979년에 이르러서는 도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8시간 노동제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 결과 1980년도에 주야간 12시간씩 하던 노동을 8시간제로 정착시켰고, 도급제인 임금제도도 일당제로 지급 받는 결과를 쟁취했다. 하지만 1960년도에 설립된 해태제과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의 아픔을 대변하지 못했고, 오히려 몇몇 간부들은 회사와 야합하여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18년동안 장기집권하던 지부장 김경수가 1980년 9월 계엄하에 있었던 노동계의 정화조치로 쫓겨나 부지부장이었던 정성용이 지부장이 되었으나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조합원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깎아 지급, 특근을 하지 않을 경우 20% 강등, 상여금 없음, 출근정지로 징계 강화, 지각·결근·조퇴의 경우 보너스 0.5~1.5%를 삭제해도 좋다"고 노사합의를 한 것이었다. 1981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4명의 경합자를 물리치기 위해 위원장 선거 개표절차과정에서 공개개표를 하지 않고 조직부장에게 비공개단독개표를 시켜 당선되었으며 1984년 11월 23연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아예 노동조합법, 노조규약을 무시한 채 대의원 47명 중 33명을 무투표 당선시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용노조의 반(反)노동자적 태도를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몇몇이 뜻을 모으고 1985년 3월 9일 <해태제과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186-189).

O11

<해태제과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는 소식을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해 나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당황한 회사측이 3월 31일 남성 노동자들을 극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동원하는 과정에서 검부 남자 조합원인 김철수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pp.189-191).

O12

김금순(대의원)

O13

O14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O1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O2

민통련

O3

서울지부(의장 金承均), 경북지부(의장 朴병기), 경남지부(의장 李응석), 강원지부(의장 安승길),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의장 諸廷坵),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金勝勳), 민중불교운동연합, 민중 문화운동협의회(대표 金鍾澈), 자유실천문인협의회(대표 李浩哲),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장 宋建鎬), 한국기독교노동선교협의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위원장 方鏞錫), 서울노동운동연합(위원장 李玉順),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徐敬元), 한국기독교농민총연합회(회장 金영원),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金熙택), 대한가톨릭학생총연맹(지도신부 朴기주), 여성평우회(의장 沈福子), 전남사회운동협의회(공동대표 정광훈·문병란),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회장 文奎鉉), 부산민주 시민협의회(의장 宋基仁), 충남민주운동협의회(의장 金순호), 충북민주운동협의회(의장 朴용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의장 李浩雄)(조선일보 1986.11.9)

O4

O5

1985.3.29~1989.1.19

O6

전국

O7

공개 / 반합법

O8

O9

1.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민중의 힘으로 완수한다.
2.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3. 군부독재의 제약법을 철폐하고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리를 완전히 실현한다.
4. 경제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타파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5. 경제적 특권권을 철폐하고 주요기간산업의 공영체제를 확립한다.
6. 민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실현한다.
7. 농축산·어업을 보호육성하고 농어민의 권리를 실현한다.
8. 도시민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9.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한다.
10. 반민중적 대중문화를 청산하고 민중적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11. 반민주적 교육구조를 청산하고 민주·민족교육을 실현한다.
12. 대외적 불평등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외교노선을 실현한다.
13. 반전·반핵운동을 전개하여 세계평화를 구현한다.

O10

1983년 9월, 선진적 청년활동가들이 이른바 유화국면이라는 탄압의 부분적 이완을 뚫고 <민주화운동 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하면서 사회운동에서도 공개적으로 민주화투쟁을 전개하는 운동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후 1984년 들어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 <민중문화운동협의

회>(민민협) 등 공개적인 사회운동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재야정치인들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도 결성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공개운동단체들이 형성되면서 1984년 6월, 공개적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노동, 농민, 청년, 문화, 종교 등 부문운동의 통합체인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이 결성된다. 이와 함께 재야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포괄하는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가 10월에 구성되고, 이후 양 단체는 새로운 통합논의에 들어간다. <민민협>은 조직단위 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노동자, 농민, 언론인, 문화인, 청년, 종교인 등 부문운동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출범하였다. 한편 <민민협>에 포함되지 못한(->참가하지 않은: 연구팀) 명망성있는 재야민주인사들의 경우, 1984년 9월, “매국방일저지투쟁”을 계기로 10월 16일, <국민회의>를 결성한다. 이렇게 두 개의 운동체는 조직구성에 있어서 상이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민민협은 조직 혹은 단체가 중심이고, <국민회의>는 명망성있는 개인이 중심적인 구성원을 형성하였다. 그렇지만 운동의 대표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가 경쟁적 관계에 있었고, 이는 아직 부문운동이 분화발전하지 못한 지역운동의 경우, 운동력의 중복현상을 가져왔으며 전국적 통합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두 개의 운동체는 각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민협>은 조직과 단체에 기반하여 실세를 이루었던 측면이 있었으나 내적 통합력이 약하여 <민민협>차원의 사업이 힘을 갖지 못하고 국민적 명망성의 미흡으로 대중적 영향력이 떨어졌다. 반면 <국민회의>의 경우, 나름의 단일한 통합성과 국민적 명망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투쟁력이 부재했다. 따라서 양 운동체의 내부에서는 1984년 말, 1985년 초에 이르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쟁점은 ①연대운동의 수준을 협의체로 할 것인지, 연합체로 할 것인지 ②운동발전의 성과를 부문운동강화에 둘 것인지, 아니면 연대운동조직체에 둘 것인지 ③지역운동의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④지도력은 집단지도체로 해야 하는지, 단일지도력의 강화로 해야 하는지 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들이 충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당면한 필요성에 의해 통합되었으며 이에 의해 <민청련>을 비롯한 개신교운동체들이 통합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 당면한 통합의 필요성이란 2.12총선을 통해 신민당이 부상하면서 재야민주세력에서도 강력한 통합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결국 민청련과 개신교단체들이 빠진 가운데 1985년 2월 26일 <민민협> 중앙위 결의와 2월 27일 <국민회의> 확대집행위의 결의를 바탕으로 3월 29일 통합대회가 개최되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Ⅰ)-자료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pp.4-6).

O11

1985년 3월 29일 통합대회에서 2.12총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민주화열망에 부응하여 범민주세력의 전열을 정비하고 군사독재종식을 위한 민주·민권·민족통일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고, 범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이 지상과제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통합선언문을 통해 2.12총선은 국민의 열망이 분출된 것으로 보고 제3세계의 민주화추세를 지적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민족, 국토, 자원, 이념이 분단되어있기 때문에 통일운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통련>은 민중·민주·통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선도한 조직으로서 출발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민통련운동론을 정리하였는데, 우선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과제로 한다고 명시한 후, 장외재야정치운동단체이며 민중노선을 지향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제도권내의 정치세력은 도저히 민주화를 성취할 수 없다고 인식, 체제내의 합헌적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재야민주화운동단체가 존재해야할 당위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민주통일운동의 주체가 민중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주체는 조직화된 민중의 역량이며 이는 특히 노동자·농민의 역량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통련>은 형식상 <민민협>과 <국민회의>가 통합한 운동체이지만, 실제로는 <민청련>과 개신교운동력이 불참한 통합체였던 만큼

활동에 있어서 기존의 <국민회의> 이상의 높은 투쟁력을 담보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민통련차원의 초기활동(1985.3-1985.9)은 주로 성명서 발표와 농성투쟁의 형태를 취했다. 1985년 4월 15일 ‘전두환 방미’에 대한 성명발표와 4.19, 7.4, 8.15 등 기념일에 성명발표, 5월광주항쟁 5주년 투쟁, 9월초의 양심수석방요구농성 등이 주요한 투쟁이었다. 이외에 8월, <학원안정법반대투쟁 전국위원회>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학원안정법제정기도분쇄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통련> 창립초기에는 지방가맹단체들도 역량을 강화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중투쟁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기에는 투쟁력있는 조직역량의 강화와 대중들의 투쟁의지가 고양되어야만 했다(위의 책, p6).

1985년 9월 20일, <민통련>은 2차통합대회를 갖고, <민청련>, <서노련>, 개신교의 몇몇 운동체 등 11개의 공개단체를 새롭게 포괄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민통련>은 “우리 운동사에 획기적인 사건임이 명백하다. <민주통일국민회의>가 기층조직이 취약한 상층부 운동이었다면, 이번 통합개편은 기층운동들을 바탕으로 한 상층건설이라는 점과 해방 이후 가장 폭넓은 계층, 부문, 지역간의 운동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통련>의 확대개편은 “운동의 통일적 중심을 건설하고 탄압구조에 대한 공동방어는 물론 힘의 결집을 원활히 하고 운동역량의 중복현실을 극복하고 운동의 지역적 통일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조직이 확대개편되면서 <민통련>은 9월 29일 1차규약 개정을 하여 조직개편을 명시화했다. 2차통합대회를 거쳐 조직을 확대개편한 민통련은 1985년 하반기 투쟁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한다. ①군사정권의 재집권음모에 따른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이는 <민통련>, <민추협>, 신구교성직자, 불교승려, 주요사건 구속자가족 등 전체 민주세력이 10월 17일 결성한 <고문(->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문수사: 연구팀) 및 용공조작 저지공동대책위>(고문공대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고문공대위>는 11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세계인권단체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한 후, 11월 8일 해화동 성당에서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민주협사무실에서 연합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권의 폭력적 본질과 인권수호를 위해 투쟁했다. ②한편 민통련은 11월 20일 <민주헌법쟁취위원회>(민헌쟁위)를 구성한 후 개헌투쟁에 들어갔다. <민헌쟁위>는 <민통련>의 특위로서 타운동단체와 활발하게 연대활동을 전개하면서 1986년 5.3투쟁까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쟁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였으나 5.3투쟁 이후 민통련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으로 활동이 약화되어 갔다. 1985년 12월 2일 개최된 민주헌법쟁취 1차 실천대회에서는 “군사정권과의 타협을 통한 민주화의 환상을 포기하고 국민이 바라는 민주헌법쟁취투쟁에 동참할 것”을 신민당에 촉구하고 “모든 국민의 여망인 군사독재타도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해 모든 국민과 더불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③이외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서울총회를 계기로 10월 8일 노동, 농민, 청년, 문화, 종교, 지방 등 각 부문, 지역별 24개 운동단체들과 ‘외채정권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권의 대외종속에 대한 문제제기 투쟁을 전개했다. 1986년 들어 개헌서명운동이 전개되면서 <민통련>은 3월 31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갖고 지역운동대표는 <지역운동협의회>에 속할 것과 사무국에 조직국, 청년국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규약개정을 통해 조직개편을 확정하였다. 민통련의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의 지방조직들은 해당지역의 학생운동과 함께 신민당의 ‘개헌현판식’을 계기로 표출된 광범한 대중의 개헌요구를 가두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헌투쟁에서 민중의 전면적 진출이 신민당의 영향력을 넘어서게 되자 <신민당>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민통련>과의 연락기구 수준에서 마련되었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 명의로 <신민당>은 <민통련>측과 사전협의 없이 “최근 일부 소수학생의 과격한 주장에 대해 참석자들은 심각한 우

려를 표방하고 그와 같은 과격한 주장은 지지할 수 없음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통련>은 5월 1일 성명을 통해 4.29기자회견이 <민통련>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히고 <민국련>에서 탈퇴할 것을 표명했다. 이후 5.3인천투쟁을 경과하면서 군사정권이 민민운동을 야당과 분리 탄압하고 야당을 5월 27일 국회내 <헌법특위>설치를 통해 장내의 개헌논의로 끌어들이기에 따라 반군사독재전선에 현격한 약화가 일어났다. 5.3투쟁 이후 군사정권의 탄압은 민통련에도 가해졌는데, 5.3투쟁의 배후세력으로 민통련을 지목하고 장기표 정책실장이 체포시 소지했던 민주통일운동론을 빌미로 민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후 문익환의장의 구속 등 주요간부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 이러한 군사정권의 탄압은 급기야 민통련에 대한 해산명령으로 이어지고, 사무실은 폐쇄당하게 되었다. 이에 민통련은 당면투쟁 목표를 “장기집권음모분쇄투쟁”에 두면서 상황타개를 모색하게 된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살해사건’과 2.7, 3.3대회에 민통련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렇게 1986년 말, 1987년 초의 급변하는 정세를 맞으면서 민통련은 3, 4차 총회를 개최하고 내부조직의 규율과 집행력을 강화했다. 한편 ‘이민우 발언’과 4월 10일 신민당에서 통일민주당의 분당, 전두환의 ‘4.13호헌조치’가 발표되자 민통련은 4월 14일 호헌발표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 5월투쟁과 “호헌철폐 독재타도”투쟁을 결합하여 범민주세력의 반군사독재투쟁전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민통련의 적극적 노력은 5월 27일, 마침내 야당까지를 포함하는 광범한 반군사독재투쟁전선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위의 책, pp.67-69).

<민통련>은 6월항쟁 이후,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각 지역의 민중운동을 대중공간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역가맹단체의 주관으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가자! 민족통일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지역순회강연을 개최했는데, 이는 개헌투쟁 이후 <민통련>이 전국적으로 벌인 사업이었다. <민통련>의 집회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정권은 원천봉쇄로 대응했으며 대회를 감행하려는 가맹단체와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7-9월 노동자대투쟁시 <민통련 노동위원회>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7월 31일 경인·경남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8월 1일에는 최근 노동상황에 대한 <민통련>의 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제도언론의 왜곡에 대해 정당한 노동대중의 투쟁내용을 선전하는 작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9월 20일 <민헌노위> 주최의 “노동운동탄압저지 및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후원하는 등과 아울러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설립했다. 한편 8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한가톨릭학생총연맹>, <서노련>, <여성평우회> 등을 단체해소와 연대활동부진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에서 제외시켰고 8월 29일 결성된 <경기북부민통련>이 새로 가입했다. 또한 임시총회에서는 민통련운동의 일반지침을 제시한 강령시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9월 26일 <민통련>은 “범국민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통련의 입장”을 발표하고 10월 1, 2일 의장단이 김대중씨와 김영삼씨를 방문하여 양보를 촉구했다. 10월 5일에는 양 김씨를 초청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과정을 거쳐 10월 12일 중앙위원회는 김대중씨를 대통령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공정선거보장을 위한 거국중립내각쟁취투쟁을 전개하였고, 본격적인 선거유세에 들어가자 <민통련>은 11월 20일 각계인사 3천여명과 함께 <김대중선생 단일후보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대중씨 지지활동을 하는 한편, 11월 24일 “광주학살 및 12.12반란원흉처단 결의대회” 등 반군사독재투쟁을 전개했다. 대통령선거에 노태우씨가 당선되자 <민통련>은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투쟁에 돌입했다. 문익환의장도 12월 23일부터 무효화투쟁에 전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대선투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88년 1월 중앙위원 전원을 인책하기로 하고 국민에게 반성의

성명을 발표한 <민통련>은 3월 21일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민중운동연합(전국민운연) 건설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민통련>은 4월 11일 총선에 대해 “대통령선거가 군사독재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낳아 국민들은 야당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이번의 총선이 노태우군사독재를 타도하는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총선에 임하는 원칙을 밝혔다. “①특정정당은 지지하지 않으며 ②민정당 패퇴에 전력하고 ③애국적 민주적 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④선거유세장은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후 5월투쟁시기에는 5월 17일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8일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범국민공동투쟁위>주최의 “광주진상규명 및 학살원흉처단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6월 4일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을 위한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여타 민주세력과 함께 발족시켰다. 5월투쟁을 마무리하고 6월투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민통련>은 6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시대행체제에서 의장단과 사무처임원을 선출하여 정상적인 체제로 넘어갔다. 이어 <민통련>은 6.10학생회담제안을 계기로 촉발되는 조국통일투쟁에 적극 임하게 되는데, 6월 8일 “6.10남북학생회담 성취를 위한 시민지지대회”참여, 7월 4일 “남북사회단체회담”제의, 그리고 7월 20일 제 민주단체들과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조통협)를 결성하고, 27일 “공동올림픽쟁취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국민대회”를 <조통협>주최로 개최한다. 8월 3일에는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결성에 참여하여 8월 23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를 치루고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실천기간”에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7월 14일, “광주학살 5공비리 전두환·이순자 구속촉구”기자회견, 24일 “구인제거부권행사 및 광주학살 부정비리 원흉처벌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전·이구속처벌 서울시민대회”의 개최 등 반군사독재투쟁도 진행되었다. 이 시기 투쟁에 있어서 <민통련>은 조국통일투쟁과 민주화투쟁의 결합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올림픽기간에는 9월 3일, “올림픽을 빙자한 민중운동탄압 규탄대회” 9월 8일, “양심수석방 서울시민결의대회”등의 투쟁에 참여했고 9월 13일 ‘단독올림픽 반대성명’을 발표한 후, 9월 22일 22개 단체와 연대하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규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대회”, 9월 29일 “양심수 전원석방대회”를 개최했다. 올림픽이 끝난 후, <민통련>은 제 민주단체와 함께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자 구속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를 10월 15일 결성하고 ‘전·이구속투쟁’을 벌이게 된다. 11월 5일, 19일 등 “전·이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가두투쟁이 전국적 차원에서 연이어 분출되었고, <민통련>도 이에 적극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1월 12일 25개 민주단체와 함께 <반민주악법개폐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악법개폐투쟁에도 나섰다. 한편 새로운 민운연 건설 논의는 6월 18일부터 전국민운연 준비소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는데, 7월 22일 제4차 회의부터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에서 제의한 상설공투체건설논의로 전화되어 진행되었다. 이는 민운연이라는 통합적 수준이 높은 조직체 건설이 좁히기 어려운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편의상 공동투쟁체 수준에서 논의를 모아보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했고 결국 8월 18일의 6차회의에서는 가칭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전민협) 추진위원회>의 형태로 논의를 전개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후는 전민협 건설 논의로 변화한다. 9월 16일 제8차회의이자 제2차 전민협추진위 대표자회의에서는 <민통련>, 농민, 노동자, <서울민협>, <인천민연>, 개인 등 대표자 6인으로 추진소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추진소위에서 전민협건설의 제반 쟁점과 이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는

데, 정치노선, 조직의 포괄범위와 형태 등에 대해 이견이 계속 노정되었고, 나중에는 공동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표출되었다. 이에 <민통련>은 민민운동의 발전적 통합을 촉구하고, 조직체계에 대해 “부문과 지역의 대등한 의결권”을 주장했고, 공동의장단 구성에 대해서는 “재야원로의 중요성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최소한의 합의를 바탕으로 1989년 1월 19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창립되었고, 같은 날 <민통련>은 약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짓고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된다(위의 책, pp.67-69, 169-170, 252-255).

O12

문익환(文益煥, 의장), 계훈제·김승훈(桂勳梯·金勝勳, 부의장), 함석헌·김재준·지학순(咸錫憲·金在俊·池學淳, 고문), 고영근·유운필·이소선·함세웅(咸世雄)·문정현·유강하·신현봉·이돈명(李敦明)·송건호(宋建鎬)·김병걸·김지하(金芝河, 지도위원), 강희남(중앙위원회 의장), 김승균(민주통일위원장), 이창복(사무처장), 호인수·박진관·정동익(감사), 이부영(민생위원장), 임채정(상임위원장), 이해찬(정책실 차장), 박계동(朴啓東, 홍보국장, 조직국장)

O13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O14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I)-자료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민주·통일민중운동선언」,  
38~42  
조선일보 1986.11.9

O1

반공해운동협의회

O2

O3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인천지역공해연구팀, 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공해연구회, 서울지역 6-7개 대학  
공해연구 서클

O4

O5

1985.3~?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반공해운동협의회>는 반공해운동의 실천적 전개를 목표로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인천지역공해연구팀,  
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공해연구회, 서울지역 6-7개 대학 공해연구 서클이 중심이 되어  
1985년 3월 초에 발족했다(『말』 창간호 1985.6.15, p60).

O11

<반공해운동협의회>는 경제개발의 구조적·복합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을 서로  
높이도록 도우면서 공해추방운동을 실천적 과제로 삼아 반공해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했다.  
한편 1985년 5월 말, 온산공단의 공해문제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핵문제 전반을 특집으로 다  
룬 부정기간행물 『공해』를 발간했다(『말』 창간호 1985.6.15, p60).

O12

O13

O14

『말』 창간호 1985.6.15

O1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O2

노투

O3

O4

O5

1985.4.10-

O6

경인

O7

공개 / 합법(?)

O8

O9

‘결성선언문’은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 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참조 (☞ <별첨 자료집> 참조)

O10

<노투>는 인천지역 해고노동자를 중심으로 구로지역의 협진, 유니전, 동일, 성원제강의 해고노동자를 포함해서 조직된 한시적 투쟁위원회로서 1985년에 들어서서 노조결성과 노조민주화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역량을 결집해서 경인지역에서 결성되었다(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p135).

O11

<노투>는 당시 조성된 반합법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시도된 조직으로서 현장투쟁을 적극지원하고 해고자들을 결집해 각종 투쟁을 전개하면서 운동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이 조직들 역시 분명한 운동이념을 정립하지 못했으며, 현장기반을 가지지 못한 활동가들만의 조직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이 조직들은 결국 해고자들의 투쟁단체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p135).

O12

O13

O14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 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O1

전국학생총연합 (☞ <단체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참조 // <사건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사건 참조)

O2

전학련

O3

삼민투

O4

O5

1985.4.17~?

O6

O7

공개 / 합법

O8

O9

<전학련>에는 당시 전국 1백개 대학(교육대, 전문대 제외)중 45개 대학이, 서울 35개 대학중 30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었다. <전학련>은 의장 산하에 4명의 부의장 및 중앙집행위원회(선전국, 사무국)를 두고 있었고,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각 지역 평의회와 삼민투위를 두고 있었으며, 지역 평의회는 서울지구, 중부지구, 호남지구, 영남지구 등 4개지구 평의회로 구성되었고, 서울지구 평의회는 다시 남부지구, 북부지구, 동부지구, 서부지구 등 4개 지구 평의회로 구성되었다(조선일보 1985.7.19, 전학련·삼민투 결성경위 및 조직계보 참조).

O10

<전학련>은 1985년 2·12총선 이후의 현 시국을 81년부터 시작된 유화국면의 제2기로 보고, 다양한 운동형태를 창출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1985.5.3 전학련보 사설, 전학련의 결성과 방향성), 각 대학의 지역적 특수성있는 운동역량을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광범위한 대학간 연대를 형성하며(1985.5 전학련 명의, 삼민), 나아가 타운동권 및 민중세력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조선일보 1985.7.19). <전학련>은 3월 26일 서울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경인지역 19개 대학 대표들의 ‘연합결의대회’가 무산된 이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대 등에서 4차회합을 가진 후, 4월 10일 서울대에서 경인지역 12개 대학 대표가 모여 <경인지구학생연합회>(경인학련)를 결성했다(조선일보 1985.7.19).

이윽고 1985년 4월 17일 고려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2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전국학생총연합>을 결성식을 가졌다. 의장에는 김민석(서울대 총학생회장), 부의장 오수진(성균관대 총학생회장) 등 4명, 선전국장 정태근(연세대 총학생회장) 등이 선출되었다. <전학련>은 창립선언문에서 “5월광주민중항쟁 등 죽음같은 지난 세월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반역사적 정권에 정당한 심판을 내리고 통일민주조국의 건설을 위해 장엄한 투쟁의 대열을 형성하여 지체없는 투쟁의식을 드높이기 위해 전학련을 창립한다”라고 밝혔다.

<전학련>은 ‘현정권에 보내는 경고장’을 채택하고 ‘매국방미 결사반대’ ‘수입개방 결사반대’ 농성을 벌였다.

O11

<전학련-삼민투>소속의 대학생 73명(서울대 13명, 연세대 20명, 고려대 10명, 서강대 8명, 성균관대 22명, 조선일보 1985.5.28)은 1985년 5월 23일 서울 중구 소재 미국문화원에 진입, 2층 도서관을

점거하고 3일간 철야농성을 벌였다(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이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 등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광주사태에 책임지고 공개사과할 것”, “미국인은 한-미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 등을 주장했다(조선일보 1985.5.24).

학생들은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라는 성명서에서 “1. 광주학살지원 책임지고, 미 정부는 공개사과하라, 2. 미국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3. 미국 국민은 한미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라” 등 「우리의 주장」을 밝혔다.

함운경 서울대 삼민투공동위원장 등 농성학생들은 26일 농성을 해제하고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중 25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서울미문화원농성사건과 관련하여 <전학련>의장인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허인회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 7명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렸다(조선일보 1985.5.29). 서울미문화원농성사건을 계기로 전학련과 그 산하기구이면서 독자적인 투쟁기구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이른바 ‘삼민투’(三民鬪)라는 학생운동조직이 여론에 관심거리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1985년 11월 18일에는 <전학련>의 <민중민주정부수립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산하 <파쇼헌법 투쟁위원회>소속 대학생 191명이 서울 강동구 가락동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본관을 점거했다. 이들은 “독재타도”, “미국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민중적 개방경제정책 철회하라”는 등 7개의 플래카드와 태극기 2장을 내걸고, 건물내 곳곳에 비슷한 내용을 종이에 써붙이거나 벽에 스프레이로 썼다. 그리고 24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민정당, 신민당 관계자와 학생, 노동자, 농민 등이 참여하는 내외신 기자회견과 국민대토론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노동탄압중지, 실업자 구제대책보장 등 20가지의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한편 여학생 56명은 별도의 유인물을 통해 가족법철폐, 여성들의 조기정년제 및 결혼퇴직제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점거농성은 고려대 김선겸(金宣謙), 연세대 최창원(崔暢原), 성균관대 이현철(李鉉哲), 서울대 이진순(李鎭順) 등 공동대표 4명이 11월 4일 서울대에서 열린 전학련 제10차 총회에서 계획하고 당시 수배중이었던 정태근 전학련 삼민투위원장과 오수진 전학련 의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1985.11.19).

이어 이듬해 인 1986년 2월 4일에는 전학련 소속 서울시내 14개학 1천여명이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모여 <헌법철폐 및 헌법제정 국민의회쟁취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오수진 전학련의장과 중앙집행위원장에 고려대 유동철, 남부지역위원장에 서울대 이성호(李成浩), 서부지역위원장에 연세대 서원선(徐源善) 등을 선출하고 앞으로 영호남등 전국에 지부를 설치, 16일부터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학생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취지문’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즉각 전면실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보장, 대학자치 및 학생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사법부 독립, 노동3권보장 등을 요구했다.

O12

金民錫(의장, 서울대총학생회장), 吳秀鎭(부의장, 2기의장, 성균관대 인문사회 총학생회장), 權純必(부의장, 성균관대 자연과학 총학생회장), 李秉卓(부의장, 부산대총학생회장), 吳秉濶(부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鄭泰根(대변인 겸 선전국장, 2기 삼민투위원장, 연세대총학생회장), 李庭旻(북부지역위원장, 덕성여대), 李海植(사무국장, 서강대), 李圭海(동부지역위원장, 외대)

O13

학자추, 삼민투

O14

조선일보 1985.5.24, 5.28, 5.29, 11.19, 1986.2.5

O1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 <사건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사건 참조 / <단체편>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참조)

O2

삼민투(三民鬪)·삼민투위

O3

O4

O5

1985.4.17-1985.7.

O6

O7

공개 / 반합법(?)

O8

O9

O10

<삼민투>는 <전학련>의 하부조직으로서 ‘실천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위해 만들어졌고(1985.5.3 전학련보 사설), 각 대학 삼민투위는 전학련이 각 대학총학생회가 대중조직이라는 속성 때문에 선도적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족·민중·민주의 3대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선도적 투쟁 및 선전-선동활동을 담당할 투쟁조직으로서 1985년 3월부터 각 대학별로 결성되었다(조선일보 1985.7.19, 서울 19개대 삼민투위 결성일지 참조). 즉 1985년 3월 27일부터 각 대학에서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산발적으로 결성되어 오다가 1985년 4월 17일 <전학련>결성대회서 그 산하에 전학련 삼민투가 설치된 것이다. 대학별로 그 명칭은 다양했지만, ‘민족통일·민중해방·민주쟁취’라는 삼민이념 구현을 그 행동목표로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O11

<전학련-삼민투>소속의 대학생 73명(서울대 13명, 연세대 20명, 고려대 10명, 서강대 8명, 성균관대 22명, 조선일보 1985.5.28)은 1985년 5월 23일 서울 중구 소재 미국문화원에 진입, 2층 도서관을 점거하고 3일간 철야농성을 벌였다(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이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 등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광주사태에 책임지고 공개사과할 것”, “미국민은 한-미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등을 주장했다(조선일보 1985.5.24).

학생들은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라는 성명서에서 “1. 광주학살지원 책임지고, 미 정부는 공개사과하라, 2. 미국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3. 미국 국민은 한미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라” 등 「우리의 주장」을 밝혔다.

함운경 서울대 삼민투공동위원장 등 농성학생들은 26일 농성을 해제하고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중 25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서울미문화원농성사건과 관련하여 <전학련>의장인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허인회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 7명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렸다(조선일보 1985.5.29). 또한 이를 계기로 1985년 6월 13일 검찰과 경찰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삼민투>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는데, 전국 19개대 총 수사대상자 86명중 63명을 검거 이중 5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조선일보 1985.7.19). 서울미문화원농성사건을 계기로 전학련과 그 산하기구이면서 독자적인 투쟁기구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이른바 ‘삼민투’(三民鬪)라는 학생운동조직이 여론에 관심거리로 떠오르기도 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미국이 미군 지휘하의 4개 대대를 광주 진압을 목적으로 풀어주어 신군부를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공개사과, 그리고 이후 군사독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워커 주한 미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O12

許仁會(위원장, 고대 총학생회장), 고진화(성대 위원장), 威雲晷·金淵亨(서울대 공동위원장), 李政燾(고대 위원장), 신동근(경희대 위원장), 유성(서강대 위원장), 金泰龍(분과위원장, 서울대)(조선일보 1985.7.19, 1985.10.30)

O13

O14

01

민중불교운동연합

02

민불련

03

05

85.05.04~?

07

공개 / 합법

08

09

<창립선언문> : ...초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조국은 민족의 총체적 발전을 지지·파괴하며 반민중적 권력집단이 자행하는 폭력과 비민주적 제도는 민중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유린하고 있다... 민중운동연합은 척박한 이 땅에서 불타에, 정법에, 승가에 귀의하여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강령> : 1, 우리는 민중의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등이 보장되는 불국정도를 건설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의지를 결집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한다. 1, 우리는 불타의 정법을 수호하여 주체적인 민중불교를 확립한다.

010

80년대의 일반 사회가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시작됐다면, 불교계의 80년대는 '10·27법난'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 제6대 중앙총회를 구성해 출범한 화합종단은 나름대로 종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활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80년 10월 27일 새벽 신군부 세력은 “분규만을 일삼는 조계종단은 더 이상 자체 정화의 능력이 없으므로 부득이 타력으로나마 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계종단의 주요 간부들을 강제로 연행·고문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월주스님은 강제로 사퇴했으며, 18명의 스님이 구속되고, 32명의 스님들은 강제로 승적을 박탈당했다. 자주적인 종단 발전을 도모하던 조계종의 노력은 좌절되고 만 것이다. 10·27법난은 당시 불교계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청년 학생불자들은 냉엄하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곱씹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청년불자들은 사찰이 불교운동의 기본적 토양임을 재인식하고, 81년 가을 무렵부터 '여래사(如來使) 운동'(혹은 寺院化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운동 주체들은 기관지 《청년여래》 창간호(81년 가을 창간) 서문에서 “불교가 중생교화의 본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아울러 사회구조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중생을 인식해야 한다. 하화중생의 구체적인 방법론의 모색과 그 실제 적용을 위한 사회와 민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함께 엮어 명실공히 젊은 불자들의 전열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난 동지들을 여래사라 하며 여래사들의 재도전을 여래사 운동이라 한다.”고 밝히며 민중불교운동의 단초를 열기 시작했다. 이들의 운동은 그러나 82년 초 중단된다. 여래사 운동의 중심인물인 범우 스님, 최연, 신상진 등이 구속되고, 많은 스님과 학생들이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고초를 받고, 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즈음 젊은 스님들이 주축이 된 제1회 '청년승가육화대회'가 81년 7월 열렸고, 이런 노력들이 합해져 승가와 재가의 조직체인 '청년불교도연합'이 결성된다. 청년불교도연합은 83년 7월 17일 범어사에서 '전국청년불교도연합대법회'를 열고, 불교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대학생불교연합회도 70년대부터 연례행사로 해왔던 ‘화랑대회’의 성격과 명칭을 82년 여름부터 ‘한국불교 1,600년 대회’로 바꾸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70년대 말에 제기된 ‘민중불교론’을 확산·발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84년 봄부터 학원과 공장의 민주화 시위가 본격화됐으며, 85년 ‘2·12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굳어지면서 사회 전체 분위기는 군부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불교계도 이때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비상중단(83. 9. 15~84. 8. 1) 당시 만들어졌던 불교사회문화연구소와 청년승가회 인사들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84년 11월 이후 불교의 민주화를 위한 조직건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고, 이들은 85년 5월 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에서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을 창립하게 된다.

#### O11

민불련은 ‘5·3인천사태’(86년) 주도, 86년 초부터 제기된 민주헌법 개헌투쟁 동참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함께 통일운동을 정력적으로 추진했다.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은 《민중법당》의 제호(題號)가 《민중불교》로 바뀐 이후에도 지속된다. 민불련에 의한 통일운동이 계속되는 한편에선 승가독자조직인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의장 : 청화, 부의장 : 진관, 지도위원 : 지선)가 스님 2백21명의 발기로 86년 6월 5일 공식 출범한다.

‘이 땅의 불국정토 구현을 위하여’ 출범한 정토구현전국승가회(86. 6. 5 ~ 92. 8. 30)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이제 불자들은 새롭게 다듬어진 불법과 보살정신과 역사의식으로 무장하여 민족의 자주화, 민주화, 민중해방투쟁 전열에 나서야 한다.”며 “민족자주화운동, 민중해방운동, 민족통일운동, 민주화운동, 정토구현운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앞선 86년 5월 9일 불기 253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승려 1백52명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여기서 “민족적 염원인 통일은 자유로운 논의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불교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80년대 중반 새롭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썬이다.

대학생조직인 대불련, 청장년불자조직인 민불련, 승가조직인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는 서로 단결해 한국민주화운동의 큰 분수령인 87년 6월항쟁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민주화와 남북통일 등 사회문제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게 된 불교계는 87년 6월항쟁중 ‘민주헌법쟁취불교운동본부’(의장 : 청화·지선)를 발족시키며, 스님들이 앞장서 법당과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국법회를 개최했다.

민불련 창립 등으로 이어진 불교계의 이런 열기는 88년 3월엔 ‘대승불교승가회’(회장 : 송산, 상임집행위원장 : 명진) 결성으로 이어진다. 대승불교승가회는 88년 부처님 오신날 ‘조국통일을 위한 대승보살의 다짐과 선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체제와 이념, 제도와 사상, 종교와 정치적 입장 등도 대승정신으로 극복되어 도도한 통일조국의 물결 속에 용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환, 『불교 통일운동의 현 단계』, 『불교평론 5호』, 2000)

#### O12

여익구(민불련 의장), 고은

#### O13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의장 : 청화, 부의장 : 진관, 지도위원 : 지선) / ‘대승불교승가회’(회장 : 송산, 상임집행위원장 : 명진)

#### O14

조병환, 『불교 통일운동의 현 단계』, 『불교평론 5호』, 2000

O1

공해문제성직자협의회

O2

O3

O4

O5

1985.5.31~?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공해문제성직자협의회>는 1985년 5월 30-31일, <공해문제연구소>주최 성직자협의회에 참석했던 신·구교 목사 52명이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교회가 공해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신성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자성에서 출발하여 결성되었다(『말』 제2호, 1985.8.15, p48).

O11

이들은 우선 각자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연과 인간자체를 죽이고 있는 공해와의 성스러운 투쟁에 가담토록 권면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의 공해현장을 선교의 장으로 삼고 전국적으로 공해추방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성직자들은 이의 첫 단계로 환경주일을 설정, 각 교회에서 환경주일행사를 개최하여 공해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로 결의하였다(『말』 제2호, 1985.8.15, p.48).

O12

O13

한국공해문제연구소

O14

『말』 제2호, 1985.8.15

O1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

O2

구민련

O3

O4

O5

1985.6.1~?

O6

구로

O7

공개 / ?

O8

O9

O10

<구민련>은 민주노조 및 민주노조 추진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1985년 6월 1일 구로지역에서 결성되었다(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p135).

O11

<구민련>은 당시 조성된 반합법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시도된 조직으로서 현장투쟁을 적극지원하고 해고자들을 결집해 각종 투쟁을 전개하면서 운동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이 조직들 역시 분명한 운동이념을 정립하지 못했으며, 현장기반을 가지지 못한 활동가들만의 조직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이 조직들은 결국 해고자들의 투쟁단체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p135).

O12

O13

O14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94

O1

마르크스·레닌주의당 (☞ <사건편>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결성 기도’ 사건 참조)

O2

ML당

O3

O4

O5

1986.6~1986

O6

서울

O7

비공개 / 비합법

O8

민주집중제를 운영원칙으로 하는 ‘협의적 중앙’산하에 구로·영등포지역을 공단지구, 영등포·문래지구, 독산·시흥지구로 세분하여 각 지구의 특성에 맞는 공장소조를 편재했다. 그리고 이 공장소조를 지도하기 위해 조직부를 두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부와 교육부 산하에 예비조직원소조, 야학소조, 번역소조, 유인물소조 등 각종 소조가 존재했다.

O9

O10

1986년 10월 24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서울대 등 9개 대학교 ‘좌경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국통일지도부인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을 결성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학생, 교사, 노동자 101명을 적발, 이중 27명을 검거해 지도총책 김선태 등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혐의로 구속하고 박근애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5명을 훈방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방 직후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과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했고, 공공연히 친북노선을 표방하고 나아가 “남한혁명은 오직 김일성 주체사상을 기초로 한 공산주의 혁명론에 입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진행과정에서 사건의 허구성이 점점 드러나게 되었는데, 당을 결성하는데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강령·규약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자금을 자신들의 용돈을 털어 썼다는 공색한 발표를 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ML당 관련자들이 구체적인 외부와의 연계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조직결성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사항 여기저기에서 공소를 취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소위 <ML>당 하부조직으로 발표된 바 있는 이희영 등 6인이 관련된 소위 ‘지역노동자동맹’결성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또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선태에 대해서도 ‘지역협의체’, ‘지역노동자동맹’ 등 소위 <ML>의 주요 상하부조직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단지 소위 ‘구로지역현장조직’을 결성했다는 사실만 살려 이것만으로 이적단체구성죄를 성립시켰다.

사실상 사건 명칭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활동의 중심은 ‘지역현장조직’체계였다. <ML>당과 관련된 그룹에서는 1985년 6월에 벌어진 ‘구로연대투쟁’을 평가하면서 경제적 요구에 기초한 투쟁의 정치적 발전은 ‘다른 방식에 의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발전하지 않는 한 정치권력에 원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주목하고 강조했다. 이 그룹의 활동가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광범위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1985년 12월에 접어들면서 “현 단계 노동운동은 광주민중항쟁 등에 따른 식민지 지배체제의 일대 위기와 대중투쟁의 점진적인 고양을 맞아 변

혁운동에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지위를 발휘하고 있는 바, 경제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한편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계기 또한 대중적 자각속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잔존하고 있는 노동조합주의, 경제주의적 경향과 함께 정치주의적 편향마저 일어나면서 근로대중의 자발적 투쟁이 방기되거나 그것만으로 합리화되고, 나아가 대중과는 동떨어진 선진 활동가만의 투쟁이 만연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대중의 정치적 지도력 형성이라는 과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지역현장에 대중적 토대를 갖춘 선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혁명적 이념으로 스스로를 무장단련하며 비합법 조직활동을 통해 대중운동을 강화하고, 조직의 차원에서는 단위지역에서 전국적 전위정당의 전형이자 선진적인 축소판을 만드는 일로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체로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은 기존의 서클적이고 느슨한 인간관계를 조속히 청산하고 단일한 지역현장조직으로 통일되어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조직-이론활동 및 노동현장으로의 ‘존재 이전’을 둘러싼 사전작업을 활발하게 벌여 나갔다. 여기서 최초의 지침이 된 문건이 「지역현장운동론」이라는 팜플렛으로, 이후 6개월 여에 걸친 토론 및 활동의 결과 1986년 6월에는 지역현장조직의 필요성에 의견일치하는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실제적인 조직활동을 벌여가게 된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 pp.186-195).

#### O11

구체적으로 이들은 구로·영등포지역을 주요 활동지역으로 상정하고, 이를 공단지구, 영등포·문래지구, 독산·시흥지구로 세분하여 각 지구의 특성에 맞는 공장소조를 편제했다. 그리고 이 공장소조를 지도하기 위해 조직부를 두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전부와 교육부 산하에 예비조직원소조, 야학소조, 번역소조, 유인물소조 등 각종 소조를 꾸려나갔다. 이처럼 한편으로 서클적 구조에서 벗어나 조직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정치·사상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당시 시급하게 요청되었던 한국사회의 2변혁론의 제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그 결과로 나왔던 것이 「NLPDR테제」와 「조직상의 과제(1)~(4)」라는 팜플렛이었다. 이 팜플렛들은 「지역현장운동론」에서 제기되었던 변혁론과 조직노선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의 골격으로서는 변혁론에 있어서 “한국사회가 ‘식민성’과 ‘독점성’의 사회성격을 가진 ‘자본주의사회’로서 반제·반독점이 변혁의 주된 내용이 되는 NLPDR이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정리되었으며, 조직노선에서는 그간 전위조직의 건설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지역현장조직’이 ‘지역전위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당적구조’를 가진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많은 활동가들이 말로는 대중을 대단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학습을 앞세우고 이론투쟁에 몰두했고, 투쟁없이 조직을 우선 건설하는 데 힘을 집중했다. 조직활동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냈는데, 지역현장조직은 한편에서는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현장활동을 강화하면서 그 내용을 주로 조직력의 확보에 두고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다져내는 일은 활동가 개개인에게 내맡기고 있었다. 또한 지역현장조직에서는 ‘협의적 중앙’을 두어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실천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활동의 전망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활동가들의 신임을 통해 선출된 ‘중앙’이 아니라 스스로 지도를 자임한 ‘중앙’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위의 책, pp.195-197).

#### O12

김선태(金善泰, 지도총책/선전지도책, 서울대 독어교육과 4년제적), 박상영(朴相榮, 조직담당, 서울대제적), 지영근(池英根, 조직담당, 서울대제적), 송병춘(宋秉春, 선전담당, 서울대제적), 이철(李哲,

교육담당, 서울대76학번), 송진휴(宋鎭休, 조직지도책, 중앙대 경영 4년제적), 최형두(崔亨斗, 공장소조직, 서울대제적), 서정호(공장소조직, 중앙대제적), 안준상(공장여소조직, 중앙대81), 배진호(裴晉鎬, 교육지도책, 서울대 독어교육졸), 김인철(구로지역교회책, 서울대82), 김인수(캠퍼스 및 구로야학책, 서울대82), 김암(캠퍼스 및 학습지도책, 서울대제적), 김종식(자료번역책, 서울대 82), 이남주(학습지도책, 이대졸), 황찬호(학습지도책, 서울의대), 이철우(선전팀 중간지도책, 서울대제적), 이동훈(교사팀, 신구로국교교사), 신만우(교사팀, 구두담이)

O13

O14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

조선일보 1986.10.25

### <연구팀 의견: 사건의 조작성 또는 과장성 농후>

\* 전두환 독재정권이 맞이한 86년의 정세는 항상적인 정권안보 불안증을 자아냈다. 한편으로, 신민당의 개헌추진서명운동이 전국적, 범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유발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학생·노동·재야 등 범민주화운동진영 또한(내부적으로 전략상의 차이를 갖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화를 정권과의 '투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민주화운동진영이 신민당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여겼던 것 같다. 따라서 당시 정부는 86년 5·3 사태를 계기로 운동진영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이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과 국민들과의 연계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전두환 정권은 항상 조작성이나 과장성 시비에 휘말리는 조직사건들을 만들어냈다. 86년 5·3 사태이후, 정부가 수사기관들을 동원해 발표한 각종 조직사건은 총 6개로, 한 달에 평균 1회 정도는 발발한 셈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기도' 사건 또한 이러한 정치적 맥락하에 있었다. 그것은 사건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검찰 스스로 증거불충분과 조작의 시비를 의식한 듯 사건명칭 자체를 '결성'도 아닌 '기도'로 발표했던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 아닐 수 없다.

\* 먼저, 86년 10월24일 검찰 발표를 토대로 한 사건은 크게 네 항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성목적이다. 서울대 제적생 중심의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근로자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지역노동자동맹을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북괴의 노동당과 동일한 성격의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을 꾀했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체계는, 지도총책(선전지도책 겸임)인 김선태(金善泰, 25세, 서울사대 독어교육과 4년 제적)를 중심으로 하고 그 하부에 조직지도책 송진휴(宋鎭休, 25세, 중앙대 경영4년 제적), 교육지도책 배진호(裴晉鎬, 23세, 서울대 독어교육 졸업)와 함께 중앙의결기구에 해당하는 '협의적 중앙'이 존재한다. 이 협의적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3~6명 단위의 '소조' 20개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소조들은 각각 구로공단 9개조, 노동현장학습 6개조, 국교교사 및 외곽소조 2개조, 캠퍼스소조 2개조, 구로지역 야학소조 1개조로 편성되어있다.

셋째, 검찰이 발표한 이들의 혁명전략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한 후 1천만 근로자의 총파업과 무장봉기로 미국을 축출하고 현정부를 전복한 뒤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 북괴정권과 연립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넷째, 검찰은 또한 '지역협의체'라 명명하며 이 조직의 배후연계까지 지목하였는데, 그 구성원은 민청

련회원 송병춘(宋秉春, 31세, 서울대교육과 4년 제적 및 수배), 민교투사건 관련자 지영근(池英根, 28세, 서울대 체육교육과 4년 제적), 영등포산업선교회원 박상영(朴相榮, 25세, 서울대체적 수배)등이다. (<김일성 사상학습 북괴노선 추종-학생근로자 27명 검거 13명 구속>, 『조선일보』, 1986년 10월25일자)

이상이 검찰이 발표한 사건의 전모라 할 수 있다.

\*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조작성과 과장성의 문제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이 입수한 수사자료 어디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라는 당명은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을 국민들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둘째, 당시가 학생·노동운동에서 NL-CA 노선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의를 혼합하고 조합하여 노선을 정립하는 조직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부정적 이미지어+부정적 이미지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직명엔 마르크스와 레닌을, 혁명전략엔 북괴노선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반국가단체 규정을 받을 수도 있는 조직을 검거했지만, 검거자 27명중 절반도 안되는 13명만 구속시킨 것은 검찰에게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발표의 문제점을 토대로 할 때, 이 사건은 학생출신 노동현장 활동가들의 소규모 모임을 과장되게 극대화시켜 반공반북의 사회적 분위기를 유발키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기도 했으며, 동일사건 관련자들에게 분리재판을 강요하여 사건의 전모를 은폐시키려고 한 의도를 비추기도 하였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192~193쪽)

O1

서울노동운동연합 (☞ <사건편>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사건 참조)

O2

서노련

O3

O4

O5

1985.8.25-1986.

O6

서울

O7

비공개 / 비합법

O8

O9

O10

1985년 6월 구로연대파업투쟁 이후 지역노동자 소그룹들간에 정치투쟁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중정치조직(MPO)’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광범위하게 생겨났다. <서노련>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 대우어패럴,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부흥사, 청계피복 등 대우어패럴 연대투쟁(구로연대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자연대투쟁연합, 1970년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은 청계피복노동조합, 1985년 4월 경인지역 노동운동가들이 결성한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 같은 달 구로지역의 성원제강, 한국음향 등의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해 결성된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구민주) 등 4개 조직의 연합으로 출범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117-118, 119-120).

O11

<서노련>은 자신의 활동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동자대중신문인 『서노련신문』을 발간한다. 1985년 9월 7일, <서노련> 출범과 함께 제일 먼저 신문발간에 주력했으며, 이후 신문의 발간과 조직적 배포, 그를 통한 의견의 형성, 인식의 공유, 나아가 비판적 의견의 수렴에 이르기까지 신문사업은 <서노련>의 가장 주요한 활동 중 하나였다. 『서노련신문』은 8절지 4면으로 발행되었는데, 노동운동소식, 농민·청년학생 등 부문운동 소식 및 정세, 해설기사, 특집기사, 노동자의 소리를 담은 ‘우리들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서노련신문』은 1986년 2월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의 창립, <성남노동3권쟁취투쟁위원회>와 <전국노동자생활임금쟁취투쟁위원회>가 발족되면서 12호(1986.3.14)부터 『노동자신문』으로 발전해간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120, 123). <서노련>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1986년 상반기까지 <서노련>을 다른 운동세력들과 구별지었던 주장은 ‘삼민헌법’과 ‘생활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10월 9일자 『서노련신문』(3호)에 처음으로 등장한 “삼민헌법쟁취”라는 구호는 1, 2호에서 나왔던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민주헌법쟁취투쟁이라는 입장과 그 외적인 차이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러한 주장은 1985년 10월 <인천지역노동자협의회>(인노련), <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 <안양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안양3권위)와 함께(정대용, 『재야 민주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 1988, p198) <전국노동자 삼민헌법쟁취투쟁위원회>(전노삼민헌쟁)구성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서노련>은 11월 18일 <생활임금쟁취위원

회>를 구성하여 다음 해의 임금투쟁을 대비해 나간다. 생활임금이란 기존 한국노총에서 산출해낸 최저생계비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정부와 타협하여 산정해 낸 최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8시간 노동으로 노동력재생산 비용인 월급을 받아내자는 주장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8시간 노동으로 일당 6,300원(6,500원, 정대용, 『재야 민주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 1988, p199)의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1986년 봄의 임금인상투쟁에서는 곳곳에서 “생활임금쟁취”구호가 외쳐졌다. 1월 구로의 오토론전자를 시발로 3월에 구로의 나우정밀, 삼경복장(코오롱), 대한광학, 롬코리아, 남성전기 등과 부천의 경원기계, 경남 창원시의 통일산업, 4월 주안의 한양공영과 6월에 부평의 해태음료에 이르기까지 생활임금쟁취의 구호가 솟아올랐다. 이같이 사업장 임금투쟁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서노련>은 3월 10일, 영등포 당산동 <성문밖교회>에서(『말』 제6호 1986.5.20, p36) <기노련>, <성남생존권확보투쟁위원회>, <안양3권위>와 공동으로 ‘86임금인상투쟁진진대회’를 개최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127).

이듬해인 1986년 3월 19일 구로공단(가리봉 5거리)에 위치한 모세미용실을 점거하고 “생활임금쟁취”등을 요구하며 농성과 가두투쟁을 벌였고, 1986년 3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서노련>과 <인노련>이 공동으로 전태일기념관에서 농성을 벌였다(정대용, 『재야 민주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 1988, p200). 이어 3월 24일 주안 6공단에서 가두시위, 4월 12일 부평 역전 가두시위, 5월 1일 철산리에서 ‘노동자해방투쟁의 날’ 가두시위를 주도했다.

1986년 5·3인천사태 이후 <서노련> 활동가들이 10여명 구속되는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지만 활동을 계속하면서 ‘전국적 노동자조직’건설을 추진하였다. <서노련>과 <인노련>은 『노동자문』을 통해 현재 서울, 인천, 안양, 성남 등 각 지역의 노동자들이 지역적 협소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국적 노동자의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하고 1986년 6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6.24 연대투쟁 계승 및 서노련탄압 규탄대회’, 그리고 7월 22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조직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실천대회’에서 ‘전국노동자조직’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중정치조직에 대한 비판-지도조직과 대중조직간의 애매한 성격, 대중에 대한 수동적 견해, <서노련>의 패권주의 등-이 가중되면서 <서노련>·<인노련> 내부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제기된다. 그 하나는 대중정치조직의 의의는 인정하면서 부분적인 문제점을 개조하자는 개조론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정치조직 자체가 잘못된 운동조직이므로 해체해야 한다는 해소론이었다. 그러나 결국 <서노련>과 <인노련>은 새로운 조직노선, 투쟁노선을 정립하지 못한 채, 내부의 각 분파로 갈라지면서 <인노련>이 먼저 해체되고 <서노련>도 사실상 와해되고 만다(정대용, 『재야 민주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 1988, pp.201-203).

O12

민종덕(위원장, 청계피복 노조위원장), 김문수(지도위원), 유인혜, 윤현숙, 이은홍, 박정애, 김순천, 김진태, 송재섭, 유시주, 최한배, 서혜경, 노정래

O13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O14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서울노동운동연합 창립선

언』, 73쪽

정대용, 「제야 민주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 1988

『서노련신문』

『노동자신문』

『말』 제6호 1986.5.20

O1

민족미술협의회

(1995년 <전국민족미술인연합>으로 개칭)

O2

민미협

O3

O4

O5

1985.11.~1995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5년 11월 민족미술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이 서울에 모여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민족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든 미술단체이다. 김정현·임옥상·오윤·신학철 등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임옥상이 대표를 맡았다. 처음 명칭은 <민족미술협의회>였으나 민중미술의 운동성 상실과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미술 고유의 예술성을 살리기 위하여 1995년 <전국민족미술인연합>으로 바꿨다. 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5년 7월에 열렸던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에 대하여 정부가 은연중 탄압을 가해오자 이에 대한 항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민족미술을 지향하기 위하여 항구적 협의체를 조직하자는 취지에서였다(엠펙스 백과사전).

O11

이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자율과 민주정신에 따르는 새로운 미술제도, 행정·교육체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민중을 중심으로 삼는 민족미술 작품의 창작, 보급, 연구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이 단체의 화가들은 미술품에 실제 삶의 현장을 그려내고,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협의회는 이후 민중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그림마당 민」을 개설하고 많은 전시회를 가졌으며, 기관지 「민족미술」을 87년부터 발행해오고 있다. 1986년부터는 매년 여러 참여한 주제의 기획전과 연례전으로 '통일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마다 민족미술대토론회도 열고 있다(엠펙스 백과사전). <민미협>은 1986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그림마당 민」에서 제1회 '통일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에는 총 51명의 작가들이 분단의 아픔과 오늘의 민중현실, 분단극복의 의지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출품했으며, 2천여명의 시민이 관람했다. 또한 '통일전'을 위한 부대행사로써 8월 16-17일 이틀간에 걸쳐 다락원 YMCA 캠프장에서 '민족미술대토론회'도 가졌다(『말』 제8호 1986.9.30, p59). 1987년 3월 10일부터는 역시 「그림마당 민」에서 「고 박종철군 추도 반(反)고문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경찰은 작품들을 강제압수하려 시도했고, 3월 14일 전시회장인 「그림마당 민」을 폐쇄하기도 했다(『말』 제10호 1987.3.20, p66).

O12

임옥상(초대 대표), 손장섭(86년 대표), 김정현, 오윤, 신학철

O13

O14

엠파스 백과사전

『말』 제8호 1986.9.30

『말』 제10호 1987.3.20

O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O2

민가협

O3

O4

O5

1985.12.12(결성)

1985.12.28(현판식) (『말』 제5호 1986.3.25, p43)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민가협>은 1985년 12월 28일 당시 <민청련> 간부 구속자 가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민청련 간부 구속·수배로 사실상 공개 운영이 어려운 민청련 사무실을 공간으로 활동하였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 pp.25-26).

O11

민가협은 최초의 활동으로 김근태씨 고문 등에 항의하여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다른 단체들과 함께 <용공조작고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족민주세력 탄압저지 운동에 앞장섰다. 1986년 대대적인 용공탄압이 자행되던 시기에는 <구속학부모협의회> 등 6개 협의회로 조직을 개편·확대하고 구속사건별로 가족모임을 마련하여 구속자 석방운동, 용공조작 고문수사 철폐운동, 농성, 집회, 시위, 항의방문, 그리고 구속자 인권보장운동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민가협의 투쟁은 1986년 7월 부천시 성고문 사건을 계기로 가족운동의 틀을 벗어나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른 민족민주운동세력과 함께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정치투쟁의 일선에 나선 민가협은 2·7, 3·3국민추도대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6월항쟁을 이끈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 p26). 이외에 소식지를 발행했는데, 재판진행소식, 구속자의 신변상태 등에 관한 소식을 주로 해서 가족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차입할 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대출하기도 했다(『말』 제5호 1986.3.25, p44).

O12

이청자(초대 공동대표)

O1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O14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

『말』 제5호 1986.3.25



---

---

〈1986년〉

- 01.21 박종만추모사업회
  - 02.07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 03.08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
  - 03.29 구국학생연맹(구학련)
  - 04.29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민민학련)
  - 05.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전노추)
  - 06.21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한출협)
  - 06.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 08.09 제현의회그룹
  - 08.12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 08.16 동일기업노동조합
  - 09.04 서울시 20개 재개발지역 주민연합
  - 09.08 고려대 애국학생회(애학회)
  - 09.13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 09.15 연세대 반미구국학생동맹(구학동)
  - 10.18 서울영상집단
  - 10.21 미·일경제침략저지범국민운동연합
  - 10.28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 
-



O1

박종만추모사업회 (☞ <사건편> 박종만(민경교통노조 쟁의부장) 분신 사망사건 참조)

O2

O3

O4

O5

1986.1.21~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부당해고된 동료 노동자의 복직과 모든 차량의 대물종합보험 가입, 성과급·상여금의 삭감 및 지급중지 반대,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1984년 11월 30일에 분신한 박종만 열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1987. p1002)를 기리고, 운수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86년 1월 21일 서울 홍제동 성당에서 발족된 단체(추모사업회는 남편이 남긴 숙제를 풀어가는 단체입니다, 말 제5호, 1986.3.25, p76)이다.

O11

O12

김승훈(회장, 신부), 문익환·계훈계·박형규·김병걸·성래운(이상 고문), 조춘구, 김태홍(외 18명, 운영위원), 조인식(상근 상담간사, 박종만 열사의 부인)(“추모사업회는 남편이 남긴 숙제를 풀어가는 단체입니다”, 말 제5호, 1986.3.25, p75)

O13

O14

「추모사업회는 남편이 남긴 숙제를 풀어가는 단체입니다」, 『말』 제5호, 1986.3.2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1987

O1

인천지역노동자연맹

O2

인노련

O3

O4

O5

1986.2.7~?

O6

O7

비공개 / 비합법

O8

O9

O10

<인노련>은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인노협)이 1986년 2월 7일 서울 노동자복지협의회(노협)와 관계를 정리하고 <인천3권위>(인천노동3권쟁취위원회)와 연합하여 결성한 대중정치조직이다(정대용, 「재야 민주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 1988, p198). <인노련>은 이날 발표한 창립선언문에서 최저임금제 및 8시간노동 확보투쟁, 외세와 군부독재, 독점재벌과의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말』 제5호 1986.3.25, p68).

O11

O12

O13

O14

정대용, 「재야 민주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 1988

『말』 제5호 1986.3.25

O1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

O2

여성생대위

O3

가톨릭여성농민회, 또하나의 문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여성부, 민주불교운동연합 여성부, 서울노동운동연합 여성부, 여성의 진화, 여성평우회,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여성분과,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여성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농민회 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학생연맹 여성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회위원회

O4

O5

1986.3.8~?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구세군 서대문 영문본당에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여성부를 비롯, 20여개의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발족한 <여성생대위>는 “여성억압의 사회구조에 대한 변혁주체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빈민이며 이들이 투쟁속에서 왜곡된 역사가 변혁될 수 있다”고 진제한 뒤, “이 같은 왜곡된 정치·경제·사회구조 속에서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빈민들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여성생대위>는 “현재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며, 소수 독점자본을 위호하는 현정권의 노동정책은 저임금 구조의 근간으로써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수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 12시간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월 10만원 미만을 받는 공장노동자의 80%이상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빈민여성의 경우, 월 5만원 정도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노동력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여성들도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수매가로 인해 빈곤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여성운동이 기층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수렴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전체여성의 생존권투쟁을 대별할 조직적·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그 일차적 과제는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결의했다. 발족식에 이어 <여성 생대위>는 ‘8시간 노동제 실시 및 생활임금보장’, ‘노동악법철폐’, ‘과업자유권보장’, ‘도시빈민 생존권보장과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지’, ‘농축산물 수입중단’, ‘농가부채해결’ 등의 주장을 채택했다(『말』 제5호 1986.3.25, p103).

O11

O14

『말』 제5호 1986.3.25

O1

구국학생연맹 (☞ <사건편> 구국학생연맹 ('구학련') 사건 참조 / 87.02.24 서울지검 공안부 친북괴반 미공산혁명기도 적발사건 참조)

O2

구학련

O3

O4

O5

1986.3.29~1986.10.28

O6

서울

O7

비공개 / 비합법

O8

중앙위원회는 조직내의 부서를 총괄하며, 임기기간 중의 투쟁을 지도하고 책임지는 부서였고, 대외적으로는 조직을 대표한다. 중앙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들이 모이는 지역대표자회의에 의해서 선출 혹은 경질되었다. 중앙위는 <구학련>이 경찰의 수사·구속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해산되는 건국대사태까지 7차례 바뀐다고 한다. 여학생부는 조직내의 특별부서로서, 여성해방적 관점에서 따로 조직되어 여성문제 특별위원회의 성격의 지니며 중앙위 직속에 편제되었다. LT(노동자해방지원 연대투쟁위원회)는 역시 조직 내의 특별부서로서, 그 정치적 중요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지 못한 노동자계급과의 지원, 연대 투쟁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들불」이란 신문을 2번 발간했다. 선전부는 대외 학생대중용 선전물인 「해방선언」과 대내 정치잡지인 「구국의 함성」을 제작했으며, 대외사업부는 다른 대학이나 기타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는 기구였다. 투쟁부는 조직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투쟁을 조직화해나가는 투쟁기구로서 공개투쟁위원회로 '자민투'를 그 산하에 두고, 한편으로는 총학생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직부는 각 단과대학별로 1~5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p.180-181; 조선일보 1986.10.18).

O9

1. 미제의 신식민지-파쇼체제를 분쇄하고 민족의 자주적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 모든 국민의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 진보적이고 민족자주적인 교육제도 확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1.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하고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을 적극 지원, 연대투쟁한다.
1.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 제국주의의 모든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옹호를 위하여 투쟁한다.

O10

서울대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은 <단체사상연구회>(단사그룹)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 서울대 <고전연구회>라는 공개서클 출신인 김영환(법대 82학번, 필명 강철), 정대화(법대 82학번), 배정환(법대 83학번), 박금섭(법대 83학번) 등 7-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사그룹은 소위 반제그룹(AI그룹)의 핵심이었다. 이들은 최초로 **품성**에 기초한 사상운동을 표방하였으며, 서울대 학생

운동의 기본틀인 이념씨클체계의 즉각적 해체, 종파주의의 척결, **학번제**의 철폐 및 운동조직에 있어 봉건적 잔재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안으로 통일된 학생운동조직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1985년 말에서 1986년 초의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이들은 <민주학생연맹 준비위>를 구성하여 조직 결성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준비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민족해방을 강조하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구국학생연맹>으로 확정짓고 통일된 조직의 부재 속에서 분산되어 있던 여러 학생운동가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가며, 강령·규약의 제정, 이를 매개로 한 설득작업, 조직화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3월 29일 서울대 자연대 건물 22동 404호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구국학생연맹 결성식을 갖게 되었다(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pp.146-147).

O11

<구학련>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론에 기초하여 투쟁의 영역을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촉진투쟁으로 설정하고 이 세 가지 투쟁을 주·객관적인 정세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반미자주화투쟁임을 강조했다. <구학련>의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은 1986년 4월 10일 결성된 공개투쟁체인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를 통해서 실천되었고 그 기관지인 해방선언에 표방되었다(위의 책, p145, 151).

<구학련> 자체는 비합법조직이었다. 따라서 조직의 투쟁과정에서 공안당국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의 투쟁방향성을 집약하여 학생대중에게 천명하고 투쟁을 현장에서 지도할 공개투쟁기구가 필요했는데, 이 기구가 바로 <자민투>였다(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184).

5월 들어 <구학련>은 <자민투> 산하에 <5월특위>를 두고 학살원흉처단투쟁 및 민주제개헌투쟁을 벌여나갔고, 5월 21일 부산 미문화원 점거투쟁이 전개되었다. 이후 <구학련>은 조직이 정부에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수가 검거·수배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구학련>은 전국적 연대와 단결을 위하여 학생운동연합체 건설을 하였으며, 10월 28일 건국대에서 벌어진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발대식 이후, 공안당국의 철저한 진압·검거로 <구학련>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O12

김영환(金永煥), 정대화(鄭大和, 중앙위위원장), 하영옥, 황인욱(黃仁郁, 조직부장)

O13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자민투),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O14

민가협·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조선일보 1986.10.18, 10.19, 11.13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서울대학교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선언』(86.04.10), 135~137쪽

O1

전국반제반과소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

O2

민민학련

O3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p149 참조

O4

O5

1986.04.29~?

O6

O7

O8

O9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p.148 참조 (☞ 별첨 <자료집> 참조)

O10

<민민학련>은 <민민투>(반제반과소민족민주투쟁위원회)가 발족시킨 것으로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생 1천여명이 1986년 4월 29일 연세대에 모여 창립결성대회를 가졌다.

민민투는 '반제반과소 민족민주투쟁위원회'의 약칭으로 1985년 전학련, 삼민투사건으로 학생운동 조직이 붕괴된 후 겨울 방학중에 이론적인 체계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6년 3월 서울대 인문대를 중심으로 결성되기 시작하여 성대, 연세대등 다수의 대학으로 과급되었다. 선 독재타도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자민투와 차이점이 있다. 산하 기구로 <친미주구일당차단과 민주적권리쟁취 투쟁위원회>와 <노동자해방운동지원 연대투쟁위원회>라는 명칭의 기구를 두어 <민족민주선언>을 기관지로 발간하였다.

O11

O12

공동의장: 김길오(金吉禧, 서울대 민민투위원장)·김성택(연세대 민민투위원장)·조용묵(趙裕默, 성균관대 민민투위원장)

O13

O14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조선일보 1986.4.30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국반제반과소민족민주학생연맹 투쟁선언」(86.04.29), 138140쪽

O1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 (☞ <사건편>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전노추) 결성사건 참조)

O2

전노추

O3

O4

O5

1986.5.-1986.10.18

O6

서울

O7

조작가능성 농후

O8

조선일보 1986.10.19

O9

O10

경찰에 의하면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침투해 있는 서울지역 노동운동연합회, 성수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노동자해방동맹, 경인지역 노동운동권 등의 핵심조직원들이 1986년 5월 인천사태 후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를 결성, 노학연대투쟁을 배후에서 조정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대중조직과 전위조직 등 2원조직으로 <전노추>를 구성, 반합법적인 투쟁과 비합법적인 투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조직의 의장단은 신철영과 황인범, 박태연 등 3명, 준비위원은 이영순, 영미, 현숙 등 3명이며 이들이 산별비밀노조를 배후에서 조종했으며, 전위조직은 역시 신철영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위원회의 지도로 구로지역산별위노조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이다.

O11

경찰발표에 따르면 구속된朴요한은 두 조직의 선전선동책으로 1986년 2월부터 4월까지 『80년대의 한국경제』, 『일제하의 한국경제』, 『해방후 60년대 한국경제』, 『70년대 노동운동사』 등 운동권 교재를 작성 배포했으며, 7월28일엔 「노동해방전선」1호를 제작 배포하는 등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O12

朴요한(서울대 물리4 휴학), 申澈永(의장, 영등포산업선교회 실무간사), 金帝甲(서울대 농학과 4년제적), 許潤(서울대 사대, 인천노투대의실무책), 李相洙(연세대 사학과, 서울노투 대외사업책), 南承祐(서울대 정치과, 노동자해방동맹 선전부장), 尹永圭(서울대 경제과, 노동자해방동맹 선전부), 朴盛燦(노동자해방동맹 선전부)

O13

O14

조선일보 1986.10.19

<연구팀 의견: 조작가능성 농후>

\* 당시 한 일간지가 보도하는 사건 담당 경찰(치안본부)의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안본부는 (10월) 18일 노동운동에 침투한 ‘구국학련’ 등 운동권 출신 대학생들이 최근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지하비밀조직인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를 구성, 각종 유인물의 제작 배포, 과격노동투쟁 가두시위 등을 배후 조종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노추’ 선전선동책 박요한군 등 7명을 붙잡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의장 신철영씨 등 핵심간부 19명을 포함 1백7명을 수배했다. ...(중략), 경찰에 의하면 운동권출신들이 많이 침투해있는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회 성수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노동자해방동맹 경인지역노동운동권등의 핵심조직원들이 지난 5월 인천사태후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를 결성, 노학연대투쟁을 배후에서 조종해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2원조직으로 ‘전노추’를 구성 반합법적인 투쟁과 비합법적인 투쟁을 해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86년 10월 19일자)

- \* 경찰의 수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언론의 보도 이외에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문헌 자료는 별로 없다. 그러나 당시 재야운동진영에서는 본 사건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같은 해 10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농어촌선교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성명서에서 “전노추 사건은 장기불법구금수사의 결과가 빚은 악의에 찬 용공조작으로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조선일보, 10월 26일자) 이 성명서 발표의 여파로 김동완 목사가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1월 9일자)
- \* 무엇보다도, 당시의 운동노선상의 참여한 갈등구도를 고려한다면, 구학련(NL계열 중심의 학생운동)과 서노련(非NL계열 중심의 노동운동)이 연대하여 전국적 노동자조직을 건설하려 했다는 것은 상식에서 많이 어긋난 일이라 할 수 있다.

O1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O2

한출협

O3

O4

O5

1986.6.21~?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이하 한출협)는 <아침>, <석담>, <풀빛>등 30여개 출판사의 발행인, 편집인, 영업자, 서점대표 등 2백여명의 출판관계 종사자들이 1986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한글회관에서 발족시킨 단체이다. 이들은 발기취지문을 통해 “이 땅의 양심적 출판문화는 외국저작권 보호문제에 대한 외세압력과 당국의 굴종적 협상, 출판인의 연행과 구속, 불법적인 압수와 수색, 흑색선전 등으로 위기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삶과 출판문화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힘의 집결이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립선언을 통해 “출판문화운동은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을 지향하는 민중세력에 이념적 지향을 두고 △냉전문화에 의해 피해의식에 젖은 국민대중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천할 의지를 일깨우며 △지배권력의 반민족적 문화조작을 폭로하고 민족문화건설에 매진하며 △상업적 저질문화축출과 제국주의 출판문화와의 자주적 경쟁력확보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출판등록취소는 위헌이므로 그 조치를 무시하고 책을 발간한다 △출판사 신규등록규제는 불법이므로 신규등록신청을 해도 등록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함께 책을 무조건 발간한다 △납본을 판매금지조치로 악용한다면 납본거부운동도 불사한다는 3개항을 결의했다. 그리고 국제저작권조약이 “선진국간에는 상호호혜적 문화조약일 수 있지만 문화의 일방적 수입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불평등 반문화조약”이라고 규정하고 “민족문화와 민족경제의 틀을 흔들 어 놓을 것이 분명함에도 체면이나 압력에 못이겨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저작권보호압력에 대한 범국민적 항의운동의 일환으로 아메리카(America)의 표기를 ‘아름다울’ 美자 대신 ‘꼬리’ 尾자로 바꾼 「尾國」으로 하자고 주창했다(『말』 제7호 1986.7.31, p65).

O11

O12

공동의장: 정동익(아침출판사 대표)·최영희(석담출판사 대표)

O13

O14

『말』 제7호 1986.7.31

O1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부노동자연맹) (☞ <사건편>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 참조)

O2

남노련

O3

구로·영등포·신도림·여성사업장·북부지역 공장하부위원회,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노해사), 민주헌법쟁취노동자투쟁위원회(민헌노투), 민민노투

O4

O5

1986.6-1987.4.26

O6

서울 구로

O7

비공개(때론 공개 활동) / 비합법

O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 p226 참조

O9

O10

1985년 6월 구로연대투쟁을 계기로 결성된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의 활동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노련>이 취한 과감한 선도적 정치투쟁에 대해 그것이 대중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대중정치투쟁조직이라는 <서노련>의 조직방향에 대해서도 대중조직의 중요성, 즉 노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가진 그룹이 형성되었다. 즉 가혹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보다 대중적인 경제투쟁, 또 그 기초로서 보다 대중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노동운동의 당면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86년 봄의 임금인상투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국노동자임금인상공동투쟁위원회>(전노임투)를 출범시켰다. ‘최저생계비 일당 7,000원 쟁취’를 주요 슬로건으로 한 이들의 활동은 그 대중적 토대의 부족으로 인해 곧 중단되었고, 이어 나뉘대로 지역적 토대를 갖춘 <구로·영등포지역 임금투쟁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그 활동의 결과가 1986년 6월 <남노련>체계의 기초가 된 것이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pp.228-229).

O11

<남노련>은 조직의 기초로서 구로, 영등포, 신도림, 여성사업장, 그리고 북부지역에 공장하부위원회를 두어 단위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간의 조직적 결합을 시도했다. 한편 노동운동에 뜻을 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노해사)가 교육부서로 만들어졌다. <노해사>는 그러한 교육 외에도 조직의 방향성 정립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조직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노해사>는 약 17기에 거쳐, 매기마다 6~7명씩, 3개월여의 기간 동안 철학, 경제학, 각국의 노동운동사, 한국노동운동사,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활동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현실적 의미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해내고 그러한 공동의 문제의식이 노동운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외에 노동자교육을 위한 민주노동자대학, 서울노동청년회 및 야학-부천의 작은자리야학, 광명시의 한광야학, 당산동의 당산야학 등-등이 있었으며, 노동자대중용 신문이 <전노임투>

활동기에는 『선봉』으로, <남노련>체계에서는 『햇불』로 발행된다. 『햇불』은 신홍정밀 임금인상 투쟁 과정에서 박영진열사가 분신한 직후인 1986년 3월 31일 <구로영등포임금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창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체계나 부분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부분이 모여 공장위원회(치안본부 수사발표상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노련>체계는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조직형태로는 탄압적 상황으로 인해 비공개형태를 취했으나, 사업장 단위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임금투쟁의 과정에서 또 개헌투쟁을 위해 1986년 10월 <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민헌노투)를 구성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도 수행했다. 이후 <남노련>의 <민헌노투>는 다른 노동운동세력들과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노동자투쟁위원회>(민헌노투)로 흡수된다.

교육과 선전 이외에 조직의 중심적인 활동으로서 단위사업장별로, 혹은 지역적으로 진행된 임금투쟁이나 노조설립투쟁 등 노동자대중투쟁을 들 수 있는데 동일제강, 대한광학, 신홍정밀, 조흥화학, 동일기업사, 세광알루미늄, 땡땡 등에서 진행된 사업장 투쟁이 커다란 성과였다. 1986년 3월 26일에는 구로역 일대에서 “박영진동지 추모식 및 삼반세력 타도를 위한 민중대회”를 <전노임투>가 주최하여 가두시위를 벌이고, 이어 5월 1일 ‘노동자해방투쟁의 날’에도 독산동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1986년 6월 이후, 조직, 교육, 선전, 투쟁의 각 단위가 체계화되기 시작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전체 조직의 성격, 위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당시 조직의 위상에 관한 자체평가를 통해 조직의 성격이 활동가 조직에 가깝다는 인식하에 향후의 조직방향을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두 갈래로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하에 대중조직준비위원회를 두고 다른 그룹들과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각기 대중조직활동, 주로 노동조합과 관계된 활동을 하던 그룹들 사이에서 단일한 대중조직 형성을 커다란 원칙으로 대중교육문제라든가 제반 세부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논의 자체가 당국의 탄압대상으로 이용되었다. 이른바 <전국노동자조직추진위원회>(전노추)사건이 그것이다.

한편 전위조직 건설의 방향성은 정치신문팀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조직에 대한 탄압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1월 <노해사>에 대한 연행, 구속 이후 조직의 지도부가 대거 수배되자 <남노련>은 임시지도부를 구성했다. 그 후 1987년 3월의 열성자대회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정비에 고심하던 지도부는 조직위상의 문제, 당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노선 문제 등을 검토하여 대회에 회부하게 된다. 대회는 조직의 30여 명의 기간활동가들 모임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과거 <남노련>조직이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혼재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조직을 활동가체제로 재편하기로 합의한다. 아울러 조직의 운영방안에 관해 각 지부의 대표자로 회의를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1987년 4월 26일 도봉산 모임이었다. 하지만 도봉산에 모였던 지부대표 10명이 일거에 연행되고, 이후 11월 최규엽, 이재형 등의 연행, 1988년 5월 조석현의 구속으로 <남노련>사건은 일단락되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pp.229-241).

O12

유용화, 최규엽, 김영진, 이재형, 조석현, 서원기, 최동규, 이재권

O13

O1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

**<연구팀 의견 : 보안사와 치안본부에 의해 활동 과장 및 조작 가능성 농후>**

- \* 1987.5.1 치안본부는 “좌경의식화 근로자를 양성, 경인지역 공단에서 노사분규와 시위 등을 배후조정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기도해 온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이하 남노련) 조직을 적발, 위원장 유용화 등 13명을 국가보안상의 이적단체 구성, 복귀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이미 구속된 위 ‘노해사’ 사건 관련자들도 ‘남노련’ 소속의 하부조직으로 처리되어 있다.
- \* ‘남노련위원장’으로 이미 구속된 유용화도 1987년 11월 최규엽이 구속되자 최규엽이 중앙위원장으로, 유용화는 중앙위원으로 바뀌었다. 사건은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조작에 조작을 거듭한 끝에 ‘지하혁명조직 남노련사건’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군수사기관인 육군보안사와 치안본부의 가혹한 고문과 용공조작, 검찰과 사법부의 협력의 과정을 통해 사건이 완성되었다고 관련자들은 주장하였다.
- \* 결국 “서노련의 활동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차이와 그후 1986년 봄에 있을 임금인상투쟁에 대한 지침의 차이 때문에 분리된 집단과 서노련 결성에 참여하지 못한 활동가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적 문제의식의 공유에서 싹튼 남노련”은 노동현장에 투신한 고려대 운동권 출신 노동자들의 운동씨클 수준에서 당국의 ‘용공조작’으로 굉장한 ‘조직사건’이 된 것이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8284쪽)

**<연구팀 의견>**

- \* 단체 명칭과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에는 ‘남부노동자연맹’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1

제헌의회(CA)그룹 (☞ <사건편> 제헌의회(CA)그룹 사건 참조)

O2

CA(Constituent Assembly)

O3

O4

O5

1986.08.09~1986.12 (86.11.20 안기부 수사 착수)

O6

경인·영남

O7

비공개 / 비합법

O8

O9

강령초안(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pp.277-280 참조) (☞ 별첨 <자료집> 참조)

O10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하는 학생운동세력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본격적 활동이 시작된 때는 1986년 5월을 전후한 시기였다. 1985년 2.12총선 이후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헌법개정에 의한 민주화의 요구가 1986년 4.30 여야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호헌-개헌이라는 정국변화의 추세속에서 1985년 말의 ‘삼민통일헌법쟁취투쟁’과 그에 따른 ‘과소헌법철폐투쟁’등은 바로 그 중 하나의 단편들이 되겠다. 바로 이러한 슬로건들은 당시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현관식을 둘러싼 범국민적 반독재투쟁의 고양속에서 상승작용을 일으켰으며 나아가서 헌법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개정이나 제정이냐, 참가하는 세력, 변혁노상과의 연관성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일방에서는 헌법문제와 혁명을 일치시키는 입장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CA론은 학생운동세력을 중심으로 전파되어 NL학생운동 세력과 대비되는 양대 조류가 되었다(강신철 외, pp.270-271).

O11

CA그룹들은 1986년 당시 상황을 헌법문제와 관련하여 ‘혁명을 예고하는 시기’라 규정하고 개량이나 혁명이나를 구분하는 혁명의 금을 그어야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으므로 근본적이며 전면적인 위기상황에서 ‘제헌의회소집’을 노동자계급의 당면 정치투쟁의 전술적 슬로건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강신철 외, p271).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87년 2월 3일 ‘제헌의회그룹사건’을 발표했다. 검찰조사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레닌의 혁명이론을 그대로 한국사회변혁이론으로 옮겨놓은 ‘강령초안’등을 작성, 지도지침으로 삼으면서 당면한 시기의 투쟁목표를 ‘제헌의회’소집투쟁으로 설정하고, 30여건의 각종 시위를 배후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건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재판기록이 조작된 것이라(특히 반국가단체구성·가입과 관련하여)고 주장했다.

CA그룹의 활동내용은 강신철 외, pp.296-303, 제헌의회그룹 사건관련자 가족 위음, pp.17-25 참조.

O12

최민(서울대 78), 윤성구(서울대 수학과 3년중퇴), 민병두(성대 78), 김철수(서울대 신문학과 졸), 김성식(서울대경제학과 졸), 유강근(서울대 사회학과 4년제적), 이선희(서울대 국사과 졸), 강석령(서울대79), 김현호(성대79), 김찬(성대77), 한승권(서울대81), 이호균(서울대 78), 차호정(서울대 79), 김옥수(외대 81), 하윤숙(서울대 79)

O13

민민투

O14

제헌의회그룹 사건관련자 가족 위음, 『민중민주주의를 향하여: 제헌의회그룹 사건기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88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제헌의회파의 ‘기수’(1986), 141~149쪽

#### <연구팀 자료>

\* 사건명: 제헌의회(CA) 그룹 사건

I. 사건일자 : 1986년 5월~1987년 2월

#### II. 사건개요

- 1986년 개헌국면에서 ‘직선제 개헌’이 아닌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민중민주헌법 제정’을 주장한 이른바 ‘제헌의회 그룹(CA: Constituent Assembly)’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처벌한 사건.
- 1987년 2월 3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86년 5월경부터 최민, 김철수, 윤성구, 민병두 등 과거 전국 민주학생연맹(학림),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 그룹),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사건 관련자들이 주축이 되어 레닌의 혁명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기초로 ‘강령초안’을 작성하는 등 ‘제헌의회 그룹’ 결성을 준비해오다 1986년 8월 9일 민족민주혁명(NDR)을 통한 민주주의민중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본격 출범시키고 당면한 시기의 투쟁목표를 ‘제헌의회 소집투쟁’으로 설정하여 이를 위한 시위선동 및 정치신문 제작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여 ‘제헌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함.

○ 주요관련자

이름	소속	선고형량	직책	비고(현재 직업)
최 민	서울대 78	징역·자격정지7년	CT 및 CO 위원	한국장애인연맹 이사
김성식	서울대 77	징역·자격정지5년	CT 위원, LT2위원장	
윤성구	서울대 78	징역·자격정지6년	CT 위원, 사무국장	자영업
민병두	성대 78	징역·자격정지5년	CT 위원, LT1위원장	문화일보 기자
강석령	서울대 79	징역·자격정지5년	LT 위원, 학생운동지도책	인터넷 서비스업
김현호	성대 79	징역·자격정지2년	LT 위원, 재정담당	홍보대행사 운영
김 찬	성대 77	집행유예	CT 사무국원	
김철수	서울대 75	징역·자격정지5년	CO 위원	
유강근	서울대 79	징역·자격정지4년	CO 위원, 자료실장	변호사
이선희	서울대 79	징역·자격정지3년	CO 위원, 제국주의문제제소위원회	
한승권	서울대 81	징역·자격정지1년6월	CO 산하 강령기초위원	
이호균	서울대 78	징역·자격정지2년	CO 산하 번역실장	
차호정	서울대 79	징역·자격정지1년6월	CO 산하 번역실원	
김옥수	외대 81	집행유예	CO 산하 번역실원	
하윤숙	서울대 79	집행유예	CO 산하 번역실원	

### III. 제현의회 그룹 개요

#### 1. 제현의회 소집론의 제기배경 및 내용

- 제현의회 그룹의 주요 활동시기인 1986년은 군사독재정권을 민주적 정권(정부)으로 교체하기 위한 전략을 둘러싸고 ‘헌법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시기임.
  - 전두환 정권의 호헌방침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은 직선제 개헌, 제현의회 소집을 통한 민주헌법 제정,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흐름으로 분화되었고, “제현의회 소집을 통한 민주헌법 제정 주장”은 제현의회 그룹(CA)과 민민투(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소속 학생, 노동자들의 유인물 배포, 가두시위 등을 통해 표출되었음.
- 당시 야당인 신민당과 민주화운동세력 다수가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현의회 소집을 통한 민주헌법 제정”을 주장한 데에는 12대 국회의 성격 및 신민당에 대한 인식, 개헌운동 과정에서 신민당이 보인 기회주의적 행태 —1986년 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헌방침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개헌서명운동을 통해 재야 민주화운동세력과 공동대응하던 신민당은 4월 말 ‘국회헌법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개헌추진, 즉 민정당과의 합의를 통한 개헌에 합의하게 되고, 재야 민주화운동세력과 분열하게 됨—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헌법투쟁은 단순히 헌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완전한 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전민중적 주권행사 방식의 문제”로 인식하였던 제현의회 그룹 관련자들은 12대 국회를 “이미 모든 계급으로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파쇼헌법에 의해 구성되었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상인 등의 대표는 단 한 명도 없으며 비록 중소자본가를 계급적으로 대표하는 신민당이 국회에 진출해 있었지만 전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고 원내에서의 자

유조차 절대 다수의 민정당에 의해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있던 상황”으로 파악, “민정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민주헌법의 과제를 떠맡긴다는 것은 파시스트에게 민주화의 과제를 위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헌법의 탄생을 위해서는 ‘완전한 정치적 자유 하에 새로이 소집되는 입법기관’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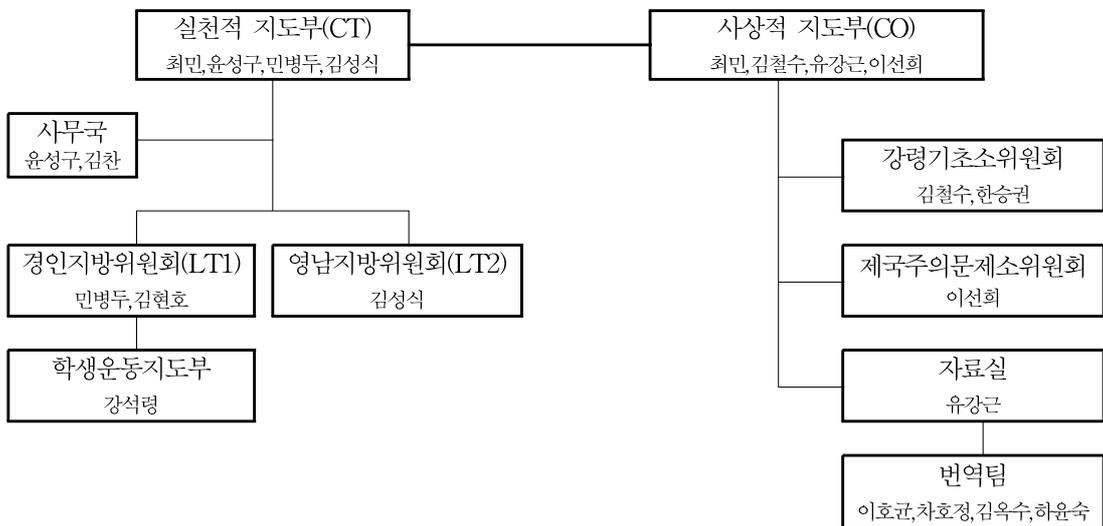
○ 제헌의회 소집론의 내용

- 제헌의회 그룹이 제작, 발행한 유인물, 제헌의회 그룹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제헌의회 소집론’은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 하에 민중의 봉기를 통한 파쇼와 제국주의 축출 → 임시혁명정부 수립 → 제헌의회 소집 → 민주주의민중공화국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

2. 주요 활동내용, 조직구성

○ ‘제헌의회 소집론’을 선전할 조직 결성

- 1986년 초부터 같은 해 7월 경까지 최민은 윤성구, 민병두, 강석령, 차호정, 김철수, 김성식 등 과거 전국민주학생연맹, 민주화추진위원회,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관련자들과 만나 당면한 헌법 투쟁의 올바른 운동노선에 대해 토론하면서 현 시기 올바른 전술적 슬로건은 ‘민중대표가 참여하는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민주헌법 제정’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헌의회 소집론’을 선전하는 정치신문 발행과 배포를 위한 중앙지도부 건설을 준비함.
- ※ 조직구성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조직원 확보문제로, 이는 1986년 5월~6월경 최민 등에 의해 제작된 “혁명운동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와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유인물과 레닌의 혁명이론 저서 등을 교재로 한 토론, 학습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
- 1986년 7월경 실천적 지도부인 ‘씨.티.(CT: Central Tower)’와 사상적 지도부인 ‘씨.오.(CO: Central Organ)’를 중앙기관으로 결성하였으며, 8월 초순 씨.티. 산하에 지방위원회(LT: Local Tower)를, 씨.오. 산하에 강령기초소위원회, 제국주의문제소위원회, 자료실 등을 조직하고, 책임자를 결정함(아래 그림 참조).



- 씨.오.(CO)는 전국적 정치신문 발행, 강령작성, 정치사상적 지도를 임무로 하였고, 씨.티.(CT)는 정치신문의 전국적 배포망 건설, 지방위원회 건설, 양 중앙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국, 재정국, 조직국 등의 건설 등이 구체적 실천과제였음.

○ ‘제헌의회 소집론’을 선전하는 유인물 제작, 배포

- 조직성원들간에 사상적인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또 당면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986년 5월 말경 “혁명운동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와 1986년 6월 초순경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팸플릿을 제작, 배포함(팸플릿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노동가용 신문인 「노동자의 길」(1986. 12. 2회 발간)과 학생활동가용 신문인 「민족민주선언」(제6호~제13호까지 발행)을 발행, 배포함.

※ 제헌의회 그룹의 주된 활동목표였던 ‘전국적 정치신문’ 발행은 1986년 11월말 구로야학사건 수사과정에서 중앙위원 한명이 검거된 이후 계속된 조직원 대량구속으로 결국 실천되지 못함.

○ ‘제헌의회 소집론’을 선전하는 가두시위 지원

- 씨.티 산하 경인지방위원회(LT1) 학생운동지도부를 통해 민민투의 ‘제헌의회 소집 요구시위’를 지원하였는 바,
- 대표적 시위로는, 신한민주당 소속 노승환의원 사무실 점거농성(1986. 6. 23), 성남 상대원 시장 앞 ‘헌법특위 분쇄, 제헌의회 소집요구 가두시위’(1986. 7. 18), 서울대 ‘헌법특위 분쇄와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범국민실천대회’(1986. 7. 30), 성균관대 ‘헌법특위 분쇄와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전민학련 북부지역평의회 제7차 실천대회’(1986. 8. 4), 안양노동자 집회(1986. 8. 24), 영등포산 업선교회에서 개최한 서노련 집회(1986. 9. 7), 제헌의회 소집요구 신길동 가두시위(1986. 11. 13), 신민당 직선제 개헌추진 서울극장 앞 가두시위(1986. 11. 29) 등이 있음.

### 3. 제헌의회 그룹의 운동노선: 민족민주혁명론(NDR)

- 제헌의회 그룹은 과거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 그룹) 사건관련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였던 조직으로, 학림·민추위 그룹과 마찬가지로 ‘민족민주혁명론(NDR)’의 운동노선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민족민주혁명론(NDR)은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세력의 내부논쟁을 통해 운동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 한국사회 변혁이론으로, 당시의 한국사회를 제국주의와 국내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군부파쇼세력의 지배에 의해 대다수 민중이 고통을 받고 있는 체제로 인식하고(아래 인용 참조), 이러한 모순은 민족민주혁명 -기층민중들이 제국주의, 군부파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정치권력의 주인이 되는 과정- 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고 봄.

-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주인은 실제로 누구입니까? 권력의 주인인 ‘우리’는 바로 전체 민중의 피땀어린 노동의 결과물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고 있는 독점재벌과 이 독점재벌을 위해 민중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군사독재정권, 바로 이들

파쇼세력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 파쇼세력을 통해 한국 민중을 억압·착취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인 것입니다”(사건관련자 차호정의 항소이유서 중 인용).

#### 4. 제헌의회 그룹의 강령(초안)

※ 9쪽 <표 1> 제헌의회 그룹 강령초안과 현행 대한민국 헌법 비교 참조

#### IV. 제헌의회 그룹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

##### 1.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처리원칙(「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처리방안 검토보고서」 참조)

###### ○ 선(先)민주화운동관련자 구성요건 검토, 후(後)국가보안법 위반사항 평가

-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및 기본권 회복·신장에 기여하였는가를 먼저 검토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한 평가 시도.
- 즉, 권위주의 통치(항거대상), 항거행위, 피해사실, 민주화에 기여 여부 등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일반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권안보 차원에서 법률조항을 확대 해석한 것인지 여부를 재평가함.

###### ○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의 ‘현재적 관점’에서의 재평가

- 국가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태롭게 한 점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해악 경향성(bad tendency)’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 위협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 반영.
- 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의 관점에서도 국가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구성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민주화운동관련자에서 제외.

###### ○ 민주화 기여사항과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해사항의 균형성 고려

- 민주화에 기여사항과 국가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태롭게 한 사항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여부를 심사하되,
- 신청자의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민주화 기여사항 및 기타 활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심의·결정.

##### 2. 본 법 ‘민주화운동 구성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항거대상 :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목적성

< 긍정적 측면 >

###### ○ 전두환 정권

- 제헌의회 그룹 관련 유인물,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사건관련자들의 항소이유서 등에 근거할 때, 제헌의회 그룹은 군사독재정권의 퇴진 및 국민주권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1986년 개헌국면에서 “군사독재정권 타도 후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완전한 민주헌법 쟁취”를 주장한 것으로 보임.
- 제헌의회 그룹이 ‘제헌의회 소집론’을 통해 현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권력형태를 구상한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행위”로 판결하였지만, 사건관련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타도대상은 불법적으로 집권한 군사파쇼정권이었고, 자신들이 부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군사파쇼정권의 집권을 정당화시켜준 ‘5공화국 헌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 및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 하에서 부정된 국민주권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함.

- “현 국가권력측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고 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권이 권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 국가권력은 단지 일정기간동안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현 국가권력은 국민주권 원리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 땅의 민중들은 국가보안법·집시법 등에 의해, 그리고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등에 의해, 심지어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표현하는 자유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 … 이처럼 자신의 이해를 권력장악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해를 표현하는 것조차 국가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권력의 주인이라 부를 수는 결코 없는 것 …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결코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일수 없으며, 파쇼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이 민중을 억압·착취하고 있는 군사독재국가, 즉 파쇼국가인 것”,
- “1980년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군부독재정권이야말로 폭력을 통해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행위자들로서, 군부독재정권 타도 후 노동자·농민·빈민·중산층 등 다수의 민중이 주체가 되어 소수인 재벌과 군부의 편에 서있는 현재의 헌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제헌의회 소집론’이야말로 군부독재 하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국민주권 원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것”(이상 제헌의회그룹 사건 공판소식 1호, 사건관련자 차호정의 항소이유서 내용 중 인용).
- “피고인들이 조직, 가입한 제헌의회 그룹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완전한 정치적 자유의 회복, 경제적 평등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피고인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윤성구, 민병두, 강석령의 항소이유,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1987. 11. 17. 선고, 87노2852 판결」).

< 부정적 측면 >

- 이 사건 재판부는 ‘제헌의회 소집론’은 국민주권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인 현 국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체를 수립하자는 주장으로 판시한 바, 당시 재판부는 제헌의회 그룹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를 넘어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한 점(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의 현재적 관점에서의 재평가’ 부분 참조).
- “우리 헌법은 1948. 7. 17.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주권재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으로 국가형태를 정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제헌의회 소집론은 국민주권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인 현재의 국체를 폭력혁명을 통해 부정하고 민주주권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체인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수립하자는 내용이므로 이는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하는 것”(「서울고등법원 1987. 11. 19. 선고, 87노2857 판결」).

□ 항거 행위

< 긍정적 측면 >

- 제헌의회 소집론의 제기배경이 당시 전두환 정권 하에서 거의 실현되지 못한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개헌안이 아닌 민중대표가 참여하는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새 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 제헌의회 소집론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신문 제작을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한 행위, 유인물 제작·배포, 시위 지원 및 참여 등의 행위는 전두환 정권 퇴진 및 이를 뒷받침해 주었던 5공화국 헌법의 철폐, 민주헌법 제정을 통한 국민주권 회복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위 III. 제헌의회 그룹 개요 - 2. 주요 활동내용 참조).
- 제헌의회 소집론이 군사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수단으로 “민중의 무장봉기”를 설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폭력적 수단의 사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으나,
  - 당시 제헌의회 그룹은 유인물 제작·배포 및 가두시위 참여 등을 통해 제헌의회 소집론을 선전하였고, 실제 민중의 무장봉기를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봉기는 주권자로서의 저항권 행사로도 볼 수 있는 점.
- ※ 한국의 경우 헌법에 저항권이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천부적 인권”의 보호를 위해 저항권 개념을 인정하고 있음.
  -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어떠한 정부형태이든 천부적 인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훼손할 경우에는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안전과 행복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원리에 따라 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확신한다”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자연적 권리와 절대적 인권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권리라 함은 자유, 재산, 안전권과 압제에 저항하는 권리를 말한다”

< 부정적 측면 >

- 제헌의회 소집론이 군사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수단으로 “민중의 무장봉기”를 설정한 점은 비체도적 폭력 사용을 배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 민주화에 기여여부

※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의 현재적 관점에서의 재평가’ 후 종합적 판단 필요.

3.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의 ‘현재적 관점’에서의 재평가

- ‘제헌의회 소집론’의 내용 및 제헌의회 그룹의 실제 활동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인지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 ‘제헌의회 소집론’이 주장한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의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건들을 부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검토사항 1),
  - 제헌의회 그룹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검토사항 2)를 필요로 함.

□ 검토사항 1: ‘제헌의회 소집론’이 주장한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의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건들을 부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 제헌의회 그룹이 군사독재정권의 대안으로 주장했던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의 내용은,

- 강령(초안)에 따르면 “민중에 의한 자치경찰력, 독점자본 철폐 및 민족경제의 자립화,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통일논의권 및 행동권,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및 사회권, 소유권의 다양화(국영, 공영, 사영 병존)” 등이 보장되는 사회이고,
- 사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완전한 정치적 자유 보장을 통한 국민주권 실현되는 사회, 독점자본이 철폐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보장되는 사회”임.
- “우리가 주장해온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은 **완전한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는 국가**입니다. 그 정치적 자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현 정권하에서 가장 가혹하게 수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하여 농민·빈민을 포함하는 민중 자신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다음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은 **통일을 위해 전진하는 공화국**입니다. 파쇼는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말로만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뿐 미제국주의의 이해에 따라 우리 강산을 핵기자화하고 국민의 통일논의를 용공이라 매도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중공화국에서는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보장되고 민중의 힘으로 평화적 통일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민중공화국에서 **사회민주적 경제질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독점재벌의 국유화,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파업권, 단체결성권, 단체협약권 등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제헌의회그룹 사건 공판소식 3호)
- “파쇼타도와 미제축출, 전민중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보장,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의 수립이야말로 현 시기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사건관련자 김성식의 모두진술 내용)

○ 제헌의회 그룹의 강령(초안)은,

- 자유권 및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 분단극복, 전쟁중식,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아래 <표 1> 제헌의회 그룹 강령초안과 현행 대한민국 헌법 비교 참조).
- 제헌의회 그룹 강령(초안)에 있는 “독점자본의 국유화” 및 “경제의 중앙계획관리” 등의 내용을 근거로 이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건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으나,
- 강령(초안)내용 중 ‘소유권’ 부분에서 제헌의회 그룹이 사적소유권의 형태나 시장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항만으로 제헌의회 그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표 1> 제헌의회 그룹 강령초안과 현행 대한민국 헌법 비교

	제헌의회 그룹 강령(초안)	대한민국 현행 헌법
자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정당설립과 그 활동의 자유 보장</li> <li>- 민중의 혁명권(저항권)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국민 저항권의 간접적 표현</li> <li>- 8조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보장</li> <li>- 19조 양심의 자유 보장</li> <li>- 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li> </ul>
사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3권, 경영자 탄핵권, 노동자공동관리권의 보장</li> <li>-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실업보험제 등 실시</li> <li>-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권과 주택권, 생산용부동산임대권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조 근로의 권리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li> <li>- 33조 노동3권 보장</li> <li>-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사회보장·사회복지)</li> <li>- 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li> <li>- 36조 양성평등 및 국가의 보건 보호의무</li> </ul>
군사·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논의권, 통일단체 결성권, 통일단체의 행동권 보장</li> <li>-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남북한 민중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남북통일민중회의를 민중의 선거를 통해 소집</li> <li>- 군사력 감축, 군사비 축소 단행</li> <li>- 병사의 권리 확대, 민중에 의한 자치경찰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조 국가의 통일정책 추진 의무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li> <li>- 5조: 침략적 전쟁 반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li> <li>- 제66조 대통령의 의무 중 통일정책 추진 의무조항</li> </ul>
경제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자본의 국유화 : 이를 통해 민중의 경제적 향상은 물론이고 현 군부독재 체제의 물적토대를 분쇄하여 새로운 체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며 외세의 경제적 수탈로부터 민족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li> <li>- 소유권을 민중소유권, 협동 공동·집단소유권, 사적 소유권으로 세분하여 확립</li> <li>- 경제운용은 중앙계획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경영형태는 국영·공영·사영을 병존</li> <li>- 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업자의 협업화를 적극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의 강조(23조, 121조, 122조, 126조),</li> <li>-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범위(119조, 123조, 124조, 125조, 126조)</li> <li>·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li> <li>·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li> <li>- 헌재결정(1989.12.12) : “헌법은…방임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고수하지 아니함을 물론 계획적 통제경제까지도 지양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 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 등을 책임있게 추구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li> </ul>

□ 검토사항 2: 제헌의회 그룹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었는지에 대해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란 중전 대법원이 “해악경향성(bad tendency)”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국가보안법의 남용현상 및 국민기본권 침해현상을 반성하고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하여 1990년 4월 2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결정(1990. 4. 2. 89헌가113)시 새로이 제시된 기준으로서, 현재 법학계에서 체제를 비판·부정하는 사상의 표명·실천행위를 규제하는 민주주의적 기준으로 널리 수용하고 있음.
- 여기서 ‘명백’하다는 것은 표현과 해악의 발생 사이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현존’이라는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에 따른 대표적 판례로는 미연방대법원의 1927년 ‘휘트니 판결’과 1957년 ‘에이즈 판결’을 들 수 있음.
  - 1927년 ‘휘트니 판결’ : ‘공산주의 노동당’ 당원인 피고인이 폭력에 의한 정치적 변화를 옹호하는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유죄평결을 받은 것에 대한 상고심 판결로서, 다수의견은 유죄를 확정했으나 브랜다이스 대법관 및 홉스 대법관은 “우려가 되는 해악 발생이 너무도 임박하여 충분한 토론기회를 갖기 전에 그 해악이 생겨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 1957년 ‘에이즈 판결’ :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 하는 의무와 필요성을 선동·교육하고 정부 전복을 위해 미국공산당을 조직한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한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과 추상적인 원리의 선동은 구별해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론적 옹호와 선동은 직접적인 행동 개시에 대한 선동과 다르므로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강령을 지닌 공산당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제헌의회 그룹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과 현재 합법화된 정당의 강령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고자 함.
- 검찰 공소이유, 재판부 판결내용
  - **검찰**은 ‘제헌의회 소집론’을 레닌의 2단계 연속혁명론에 의거한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혁명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였고,
  - **재판부**는 ‘제헌의회 소집론’이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혁명 프로그램이라 명시하여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제헌의회 소집론’이 대한민국의 헌법 및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이를 전복시키려 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제헌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함.
  -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 현실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현 정부를 군부과소체제로서 이와 결부된 매관독점자본가와 함께 타도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끊임없는 억압으로부터 최후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중을 해방시켜줄 가장 확고한 세력으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주목하고, 그들의 헤게모니 확보를 지도하고 무장시켜 폭력적 혁명의 방법으로 반동정권 등 비민주세력을 타도하고 미제를 축출하여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하고 민중의 독재를 확립한 후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민중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프로그램을 세우고, 최민, 김철수, 김성식, 윤성구, 김명원 등은 그 실천조직으로서 제헌의회 그룹을 구성하여 그 지도적

중앙인 실천적 지도부(C.T. Central Tower)와 사상적 지도부(C.O. Central Organ)에 취임하여 각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목적은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한 후 이에 대체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기구를 설정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하였음이 분명하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헌의회 그룹의 목적, 조직과 구성원, 그 활동정도 등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3조에 해당하는 단체, 집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1987. 11. 19. 선고, 87노2857 판결, 김철수, 유강근, 이선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

- 제헌의회 소집론이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건관련자들이 안기부에 장기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강요당한 자백내용이며, 역사적, 이론적으로 “제헌의회 소집 = 사회주의 혁명”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1960년 4월혁명이 터지고 이승만이 물러나자 당시 4월혁명 이후 정권의 수임자였던 민주당과 언론 등에서 주도적으로 정치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승만 독재 하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구성된 자유당 지배하의 국회에서 새 헌법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해산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하자”(동아일보, 경향신문 사실)는 것이었음. 이처럼 제헌의회 소집의 주장은 우리 역사에서도 정치적 상황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사례가 있음. 이 시기의 주장과 제헌의회 그룹 주장의 차이는 전자는 혁명 이후에 나타난 문제로 혁명의 결과를 확보해나가는 것이었고 후자는 혁명 이전에 나타난 헌법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혁명을 준비해 나가고자 했다는 점에 있음(물론 혁명의 심도 면에 있어 4월 혁명은 반독재민주혁명이고 제헌의회그룹이 주장하는 혁명은 반제반파쇼민주혁명이라는 차이가 있음)”(『제헌의회그룹 사건기록: 민중민주주의를 향하여』, 161쪽 인용).
  - 제헌의회 그룹이 직접 제작한 유인물에서도 제헌의회 소집론에 대한 일반적 오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헌의회 소집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오해는 … 제헌의회를 소비에트 연합(노동자 평의회, 학생 평의회 등) 또는 계급대표자 의회로 보는 것 … 제헌의회란 슬로건 자체는 현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 및 새로운 국체의 형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헌법제정권의 국민에게로의 전환(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한)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혁명운동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 내용 중).
- 안기부 연행 당시 제헌의회 그룹 사건관련자들은 유인물 제작·배포 및 가두시위 참여 등을 통해 제헌의회 소집론을 선전하던 단계에 있었던 바, 당시 검찰과 재판부는 제헌의회 그룹의 ‘실제 행위’가 아닌 ‘이론적 지향 또는 구상’의 ‘해악가능성’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고,
- 제헌의회 그룹의 강령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적소유권의 제한 및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고 있는 현행 민주노동당의 강령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아래 <표 2> 제헌의회 그룹 강령초안과 민주노동당 강령 비교 참조).

<표 2> 제헌의회 그룹 강령초안과 민주노동당 강령 비교

	제헌의회 그룹 강령(초안)	민주노동당 강령
경제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권을 민중소유권, 협동 공동·집단소유권, 사회적소유권으로 세분하여 확립</li> <li>- 경제운용은 중앙계획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경영 형태는 국영·공영·사영을 병존</li> <li>- 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업자의 협업화를 적극 추진</li> <li>- 독점자본의 국유화</li> </ul> <p>: 이를 통해 민중의 경제적 향상은 물론이고 현 군부독재 체제의 물적토대를 분쇄하여 새로운 체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며 외세의 경제적 수탈로부터 민족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li> <li>-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두므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li> <li>-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li> <li>-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li> <li>-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li> <li>-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를 원칙</li> <li>-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둠.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정책위원회(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를 창설하여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 수립,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 시장 감시, 통제 역할 담당.</li> </ul>

#### 4. 민주화에 기여 여부 평가

- 이상에서 제헌의회 그룹의 ‘본 법 민주화운동 구성요건 충족여부’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의 국가안보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해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 제헌의회 그룹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여 집권의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집권기간 내내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사회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려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항거목적 하에 전두환 군사정권의 타도, 민주적 헌법 제정, 국민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주장한 점은 민주헌정질서 및 국민기본권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당시 재판부가 제헌의회 그룹을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로 판결 하였으나, 제헌의회 그룹의 주장은 독재정권 타도의 수단으로 선거라는 합의된 절차가 아닌 민중의 무장봉기를 설정했다는 점 외에는 현재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합법화된 정당의 강령과 거의 유사한 바, 이들의 주장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보기 어려우며,
  - 독재정권 타도의 수단으로 선거라는 합의된 절차가 아닌 민중의 무장봉기를 설정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제헌의회 그룹은 유인물 제작·배포 및 가두시위 참여 등을 통해 제헌의회 소

집론을 선전하였고 실제 민중의 무장봉기를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은 없었던 점, 현재의 조건과 달리 당시에는 노동자 등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 참고자료

- 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1988
- 제헌의회그룹 사건관련자 가족 위음, 『제헌의회그룹 사건기록: 민중민주주의를 향하여』, 1988
- 사상계 편집부, 『항소이유서: 80년대를 꿰뚫는 양심수 10인의 외침』, 1988
- 편집부,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 관련 판결문
  -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4부 1987. 7. 20. 선고, 87고합254, 271 병합 판결(피고인 최민, 김성식)
  -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1987. 11. 11. 선고, 87노2851 판결(최민, 김성식)
  -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3부 1987. 7. 20. 선고, 87고합270 판결(피고인 김철수, 유강근, 이선희, 한승권)
  -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1987. 11. 19. 선고, 87노2857 판결(피고인 김철수, 유강근, 이선희, 한승권)
  -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2부 1987. 7. 20. 선고, 87고합277, 269 병합 판결(피고인 윤성구, 민병두, 김찬, 강석령, 김현호)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1987. 11. 17. 선고, 87노2852 판결(피고인 윤성구, 민병두, 강석령)

### < 첨부자료 > 제헌의회 그룹 관련유인물

#### □ 혁명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일명 ‘기수’, 1986)

현재의 상황은 혁명을 예고한다. 대다수 민중이 현정권으로부터 이탈하고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증을 나타내며 각 계급들이 동요하는 상황이다.

다가올 혁명은 진정으로 민중의 결정적 승리로 끝맺을 수도 있고, 또 유산된 혁명으로 끝날 수도 있으며 혹은 결정적 승리를 위한 최후의 리허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것은 정치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전술적 슬로건의 제기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이 슬로건을 노동대중의 현실적 투쟁역량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즉 이 통일된 슬로건으로 모든 조직·그룹이 정치적 선전·선동작업을 수행하며 대중과의 결합을 강화·확대해야 한다.

즉 당면한 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력이, 다른 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력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가 문제로 되는 시기에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성·순수성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만을 강조한 경향들, 또 확고한 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주의와 정치주의의 대립과 경계를 모호하게 하려는 시도들, 선도적인 정치투쟁과 진정한 혁명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에 대중의 후진성을 열거하고 부르조아적 현실주의에 매달리는 흐름들, 그리고 또 운동의 전술적 통일과 조직의 통일이 착수되어야 할 시기에 운동의 부분성과 지역성, 지역 차원의 협소한 조직형태를 고집함으로써 전국적 차원의 정치투쟁 수행을 노동계급의 부차적인 과제로 떨어뜨리려는 온갖 변명들,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을 지도하고 투쟁을 조직할 집단적 조직가로서의 정치신문이 요구되는 시기에 노동자가 손수 만드는 신문을 강조하며, 전위조직의 질박함에 대해 노동자의 자생적 조직의 완만한 성장을 대치시키고, 명확한 정치적 과제설정(명확한 정치노선)이 요구되는 마당에 조직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의 초점을 흐려버리는 일체의 타성들 ... 바로 이 모든 경향들에 대해 혁명적 전위들은 어떻게 분명한 분리의 선을 그으며 대중을 지도할 정확한 전술적 슬로건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두 경향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고자 한다.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바와 같은 혁명이론에 대한 현학적인 논쟁, 혁명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사변적·관조적 연구에 몰두하여 실천의 길을 미루는 모든 소심함, 혁명에 대한 회의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역량에 대한 불신을 조롱하면서 우리는 말로써가 아닌 실제적인 전술의 통일, 형태주의적·추수주의적 대중의 조직화와 조직의 통일이 아닌 투쟁 속에서의 진정한 조직의 통일을 위해 한국의 혁명가가 수행해야 할 긴급하고도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당면 혁명투쟁의 슬로건은 「제헌의회 소집」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개헌은 모든 계급에게 있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 군사파쇼정권도 「지금까지대로 지배하고 통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위기를 감지하고 그러나 애써 태연한 모습으로 전두환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건의하면 내 재임 기간 중에 개헌하는데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훈계조의 거드름을 피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개헌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자신들이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관해 좀더 확실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어리석게 허둥대는 이들의 태도는 혁명적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준비하면서 쿠데타란 말로 보수진영을 단속하고 뽀띠부르조아지들이 혁명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신민당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는 개헌에 정치적 승부를 건다. 그들도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민중혁명이 일어난다」고 군사독재정권을 위협하고 미국에 책봉청원서를 띄운다. 그러나 부르조아지는 군사독재의 타도를 전면내 내걸지 않으며 개헌(평화적인 협상으로?)-현정권의 자진퇴진-과도정부-대통령선거라는 애매모호한 과정을 제시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선제 개헌」이 관철된다면 정권과도 타협을 모색하고 현재의 강도적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개헌을 마무리 짓고자도 한다. 현 정권은 과연 자진퇴진할 것인가? 직선제만 되면 민주주의가 보장되는가? 그리고 과도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과도정부는 민중에게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혁명세력에게 선전·선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잔존한 반동군부세력의 쿠데타 기도를 봉쇄할 수 있는가? 부르조아지들은 여기에 대해 상투적인 자유민주주의, 무의미한 대통령 선거방식, 개헌시기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먼저 현정권의 자진퇴진에 대해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들은 바로 민중의 혁명적 열기를 정권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미국의 개입을 결정타로 삼아 그야말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인 협상을 진행할 뿐이다. 결국 그들은 민중을 또 다시 권력의 구경꾼으로 남아있게 하면서, 개헌을 혁명을 방지하고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만 국한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혁명의 진전 앞에서, 혁명세력의 성장 앞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들은 현재의 정

치적 위기가 결코 부분적인 것이 아닌, 토대로부터의 위기임을 감지하자 더욱더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우려되는 군사쿠데타에 대비하여 「총파업 철시로 맞서자」는 국민 행동현장을 외치고 구미에 맞는 떡을 입에 넣기 전까지는 실속 없는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고개를 흔들며, 혁명세력이 들이대는 샷대질을 애써 감추고 군사독재정권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한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지도되는 민중은 「개헌」이 아니라 「제헌」을 요구한다. 민중은 모든 빈곤·굴종·소외·모욕을 단호히 거부하며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외친다.** 「혁명이나 개헌이나」라고 울부짖으며 다급하게 대타협을 외치는 개량주의적 부르조아지 신문의 물음에 대해 민중들은 혁명을 원하고 있음을, 또 현재의 싸움이 무승부란 있을 수 없는 전면적 결전임을 분명히 선언했다.

이것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며 제헌투쟁이 긴급한 정치적 문제로 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헌투쟁을 긴급한 정치적 문제로 포착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개헌이 이미 정치적 관심사가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만은 아니다. 헌법문제란 바로 정치권력과 주권의 소재를 포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핵심적 사항이라는 점, 또 계급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노정되면서 정치권력의 쟁탈을 둘러싼 투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제헌의회소집투쟁은 민중권력의 수립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헌법의 쟁취와 또 그것을 개량이 아닌 혁명의 방식으로 획득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또 혁명의 승리를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행동을 통일시키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경로이다. 즉 현재 노동계급과 그의 지도에 따르는 피억압민중의 전술적 슬로건은 「제헌의회 소집」이다.

그런데 속물주의자는 지배계급 내부의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외친다. 즉 당면의 정치투쟁에 거리를 두면서 부르조아지들이 제기하고 있지 않은,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마구 떠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독자성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독자성을 그들의 지워버릴 수 없는 혁명성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동요하는 뿌리부르조아지에 대한 지도를 실천적 과제로 포착한다. 즉 「부르조아적인 것으로 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력을 둘러싼 당면투쟁에 있어서 정권의 반동성과 기회주의적 부르조아지들과의 개량성과 금을 긋는 혁명적인 정치적 태도를 견지하고 제민중을 자신의 혁명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성취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할 때 당면의 정치투쟁 속에서 전략의 구체화로서의 올바른 전술적 슬로건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정치투쟁에 있어서 전술적 슬로건이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당면명의 정치적 과제와 조직적 과제를 통일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깃발이다. 즉 통일적 슬로건으로 정치적 선전·선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 사회체제로부터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이런저런 제 문제들에 대한 잡다한 고발이 아니라 그러한 계기들에 통일적인 정치적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행동을 결집하고 나아가 민중의 정치적 행동을 지도·통일해 나가는 작업을 말한다.

자! 그러면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란 무엇인가?

새로운 상황이란 광범한 민중의 현정권으로부터의 이탈과 지배계급의 동요로 집약되는 혁명적 정세의 예고이다.

새로운 문제란 헌법을 바꾸는 그 자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완전한 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전 민중적 주권의 행사방식의 문제이다.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조건의 문제이다. 즉 민중이 이미 정부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새로운 헌법제정의 필요성이 대중들에게 의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로서 그것은 「제헌의회 소집」이다.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당면투쟁의 전술적 슬로건은 「제헌의회 소집」이다. 「제헌의회 소집」은 반동적 군사정권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투쟁선언이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주화 선언이며 현재 국회 등을 매개로 한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들의 추잡한 타협과 개량적 음모에 대한 폭로이다. 또 지금까지 무수히 남발된 구호로서가 아니라 현재 분산되어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한 슬로건, 농민을 비롯한 여타 계급을 지도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술적 슬로건이다. 제헌의회는 「개헌」이 아니라 「제헌」임을 분명히 하면서 반동적 정권의 「헌정중단」을, 즉 혁명을 웅변하며 전 민중이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주권의 소유자임을 대변한다.

이러한 슬로건 아래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정치과업·투쟁·시위를 선동·조직화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신문은 당면의 전술적 과제를 분명히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선전·선동해야 한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무기를 주요수단으로 하여 학생들의 플래카드에, 농민의 만장과 소뿔에, 철거민의 유인물에 「제헌의회 소집이 나붙도록 하며, 이들의 혁명적 투쟁을 과상적으로 발발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 슬로건이 지닌 혁명적 의미를 각 계급들에게 분명히 선동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것이 혁명의 승리를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경로이다.

## 2. 임시정부의 제기

그러나 「제헌의회 소집」이라는 슬로건을 명확히 하고 당면의 투쟁문제에 대해 완전히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헌의회는 어떻게 그 소집이 보장될 수 있는가? 또 제헌의회 소집투쟁은 우리의 혁명적 정치일정에 있어 어떻게 위치지워지는가? 혹은 부르조아지들도 제헌의회 소집을 인정하고 또다시 그것으로 현정권과 흥정을 벌이지는 않을까?

제헌의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소집되어서 실제적 권력을 부여받고 진정으로 민중의 의지를 대변하는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집하고 당면한 혁명의 최소강령을 수행하며 일체의 반혁명적 기도를 봉쇄하는 임시혁명정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타도되어야 할 현정권에 대체될 새로운 권력, 신민당의 부르조아지들이 제시한 애매한 과도정부가 아닌, 진실로 혁명의 진전 속에서 대중의 정치적 조직화를 가능하게 할 대체정권으로서의 임시혁명정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우리의 혁명의 경로는 제헌의회 소집투쟁, 무봉의 조직화로서 임시혁명정부 수립과 민중독재의 확립-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민주주의민중공화국 수립이 될 것이다. 제헌의회는 전 계급의 완전한 참여로 구성되지만 이를 보장하고 반혁명을 격퇴해야 할(반동적 군사독재정권과 미·일제국주의자와의 무장투쟁) 임시혁명정부는 민중의 무장봉기의 기관이며 기회주의적 부르조아지들을 배제한 혁명적 민중의 민주주의적 독재에 의해서만 결정적 승리를 획득한다.

이러한 혁명의 경로 속에서 당면의 제헌의회 소집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며, 프롤레타리아트적 투쟁수단으로 이를 지도해 나갈 때 우리는 바로 민중적 제헌의 필수적 제 조건, 즉 무장봉기를 통한 임시혁명정부의 수립을 준비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군대 내부의 공작 특히 혁명적 상황 속에서 ‘군복 및 전경복’을 입은 노동자·농민·학생들이 적의 반혁명 기도에 실제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지금 그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정치적·계급적 의식을 각성시켜야 한다.

### 3.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민중의 지도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제, 여타 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에 관해

지금까지 부분운동적 시각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오류는 각 계급의 운동을 독자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운동으로 고정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가령 농민운동은 농민대중의 경제적 이해를, 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이해를, 학생운동은 급진적 관념을 유포하는 인텔리운동의 이해를, 빈민운동은 철거투쟁이라는 좁은 이슈의 운동으로 국한되었다. 심지어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이같은 부분운동적 시각은 여전히 강한 뿌리를 갖고 있다. 엄밀히 말해 부분운동으로부터 각 집단의 운동은 부르조아 사회의 다원주의적·개량주의적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운동이라는 것이 마치 프롤레타리아트의 새로운 발명품이라도 되는 듯이 풍미하고 있다. 부르조아지가 그들의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통치방식은 다름아닌 분할통치방식이다.

즉 모든 계급으로 하여금 계급 상호간의 관련, 부르조아지에 대한 이들 계급의 공통의 이해,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이들 계급의 통일이란 문제에 대한 의식을 잠재움으로써 지배계급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고하게 다져왔다. 지금까지 우리의 운동론은 이같은 다원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각 계급 혹은 각 집단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왔다. 즉 농민운동론, 여성운동론, 빈민운동론, 학생운동론, 노동운동론 등, 혁명의 승리를 위한 통일적 혁명이론이 아닌 각 계급의 분리와 개량주의적 이해를 고정시키고 대립시키는 부분운동론이 혁명운동을 대신하여 그 기득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귀결은 애매한 「연대」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즉 현재의 정치·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혁명의 성격과 방향 그리고 그 속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성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적 조정과 절충의 표현인 연대만이 문제로 되었다. 또한 그것은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양극단, 즉 노동운동의 독자성과 우위론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여타의 계급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력이 아닌 여타 계급과 구분되는 노동운동의 독자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노동자적이라는 소아병적 순수주의가 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적 임무를 망각하게 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성이란 프롤레타리아트가 뿌띠부르조아지 계급의 기회주의적 동요로부터 그들을 확고하게 지도하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의 실제적 실현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의 정치적 과제 속에서 여타 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술적 지도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농민운동은 농산물 수입·농산물 가격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의 빈민운동은 86·88로 인한 철거반대투쟁에만 주력하고 있다. 현재의 여성운동이란 개헌의 문제를 가족법의 개정을 통해 본다. 현재의 학생운동은 확고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가 부재한 가운데 관념적 혼란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범위한 도시민중(도시 뿌띠부르조아지)들은 일정한 구심체 없이 현정권에 대한 반발을 부르조아지들의 형식주의적 민주주의 속에 가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하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군사독재 타도와 제헌의회 소집 슬로건 아래 여타 계급들을 통일해야 한다.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정치파업·소싸움·철시·맹휴 등 각 계급의 특수한 투쟁양식을 통해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 각 계급의 투쟁양식은 다를지라도 그들은 현재의 민주주의 혁명에서 가장 선진적인 슬로건 아래 행동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각 계급의 지도그룹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역량의 대부분을 집중시켜온 개량주의적 요구투쟁에서 하루빨리 전면적 정치투쟁으로 전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만이 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성을 실현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혁명의 선진투사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을 새롭게 내거는 것이다.

#### 4. 불철저한 부르조아지와의 투쟁에 대해

부르조아지는 혁명이 아닌 개량을 원한다. 부르조아지의 이러한 불철저성은 전반적인 민주화운동의 모든 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부르조아지의 불철저성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혁명성·철저성을 왜곡하고 그 의식을 호도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혁명에서 불철저한 부르조아지에 대한 폭로 및 투쟁은 중요한 과제이다. 신민당을 통해 그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그 입장을 나타내는 부르조아지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몇가지 점에서 그 계급적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 ① 먼저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정치일정에 대해

86년 개헌-선거관리내각구성-대통령선거로 정리된다. 우선 그들은 개헌청원서명운동을 기반으로 12대 국회에서 민정당과의 타협 아래 개헌을 흥정하려 한다. 그들의 상거래가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광주학살과 계엄령 하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과 현행 정치구조 안에서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라는 민중적 요구를 굴절시킴으로써 스스로 학살정권과 한 무리가 되려함을 우리는 폭로해야 한다.

당연히 신민당은 「12대 국회의 해산과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학생과 민중의 열기는 사실상 현행 정치구조의 부정을 위해서였음을, 이러한 의지를 신민당이 자의적으로 왜곡하지 못하도록 폭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 ② 헌법제정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

신민당은 비폭력주의를 들고 나온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때리면 맞고 가두면 들어가고 연금하면 집에 앉아 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이 다수에 민중에 대해 가하는 폭력과 혁명세력이 한 줌의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을 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이도 말한다. 「폭력은 그들의 장점이고 우리의 약점이다. ... 돌을 던지지 말고 화염병을 던지지 말고 무자비하게 가해온 그들의 폭력 앞에 아무리 분하더라도 비폭력으로 일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80년 5월의 광주학살을 경험한, 그리고 스스로의 무장에 의해 그들에 맞선 민중항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온 정치가가 대중에게 속삭이는 말이다. 그들은 진경의 최루탄에 맞서 던지는 학생들의 화염병과 노동자·빈민의 돌을 광주에서 저들이 보인 무자비한 학살과 동일하게 비난한다. 그들은 광주항쟁에 총을 들었기 때문에 80년의 민주화운동을 망쳐놓은 것이라고 비난이라도 할 참인가. 아니면 아직도 독재권력의 민중에 대한 폭력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증명이라도 하려는가. 이상은 바로 민중의 혁명성을 사전에 거세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혁명이 아닌 개량의 수준에 묶어두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또한 동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어도 민중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소위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에 대한 대응이 그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를 때 신민당의 이러한 주장은 현정권과의 타협에서 자신들은 가능한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민중에게는 최소한의 권력조차 주지 않기 위해 군사정권의 폭력 앞에 맨손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민중의 피를 무제한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민중이 자신을 방어할 최소한의 무기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야말로 전형적인 지배자의 논리이다.

##### ③ 군부에 대하여

국군의 정치적 중립화만 외치면서 실제로 군부가 무슨 짓을 해 왔으며 또 실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광주에서 저지른 군의 만행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정치적 중립화를 외치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해주기라도 할 듯이 대중을 기만한다. 그 의도를 폭로하자. 이것은 바로 현재의 반동적 군부에 보낸 추파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반동적 군부의 실제적인 고립화 및 해체, 나아가서는 민중의 편에 서게 하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군부를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독재의 사병화한 군인에 대한 대중의 의식 각성, 군에 대한 사실상의 저항, 군부의 와해를 유도하는 것이다. 군부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성스러운 발언」들이 그들의 기회주의적, 굴종주의적 자세에서 연유함을 여지없이 폭로하자.

#### ④ 이데올로기와 미국에 대하여

「국민의 절대다수가 현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이지 공산주의를 지지해서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대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까지도 민중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다. 수많은 민주화의 시도들이, 사회경제적 개혁을 요구한 대중의 소리들이 「공산주의」라는 죄목으로 무수히 탄압받아온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이데올로기의 자유를 주장해야 할 시점에서 그들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흑백논리를 되풀이할 따름이다. 그들 역시 민중들의 이데올로기적 자유를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들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말만 반복하면서 정작 서구와 달리 한국의 확일적인 이데올로기 주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현실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부르조아지의 협애한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데올로기의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 부르조아지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국민의 다수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비판은 하지만 미국을 영원한 적으로 돌리는 반미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는 비판과 반미는 다르다는 궤변을 만들어냈다. 이런 궤변에 익숙하지 않은 「보통사람들」을 위해 「번역」하자면, 이 말은 「미국이 우리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의 유능함을 몰라주면 불평과 투정을 부리는 하겠지만, 민중이 제국주의 미국에 대해 싸우는 것은 적극 지지하겠다」는 말이다.

구태여 과거 분단과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미제는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전두환 집단의 광주학살을 지원하였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민주주의 혁명의 길을 침범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니, 그들은 도대체 우리 민중을 간도 쓸개도 없는 바보로 만들려는 것인가?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지도되는 혁명적 민중은 오히려 제국주의 미국과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성을 감지하고 있으며 또 말만의 비판은 무기에 의한 비판을 대신할 수 없음도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면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들이 이렇듯 현실을 왜곡하고 제국주의 미국의 반혁명성을 은폐하며 그들과의 투쟁을 「불평이나 투정」에 제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들은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장악을, 따라서 허구적·일시적 민주화를 원하며 미국이 그들을 한반도의 다음 지배자로 「책봉」해주기를 구걸하고자 할 뿐이다. 그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반민주(반혁명)적 본질을 폭로·비판하여 「비위」를 건드리기보다는 민중의 성장하는 반제국주의적 각성을 빌미로 삼아 미제국주의와 독재군부를 이간질시켜 자신들의 정권장악에 이용하려는 것이고, 민중에 의한 철저한 민주주의혁명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의 민중기만적·기회주의적 성격을 폭로하여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가 두려워할 철저한 민주주의 혁명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가(일명 '진군', 1986)

- 80년 5월 미제와 반동군부의 무자비한 총칼에 짓밟혔던 노동대중이 혁명적 원기를 되찾기 시작할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 우리는 80년의 정치적 위기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자발적 계급투쟁의 전례없는 격화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러한 총체적 상황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정치적 각성에 기여했음을 익히 잘 알고 있다.
- 미일 제국주의에 예속된 반동적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및 민중간의 계급대립의 비화해성의 산물인 현 파쇼국가는 국가의 본질상 계급투쟁의 격화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반동적 국가기구의 분쇄를 위한 투쟁 없이 폭압적이고 관료적인 군사기구를 쳐부수는 투쟁없이 또 그것을 억압자에 대한 억압을 위해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한 새로운 국가로 대체함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중은 아무것도(획득된 양보조차도 곧 탈취되고 만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보다 고도화된 반동적 국가기구의 완성으로 매진해온 남한의 지배권력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 혁명이란 새로운 계급이 구 국가기구의 도움을 빌어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낡은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새로운 국가기구의 도움을 빌어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혁명의 본질적 문제는 봉기를 통하여 낡은 국가기구를 완전히 분쇄하고 프롤레타리아트를 필두로 한 피억압 민중이 정치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 즉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아니다.
- 그 본질상 폭압적인 군사기구에 지나지 않는 현 지배체제가 외면상 “민주공화제”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극도의 이데올로기적 탄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진군이 가로막히고 있다.
- 피억압 계급으로 하여금 현재 자신들의 모든 굴욕, 빈곤, 소외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폭력에 의한 반동적 국가기구의 완전한 분쇄를 전제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주의, 정치주의의 뿌리이다.
- 혁명적 선전, 선동을 포기하고 개량적 선전, 선동만을 외치는 것은 스스로가 피티의 전위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피티의 혁명적 진군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장본인이다.

O1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Bereaved Families for Democracy)

O2

유가협, EUGAHYUP

O3

O4

O5

1986.8.12~

O6

O7

공개 / 합법

O8

본회-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본회의 의결기구는 총회, 중앙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집행기구로는 총무와 사무국이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장, 지회장, 총무,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회에서 선임한 선출직위원 4인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사무국 산하에 교육선전부, 연대사업부, 정책부가 있다(www.ugh.or.kr).

O9

오늘 우리는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식, 남편, 형제를 잃고 창자를 끊는 듯한 슬픔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우리 유가족들은 지금 이 모든 아픔을 딛고 고인들이 썼던 민주주의 가시관을 받아쓰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지난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이라 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다 스스로 혹은 권력에 의해 민주제단에 희생이 된 고인들의 죽음을 계기로 이 시대의 참담함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고인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목말라 외치던 바를 살아 있는 가족들이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그들의 원혼을 위무해 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8.15해방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 민권운동은 4.19혁명이래 광주항쟁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그야말로 험곡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굳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명한 이땅의 민중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너무도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할 민중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마땅히 획득해야 할 권리를 유보당하고 착취당한 채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조차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위에 진정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할지를 생각하면 우리 유가족들은 심장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슬픔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들은 이 슬픔과 분노를 압제에 저항하는 용기로 승화시키면서 고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던져 고발했던 이 사회의 모든 모순의 극복을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었지만 불굴의 자주혼은 이 땅의 통일과 진정한 민주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파고들어 요원의 불을 사르는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는 민중의 합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

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처럼 고양된 민주화 열기를 결집시켜 독재의 아성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한데 뭉쳐질 때 민주화를 저지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여지없이 분쇄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그리도 목매어 외치던 민족통일과 민중이 주인 되는 새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바입니다(www.ugh.or.kr).

O10

<유가협>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하다 스스로 혹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민주열사의 유가족들이 유가족의 단결로서 자주, 민주, 통일의 구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그 목적으로 1986년 8월 12일 서울 전태일 기념관에서 창립한 단체이다(www.ugh.or.kr; 월간 말 제8호, 1986.9.30, p20).

O11

<유가협>은 규약을 통해 주요활동을 (1) 민족민주열사를 비롯하여 외세와 독재에 의해 죽어간 이들의 뜻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과 명예회복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3) 회원의 조직, 교육사업 (4)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문제의 해결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반사업 (5) 자료의 수집, 회지 및 자료집 발간 사업 (6) 민족민주세력과의 연대 및 지원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등으로 상정(www.ugh.or.kr)하고 있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O12

이소선(1-4기 회장), 조인식(1기 총무), 박정기(5-6, 10-11기 회장), 배은심(12-13기 회장), 강민조(8기 회장) (www.ugh.or.kr),

O13

O14

<유가협>홈페이지 www.ugh.or.kr

월간 『말』 제8호, 1986.9.30

O1

동일기업노동조합

O2

동일기업노조

O3

O4

O5

1986.8.16~1986.9.6

O6

서울 구로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동일기업사(사장 박태호)는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기아봉고, 대우멤시 등 대소형 승용차 의자를 제작·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당시 임금은 평균일당 5천원선으로 체불이 심하고, 상여금은 연 100%에 불과했다. 임금인상 기준도 당해 7월 새로 입사한 용접공이 하루 5천7백원을 받는 반면, 1984년 7월에 입사한 용접공은 4천8백원을 받고 있었다. 동일기업노동자들은 1986년 4월 초, 노조결성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7월 9, 10일 비밀노조형태로 예비위원장, 예비사무장, 현장 각 반별대표자, 교육, 홍보부 등의 체계를 갖추고 노조결성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8월 16일 33명이 모여 연합노련 산하 노조결성식을 갖고 조합장에 조병삼(당시 25세)씨를 선출했다. 하지만 구로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고, 안기부, 경찰, 회사 등이 탄압을 가해와 노조결성은 일단 좌절되었다. 이어 노조는 8월 18일 구로구청에 노조결성신고를 마치고, 19일 오후 5시 30분쯤 잔업을 거부하며 50-60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결성보고대회를 가졌다. 보고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면서 체불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잔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갖기로 결의하고 해산했다(말 제9호 1986.12.31, pp.42-43).

O11

20일 점심시간에는 40여명의 노동자가 체불임금항의 및 불만토론을 위한 집회를 가졌고, 저녁에는 30여명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에 굴복해 회사측은 저녁 9시경 체불임금을 지불했는데, 여기에 힘입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70여명을 넘어섰다. 21일 점심시간에는 소형반, 대형반이, 저녁에는 용접A반이 집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노조는 단체교섭요구서를 발송했음을 알리고 노조결성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오후부터 회사와 경찰의 탄압이 노골화되어 회사밖에 형사 12명이 포진, 문호진씨와 정승호씨를 연행하려 하고 노조간부들을 미행했다. 또 사장은 노조결성식에 참여한 백오인씨를 직위해제하겠다고 협박했다. 22일 점심시간에는 50-60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백오인 반장 복귀요구 및 경찰개입폭로대회를 가졌고, 회사는 이에 굴복, 백오인 반장을 복귀시키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했으나 23일 단체교섭을 노조가 신고필증을 받은 이후로 미룬다고 통보하고 노조변절자, 주임, 반장으로 구사위원회를 조직하려고 노조원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26일 조병삼 위원장이 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위해 구로구청에서 담당관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안기부 직원은 위원장에게 “노조해산, 아니면 아시안게임 이후에 만들라”는 압력을 가했다. 30일 노조핵심인물 8명이 구

로구청에서 약 4시간 동안 신고필증 지연에 항의하고 있는 사이 회사내에서는 사장과 치안본부가 주동이 되어 “외부불순단체와 노조가 연결되었다”는 악선전을 하고 다녔다. 이에 지역노동자, 학생 3백여명은 9월 2일 오후 7시 50분쯤 구로구 독산동 고개와 코카콜라 공장 앞에서 “동일기업노조, 연대투쟁으로 쟁취하자”, “군부독재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30여분간 가두시위를 벌였고 이날 시위로 67명이 연행돼 19명이 구속되었다. 결국 9월 6일 점심시간에 구로구청직원 5명이 와서 회사측이 낸 노조설립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며 노골적으로 노조과파활동을 했다. 이러한 관과 회사의 탄압으로 노조는 오후 6시쯤 조합원총회를 열고 자진해산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회사의 탄압은 계속되어 사측은 10월 6일 전조합장 조병삼씨를 광주출장소로 전보발령했고, 이에 전노조조직부장 문재환씨 등 4명은 10월 14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회사사장실을 점거하고 “노조쟁취”,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말 제9호 1986.12.31, pp.42-43).

O12

조병삼(위원장), 문재환(조직부장), 문호진, 정승호, 백오인

O13

O14

『말』 제9호 1986.12.31, pp.42-43

O1

서울시 20개 재개발지역 주민연합

O2

주민연합

O3

O4

O5

1986.9.4-

O6

서울

O7

합법

O8

O9

O10

1986년 9월 4일 오후 6시 <천주교·개신교 재개발지역 공동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철거민을 위한 기도회’에서 결성된 단체로 공동결의문을 통해 “투기철거는 철거지역 연대로 저지한다”라는 방침을 천명하고, 앞으로 각 지역의 철거투쟁사례를 교환하고 공통된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연대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말』 제9호 1986.12.31, p55).

O11

O12

O13

O14

『말』 제9호 1986.12.31

O1

고려대 <애국학생회>

O2

애학회

O3

O4

O5

1986.9.8~12.

O6

서울

O7

비공개 / 비합법

O8

<애학회>는 규약 4장 8조, 9조의 조항에 입각하여 최고 지도기구인 총회와 5개 지역위원회(政大, 文大, 서클연합, 法·師·經大, 이·공·농대)를 두었다. 각 지역에서는 동원책과 선전책이 따로 임명되어 중앙투쟁부, 선전부와 직접적 관계를 맺었고, 직접적으로 외화되는 투쟁체계로 <민민투>(→자민투: 연구팀)를 결성하고 기관지 『애국학도』를 발간했다. <민민투>(→자민투: 연구팀)가 <애학회>의 직접적 외화체였다면, 총학생회는 외곽 조직으로서 <애학회>의 정책과 노선을 대중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체계였다. 기존의 각 서클별로 확보되어 있던 다른 대학과의 연대선과 노동현장과의 관계도 대외사업부와 민중투쟁연대사업부 속에 통일시켜 대외사업부를 통한 전국적 학생연합 투쟁조직 건설과 고대가 속한 동부지구 11개 대학과의 연대사업이 진행되었다(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80~87)』, 형성사, 1988, pp.226-227. p227 <표2>참조).

O9

행동강령

1. 식민지 군사파쇼체제를 타도하고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3. 자주민주적 교육을 실현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한다.
4. 민중의 생존권 확보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한다.
5.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한다(위의 책, p225).

O10

고대에서는 1984년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기존의 소그룹적·비합적 운동관성이 대중들을 철저히 대상화시키며 왜곡된 전위주의, 배타적 서클주의의 편향이 비판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위 ‘시스템’운동이 제기되었다.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 운동세력들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당면의 공동투쟁을 풀어 나가기 위한 체계였다. 그래서 9개 단과대학과 서클연합회를 그 현실 역량에 따라 5개의 섹트(sect)로 나누고, 섹트의 대표자로 투쟁지도부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후 <애학회>의 전형이 되었다(위의 책, pp.210-212, p212 <표1>참조). 1985년 들어서면서 <전학련>-<삼민투>가 결성되고 대부분의 투쟁이 대학간 연합투쟁으로 진행되던 시점 속에서 각 대학의 논의사항이 충분히 상부 연합체계로 수렴되지 못하는 가운데 <삼민투>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사항이 대학간 연락책에 의해 획일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이러한 조직상의 문제점들로부터 파생된 각 서클간의 감정적 대립은 이 시기

각 서클별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논리적 제문제들과 결부되어 급기야는 하나의 실천단위인 시스템이 2개로 분리(<전학련>-<삼민투>주도 그룹과 <삼민운동실천투쟁위원회>)되고 이후 각기 서로 다른 체계와 논리속에서 실천을 행하는 1985년 하반기에서 1986년 상반기 1년여의 분리실천 기간이 시작된다(위의 책, pp213-214). 그러나 1985년 11월의 총학생회 선거에서 양 그룹이 단일후보를 당선시킨 것을 계기로 1986년 들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반제민중민주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 당시에 처음 반제론을 제기했던 그룹은 방학중 논리의 세련화를 거치면서 자신의 이념을 AIPDR론으로 정립해 나갔다. 이 그룹은 고대 학생운동 내에서 다수파를 점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념을 투쟁위원회의 명칭에 그대로 외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4월말 들어서면서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합>(전민학련)결성을 위한 논의가 고대내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조직노선상의 문제가 다시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고대통합시스템의 투쟁지도부는 <전민학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을 요구하면서 <전민학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전민학련>은 고대와 서울대 <자민투>의 참가를 거부하고 상층지도부로부터 수립해 놓은 투쟁지도체계에 다를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1년여에 걸친 고대에서의 종파적 대립기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내적 요구가 심화되어 갔다. 비합법신문을 통하여 활동가들 내부에 새로운 문제제기와 그 극복대안을 제시하고 이는 개별적 의기투합에서 체계적인 조직건설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고대 반종파 투쟁은 서클해체, 시스템강화, 지역위원회 건설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논의의 결과물로 1986년 9월 8일 공대건물의 한 설계실에서 <애국학생회>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위의 책, pp.215-223).

<애학회>가 표방한 조직노선은 소위 '혁명적 대중조직'(RMO)노선이다. 이는 대중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된 인자(정수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조직으로, 자발적인 대중투쟁을 목적의식적인 혁명의 과정으로 이끌기 위한 전위적 지도를 행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클운동의 폐해가 뿌리깊이 잠식되어 있는 가운데 1개월 여의 반종파 사상운동과 뒤이은 형식적 조직들의 건설이, 본래 목적했던 바 회원의 자주성에 의해 지탱되고 대중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나타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O11

<애학회>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조직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조합주의적 오류였다. 조직사상적으로 검열된 정수분자들이 부재하다는 점과 조직의 튼튼한 밑받침이 될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그 건설에 있어서 조합주의적 오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애학회>의 건설과정상의 오류와 자체 한계를 극명하게 표출시킨 계기는 10.28 건국대사태와 그 직후 벌어진 정보기관에 의한 본격적인 조직 수사과정이었다. 건국대사태 이후 회원들이 보여준 패배적이고 투항적인 모습은 대중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받지 못한 '말뿐인 정수분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공대 지역에 행해진 정보기관의 조직수사는 한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거의 마비상태에 놓이게 했다. 이 시점에서 <애학회>중앙위원회는 <애학회>를 대중 앞에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이미 조직의 실체가 정보기관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모적 조직 보존방식으로는 더 이상 <애학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애학회>를 공개하여 대중적 힘으로 보호받고 복구해 낸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5대 사수 비밀인 회의 명칭, 선언문, 강령, 규약, 생활수칙이 대자보와 기관지를 통해 공개되고, 대중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애학회>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이 때 소위 '미공개 학생회'(후에 <총학생회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최초의 방향제시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회>의 공개를 통해 대중투쟁으로 <회>를 복구해내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건국대사태 이후 방학이라는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대중투쟁은 급격한 침체국면을 맞게 되고, 고대내 조직노선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애학회

> 중앙위원회는 한편으로 ‘미공개 학생회’건설에 매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애학회>의 조직노선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내리고 추후 <애학회>의 방향성에 대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질의하게 된다. 여기에서 회원들 60퍼센트 이상이 <애학회>의 ‘혁명적 해소’에 찬성함으로써 <애학회>는 창립 4개월만에 자기해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위의 책, pp.229-231).

O12

O13

총학생회 활성화 추진위원회

O14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80~87)』, 형성사, 1988

O1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O2

공민협

O3

O4

O5

1986.9.13~?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6년 9월 13일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공민협>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안고 있는 한반도의 공해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그러나 국민의 의식을 올바르게 반영치 않는 당국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해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민중이 시민운동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말』 제9호 1986.12.31, p69).

O11

<공민협>은 주로 주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공해강좌를 열고 회지 『공해와 생존』을 발간하는 활동을 했다. 198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1회로 홍제동 천주교회에서 주부공해강좌를 열었고, 10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선교교육원에서 청년공해강좌를 개최했다. 또한 11월 6일 회지 『공해와 생존』을 창간했다(『말』 제9호 1986.12.31, p69).

O12

O13

O14

『말』 제9호 1986.12.31

O1

연세대 <반미구국학생동맹>

O2

구학동

O3

O4

O5

1986.9.15~1986.12.

O6

서울

O7

비공개 / 비합법

O8

최고지도기관인 전대회 산하에 전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회가 있고, 중앙위원회 산하에 각 지역위원회(1지역: 상대·사회대·법대, 2지역: 문과대, 3지역: 이과대·공대, 4지역: 서클연합)를 두고 있다.

O9

1. 미제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분쇄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 미·일 제국주의자의 모든 침략을 분쇄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3. 군부파쇼체제를 타도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4. 모든 식민지 반봉건적 민중착취에 반대하고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5. 진보적이고 민족자주적인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6. 민중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한다.
7.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8. 모든 형태의 침략적 전쟁에 반대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옹호를 위하여 투쟁한다(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80~87)』, 형성사, 1988, p235).

O10

연세대의 NL수용은 서울대나 고려대처럼 내부로부터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1986년 1학기 중 다른 대학의 NL세력과의 접촉이나 다른 대학의 NL세력이 수행한 투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되어 NL을 수용한 측면이 강했다. 1986년 1학기 중 조직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전체세력의 소수만을 점하고 있었던 NL세력에게는 NL의 전파와 투쟁을 통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무기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노력은 각 대학교로 하여금 점차로 NL에 대한 공명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세대 내에도 1986년 1학기말 NL세력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 출발은 <민민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연세대의 한 학생운동가가 NL에 공명하면서 <민민투>를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NDR론을 지도노선으로 하여 좌·우경적 투쟁을 벌여왔다고 지적하며, 둘째로는 음모적인 조직건설을 통하여 관료주의적인 조직운동을 일삼아온 비민주성이 노정되었다는 점, 셋째로는 실질적으로 탄압에 의하여 조직의 대부분이 와해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민민투>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당시 연대 내부에 급속히 전파된 새로운 변혁이념으로서의 NLPDR은 곧바로 새로운 학생운동조직의 건설문제를 제기했다. 연세대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 새로운

학생운동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1986년 8월 초순 <조직건설준비위원회>(이하 <조준위>)를 결성한다. <조준위>는 정치노선은 NLPDR로, 조직노선은 RMO(혁명적 대중조직)를 채택하고, 이러한 조직의 위상 속에서 <구학동>의 직접적인 모체가 되는 <확대조직준비건설위원회>를 결성했다. <확대조직준비건설위원회>에서 강령과 규약이 통과됨에 따라 9월 15일 신학대 신학과 학회실에서 <구학동> 전대회가 개최되었다(앞의 책, pp.232-240).

O11

연세대 <구학동>은 <애학투련>건설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대투쟁에도 많은 역량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투쟁은 “미제의 신식민지적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그 파쇼주구를 타도하여 민중해방과 민족통일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의 적절한 배합으로 총체적 반미투쟁을 전개“하되 합법투쟁은 각 대학별 총학생회의 연합체인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을, 비합법투쟁은 각 대학별 공개투쟁위원회의 연합체인 <전국대학투쟁위원회연합체>를 각각 구성하여 투쟁의 통일성과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로 한다. <구학동>은 다른 대학교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건대사태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와해되어갔다(앞의 책, pp.241-242).

O12

방창윤

O13

O14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80~87)』, 형성사, 1988,

O1

서울영상집단

O2

O3

O4

O5

1986.10.18~?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서울영상집단>은 1986년 10월 18일 신촌 「우리마당」에서 <서울영화집단>등 민중적 시각에서 영화 운동을 해왔던 기존 소규모 영화집단들이 발전적으로 해체·통합하면서 창립한 단체이다.

O11

<서울영화집단>회원들은 1986년 7월 농촌현실을 다룬 「파랑새」를 제작·보급하면서 기존의 소집단 영화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은 창립을 전후로 하여 「파랑새」등 영화뿐만 아니라, 비디오·슬라이드·사진 등 각종 영상매체를 개발하여 대중을 상대로 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1986년 11월 7일 한국 민주항쟁사를 다룬 영화 「부활하는 산하」를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상영되자, 경찰은 제작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홍기선 등 회원 3명을 영장없이 연행했다. 하지만 이 영화와 <서울영상집단>과의 관련을 밝혀내지 못하자, 다시 「파랑새」를 문제삼아 홍기선과 이효인, 변재란을 불구속 입건하였다(『말』 제9호 1986.12.31, pp.63-64).

O12

홍기선(대표), 이효인(기록교육국장), 변재란(사무간사)

O13

O14

『말』 제9호 1986.12.31

O1

미·일 경제침략저지범국민운동연합

O2

O3

민통련 등 40여 단체

O4

O5

1986.10.21~?

O6

O7

공개 / ?

O8

O9

<결의문>

-민족자주와 민중생존을 위해 미·일 외세의 경제침략저지를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한다.

-미·일 외세의 침략을 서슴없이 허용하는 연속적 군부독재정권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민족자주와 민주쟁취를 위한 투쟁에 근로대중을 포함한 온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할 것이며 항상 민중의 편에 서서 싸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주요한 정치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민족자주와 민중민주주의의 입장을 견지한다 (말 제9호, 1986.12.31, p30).

O10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등 40여 민주운동단체가 미국과 일본의 시장개방압력에 반대하며 1986년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2백여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말 제9호, 1986.12.31, p30).

O11

O12

O13

O14

O1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 <사건편>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 및 관련자 대량구속사건(‘건대사태’) 참조)

O2

애학투련

O3

O4

O5

1986.10.28~10.31

O6

서울

O7

공개 / 반합법

O8

O9

<투쟁목표>

-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고 그 앞잡이 전두환 군부독재를 타도하여 민족자주와 민중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분쇄하고 민족의 자립화를 이룩한다.
- 전두환 일당의 독재정치를 타파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한다.
-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철폐하고 한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한다.
- 우리 학생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교육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며 진보적인 교육제도를 쟁취한다.
- 우리 4천만 민중의 민주적 권리쟁취투쟁에 적극 동참한다.
-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광범히 연대하여 함께 투쟁한다.
- 세계의 평화를 옹호하여 제국주의의 모든 호전적 침략을 분쇄한다(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 형성사, 1988, pp.260-261).

O10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이하 애학투련)은 1986년 10월 28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26개 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발대식을 벌이다 교내로 진입한 8천여명의 경찰에 밀려 본관, 사회과학관 등 5개 건물을 점거, 용공분쇄 등의 구호를 내걸고 4일동안 철야농성한 소위 ‘건국대사태’로 잘 알려진 조직이다.

이때 총 1,528명 연행,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인 1,290여명이 구속, 397명이 구속기소되었다(『말』 제 9호 1986.12.31, p15). <애학투련>은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연세대 <반미구국학생동맹>(구학동)으로 대표되는 반제(AI)그룹의 투쟁목표(강령)를 외화시키는 대중정치투쟁체로서 투쟁위원회연합(투위연)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강신철 외, p260). 반제그룹은 1985년 1학기 중반 이후 자신들의 변혁노선을 AIPDR(반제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서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으로 수정하여 반제경향성으로부터 완결된 체계를 갖는 변혁이론으로 변혁노선을 정착시켰다. 1학기 중반 이후에는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의 주체들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대한 실망과 반제그룹이 제기한 반제투쟁의 정당성의 광범위한 승인, NLPDR론의 광범한 확산과 반제그룹이 주도적으로 벌인 반종파투쟁에 대한 지지

속에서 반제그룹 주도의 새로운 전국적 학생운동조직이 건설되게 된다. 1985년 말에 나온 AIPDR, 민주주의혁명론 등을 통해 각 대학에서 생겨난 반제학습팀이 각 대학에 열풍처럼 번지면서 이제 반제그룹은 몇 개 대학의 조직이 아니라 전국의 주요대학을 망라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적·정치적 성과물위에서 반제그룹의 각 대학지도조직은 여름방학 중 연락망을 구축하고 NLPDR론에 입각한 전국적 학생운동조직의 건설을 준비하게 된다. 이 준비모임에서 각 대학의 대표들은 이전의 학생운동연대조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사상의지에 입각한 통일적인 조직을 꾸리기에는 아직 사상의지의 통일이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도 각 대학에 난무하는 종파적 서클을 해체하고 단일한 혁명적 대중조직을 건설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러한 학생운동의 전국적 사상의 통일과 전국적 단위의 변혁적 대중조직을 실현하기 위한 과도적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역량이 되는 대학에서는 시급히 변혁적 대중조직을 건설하고 이 변혁적 대중조직과 각 대학의 투쟁체계를 포함하여 전국적 단위의 학생운동지도조직과 대중투쟁조직으로서 <전학련>과 <투위연>을 건설하기로 한다(강신철 외, pp.247-252). <투위연>은 각 대학의 토론과정을 거쳐 먼저 지역별로 건설된다. 1986년 10월초부터 차례로 연세대에서 <서울서부지역 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이, 시립대에서 <서울동부지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이, 국민대에서 <서울북부지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이, 서울대에서 <서울남부지역 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이 결성되었으며, 수인지역에서는 이미 8월중에 한신대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쟁연합조직이 활동중에 있었다. 그리고 기타 지역(영호남, 중부)은 전국적 투위연 건설 이후에 참가하기로 하고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애학투련>이 결성된 것이다(강신철 외, p260).

O11

O12

정현곤(鄭鉉坤, 서울대 자민투위원장), 강상윤(姜相潤, 연세대 민민투위원장), 김신(金信, 고려대 민민투위원장), 고은아(高은아, 서울대 구학련 간부), 황인욱(黃仁郁, 구학련 조직부장)

O13

O14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80~87)』, 형성사, 1988,

『말』 제9호 1986.12.31

조선일보 1986.11.2, 11.13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선언」(86.10.28), 150~152쪽

---

---

〈1987년〉

- 01.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 02.15 87서울노동자 임금투쟁공동실천위원회
    - 02.18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 02.26 전국농민협회
    - 03.21 한국여성노동자회(여노회)
    - 04. 한국사회경제학회(한사경)
    - 04.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 05.08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
    - 05. 노동계급그룹
    - 05.15 KBS시청료거부여성연합
    - 05.27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
  - 05.29 호헌철폐와 민주개헌쟁취를 위한 서울지역학생협의회
    - 06.26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 06.26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 07.06 민주헌법쟁취 전국노동자공동위원회(민헌노위)
    - 07.12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노민위)
    - 07.17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서철협)
  - 07.19 서울지역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서해투)
    - 07.19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인해협)
    - 08. 한국정치연구회(한정연)
  - 08.13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지하철노조)
    - 08.18 한신대직원노동조합
    - 08.19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 
-

---

---

〈1987년〉

- 09.12 한국여성민우회(여성민우회)
- 09.17 민족문학작가회의(작가회의)
- 09.27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 09.27 전국산업재해노동자연맹(산재노련)
- 09. 문학예술연구회(문예연)
- 10.16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 10.19 도시노점상연합회
- 10.27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 11.03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서울노련)
- 11.2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 11. 서울지역 비상학생협의회(서비협)
- 11.23 군정종식·단일화쟁취 국민협의회(국협)
- 11.25 민중대표백기완선생선거운동본부(백본)
- 11.26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11.27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금노련)
- 12.02 서울지역제화공노동조합
- 12.12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원노협)
- 12.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 12. 한물결청년회
- 12.(?) 반제반과소한국민중전선(KPF)

(날짜미상)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  
(날짜미상)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

---

---

O1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O2

O3

O4

O5

1987.1~1987.5.27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은 독재정권에 대한 증오심으로 분노하기 시작했다. 고려대를 시발로 하여 고문살인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확산되었고 야당, 재야단체들도 잇달아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각계인사 9천여 명으로 구성된 범국민적인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O11

1987년 2월 7일 서울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를 주최, 3월 3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49제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을 주최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민당의 분열로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다가 이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서 해소되었다.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는 87년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집행 위원회를 열고 7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개최할 추도회가 끝난뒤 참가자진원이 성당 밖으로 나가 침묵행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1987. 2. 5)

O12

함석헌(咸錫憲), 문익환(文益煥)

O13

O14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 『조선일보』, 1987. 2. 5

O1

87 서울노동자 임금투쟁공동실천위원회

O2

공동임투위

O3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O4

O5

1987. 2.15~?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조직적으로 86년 나타났던 분파성이나 소그룹중심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통일이 강조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공동투위의 건설이 모색되고 있었다. 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은 87년 2월 15일 개최한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87년 노동자 임금향상을 위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개최한 노동자대회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로 가득찼고, 벽에는 ‘임금인상투쟁으로 저임금을 깨부수자’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집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회가 끝날 무렵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등 세 개 단체가 공동으로 「87 한국노동자 임금투쟁공동실천위원회」를 결성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말』, 제10호, 1987. 3, pp48~52)

O11

「87 한국노동자 임금투쟁공동실천위원회」는 2월 15일 결의문에서 “87년 임투는 경제투쟁으로서의 적극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광범한 노동투쟁의 임투로 집약한 투쟁과 조직을 동시에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천명했다. 결의문은 또 “공동임투위는 87임투과정 전반의 조직적 입장을 대중조직건설(단위사업장 산업별체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전국단위의 임투공동실천구조를 제안하며 또한 서울지역 공동임투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를 환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말』, 제10호, 1987. 3, pp48~52)

O12

한명희(서울기노련 회장)

O13

O14

『말』, 제10호, 1987. 3

O1

한국여성단체연합

O2

여연

O3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충남여민회, 민  
족미술협의회여성미술연구회, 부산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농민  
회총연합, 전북여성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  
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국, 함께하  
는주부모임(『한국여성단체연합 제8차 정기총회 자료집』, 1994)

O4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1989-1991)

O5

1987. 2.18~현재

O6

O7

공개 / 합법

O8

총회-대표자회의-집행위원회-정책과사업위원회-통일과평화위원회-고문및지도위원.

여연은 회원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연합운동체로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운동의 과정에서 볼 때 회  
원단체들을 대변하는 단순한 연합체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진보적 여성운동의 구심체로서 독  
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협의체’나 ‘연대회의’의 구조라기보다는 여연의  
사무처(사무총국) 중심으로 독자적인 진보적 여성운동단체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운동  
의 집약적인 성과를 위해 여연 사무국 중심의 독립적인 활동은 내부에서 인정받았다. (『한국여  
성운동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 유성희, 2000, p49 / 『한국여성단체연합 제8차 정기총회 자료  
집』, 1994, p84~89)

O9

O10

1970년대의 여성노동 운동을 주도한 여성노동자들과 지식인 여성, 그리고 교회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  
로 한 교회여성운동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어 한국여성운동의 진보적 세력으로 이념적, 실천적  
입장을 세웠다.『한국여성단체연합 제8차 정기총회 자료집』, 1994, p84~89) 84년 여대생추행사건  
에 6개 단체가 첫 연대활동을 시작한 이래 85년 제1회 3·8여성대회개최, 86년 반상설기구인  
생존권대책위 활동, 부천서성고문대책위 활동 등이 쌓이면서 각 개별 단체들마다 상설연합체인  
‘여연’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됐고, 그 기반 위에서 여연이 탄생하였다. (『말』15호, 1987. 10,  
pp53~54)

O11

여연은 87년 4.13호헌조치 철폐투쟁, 6월 국민항쟁에서의 6.18 최루탄 추방대회, 광주학살5공비리주범  
구속처벌투쟁, 88년의 ADIS 추방운동, 89년의 히로히토조문사절 파견반대운동 등을 벌임으로  
써 여성운동적 시각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투쟁력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했다. 한편 정치투쟁과  
아울러 여성노동자에 대한 생존권 지원투쟁, 여성운동의 조직적 구심체로서의 역할로서 여성운  
동단체 회원간의 인식과 실천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남녀고용평등 및 가족법

개정운동, 강정순·변원순 사건 등 성폭력사건에의 신속한 대응을 사회, 정치, 문화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타도해내기 위한 실천활동에 보다 단결된 힘으로 주도해 나갔던 것으로 조직적, 선전적 측면에서의 연대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살려냈던 활동이기도 하였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pp222~227) 또한 여연은 90년 탁아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탁아입법 제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92년에는 성폭력특별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337)

O12

이우정(李愚貞, 초대 회장)

O13

O14

「민주여성」: 1987-1995 19호 / 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 이소연, 「운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운동조직의 프레임 구성과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2000 / 유성희, 「한국여성운동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 2000 / 「한국여성단체연합 제8차 정기총회 자료집」, 1994

O1

전국농민협회 (☞ <단체편>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참조)

O2

농민협회

O3

O4

O5

1987. 2.26~?

O6

O7

공개 / 합법

O8

조직은 작목과 문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1988.1.12 전남 강진에서 ‘딸기생산자협회’ 준비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비롯하여 1988년 말 현재 80여개 군 농민회가 결성되었다. (정명채·민상기·최경환,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pp65)

O9

<창립선언문> : 우리의 주장 : -. 경작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농지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 노동의 대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농축산물가격결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 외국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농가부채는 탕감되어야 한다. -. 봉건잔재는 타파되어야 한다. -. 관료의 횡포는 일소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제는 면단위부터 민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농민에 대한 일체의 잡세와 제 공과금 및 부역은 폐지되어야 한다. -. 농민의 생산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농업금융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 수세는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은 해체되며 수리시설은 동리민이 자율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 농협, 축협 및 농어민관계 제 단체는 자주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 농어민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농민을 위한 문화, 오락, 의료시설이 국가부담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 농약 및 공해로 인한 피해와 기상재해는 국가부담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농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 농업의 경작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농민의 자주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 농민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확립되어야 한다.

O10

85년 ‘소몰이’ 투쟁이후 가농, 기농회원 중심의 종교적 농민운동에서, 나아가 농민대중에 근거한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현장에서부터 움트면서 자주적인 군농민회가 여러 지역에서 결성되었으며, 기존의 가농, 기농 내부에서도 자주적 농민운동으로의 전화를 위한 내부진통과 노력이 가해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87년 10여개 군조직이 결집하여 자주적 농민운동의 기치를 들고 전국농민협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농민운동은 외형적으로는 가농, 기농, 농민협회, 독자적인 군조직 등 여러 전국단체 및 군농민회의 분립과 할거로 나타났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주적 대중조직화의 커다란 방향성 하에 농민운동의 조직운동적 발전과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진전했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년, p101)

O11

전국농민협회는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진정한 대중조직”의 기치를 내걸고 종교적 틀을 쓰지 않은 대중조직체로서 많은 활동가와 지역으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대중조직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였다.(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pp159) "협회"는 창립초기부터 조직형 식주의에 매몰되어 내용성이 부재함에 따라 비종교적 전국농민단체라는 규정을 받게 된다. 특히 협회는 교육, 선전을 통한 조직확대를 내부노선으로 정립하였다. 조직확대, 강화를 위한 실천투쟁을 방기하고 새롭게 올라오는 지역의 농민운동 조직을 가입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패권주의적 경향성은 기농, 가농의 내용적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종교성"이라는 문제에 급급한 귀결이며 기농, 가농의 내용성을 올바르게 극복한 자주, 자립적 농민대중조직이 "전농"에의 가입을 거부함에 따라 전농 내부에서는 심한 분열과 혼란이 나타났다. 이런 패권주의적 경향은 "협회"내에서는 주도권 쟁탈로 나타났다. 협회는 크게 두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기농, 가농 협회등 전국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자는 입장이며 또 하나는 "협회"로 독자적인 군농민조직이 총집결하여 기농, 가농 협회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월간 흐름』, 형성사, 1989. 2) 주요 활동으로는 부당수세 납부거부운동, 수입개방저지, 부당 의료보험제도 개선, 자주농협 쟁취, 농축산물 제값받기 운동, 미가 10만원 쟁취를 위한 50만명 서명운동, 해태기업의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반대운동 등이 있었다. (정명채·민상기·최경환,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pp65)

O12

O13

O14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 『월간 흐름』, 형성사, 1989. 2 / 정명채·민상기·최경환,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국농민협회 창립선언」, 100~101쪽

O1

한국여성노동자회

O2

여노회

O3

O4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1992.7~)

O5

1987. 3.21~?

O6

서울

O7

공개-합법

O8

O9

O10

1987년 3월 21일 한국여성노동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최초로 여성노동자운동의 기치를 들었다. (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올아카데미, 2001, p 323) 한국여성노동자회는 87년 3월 21일 영등포구 영등포2동 세덕빌딩 502호 사무실에서 1백 여성노동자와 여성계 및 재야민주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회장에 이영순(40, 전 콘트롤데이터 노조위원장)씨를 선출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 날 발표한 창립선언문에서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노동자로서의 철저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결혼 출산과 더불어 투쟁 전선에서 떠나 가정에 안주해 버리는 수많은 동료를 보면서 여성으로서 받는 착취와 차별을 뚫고 나가지 않고서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노동 운동의 주체로 묶어 세울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통일적으로 결합, 실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천명했다. 선언문은 이어 “이제 노동자적 입장에서 여성 노동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의 정리와 더불어 주체적 실천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자각과 실천의 요구 속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족되었다”고 창립배경을 설명했다. (『말』, 제11호, 1987. 5, pp.64~65)

O11

창립 초기에는 여성노동자운동의 필요성과 과제 선전에 주력하여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전진대회, YH 고 김경숙열사 추모제 등을 꾸려내고, 1987년 대투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올아카데미, 2001, p.323) 1987년 9월 27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 전진대회를 열어 7,8,9월 투쟁기간에 치열하게 싸움을 전개했던 여성노동자 중심 사업장 사례를 발표하고 전진하는 노동자투쟁대열에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p195) 1990년 초반에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부각시켜 투쟁해나가는 데 힘써 고용불안정 문제, 직장탁아소 문제 등을 먼저 주창하였으며, 노동조합 여성사업지원, 공부방, 놀이방 운영과 더불어 미혼, 기혼 여성노동자들과 노동자 부인들까지 포함하는 회원조직으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결성에 즈음하여 이름을 ‘서울여성노동자회’로 바꾸고 지역에 뿌리를 굳건히 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복지회관’을 건

립하여 지역운동과의 결합 속에서 여성노동자운동의 영역을 확대시켜가고 있다. (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울아카데미, 2001, p323)

O12

이영순(전 콘트롤데이타 노조위원장)

O13

O1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 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 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울아카데미, 2001

O1

한국사회경제학회

O2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7.4~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과 연구, 운영, 편집을 담당하는 3인의 위원장을 집행기구로 갖고 있다. 중요한 결정은 38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회와 14명의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논의된다. 이렇게 조직이 다수 복잡해 보이는 것은 기존의 학회 조직에다가 사단법인 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직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또한 원론 분과, 이론 분과, 사회주의 분과, 노동 분과, 한국경제 분과, 과학기술 분과 등 분과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36)

O10

한국사회경제학회는 1987년 4월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공식적인 학회로 출범하였다. 한국에서의 정치경제학은 경제학 초창기부터 도입되어 꾸준히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론』을 소지하는 것조차도 금기시되던 상황에서는 정치경제학을 표방하는 공개적 형태의 모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경제학 연구는 소규모, 비공개적인 연구회 형태로 지속되었고 공개적인 활동은 경제사학회 등의 외피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생 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비공개적인 틀로써는 더 이상 연구자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어갔다. 1986년 말부터는 핵심적인 정치경제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학회를 만들어 “연구자들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현대 한국의 사회 경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자”(『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안내문』)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그 이듬해 4월에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출범하였다. 6월 항쟁이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결성보다는 약 2개월, 학수단체협의회 결성보다는 1년 정도 앞선 것이었다.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p235~236)

O11

한국사회경제학회는 발족 당시부터 회원이 200여명을 넘었다. 발족 당시에는 절반 정도가 대학원생들이었던 데 반해 현재는 반 이상이 교수이다. 이러한 구성의 변화는, 발족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회원들의 일부가 교수의 신분을 획득한 데도 기인하지만,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당시보다 줄어들면서 교수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출범할 당시가 사회운동이 매우 고양되었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경험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같이 연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수 자리를 얻으면 세상의 변화와 상대적

으로 독립되어 자기의 학문적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교수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정치경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주요한 활동은 연구활동, 편집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활동은 자유 발표 형식의 규모가 작은 연구발표회와 전체 주제가 있고 규모가 큰 학술대회로 나누어진다. 지금까지 모두 43차례의 연구발표회와 19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정치경제학 내에서의 다양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연구 방법은 보수적 입장에서 진보적 입장까지를 두루 수용하는 포괄적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연구회가 아니고, 학문적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회원을 선별할 수 없는 학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경제학회의 각종 발표회와 학술대회에는 국제적인 학자들도 상당히 참여하여 국제적 교류를 하여 왔다. 대표적인 학자들로서는 마코토 이토(Makoto Itoh), 노부오 오키시오(Mobuo Okishio), 벤 파인(Ben Fine), 제임스 크로티(James Crotty), 로베르트 브와이에(Robert Boyer)등을 들 수 있다.

편집활동은 연구발표회와 학술대회를 위한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 것 이외에 학회의 공식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평론』을 발간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사회경제평론』은 지금까지 모두 11권이 출판되었으며 이 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려고 시도하여 왔다.

사회참여활동은 주로 서명을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서관모 교수 사건에서부터 전두환 노태우 구속, 노동법 철폐 투쟁, IMF 위기에 대한 대응, 재벌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에 학술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p235~237)

O12

변형운(서울대 경제학과), 주중환(중국대 경제학과), 류종완(전북대 경제학과), 조영건(경남대 경제학과), 김수행(서울대 경제학부)

O13

O14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O1

노동자해방투쟁동맹 (☞ <단체편> 제현의회그룹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참조 // <사건편  
> 제현의회그룹 사건 / 사노맹 사건 참조)

O2

노해동

O5

1987.04~?

O7

비공개 / 비합법

O10

제현의회(CA) 그룹(86년 5월 결성)에서 갈라져 나온 그룹.

O11

노해동은 88년 초 민주연립정부를 주장하는 다수파와 민중집권을 주장하는 소수파로 갈라선다. 이 가  
운데 소수파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

O1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O2

서대협

O3

O4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O5

1987. 5. 8~1988.4.10

O6

서울

O7

공개 / 반합법

O8

산하에 각 대학 학생회 대표들로 구성된 ‘호헌철폐 군부종식 서울지역 특위협의회’를 두었다.

O9

O10

86년의 투쟁을 반성하고 87년에 들어서면서 대중노선의 기치 하에 학생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정치적·경제적 제 투쟁을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이를 내용으로 각 대학 학생대표자들이 협의를 통해 학교간의 통일·단결의 연대를 모색·실현한다는 목적 하에 1987년 5월 8일 연대에서 서울 25개 대학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전국 백만학도의 단일한 사상과 통일적 실천을 의미하는 전학련의 결성은 현실의 수준상 당장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일차적으로 협의체 수준으로 지역별 연대들을 짜고 각 학교별로 대중적 결합력 강화에 주력하자는 논리 속에 결성되었다(조지훈,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p83~84)

O11

서대협은 중앙이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 조직이 아닌 소수 대학생 대표자들의 협의체에 지나지 않았지만 87년 6월투쟁 기간 학생은 물론 국민대중적 신뢰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천지도의 구심으로 변신케 하였다. 6월 5일 서대협 소속 13개대 총학생회 간부 20여명이 각 대학 총학생회실에서 ‘호헌철폐와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6월 6일 고려대에서 서대협 주최 ‘연합 대동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6.10대회, 6월 18일 ‘최루탄추방대회 출정식’, 6.26 국민평화대행진 등 연이은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였다.

한편, 서대협은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본의 노선을 지지하며 국본의 결정 사항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대행진과 관련해 당시 이들의 기본 입장은 일단 직선제 개헌 쟁취와 선거를 통한 군부독재 종식 및 민선민간정부의 수립에 두고 민중운동 상층 지도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명동성당 농성이 계획되지 않은 싸움이라는 이유로 농성해산 결정을 내리고 지원투쟁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오류 등에서 보이듯이 대행진에서 나타난 민중의 힘을, 지속적인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군부독재 퇴진·타도’로 연결시키려는 실천을 이어나가지 못하였다.

87년 대선 시기에 이르러 서대협 상임위원회에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반노태우투쟁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끝까지 이룩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판적 지지론을 반대하는 데 결국 17:13이라는 다수결

로 비판적 지지가 가결, 처리되었다. 학생들의 의사수렴 없이 상층 대표자들의 개인적 의사로 학생회의 투쟁노선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서대협이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많은 대표자와 학생대중들이 서대협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그 중 “비판적 지지는 김대중에게 표만 찍어 주면 군정종식도 되고 민주화도 될 것 같은 환상을 대중에게 줄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선거혁명론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서대협에서 분리, ‘노태우 집권 분쇄와 후보단일화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청년학도비상협의회’를 구성, 독자적 선거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서대협은 이후 88년 4월 10일 서대협의 계승과 혁신을 통하여 서학련의 실질적 전망을 갖는 조직적 기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서대협 해소를 결의한다. 그 결과로 ‘학간 연대조직 재편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학간 연대조직의 건설을 결정하게 되나 조직의 건설문제에 있어 서대협의 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무엇으로 포착하느냐에 따른 조직건설의 이견이 나타난다. 그 하나가 서건추론이며 다른 하나는 서대협 강화론과, 서총협론으로 분리, 존재했다.(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pp262~263) (조지훈,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p39, pp86~87)

O12

이인영(서대협 의장), 정지환(시립대 총학생회장)

O13

서울지역 비상학생협의회(노태우집권분쇄와 후보단일화쟁취를 위한 서울지역청년학도비상협의회), 서울지역대학생총연합건설 추진위원회(서건추),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O14

조지훈,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1989 /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87년 백만 학도 통일대장정 자료집』, 1987

01

노동계급 (☞ <사건편> 노동계급 사건 참조)

02

03

04

05

1987. 5~1989. 4 (안기부 발표)

06

07

비공개 / 비합법

08

09

<강령 요약>

: 정치

1.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을 제외한 각계 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는 회의에 모든 국가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2. 민중 민주주의 공화국은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 세력을 제외한 모든 계급 계층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3. 외세의 모든 정치 군사적 간섭을 폐지합니다.
4. 언론, 집회, 시위, 결사, 출판,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성, 종교, 신분, 연령에 따른 모든 사회적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며 고문 등 인권에 대한 침해를 완전히 금지시킵니다.

: 경제

1. 제국주의 자본과 독점 자본 및 주요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며 국가 경제 계획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2. 불평등한 경제 협정, 외채 등 제국주의와의 불평등한 경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들의 경제적 침략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3. 완전한 누진적 조세 제도를 확립하고 부가 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4. 중소 자본가와 도시의 소생자 및 농민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생산 및 영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 문화 및 복지

1. 전반적인 무상, 의무의 공교육을 실시합니다.
2. 지배 계급적 향락 문화를 일소하고 전체 근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3. 완전한 1가구 1주택을 실현합니다.
4. 완전 고용제를 실현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생활을 보장합니다.
5. 무상으로 전국민에 대한 의료 보험제를 실시합니다. 등.

: 노동자 계급

1. 1일 8시간 주 44시간 노동제를 완전하게 실시하고 야간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적정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임금을 보장합니다.
3. 심신을 황폐화시키는 고강도 노동을 금지합니다.
4. 노동 3권 및 파업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5. 노동자들이 공장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5.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용 노동을 금지합니다. 등

: 농민

1. 농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비농민 혹은 독점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는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합니다.

2.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임야는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3. 농산물의 불평등한 가격 체제를 타파하고 적절한 가격을 보장합니다.

4. 농가 부채를 전액 탕감합니다. 등

: 중소 자본가

1. 소생산자와 소상인 및 어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2. 몰락한 소생산자와 소상인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3. 중간층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현직을 보장합니다.

4. 중소 자본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pp39~41)

O10

1990년 2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에 의하면 “노동계급은 1987년 5월부터 1989년 4월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해 혁명 투쟁을 수행할 조직을 결성하기로 모의하고, 대학 운동권 출신과 전국 노동 현장에서 활동중인 사람 50여명을 규합하여, 1989년 5월 노동계급을 결성”하였다.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1991, 소나무, p20)

O11

87년 5월부터 89년 4월까지 ML주의에 입각한 혁명투쟁 조직 건설을 위해 대학 운동권 출신과 전국 노동현장 인원 50여명이 서울, 인천, 성남, 부산, 울산, 대구 등에서 활동하였다. 기관지로 「노동계급」을 1-5호 발간하였다.(운동MAP)

국가안전기획부 발표, 87년 5월부터 89년 4월까지 60명을 모아 PDR론에 따라 ‘조직강령’과 ‘규약’을 만들어 활동해옴. 1990년 2월 12일 국가안전기획부, ‘노동계급’ 지하조직 검거해 안민규(세종대 대학원생), 박태호씨(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필명-이진경) 구속, 이미경씨(서울대 음대 대학원) 불구속입건, 10명 수배(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연감』, 백산서당, 1991, pp377)

이들은 조직 결성 후 사상무장된 조직원 50여명을 서울, 인천, 성남,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노동현장과 서울대 등 학원에 침투시켜 의식화투쟁을 선동하고, 조직을 확산해왔으며 대학신문과 잡지 등에 민중민주주의혁명이론을 찬양하는 글을 기고해왔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조선일보』 1990. 2.13)

1990년 1월 15일, 박태호씨가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17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23일에는 안민규씨가 연행되어 구속되었고, 박태호씨에게 이적 단테 구성 혐의가 추가되었다. 박태호씨 구속 때 문제를 삼은 표현물은 합법 출판물을 통해 널리 읽혀졌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1987), 『현실과 과학』 및 『대학 신문』등에 실린 글이었기에 충격적이었다.

더욱이 2월 13일 안기부의 수사 발표에서는 사건을 확대시키기 위해, 안민규씨를 총책으로 만들어내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입건시켜 서울 지역 총책으로 앉히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 위 두 사람은 분리 재판을 거부하고 병합 심리를 요청하여 관철시켰으며, 그들이 지향했던 민중 민주주의적 변혁과 노동 해방이 무엇이며 왜 필연적인지를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2년을 선고받고, (1991년) 현재 청주 교도소와 대전 교도소에 각각 수감되어 있다.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p22)

O12

안민규(安珉奎, 세종대 대학원생), 박태호(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이미경(李美京, 서울대 음대 대학원)

O13

O14

한국사회연구소, 『1991 한국사회연감』, 백산서당, 1991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조선일보」 1990. 2.13

#### <연구팀 의견 : 학문·사상·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 및 과장·조작 가능성>

- \* 이 사건은 학문·사상·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되어 당시 학계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 박태호, “사상의 자유는 전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국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노동자 사상·조직결성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노동자정치조직 사건 백서』, 1990. 7. 참조

O1

KBS시청료거부여성연합

O2

O3

O4

O5

1987. 5.15~?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6년 4월부터 시작되었던 KBS 시청료거부운동은 한 때 전국민의 52%가 참여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으나 정부의 철저한 방해 - 보도통제, 통합 고지서 발부 등 - 와 운동본부측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열기가 부족하여 그 운동이 강화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7년 5월 15일 KBS 시청료거부 여성연합이 발족하였다. (『말』, 19호, 1988. 1, pp49~50)

O11

KBS시청료거부여성연합은 종래의 캠페인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회원제를 채택, 회원들이 시청료거부운동의 주체로서 자발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체는 소식지와 전단의 제작배포, 전화상담, 시청료거부운동추진대회 등을 주요활동으로 벌였으며 자원활동가들이 KBS-TV를 모니터하여 주1회씩 KBS의 왜곡, 편파성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제작 각 신문사, 방송국에 발송하였다. (『말』, 19호, 1988. 1, pp49~50)

O12

김희선(위원장)

O13

O14

『말』, 19호, 1988. 1

01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02

국본, 국민운동본부

03

민주통일문중운동연합(민통련), 신민당, 민주협, 천주교정의구현국제사제단,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여성  
단체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4

05

1987. 5.27~1988

06

07

공개 / (반)합법

08

국본은 출범과 동시에 시·도본부와 시·군·구 지부 등 지역조직 결성작업에 들어갔으며 같은 시기에 각  
 부문조직의 건설도 병행했다. 지방에서는 보수야당이 포함된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미 호헌반대  
 를 위한 국민운동들이 형성되기도 했다. 예컨대 5월 15일의 ‘충북지역 장기집권 호헌책동분쇄  
 투쟁위원회’, 5월 20일의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범국민운동 부산본부’, 5월 25일의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전북연합’ 등이 그것이었는데, 이들 지방조직들은 전국본부가 형성되고 난 다음  
 에 재조정되었다. 지역본부는 충북, 부산, 전북본부를 시작으로 해서 7월말까지 9개 지역본부를  
 결성했으며, 하반기 들어 인천, 제주, 서울본부가 결성되었고 대구와 광주는 각각 경북과 전남  
 본부에 편입되었다. 지역본부 건설보다 다소 늦게 출범한 지역지부 건설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  
 어 11월 5일 현재 전국 196개 시·군 가운데 111개 시·군에서 지역조직을 결성했으며 일부 지역  
 에서는 읍·면 위원회까지 결성했다. 지역조직이 국본의 종적 조직이라면, 횡적 조직에 해당하  
 는 부문위원회 역시 6월 8일에 결성된 문화인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민주헌법쟁취 국민  
 운동 불교공동위원회(6.16), 민주헌법쟁취 노동자공동위원회(민헌노위, 7.6), 민주헌법쟁취 국민  
 운동 전국농민공동위원회(7.8), 민주쟁취 청년학생 공동위원회(9.18), 민주쟁취 국민운동 천주교  
 공동위원회(10.29) 등이 속속 결성되었다 (조현연, 「6월 항쟁의 ‘지향 이념·주체·전략에 대한 연  
 구」)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p378) 내부 조직 체계는 고문, 상임공동대표, 공동  
 대표, 상임집행위, 그리고 사무처로 구성되었다. 상임집행위 산하에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조  
 직위원회를 두었으며 사무처 산하에 홍보국, 총무국, 조직국을 두었다. 참고로 국민운동본부의  
 발기인, 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 집행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윤상철, 「6월 항쟁의 전개과  
 정」)

	지역	종교	재야단체	정치인	부문운동				합계
					노동	농민	도시빈민	기타	
발기인	352	683	343	213	39	171	18	317	2,191
공동대표	11	11	13	8	2	3	2	15	65
상임공동대표	.	3	2	2	.	.	.	3	10
집행위원	34	197	59	107	14	36	16	43	506

각 지역과 부문의 조직확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 김씨의 동시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더 이상 국본

차원에서 야권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11월 5일 제2차 전국총회를 열고 정당과 조직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국민운동본부』, 1989, p7)

O9

O10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집중적인 탄압에 직면한 민통련이 실질적인 활동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운동진영은 민통련·종교운동단체 등의 재야단체들과 신민당·민주협을 총망라한 전국민적 투쟁전선체를 구성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987년 2.7, 3.3대회를 주최한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는 신민당 내부의 분열로 더 이상의 활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한 가운데 4.13 호헌조치 이후 이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농성, 성명 발표, 단식, 삭발투쟁이 연이어져 연합적 국민운동체 결성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이에 민통련, 종교계, 신민당 등은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에 돌입하였다. 이 때 참여 단위원 ‘직선제 슬로건의 채택 여부와 제도권 정당의 직접적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이견은 직선제는 내용적으로 수렴하기로 하고 제도권 정당은 직접 참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고 1987년 5월 27일 명동의 향린교회에서 국민운동본부는 발족식을 갖게 되었다.

국민운동본부는 발기문을 발표하고 결성 의의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고립분산적으로 대응해오던 호헌반대 민주화운동을 하나의 큰 물결로 결집시키고, 국민을 향해, 국민 속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4.13 조치를 계기로 형성된 국민투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밝히고 있다. 이어 국민운동본부는 조직과 실천원칙을 ‘국민주체의 원칙’, ‘국민조직화와 개방의 원칙’, ‘생활실천의 원칙’으로 설정한 다음, 자신의 조직을 ‘반독재민주화세력의 총결집체’이자 ‘전 국민의 정치적 구심점’이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구’임을 강조했다. (조현연, 「운동해설Map」)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p376~p379)

O11

국민운동본부는 각 부문과 지역 단위로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한 중앙투쟁으로는 1987년 8월10일 ‘양심수 전원석방 및 민주화쟁취 대회’를 들 수 있는데 이 집회에서는 6.29선언 이후 계속되는 군사정권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민주세력들의 민주화 의지를 다져 나갔고, 8월4일 ‘제1차 전국총회’에서는 민주적인 헌법개정 요강을 발표했다. 8월 15일에는 ‘8.15 민족해방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1만 5천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화투쟁을 통한 민주정부수립, 양심수의 즉각 석방과 해직 노동자, 민주인사의 복권과 복지, 분출하는 노동자투쟁의 정당성, 민중민주세력의 단결을 통한 민주승리, 모든 부문의 자율성 회복과 민주화, 군의 정치개입봉쇄 등을 결의했다. 그밖에 7월 태풍 셀마와 전국적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나자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했으며, 복구작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7, 8, 9월 노동자투쟁에 대한 지원활동도 전개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상조사단을 울산, 마산 등 주요 쟁의발생지역에 파견했고 이를 토대로 8월 18일 ‘제1차 노동쟁의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1987년8월22일 대우조선 이석규열사가 최루탄에 의해 사망하자 조문단을 파견하고, 현지 대책위 측과 장례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으며 장례과정에서 국민운동본부 민권위원장이던 이상수 변호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9월20일에는 ‘민헌노위’가 주최한 ‘노동운동 탄압저지 및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노동자결의대회’, 10월 27일,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회’도 개최했지만 이 시기에는 기층민중의 생존권투쟁 보다는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대중투쟁에 대한 지원이 의례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국민운동본부는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9월 21일 상임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10월 5일까지 양보와 협의에 의해 단일화를 촉구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10월13일 제2차 연석회의를 열어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원칙적 입장표명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후 10월 하순부터는 공정선거를 위한 ‘거국중립내각 쟁취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11월5일 제2차 전국총회를 통해 야당과 분리되자 10월 하순부터 공정선거를 위한 거국중립내각 쟁취투쟁을 전면화했으며 11월 5일의 제2차 총회를 끝으로 야당과 분리하여 ‘광주학살진상규명’, ‘거국 중립내각 쟁취’ 및 ‘부정선거음모 저지 투쟁’, ‘민중생존권 투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명칭도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로 개칭되었으며, 이로써 국본의 반독재 연합전선으로서의 성격은 축소 내지는 상실되고 이후 국본의 주된 투쟁은 광주학살진상규명과 공정선거감시운동, 부정선거무효화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공정선거감시 기구로 전화되었을 때는 국민운동본부는 이미 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공정선거 감시운동과 부정선거 무효화투쟁의 필요성에 의해 조직이 해산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1988년 들어 국민운동본부 위상의 재정립에 대한 견해들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선거 이후 민족민주운동 내부의 분열에 의해 위상정립을 위한 단일한 의견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1988년1월 중순에 기독교공동위원회가 정식으로 해체되고 나머지는 휴면상태에 놓이게 된다.

1988년 1월 16일 ‘고 박종철열사 및 민주영령 추모제’, 2월24일 ‘학살원흉 노태우 부정집권 규탄대회’, 3월5일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조치 전면해제 쟁취 및 반독재투쟁 결의대회’등을 개최했지만 형식적인 주최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 1988년 상반기 동안 국본의 부문공동위 및 지역별 조직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본은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변화되었다. 부문공동위는 민현노위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로 전화한 것 외에는 해체되었고 지역별 조직도 서울본부와 전남본부 외에는 모두 해체, 서울과 전남의 경우도 그 지역 내의 제민주단체의 연합체이라는 본래의 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공정선거감시운동을 매개로 조직된 단일한 시민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결국 국본은 4.26총선 시기의 기관지 사업을 끝으로 공식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pp376~379) (『진노협 백서』, 1권 8장 1절) 반군사독재 연합전선의 성격으로 출발한 국민운동본부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원래의 위상과는 다른 주민주체로서 국민운동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민중운동연합건설의 논의가 88년 한해 동안 진행되어 그 결과 전민련이 구성되게 된다. 그리고 서울과 전남 국민운동본부는 각각 하나의 단위조직으로서 전민련에 가입하게 된다. (민족민주운동연구소, 『국민운동본부』, 1989, p10)

## O12

고문 : 함석헌(咸錫憲), 홍남순, 강석주, 문익환(文益煥), 윤공희, 김지길, 김대중(金大中), 김영삼(金泳三) / 공동대표 : 김순호, 원형수(충남), 신삼석, 문정현(전북), 문병란, 배종열(전남), 최성목(부산), 류강하, 원유술(경북), 신현봉, 강원하(강원), 박형규(朴炯圭), 조용술(趙容述), 조남기(趙南基), 안병무, 문동환, 윤반웅(개신교), 김승훈(金勝勳), 박창신, 이돈명(李敦明)(천주교), 청화(靑和), 知誥(지선)(불교), 강희남, 유운필, 계훈제(桂勳榭), 백기완(白基玩), 이소선(李小仙), 김병걸, 이창복(李昌馥), 이두수(민통련), 양순직, 김명운, 최형우, 박영록, 박종태, 박용만, 김동영, 김충섭(정치인), 송건호(宋建鎬), 김인한, 임재경, 최장학, 정동익(언론·출판), 고 은(高銀), 이호철(李浩哲,문인), 주재환, 원동석(문화·예술), 성내운(成來運, 교육), 이우정(李愚貞), 박영숙, 조화순, 이태영(李兌瑩, 여성), 박용길, 이정숙, 조성자, 이오순, 김월금(민가협), 서경원, 김영원, 이화숙(농민), 이충각, 유동우(노동), 제정구(諸廷垢), 이상락(도시빈민), 김근태(金槿泰, 청년) (민

족민주운동연구소, 『국민운동본부』, 1989, pp18~19)

O13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O14

기관지 「국민운동」(민족민주운동연구소, 『국민운동본부』, 1989, p.10)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선언」, 46~47

「조선일보」, 1987. 6.17 / 「조선일보」, 1987. 5.28

O1

호헌철폐와 민주개혁쟁취를 위한 서울지역학생협의회

O2

서학협

O3

서울지역 각 대학 특별위원회의 결집체로 구성.

O4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O5

1987. 5.29~?

O6

서울

O7

공개 / (반)합법

O8

6·9, 10 총궐기위원회

O9

O10

서울대등 8개대 ‘호헌철폐와 민주개혁쟁취를 위한 서울지역학생협의회’ 발족

O11

O12

O13

O14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O1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 <사건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사건 참조)

O2

인민노련

O3

O4

O5

1987. 6.26~1991

O6

서울

O7

비공개 / 비합법

O8

O9

- 1)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며, 모든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아무런 제약 없이 누려야 한다.
- 2) 노동 조합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 보안법, 정당법 등의 악법은 폐지, 개정되어야 한다.
- 3) 연장 근로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시켜 8시간 노동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적 이유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작업(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은 금지되어야 한다.
- 4) 최저 임금제는 작업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 임금은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 5) 학력별, 직종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 6) 최저 임금제는 작업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 임금은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 5) 학력별·직종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 6) 취업 및 그 지속, 인사관계, 임금 등에 있어 성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 7) 공영 탁아소를 충분히 설치하여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며, 산전 산후 총 6개월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 8)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몰아낼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 9) 정당한 농수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외국 농축산물 도입을 억제하며, 농가 부채를 일소하여야 한다. 또한 소작제도, 농지 임대차, 비농민의 토지 소유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 10) 영세 상인, 도시 빈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11) 권력과 결탁하여 민중의 피땀을 가로채고 민족 경제를 팔아먹어 온 독점 재벌을 해체되고, 기간 산업은 국유화되어야 한다.
- 12) 직접 투자, 또는 차관의 형태로 들어와 우리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수탈해 온 일체의 제국주의 자본은 몰수, 국유화되어야 한다.
- 13) 고등 학교까지를 의무 교육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14) 의료 보장 제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15) 건물 개·보수 비용만을 부담하는 임대 주책을 건설하여 무주택자를 완전히 일소하여야 한다.

- 16) 국가 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반민주적 악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 권리는 유보 조건 없이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
  - 17) 국가 안전 기획부, 국군 보안 사령부, 치안 본부 대공 분실, 전투 경찰 등 살인, 고문, 폭행, 불법 연행, 감금을 일삼아 온 반민주적 억압 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 18)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고문, 강간, 살인을 일삼아 온 범죄자들과 그 협조자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재산 몰수, 처벌, 재교육되어야 하고, 구속된 노동자를 비롯한 민주 인사와 양심법들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 19) 미·일 제국주의와의 불평등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약 및 협정은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모든 국가들과 자주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 20) 미제가 강탈해 간 군사 작전권은 반환되어야 하며, 주한 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핵 기지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는 즉각 철수, 폐기되어야 한다.
  - 21) 남북한 상호 불가침 조약의 체결, 휴전 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비 축소가 신속히 이루어져 평화 통일의 실질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 22) 북한과 더불어 연방 정부를 수립하여 평화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고 완전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한다.
-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pp180~181)

O10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천명하고 87년 6월 결성하였다.(「운동Map」, 조현연 제공, p42)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은 ‘당면한 민족 해방과 민주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천, 부천지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정치 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 6월 26일 결성되었다.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1991, 소나무, p168)

O11

87년 노동자대투쟁 직후 지역민주노조협의회 건설안을 제출하고 88년 노동법 개정투쟁을 노조운동의 전국적 대오 구축으로 수립시키자 전노협 건설과 임무를 제출하였다. 기관지로 <노동자의 길>, <정세와 실천>, 89년부터 전국적 노동자정당 건설의 기치하에 <사회주의자> 발간(1호-4호). 89년 10월 18일 조직원 18인 구속되고 활동이 위축되었고 91년 한사노 결성으로 합법 노선화 (조현연 제공, 「운동Map」, p42).

활동 내용은 대략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지도, 지원, 당면 정치 투쟁의 조직,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화, 조직화를 위한 활동,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노력 등으로 요약,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지도, 지원 활동은 89년 7, 8월 투쟁 이래 본격적으로 개화된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과 노동 조합 결성 움직임에 주목하고, 그것이 올바른 노동자 계급의 사상인 과학적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 있도록 매시기 노동조합운동의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그 합법적 발전 대안을 제출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이념 정립과 단일한 대오 구축에 일조하였다. 87년 7, 8월 투쟁 직후 지역민주노조협의회 건설안의 제출, ‘88년 임금 인상 투쟁을 노동법 개정투쟁과 결합· 전파시키자 88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의 성과를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 대오 구축으로 수립시키자’는 등의 대안 제출, 전노협의 성격과 임무, 건설 방안 등을 밝히고 민주노총, 산별 조직 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 등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인노련(→인민노련: 연구팀, 이하 동일)의 빼놓을 수 없는 공헌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인노련은 매시기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운동 단체 및 다른 계급, 계층과 연

대하여 올바른 전술을 수립하고 정치 투쟁을 조직하는데 적극 앞장서 왔다. 특히 87년 대통령 선거 시기와 국회의원 총선 시기의 활동을 간과할 수 없다. 6월 항쟁 위기에 몰린 지배 계급이 위기 수습책으로 6.29 선언을 발표한 이후, 민족 민주 운동 진영은 변화된 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크게 동요하였고, 심지어는 부르조아 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하는 등 과행을 거듭할 때, 인노련은 독자 후보 전술과 '민중의 당' 활동을 통해 민중 운동의 진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다. 한편 인노련은 창립 초부터 88년 여름까지 두 대의 기관지, 『정세와 실천』, 『노동자의 길』을 발간하였다. 『정세와 실천』은 노동 운동·민중 운동의 주요 이론적·전술적 쟁점을 다룬 선진지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노동자의 길』은 파업 현장, 노동자들의 생활을 탐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주 발간된 노동자 대중 신문이었다. 이 두 기관지는 88년 여름에 진행된 토론의 결과로 전면 개편되었다. 단순한 '대중 신문'이 아니라 '선진 노동자를 위한 신문'을 발간할 것을 결정하여 『정세와 실천』을 폐간하고 『노동자의 길』의 체제와 내용을 바꾸었다. 새로운 『노동자의 길』은 민중 운동·노동 운동에 대한 당면 실천적 지침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노동운동의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선진 노동자들의 계급적·정치적 각성을 촉진하고 매춘·주택 문제 등 현실의 제반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노동자들이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노동자의 길』은 학습 모임·독서회·시사토론회 등 노동자들의 조직 사업과 결합하여 집필, 제작, 배포되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노동자 정당 건설의 인적·사상적·물질적 토대를 구축해가는 제반 과정이었다. 인노련은 노동자 계급의 정당 혹은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혁명적 조직 없이는 '전략'도 '민족 민주 전선'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역 차원에서나마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을 결합시키려고 전력하였다.

또한 인노련의 일부 역량과 뜻을 같이하는 그룹이 함께 준비하여 89년 8월에 창간된 『사회주의자』는 인노련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노동 운동의 전면에 내걸고 현실 운동 전반에서 전국적 전망을 확보한다는 문제 의식 아래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신속한 폭로와 해설을 하며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혁명적 노동 운동 역량간의 경험과 문제 의식의 교류를 매개함으로써 노동자 정당 건설의 조직적·사상적 기초를 쌓고자 발간된 정치신문이다. 『사회주의자』는 89년 10월 16일에 발생한 인노련 사건의 여파로 조직원 일부가 구속, 수배되어 4호까지 발간되고 중단되었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은 1989년 11월 18일 17명의 맹원이 연행, 구속됨으로써 시작되었고 총구속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pp167~173)

O12

주대환(周大煥, 교육선진부장), 황광우, 윤철호, 오동렬(총무부장, 상임 집행위원장), 노병직(중앙위원), 노회찬(조직국장), 정종주, 최명국, 이현영, 최건섭, 이면재, 김진희, 권우철, 신동수, 이태주, 김용숙 등

O13

수도권노동자선대위

O14

『노동자의 길(노길)』, 『정세와 실천』, 『사회주의자』 /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참조: 김선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노련)

치안본부는 1989. 10. 16.부터 오동렬, 노병직, 윤철호, 최남기, 노회찬, 김진희, 이면재, 정종주, 최건섭, 최병국, 이현영, 김용숙, 권우철, 이태주, 신동수, 김창덕, 김혜인, 심은남, 장인성, 신진화 등을 이적단체인 인노련 결성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1987. 6. 사회주의혁명노선에 따라 서울대와 고려대 운동권 출신 30여명을 중심으로 인노련을 결성하여 인천, 부천지역 공장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의식화 교육을 시켜왔으며, 인천 경동산업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는 등 이 지역 공장근로자들의 노조결성 및 파업을 주도해왔으며, 기관지로서 ‘정세와 실천’ 4호까지, ‘노동자의 길’을 41호까지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인노련은 1987. 6. 26. 발족하였고 1987. 10. 대의원대회에서 기본노선을 확정하여 정치조직으로 정확히 위치 지우고, 민주민주정부 수립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였다. 강령에서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해방과 민주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인천·부천지역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통일과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인노련은 노동조합활동 지원, 연대활동 강화, 민중의 정치세력화 도모,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사상적, 조직적 기초를 다지는 일에 일상적 활동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노련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였고, 재판투쟁과정에서 남한사회주의자로서의 개인과 조직의 입장을 천명하였다(윤철호 최후진술서 “한 남한 사회주의자의 법정 최후진술서”, 전국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노동자 사상·조직결성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노동자정치조직 사건 백서』, 1990. 7., 12-21쪽 ; 윤철호·오동렬외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남한 사회주의자들의 법정선언』, 일빛, 1990).

인노련은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607-노회찬의 상고사건에 대한 판결, 『법원공보』 제893호, 1991. 4. 1., 1007-1009쪽).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노련은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정치권력은 매관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중을 수탈하고 강압정치를 하여왔다는 현실인식 아래 이를 타도하고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제1단계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등 민중이 연대하여 반제, 반독점, 반파쇼의 계급투쟁을 벌리되 우선 민중을 선전선동하여 의식화, 조직화한 다음 합법, 비합법 등 모든 수단으로 민중혁명을 수행하여 민주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제2단계로 생산수단을 사회의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북한과 동질적인 사회가 된 다음 자연스럽게 남북통일을 이룬다. 이러한 반제, 반독점,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조직을 만들 목적으로 선진적 전위대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을 고취시키고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정치세력화한 다음,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민중정당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표면적인 투쟁을 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역량을 감당할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자정당을 결성하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정치신문 발간, 개별교양학습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주의 교육, 노동현장에 들어가 현재의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운동과 활동을 지원하며 이러한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의원회의,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구위원회, 분회, 총무국, 조직국 등의 기구를 둔 단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현실인식, 통일이념, 목적,

사업 및 조직의 인노련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뿐만 아니라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 각종 투쟁형태를 적절히 배합한 반제,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남한 단독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다음 북한과 통일을 이룬다는 북한의 선전선동활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노련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연구팀 의견>**

-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약칭의 경우 인노련이 아니라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 인노련이라고 할 경우 이전의 ‘인노련’(인천지역노동자연맹)과 혼동을 가져오며, 또한 통칭 ‘인민노련’이라고 불려졌음.

O1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O2

민교협

O3

서울, 인천경기지역회, 강원지역회, 대전충남지역회, 충북지역회, 광주전남지역회(최영태), 전북지역회, 대구경북지역회, 부산경남지역회

O4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1990)

O5

1987.7.21~현재

O6

O7

공개 / 합법

O8

간사체제로 출발한 민교협은 88년 8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의장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제2기에서는 공동의장제를 신설하였다. 원로 중진교수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고, 1기 말에는 지역협의체 의장들로 민교협 중앙의 의장단을 구성함으로써 집행기구의 운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직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던 바, 공동의장제는 원로, 중진교수들의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었다.

O9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취지문>

이 시대 한국의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이 사회의 민주화와 표리관계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 양자의 동시병행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이 절실함을 거듭 확인하여 왔다. 이러한 공동노력의 과정에서만 진정한 교권이 확립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동안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교권을 짓눌러온 비민주적 대학운영은 곧 반민주적 정치권력행사의 한 하부체계였던 바, 이 이중의 억압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양심과 지성의 목소리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사회의 민주화와 대학의 자율을 위한 고귀하고도 용기있는 외침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간헐적이고 때로는 개별적이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양심과 지성을 대변한 교수들이 탄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거의 축적과 반성 위에서 우리 교수들은 일보진전된 자세로,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공동노력의 장으로서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창립하는 바이다. 적극적인 동참과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들의 노력을 공동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과 사회의 민주화를 한걸음 더 앞당길 것을 다짐한다.

O10

86년 상반기는 개헌 및 민주개혁을 둘러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연이어 발표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선언이 88년 6월 ‘교수연합시국선언문’으로 일단락되던 즈음에 ‘부천서성고문사건’ ‘미국에 의한 충주여교사 폭행사건’등이 터졌다. 그러나 이러한 매사건에 대해 매번 교수집단이 사회적 선언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서 당면 정치적 제사건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 그 이후 87년에 들어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민주화운동이 고양되면서 교수들의 학교별 시국선언문이 다시 발표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학원 및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교수들의 조직화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다 널리 확산·정착화된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복직교수·소장교수·사회과학분야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직화의 시도가 이루어져 오다가 그것이 '민교협'의 창립으로 수렴되게 된다. 본래 6월 26일 평창동에서 창립대회를 치르려고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연기되어 7월 21일 정식으로 창립되게 된다.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p357)

민교협은 이날 채택한 협의회 규약에서 '대학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회의참석자들은 '사회와 학원의 민주화를 촉구하며'라는 선언문을 통해 '변화를 위한 진통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사회 각 집단에게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변화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요청은 우리 교수들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며 '현정권의 민주화에 대하여' 등 7개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1987. 7. 22)

#### O11

민교협 결성 이후 주요한 활동은 크게 교육민주화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민교협의 첫 번째 사업은 교육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일이었다. 87년 11월 5일에는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88년 8월 20일 대의원 총회에서 교육관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전교협, 사교련, 국교협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관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민교협 사무실에서 사학재단과 정치권력의 기만적 개정을 저지하고, 민주적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농성을 가졌다. 이것이 민교협 최초의 농성이었다. 교육민주화를 위한 두 번째 커다란 작업은 전교조의 결성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이었다. 89년 5월 21일 광주에서 열린 제14차 간사회에서는 교직원노조 참여문제가 논의되었고 5월 27일에는 교직원노조가 결성될 경우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교수들의 명단(29개 대학 145명)을 전교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교협에 전달하였다. 89년 5월 28일 전국교사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조로 발전하자, 6월 16일~17일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전교조 가입 서명작업과 전교조 대학위원회의 추진을 결의하였다. 6월 22일 대구 경북지역 교수 70여명이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 5일에 이르러서는 모두 45개 대학 441명이 전교조에 가입하였고 89년 8월 4일에는 명동성당에서 전교조 대학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90년 7월 '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위원회', 92년 6월 11일 '교육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등에 대거 참여하였다. 1990년 3월 16일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기습적인 사립학교법이 처리되자, 민교협은 즉각 농성투쟁에 들어갔고(1990. 3. 17-19), 1990년 6월 16일에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재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개악된 사립학교법 철폐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관계법안을 계속 국회에 청원하였다.(사공투 주최, '교육관계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 1990. 6. 30)

또한 민교협은 사회민주화운동 중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교협은 88년 서관모 교수의 논문 관련 검찰 소환, 조국 교수의 사노맹 사건 관련 직위 해제 등의 사건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였다. 또한 91년 수서비리 사건이 발발하자 3월 3일 '수서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광고를 한겨레신문에 게재하고 3월 19일 54개 대학 1,330명 교수들의 서명에 따른 성명서 발표, 3월 16일 국민연합 주최 수서비리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비리규명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이 전개한 농성은 민교협 차원에서 사회민주화를 위한 최초의 농성으로 기록되었다. 수서비리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인 91년 4월 26일 강경대 사망사건이 발발하자 4월 29일 민교협과 학단협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4월 30일 경남대 민교협 교수

들은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 이후 대학별 민교협 지회별로 농성이 계속되었고 5월 14일 ‘강경대 열사 1차 장례식’에 민교협 교수들은 ‘사랑하는 제자 죽인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참석하였다. 민교협 교수들의 대학별, 지회별 농성은 5월 18일 2차 장례식 때까지 진행되었다. (『6월항쟁과 한국사회 10년』 가운데 강남훈, 「지식인운동의 전개」, 학술단체협의회, 당대, 1997, pp388~403)

O12

초대 공동의장 : 김상기(金祥基), 김진균(金晋均), 송기숙

O13

O14

「민교협 월보」(『학술단체협의회, 6월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I』 가운데 강남훈, 「지식인운동의 전개」, 당대, 1997. pp398) / 학술단체협의회, 『6월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1997 / 『조선일보』, 1987. 7.22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취지문」(87.06.26), 211쪽

O1

민주헌법쟁취 전국노동자공동위원회

O2

민헌노위

O3

‘민헌노위’에 참여한 조직은 노동조합으로는 유일하게 청계피복 노조가 참여했고, 전태일열사 기념사업회, 박종만열사 기념사업회, 박영진열사 기념사업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및 인천지역협의회,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연합회 및 교구연합회, 가톨릭노동사목 전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및 지역연맹, 영등포산업선교회, 인천산업선교회, 성수한국산업선교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등 총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전노협 백서』, 1권 제8장 1절)

O4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O5

1987. 7. 6~?

O6

O7

공개 / 반합법

O8

O9

민헌노위는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헌법에는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요구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양심수의 전원석방, 해고노동자의 즉각복직, 8시간 노동제 및 최저임금제의 실시,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등 10개항을 요구했다. (『말』, 제12호, 1987. 8, p131)

O10

6.29 이후 확대된 투쟁공간에 자신들을 적극 배치시켜 노동운동의 발전을 도모하려했던 노동운동단체들은 나름대로 헌법개정문제, 해고자복직문제, 노총의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각성을 촉구, 결의시켜나갔다. 노동자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개정 헌법안에 확보할 목적으로 87년 7월 6일 전국 17개 노동운동단체들이 모여 ‘민주헌법쟁취 전국노동자공동위원회’를 결성하였다.(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1989, p194)

O11

민헌노위는 7, 8, 9월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군부독재와 자본가의 폭력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고 언론의 편파보도 중지, 노동3권 완전보장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였다.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1989, p194)

민헌노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민주헌법에 노동자와 농민,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시킬 것을 요구하며 특히 노동자의 단결권 및 파업, 시위의 자유보장, 8시간 노동제 즉각 실시, 해고 노동자 즉각 원직복직 등 10여개 항을 당면 투쟁목표로 천명했으며, 한국노총에 대해 ‘헌법개정 반대’ 등 노동자들을 배신한 행위를 솔직히 고백하고 전 노동자 앞에서 공개사과 뒤 ‘민헌노위’에 참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렇게 결성된 ‘민헌노위’는 1987년 7월 30일 가맹단체 만장일치로 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국민운동본부 노동자공동위원회 ‘로 활동을 전개해 갔다. ‘민헌노위’는 1987년 7월 19일 오후 6시 홍사단 강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는 대회의장의 대회취지 발표에 이어 주제발표 및 참가 노동자들의 의견개진, 결의문 채택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열기와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발표된 주제는 첫째, 민주화의 선결과제로서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구속자들의 전원석방, 블랙리스트와 취업카드의 완전철폐 등에 관한 내용, 둘째, 노동3권으로서 노조결성의 자유 및 파업시위의 자유쟁취에 관한 내용, 셋째, 최저생계비의 보장과 8시간 노동제에 관한 내용, 넷째,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한 내용, 다섯째,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악용 실태와 그 법의 철폐에 관한 내용이었다. '민헌노위'는 그 밖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의 입장',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투쟁은 민주화의 초석이다'. '군부독재 종식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자!'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전노협 백서』, 제8장 1절)

87년 8월 16일 개최된 '민족해방을 위한 결의대회'(8.15해방기념집회)에서는 범민주 과도정부를 당면의 정치적 목표로 내걸고 노동자·농민 등 민중세력이 정치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1989, p194)

O12

공동위원장 : 류동우, 이영순, 이충각, 정인숙, 김종성

O13

O1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 『전노협 백서』 1권 /『말』, 제12호, 1987. 8

O1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O2

노민위

O3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금융노련 산하 18개 노조, 연세대 의료원 등 연합노련 산하 4개 노조, 세진전자 등 금속노련 산하 4개 노조, 한국슈어프로덕츠 등 화학노련 산하 4개 노조, 남해어망 등 섬유노련 산하 3개 노조가 노민위 결성에 참가하였다.

O4

O5

1987. 7.12~?

O6

O7

공개 / ?

O8

O9

<발족취지문> : 노민위는 단위노조를 비롯한 노총까지 모든 노동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 노동법 개정이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 노동자의 손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1.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노동법은 노조설립신고제,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규정, 3자개입금지조항, 노동쟁의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의 철폐 등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담은 내용이어야 하며, 1. 산별연맹을 비롯한 노총위원장의 직선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O10

1987년 5월 8일 ‘한국노총의 4.13조치 지지를 반박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금융노련 13개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5개 산별연맹 산하 33개의 단위노조 간부 112명이 모여서 1987년 7월 12일 ‘노동조합 민주화 실천위원회(이하 ‘노민위’)'를 결성하였다. 이 날 ‘노민위’ 결성에 참여한 단위노조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금융노련 산하 18개 노조, 연세대 의료원 등 연합노련 산하 4개 노조, 세진전자 등 금속노련 산하 4개 노조, 한국슈어프로덕츠 등 화학노련 산하 4개 노조, 남해어망 등 섬유노련 산하 3개 노조였다. (『전노협 백서』, 제4장 1절)

O11

이들은 한국노총 간부 상당수가 집권당 당원인 점을 들어 현재의 노총체계로는 1백만 조합원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전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6.29 이후 변화된 이 시점은 노동자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라며, 그 과제으로써 ‘노동조합의 완전한 민주화 작업’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첫째 노동법을 노동자의 손으로 개정할 것, 둘째 노동3권을 완전보장할 것, 셋째 한국노총과 산별연맹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선거를 직선제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7월 26일에는 ‘자주,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근로자 공청회’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는 노민위 소속 70여개 단위노조 간부, 조합원 등 4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안(시안)’을 기초로 이를 비판, 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했고, 현대엔진 노조결성 투쟁사례를 발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해 민주화 운동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과 노동자에 의한 노동3법의 자주적, 민주적 개정, 노총위원장과 각 산별노련 위원장의 직선제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전노협 백서』, 제4장 1절)

노민위는 <발족취지문>을 통해 현재의 한국노총이 “차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구조적, 인적

부패상을 보이고 있고, 87년에 들어와서는 그 정도를 넘어 지극히 중대한 반 노동자적인 과오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그 구체적 실례로서 노민위는 노총의 4.13조치지지성명, 노총에서 해고된 전문위원들을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않는 행위, 노총위원장 및 대부분의 노총간부들이 민정당원이라는 점, 노동법개정에 대한 형식적, 기만적 자세를 들고 있다. 노민위는 노총이 6.29선언 이후 파격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고 4.13 지지성명에 대한 만회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민위는 단위노조를 비롯한 노총까지 모든 노동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 노동자의 손으로 개정돼야 하며, 1.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노동법은 노조설립신고제,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규정, 3자개입 금지조항, 노동쟁의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의 철폐 등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담은 내용이어야 하며, 1. 산별연맹을 비롯한 노총위원장의 직선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 제11호, 1987. 8, pp.129~130)

O12

O13

O14

『전노협 백서』 / 『말』제11호, 1987. 8

O1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

O2

서철협

O3

O4

O5

1987.07.17~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85년-86년 각 지역 '세입자대책위'의 결성과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등 외곽지원단체들의 등장은 도시빈민운동을 한 차원 높여 지역내 싸움을 넘어 지역간 연대투쟁을 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정부의 '합동재개발'이란 방식으로의 정책변화는 세입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고립분산적인 지역별 철거반대투쟁만으로는 힘이 현격히 약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지역 빈민들은 실제로 86년 여름 세 차례의 '연합대회'를 가졌고 그 해 9월 4일엔 '서울시 20개 재개발지역 주민연합'을 결성하였다. 이어 87년 7월 17일 양평동 철거에 항의, 민주당사농성에 참여했던 각지역 철거민 대중들은 농성직후 도시빈민대중의 자발적 협의회로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말』21호, 1988. 3, pp.46~47)

O11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는 서철협, 빈민활동가, 천도빈, 기빈협, 도시노점상연합회 등 모든 도시빈민운동세력이 '노태우 철거없이 빈민생존 보장없다'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11월 26일 상계동에서 3만여 인파가 모인 대규모 도시빈민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말』21호, 1988. 3, pp46~47)

O12

O13

O14

『말』21호, 1988. 3

O1

서울지역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O2

서해투

O3

O4

O5

1987.7.19~?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6.29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노동자의 원직복직, 부당해고 반대, 구속노동자 전원석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주장하며 87년 상반기 노동투쟁과정에서 해고된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87년 7월 19일 성문밖교회에서 결성하였다.(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p195)

O11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는 6월 민중투쟁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3권보장, 해고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자본가들의 노조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당해고에 맞서 해고반대연대투쟁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p.195)

O12

O13

O1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O1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O2

인혜협

O3

O4

O5

1987. 7.19~?

O6

인천

O7

공개

O8

O9

O10

87년 노조민주화를 위한 움직임과 아울러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해고반대, 복직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될 기운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안1동 성당에서 8백여 해고노동자들이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p325)

O11

인혜협은 결의문을 통해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은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천만 노동자와 굳건히 결합해 투쟁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생산현장인 단위공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혜협은 복직투쟁은 노동자들만의 고립적 투쟁이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지식인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고노동자들이 해고자들의 복직이 곧 우리사회의 총체적 민주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고자들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해 인혜협은 창립선언문에서 “전국 각지에 해고노동자 단체가 결성돼 연대하여 투쟁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말』, 제12호, 1987. 8, pp129~130)

O12

O13

O1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 『말』, 제12호, 1987. 8

O1

한국정치연구회

O2

한정연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7. 8~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한정연의 구성은 현재(1999년) 회장단, 고문단, 연구위원, 활동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휴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체계는 회장단, 연구기획회의, 3부(기획부, 연구부, 총무부)와 분과 및 팀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특별기구로서 편집위원회가 존재한다. 현재의 한정연 조직구조로 자리잡기까지 다소의 변화가 존재하였는데 먼저 가장 큰 변화는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각 분과가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 팀체제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1998년까지 한정연 활동의 골간구조는 한국정치분과, 이론분과, 사상분과, 북한분과로 구분되는 분과체제였으나, 1998년 이후 회원들의 다양한 전공영역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연구팀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현재의 팀체제는 한국정치분과와 이론분과가 역사정치팀, 정치경제팀, 정당선거팀으로 분화되었으며 사상분과는 민주주의팀과 문화정치팀으로 분화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팀으로서 사회운동과진보정치팀이 1999년 6월말에 구성되었다.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p271~272)

O9

O10

6월 민주화대항쟁의 압력에 의해 전두환정권이 6.29 선언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1987년 8월, 한국정치연구회는 학술운동을 통한 진보적 정치학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정식으로 발족했다. 즉, 전두환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이 한창 고조되고 있던 1986년 봄, 몇몇 대학원생들이 민주화를 위한 학술운동적 문제의식에서 정기적인 월례 토론토모임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한정연 발족의 모태였다. 뒤이어 참여하는 규모가 확대되었고 그 해 겨울 한정연의 정식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과 노력들에 의해 1987년 민주화 대항쟁의 분위기가 무르익던 8월 한정연은 출범하였으며 그 활동 또한 충실히 진행되었다.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271)

O11

한정연이 초기 활동은 진보적 학술단체로서 학술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그 성과가 축적되어왔다. 한정연의 일상적인 각 분과 및 팀활동 및 월례토론회 이외에도, 1988년에 『반파시즘 민주혁명론』(이론과 실천)이 번역되었고, 1989년에는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백산서당), 『한국정치론』(백산서당), 『사회주의이론과 운동』(한길사)이 1990년에는 『한국정치사』(백산서당)와 『북한정치론』(백산서당), 『한국전쟁의 이해』(역사비평사)가 집필, 간행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진보적 정

치이론서를 갈망하던 학부생들의 갈증을 해결하였다. 또한 한정연은 1988년 11월 학술단체협의회 결성에 그 창립멤버로서 참여하는 동시에 매년 개최되었던 학단협의 연합심포지움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진보적인 학술진영의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적극적인 활동에 비해 1990년대 전반기에 들어 한정연의 활동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1990년대에 들어 공안탄압이 그치지 않았고,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에 따라 학술운동의 이념적 실천적 지평이 더욱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연의 활동은 대외적인 차원보다는 내부적인 측면에 치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정연은 1992년 『현대민주주의론』1, 2권(창작과 비평)을 번역 · 집필했고 1993년에는 내부자료로서 『한국정치연구회 글 모음집』1,2권을 간행하는 한편, 『국가와 시민사회』(녹두)도 번역함으로써 꾸준한 연구활동을 지속했다. 또한 같은 해 대중용 교재로서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1, 2, 3(녹두)도 간행되었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정연 초창기의 학술작업이 주로 한국사회의 변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 그 초점은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있었다.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p272)

O12

이수인(李壽仁, 초대 회장, 영남대 교수), 최장집(2대 회장), 김세균(3대 회장, 서울대 교수), 박호성(서강대 교수, 4대 회장), 손호철(5대 회장, 서강대 교수), 정영태(6대 회장, 인하대 교수), 정해구(丁海龜, 7대 회장, 성공회대 교수)

O13

O14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학술단체협의회 창립선언」(88.11.05), 213~214쪽

O1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O2

지하철노조

O3

O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O5

1987. 8.12 ~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총회 - 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사무국, 교육선진실, 정책실) - 각 지부(역부지부, 승무지부, 차량지부, 기술지부, 본사특별지부)

O9

하나. 우리는 투철한 동지애와 믿음으로 단결하여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하나.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관계를 확보하여 조합원의 인간다운 노동 조건을 성취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복지 사회의 실현과 선진민주국가 건설의 기수가 된다.

하나. 우리는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민주노조의 사회적 사명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수도권교통의 역군으로 시민복지의 향상과 공사발전에 이바지한다.

O10

지하철노조는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권위주의와 직장 내의 억압적·비민주적 요소, 열악한 근로조건, 저임금 등을 척결할 것을 주장하며 87년 8월 12일 결성되었다.

O11

서울지하철 노사 양측은 87년 11월 노사합의로 새로운 직제를 88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내용이 88년 6월까지 시행되지 않자 노조는 준법투쟁에 돌입하였고, 이렇게 되자 지하철 공사측은 합의사항을 8월 20일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사항조차 또 다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자 회사는 6월 합의사항 중 일부만을 수용하고 근무형태변경을 통합 8시간 노동제 등은 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3번째 합의각서를 교환하였다. 이렇듯 3차례에 걸쳐 노사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이행촉구를 위한 교섭마저 결렬되자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서는 3월 6일 무임승차투쟁을 전개한다. 이러한 노조의 투쟁에 서울시민 90%가 무임승차로 호응함에 따라 3월 7일의 재교섭이 타결되는 듯 했으나 고건 서울시장 등이 합의문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교섭은 완전 결렬되었다.

이에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3월 16일 성동 군자 차량기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은 6시 25분, 경찰병력 7,000여명을 투입하여 25분만에 농성조합원 2,344명을 연행하여 그중 정윤광 위원장 등 20여명의 지도부를 구속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조합원 3,000여명은 임시지도부를 구성하고 평민, 민주 양당을 짐거하여 농성투쟁을 하며 지속적으로 투쟁의 파고를 높여갔다. 이러한 지하철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에 서노협을 비롯한 각 노동운동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랐으며 일부 대학은 지지집회까지 조직하는 등 정부의 파업노동자에 대한 흑색선전과 달리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이 투쟁은 3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을 통해 노조의 요구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1, pp150-151)

O12

배일도(裴一道, 초대 및 1대 위원장), 김명희(2대 위원장), 정윤광(3대 위원장)

O13

O14

서울지하철노조 홈페이지 <http://www.sslu.or.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1

O1

한신대직원노동조합

O2

O3

O4

전국연합노조연맹

O5

1987. 8.21~

O6

화성

O7

공개

O8

O9

1. 우리는 대학직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2. 우리는 대학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수호하여 대학의 발전을 기한다.
3. 우리는 조국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에 공헌한다.

O10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구성, 전국교사협회의 조직 등 교육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대학의 행정들을 담당하는 대학직원들이 대학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수호를 표방하며 노조결성을 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리고 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의 과정에서 한신대학 직원노동조합을 필두로 청주대, 고려대, 서강대, 세종대 등 6개대학에서 직원노조가 결성되었다.

대학자체의 행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행정이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대학의 행정을 맡고 있으면서도 중요정책 결정과정에는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소외, 심지어 학생시위진압에 동원되는 등의 문제점을 느껴 오던 중 한신대에서는 8월초 5명이 모여 노조결성을 준비했다. 한신대의 경우 오래 전부터 직원회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친목도모만 할 뿐 직원들의 권익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직원회의 경우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업무상의 차이로 직원간의 반목현상도 종종 생기는 등 직원회의 문제점이 2, 3년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노조결성은 엄두도 못내고 단지 직원회를 권익보호단체로 전환할 것인가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노조결성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8월 21일 노조를 결성하고 9월 9일 화성군청에서 신고필증을 받았다. (『말』, 17호, 1987. 11, pp34~35)

O11

한신대의 경우 노조가 생긴 뒤 학교분위기가 훨씬 좋아져 근무하는 태도도 향상되었다. 전에는 종속적 관계라 생각했기 때문에 위축되고 자발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로 대등하다고 느껴짐으로서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 결성대회가 끝난 뒤 이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나붙었고 9월 9일 출범식에는 학생회장도 축사를 했다.

한신대 직원노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노력하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도 역점을 두었다. 또한 그간 대학이 문교부를 통한 관의 통제로 시달려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학원 민주화운동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었다. (『말』16호, 1987. 11, pp34~35)

O12

성낙인(위원장)

O13

O14

『말』 16호, 1987. 11

01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사건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대회 참조)

02

전대협

03

전국 183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2개 단체

04

범정학련, 전국연합

05

1987.8.19~1993.3

06

07

공개 / (반)합법 (?)

08

전대협은 명칭이 그러하듯 협의체조직이며 대학의 대표자(총학생회장)를 회원으로 한다. 전대협은 전국을 8개 지역, 26개 지구 및 1개의 특별지구로 구분하고 각 대학 학생회를 기본단위로 지역총련-지구총련-총학생회-단대학생회-과학생회로 내려가는 위계적 형태로 구성되었다. 모두 180여개 대학과 2개 단체가 가입하였다. 각 대학 총학생회장은 최고권력기구인 총회의 대의원인 동시에 소속 각급 지역·지구조직의 의장단(대표자연석회의, 중앙상임위원회, 의장단회의 등)으로 활동하였다. 전대협의 의결 및 집행체계는 총회와 중앙위원회, 의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중앙집행국, 특별기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회는 전대협의 최고권력기관이며 최고의 사결정기구이며 전대협 회원인 각 대학 총학생회장 전체로 구성되었다.

중앙위원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 지구대표자로 구성되며, 중앙정책위원과 각 집행국장이 참가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월 1회 열리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 또는 지구대표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보통 10시간 정도 걸리는 밤샘회의로 진행되었다. 중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은 협의와 토론 그리고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한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대협 의장단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전대협 의장은 전대협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대표가 되어 각 회의를 주재한다. 전대협 제1기 의장은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이인영 서대협 의장이었고, 제2기 의장은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오영식 서총련 의장, 제3기 의장은 당시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임종석 서총련 의장, 제4기 의장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송갑석 남대협 의장이었다. 그리고 제5기 의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김종식 서총련 의장, 제6기 의장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태재준 의장이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대협의 상설집행기구로서 의장, 중앙정책위원, 각 집행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기에서 연락사무국을 정책위원회로 전화하고 중앙집행국을 건설한 것이 토대가 되어 설치한 것이다. 정책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정책보좌기구로서 각 지역·지구 의장단의 승인을 받은 지구정책위원장과 중앙정책위원장(중앙 상근)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정책위원은 중앙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었다. 정책위의 정책 생산의 역할은 토론과 논의로 제한하였으며 의결은 의결단위(총회-중앙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중앙집행국은 전대협의 최고 중앙실무단위로서 사무국, 선전국, 편집국, 연대사업국, 투쟁국, 문화국을

두었다. 중앙집행국원은 전대협이 중앙간부로서 전대협의 제반 사업에 정통해야 하며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하부에 대하여 전대협 사업 전반에 대한 교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중앙집행국원은 지구의장단회의의 추천과 검열을 거친 후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마치면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정식 중앙집행국원이 되며, 중앙집행국 각 국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전대협은 계기적·일상적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대협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었다. 특별기구는 전대협 규약상 '학원자주 실현을 위한 소위원회(학자소위)',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학추위)', 대변인을 두고 있었다. 제5기 학추위 위원장은 한철수 경희대 총학생회장이고, 제4기 전대협 대변인은 김재웅 당시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으며 제5기 전대협 대변인은 허동준 중앙대 총학생회장이었다. 특별기구의 대표적 예는 1988년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촉진 학생위원회', 1989년의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 1990년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이다. 이 세 특별기구는 조국통일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이었는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환 당시 서강대 총학생회장이었으며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의 제1기 위원장은 권오중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다.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지음, 돌베개, 1991, pp234~244)

O9

<전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백만 청년학도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자주·민주·통일된 새 조국 건설과 미래의 주인인 청년학생의 정의로운 삶을 위해 구국의 선봉대로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조국과 민중 앞에 엄숙히 맹세한다. 1.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군사·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목숨보다 소중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여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1. 친미군사정권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철폐하고 민중의 창조적·자주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1.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조국의 통일을 이룩한다. 1. 학원내 온갖 반민족적·반민주적 교육과 억압적 제도를 청산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의 민주화·자주화를 이룩한다. 1.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중과 모든 애국적 교사, 언론인, 종교인, 정당정치인, 군인 등을 망라한 각계각층과 굳게 연대하여 싸워나간다. 1. 학원과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억압적·비인간적 제도와 문화를 청산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1.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과 핵을 반대하고 순결한 조국강토를 같이 보전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한다. 1. 백만 학도의 단결과 연대를 도모하는 한편 북녘의 청년학도와 전면적이고 자주적인 교류를 실현하여 청년학생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앞장선다. 1. 백만 학도의 부문별·계열별 조직활동을 적극 지지·지원하여 학우들의 다종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1.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청년학생과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지음, 돌베개, 1991, p220~234)

O10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서대협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중투쟁이 지역별로 고립적이고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투쟁의 질적·양적 증폭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통일적 인식과 실천을 모아낼 전국적 지도중심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87년 당시 학생운동은 민족해방(NL)계열과 체현의회(CA) 계열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이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NL 계열 학생들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호남지역 학생회연합(호남학련), 부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부총협)

등의 지역별 연합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6월 항쟁 이후 이들 지역조직은 전국적인 연합을 모색하여 각 대학 총학생회를 연합을 축으로 하여 전대협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87년 8월 19일 충남대학교에서 3만 여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경기·충청·강원·호남·영남지역을 포괄하는 전국 95개 대학의 전국적 협의체로 발족하였다.(조지훈, 『80년대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1989, p84~85)

전대협 결성대회에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노동운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전제,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표출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 군부독재정권의 토진 - 통일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정치 협상에서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것 -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 - 미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학생들은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전국 6개지역-19개지구별 대표들의 간접투표를 통해 전대협의장에 서대협 의장인 이인영(22.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부의장에 경인대표 우상호(25.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4명을 선출했다.(『조선일보』, 1987. 8.20)

#### O11

전대협은 1987년 공정선거감시단 활동, 1988년 6·10, 8·15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투쟁, 11월광주·5공청산 투쟁, 1989년 임수경(林秀卿)의 평양축전 참가, 1990년 8·15범민족대회 추진, 광주민중항쟁 10주년 계승투쟁 등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학생운동의 선봉에 섰다. 핵심간부들에 대한 구속·수배 등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씩 거행되는 전대협 발족식은 해마다 규모가 커져1992년에는 6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제 1기 전대협은 6월항쟁의 일차적 승리인 ‘직선제 쟁취’를 기반으로 하여 대통령선거투쟁에서 승리하여 ‘최소한의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당면 과제 중 하나로 삼고 10월 13일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지지활동을 시작한다. 결국 대선 투쟁에서 비판적 지지론과 후보단일화론으로 분열되면서 CA와 NL노선이 독자적인 대선 투쟁을 하여 대선에서 패배를 맛보게 된다. 이후 학생운동은 ‘분열은 죽음이고 단결은 생명이다’라는 교훈으로 88년에는 CA노선까지도 통일단결의 대오에 동참하여 전대협을 강화하기 시작한다.(『80년대 학생운동 야사』 6월간 말 1990년 8월호, p.173)(조지훈, 『80년대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1989)

88년 제2기 전대협 시대는 통일의 깃발을 올리며 88년 3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중기 군의 선거공약에서 남북학생회담이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제2기 전대협은 6.10남북학생회담을 북측에 제안하고 전대협 산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조통위)를 구성하고 6.10 남북학생회담 준비에 들어간다. 특히 5월 들어서 조국통일을 외치며 투신한 조성만 열사의 사건을 계기로 조국통일에 대한 관은 증폭되어 간다.(김재희 외, 『벗이어 어서 오게나』, 이웃, 1994, p.228.) 6월 10일 연세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학생이 모여 6.10민주화투쟁 1주년 기념대회 및 판문점 출정식을 가졌다.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세워 뛰어 내리고, 뒷산을 타고 넘어오는 등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이때부터 전대협이 주도하는 집회는 원천봉쇄가 되더라도 기기묘묘한 진입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사수한다는 기풍이 생겼다. 6월 10일 당일 홍제동, 서울역, 임진각 등에서 판문점으로 가려는 학생들과 경찰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다. 결국 6.10회담은 성사되지 못하고 전대협은 8월 15일 제2차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한다. 8월 8일 고려대에서 발족식을 가진 1기 ‘통일선봉대’(이때부터 구성된 통일선봉대는 해마다 여름이면 다시 구성되어 전국을 순례하며 통일운동을 알려내고 8월 15일 서울에서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일정을 끝냈다.)는 전국을 돌며 국토순례를 하여 8월 15일 다시 전국의 학생들과 함께 연세대로 모여들었다. 이러한 통일운동은 이후 전대협과 학생

운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이루고 있다.

89년의 제3기 전대협은 임종석(한양대 총학생회장)의장과 임수경(외국어대 용인 배움터)대표로 집약될 수 있다. 전대협 6년사에 있어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고 많은 충격을 주었던 3기 전대협은 환상의 진입과 영광의 탈출이라는 일화로 유명하다. 6월 29일 평양축전참가 출정식이 벌어지는 한양대에 경찰의 원천봉쇄를 비웃으며 학생들은 뚝섬 역에서 지하철을 세우고 철길을 달려 한영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29일 밤 전대협 대표 임수경이 평양행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다음날 경찰은 학내로 임종석 의장을 잡으러 진입한다. 그러나 전대협 지도부는 한 명도 잡히지 않고 남대협(현재의 남총련)의 전투조인 오월대의 호위아래 한양대를 무사히 빠져나와 다음날 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기동력을 보인다. 이후 임종석 의장은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얻고 경찰의 경계망을 조롱하며 전국을 다녔다. 특히 3기 전대협은 평양축전에 임수경 대표를 참가시킴으로서 학생운동이 통일운동의 선봉대임을 확인시켜주고 실질적으로 민간차원에서 북한과 접촉하여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고, 통일운동사에 일대 전진을 가져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2』 월간 『말』 1993년 8월호, pp.214~217)

90년은 3당 야합으로 시작된 한해였다. 이러한 3당 야합은 학생운동권에서 강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5월 9일 민자당창당일 날 87년 6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20만 이상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미문화원이 불타 버린다. 5월이 되면서 광주항쟁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제4기 전대협 출범식이 전남대에서 예정되어 진다. 그러자 정부는 광주를 봉쇄하고 학생들을 역과 터미널에서 막는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의 도움과 학생들의 광주로 향한 발걸음은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 4기 전대협 출범식은 7만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고 광주항쟁 10주년 행사를 금남로에서 치러 내게 된다. 이 당시의 상황으로 '모든 길은 광주로 통한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90년 여름은 88년 89년의 통일운동의 성과로 베를린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결성하고 제1차 범민족대회를 8월 15일 연세대에서 개최한다. 학생운동은 이후 조국통일을 가장 큰 과제로 보고 통일운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 (『구국의 강철 대오 전대협 3』, 월간 『말』 1993년 9월호, pp.210~213)

91년 제5기 전대협은 이른바 분신정국이라는 표현으로 집약된다. 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경찰의 최파이프에 맞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5월 투쟁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일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리로 나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쳤고, 전국 145개 대학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승희, 천세용, 김영균, 김기설, 윤용하, 김철수 등의 분신자살이 이어지고 급기야는 성균관대의 김귀정 학생이 시위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분신정국은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과 혼란을 일으키며 5월동안 전국의 대학은 시위와 수업거부를 통하여 노태우 정권을 압박한다. 그리고 그해 12월 1일은 현재까지 재야운동권의 구심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창립되면서 재야운동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구국의 강철 대오 전대협 4』, 월간 『말』 1993년 10월호, pp.210~217)

제6기 전대협은 92년 범민족대회에서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을 결성하고 통일운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대협 내부의 분파인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로 나누어지던 양대 구조를 벗어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게 된다. 결국 회원수 100만, 간부 4만, 핵심간부 1만, 총예산 연 50억원, 상시전투력 2개사단, 참가 학교 전국 180여개 대학, 정권이 두 번 교체되는 동안 미국을 가장 미워하고, 조국을 가장 사

랑하는 단체인 전대협은 6년간의 막을 내린다.

박흥 총장의 폭로, 유서변조사건, 학생들의 분신을 비판하는 김지하의 글 등 학생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이 드러나게 되고,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투쟁대상으로의 정권의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투쟁에 대한 설득력이 점차로 약화되어 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대협 7기에 이르러 1993년 3월 경희대에서의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전대협을 해체하고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한총련) 건설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 1993년 5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으로 재발족하였다.

O12

이인영(李仁瑩, 제1기 의장), 오영식(吳泳食, 제2기 의장), 임종석(林鍾皙, 제3기 의장), 송갑석(제4기 의장), 김종식(제5기 의장), 태재준(제6기 의장), 우상호(禹相虎), 임수경(林秀卿)

O13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한국총학생회연합(한총련)

O14

조지훈, 『80년대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1989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지음, 『전대협』, 돌베개, 1991 / 『전총련으로 가는 전대협 6년』, 월간 『길』, 93년 4월호 / 김광, 『학생운동논쟁사2』, 일송정, 1991 / 『조선일보』, 1989. 7. 1 / 『조선일보』, 1987. 8.20

O1

한국여성민우회

O2

여성민우회

O3

서울남부, 남서, 동북지구 등 세 개 지구와 생활협동조합, 충북여성민우회 등이 있다.

O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O5

1987. 9.12~현재

O6

서울, 충북(~93)

O7

공개 / 합법

O8

O9

O10

한국여성민우회는 과거 소수 뛰어난 여성들이 곧은 소리로 외쳐대던 선언적 운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평범한 여성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9월 12일 여성백인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선언문에서는 이러한 운동에 ‘도시와 농촌의 근로여성대중, 주부, 청년 등 고통받는 모든 여성이 참여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실제 1백여명 되는 발기인 중의 대다수가 직장여성, 주부, 청년들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창립대회는 첫 출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백여명이 되는 남녀가 대회장을 뺨뺨이 메워 그간 여성운동계 주변에서 일어난 대중단체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말』15, 1987. 10, pp53~54)

O11

87년 여성민우회를 창립하고 여성들의 건강한 사회의식을 위해 <함께가는 여성>을 발간하였다. 88년 직장내 폭력추방 운동, 교육정상화를 위한 활동,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을 펼쳤고 89년 생활공동체운동의 하나로 ‘함께가는 생활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90년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계간 사무직여성>을 창간하였으며 평생평등노동권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를 위한 활동(차별임금 소송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91년 가사노동가치 인정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정착을 위한 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92년 ‘환경과 소비자 운동-유기농업의 현주소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p350~351)

O12

이효재(초대 회장), 한명숙

O13

O14

『함께가는 여성』(89. 9. 계간)(『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p350~351) / 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 『말』15, 1987. 10

O1

민족문학작가회의

O2

작가회의

O3

지회 - 부산지회, 울산지회, 광주전남지회, 전북지회, 제주지회, 대전충남지회,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남지회, 대구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경북지회 / 지부 - 부천, 순천, 무주, 목포, 영광

O4

O5

1987.9.17~현재

O6

O7

공개 / 합법

O8

전국 13개 지회와 5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조직체계로는 크게 총회, 이사회와 사무국, 위원회, 장르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자유실천위원회, 통일위원회, 국제위원회, 문화정책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편찬위원회, 젊은작가포럼, 기금관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민족문학연구소, 정보문화센터 등 모두 11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장르분과는 시분과, 소설분과, 평론분과, 희곡분과, 시나리오분과, 아동문학분과 등 모두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2003년 7월 현재)

O9

<창립선언문> 1.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우선 투옥문인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가 석방·복권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약이 철폐되어야 한다. 1.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다수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국가의 근본이며 이들이 자기 삶의堂堂한 주인노릇을 하는 사회가 참된 민주사회이다. 지금 이 땅의 노동현장과 생활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민중의 권리주장은 역사의 순리로 존중되어야 한다. 1. 민족의 사활이 걸린 통일문제는 한반도 민족성원들의 자주적 결단에 맡겨져야 하며, 정부당국과 일부 외국인들이 그 논의를 독점하는 사태부터 먼저 시정되어야 한다. 1.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실현의 과제는 문학만으로 풀 수 없는 역사의 큰 일감인 동시에 문학을 통한 생생한 현실점검과 뜨거운 복돋움, 인류문화의 공동유산에 대한 문학인의 개방적 자세와 민족전통에 대한 끈덕진 애착을 보태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할 지난한 과제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스스로의 이기주의·타협주의·도시주의와 준엄히 싸우며 참다운 민족문학의 건설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p226)

O10

1987년 9월, 6월민주화항쟁과 7·8월노동자대투쟁을 경과한 낙관적이고 승리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난 1974년(11월 ‘문학인 101인 선언’) 이래 13년간 진보적·양심적 문인 대중의 유일한 조직체였던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민족문학작가회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확대·개편되어 재창립되었다. 이는 ‘자유실천’이라는 역대 파쇼독재정권하의 수동적·방어적 슬로건과 조직체계를 보다 포용력있고 전진적인 ‘민족문학’이라는 슬로건과 조직으로 변화시켜 민족문학진영의 압도적 실세에 걸맞은 새로운 문학운동의 틀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직체계 안에는 보다 많은 진보적·양심적 문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p328~329)  
 민주화의 새국면을 맞아 자유실천문인협의회(약칭 자실)가 범문단적 문학단체를 표방하는 민족문학작가회의로 확대, 개편된다. 자실의 개편은 단순한 명칭변경을 통한 기구확대를 넘어서 사실상의 진로수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대해 백낙청씨는 '5백여 자실회원들은 자동적으로 민족문학작가회의로 수용되는 등 자실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참다운 민족문학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민족문학」의 구체적 정리는 '앞으로의 토론을 거쳐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987. 9.10)

O11

1988년 7·4 공동성명 14주년을 맞아, 남북작가회담 제안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남북작가회담의 개최를 제창한다」는 제하의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단 명의의 이 제의서는 1988년 들어 붓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조국통일촉진운동이 문화예술운동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심화시켜 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이 제의서와 북한측의 수락,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비접촉시도 등 일련의 과정을 봉쇄함으로써 남북 문화교류·민간교류의 웅색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으며 예비접촉을 시도했던 민족문학작가회의측 문인들에 대한 연행·억류·입건 등 일련의 탄압은 7·7 선언의 무색화를 초래한 대표적인 증거로 남게끔 되었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p329)

작가회의의 주요 실천 내용은,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옥문인 및 양심수 석방·복권, 참된 민주사회 건설, 자주적인 통일, 참다운 민족문학 건설 등이다. 이를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약 철폐, 노동현장과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권리주장 존중, 정부 당국과 일부 외국인들이 논의를 독점하는 통일 문제의 자주적 결단 촉구, 문학을 통한 생생한 현실점검과 문학인의 개방적 자세 견지, 민족전통에 대한 애착 등을 강조하였다. 1994년 3월, 창립 20돌을 맞아 문학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민족문학인 선언>을 채택하였고, 2000년 소설가 이문구(李文求)를 이사장으로 맞은 뒤 창립 당시의 진보적 이념과 운동에 반대했던 문인들을 임원진에 포함시키고 시·소설·평론 등 각 분과별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잡지 창간과 품평회, 인터넷 창작마을 개설 등 창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전국에 13개 지회가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하고 있다. 84년 계간지 <실천문학>을 창간하였으며 95년부터 <내일을 여는 작가>, <푸른작가>를 발간하고 있다. 주요 기관지로는 <민족문학작가회의 회보>가 있다.

O12

김정환(회장), 고은(高銀, 부회장), 백낙청(부회장) - 1988년 당시 기록

O13

자유실천문인협의회

O14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민족문학회보』/  
 『조선일보』, 1987. 9.10

O1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O2

전교협

O3

시도교협 산하의 시군구교협은 9월 11일 강원도 홍천교협이 결성된 후 89년 말까지 121개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교사협의회 건설과 직간접의 관계를 가지면서 교사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현장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던 평교사회도 89년 초까지 700개에 이르게 된다. (장기평,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형성사, 1989, pp42)

O4

O5

1987.9.27~1989.5

O6

O7

공개 / 합법

O8

시도별 교사협의회 - 평교사협의회-일부 교사단체(전국초등민주교육협의회 등).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민주교육추진’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과도적이고 상징적인 조직으로서 협의체수준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었으나, 88년 여름의 시·군·구교협의 결성과 교육법개정투쟁의 전개로 일정 극복되었다. 여름방학을 거치면서 서울시 5개 지역교협이 완성되고, 지방에서도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시·군·구교협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회원 숫자가 2~3배 가까이 가히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비록 대부분의 단위학교에서 아직 공개적인 조직(분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전국적인 상부에서부터 단위학교의 기초조직까지 어느 정도 체계적인 조직형태가 갖추어졌고 회원카드 등을 통해 회원도 명시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민주교육추진」이라는 과도적 명칭을 떼어버리고 「전국교사협의회」로 재탄생하였다. 전교협은 교육법개정투쟁을 거치면서 중앙이 단위학교 및 시·도교협의 상부로서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면서 연합체적 성격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장기평,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형성사, 1989, pp195~197)

O9

O10

6월 항쟁 이후 독재세력의 힘의 약화와 민중의 투쟁으로 확보된 공간으로 교사대중들은 급속하게 진출하게 되었다. 7.14 서울 홍제동성당에서 1,50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교육민주화를 위한 서울 지역교사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집회를 출발점으로 하여 보수종교단체의 외피를 쓰지 않은, 해고교사만의 모임이 아닌 「자주적인 교사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된다. 전국적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던 공개단체그룹과 현장실천을 위주로 하였던 지역모임 교사들은 방학 중에도 몇 차례의 모임을 갖고 전국적인 교사단체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법개정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추진체를 결성하자는 논의에서 교사협의회 건설의 전국적인 결성으로 방향이 잡혀간다. 8월 13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9월 5일 전국 최초로 전남교협이 결성되었다. 이후 각 시도교협의 결성과 함께 9월 27일 경찰의 삼엄한 봉쇄를 뚫고 한신대 교정에서 전교협 창립대회가 이루어지고 11월 22일 제주교협 결성을 끝으로 14개 시도교협의 결성이 완결되었다. (29년 1월 1일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전교협을 결

성하여 15개 시도교협이 됨.) (장기평,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형성사, 1989, pp41~42)

O11

전교협은 4.19교원노조이래 최초의 전국적이고 자주적인 교사단체이다. 또한 결성과 이후 활동을 통해 교육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구심점이었으며, 교련과의 대비로 인해 교련의 허구성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전교협은 121개의 시군구교협을 산하에 둬으로써 전일적으로 횡행하는 교육모순에 대해 처음으로 전국적 조직적 관점으로 맞선 단체였다. (장기평,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형성사, 1989, p42)

전교협은 결성과 동시에 교육법개정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교육법개정운동을 전교협의 가장 주요한 활동으로 삼았다. 또한 초기 활동의 또 다른 축은 6월항쟁 이후 자생적으로 터져 나오는 사학비리 척결과 민주화투쟁에 대한 지원투쟁이었다. 전교협은 학교현장지원방문, 농성, 시위, 모금운동, 시도교위 항의농성 등을 통하여 한없이 터져 나오는 사학투쟁에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교권탄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확산작업, 투쟁의 조직화에 주력하였다. 그 밖에도 전교협은 회원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실천활동의 경험교류 및 연구활동을 펼쳤고, 단위학교 민주화투쟁, 교사의 권익옹호 투쟁, 보충수업·자율학습 철폐투쟁, 평교사회·교과교협 등의 조직확대사업, 전국교사신문·서울교사신문 등 시도교협 단위의 신문, 구교협의 회지 등을 발행하는 선전홍보활동 등을 일상적으로 전개해나갔다. (장기평,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형성사, 1989, pp43~92)

전국교사협의회 산하 14개 시-도교사협의회 소속 초중고 교사와 대학시간강사 등 1만여명은 88년 11월 20일 오후 서울여의도에서 '민주교육법쟁취 전국 교사대회'를 갖고 교육악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회 후 의사당 앞까지 행진을 벌였으며, '국민에게 드리는 글' 등 유인물 12만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조선일보』, 1988.11.22)

그러나 이후 전교협은 교육법개정운동과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갔으나 협의회라는 임의조직 형태로는 더 이상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88년 12월 전교협 전국임원 연수와 89년 2월 전교협 대의원대회를 거쳐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결정하여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초대위원장 : 윤영규)을 결성하였다. (장기평,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형성사, 1989, pp43~92)

O12

윤영규(尹永奎, 회장,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회장, 전남 당양 고서중), 이수호(부회장, 서울 신일고), 이규삼(부회장, 서울 군자국교), 정해숙(부회장, 광주 호광여중)

O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O14

장기평,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형성사, 1989 / 『80년대 문화운동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연구』, 김현철, 1989 / 『조선일보』, 1989. 5.28 / 『조선일보』, 1988.11.22

O1

전국산업재해노동자연맹

O2

산재노련

O3

O4

O5

1987.09.27~1990.10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87년 당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써 노동자들의 투쟁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자신들의 건강과 청춘 그리고 산업재해 이후로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어떠한 사회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삶을 유지해오던 300만이 넘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은 87년 9월 27일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와 산업재해 없는 진진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보다 주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쟁하기 위해 ‘전국산업재해노동자연맹’을 종로성당에서 결성하였다.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p.196; p.333)

O11

산업재해노동자들의 이러한 조직적 움직임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산재를 당해 입원중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하는 기초가 되었다. 인천 중앙병원에 입원중인 산재환자 800여명과 가족 200여명은 1987년 10월 12일부터 ‘휴업급여 100% 지급, 근본적인 생계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투쟁에 들어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경인국도를 점거 농성하는 등 무려 12시간에 걸쳐 서울 오류동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처절한 투쟁에 최루탄을 퍼부어 군부독재정권의 폭력적 본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산재환자들에 대한 탄압에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개정헌법에 대한 전면 투표를 거부할 것’을 결의하면서 ‘분신을 각오하는 자세로’ 투쟁에 임할 것을 천명하였다.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p196) 개별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내·외적인 강한 요구와 산재 노동자들의 보다 힘찬 산재 추방, 노동해방 투쟁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1990년 10월, 1987년도 만들어진 산업재해노동자연맹과 1988년도에 결성된 산업재해노동자회 두 단체가 통합하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가 건설, 변화하게 된다. (<http://sanjae.jinbo.net>)

O12

전국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업재해노동자회

O13

O1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anjae.jinbo.net>

O1

문학예술연구회

O2

문예연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7.9~현재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0년 겨울부터 소모임이 형성되어 나중에 연구소의 모태가 되는 이른바 ‘민중미학연구회’(약칭 민미연)가 1986년 말 ‘불온 단체’로 수사를 받아 급기야는 몇몇 회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후 1987년 가을 ‘문학예술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학술 단체로 ‘공개’하였다.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p152~153)

O11

문예연은 창립 이후 학단협 창립에 참여하고 문예연 강좌, 민중문화운동연합과 연대한 문학 강좌 등을 활발히 개최하였다. 한편 내부에서 노선 논쟁이 격심해지면서 일부 성원들이 연구소를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최종적으로는 1989년 가을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이 기간 연구소는 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또한 내적으로는 노선 논쟁과 인적 유대의 균열 등으로 역량을 소모하기도 했던 ‘성장기’였다. 연구회가 노문연으로 통합하자 기존 연구회는 ‘문학예술연구소’로 개명하고 대부분의 기구들을 유지하면서 노문연 산하의 비교적 자율적인 연구 기구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노문연 결성 이후 한동안 조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문연 내에서 벌어진 조직 분규로(이른바 ‘사회당’ 창당을 둘러싼) 노문연 활동이 위기에 처하고 이어서 사실상 중단하면서 1991년 연구소가 다시 독립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노동자 문화운동을 하는 예술가, 문화운동가들과 연계해서 학술적인 연구, 비평과 조직적인 실천을 병행하였던 ‘조직활동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독자적인 학술단체로 되돌아 온 연구소가 기관지『문예연구』(1991년 6월)를 발간하기 시작했던 시점에서부터 1995년 전후로 해서 연구소의 인원이 급격하게 축소되기 전까지의 기간 : 이 동안 연구소는 노동자 문화운동과의 조직적인 연대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이론적, 비평적 활동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구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기존의 사회주의 현실주의론 및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문화 전략을 고민하던 시기로서 ‘새로운 모색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의 국면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기로서, 대안적인 노력이 난관에 부딪히고 연구소의 중심 역량이 분산되고 축소되는 시기로서 ‘침체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153)

O12

조만영, 조정환, 김명환, 신두원, 이병훈, 진중권, 김창주

O13

민중미학연구회(민미연),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노문연), 문학예술연구소

O14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O1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O2

남민청

O5

1987.10.14~현재 (구로청년회)

O9

<구로청년회 소개> (구로청년회 홈페이지 : <http://kuroil.jinbo.net>)

구로청년회는~

1987년 뜨거운 6월 민주화의 열기와 함께 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순간의 열정만이 아닌 지역주민.. 소외된 이웃..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고 민주적인 사회와 하나된 조국을 위해 <남서울민주화청년연합>을 창립합니다. 이것을 모체로 93년에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더불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하는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구로청년회>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후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문화를 널리 알려내는 청년문화강좌 ‘청년광장’, 하나된 조국을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통일노래자랑’, 함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까지 지역 청년들과 함께 펼쳐나갑니다.

▶ 구로청년회는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와 함께하는 청년회입니다.

- ‘청년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지역의 새로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문화강좌를 개최합니다.

- 다양한 동아리를 신설,운영하여 청년들의 공동체문화를 이어 나갑니다.

▶ 구로청년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청년회입니다.

- 마을청소, 사회복지시설봉사, 마을잔치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고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곳곳에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읍니다.

▶ 구로청년회는 애국적인 활동과 함께하는 청년회입니다.

- 이땅에 발을 딛고 사는 청년으로서 전쟁을 반대하고 하나된 조국통일 위해 앞장섭니다.

- 사회부조리에 맞서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O10

87년 10월 14일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으로 창립하였다.

O11

1993년 2월 ‘구로청년회’로 확대개편하였다.

구로청년회는 지역청년 문화사업(연극, 풍물, 민요, 탈춤,노래, 기행, 만화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활동일지)

1987.10.14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남민청)’ 창립

노동청년들의 자주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청년강좌 개최

1993.02 일하는사람들의자랑스러운 구로청년회로 확대개편

1995.08 지방자치단체 구의회의원 선거참여 / 신도림동 공해추방운동

1995.11 1기 청년광장 개최 (5개교실 100여명 졸업)

1996.08 구로금천주민 통일큰잔치

1996 ~ 1997 북한동포돕기 쌀모으기 활동

1998.08 구로지역 통일한마당  
1999.06 동아리연합 정기공연  
1999.11 청년광장 개최 (7개교실 80여명 졸업)  
2000.07 동아리연합 정기공연 / 구로금천 통일실천단 발족  
2000.08 지역통일문화제 '통일2000'  
2001.02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가입 / '통일의 징검다리를 만들어가는 6기 청년광장'  
2002.04 구로동 봄맞이 마을잔치  
2002.05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 자전거타기대회  
2002.06 ~ 2003.06 '미선이, 효순이의 한을 풀자' 서명과 모금활동  
2002.08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통일노래자랑  
2002.09美쳐보자, 청년의 이름으로 7기 청년광장  
2003.02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분화  
2003.03 이라크전쟁반대, 파병반대 활동  
2003.08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통일노래자랑  
2003.10 청년아, 평화를 말하자 8기 청년광장

O14

구로청년회 홈페이지 : <http://kuroil.jinbo.net>

O1

도시노점상연합회 (88.10. 전국노점상연합회로 발전. 이후 11차 총회를 통해 전국노점상연합으로 명칭 변경)

O2

도노련

O3

O4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O5

1987.10.19~?

O6

O7

공개 / ?

O8

전노련은 각 지역연합-지부-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O9

O10

86년 아시안게임으로 강력한 노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 산개해 있던 조직이 도시노점상복지회 (86.12.29)로 힘을 모아갔고, 1987.10.19 도시노점상복지회는 「도시노점상연합회」(이하 도노련)로 개칭되었다. 도노련은 기간의 노점 탄압에 맞선 투쟁의 승리와 87년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경험으로 '단결투쟁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노점탄압에 주저 없는 투쟁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정권의 올림픽을 빙자한 노점탄압에 대한 노점상들의 투쟁 속에서 도노련은 정권의 반민중적 올림픽으로 인한 노점상 탄압반대 투쟁의 대중적 준비를 하였다. 마침내 전면단속의 예고 아래 '6.13 생존권수호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노정된 몇 가지 오류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노점 대중이 주체적으로 나섰고,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하여 노점탄압을 격파한 대회였다. 6.13 생존권수호 결의대회는 노점상연합의 전국 조직의 전망을 갖게 하였다. 도노련은 매우 대중적 사업방식으로 조직을 부산, 광주, 원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그 해 10월에 노점상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전국노점상연합회」를 결성되었다.(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pp.178~179)

O11

전노련은 88년 4월 18일, '서울올림픽과 노점상 생존권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4.26 총선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노점단속에 대해 전면적 투쟁을 전개했다. 전노련이 주최한 6.13 투쟁은 80년대 노점상운동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향후 전노련의 지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쾌거였으며(이상 전노련 표기는 전노련 결성 시점과 관련, 도노련으로 하는 것이 타당: 연구팀) 이러한 투쟁을 거치면서 회원이 1만여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88.9.17 노점상 올림픽대회 개최: 연구팀) 89년은 노점상운동을 괴멸하기 위한 정부의 대탄압이 진행되었고 이에 전노련은 단속저지투쟁과 '백만 노점상 생존권 완전쟁취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7·8월 노점상 투쟁의 서장을 열었다(『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pp178~181).

이후 90년 노점상자립법 제정 촉구활동과 '92 도시빈민 생존권결의대회 개최, 3.24 총선에 후보 출마, 노점상 자립 합법화 공동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93년 노점상 자립합법화 청원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갔다. 또한 89년 11월 11일 '전국민민연합'(전빈련)과 92년 8월 '전국도시빈민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였다.(<http://www.nojum.org>)

O12

도시노점상복지회, 도시노점상연합회

O13

이필두(6기), 이영남

O14

『가로수』: 전노련 기관지 월간 발행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O1

민족통일애국청년회

O2

민애청

O3

O4

O5

1987.10.27~?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민애청은 87년 10월 27일 신촌 '거구장'에서 70여명의 청년들이 87년 6월 항쟁을 딛고 민주정부 수립, 나라사랑을 실천하고자 '민족통일애국운동청년단'으로 문을 열었다. (<http://youthseoul.org/mac>)

O11

민애청은 88년 신당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대중청년운동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라사랑청년회와 체육대회, 광주순례, 제1차 청년교실 등을 개최하였다. 1989년 청년운동의 뚜렷한 지향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 '민족통일애국청년회'로 이름을 개칭하고 제2회 청년교실 개최 및 『조국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90년 노래모임, 글모임, 풍물모임 등의 소모임을 결성하였다. 이후 91년 시사모임, 역사모임 등의 소모임이 확대되었고 92년 광주순례, 용산지역민주시민대동놀이한마당, 통일가요제, 범민족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http://youthseoul.org/mac>)

O12

한충목(회장), 고정희(열사)

O13

민족통일애국운동청년단

O14

기관지 「애국청년」 /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1990 / 홈페이지 : <http://youthseoul.org>

O1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O2

서울노련

O3

O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O5

1987.11.1~?

O6

서울

O7

공개 / 반합법

O8

O9

<창립 결의문>에서 제시한 7개항 : 첫째, 민주적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강화한다. 둘째, 진보적(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을 담당할 기간활동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전개한다. 셋째, 88년 봄의 임금인상 투쟁을 목표로 이를 추진할 역량을 강화하며 일상 경제투쟁을 직·간접으로 수행한다. 넷째,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저지 투쟁, 군부와소통치의 종식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 등의 당면정치 투쟁을 수행한다. 다섯째, 미조직 대중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대중을 향한 선전, 선동 및 교육·조직활동을 전개한다. 여섯째, 전국민주노동조합의 건설을 직·간접적인 통로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고 지원한다. 일곱째, 한 지역의 반합법 노동조합운동조직을 전국연합으로 통합하고 기타의 노동단체들과 연합할 것과 노동자, 농민빈민, 소시민, 진보적 지식인, 청년학생들의 조직들과 연대하여 민중운동 연합을 결성할 것을 결의한다. (『말』17호, 1987. 11, pp47)

O10

서울노동조합연합(서울노련) 창립대회가 1987년 11월 1일 오후 6시 영등포 당산동 성문밖교회에서 노동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말』17호, 1987. 11, pp47)

O11

서울노련은 현단계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진정한 노동조합운동은 투쟁적이고 민주적이고 강력하고 더 나아가 진보적(자주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합법노조는 주체적 역량과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투쟁적이고 진보적 역량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반합법 노동조합 운동조직을 포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공개 사업장조직, 합법노조내의 선진 그룹지역활동가 및 해고노동자, 합법노조에서 꺼져 나온 부분으로 이루어진 노동자 조직들이 또 하나의 노동조합적 대중조직으로 결속되어 진보적(자주적) 노동조합 운동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노련은 반합법 노동조합운동 조직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련은 또 ”상당한 기간동안 합법노동조합운동과 반합법 노동조합운동이 병존하며 상호침투하고 상호작용하여 역동적인 발전과정을 거쳐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17호, 1987. 11, pp47)

O12

O13

황인범(위원장, 성동구 광장동 소재 대동화학 조합원), 김정근(부위원장, 전부산파이프 노동자), 황만호

(사무처장, 전청계피복노동조합 위원장), 문익환(文益煥, 고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백기완(민통련 부의장)

O1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 『말』17호, 1987. 11

O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O2

인의협

O3

2003년 현재 대구경부,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지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전북과 충북이 지회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O4

O5

1987.11.21~현재

O6

O7

공개 / 합법

O8

인의협의 조직체계는 크게 총회-대의원회-이사회-전국운영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하여 하반기에 개최된다.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각 지역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고 조직이 아직 제대로 안된 곳이 많아. 2003년 현재 정식출범이 되어있지 않다. 이사회는 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설립된 기구로서, 인의협의 운영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과 지회가 모여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조정하며 집행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성격상 이사회의 실무적인 보좌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사회가 열릴 경우 항상 함께 개최되며 사안별로 논의가 필요시 별도로 개최되기도 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사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중앙의 차원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중앙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현재 지회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의 회원 관리 및 지역적 사업을 함께 집행하고 있다. 산하에 총무국, 조직국, 사업국 3개의 국과 편집부, 진료부, 정보통신부 3개 부서를 두고 있다. 지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단위로 독자적인 사업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기구이며, 현재 대구경부,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지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전북과 충북이 지회결성을 준비하고 있다.(2003년 7월 기준)

O9

O10

이미 70년대부터 서울지역의 의과대학생들은 농촌이나 빈민촌을 주말마다 방문 진료를 해오는 전통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역의 공해문제를 연구하거나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의사로서 사회에 진출되자 보다 조직적이고 상호 관련성 있는 체계 속에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주말진료방식이 개인적이거나 소규모적이었던 데에서 오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연대의 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의사들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터에 87년 4.13 조치가 발표되자 의사들도 서명운동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인의협’이 창립되었다.(『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p331~332)

O11

인의협의 기본성격은 의사라는 전문인으로서 봉사과 참여를 동시에 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의사단체들이 자체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존립한다면, 인의협은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봉사의 공감대위에 설립된 것이다. 활동사항은 기본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치료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자체를 위협하는 각종 공해병과 직업병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인의협 회보 「사람과 의료」 소식지를 발간 중이다.

O12

윤종구

O13

O14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발기취지문」(87.11.21), 266~267쪽

O1

서울지역비상학생협의회

O2

서비협

O3

O4

O5

1987.11~12.

O6

서울

O7

공개 / ?

O8

O10

87년 대통령 선거에 임박하여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천명한 서대협외 노선에 대해 비판적이던 세력이 ‘후보단일화론’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서울지역 비상학생협의회’를 결성하고 후보단일화를 위한 독자적인 실천을 해나갔다.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pp263)

O11

서비협은 “민주진영의 집권=군정종식은 표찍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두투쟁에 의해(가능한 한 공장, 일터에서의 투쟁도 결합해야 한다) 이루어지는 것이며, 종이 쪽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하면서, 반전두환-노태우투쟁, 전두환-노태우 즉각 퇴진투쟁을 강조하며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일관되게 “학살원흉 즉각 처단”을 주장했다. 서비협은 거리거리에서 광주 학살원흉 노태우·전두환을 폭로하고 찌라시와 대자보를 이용하여 부정선거규탄에 대한 광범위한 선거작업을 수행하는 등 노태우 낙선운동 및 학살원흉 재집권 저지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이들의 활동은 “학살원흉 즉각 처단” 투쟁보다는 후보단일화 운동에 더욱 큰 비중이 두어졌다.

서비협은 11월말 이후 연세대에서 “후보단일화 쟁취를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대, 연세대, 외국어대 등을 중심으로 학생총회를 열어 반노태우투쟁, 단일화 쟁취투쟁을 결의하였다. 또한 11월 27일, 28일 17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대에서 ‘노태우집권 분쇄와 후보단일화를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12월 5일(날짜에 차이가 있음: 『전대협』의 경우, 12월 1일과 2일이라고 기록: 연구팀)부터는 평민·통민 양 당사와 양 김씨 저택에서 후보단일화와 반노태우투쟁에 앞장설 것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학살원흉처단’이외에 범민주전선을 강화시키는데 민중진영의 실제적인 대안이 없이 보수야당에게 상층 차원에서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전개되었고, 그들 스스로 비판하였던 ‘선거혁명’의 환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함께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하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p39~40)

O12

O13

O14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O1

군정종식·단일화쟁취 국민협의회

O2

국협

O3

O4

O5

1987.11.23~12.12

O6

서울

O7

공개

O8

O9

O10

87년 대선에서 전대협, 민통련의 비판적 지지론을 반대하고 후보단일화론을 주창한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17개 대학 대표자들은 11월 18일 건국대에서 ‘학살원흉 노태우 집권 분쇄 학생투쟁연합’을 결성하고 ‘광주학살원흉 처단, 노태우 퇴진, 후보단일화 촉구’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가시적으로 나타나, 11월 23일 ‘군정종식·단일화쟁취 국민협의회’(국협)를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1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돌베개, 1991, pp42)

O11

연세대 총학생회는 11월 24일 ‘단일화쟁취를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 간부 19명이 단일화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11월 26일 연세대는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단일화투쟁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어 서울대도 27일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단일화투쟁을 결의하였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참가한 ‘인천지역 선거투쟁연합’이 단일화를 표방하며 발족하였다. 이어 11월 28일에는 서울지역 17개 대학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대에서 ‘노태우 집권 분쇄와 후보단일화를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단일화를 주장하는 청년 학생들은 ‘노태우 집권 분쇄 및 단일화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비상협의회’로 진용을 갖추게 된다. 이어서 12월 1일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한 청년학생들은 양김씨의 집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2일에는 평민·민주양당사에서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날짜 차이: 조지훈의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사』에는 12월 5일부터라고 기록: 연구팀). 12월 6일에는 ‘단일화촉구 비상국민대회’에 참석하였던 학생, 노동자들이 명동성당과 양당사에서 농성을 하였고, 12월 18일에는 10여개 대학 학생 1천 4백여 명이 양당사와 양김씨 집에서 농성을 하였다. 그러나 12월 12일 국협은 마지막 성명서를 통하여 후보단일화운동이 끝났음을 밝히면서 국민들은 승리에 가까운 쪽으로 투표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막판 단일화를 위한 노력과 최저수준의 연대의 틀이라도 마련하려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채 후보단일화운동은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돌베개, 1991, pp42~43)

O12

O13

학살원흉 노태우집권분쇄 학생투쟁연합, 노태우집권 분쇄 및 단일화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생  
비상협의회

O14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 돌베개, 1991

O1

민중대표백기완선생선거운동전국본부 (☞ <사건편> 민중대표 대통령후보 전국추대위원회 결성대회 참조)

O2

백본, 백선본

O3

O4

O5

1987.11.25~12.12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7년 대선 당시 학생운동의 '제헌의회그룹'과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등은 독자후보론을 주창하면서 백기완 선생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11월 1일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창립대회'에 격려사를 하기 위해 참석하던 백기완 선생을 수행하였던 이애주 교수 등은 독자후보론을 지지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과 시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후 백기완 선생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1월 11일 명동성당에서 11개 대학 학생과 노동자, 재야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기완 선생 대통령후보 임시추대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1월 15일 옛 서울고 자리에서 '민중대표 대통령후보 전국추대위원회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명작업 및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생운동에서는 11월 1일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경인지역 민중정당 결성 및 민중후보 학생추대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백기완 선생은 11월 23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민주세력의 대연대 하에서 민주연립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창하였다. 같은 날 동국대에서 '민중대표 백기완 선생 선거운동전국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중독자후보진영은 본격적인 선거투쟁에 돌입하였다.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돌베개, 1991, pp.44~45)

O11

11월 29일 보라매공원의 시국대강연회, 12월 3일의 1차 TV유세를 통해 백기완씨는 군정종식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광주학살 부정부패의 철저한 규명, 뚜렷한 통일지향성을 나타냄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외, 조국, 1989, pp185) 12월 6일에는 30여만 군중이 집결한 가운데 '군정종식과 민주연립정부쟁취 범국민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대학로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백기완 후보는 군정종식 및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위한 김대중·김영삼·백기완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2월 12일 대학로에서 열린 '군정종식과 민주연립정부쟁취 국민총궐기대회'에서 백기완 후보는 민주대연립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하였다. 이로써 군정종식과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외치며 대통령선거투쟁을 수행하였던 독자후보론자들의 실천과정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되었다.(『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돌베개, 1991, p.45)

O12 백기완(白基玩), 이애주(李愛珠, 백기완씨 전국추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

O13 백기완 선생 대통령후보 임시추대위원회, 경인지역 민중정당 결성 및 민중후보 학생추대위원회

O14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돌베개, 1991 / 『조선일보』, 1987.11.24

O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O2

택시노련

O3

O4

O5

1987.11.26~?

O6

O7

공개 / ?

O8

O9

O10

O11

90년 전국택시노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용 중 차량연장조항과 관련해, “이용시민 및 운전기사의 생명을 도외시한 비인간적 살인적 편파행정”이라고 밝혔다. 90년 4월에는 ‘차량연장저지 및 90임투승리 결의대회’ 개최, 5월에는 시간, 합승, 신호, 속도 등을 법규대로 지키는 준법투쟁 돌입 등을 벌였다. (『1991 한국사회연람』,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pp385~.386)

O12

이광남(위원장)

O13

O14

『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O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O2

사금노련

O3

O4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O5

1987.11.27~?

O6

O7

공개 / 1987.11~1988.8 범위 (1988.8.13~ 합법)

O8

O9

- 우리 사무금융노련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생활을 바탕으로 발전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자의 조직이다. - 우리 사무금융노련은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 이해와 입장의 차이를 극복해 나간다. - 우리 사무금융노련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인권과 인간생활의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 사무금융노련은 노동자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기본 정신으로 실천하는 노동자상을 정립한다.

O10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사금노련')은 보험, 증권 및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 노동조합의 연맹체로 1987년 11월 27일 결성되었다(결성 당시 명칭은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이었다). 사무금융노련의 결성 등에는 제2금융권 노조들이 이전에 속해 있던 전국금융노조 연맹의 구조 및 운영의 비민주성에 반발한 점이 작용했다. 기존의 금융노련은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2금융권 노조들은 금융노련의 의사결정과정보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비은행 금융노조는 최소한 노조당 조합원 수가 400명 이상이어야만 노련의 대의원 자격을 갖게 된다'는 규약에 묶여 대의원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1985년 대의원 대회에서 이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부결되었고 1986년 대의원대회에서도 연맹의 비민주성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다. (『전노협 백서』, 제7장 3절 1-2))

사무금융노련 태동의 또하나의 계기는 투쟁을 통해 새로운 구심체가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에 있다. 1984년 5월 한일투자금융노조 탄압저지 투쟁, 1985년 2월 현대해상화재보험노조의 부당한 인사발령, 그리고 1987년 3월 범한화재해상보험노조의 해고자 복직투쟁이 그것이다. (『전노협 백서』, 제7장 3절 1-2))

사금노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1987년 이전부터 비교적 활발한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1984년 5월의 한일투자금융 노조탄압 저지투쟁, 1985년 2월의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의 부당인사발령 반대투쟁, 그리고 1987년 3월의 범한화재해상보험 노조의 해고자 복직투쟁이 그것이다. 특히 범한화재해상보험노조의 해고자복직투쟁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각 노조간부 450여 명이 공동투쟁에 나서으로써 연대 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금노련 결성의 직접적인 힘이 되었던 것은 한국노총의 '4.13헌법개정반대조치 지지성명'에 대한 반박성명을 낸 13개 노조의 결집력에 있었다. 이어서 이들 노조를 중심으로 한 5개 산별노련 산하 37개 단위노조가 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2일,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조직으로는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제2금융권 노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맹을 창립하였다. (『전노협 백서』, 제1권 3장 2절 2.)

O11

결성 당시 45개 노조 약 1만 2천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한 사금노련은 이후 합법성쟁취투쟁을 거쳐 1988년 8월 13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총 55개 노조 2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었고, 1989년 4월 30일경에는 94개 노조 총 조합원 30,377명(남성 18,228명, 여성 12,149명)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이는 증권사 일부노조를 제외하고는 대략 95%가 가입된 것이다.

한편 제2금융권 외에 1988년 8월 16일 한국 IBM노조가 사무직으로써는 최초로 사금노련에 가입했고, 1988년 11월 16일에는 두산산업 노조가 연합노련을 탈퇴하고 사금노련에 가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노동부에서는 사금노련에 일반사무직 노조의 가입을 제한하는 행정지도지침을 시달렸다. 노동부에 의하면 ‘독립된 사무직 산업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무직 노조의 경우 생산직 노조가 속한 산별연맹을 상급단체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 이에 대해 사금노련은 ‘현행 산별연맹 체제도 분류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중복 혼합된 상태이며 업종구분이 뚜렷한 생산직 노조와는 달리 일반 사무직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O12

O13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O14

『전노협 백서』

O1

서울지역제화공노동조합

O2

O3

O4

O5

1987.12.2~?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1987년 9월 16일 ‘제화근로자협의회’를 결성한 데 이어 12월 2일 서울지역 제화공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8.12, pp119)

O11

서울제화공노동조합 내 6개 사업장(만일, 천일, 참스, 엘리제, 맵시 등)에서 70여 명의 노동자들은 88년 9월 30일부터 4일간의 동시 파업투쟁을 통해 8만 여 원의 임금인상 등 그간 쌓여 왔던 요구조건들을 파업을 통한 단체교섭으로 확보하였다. 서울제화공노조는 88년 파업으로 투쟁사업장에서 60여명이 대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8.12, pp119)

O12

제화근로자협의회

O13

O1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민중사, 1988

O1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O2

병원노협

O3

O4

O5

1987.12.12~?

O6

O7

공개 / 법외(93년 5월 25일 대법원 합법 승소 판결)

O8

병원노련의 조직체계는 중앙조직체계와 지부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중앙조직은 사무처 내에 5개국을 설치하여 국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위원장, 사무처장 외 6명의 상근간부를 두었다. 각 지역에는 지부회의를 두어 임금인상투쟁 대책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각 지역의 각종행사, 집회에 참여하며 교육과 신규노조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연맹중앙은 지부를 통해 단위노조에 연맹 결의사항이나 투쟁방침을 전달하며 단위노조 상황을 보고받고 지부 간부교육, 지부 순방활동을 수행하였다.

O9

1. 우리는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매진한다. 1. 우리는 노동조건 향상과 생활 임금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전 국민을 위한 평등하고 인간적인 의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노동조합의 통일과 단결의 위해 앞장서며 자주적인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선봉에 선다. 1. 우리는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세계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O10

1987년 7, 8월 이후 불과 1년여 사이에 결성된 180여 개의 병원노조는 신규노조로서의 어려움과 취약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1987년 12월 12일 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원노협')를 결성했다. '병원노협'은 단위노조 간의 정보와 경험의 교류, 지원활동을 추진하며 전국에 지역협의회를 조직하여 전국적 조직체로 결집되었다. 그러나 탄압에 대한 공동대처와 위장휴-폐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협의회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 반면 공식적 상급단체가 아닌 점, 단위노조 지원에 대해 외부불순세력, 혹은 제3자개입이라는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점, 단위노조 간부가 병원노협 임원을 겸임함으로써 집행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 재정적으로 병원노협 분담금으로는 활동이 어려운 점을 들어 병원노련을 건설하게 되었다. (『전노협 백서』, 제1권 3장 2절 5.)

O11

연맹결성 이후의 조직활동은 이전 병노협의 조직기반을 토대로 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조직체계를 요구하였다. 연맹결성 당시 80개 노조에서 1989년 7월에는 130여 개 2만 5천 조합원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28개 신규노조가 결성되어 연맹에 새롭게 가입하였다. 미가입 병원노조는 단지 3개에 불과한데 이들은 대부분 노조간부가 기존 연합노련의 간부이거나 조합원들에 의해 불신받고 있는 경우였다. 규모별 조직률을 살펴보면 400명 이상의 경우가 90% 이상이며, 200명 이상 400명 이하의 대형병원이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노협 백서』 제1권 3장 2절 5.)

O12

양건모(위원장, 이화여대부속병원노조), 안덕호(부위원장, 부산백병원노조), 이근선(부위원장,부천세종병원노조), 이원조(부위원장, 카톨릭의대병원노조), 김은아(부위원장, 대전을지병원노조), 채학용(부위원장, 광주남과병원노조), 김상덕(부위원장,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 노조), 최방식(사무처장, 서울대병원노조), 정무영(회계감사, 울산동강병원 노조위원장), 이상춘(회계감사, 계명대 동산의료원 노조위원장), 유돈수(회계감사, 경희의료원 노조위원장)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1989, p4)

O13

병원노동조합협의회

O14

『전노협 백서』 제1권 /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1989

0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02

기윤실

03

04

05

1987.12~현재

06

07

공개 / 합법

08

09

<사명선언문> (기윤실 홈페이지 : <http://www.counsel.cemk.org>)

기윤실 운동에 참여한 우리 회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하고 개인적인 경건생활에 힘쓰며 각자의 지역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기윤실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기윤실은 생활신앙운동, 건강교회운동, 사회정의운동, 문화소비자운동을 전개한다.

전능하시고 유일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되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온 세상 교회의 머리되심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 무오한 진리의 기준인 성경에 계시되어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남으로 불의와 무질서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의도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에 새로운 세기를 맞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온 한국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소명에 능동적으로 응답하고자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그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과 차별화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모범을 보이도록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로 삼으며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등 모든 영역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고백한다. 성경적 신앙과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기윤실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존귀히 여겨지도록 간구하며 행동할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기윤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운동을 전개한다.

기윤실은 생활신앙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성역과 세속의 이원론적 분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이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쇠신된 바른 신앙이 우리의 사유와 삶, 신앙과 윤리적 결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직장,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성화된 삶의 영향력은 우리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바꾼다. 이에 기윤실은 지역교회의 쇠신을 돕고 지역교회가 배출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을 견고케 하고 지역사회와 학교를 견실하고 기업과 관공서의 관행을 쇠신하며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제도와 문물을

변혁시키는 차원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윤실은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소하고 정직한 삶의 캠페인을 전개하며, 각종 직업별, 지역별로 실천모임을 조력하며 후원할 것이다.

기윤실은 건강교회운동을 추진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룰 뿐 아니라, 온 사회와 만물을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런 기관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영적 나침반으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개혁의 객체로 남아있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 개혁을 요구하기 이전에 교회부터 먼저 변해야 함을 통감한다. 따라서 기윤실은 교회 내의 권위주의, 재정의 불투명성, 노회와 총회의 금권선거, 심각한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 기복주의와 물량주의, 신학교의 난립과 목회자 자질의 하락,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의 도피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이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도록 섬길 것이다. 나아가 기윤실은 개교회, 교단, 단체들과 연합하여 건강교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기윤실은 사회정의운동을 추진한다. 우리는 바른 신앙인의 윤리적 실천이 구조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재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근본주의적 성향에 집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바람직한 공동체의 구성과 사회정의를 향한 소명을 도외시하였다. 우리는 또한 죄의 실재가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 속에서 집단화, 구조화 될 수 있음을 직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영역의 구조적 최악인, 파벌적 정쟁, 대중조작,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후진적 정치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영역에서 벌어지는 정경유착이나 경제력 집중의 폐해 및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를 타파함으로써 경제정의가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뿐 아니라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목도한다. 이러한 사회적 도전과 개인적이며 사회구조적인 비극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윤실은 문화소비자운동을 전개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오락성을 본질로 하는 대중문화가 넘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구호와 세계적 흐름 속에 돈벌이라는 각광받는 산업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기윤실의 문화소비자운동은 대중문화가 상업적 경제성과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와 윤리와의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천명한다. 특히 그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가치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현실에서 대중문화의 변혁을 위한 기윤실의 문화소비자운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시민 참여운동이 되어야 할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함과 아울러 각종 미디어의 유해성을 모니터링하여 시민 연대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문화 소비자들이 성숙한 분별력을 갖고 대중문화의 상업주의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며, 문화변혁을 위한 대안운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기윤실운동이 그리스도의 몸 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유기적인 지체임을 인식하며 이 사회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교회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을 나누며, 지역교회의 참여적 사역을 돕는 사회선교 전문기관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세속화의 극단을 치닫는 21세기 속에서 기윤실운동은 성령의 끊임없는 도우심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기윤실 운동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차별화된 기독교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O10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장기려, 이명수, 이만열, 최창근, 이세중, 김인수, 손봉호, 원호택씨 등 38명의

기독교인들이 발기인이 되어 1987년 12월에 정식으로 발족한 모임이다.

(지금은 강영안 김일수 등 2명의 공동대표와 김인수 이사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이사를 비롯한 6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천안, 부산, 청주, 광주, 인천 등 전국 15개, 해외 4개 지부, 총 19개 지부가 결성되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에 8,000여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다. 주로 여러 교회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이 운동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매주 목요일 점심 시간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던 몇몇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1987년 봄에 처음으로 구상하였다. 5공말,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고 헌법개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때였다. 그때 우리 사회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대개 세 가지였다 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고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 평등을 위하여 구조 개혁을 시도한 비교적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태도였다.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은 이원론적 경향을 가졌던 극보수 신앙인들이었다. 그들은 세상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개인적 신앙 생활과 전도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으며 평등과 민주화 등은 세속적인 문제로 신앙인이 관심 쓸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었다. 그들은 정부의 비민주성과 사회의 불평등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옳지 못함을 알았지만, 그것들을 고치는 방법이 반드시 급진적이라야 하느냐 하는데 회의론을 가졌다. 더구나 혁명적, 나아가서 폭력적 방법으로 민주화와 평등을 성취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들은 급진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심지어 불의의 소산에 참여하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낙인찍히기까지 했다. 이에 대하여 보수주의자들은 급진적인 기독교인들을 혁명적이고, 폭력을 용인하며 심지어는 용공적이라고 맞섰다.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은 다소 변형되긴 했지만 대학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도 반영되었다. 상당수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민주화와 사회평등을 위한 급진적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온건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심한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학 사회 전체가 부르짖는 민주화와 사회평등 이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급진적 방법에 쉽사리 동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연 법 질서를 어기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가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한 이상도 없고 용기도 없는 비겁한 젊은이들로 취급되는 것이 싫었고 억울했다. 더군다나 불의에 대항하여 투쟁하지 않는 자는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란 흑백논리가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설득력있게 들렸고 그것이 그들의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갈등은 구태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를 가진 기독교인 교수들에게도 이것은 결코 가벼이 취급될 문제가 아니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기독교인 교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며 토론했으며 몇몇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능한 흑백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민주와 평등의 사회이상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와 사회 평등 등 사회 이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개개인의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 모범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구조가 훌륭하더라도 그 구조 아래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좋은 구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아무 비판도 할 자격이 없음을 자각했다.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마땅

히 자신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다. 그것은 구조 개혁 운동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이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적 인간관의 핵심이며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적 인간관이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인간관과 구별된다. 그 때문에 개인의 책임을 구조로 환원시키는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기독교적이 될 수 없다.

다행하게도 최근에 와서 개개인의 윤리적 책임이 다시금 중요시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상황과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 일으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O11

O12

O13

O14

기윤실 홈페이지 : <http://www.counsel.cemk.org>

O1

한물결청년회

O2

O3

O4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O5

1987.12~?

O6

서울(강서양천)

O7

공개 / ?

O8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노동청년부, 16개의 소모임

O9

O10

1987년 12월 강서, 양천지역 고등학교 동문대학생들의 대통령선거 공정선거 활동으로 출발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p104)

O11

1987년 12월 강서, 양천지역 고등학교 동문대학생들의 대통령선거 공정선거 활동으로 출발한 한물결  
청년회는 이후 그 지역기반을 서울 전역으로 넓혀 나갔고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노동청년부라  
는 3개이 커다란 체계아래 16개의 각계 소모임을 회원활동의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중,고등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4)

O12

이규의(회장)

O13

O14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1990

O1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KPF) (☞ <사건편> 안기부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KPF) 검거사건 참조)

O2

KPF

O3

O4

O5

1987.12(?)~1988.5.3

O6

O7

비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주장)

O8

O9

O10

국가안전기획부는 1988년 5월 3일 “안양노동상담소장 송운학 외 배금주, 김점진 등이 노동계와 학원가에 침투하여 좌경지하조직인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KPF)’을 결성하려 했다”(『동아일보』 1988년 5월 3일자 기사)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290)

O11

검찰은 이들을 이적단체구성예비죄로 기소하였고, 관련자들은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정세에 관한 평가와 토론을 한 것일 뿐 어떤 조직을 구성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988년 10월 14일 송운학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석방하였다.(『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290)

O12

송운학(안양노동상담소장), 배금주, 김점진

O13

O14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연구팀 의견 : 과장 및 조작 가능성 존재, 관련 당사자 증언 필요>

O1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관악노동청년회: 관노청으로 발전)

O2

O3

O4

O5

1987.??~

O6

서울

O7

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10여명 안팎의 회원으로 1987년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 설립. 노동조합 지원 및 야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94년 3월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으로 명칭을 변경(『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30)

O11

김대중 정권하에서의 최초의 조직사건으로 1998년 2월 18일 윤순재(회장), 윤수근, 홍정표, 이은희, 최백길, 나정현, 김경진, 조백현 등이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관노청은 당시 회원이 10여명 안팎으로 1987년 설립된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가 노동조합 지원 및 야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94. 3. 관노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좌 및 학습(노동법강좌), 노래, 시사토론 등의 소모임활동을 하고,(『인권하루소식』 제1065호, 1998. 2. 19) 무료노동법률상담실을 운영하였다.

1심재판부는 1998. 5. 28.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윤순재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윤수근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고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p30)

O12

윤순재(회장), 윤수근, 홍정표, 이은희, 최백길, 나정현, 김경진, 조백현

O13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연구팀 의견>**

- \* 관노청은 조사시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의 경우 해당되므로 포함시킴.
- \* 관노청 사건의 경우, 과장 및 조작 가능성 존재

O1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 (☞ <사건편> 치안본부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 구속사건 참조)

O2

O3

O4

O5

1987.?? (결성시기 미상, 치안본부 발표는 87.10.2)

O6

성남

O7

비공개 / 비합법 (치안본부 발표)

O8

O9

O10

치안본부는 1987. 10. 2. 윤영주, 구정화, 최진수 등 10명을 이적단체인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을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성남 일대의 노동현장에 위장 취업하여 근로자들을 좌경의식화시켜 노학연대투쟁을 전개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285)

O11

치안본부는 1987. 10. 2. 윤영주, 구정화, 최진수 등 10명을 이적단체인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을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성남 일대의 노동현장에 위장 취업하여 근로자들을 좌경의식화시켜 노학연대투쟁을 전개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는 1987. 9. 8. 중소기업에 위장취업하여 공장활동소조를 결성해 활동해오면서 남로당 조직을 재건하려 한 이른바 '남로당재건기도사건'의 관련자 조찬숙, 손개화, 김영애, 김영복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적단체구성에 대하여 공소유지를 할 수 없었던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이적단체구성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소지 등만으로 기소하였다. 조직지도책으로 발표되었던 윤영주조차 1988.2.3.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285)

O12

윤영주, 구정화, 최진수, 조찬숙, 손개화, 김영애, 김영복

O13

O14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연구팀 의견: 조작 가능성 농후>

\* 기소 내용 변경 및 선고 형량에 기초해 판단 가능

---

---

〈1988년〉

- 01.15 구로구청부정투표함 밀반출 및 경찰폭력 희생자 공동대책위원회
  - 01.17 서울지역인쇄공노동조합
  - 01.29 (안기부 발표일자) 반미청년회
    - 01. 성남청년회
    - 01. 해누리청년회
  - 02.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 02. 인천지역노동자그룹
      - 02.01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 02.11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협의회(민출노협)
    - 03.06 민중의당
  - 03.11 야권통합을위한청년학생공동위원회
  - 03.12 연구·전문기관 노동조합협의회
  - 03.29 한겨레민주당
- 03. 인천민주청년회(인민청) 건설준비위원회
- 03. 수원사랑민주청년회(수민청) 준비위원회
  - 03.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 04.06 전국언론노동조합협의회(언노협)
- 04.12 서울지역대학생총연합 건설추진위원회(서건추)
  - 04.14 반민정당총선투쟁연합(총투련)
  - 04. 한국사회연구소(한사연)
  - 04. 수원여민회
  - 05.13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 05.17 광주학살, 부정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지역 민주투쟁연합(서민투련)
- 05.18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5월공동투쟁위원회
  - 05.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05.29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
- 06.07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 06.18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
    - 06.18 사월혁명연구소
  - 06.25 성남지역노동조합협의회(성남노협)

---

---

〈1988년〉

- 07.06 서울운수노동조합협의회(서운노협)
  - 07.11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한민연)
  - 07.16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연전노협)
    - 07.17 한국공간환경연구회
  - 08.03 전국대학강사협의회(전강협)
  - 08.10 삼청교육대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 08.(중순경)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인천노동상담소)
    - 09.03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 09.03 한국역사연구회(한역연)
    - 09.10 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
    - 09.11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 09.12 전국화물운동노동조합연맹
  - 09.14 진보정당건설을위한정치연합(진보정치연합)
    - 09.15 용인민주청년회
  - 10.06 88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노투본)
  - 10.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 10. 동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 10.28 부정비리주법전·이구속처벌및광주학살5적처단을위한서울지역학생투쟁연합(학투련)
    - 10.30 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농협)
    - 11.05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 11.12 구로역사연구소
    - 11.26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 12.01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극협)
  - 12.04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통불협)
    - 12.07 서울지역아파트노조
    - 12.10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건설노협)
  - 12.22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전국회의)
    - 12.23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 12. 자주민주통일(자민통)그룹
    - (날짜미상)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안양PD그룹)
    - (날짜미상) 신갈기흥청년회
- 
-

O1

구로구청부정투표함 밀반출 및 경찰폭력희생자 공동대책위원회

O2

O3

구로구청피해자가족협의회, 국본, NCC 인권위, 천주교 정평위, 민주당, 평민당 등

O4

O5

1988.01.15~?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구로구청피해자가족협의회, 국본, NCC 인권위, 천주교 정평위, 민주당, 평민당 등, <구로구청부정투표  
함 밀반출 및 경찰폭력 희생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환 외,  
조국, 1989, pp337)

O11

O12

O13

O14

김장환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O1

서울지역인쇄공노동조합

O2

O3

O4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O5

1988.1.17~?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인쇄공노조 결성을 위해 노동자들은 87년 8월부터 준비, 8월 16일, 18명의 인쇄공들이 ‘인쇄노동자동우회(회장 정동철)’를 결성한 뒤 야유회, 친선 체육대회 등으로 친목을 다져오면서 87년 12월 26일 1백 20여명이 참가하는 인쇄노동자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이때부터 노조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988년 1월 17일 종로성당에서 영세인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지역노조 형태로 건설한 서울지역인쇄공노동조합 결성식이 서울지역 인쇄노동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말』19호, 1988. 1, pp43~44)

O11

O12

정동철(초대 회장)

O13

O14

『말』19호, 1988. 1

O1

반미청년회 (☞ <사건편> 반미청년회 사건 참조)

O2

O3

O4

O5

1988.1.29~3.21 (안기부 발표)

O6

O7

비공개 / 비합법

O8

O9

O10

O11

국가안전기획부는 88년 3월 21일 김일성주체사상에 입각한 친북괴지하조직인 ‘반미청년회’를 결성, KAL858기폭과사건을 조작이라고 모략선전한 북괴의 주장을 대자보로 만들어 대학가에 붙이고, 서울 및 광주미문화원기습점거사건 등을 배후 조종한 장원섭군(22. 고려대식물3휴학) 등 12명을 붙잡아 장군등 7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윤은주양(경희대졸)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광대원군(동국대 철학4) 등 4명을 훈방했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이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72명으로, 검거되지 않은 60명중 본명이 확인된 총책 조혁(고려대 노문 4제적) 선전부장 김태원군(고려대법4) 등 21명은 추적수사중이며 가명을 사용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신원을 확인중이라고 덧붙였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조군과 김, 장군 등 3명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전국 26개대에서 이른바 김일성주체사상과 핵심세력 72명을 포섭, 지난 1월 29일 조혁군을 의장으로 하는 반미청년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북괴대남선전방송인 ‘구국의 소리’에서 KAL기 사건을 조작이라고 날조 방송한 내용을 지난 2월 8일 김군이 유인물로 제작, 장군이 10부를 복사해 성대앞 카지노 카페에서 ‘12일을 기해 일제히 대자보로 부착하라’며 각 지역책에게 나눠줘 성대-경북대(12일), 명지대(13일), 연대-서강대(16일) 등 5개대에서 유인물 또는 대자보로 살포, 부착케 했다는 것이다. 장군 등은 또 미문화원등 미국건물과 민정당사를 점거, 폭파하여 민정당원과 미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이후 침체된 학원가 투쟁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해 의장직속기구인 무력부대원 김철군(연대 행정3제적) 등 9명으로 ‘청년학생 구국결사대’를 조직, 서울의 미문화원점거 및 광주 미문화원도서관 시한폭탄장치를 배후조종했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안기부는 김철군 등은 지난 2월 16일 연세대앞 ‘우산속 레스토랑에서 혈맹의 표시로 전원이 오른쪽 넷째 손가락을 칼로 베어 소주에 타마시는 이른바 ‘혈배식’까지 갖고 청년학생구국결사대를 결성한 후 11차례에 걸쳐 한기원군(연대 식품공학4) 등 5명이 소이탄과 사제폭탄을 들고 서울미문화원을 기습 점거, 농성을 하면서 소이탄을 투척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다른 결사대원인 안내상군(연대 신학4)은 광주 미문화원 1층 도서실에 사제시한폭탄을 장치하고 상경, 다음날 민정당사 후문에 소이탄 1개를 투척했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조선일보』, 1988. 3.22)

O12

조혁(趙赫, 의장, 고려대 노문 4제적), 장원섭(張元燮, 22. 고려대 식물3휴학), 윤은주(尹銀珠, 경희대졸),

김태원(金泰源, 고려대 법4), 한기원(韓基源, 연대 식품공학4), 안내상(安內相, 연대 신학4)

O14

『조선일보』, 1988. 3.22

**<연구팀 의견>**

- \* 자료가 공안수사기관의 것에 한정. 따라서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 안기부에 의한 사건의 조작 및 과장 의혹 존재

O1

성남청년회

O2

O3

O4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O5

1988.1.~?

O6

성남

O7

공개 / ?

O8

일꾼반, 새날 시사반 등 5개 분반으로 구성

O9

O10

청년의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여 자주적 창조적 삶을 꽃피우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권익신장과 사회적 권리를 높이는 것을 첫째로, 소비퇴폐적인 외래문화에서 벗어난 건강한 민족문화의 생활을 널리 보급함을 둘째로, 나아가 민족자주정신에 입각하여 조국의 자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함을 세 번째 목적으로 1988년 1월 창립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p106)

O11

성남청년회는 일꾼반, 새날 시사반 등 5개 분반 100여명의 청년들이 활동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p106)O12

O12

김종재(회장)

O13

O14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O1

해누리청년회

O4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O5

1988.01.

O6

구리시

O7

공개 / ?

O10

구리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 지역의 자주적 청년단체로서 1988년 1월에 창립하였다. (『'90전국청년  
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5)

O14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1990

O1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사건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사건 참조)

O2

민자통

O3

O4

O5

1988.2~?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민족평화통일협의회 전통을 이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 민주화 쟁취’를 목표로 설립되었다.(조현연, 『운동MAP』, p49)

O11

국민의 통일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구체계를 설립하고 「자주통일」을 발간하였다.

O12

김지철(대표), 나창순(공동의장), 권오창(공동의장)

O13

O14

조현연, 『운동MAP』

<참조: “남산 안기부를 ‘역사’로 보존하라” - 인권·시민단체, 서울시의 유스호스텔건립계획 반대 : 손봉석/기자(프레스리안) 2003년 08월 25일>

**\* 인권·시민단체들이 밝힌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주요사건-‘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사건’**

89년 6월 26일 신구전문대 교수, 월간 『농민』의 발행인이며 민자통의 전 대변인인 김준기 교수가 안기부에 의해 구속되고 6월 29일에는 민자통 상임의장 이현수, 대외협력위원장 이천재, 대의원총회 공동의장 박창균, 조직국장 이규영, 7월2일에는 대의원총회 공동의장 이종린 등이 차례로 구속. 안기부는 민자통이 대단한 이적활동을 전개한 ‘이적단체’로 발표했으나 막상 이들은 대체로 60대의 노인들인데다가 이들의 활동은 “결성대회 후 보증금 300만원짜리 사무소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월회비를 징수하여 통일지향적인 성명서 네 건을 발표한 것이 전부”였음.

O1

인천지역노동자그룹 (☞ <사건편> 인천지역노동자그룹 참조)

O2

O3

O4

O5

1988.2~1989.12.25 (치안본부 발표)

O6

인천

O7

비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O11

1989년 12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회사 사무실, 집에서 영장없이 연행된 김능구, 김영민, 정찬, 서경선씨에 대하여 치안본부는 1989년 12월 25일 이들이 “1988년 2월부터 인천, 부천공단 내 기업체에 위장취업한 서울대 운동권출신 10여 명을 중심으로 인천지역노동자그룹을 결성한 뒤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고 「혁명운동에 있어서 노동운동 지하역할」 등 유인물을 제작, 배포해왔다”(『조선일보』, 1989.12.24)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일동’의 조직으로 추궁하다가 아님이 확인되자 ‘인천지역노동자그룹’이란 이름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이적단체구성으로 억지구속한 사건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주장이다.(『노동운동 조직사건 자료집』, 전국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pp9)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294~295)

O12

김능구, 김영민, 정찬, 서경선

O13

O14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연구팀 의견 : 공안수사기관에 의한 조작 및 과장 가능성 농후>

O1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O2

O3

O4

O5

1988.2.1~1992.8.29

O6

O7

공개 / ?

O8

O9

O10

대학교육 노동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은 87년의 6월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동했다. 1987년 8월 21일 한신대학교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후,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지방에서도 대학노동조합은 우후죽순처럼 돌아났다. 이러한 바탕으로 1988년 2월 1일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가 발족되어 대학노동조합을 결속하기 시작했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1

초기의 대학노조는 대체로 6월 항쟁에서 보여준 시민정신에 초보적인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시기 노동조합의 관심은 주로 노동법에 관련한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88년 3월 12일 당시 문교부 관계자의 망언규탄 및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쟁기대회를 계기로 교육노동자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1990년 4월 18일에는 사립학교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6월 16일에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대학교육을 책임질 노동자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또한 91년 1월 11일에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사립대학교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입법청원 기도에 맞서, 법인협의회를 향의 방문하여 대학노조 말살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1월 18일에는 대학노조 사수를 위한 총회파업투쟁을 벌여 전국의 54개노조 6,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찬 결의를 다졌다. 결국 1월 24일에 이르러 노동부로부터 입법계획이 없음을 통보받고 대학노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91년 9월 28일, 서울소재 사립대학노조를 중심으로 '대학노동조합연합'이 기존의 조직에서 갈라져 나와 조직이 둘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도 업종회의와 92년 3월 3일, 'ILO조약 비준공대위'에 참여하여 대외활동도 벌인다. 1992년 8월 29일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와 '대학노동조합연합'은 몇 달 간의 사전 논의를 거쳐 대학노조가 더 이상 분열되어 있는 것은 조직발전과 대학교육노동자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판단 아래 통합을 선언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통합 조직으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게 된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3

대학노동조합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협의회

O2

민출노협

O3

교보문고, 종로서적, 시사영어사, 여원. 일요신문, 천주교중앙, 웅진, 전자시보사, 창인사, 삼성당 등 10여개 노조

O4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O5

1988.2.11~?

O6

O7

공개 / ?

O8

민출노협의 주요 기구로는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지도위원, 상임집행위원회, 회계감사를 두었다.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사업 전반을 심의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상설적으로 사업을 논의하여 결정했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사무처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질적 사업집행 기구였다. 사무처는 총무국, 조직국, 교육선전국, 문화국, 쟁의국, 대외협력국, 여성국, 조사통계국을 두었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2절 1.)

O9

O10

민주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움직임은 전자시보 노동조합 해고철회 투쟁에 대해 일요신문, 여원, 웅진사, 시사영어사, 창인사, 삼성당 등 7개 노조 대표가 1987년 12월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987년 12월 26일에는 농성중인 전자시보 노동조합에 5개 노조 30여 명이 지지농성을 전개했고, 1988년 1월 8일에는 한국일보에 10개 노조 명의로 ‘사슴은 누가 죽였나’라는 여원사의 노조탄압 항의광고를 게재했다. 1월7일부터 9일까지 삼성당 노동조합 부당 부서이동에 항의한 평민당사 2차 농성에 참여했으며, 1월13일, 전자시보 노조가 24일간의 철야농성 끝에 해고철회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1월19일 10개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조합 탄압 공동대처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민주출판언론노조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안에 힘입어 1월27일 위원장들이 모여 협의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고, 2월 11일 다시 이 모임에서 의장(일요신문 노조위원장 이광호)과 총무(강남호)를 선출함으로써 ‘민출노협’을 출범시켰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2절 1.)

O11

민출노협은 활동 주요 활동 방향을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사업장내 민주화 도모, 출판관련노조 결성 적극적 지원, 출판·언론노동조합간의 굳건한 연대활동을 통한 출판·언론노동조합간의 굳건한 연대활동을 통한 출판·언론 노동자의 조직화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두고 활동하였다.

O12

이광호(초대의장), 강남호(초대총무), 박정철(5기 의장), 이한재(5기 부의장)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

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3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참조 : 관련 당사자 증언 (2003.11.17)>**

- \* 이광호 의장(현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편집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민출노협 결성에 전자시보노조 해고철회투쟁이 핵심이었다고 함. 당시 전자시보 조합원의 면면을 보면, 여러모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었다고 함.

O1

민중의당

O2

O3

O4

O5

1988.3.6~5.18 (민중정당재건추진위로 재편 결의)

O6

O7

공개 / 합법

O8

최고 대표위원(정태운(鄭泰允),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부위원장), 공동대표위원(송경평,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파업투쟁 주도), 고문(이세춘, 국본 받기인)

(재건위의 경우) 중앙: 위원장(정태운) 본부 중앙위원(목혜정 조호걸 이강호) 정책국장(정태운 鄭泰允) 사무국장(최병현) 조직국장(진영호) 선전국장(이현배)/ 8개지부: 서울(진영호 최장호 박종혁) 인천-경기(송경평) 강원(최윤) 충남-충부(김재수) 광주-전남-전북(서정훈 김중길) 대구-경북(김현근) 부산(이성우) 경남(김종석 정병문) / 18인 중앙위원회(위원장, 본부 중앙위원 3명, 8개 지부 12명, 중집위의 조직국과 기획국 각 1명)

O9

O10

민중의당은 기층민중에 자신의 계급적 위상을 설정하고 4.19,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으로 이어져 나오는 정치적 자유투쟁,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민주화투쟁 등 민족민주민중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치주체로 자신을 내세웠다. 이처럼 민족민주운동의 정당성을 자부하면서 거리에서, 의회에서, 내각에서 민중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고 민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며 조직된 역량으로 확충하기 위해 '싸우는 정당'으로 당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통합신당을 위한 3단체 연석회의가 무산된 이후, 3단체 가운데 민중적 대의에 입각한 광범한 선전·선동과 지역대중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사소한, 상대적으로 민중적 이념의 확고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신지협이 다수파(강원, 경남, 전북, 경기남부)가 통합하여 1988년 1월 25일 신당결성 전국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뒤이어 1월 29일 창당준비위 결성식을 갖고 2월 6일 창당 받기인 대회를 가졌다. 3월 6일 중앙당을 창당함으로써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민추위의 경우 1988년 1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민중정당의 기본 성격에 대해 1) 외세의 억압을 일소하고 민족의 자주권 회복을 위해 싸우는 정당 2)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참된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정당 3)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싸우는 정당임을 표방하였다.

창당준비위원으로 27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비합법 노동운동계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과 체현의회(CA)그룹의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CA그룹이 1986년 말경부터 당국에 의한 검거로 조직적으로 와해되면서 잔류 성원들이 재건한 것)이 두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운동 MAP」, 조현연)

백기완후보 측의 하부조직세력들은 1988년 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가칭 「민중의당」 창당준비위 결성식을 갖고, 전 인천민주노동자연맹 부위원장 정태운씨(35)를 준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발표된 준비위원 62명중에는 민청학련 사건구속자 출신인 이강철, 강구철씨,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인숙, 안두희씨를 응징한 권중희, 대우자동차 파업농성주도자 송경평, 해고근로자 유인혜, 박종철군 모친 정차순씨 등이 포함돼 있다.〔조선일보〕, 1988. 1.30

O11

13대 총선 실험이 실패로 끝난 이후 새로운 조직통합작업을 시도하였다. 1988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2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중의 당을 ‘민중정당재건축진위원회’(재건위)로 재편할 것을 결의하여 조직통합작업을 본격화하였다.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재건위 인천지부에서 열린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롭게 건설될 진보정당의 성격과 한겨레민주당과의 통합문제를 결의하였다. 여기서 재건위는 앞으로 건설될 정당을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대중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주체로서 노동자, 농어민, 도시빈민, 소상공인, 진보적 지식인, 청년학생 등 제국주의적 독점적 지배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중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정당의 계급적, 이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특정 정파 중심의 소수세력으로는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재건위 발족 성명서를 통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민중세력의 분열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민중세력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운동MAP』, 조현연 )

O12

정태윤(鄭泰允, 창당준비위원장), 이강철(李康哲), 강구철(姜求哲), 권인숙(權仁淑), 권중희(權重熙, 고문), 송경평(宋景平), 정차순(鄭且順, 고박종철군 모친, 고문)

O13

O14

〔조선일보〕, 1988. 1.30

O1

야권통합을 위한 청년학생공동위원회

O2

O3

O4

서대협

O5

1988.03.11~?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야권통합이 완전히 무산된 것처럼 보인 3월 9일, 김대중씨의 '선통합 후 2선 퇴진, 연합 공천제 제의' 기자회견이 있던 직후 서대협은 학생운동 출신 청년 일부와 2월 27일 석방된 학생활동가들에게 3월 10일, 야권통합을 위한 간담회를 제의하고 '야권통합을 위한 청년학생공동위원회'를 3월 11일 발족시켰다. (『말』, 제22호, 1988. 4, pp59~60)

O11

야권통합을 위한 청년학생공동위원회는 양김씨 방문 및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말』, 제22호, 1988. 4, pp.59~60)

O12

우상호(禹相虎), 허인회, 함운경, 이남주

O13

서대협

O14

『말』, 제22호, 1988. 4

O1

연구·전문기관 노동조합협의회

O2

O3

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산업연구원 노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조합,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동조합, 한국무역협회 노동조합, 한국에너지연구소(부설) 원자력병원 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소 노동조합, 현대사회연구소

O4

O5

1988.03.12~1988.07.15

O6

서울

O7

공개 / ?

O8

대의원회 - 조합 위원장단 회의 - 상임집행위원회

O9

<결성취지문> : 1. 우리는 민주적인 운영의 원칙을 견지한다! 1. 우리는 자주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운영한다. 1. 우리는 각 노동조합의 개별적 다양성을 보장하되 통일적인 공감대의 형성에 노력한다! 1. 우리는 평조합원의 참여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연대를 추구한다! 1.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1. 우리는 전산업 노동자와의 연대를 추구한다.

O10

1988년 2월 연구기관노조모임을 통해 과학기술연구원 투쟁 사례를 토의하면서 연대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에 '연구전문기관 노조협의회 준비위'를 구성하고 3월 12일 현대사회연구소 강당에서 12개 노조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협의회』, 1988)

O11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현대사회연구소 부당해고 연대투쟁, 인사직제 투쟁, 과학기술연구원 파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인정투쟁 지원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6월 4일 협의회는 전노협 산하 6개 노조와 신규 4개 노조 간담회를 실시한 가운데 기술직 노조와의 협의회 통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6월 14일 기술직노조와의 조직통합을 위한 회의를 열고 11개 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로 명칭을 정하였다.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협의회』, 1988)

O12

박태주(의장, 산업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문철(부의장, 한국무역협회 노동조합 위원장), 이영세(부의장, 한국여성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이인우(사무국장,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 위원장), 주진천(회계감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수(대한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위원장)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협의회』, 1988)

O13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

O14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협의회」, 1988 /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O1

한겨레민주당

O2

O3

O4

O5

1988.3.29~1988.4.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선거대책위원회-선거대책본부

O9

O10

가칭 한겨레민주당은 88년 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삼송빌딩 9층 강당에서 창당발기인대회 및 창당준비위원회를 갖고 준비위원장에 예춘호씨를 선출했다. 한겨레민주당은 창당발기인선언문에서 '이제 민주화는 기존 보수야당을 통해서는 이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한겨레민주당'은 노동자, 농어민, 도시빈민 근로대중을 위시한 양심적지식인, 사무직 근로자, 중소기업인, 양심적기업인 등 민중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선일보』, 1988. 2.18)

3단체 연석회의가 무산된 이후, 상대적으로 이념적 개방성과 현실감각에 기반하여 '운동권의 조직이 아닌 당', '정치는 현실이며 당선이 목표'를 주장한 새정치모임(새정치)과 '신당결성 지역추진협의회'(신지협) 일부(경북, 충남)가 <한겨레민주당>의 추진모체가 되어 1988년 3월 29일 창당하였다. 비교적 명망성 있는 재야정치인이나 학생운동 출신의 젊은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다. (『말』21호, 1988. 3)

민주당-평민당과의 3자 통합을 추진해온 한겨레민주당(가칭)의 예춘호씨, 장을병, 제정구씨 등 4인 대표는 3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창당작업을 계속, 오는 26일 중앙당창당대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평민 양당에 대해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야권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는 등 분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양당은 한겨레민주당과의 연합, 또는 통합 운운하면서 갖가지 기만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도록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88. 3.16)

O11

한겨레민주당은 창당발기선언문에서 오늘의 정치현실이 '이념적인 진보나 혁신에서가 아니라 민족 대 반민족, 민주 대 군부독재, 통일 대 분단, 역사의 발전 대 후퇴, 평화 대 폭력, 진리 대 불의'로 맞서고 있다면서 그 어느 한 편에 확고히 서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당의 기반과 방향을 대 중정당·민주정당 및 새로운 세대의 당을 지향하는 데 두었다.(『말』21호, 1988. 3) 중앙당 창당 약 10일만인 1988년 4월 8일 곧바로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 예춘호, 부위원장 : 조순형, 최병욱, 이강철 위원: 김재훈, 홍성표, 최수영, 오순부)와 선거대책본부(본부장: 제정구, 부분부장: 최정명, 상황실장: 정화영, 대변인: 이현배, 부대변인: 원혜영, 김부겸)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88년 4.26총선(제13대)에 참가하여 전국 65개 지역구에 총선후보를 출마하여 1.28%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해체하였다. (조현연, 『운동 MAP』)

O12

예춘호(芮春浩, 상임대표위원), 조순형(대표위원, 국회의원), 장을병(張乙炳, 대표위원, 성균관대 교수),  
제정구(諸廷垢, 대표위원, 새정치추진모임 대표), 홍사덕(洪思德), 김재훈(고 김세진군 부친), 고  
영구, 홍성표(洪晟杓), 정성철, 이수인(李壽仁, 영남대 교수), 한영수(韓英洙), 김도현(金道鉉)  
(『말』21호, 1988. 3)

O13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정치연합, 통합민중당

O14

『말』21호, 1988. 3 / 『조선일보』, 1988. 2.18 / 『조선일보』, 1988. 3.16

O1

인천민주청년회 건설준비위원회

O2

인민청 건준위

O3

O4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O5

1988.03.~?

O6

부천

O7

공개 / ?

O8

생산직 분과, 사무직 분과, 대중활동국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5)

O9

O10

인천민주청년회는 1988년 3월 7명의 준비위원이 모여 인천지역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들의 모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천민주청년회 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p105)

O11

인천민주청년회는 발족 이후 지속적인 대중활동과 투쟁 속에서 7개의 반구조를 기반으로 한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나갔고 89년 5월 평양축전 등에 참여하였다. 인민청은 90년 4월 8일 제3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동청년’으로서의 자신의 내용을 정립,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생산직 분과, 사무직 분과, 대중활동국을 기본 조직으로 하여 청년들의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살아 숨쉬는 정치적 투쟁의지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5)

O12

O13

O14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O1

수원사랑민주청년회 준비위원회

O2

수민청 준비위

O3

O4

O5

1988.3.~?

O6

수원

O7

공개 / ?

O8

생산직반, 노래반, 사무직반, 풍물반, 독서토론반의 5개 소모임으로 구성

O9

O10

87년 대통령 선거시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모였던 청년들이 지역 청년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88년 3월에 준비위를 구성하여 이후 활동을 거쳐 89년 3월에 창립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p106)

O11

수원민주사랑청년회는 창립 이후 수원청년의 구심으로 서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생산직반, 노래반, 사무직반, 풍물반, 독서토론반의 5개 소모임 활동을 전개하였고, 기획 사업으로 대중강좌인 수원사랑 민주교실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청년문고인 참사랑 문고사업을 진행하였고 지역의 민연과 국연 사업, 그리고 청년연대사업 등을 전개하였다.(『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p106)

O12

참사랑문고

O13

O14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O1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O2

안민청

O3

O4

O5

1988.3.~?

O6

안양

O7

공개 / ?

O8

O9

O10

수사기관은 이들이 1988년 3월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안민청을 결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관련자들은 안민청이 1988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산하의 지역청년단체로 창립되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p31)

O11

1998년 6월 2일 강명옥, 김종박, 김대기, 채원희, 김선희, 강현수, 윤여창, 안은미, 정경희 등이 이적단체인 안민청을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1988년 3월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안민청을 결성한 뒤 기관지 ‘안양두꺼비’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선전선동하였고, 매년 민중학교를 개설하여 노조 간부와 학생 및 노동자들에게 변증법적 유물론, 조직론 등의 사상학습을 실시하였고 파업현장과 불법시위에 참가하여 노동자계급투쟁을 선동해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관련자들은 안민청이 1988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산하의 지역단체로 창립된 이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회봉사기관인 ‘안양시민학교’를 운영하여 3천여명의 문맹자를 교육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였고,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로서 ‘진보산악회’ 활동을 하였고,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을 하였고, 진보적인 인문사회과학을 가르치는 비정기적인 교육강좌를 개설하였고, 교통문제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위원회 활동 등을 벌여왔으며, 지방자치선거에 적극적으로 입후보자를 내는 등 진보적인 지역청년단체라고 주장하였다.(『인권하루소식』 제1145호, 1998. 6. 13.; 민변 등 위임, 앞의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36-37쪽)

재판과정에서 지역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인권하루소식』 제1163호, 1998. 7. 9), 수원지방법원의 1심재판부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김종박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김종박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p31)

O12

강명옥, 김종박, 김대기, 채원희, 김선희, 강현수, 윤여창, 안은미, 정경희

O13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연구팀 의견>**

- \* 안민청사건은 조사시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체 결성 시점이 해당되므로 포함.
- \* 신고형량 및 관련자의 주장에 비취볼 때, 조작 또는 과장 가능성 농후

O1

전국언론노동조합협의회

O2

언노협

O3

O4

O5

1988.4.6~1988.11.26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발족)

O6

O7

공개 / 임의단체

O8

O9

O10

87년 범민족민주운동의 민주화투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각 단위 언론노조의 지속적인 조직 결성의 확산과 투쟁의 고양과정에 있다. 87년 각 언론사의 노동조합은 결집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편집권 독립조항 등의 명문화, 사내의 반민주적인 요소의 척결 및 근로조건개선 등 언론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내언론사 전체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사회민주화와 언론민주화의 요구는 연맹체결성의 필요성을 고조시켰고 88년 4월 6일 15개 언론사노조가 ‘자유언론’과 ‘권익쟁취’의 깃발을 들고 임의단체인「전국언론노동조합협의회」를 창립하였다.

O11 언노협은 1988년 7월 부산일보 파업투쟁과 MBC 파업투쟁에 있어서 지원과 연대활동을 벌였는데 이 투쟁과정에서 편집권 독립 투쟁의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언노협은 언론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와 초보적 수준에서 연대투쟁을 가능케 했으나 법적 단체가 아닌 한계성을 안고 있어 신식민지파시즘 국가권력과 이와 유착한 언론독점자본의 강고한 제반통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조직력이나 이념적인 측면에서 역부족이었다. 결국 각 언론사가 민주언론을 지향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언노협을 형성했지만, 연대투쟁방향의 선택에 있어서 시종일관 소극적이었고, 스스로 몸담고 있는 신문방송의 축소지향적 보도태도에 보다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언노협의 한계성과 가능성은 언노련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탄압,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모든 형태의 간섭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조된다.

88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경남신문 파업현장에서는 언노협이 임의 친목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합법적 연맹체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0개 언론사 대표들이 「언노련추진위원회」(한국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경인일보·연합통신·MBC·KBS) 결성에 합의하고 1988년 11월 26일 임의기구인 언노협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41개사 언론노조 1만 3천이 언론노동자의 결집체인 독자적 산별연맹체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정식 발족된다. (「80년대 언론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김금녀, 1991, pp85~86)

O13 언노련추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O14 「80년대 언론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김금녀, 1991

O1

서울지역대학생총연합 건설추진위원회

O2

서건추

O3

총선대책위원회

O4

O5

1988.04.12~07.22

O6

서울

O7

공개 / ?

O8

산하에 총선대책위원회를 두었다.

O9

O10

서건추는 서대협이 서울지역학생대중간의 연대와 통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학생대중의 구심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원인을 ‘협의체’라는 형식의 한계에서 찾고 이에 서대협 강화론(또는 서총협론)을 비판하면서 연합체적 조직의 즉각적 건설을 주장, 4월 12일 서울대에서 독자적 조직으로 서건추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p51)

O11

서건추는 40만 청년 학생을 공동의 강령과 규약으로 묶어세우고 그 구성경로 또한 대다수 학우들의 이익을 수호하여 실천하는 조직으로 그 위상을 설정하였다. 서건추는 민주적 학생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위상 속에서 발족과 함께 상반기 4월 투쟁의 중심을 총선투쟁으로 설정하고 ‘단일후보’ ‘민주국회’의 깃발을 내걸고 총선투쟁에 돌입한다. 이에 서총련준비위원회와 함께 4월 19일 수유리에서 ‘4.19 28주년 기념식 및 민정당 폐퇴와 민주쟁취를 위한 범국민 쉼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산하에 ‘총선대책위원회’를 두고 ‘민중의 당’ 지원투쟁, 부정선거감시·고발센터운영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51) 그러나 총선 이후 학생운동진영의 양분은 이후 통일 전망을 수립하는데 복무되지 못한 채 40만 학우의 강렬한 열망인 서울학생총연합 건설을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고 현재적 상황을 평가하면서 7월 22일 해체를 결의하게 된다.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86)

O12

O13

O14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O1

반민정당총선투쟁연합

O2

총투련

O3

O4

O5

1988.04.014~?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대선에서의 분열로 패배한 민주진영에 있어서 총투련의 결성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영의 단결된 하나의 조직적 틀을 마련하였다. 4월 14일 발족된 총투련은 반정부진영의 대부분을, 심지어 평민당·민주당까지 포괄해내었다.(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p85~86)

O11

4월 19일 '4.19 28주년 기념식 및 민정당 폐퇴와 민주쟁취를 위한 범국민 쫓기대회'를 시발로 유세장 투쟁 등 자기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민정당을 폐퇴시키고 반정부진영의 강고한 연합으로 민주국회를 창출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목적으로 뚜렷이 하지 못하고 이를 국민대중의 힘으로 실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오류와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총선에서 4천만 민중의 염원인 파쇼민정당 폐퇴와 보수야당의 견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하지 못함으로 인해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쉽게 와해된다.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pp.85~86)

O12

O13

O14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O1

한국사회연구소

O2

한사연

O3

O4

O5

1988.04~현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O6

O7

공개 / 합법

O8

연구원들은 정치, 경제, 노동, 사회복지, 사회조사 등 5개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또는 연구 관심에 따라 학제간 연구팀으로 재조직되고 있다. 연구소 차원의 통일연구팀, 신제도주의 연구팀이나 정치연구실 내의 정당연구팀, 경제연구실 내의 동아시아연구팀 등이 그 예이다.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연구국 회의에는 연구국장, 사무국장사 5, 5개 연구실 실장들로 구성된다. 연구국 회의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항상 연구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일상적인 연구소 운영은 연구국 회의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한편 『동향과 전망』의 편집과 관련한 연구소 내 편집회의, 편집기획위원들이 참여하는 편집기획회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연구원총회는 연구소의 중장기적인 학술활동의 과제와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5개 연구실의 연구회의이다. 이 회의는 각 연구실의 사정에 따라 월 1~2회 열리는데 이를 통해 이론적 세미나로부터 개별 연구성과의 검토, 보완, 연구소 및 연구실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토의하고 있다. 한사연의 실질적인 연구성과들이 뼈대를 갖추고 살을 붙이는 과정은 대부분 이 모임에서 이루어진다.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p242~243)

O9

O10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 모태는 한겨레사회연구소와 한국사회연구소이다. 한겨레사회연구소와 한국사회연구소는 1980년대를 통하여 급속히 성장한 한국의 학술운동 진영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결성한 연구소이다. 한겨레사회연구소(이사장 예춘호, 소장 장을병)는 다양한 현장활동에 경험을 지닌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1987년 11월에 창립하였으며, 한국사회연구소(소장 정윤형)는 1988년 4월에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야의 소장 연구자들과 진보하계의 중진 교수뿐만 아니라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두 연구소는 활발한 연구교류를 통하여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수행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1992년 4월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이사장 예춘호·고박현채·김중배, 소장 정윤형)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p240~247)

O11

한사연은 동향 및 정세분석을 행하였다. 한겨레사회연구소는 87년 12월부터 90년 3월까지 「한겨레회

보」를 통권 19호까지 발간하였고 이어서 90년 1월부터 91년 12월까지 「겨레의 길」을 통권 4호까지 발간하였다. 한국사회연구소에서는 동향분석을 위해서 당시 50여명에 이르는 전문연구진들이 한국과 세계의 흐름을 정리 분석하였고, 『월간동향』(~97.3)이란 매체를 통해 매달 발표하였다. 국제정치, 국내정치, 국제경제, 국내경제, 사회 및 노동운동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매달 중요일지를 정리하고, 그 달의 주요 흐름을 분석, 논평하는 작업이 한국사회연구소 창립 직전인 88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한국의 정치 경제적 구조분석과 이론화를 시도, 『동향과 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셋째, 정책대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사연이 지금까지 발간한 단행본으로는 『사회과학사전』, 『오늘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노동자연구』, 『독점대기업과 노동운동1,2』, 『다국적기업과 노동운동』, 『노동조합조직연구』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중정당론』, 『한국경제론』,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자본주의와 민주주의』(한사연 심포지움 자료집), 『다이어그램 한국경제』, 『분단에서 통일로』등이 있다.

그 외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성과물도 상당수 있으며, 특히 진보진영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 단체의 공식 요청에 연구성과를 제공하기도 하고, 소속 연구원 다수가 각 단체에 다양한 형식으로 자문,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pp240~247)

O12

예춘호(芮春浩, 이사장), 박현채(이사장), 김중배(이사장), 정운형(소장)

O13

한겨레사회연구소, 한국사회연구소

O14

희보「한겨레희보」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O1

수원여민회

O2

O3

O4

O5

1988.04~?

O6

수원

O7

공개 / ?

O8

O9

O10

일하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88년 4월 수원여민회로 설립되었다. 이후 92년 4월 수원여성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pp.302~303)

O11

91년 5월 유아전문보육시설 용기종기놀이방을 설립하였고 92년 4월 수원여성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pp.302~303)

O12

O13

수원여성회, 용기종기놀이방

O14

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O1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O2

서총련

O3

O4

전대협

O5

1988. 5.13~현재

O6

서울

O7

공개 / ?

O8

서총련 골간의 보고·점검 체계는 단대 운영위-각 학생회 운영위-지구 운영위-중앙 상임운영위로 되어 있었고, 특히 보고를 총화하기 위해서 지구 운영위를 상설화하고 있었다. 서총련 중앙은 상하간의 괴리, 중앙의존적 활동양식 등의 문제 원인을 각 대학 학생회의 골간 조직력 부재로 파악하였다.(조지훈, 『80년대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1989, pp170)

O9

O10 서총련은 서대협이 민주주의 원리의 부재와 조직사상을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서건추 발족 한 달 뒤인 5월 13일 발족식을 갖는다. 이는 서대협의 계승과 혁신을 통하여 서학련의 실질적 전망을 갖는 조직적 기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4월 10일 서대협 해소를 결의한 후 서총련 준비위원회를 거쳐 결성에 이른 것이다. 서총련 역시 민주적으로 단련된 각 학교 총학생회의 이해와 요구에 의한 다수의결 속에서 집단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40만 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서학련을 지향하고 있었다. (조지훈, 『80년대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1989, pp87)

O11 서총련 준비위원회는 88년 총선시기 4월 투쟁의 목표를 대통령선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구국운동의 활로를 열고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서건추와 함께 4월 19일 수유리에서 '4.19 28주년 기념식 및 민정당 폐퇴와 민주쟁취를 위한 범국민 켈기대회'를 가진 후 '낙선 민정당, 처단 노태우'를 외치며 종로 일대에서 치열한 가두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서총련준비위는 4월총선 투쟁을 적극 전개하기보다는 주로 4월 16일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비롯, 4월 28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서총련 산하 '조국통일을 위한 특위연합(이하 조통특위) 준비위'를 건설, 통일운동의 확산에 주력하였다. 서총련은 6.10민중항쟁 1주년을 맞아 6.10회담 성사 투쟁 및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한 투쟁에 주력하였다. 조성만 열사의 투신 이후 서총련은 각 학교별로 통일선봉대를 조직하는 한편 심포지움 북한바로알기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서건추는 총선 이후 학생운동진영의 양분은 이후 통일 전망을 수립하는 데 복무하지 못한 채 40만 학우의 강렬한 열망인 서울학생총연합 건설을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고 현재적 상황을 평가하면서 7월 22일 발전적 해체를 결의하고 서총련과 통합에 이르게 된다. 새롭게 정비된 서총련은 6.10투쟁을 계승하는 국토종단 순례대행진과 8.15 남북회담을 추진했다. (조지훈,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1989, pp51~52, 87~88)

이후 서총련은 전대협과 그 실천적 궤를 같이하다가 1993년 전대협이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총련으로 새롭게 정비되면서 한총련 산하 조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O12

O13 오영식(吳泳食), 임중식(林鍾皙), 김종식

O14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 조지훈, 형성사, 1989

O1

광주학살, 부정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지역 민주투쟁연합

O2

서민투련

O5

1988.05.17~?

O6

서울

O10

총선 이후, 총투련에 참여하였던 평민당, 통민당을 제외한 반정부진영의 중심세력을 중심으로 반파쇼 연합전선의 구체적 외화로서 새로운 조직결성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광주학살과 부정비리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학살, 비리의 원흉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는 서민투련이 1988년 5월 17일 발족하였다.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사』, 조지훈, 형성사, 1989, pp.86~87)

O14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O1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5월공동투쟁위원회

O2

5월공투위

O3

광주학살, 부정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서울지역민주투쟁연합(서민투련 : 서울출옥동지회, 서건추, 민중정당재건축진위원회), 서총련, 서울국민운동본부

O4

O5

1988. 5.18~?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총선 이후 새로운 투쟁의 모색과정에서 당면 5월 투쟁의 중심적 사업으로 광주학살 투쟁이 될 것  
과 이에 대한 반정부진영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반과소연합전선을  
구축하는 현실적 대안은 서울출옥동지회(서출동), 서건추, 민중정당재건축진위원회(재건위)의  
서민투련 건설안과 서총련, 서울국민운동본부(국본), 민통련의 공투위 건설안(국본 강화론)으로  
분리된다. 이는 12개 민주단체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서민투련이 결성된 후 5월 투쟁의 효  
과적 전개와 반정부 진영의 단결을 계속 모색,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서민투련을 비롯한 여타  
단체와 협의체 수준의 5월공투위를 1988년 5월 18일 구성한다.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  
사』, 형성사, 1989, p.87)

O11

O12

공투위는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학살원흉처단 범국민 결의대회를 비롯, 5월 투쟁을 주도해나간다.

O13

O14

조지훈, 『80년대후반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9

O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O2

민변

O3

O4

O5

1988. 5.28~현재

O6

O7

공개 / 합법

O8

2003년 현재 서울 본부-부산/경남지부-대전/충청지부-광주/전남지부 체계와 총회-집행위원회(사무국-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임시위원회))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O9

O10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정법회')를 결성하였다.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던 층과 1980년대에 노동사건 등으로 변론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던 소장층의 결합이었다. 이 모임은 1987년 6월민주항쟁 무렵까지 권인숙, 박종철, 김근태 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의 폭로와 변론을 담당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주요 구성원은 한승헌, 이병린, 이돈명, 조준희, 황인철, 홍성우, 조영래, 이상수, 박원순, 박성민, 서예교 등이었다. (NAVER 백과사전)

민주세력의 많은 희생과 오랜 노력의 결과, 1988년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변론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 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연구와 대안 마련이 요청되었다. 또 한편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 층이 대거 배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여, 1988년 5월 28일 정법회가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직간접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층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던 '청년변호사회(청변)'와 함께: NAVER 백과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창립되었다.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정법회가 해왔던 기본적인 변론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제도와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연구·대안마련 등을 활동목적으로 삼았다. (NAVER 백과사전)

주요활동으로는 ①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현장실태조사 ② 정치적 양심수를 비롯한 경제·환경·생활문제 등의 공익소송사건에 대한 변론활동 ③ 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발행과 국내 유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괄하는 인권백서인 《인권보고서》 집필작업에 참여하는 등 여론형성활동 ④ 각종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가와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제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외협력활동이 있다.(NAVER 백과사전)

그 창립 의의에 대해 민변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 업무의 개별·분산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단점을 극복하여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토록 하였다. 둘째, 전체 민주화운동세력 안에서 법률가단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려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O11

O12

O13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

O14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NAVER 백과사전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O2

서노협

O3

O4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O5

1988. 5.29~?

O6

서울

O7

공개 / 임의단체

O8

서노협의 주요한 기관으로는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회계감사 및 특별위원회를 두었다. 총회는 형식상 최고 의결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의원대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과 대표로 구성되어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상설기구이고, 집행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과 사무처 각 집행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제반 일상업무를 집행하였다. 집행부서는 총무국, 조직국, 교육국, 문화국, 쟁의지도국, 대외협력국, 여성국, 복지국, 법규국, 조사통계국, 선전국 등 총 11개를 두었다. (『전노협 백서』, 3권 3장 1절)

O9 1. 우리는 민주노조간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창출하며 이를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시키는데 매진한다. 1. 우리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자본과 권력의 개입을 배격하고 자주적, 민주적으로 활동한다. 1. 우리는 생계비 쟁취,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개선, 노동현장 민주화에 매진하여 노동자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 1. 우리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어떠한 탄압에도 단호히 맞서 싸우며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이 땅의 어느 지역, 어느 업종의 노동자와도 뜨거운 동지애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통일적인 연대를 구축한다. 1. 우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민주세력과 전국적으로 협력하며 모든 불의와 억압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한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pp81~82)

O10

서노협의 결성은 1987년 12월 15일, '맥스테크 노동조합 투쟁승리 제1차 보고대회'에 참석한 서울지하철 등 15개 사업장 노조위원장들이 서울지역 차원의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부터였다. 이어 1988년 1월 5일 한국노동교육협의회에서 19개 사업장 대표 및 노동조합 간부 23명이 모여 '서울지역 민주노조 연대조직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수련회 일정과 장소를 논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어 1월9~10일, 이틀간에 걸쳐 경기도 양주군 마석 소재 '새터수련장'에서 23개 사업장 위원장과 노조 간부 93명이 모여 추진위원회(참가조직은 10개 노조)를 구성하고 지역차원의 연대조직 건설을 재결의하였다. 한편 1988년 1월 22일에 있었던 '맥스테크사 위장폐업 철회촉구 1차 성명서' 발표에 22개 사업장이 서명하는 등 연대활동도 한층 활발해졌다.

1988년 1월 25일에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소재 '전주식당'에서 43개 사업장 대표자와 간부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준비위(이하 '서노협(준)')가 결성되었고, '서노협(준)'에는 20개의 노조가 참여하였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

이어 88년 1월 27일 업종별 7개노조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맥스텍 공동지원, 공동으로 임투교육 실시, 임투기간중 동아건설, 대한광학, 상섬제약 등의 지원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5월 6일 준비위 확대 대표자모임을 거쳐 5월 29일에 결성하였다.(『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환 외, 조국, 1989, pp243)

'6.29선언'이후 구성된 단위 노동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 2백여명은 1988년 5월 29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의 13 여성백인회관 6층강당에서 모여 '서울지역 노동자조합협의회'(서노협)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으로 배일도(38.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씨를 선출했다. (『조선일보』, 1988. 5.31)

#### O11

서노협은 1988년 5월 29일 결성시 90개 노조로 출발하여 12월 6일에는 98개노조 33,781명, 1989년 6월에는 가입노조 105개에 조합원 36,839명으로 확대되었다. 서노협의 이러한 조직확대는 서노협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 자본과 정권에 대한 강력한 연대투쟁의 성과였다. 서노협은 결성시기부터 노동운동단합에 대하여 공동투쟁을 수행했다. 맥스텍사의 위장폐업 철회투쟁, 서울지하철 노조 탄압저지 투쟁, 동아건설 창동지부 지원투쟁, 모토로라 노조탄압 저지투쟁 등이 그 주요한 사례이다. 서노협은 1988년 하반기부터 노동법 개정투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1월13일 노동자대회 개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전국적 중앙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법 개정투쟁을 비롯한 투쟁의 중심부 역할을 수행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지역, 업종별 전국회의'와 '노동법개정 전국투쟁본부'를 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전노협 건설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

#### O12

배일도(裴一道, 초대 의장), 단병호(段炳浩, 초대 부의장, 동아건설 창동 위원장), 이상학(초대 부의장, 대한교육보험 위원장), 차수련(초대 부의장, 한양대병원 위원장), 유진섭(초대 부의장, 한국린나이 위원장), 윤창익(초대 부의장, 데이콤 위원장), 이용식(초대 부의장, 삼환기업 부위원장), 현기대(초대 회계감사, 신동아화재보험 부위원장), 김용훈(초대 회계감사, 럭키엔지니어링 위원장), (초대 사무처장, 청계피복 위원장), 구로지구대표 김주성(신한밸브 위원장), 영등포지구대표 정만승(일광교역 지부장), 온수지구대표 한규한(한국콘베어 위원장), 강북지구대표 임병규(동신식품 위원장)가 담당, 공기업대표 김명희(서울지하철 2대 위원장), 조직국장 오대성(대한광학 위원장), 교육국장 김점순(중원전자 위원장), 쟁의국장 이순형(세원 위원장), 여성국장 김경자(한국슈어프로드즈 전 위원장), 조사통계국장 윤운규(K.D.I 위원장) (『전노협 백서』, 3권 3장 1절)

#### O13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준비위

#### O14

『전노협 백서』 1권, 3권 / 김장환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 『조선일보』, 1988. 5.31 /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선언/강령』, 81~82쪽

O1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O2

전국노운협

O3

서울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서울노운협-박종만추모사업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전태일기념사업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카톨릭노동사목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카톨릭노동청년회, 한국기독교노동자 서울지역연맹,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등),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경기남부·수원노동자연합, 경남노동자협의회 등

O4

O5

1988.6.7~현재(?)

O6

O7

공개

O8

O9

O10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는 87년 7, 8, 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가중되는 군사정권과 자본가측의 폭력적 노동운동탄압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운동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1988년 6월 7일에 결성하였다. 이 전국노운협을 결성하는 데는 87년부터 형성되는 노동운동의 세 가지 흐름이 바탕이 되었다. 하나는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노동자위원회」(국본노위)의 결성과 활동이다. 국본노위는 7, 8, 9월 노동자대투쟁과 그 이후 노동운동탄압에 공동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활동이 전국노운협을 결성하는 데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다음은 대통령 선거 시기의 수도권지역 중심의 「노동자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활동과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수도권노동운동협의회」의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선대위 활동을 토대로 전국적 노동운동의 결집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진행되었지만 현실적 요구에 기반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은 88년초 현대엔진투쟁을 계기로 「노조탄압저지 전국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전국공대협) 결성에 참여하고 다시 그 이후 결성된 전국노운협으로 해소되었다. 셋째로 전국노운협을 결성하는 데 가장 주요한 흐름이 되었던 것으로서 88년 2월 현대엔진노동자투쟁을 계기로 발전된 부분이다. 이것은 현대엔진투쟁을 통한 구체적, 실천적 요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전까지의 흐름과 경험을 하나로 모아 전국노운협을 결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현대엔진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자 3월 5일 전국노동운동단체 대표자회의가 울산에서 열렸고 이 회의에서 ‘노조탄압저지 전국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현대엔진 투쟁을 지원 지지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공대협은 4월 2,3일간에 걸친 전국적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계급의 당당한 요구와 전국적 구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대협의 형태로는 그 이후 임투를 비롯한 노동운동의 요구를 하나로 집결시켜 낼 수 없게 되어 추진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6월 7일 대전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전국공대협을 보다 조직적이고 상설적인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하여 전국공대협을 해체하고 전국노운협을 결성하였다.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pp253~254)

O11

88년 결성 이후 전국노운협은 88년 8월 전국적 대중신문을 지향하는 「노동자 신문」을 창간, 발행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의 공동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7월 10일 마산에서 열린 ‘노동운동탄압분쇄 및 노동악법 개정촉구, 노동부장관퇴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7월 17일에는 인천에서 수도권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마산에서 ‘맥구직장 폭력단추방 및 구속노동자석방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하반기에는 전국의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들과 연대하에 노동법개정투쟁을 준비하고 이끌어갔다. 또한 각계각층과의 연대사업을 벌임으로써 통일전선사업을 벌였는데 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생겨난 민족민주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중운동연합건설을 위한 논의를 적극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전국노운협은 민족민주운동의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 후 전국노운협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1989. 1.21)을 창설하는데 기여한다.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환 외, 조국, 1989, pp255~256)

O12

신철영, 김승호

O13

노조탄압저지 전국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

O14

『노동운동』,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988 /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외, 조국, 1989 /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국노운협,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의 ‘범민주투쟁연합’ 제안서」(88.07.01), 83~84쪽

<참조: 김선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 사건

1995. 11. 1. 김영곤(의장), 문성현(전노협 사무총장), 박찬식(전 편집부장)이 연행·구속되었다. 이들은 노운협의 기관지인 월간 ‘노동운동’에 게재한 글, 노운협의 강령, 1992년에 북한 직업총동맹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관련하여 보내온 팩스전문, 한국통신 사태 등 노사분규의 배후조종 혐의로 조사받았다(『인권하루소식』 제519호, 1995. 11. 4.).

검찰은 노운협 결성부분을 이적단체구성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법원(서울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 민형기)은 1996. 4. 27. 노운협의 결성시기가 1988년이고 1990년 대의원대회는 단지 단체를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적단체구성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3사람 모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1997. 2. 이용석이, 1997. 5. 24. 김윤규, 박성철(경남)이 구속되었으며, 1998. 8. 박승호가 구속되었다. 이용석에 대해서도 1,2심에서 이적단체구성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98. 3.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판례공보』 1998. 5. 1.자, 1260쪽), 박승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1심 재판과정에서 이적단체구성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노운협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구팀 의견>**

- \* 전국노운협 사건의 경우 발생 시기가 조사 시기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나, 해당 단체가 조사 대상이므로 참조로 사건을 수록한 것임.

O1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O2

인노협

O3

경일화학노동조합, 남일금속노동조합, 대양전기노동조합, 대진정밀노동조합, 대한마이크로노동조합, 동성상공노동조합, 동신평업노동조합, 동신전자노동조합, 동화과학노동조합, 로얄산업노동조합, 몬트레스노동조합, 미미양행노동조합, 삼우실업노동조합, 삼화실업노동조합, 사효정공노동조합, 서진기업노동조합, 신광기업노동조합, 신흥노동조합, 연합기계노동조합, 전일금속노동조합, 제성정밀노동조합, 진성전자노동조합, 진진양행노동조합, 천보산업노동조합, 정보산업노동조합, 코스모스전자노동조합, 콜트악기노동조합, 한국테크레크노동조합, 한국정공노동조합, 한독금속노동조합, 한두물산노동조합, 협의실업노동조합, 흥부합성노동조합, 흥일산업노동조합(『월간 흐름』, 1989. 6, 형성사)

O4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O5

1988.06.18~?

O6

인천

O7

공개 / 임의단체

O8

인노협은 1988년 6월 18일 효성동 성당에서 27개 사업장 4,000여 명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배정된 대의원대회를 통해 창립하였다. 대의원 배정기준은 100명 미만까지 1명, 100~299명까지 2명, 300~499명까지 3명, 그 이상은 500명 단위로 1명씩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가 지나치게 대공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중소기업장에서도 최소 1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배려했다. 인노협은 결성 이후 총회, 대의원대회, 의장, 운영위원회, 사무국, 각 국(교육국, 조직국, 쟁의지도국, 문화국, 홍보국, 조사통계국)으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창립 4개월 후인 1988년 10월 27일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규약을 개정하고 새 임원을 선출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한편 인노협 결성 이후 조직도 꾸준히 확대되어 10월27일 임시대의원대회 때에는 총 47개 노조가 가입하였다.

O9

1.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굳건히 연대하여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1. 우리는 노동3권의 완전한 확보와 자본과 권력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1. 우리는 8시간 노동제의 확립과 생계비 쟁취 등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대의와 함께 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에 봉사하는 모든 노동자, 민주세력과 연대한다. (『월간 흐름』, 1989. 6, 형성사)

O10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인천지역에서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화학공업의 대기업노동자들이 지역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어용노조의 벽을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노동

자대투쟁의 성과는 주로 중소기업장의 신규노조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내 노동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건설 공동실천 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인천지역 민주노조 대표자들의 모임도 진행되었다.

이리하여 1987년 9월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태연물산, 한광산업 등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자 이에 맞서 '노조탄압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된 한독금속 직장폐쇄 철폐투쟁이 1988년 3월에 승리로 끝나자 연대투쟁을 전개해온 사업장들은 자신감을 가졌고 여타 사업장에서도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 이를 계기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 때부터 지역조직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1988년 6월 18일에 결성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인노협')는 창립선언을 통해, 첫째, 노동3권의 완전 확보, 둘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신장, 셋째, 공동교육 지원, 참여 노동조합의 강화, 노동자 문화 창조와 보급, 넷째, 사회민주화를 위해 제 민주세력과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인천지역의 민주노조 연합체로 자기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

#### O11

인노협은 신규노조 결성지원과 가입노조에 대한 교육 및 선전 등 상급조직으로서의 일상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노조탄압 저지투쟁, 노동법 개정투쟁, 위장폐업 분쇄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주안지역의 세창물산 위장폐업 분쇄투쟁 과정은 주안지역의 연대활동을 촉진하여 인노협 조직확대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단위노조를 순회하면서 슬라이드 상영, 교육, 선전선동을 실시하여 조합원 대중의 정치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성과는 11월13일 여의도 집회 및 행진에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노협 가입 조합원에 대한 대중적 지도력의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 전체에서도 그 지위와 역할을 획기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창립 이후 인천지역내 대공장들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노협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 의해 주장된 '한국노총 인천시협의회 참가와 의무금 납부' 주장은 인노협의 조직적 발전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

#### O12

인노협 초대의장에는 당시 구속중이었던 황재철 한독금속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수석부의장 겸 의장 직무대행에는 신안식(대흥기계 위원장), 부의장에는 최승기(남일금속 위원장), 류권상(정보산업 위원장)이 선임되었고, 회계감사에는 박복록(신광기업 위원장), 박평숙(진성전자 위원장)이, 사무처장에는 김혜숙(코스모스전자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 제3기 체제 : 최동식(위원장, 남일금속노조위원장), 조태천(수석부의장, 경일화학 위원장)

#### O13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준비위원회

#### O14

『전노협 백서』 1권 /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외, 조국, 1989 / 『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 『월간 흐름』, 1989. 6, 형성사 / 『조선일보』 1989.11.17

O1

사월혁명연구소

O2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8.06.18~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민주화의 소망과 민족통일의 열기가 드높은 1988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사월혁명연구소”를 창립하였다. 근대민주주의 체제를 찾은 학생, 시민, 민중의 연합혁명으로서, 조국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 민족자주이념을 올바로 세운 역사적 계기로서, 자유당의 일당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거가 아닌 혁명으로 연구소 이름을 “사월혁명연구소”로 하였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 187)

O11

사월혁명 기념행사 및 학술토론회, 출판사업, 사월혁명시상, 월례연구발표회, 민족민주연대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사월혁명회보」, 『4월혁명과 변혁운동 1, 2』등을 발간하였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 187)

O12

김진균(金晋均, 1기 소장, 서울대교수), 황건(1기, 3기 연구위원장), 하일민(2기 소장, 부산대 교수), 조영건(2기 연구위원장, 경남대 교수), 윤상식(3기 소장)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 187)

O13

O14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01 성남지역노동조합협의회

02 성남노협

03

<성남노협 창립당시 참가노조>

(단위: 명)

노조이름	결성일	대표자	종업원수(조합원, 남/여)	대의원	생산품목	연합단체
고려기업	88. 3.26	전병근	70 45(23/22)	3	앨범	화학
광명전기	85.	장명숙	120 120(50/70)	4	형광등갓	금속
덕천산업	88. 7. 5	이수형	60 40(36/4)	3	드릴	금속
봉명산업	87. 8. 21	라병득	80 62(62/0)	3	보일러,모터	금속
반포산업	87. 8. 24	지희화	320 290	6	텐트	섬유
오리엔트	87. 8. 18	지한규	1200 920(460/460)	13	시계	금속
에이스침대	87. 8. 24	박춘홍	444 197(152/45)	4	침대	화학
리오가구	87. 8. 24	박광진	224(154/70)	5	가구	화학
옥산봉제	88. 1. 4	이정란	70 30(6/24)	3	옷	섬유
영문구	88. 2. 24	박준훈	130 103(40/60)	3	앨범	화학
영림기업	88. 5. 31	정영상	80 26(8/18)	3	자켓	섬유
제화공	88. 4. 10	오길성	3000 130(80/50)	3	구두	섬유
한일라켓트	87. 9.	최낙구	380 330(130/200)	6	라켓,공	화학
풍국산업	88. 4. 1	최종필	400 360(100/260)	6	가방	화학
(주)해성	88. 4. 6	지상돈	202 150(20/120)	4	주사기	화학
한국벨트	88. 5. 18	김학규	95 95(95/0)	3	고무벨트	화학
항진	88. 4. 20	김원중	100 60(25/35)	3	자동차부품	금속
스타	88. 6. 15	이경호	90 79(40/50)	3	형광등전구	금속
합 계			18개 노조 3,261명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5)

0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5

1988.06.25~?

06

성남

07

공개 / 임의단체

08

09

1. 우리는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굳건히 연대하며, 자본과 권력의 개입을 반대하여 자주적,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2. 우리는 8시간 노동과 생계비쟁취, 기타 노동조건 개선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조건을 확보한다.
3. 우리는 각종 노동악법의 개정 및 철폐 등을 통해 노동3권을 완전히 쟁취한다.
4.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민주화를 적극 지원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어떠한 탄압에도 단호히 공동대처한다.
5. 우리는 노동자의 경제

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모든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인 통일을 도모한다. 6. 우리는 불의와 억압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 민주단체와 연대한다. (『월간 흐름』1988. 9, 형성사)

O10

성남지역은 특히 서울지역의 도시철거민과 도시빈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이다. 이곳 산업체는 대체로 30명 이하의 영세 소기업(소위 ‘마찌꼬바’)이 주류를 이루었고, 노동력 이동도 매우 잦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성남지역 노동운동도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1988년 1월초 오리엔트 위원장의 주도로 ‘노조연대 시무식 및 구속 노동자 석방 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집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월드아트를 지원방문하기로 결정하여 실행하였으며, 월드아트 투쟁이 승리하게 되자 연대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로 ‘노동조합 대표자 모임’ 등이 정례화되면서 연대의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었고, 합동전자노조 사수투쟁, 구속자 석방투쟁을 거치면서 공장 정문앞 연대 집회와 공단 시위를 수행하였다. 3월 초 한달 가량 계속된 옥산봉채 위장폐업 철회투쟁에서 각 노조마다 교대로 규찰대 편성, 다양한 연대집회, 시위, 가두진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에 점점 많이 참가하였다. 이렇게 대중투쟁이 고조되는 여세를 몰아 1988년 4월 24일 ‘성남지역 민주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임투 열기를 모아 조직적 토대를 구축시켜나가는 활동을 하였고 고려피혁 최윤범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연대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중적 연대투쟁의 경험과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를 토대로 6월 25일 성남지역민주노동조합협의회(이하 ‘성남노협’)가 창립되었고 이어 7월 23일에는 성남노협 결성 보고대회가 열렸다.(『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5)

O11

O12

오길성(성남노협 초대의장, 제화공노조 위원장), 이정란(회계감사, 옥산위원장), 박준훈(회계감사, 영문구 위원장), 김학규(사무국장, 한국벨트 위원장)

O13

성남지역 민주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성남지구 노동조합총연합

O14

『전노협 백서』 1권 / 『월간 흐름』1988. 9, 형성사

O1

서울운수노동조합협의회

O2

서운노협

O3

O4

O5

1988.7.6~?

O6

서울

O7

공개 / ?

O8

O9

창립선언문(중략)

“그간의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단위사업장의 고립분산적 투쟁이나 일시적·자연발생적인 투쟁의 한계로 말미암아 제대로 관철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조직적인 연대투쟁,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이야말로 우리에게 최대의 효과를 안겨다 줄 것이다.”

주요 목표로 ▲민주노조간의 연대 구축 ▲자주성의 제고 ▲노조의 민주화 ▲노동3권 획득 ▲전국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통일 등을 설정했다. (『말』26호, 1988. 8, pp.76~81)

O10

서울운수노동자들의 현실은 척박했다. 10년동안 기본급이 오히려 줄어든 데다 호봉수당이라 할 수 있는 근속수당 또한 10년동안 보장받지 못했다. 이같은 비인간적인 버스기사들의 저임금체제를 견지하려는 사업주, 사업주 편에 서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어용노조,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기사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져 왔다. 취업카드제도와 이에 반대하는 취업카드철폐운동, 87년 6월 이후 곳곳에서 발생했던 파업 농성, 임금인상, 어용노조퇴진, 연장근로수당 지급, 민주노조협의회 건설, 해고자 복직 등의 주장을 내건 기사들의 투쟁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특히나 어용연맹, 지부의 음모에 기사들이 가뜩이나 분노해 있던 터에 6월 30일 있었던 서울버스지부와 서울버스사업조합간의 사상 유례없는 기만적인 임금인상(기본급 1.04% 인상) 더욱더 기사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격분한 버스운전기사 1천여명은 1988년 7월 6일 천주교 종로성당에서 집결하여 서운노협을 발족하였다. (『말』26호, 1988. 8, pp76~81)

O11

O12

김경천(초대 의장, 삼양교통노조위원장), 최양규(초대 사무처장, 운수노동상담소장)

O13

O1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말』26호, 1988. 8

O1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O2

한민연

O3

O4

O5

1988. 7.11~

O6

O7

공개 / ?

O8

O9

<창립선언문>

“현재의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한국사회의 변혁과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변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배종교화한 한국기독교가 갖는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타파하고 복음의 진리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과제이자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의 고유 임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리의 임무는.....한국사회의 기본 성격을 바꿔 나가는 구체적인 민족민주적 변혁운동과 실천을 통해서....자주, 민주, 통일의 민족민주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민족민주운동에서 찾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할 것이며, 특히 진보적 교회와 기독교자들, 그리고...오늘의 한국기독교와 교회가 한국사회와 민족 현실에 끼치는 해악적 성격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기독교자들과 함께 변혁적 기독교운동을 힘차게 벌어나갈 것이다.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창립선언>1988.7.11)

O10

87년에 조직되었던 <민중쟁취 기독교공동위원회>(이하 ‘기공위’라 칭함)가 “발전적으로 해체(88년 1월 11일)되면서 이 기공위 활동의 한계와 오류, 성과에 기초를 두고 기독교사회운동 연합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중교회 쪽에서는 기독교운동의 주체 설정과 기사협 의 조직노선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며 기사협 건설에 반대해 왔다.

민중교회측은 기사협 논의가 ‘기구 실무자들’이 주동하고 있다는 점, 반파쇼연합전선으로서의 기공위를 무책임하게 해체함으로써 광범위한 반파쇼민주세력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점, 기사협 논의를 주도하는 기독교운동 내 세 세력이 교회 대중에 기초해 있지 못한 점 등을 현실적 문제로 제기하면서 조직적으로 기사협 건설에 반대해 왔다.

구로지역에 9개, 인천에 18개, 안산 4개, 안양 3개, 성수-성남 4개 기타 각 지역에 1-3개씩 분포해 있는 민중교회들의 목회자와 실무자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민중교회운동권은 7월 11일 성문밖 교회에 모여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창립총회를 가졌다. 한민연은 87년 12.16일 대통령선거 이후 반 년 동안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탄생되었다. (『조국통일운동의 진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8, pp88~91)

O11

O12

O13

민주쟁취 기독교공동위원회

O14

『조국통일운동의 진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8

O1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 (☞ <단체편>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참조 // <사건편> 정부 출연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 연전노협 공동투쟁 및 파업 참조)

O2

연전노협

O3

O4

O5

1988.07.16~?

O6

O7

공개 / 임의단체

O8

연전노협의 의장(1), 부의장(5), 사무국장(1), 감사(3)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대의원회에서 선출되며, 각 부서장은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임원들은 모두 단위노조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대의원 수 배정은 조합원 수 200명 이하 2인, 500명까지는 3인, 1,000명까지는 4인, 그 이상은 5인으로 배정되었고, 전체 대의원 수는 117명이었다.

위원장단회의는 연전노협 임원과 소속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정기 위원장단회의는 매년 4회(1, 4, 7, 10월)에 걸쳐 개최되지만 임시 위원장단 회의가 수시로 열렸다. 여기서 논의되는 안건은 대의원대회 토의사항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입안, 사업방향이 결정되었다.

상집회의는 회계감사위원을 제외한 협의회 임원과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마다 소집되었다. 연전노협 내의 각 부서별 활동을 살펴보면, 총무부는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회비납부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부는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선전부는 대내외 교육, 선전에 관한 사항을, 문화부는 문화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쟁의부는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기획부는 통계자료 및 정보수집, 기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한편 연전노협 조직체계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업종별 분과모임이었다. 업종별 분과모임은 1989년 5월부터 시작되어 주로 연전노협 내의 상이한 업종노조 사이의 보다 밀접한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증대와 연전노협 연맹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미가입 조직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업종별 분과는 민간기술업체분과, 경제단체분과, 인문사회과학연구기관분과, 과학기술연구기관분과 등 4개의 분과로 조직되었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2절 4.)

O9

O10

연구 전문기술직 노동조합들이 협의회라는 연대조직을 결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현대사회연구소의 연구원 해임에 대한 공동대책을 협의하고 그에 기반한 공동투쟁을 보다 힘있게 전개시키기 위한 상시적인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전문기술직 노동조합 모두는 자신들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주목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 방안으로 1988년 7월 16일 연구전문기술직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였다.(『전노협 백서』 1권 3장 2절 4.)

O11

‘일터의 민주적 운영’, ‘노동자의 인간화’, ‘사회의 민주화’ 등의 가치를 내걸고 결성된 연구전문기술직

노동조합협의회는 당시 단위조합 32개, 조합원수 9,000명으로 출발하여 1년만에 단위조합 49개, 조합원 총수 14,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2절 4.)

1988년에 이루어진 연전노협의 활동은 정부출연기관에서의 노동자투쟁이 돋보인다. 특히 현대사회연구소 노동자투쟁은 매관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 생산요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투쟁이면서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었다.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외, 조국, 1989, pp.251~252)

또한 연전노협에서는 두 달에 1회씩 '연전노협신문'이라는 노보를 발행하고 현안별로 호외를 배포함으로써 협의회 산하 단위노조들을 결집시키고 아울러 단위사업장 투쟁을 지원해 주는 조직적 구실을 확보해 냈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2절 4.)

O12

O13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협의회

O14 노보 <연전노협신문> (『전노협 백서』 1권 3장 2절 4.) / 『전노협 백서』 1권 /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외, 조국, 1989

O1

한국공간환경연구회

O2

공환연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8.07.17~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1988년 7월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창립 이후 몇 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학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학술위원회 산하에 4개 분과가 8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89년 당시 활동하던 4개 분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 및 지역경제 분과, 주거 및 생활환경분과, 국가 및 지역정책 분과, 문화 및 이데올로기 분과. 이후 지역 분과와 주거 분과(91년 도시 분과로 분과명 개칭)는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국가 분과와 문화 분과는 90년 이후부터 활동을 중단하였다.

한편 91년부터 지방정치 분과(약칭 : 정치 분과)가 신설되었으며, 92년에는 문화 분과가 89년의 문화 분과와 단절된 새로운 인적 구성으로 재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계획이론 분과, 교통 분과, 여성 분과 등이 준비 모임을 결성하였거나 결성 후 잠시 활동을 하였으나 곧 활동을 중단하였다. 한편 92년 신입회원들을 위한 교육분과가 처음 개설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5년 11월 연구회가 학회로 전환되면서 그 당시 활동하던 5개 분과의 공식 명칭을 일부 개칭하였으며, 분과라는 명칭 대신 연구부라는 명칭으로 바꾸기로 하였다(하지만 여전히 관례적으로 분과로 일컬어지고 있다.) 95년 11월 학회 전환 당시 제안된 8개의 연구부 : 지역경제 연구부, 도시생활 연구부, 지역정치 연구부, 생태환경 연구부, 지역문화 연구부, 도시계획 연구부, 정보공간 연구부, 도시교통 연구부(『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21~222)

O9

1. 본 연구회는 한국 현실에서 노정되는 공간환경의 제문제와 그 원인이 되는 사회공간적 총체를 과학적·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규범적·실천적 이론을 추구한다.
2. 본 연구회는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오늘의 공간환경이 처해있는 위기를 해소하고 공동체적 생활공간의 실천적 재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3. 본 연구회는 공간환경연구가 더 이상 중립적일 수 없음을 자각하고 ‘민족과 민중’이 중심이 되는 학문적 위상 정립을 도모한다.
4. 본 연구회는 공간환경연구의 기반이 되는 제분야간의 분절을 매개하고 진보적 학술운동에 참여하여 전반적인 학문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창립취지문 中)

O10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전신인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1988년 7월 17일 창립되었다. 그당시 한국 사회 전

반에 섰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에 부응하여, 공간환경 분야에서 고민해오던 54명의 연구자들이 서로의 뜻을 한 데 모아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창립하였다. 이 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12~223)

O11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의욕에 넘치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동참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몇 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는 매년 한차례의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 연구팀별 학술연구 세미나, 학회 학술지 <공간과 사회> 및 학회 학술자료집 <공간환경> 발간, 각종 저술 및 번역물 출판 사업, 월례발표회, 학술 심포지움,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국제 학술교류, 공개 강좌 및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학술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등 대외 연대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내부로부터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회를 공식 학회와 연구소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었다. 오랜 시간의 토론과 준비 작업 끝에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1차로 기존의 한국도시빈민연구소와 결합하여 1994년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또한 동시에 기존의 연구회를 공식 학회로 탈바꿈시키는 변신 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12~223)

O12

최병두(초대회장, 대구대 교수), 조명래(2개 회장, 단국대 교수), 조재성(초대 부회장), 조중래(2대 부회장), 황희연(3대 부회장), 허석렬(3대 부회장)

창립회원 : 강동완, 강우원, 강현수, 고은태, 고상현, 구동회, 권오혁, 권정화, 김동현, 김승열, 김왕배, 김용웅, 김용창, 김원규, 김인호, 김찬호, 김창성, 김태환, 김한준, 류재명, 문남철, 문순철, 박용규, 박원석, 서우석, 송경언, 신현욱, 양재섭, 윤일성, 윤정중, 윤혜정, 이규인, 이기정, 이명재, 이상문, 이상호, 이원호, 이종현, 이한방, 임경숙, 임서한, 임석희, 장은영, 조규영, 조재성, 조준행, 조중래, 조혜영, 최영명, 최병두, 허석렬, 홍인욱, 황금희, 황주성(『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12~223)

O13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국도시연구소

O14

학회 학술자료집『공간환경』, 학회지 『공간과 사회』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O1

전국대학강사협의회 (☞ <단체편>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참조)

O2

O3

O4

O5

1988.08.03~1990.04.28 (전국대학강사노조 결성)

O6

O7

공개 / 임의단체

O8

O9

O10

전국 28개 대학 시간강사 300여명 고려대 강당에서 '전국대학강사협의회'를 창립하였다.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외, 조국, 1989, pp354)

O11

전국대학강사협의회는 1990년 4월 28일 전국대학강사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2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O13

O1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 자료집』, 1993

O1

삼청교육대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O2

O3

O4

O5

1988.08.10~?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1988년 8월 5일 정오에 종로구 당주동 이철호 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인수(평민당 강릉 양양 지구당 위원장), 유영근 (목사), 전 영 순(주부), 이적(기자), 정충재(교사), 등이 모임을 갖고,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을 위한 결의를 하였다. 1988년 8월 10일 정오에 중구 평민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50여명이 모여 전국삼청교육대진상규명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원선출을 하였다. 공동투쟁위원장 정인수, 유영근. 공동부위원장 전영순, 정충재. 대변인 이 적. 사무총장 선창영. 사무처장 김수배. 등 전국 각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홈페이지 <http://www.samchung77.or.kr>)

O11

삼청교육대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공동의장 정인수, 유영근)는 1988년 10월 25일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 삼청교육대진상규명을 위한 공정조사기구조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삼청교육대의 진상을 왜곡, 은폐하는데 그쳤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 4개 정당, 재야, 종교계 등을 망라한 공정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988.10.26)

삼청교육대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는 1988년 12월 3일 당시 평민당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삼청교육대 의문사 진상보고 대회"를 가졌다. 이후 1990년 10월 17일 단체임원을 재구성하고(회장; 전영순, 부회장; 김팔만, 박도선. 운영위원; 김선엽, 윤옥자, 남춘자, 이택승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모임"으로 단체 명의를 변경하였다. 1990년부터 1991년 12월까지 국회에 계류된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장께 심의요청을 전영순은 수차하고 정부와정당요로에 진정서등을 작성하여 수차 하였으나 1991년 12월 제 13대 국회 마지막에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 특별법'은 폐기되었고 투쟁위는 6공화국 남은 잔여 기간동안 5공비리의 대사건인 삼청학살 유족과 피해자들의 피맺힌 통탄의 한을 반드시 국회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를 만천하에 공고하였다. (홈페이지 <http://www.samchung77.or.kr>)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www.samchung77.or.kr>, '삼인련(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의 발자취' 수록 내용 정리>

1) 1988. 8. 5. 정오에 종로구 당주동 이철호 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인수(평민당 강릉 양양 지구당 위원장), 유영근(목사), 전영순(주부), 이적(기자), 정충재(교사), 등이 모임을 갖고, "삼청교육

대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을 위한 결의를 하였음.

- 2) 1988. 8. 10. 정오에 중구 평민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50여명이 모여 "전국삼청교육 진상규명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원선출을 하였음.
  - 3) 공동투쟁위원장 정인수, 유영근. 공동부위원장 전영순, 정충재. 대변인 이 적. 사무총장선창영. 사무처장 김수배 등 전국 각 지부장을 선출하였음.
  - 4) 1988. 9.5. 종로구 당주동 이철호 회장 사무실에서 같이 삼청교육 단체 사무를 보기로 정하였음.
  - 5) 1988.11. 13. 광화문 세종문화관 뒤쪽 노상에서 피해자 500여명이 모여 밤을 지새우며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당시 평민당 인권위원장 조승형 의원(전 헌법재판관)이 집회장소에 와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엄청난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람을 감추지 못하였다.
  - 6) 1988.12.3. 평민당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교육대 의문사 진상보고 대회"를 가졌음.
  - 7) 1989. 1. 25. 유영근목사 개인사정으로 공동의장 사임. 정인수 의장, 전영순 부의장, 김수배 사무총장 등 임원 재구성.
  - 8) 1989.2.27.~1989.8. 까지,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명동성당 등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 촉구집회를 수차 하였음.
  - 9) 1990. 3. 15. 동작구 흑석동 불교회관에서 삼청교육대 전국유가족 대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함.
  - 10) 1990.10. 17.단체임원 재구성. 회장; 전영순, 부회장; 김팔만, 박도선. 운영위원; 김선엽, 윤옥자, 남춘자, 이택승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모임>으로 단체명의 변경
  - 11) 1990.11.25. 종로천주교회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대회 개최
- (1999.10.9. 정개협 사무실에 간판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을 붙여 달았음)

O12

정인수(鄭仁諤), 유영근(柳永根)

O13

O14

「조선일보」, 1988.10.26 / 홈페이지 <http://www.samchung77.or.kr>

O1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인천노동상담소) (☞ <사건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 조직 사건 (인천노동상담소 사건) 참조

O2

O3

O4

O5

88.08. 중순경 (치안본부 대공3부 발표)

O6

인천

O7

비공개 / 비합법 (치안본부 대공3부 발표)

O8

O9

O10

치안본부 대공3부는 1990년 4월 12일 양재덕, 이상옥, 조성범, 이형진, 유해우, 양홍영, 장일수, 박용수 등 7명을 연행, 이들이 1988. 8. 중순경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을 결성한 뒤 인천노동상담소를 개설, 인천·부천 등지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이념 및 계급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이영대 판사는 양홍영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소집했던 서적과 유인물은 기존의 시사잡지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이적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고 찬양·고무 혐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속에 포함되어 소극적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사실에 대해 일간신문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 이후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거나 “개별사안에서 그동안 사안의 경중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적용해온 국가보안법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나 그후의 사법부의 행태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9~300쪽)

O12

양재덕, 이상옥, 조성범, 이형진, 유해우, 양홍영, 장일수, 박용수

O13

O14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u.or.kr>, 연도미상

<연구팀 의견 : 서울형사지법의 기각 이유를 볼 때 공안수사기관에 의한 사건의 조작 및 과장성 의혹 농후>

O1

나라사랑청년회

O2

나사청

O3

나라사랑청년회 북부지부

O4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O5

1988. 9. 3~현재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88년 3월 56명의 추진위원들이 나라사랑청년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의리, 협조와 단결 3개 덕목으로 겨레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고자’하는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여(추진위원장 이병선) 88년 9월 나라사랑청년회를 창립하였다(초대회장 허인회, 부회장 황인국)(『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381)

O11

나사청은 ‘문턱없는 청년회’, ‘나라사랑의 한길로’라는 구호와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의리, 협조와 단결의 3대 덕목을 바탕으로 청년층이 갖는 갖가지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접하기 쉬운 풍물, 노래, 독서 등 문화 사업으로 출발하였다. (‘90 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청년 문화제 및 청년학교를 개최하고 통일기행 등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전국의 민주청년단체들과 교류 및 연대, 소모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92년 10월 북부지부를 창립하였다(초대지부장 오봉남)(『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381)

O12

이병선(나라사랑청년회 추진위원장), 허인회(초대회장), 황인군(초대 부회장), 오봉남(북부지부 초대지부장)(『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381)

O13

O14

「장산곶매」: 89. 7 주간 (출) 청년(『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p381) /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 「'90 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O1

한국역사연구회

O2

한역연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8. 9. 3~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연구회 조직은 연구활동을 총괄하는 연구위원회와 회원의 조직·관리 및 연구회 활동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 2원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분과에서 선출된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최고 의결 기구로 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위원회는 고대사분과·중세사1분과·중세사2분과·근대사1분과·근대사2분과·현대사분과 등 6개 분과를 포괄했고, 연구회의 제반 연구활동(공동연구, 공동학습, 연구발표회, 학술대토론회)을 관장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총무·사업·섭외·교육·조사·편집부가 조직되어 연구회의 제반 사업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회의 과학적 실천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연구자의 전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위와 연구위에 각각 상임위원을 두었다. 상임위원은 연구회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60~261)

O9

O10

한국역사연구회는 1980년대 변혁운동에 동참하고자 한 역사학자들의 몇 년간에 걸친 조직활동의 최종적 결과물로서 1988년 9월 3일 출범하였다. 진보적 한국사연구자들은 1984년 말 망원한국사연구실을 발족한 이래, 역사문제연구소(1986), 한국근대사연구회(1987) 등을 조직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1987년 겨울 한국근대사연구회와 망원한국사연구실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자들을 조직적으로 통합하려는 논의가 제기된 이래 한국사 전시기를 포괄하는 연구자대중단체의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서울 시내 여러 대학 연구자들이 구성된 '고중세사연구자 협의체'가 참여하여 1988년 8월 17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창립 준비위가 1988년 9월 3일 오후 3시 동숭동의 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한국역사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단결하여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적 역사학을 수립하고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화에 적극동참(창립취지문)하고자 하는 한국사 연구자 대중단체가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사연구회의 창립은 1980년대 이래 한국사연구자의 활동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연구회의 창립은 수공업적이고 분산적인 활동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연구자 대중조직을 건설했다는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연구회 창립 과정에서 각각의 소규모 활동 경험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연구자 자신이 학술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연구자들의 임무가 한국사회 변혁에 대한 기여에

있다는 점도 합의되었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260)

O11

연구회는 기관지로서 1989년부터 회지 『역사와 현실』을, 회보 『한국역사연구회회보』를 발행하고, 해마다 한국사연구자 및 역사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근대의 변혁운동과 민족문제」(1988년), 「한국중세사회의 지배구조와 ‘민’의 성장」(1989년), 「식민지시대의 지식인과 민족해방론」(1990년)이란 주제 하에 학술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토론회와 별도로 연구회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관한 심포지움도 개최하여 왔다. 1989년의 심포지움 「민족해방운동사에서의 3. 1운동」은 이보다 20년전에 동아일보사가 간행했던 『3. 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높여 3.1운동의 기존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키고 시각을 교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에는 ‘갑오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갑오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1989년 2월 연구회는 그전부터 준비해오던 한국사 개설서 『한국사강의』를 출간하였다. 이는 개인 집필자 1명이 아니라 12명의 공동집필에 각 분과의 검토 수정을 받으며 이루어졌다는 점, 내용면에서 당시까지 남한과 북한에서 축적되어 온 연구성과를 최대한 진보적 시각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등에서 출판계의 비상한 주목을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연구회의 취약한 재정을 보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각 대학에서 교양한국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교수와 강사들로부터, 강의 교재 및 참고서로서 호평을 받았다.

각 분과에서도 공동연구에 바탕한 연구서들을 다수 출간하였다. 역사문제연구소와 공동 작업하여 출간한 『3.1민족해방운동연구』가 1989년 9월 공동연구의 효시로 출간되어 3.1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개척하였다.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는 이념이 서서히 퇴조해가기 시작하던 1991년 시점에 나왔다는 점, 연구사적으로 공백이었던 19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에 묻혀버린 사회주의운동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 할 만하다. 중세2분과에서는 『조선정치사 1800~1863』上, 下를 1990년 말에 출간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공백 상태였던 정치사를 개척한 점, ‘세도정치론’을 극복하였다는 점 등에서 지금까지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현대사』1~4는 현대사 분과원들이 1년 반 남짓 작업하여 출간한 현대사입문서로서, 작업에 참여한 분과원들이 진정한 현대사연구자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을 뿐 아닐, 역사학계에서 현대사연구가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 연구회의 대외적 영향력을 과감시키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연구회는 이외에도 학술운동 차원에서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반 시민과 대학생 · 역사교사 대상의 한국사특강, 역사교사와의 연대 활동, 학술단체협의회와의 주도적 운영, 노동 · 민주운동단체에 대한 강사 파견, 그리고 남북 역사학 교류의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남북역사학 교류운동은 불발로 끝났지만 1989년 여름 연구회를 뜨겁게 달군 문제였다. 북한측에서 지목한 남한측 대표 3명 중 연구회 회장이 포함된 사실을 보더라도 연구회의 위상이 단지 남한 내의 진보적 연구자 대중단체일 뿐만 아니라, 북한 역사학계에까지 남한을 대표하는 연구단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준 사건이었다.

이후 1992년 3월 2일 『한국역사』를 출간하여 연구회의 위상 확립과 연구회 내부의 유대관계, 향후 연구 방향을 이끌어내었다. 우선, 한국역사연구회는 역사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연구회의 위상도 단순한 소장 연구자들의 모임으로부터 한국사를 개척해 나가는 중심 연구단체로 나아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를 서적 유물론의 사회구성체 개념에 의해 발전단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제도권 학계로부터도 더욱 많은 경계의 눈길을 받게 되었

다. 『한국역사』출간으로 자신감을 얻은 연구회는 이후 『한국역사입문』편찬 작업을 추진, 1995년에 이르러 완간하게 된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60~266)

O12

안병욱(1차-5차년도 회장)

O13

한국근대사연구회, 망원한국사연구실, 고중세사연구자 협의체

O14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10년사』, 1999

O1

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

O2

공추련

O3

O4

O5

1988.9.10~1993.4.2 (환경운동단체연합 창립)

O6

O7

공개 / 합법

O8

O9

<창립선언문> : 첫째, 민주적인 환경 전문가,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공해추방 주민운동을 지원, 피해주민의 역동성을 조직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독점재벌, 군사독재, 외세,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식인들의 거짓된 논리에 맞서 공해문제와 핵위기의 사회적 모순구조를 국민적으로 인식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반전·반핵·평화운동과 노동자, 농민 건강수호운동 등 민주세력과의 연대투쟁의 내용을 강화하고 민족민주운동의 전체적 과제에 충실히 복무할 것이다. 넷째, 세계의 공해피해민중 및 평화옹호대중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와 생존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의가 정의를 유린하고 반평화세력이 평화세력을 단죄하는 조국의 뒤틀린 현실이 끝장나고 이 땅에서 공해와 핵이 영원히 추방된 평화로운 자주·민주·통일 국가의 그 날이 올 것을 굳게 믿으며, 애정어린 눈길로 장도를 축하해 주는 모든 애국동포들과 함께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pp.270~271)

O10

6, 7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근대화 정책은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 즉, 환경오염, 공해, 자연파괴, 직업병 등의 문제가 80년대에 들어와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공해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 최초의 시도는 82년 5월에 결성된 ‘공해문제연구소’의 설립이었다. 또한 84년 12월에는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반공해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87년에는 공해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의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에 앞서 주부 등 여성들이 중심이 된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가 86년 9월 13일에 결성되어 각종 공해대책강좌 및 공해고발전화선을 개설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공해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자주 벌였는데 그 결과 88년 9월 10일 공해추방·반핵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통일을 기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을 통합 결성하게 되었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pp.332~333)

O11

공추련은 결성 이후 공해문제를 유발하는 기업들을 사회문제화 시킴으로써 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원전의 건설, 영덕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90년 4월 15일 ‘전국 핵발전소 추방운동본부’ 창설에 적극 가담하고 핵발전소 건설 반대 1백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가 동해안에 핵 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공추련은 조직을 정비하고, 또한 많은 지역의 민간환경운동단체를 발족시키는 모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91년 이후로는 공해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대중과 함께 실천해나간다는 대중성의 원칙과 함께 전문성과의 결합을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제기하여 '대중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 민간환경운동의 발전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경필,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pp.62~63)

다양한 공개행사 및 환경교육,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운동 지원, 지역단위의 반공해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통해 한국 환경운동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1993년 4월 2일,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 제2기의 출범'을 선언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공추련을 중심으로 전국적 규모의 재야환경단체인 '환경운동단체연합'을 결성하게 된다.(『한국 민간환경운동의 발전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경필,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p.56)

O12

최열(공추련 공동위원장)

O13

반공해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반핵평화운동연합(분화단체), 환경운동단체연합

O14

한경필, 『한국 민간환경운동의 발전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 창립 선언』(88.09.10), 270~271쪽

O1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O5

1988.09.11~?

O10

인천국민운동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민주시민공동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 연맹 등 10개 운동단체가 참여하여 창립하였으며, 민중생존권 지원과 5공비리 관련자 처벌, 조국통일운동을 당면 중점과제로 규정했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동운동』, 1988.10)

O12

이호웅(의장)

O14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외, 조국, 1989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동운동』, 1988.10

O1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O2

O3

O4

O5

1988. 9.12~?

O6

O7

공개 / ?

O8

O9

1. 우리들은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자주 경제 확립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2. 우리들은 공고한 단결로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한다.
3. 우리들은 건전한 노동정신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4. 우리들은 자유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O10

1988년 9월 12일 14개 노조 조합원 2,600여명으로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을 출범하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1

O12

O13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연구팀 의견>**

- \* “1. 우리들은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자주 경제 확립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단체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로 할 수 있을지 판단할 필요.

O1

진보정당건설을위한정치연합

O2

진보정치연합

O3

O4

O5

1988.09.14~?

O6

O7

공개 / ?

O8

공동대표-사무처-정책기획실-대변인-중앙상임집행위원회

O9

O10

진보정치연합은 4.26 총선 직전 신당추진그룹에 의해 9월 14일 결성됐다. 당시 신당추진그룹은 상호 입장 차이로 두개의 당을 만들었다.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이 그것이다. 한겨레민주당은 반민정당애국민주전선을 건설해 나간다는 기치 하에 평민, 민주, 한겨레 등 3당 통합을 꾀하는 한편,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당의 양당 통합도 모색하였다. 민중의 당은 제도야당이 민중의 대변자일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민족, 민주운동세력의 일각에 의해 창당됐다.

평민, 민주, 한겨레민주당 간의 3당통합 노력은 기성정치인들의 신당에 대한 의혹과 불신으로 무위로 돌아갔고,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당 간의 통합노력도 현실인식, 입장의 차이로 무산되었다. 신당추진그룹은 분열된 채 4.26 총선을 맞이하였고,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양당은 4.26 총선 패배에 대한 평가작업에 들어갔고, 이 평가를 기초로 통합논의가 재개됐다. 4.26 총선 패배에 대한 평가는 양당 사이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재정이나 인물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총선에 임한 점 -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고 이념적으로 비슷한 양당이 분열된 채 총선에 임한 점 - 이런 요인들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으로 다가서지 못한 점 등이다.

이러한 내부평가, 반성과 더불어 민족, 민주운동권 일각으로부터 통합요구가 나오면서 양당간의 통합 논의는 시작되었다. 통합논의는 88년 5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6월 말 한겨레 당무대책 회의에서 통합을 추진키로 하고 통합대책위원을 선임함으로써 통합논의는 공식화됐다.

이후 올림픽 때까지는 통합을 이룬다는 원칙에 합의한 후 8월 18일, 9월 6일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1,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14일 통합됐다. 진보정치연합은 이 날 대표위원으로 제정구(상임대표위원), 최병욱, 정태윤, 이강철씨를 선출하고 사무처장에 유인태, 정책기획실장에 이경재, 사무차장에 염만숙, 대변인에 김부겸씨를 선출했다. 진보정치연합은 통합성명서를 통해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정당 재건축진위원회는 그동안 분열과 대립으로 인하여 저질렀던 잘못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진보정치연합’을 밑거름으로 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민주인사들을 결집시켜 진정으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당할 것임”을 밝혔다. (『말』호, 1988.11, pp20~24)

O11

O12

공동대표(최병욱, 제정구(諸廷坵), 이강철(李康哲), 정태윤(鄭泰允), 사무처장(유인태), 사무차장(엄만숙),  
정책기획실장(이경제), 대변인(김부겸)

O13

O14

『말』호, 1988. 11

O1

용인민주청년회

O2

O3

O4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O5

1988. 9.15~현재 (용인청년일꾼들)

O6

용인

O7

공개 / ?

O8

O9

O10

용인독서회에서 활동하다 분리되어 1988년 9월 15일 창립하였다.(『'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p106)

O11

용인민주청년회는 89년 용인 골프장 대책위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6) 이후 1996년 '자치와 통일시대를 여는 용인청년일꾼들'로 발전적 개편하였다.(<http://www.yongin21.org>)

O12

O13

용인독서회, 용인청년일꾼들

O14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홈페이지 <http://www.yongin21.org> /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

'88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 (☞ <사건편> 88년 노동법 개정투쟁 참조)

O2

노투본

O3

O4

O5

1988.10.06~12.01

O6

O7

공개 / ?

O8

노동법개정 투쟁본부는 대표자회의와 집행위원회, 대변인, 상황실로 구성하고 상황실 산하에 홍보선전부, 투쟁기획부, 연대사업부 등 세 개의 하부 부서를 두었다. 대표자회의는 지역·업종별 노조협의회회장과 전국노운협 공동의장으로 구성하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지위를 가졌다. 집행위원회는 지역, 업종별, 지역노운협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었다. (기사연 리포트, 10호, p.131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외, 조국, 1989, p.291)

O9

O10

88년의 노동법개정투쟁은 87년투쟁 이후 성장, 발전한 노동운동이 조직과 이념에 있어서 전국적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점점의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투쟁이었다.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가 따로 활동을 전개한 초기단계를 지나 '노동법개정노조특위'와 '전국노운협노동법개정특위'가 노동법개정을 위한 통일적인 집행부인 '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1988년 10월 6일 결성하게 된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p311)

O11

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결성한 이후 투쟁은 각 지역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다. 투쟁이 고양되면서 노동자대중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전국 4만여 노동자의 참여 속에서 해방직후의 '전평' 이후 최대의 노동자집회라고 평가되는(?) 11월 13일 '전태일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민족민주운동에서의 노동운동의 중심적 위치를 분명히 하고 이후 노동조합 전국조직건설의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p311)

O12

이흥석(의장, 마창노련 위원장), 이상학(집행위원장, 서노협부의장), 신철영(대변인, 전국노운협), 최한배(상황실장, 전국 노운협 사무국장)

O13

O14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환 외, 조국, 1989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선언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 투쟁결의문」(88.11.13), 85~86쪽

O1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O2

삼민동맹

O3

O4

O5

1988.10~1990.4.25

O6

O7

비공개 / 비합법

O8

O9

O10

삼민 동맹의 출발은, 서노련 와해 이후 노동 운동의 역사를 실천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그를 위해서는 조직 건설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믿고 있던 작은 그룹들이었다. 이들은 한편으로 혁명 운동의 과학적인 이론 정립을 목표로 강령 작업을 수행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 흩어진 활동가 간의 연결망 확보와 공장과의 연결을 시도하면서 토론과 투쟁의 조직화를 도모하였다. 지속적인 선전 작업과 조직화의 수단으로써 정치 신문인 “노동자의깃발”을 발간, 배포하면서 지역 단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토대와 체계를 세운 창립대회를 1988년 10월에 열고 정식으로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정치조직인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을 결성하였다.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1991, 소나무, p.62)

O11

강령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을 규합, 조직을 재정비한 삼민 동맹은 노동자당 건설을 당면의 조직적 목표로 제기하고 노동자당의 사상, 조직적 기초를 위한 지속적인 강령 선전 작업과 제반 공장 활동의 지원 및 선진 노동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두 축으로 설정하고 1~28호에 이르는 “노동자의 깃발”을 발행, 노동 단체 및 민중 단체와 결합한 여러 투쟁을 수행, 각 정치 조직들과의 공동 행동 모색 및 결합의 시도를 했다.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1991, 소나무, p.62)

기관지로 노동자의 깃발 발간(1호-28호)하였으며 서,인노련이 주장한 삼민혁명론을 옹호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변혁의 걸림돌을 신식국독자체제하에 군사독재라고 판단하고 민중권력론을 주창하였다. (조현연, 「map」) 1990년 4월 25일 조직원들 구속되면서 조직이 와해되었다. 구속된 사람들은 “이 사회의 모순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으며 대개는 노동현장(대우중공업, 후지카, 한일스텐레스 등)에서 위장취업자, 불순세력이니 하는 날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투쟁을 이끌고 해고와 구속을 기꺼이 감수한 이들”이라고 가족들은 성명서에서 밝혔다.(노동인권회관 편, 앞의 『노동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1집』, 76쪽) 1심재판부는 1990. 10. 24.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20)

O12

박윤배, 구자욱, 김소영, 김용기, 김인선, 김중성, 김진국, 김진태, 김태진, 박윤배, 서재석, 신남희, 신준수, 이명학, 이강석, 임해규, 하승창, 황순현(『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1991, 소나무, pp.63~65)

O13

O14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1991, 소나무

O1

동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O2

동민청

O3

O4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O5

1988.10~현재 (동부지역일하는청년회: 동부일청)

O6

서울

O7

공개 / ?

O8

소모임(노래만큼 좋은세상, 세상이 달라 보여요, 대동여지도)

O10

83년도 세워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기반해서 88년도 민청련의 지역 조직으로 동서울민주화 운동청년연합(동민청)이 동부일청의 전신이 되었다. 87년부터 시작된 청년운동의 대중적 공개 단체의 결성의 흐름 속에서 92년도 과거 '동민청'에서 '동부지역일하는청년회'로 전환하였다.

O11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지역청년과 함께하는 역사교실' 개최, 더불어 동부 지역의 광범위한 청년들을 맞이하기 위한 소모임을 건설에 주력, 현재 청년회의 모습인 3개의 소모임( 노래모임인 '노래만큼 좋은 세상', 시사모임인 '세상이 달라 보여요', 기행모임인 '대동여지도')을 주축으로 활동

O12

O13

민청련, 동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O14

동부일하는청년회 홈페이지 <http://www.dongbuic.org>

O1

부정비리주범전·이구속처벌및광주학살5적처단을위한서울지역학생투쟁연합

O2

학투련

O3

O4

O5

1988.10.28~?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88년 올림픽 이후 국정감사, 5공비리 청문회, 광주청문회 등을 통해 5공비리에 대한 분노가 전국민적으로 분출되면서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 요구투쟁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불붙어 1987년 이후 최대의 투쟁으로 발전했다. 5공비리 척결투쟁은 10월 6일 오전 10시 서충련 소속 8개 대학 23명이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민정당 정호용 의원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면서 5공비리 척결과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2시간 반만에 전원이 연행당하는 선도적 투쟁으로 본격화되었다. 10월 하순까지 전국 각 대학별로 '광주학살·5공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 특별위원회'가 속속 결성되었고 서울에서는 10월 28일 건국대에서 '부정비리 주범 전·이 구속처벌 및 광주학살 5적 처단을 위한 서울지역 학생투쟁연합(학투련)을 발족하였다.

O11

학투련은 그 산하에 '전·이 체포 결사대'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투쟁을 준비하였다. 10월 31일 전두환 집앞 초소 타격 등 일련의 선도적 투쟁과 각 대학별 학투련 발족, 교내외 집회 시위 등이 이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이 구속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이 계속 확산되자 학생들과 민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는 전·이 구속처벌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들의 투쟁에 있다고 판단, 11월 5일 제1차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11월 5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이 구속을 위한 서울시민 쫓겨대회'를 비롯, 전국 1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쫓겨대회를 기점으로 주로 학생 중심이었던 11월 3일까지의 투쟁이 11월 5일부터의 시위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의 주체로 나서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돌베개, 1991, pp79~)

O12

O13

O14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 돌베개

O1

전국농민단체협의회

O2

전농협

O3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전국계우회연합회, 한국포도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유기농업환경연구회, 전국생약재생산농민동우회, 전국육계안정협의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전국농민협회, 카톨릭여성농민회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8, pp169~171)

O4

O5

1988.10.30~?

O6

O7

공개 / 임의단체

O8

O9

<결성선언문> : 1. 재벌토지 환수하여 토지없는 농민에게 분배하고 토지기본법 제정하라! 1. 정부는 88년 쌀구매가를 가마(80kg)당 107,778원 이상으로 결정하고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일괄 현금 구매하라! 1. 매년 영농 시작 전에 구매가를 예시하고 가격 결정과정에 농민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국가결정기구를 설치하라! 1. 외국농축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 1. 5공비리 부정축재 환수하여 농가부채 탕감하라! 1. 재벌축산 금지하고 식료품가공산업을 농민에게 환원하라! 1. 씨앗, 비료, 농약, 농기구, 사료값, 영농자재값을 대폭 인하하라! 1. 반농민·노동악법 철폐하라! 1. 지방자치제를 읍·면 단위부터 전면 실시하라! 1. 남북한 농민교류를 인정하라! 1. 농협, 축협, 수협을 민주화하고 농지개량조합을 해체하라! 1. 의료보험조합주의 철폐하고 통합일원화 실시하라!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8, pp170~171)

O10

87년 대선 이후 전면적인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가 발표되자 낙농·육우 농민들을 시발로 양계, 포도 농민에 이르기까지 수입개방저지투쟁을 대규모로 벌이면서 생산자단체들이 처음으로 투쟁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이후 농민운동단체들은 이들 생산자단체와의 상층연대를 통해 4월 22일 <농축산물 수입저지 전국농민대회> 공동 개최, 5월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축산물 수입반대 전국농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 대회는 수입개방에 대한 연대투쟁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점과 농민운동단체와 생산자단체들 간의 투쟁을 통한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연대투쟁은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우선 투쟁의 준비나 동원, 진행과정에서 농민운동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 채, 생산자단체와 연대하여 대회를 치르는 데 급급했다. 따라서 투쟁의 구체적인 획득물도 없이 문제제기 차원에 머물렀으며 지속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생산자단체의 상층 지도부는 타협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면서 농민투쟁의 투쟁열기를 수렴하지 못했고 농민운동단체조차 통일된 전술지침을 가지고 이를 견인하지 못했다.

이후 한미무역실무회의를 통해 쇠고기, 유제품, 과일류, 담배 등 농축산물 수입이 전면화됨에 따라 생

산농민들의 위기는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작목별 생산자단체들 역시 공동대처를 절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대 정부협상 차원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생산자단체 지도부는 그간의 타협적, 기회주의적 성향에서 점차 탈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3개 농민단체들은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결성했다.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8, pp.169~170)

O11

협의회는 농업-농민의 전반적인 생존권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범농민적 연대, 특히 농축산물수입개방 저지투쟁의 공동수행을 중점적인 과제로 하였다. 협의회는 출범하자마자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와 제값받기를 위한 전국단위의 농민대회를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봄 농민대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보다 발전된 사전 준비가 진행되었다. 우선 농민대회의 공식프로그램에 여의도에서 미대사관까지의 평화적 시위행진을 포함시켰다. 둘째, 각 단체의 연대투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규모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회 시 단체별로 대오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예상된 참여 인원이 1만여 명이었으나 실제로는 2만여명이 참여했다. 셋째, 전국 각 군에 걸쳐 농민의 참여가 계획적으로 준비되었다. 각 군마다 농협에 압력을 가해서 필요한 경비를 제공케 하여 대절버스로 농민을 수송하였다. 또한 <농축산물 제값받기 경북대책위원회>, <토지무상양도 전국대책위원회>, <전국의료보험 대책위원회>, <전국수세폐지 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가담하게 되었다. 넷째, 서충련 농민분과, 전국 대학 4H연구회 연합회, 수원지구대학생협의회 농민분과, 중부지역 농촌관련 동아리협의회 등으로 <농민대회를 위한 학생지원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학생 대표가 대회준비위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조직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졌다.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8, pp.170~171)

O12

O13

O1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민중사, 1988

01

학술단체협의회

02

학단협

03

04

문학예술연구회, 보건과사회연구회, 사회철학연구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여성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교육문제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공간환경연구회, 구로역사연구소, 서울사회과학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교육연구소

05

1988.11.05~현재

06

서울

07

공개 / 합법

08

09

백여년에 걸친 우리의 근, 현대사는 민족의 자주적 생존권 확보와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한 뜨거운 싸움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가까이는 60년의 4.19와 80년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87년의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커다란 봉우리들이 상징하듯이, 모든 비민주적 지배질서와 반민족적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나긴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민중운동의도도한 흐름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민주화를 향한 힘찬 전진은 과거와는 달리 몇몇 양심적 인사들이나 소수집단의 고립된 외침이 아니며,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현실과 무관한 중립지대임을 내세울 수 있는 영역을 어디에도 없으며, 우리들의 학문연구와 학술운동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전의 편에 서서 인간해방의 길로 나서야 할 우리 학문의 실상이 과연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일제강점하의 식민지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면의 역사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선학들의 고뇌에 찬 모색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의 학문풍토는 식민지적 구각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의 구체적 현실을 망각한 서구선진자본주의사회의 학문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 신앙은 단지 기성체제의 이익에 봉사하는 데 머물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가혹하고 집요한 탄압은 학문의 정상적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왔으며, 학문사회의 갖가지 그릇된 제도적 장치들과 더불어 학문연구가 역사적 전망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책임에 등을 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진리의 참된 구현을 가로막는 이러한 장애물을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기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치의 사심과 나태도 허용되지 않는 과학적 현실탐구의 올바른 자세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이는 학문을 통해 사회민주화와 민족통일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우리의 정당한 실천적 노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이루어진 적지 않은 학술연구단체의 결성은 80년 이후 민중역량의 눈부신 고양에 힘입은 것이다. 이들 학술단체들은 학문사회 내부의 새로운 학풍수립 요구라는 데서 비롯된 것만

은 결코 아니며, 민중들의 피땀으로 획득된 사회적 공간에서 마련되었던 까닭에 설득력 있는 사회발전전망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기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학문연구와 학술운동은 결코 상아탑 속에 자족할 수 없는 것이다. 연구활동의 조직화를 통해 과학적 인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대중과 공유하는 일은 학술연구자의 역사적 임무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6월의 제1회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움은 새로운 학술연구단체들이 공동연구와 조직적 활동을 통해 확보한 성과를 최초로 집약하여 표출하였던 행사였다. 그러나 아직은 학문적 역량과 성과의 축적이 미흡하고 더욱 각 분과학문간의 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학술운동의 일관된 미래설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성학문의 구태의연한 방법론과 고루한 관심영역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학문세계의 신기원을 열어야 할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 학술단체협의회의 출범은 그간의 활동성과를 일정하게 총괄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 및 조사,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상호교류와 결속을 꾀함으로써 학문의 올바른 좌표를 찾으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대의에 동참하려는 모든 일들과 연대하는 동시에 사회발전의 주역인 일반대중들에게 올바른 역사전망을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려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협의회 발족을 뜻깊은 계기로 삼아 오늘의 사회현실이 요구하는 참된 과학을 정립함으로써 학문연구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1988. 11. 5

O10 80년대의 급격한 정치변동 및 사회운동의 발전에 의해 추동되어 사회인식상에 있어서도 진보적·변혁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정착·확산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반영으로서 보수적인 학계에서도 진보적인 사회인식과 연구지향을 갖는 학술연구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80년대 초반·중반에 있어 이러한 연구자들은 연구회, 연구소 등을 결성하여 그동안 방치·금지되었던 여러 연구주체들을 발굴·연구해왔다. 이러한 축적의 기초 위에서 진보적인 신흥연구단체들(한국산업사회연구회, 한국근대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등)은 88년 6월 제1회 '학술연합단체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그런데 여기서 발표된 서관모 교수의 논문을 문제 삼아 검찰이 소환조치를 내렸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일상적인 학문적 탄압이나 불이익사태에 대한 공동투쟁의 필요성 △분과학간의 상호교류 및 차원 높은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공감되면서, 88년 11월 '학술단체협의회'의 창립을 보게 된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p.326)

O11 학술단체협의회는 깊이 있는 학문적 성과를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외 연대 사업, 정기 심포지움과 전문강좌 개최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O12

O13

제1기 (1989)

공동대표 : 정석종(역사문제연구소, 영남대 사학과), 이우재(李佑宰, 농어촌사회연구소), 최장집(한국정치연구회, 고려대 정외과), 안병욱(한국역사연구회, 성심여대 국사학)

대표간사 : 박호성(한국정치연구회, 서강대 정치학)

총무간사 : 김재훈(한국산업사회연구회)

부간사 : 이철희(한국정치연구회), 이윤미(한국교육문제연구회)

제2기(1990)

공동대표 : 정석중, 이수인(李壽仁), 최장집, 안병욱, 심상완

대표간사 : 최종욱(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국민대 교양학부)

총무간사 : 김서중(한국사회언론연구회, 서울대 신문학과), 김우철(한국철학사상연구회, 대학신학대 강사)

부간사 : 김경철(한국정치연구원)

제3기(1991)

공동대표 : 최장집, 안병욱, 최종욱, 이종오(한국산업사회연구회, 계명대 사회학)

대표간사 : 장하진(한국여성연구회, 충남대 사회학)

총무간사 : 강봉룡(한국역사연구회)

부간사 : 이해경(문학예술연구소)

제4기(1992)

상임공동대표 : 안병욱(한국역사연구회, 성심여대 사학과 교수)

운영위원장 : 조희연(한국산업사회연구회, 성공회신학대 사회학과 교수)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353-357)

O14 『학술단체협의회 회보』 제1호, 1990년 3월 /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 『한국사회운동사』, 조희연, 죽산, 1990 /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01

구로역사연구소

02

03

04

학술단체협의회

05

1988.11.12~현재 (역사학연구소)

06

서울

07

공개 / 합법

08

대표-사무국-연구실 및 각 분과로 구성(이행기 팀, 노동운동사팀, 현대사팀 등)

09

<창립선언문: 구로역사학(현 역사연구소)을 열면서>

우리는 80년대의 격변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통일을 이루어나갈 주체와 그 제약요인을 새롭게 확인해 내었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지닌 자주성과 역동성을 드높이고 그것을 하나로 결집하여 이를 수행해야할 역사적 시점에 와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현실 변혁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연구자들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초래하였다. 그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제도학적 주변에 퇴적되어, 기존의 한계 밖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의 장을 만들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식인 특유의 소시민성에 기인하는 연구와 활동의 분산성과 고립성은 이러한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극복하고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주체적으로 동참하고자, 일련의 집단적 조직적 대응을 모색하고 일정한 성과를 모색하면서, “민중사학의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역사연구자들은 현실 사회의 요구를 자신이 딛고 서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존재조건과 옹기 결함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우리는 그간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정리해 내면서 이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값진 경험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정리의 과정에서 기층민중과의 접촉공간을 확대하고 우리 스스로의 인적, 물적 재생산 기반을 확보해 내는 것이 연구자들의 실천성과 그 실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초 조건임도 거듭 확인하였다. 오늘 창립될 구로역사연구소는 이런 점에서 지난날 활동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재기의 결과이며,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나갈 실천의 장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고자 한다.

구로역사연구소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민중주체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민족통일의 참 방향을 열기 위해 민족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 정리해 내는 일에 온갖 힘을 쏟아부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검증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중사학의 이론적 전진은 물론 사회운동의 과학적 전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O10

1987년 6월투쟁과 노동자대투쟁의 거센 바람이 휘몰고 간 직후인 1988년 11월 “민중 주체의 관점에서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사회 변혁과 민족 통일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11월 12일 창립하였다. 창립 당시의 명칭은 ‘구로역사연구소’였으나 1993년 8월 ‘역사학연구소’로 개칭하였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 206)

O11

창립 당시의 명칭은 ‘구로역사연구소’였으나 1993년 8월 역사학연구소로 개칭하였다. 구로역사연구소는 ‘구로’라는 노동운동의 상징성을 연구소의 명칭으로 채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로연은 ‘역사적 실천’을 위하여 실천의 현장에 세워졌다. 구로연의 출범에는 수많은 우역곡절이 숨어 있다. 구로연은 1984년에 세워진 ‘망원한국사연구실’을 모태로 한다. 한국사 연구자와 다른 분야의 연구자가 결합한 망원한국사연구실은 “민중 중심의 역사 연구, 서술과 그 성과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국사 연구화 연구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1987년 ‘한국근현대사연구회’와의 통합 논의를 계기로 분열되었으며, 결국 한쪽은 한국근현대사연구회와 통합하여 ‘한국역사연구회’를 창립하고 다른 한쪽은 구로연을 창립하는 식으로 분리되었다. 이 과정은 학술운동의 관점, 학술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의 결합방식, 연구자의 조직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나 크게 보면 한국사 분야에서 ‘연구자 대중’을 조직하는 것을 중심적인 과제로 놓느냐 아니면 민중운동과의 결합을 통하여 한국사 연구자들의 실천성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놓느냐의 차이가 가로놓여 있었다. 구로연의 출범은 비록 막연한 형태이지만 민중운동과의 결합을 통하여 연구자의 대중성과 실천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문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였으며, 또한 진보적인 한국사 연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두어야 하는가 라는 쟁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제기였다.

창립 당시의 연구원은 13명이었고, 연구분과로 전근대분과, 이행기 제1연구분과(근대민중운동사팀), 이행기 제2연구분과(의병연구팀), 현대사 연구분과를 두었다. 회보를 통해 민중사학의 성과물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검증받고자 하였으며 1990년 2월에 『바로보는 우리역사1.2』를 발간하였으며, 회보의 체제와 성격, 제목을 바꾸어 『함께보는 우리역사』를 1992년 3월부터 매달 발간하여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갔다. 또한 다양한 강좌, 교실 등의 대중교육사업과 역사기행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 206~209)

O12

윤한택(초대 소장), 홍순권(초대 부소장 및 연구실장, 2대-7대 소장), 김순덕(사무국장), 박준성(2대, 4-5대 사무국장), 김선경(3대 부소장 겸 연구실장), 윤대원(3대 사무국장), 송찬섭(5대 부소장 겸 연구실장)

O13

구로역사연구소, 한국근현대사연구회

O14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 10년사』, 1999

01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02

언노련

03

04

05

1988.11.26~현재

06

07

공개 / 합법

08

언노련의 조직기구로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또한 89년 4월 이후에는 “민주언론 실천위원회”와 “남북언론인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예·결산, 임원선출,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의결권을 가지며 기본적인 운용방침, 일부 또는 전체의 파업·태업의 가부 결정도 갖는다. 언노련의 대의원 수는 조합마다 “조합원 2백명을 기초단위로 2명의 전임자를 두고 2백명 초과시 1명의 전임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최저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91년 현재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언노련의 임원과 가맹조합의 대표자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가맹·탈퇴의 승인, 결원임원의 선출 등을 심의·의결하며 기본적 운용방침에 기초한 세부운용방침의 결정을 수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언노련의 집행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각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자주적인 사무국은 사무처장의 책임아래 정책기획실, 선전홍보국 등 2실 8국체제로 구성되었다. 각 기관의 인원은 각 단위노조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구성된다. (『80년대 언론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김금녀, 1991, pp.87~89)

09

1. 우리는 언론의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도자유와 민주언론 실천에 전력한다. 1. 우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간의 굳건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언론노동자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의 보호 및 신장을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력 지원하며 타 산업노동자들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하여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1. 우리는 편집·편성권에 대한 정치 권력이나 자본 등 어떠한 세력의 간섭도 거부하며 언론과 노동 등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제반 악법의 폐쇄 투쟁을 과감히 전개한다. 1. 우리는 민주적인 조직운영으로 조합원 대중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가맹조합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1. 우리는 언론내부의 권위주의적·비민주적 요소척결에 노력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010

87년 범민족민주운동의 민주화투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각 단위 언론노조의 지속적인 조직 결성의 확산과 투쟁의 고양과정에 있다. 87년 각 언론사의 노동조합은 결집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편집권 독립조항 등의 명문화, 사내의 반민주적인 요소의 척결 및 근로조건개선 등 언론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내언론사 전체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사회민주화와 언론민주화의 요구는 연맹체결성의 필요성을 고조시켰고 10개

언론사 대표들이 <언노련 추진위원회> 결성에 합의하였다. 이에 88년 4월 6일 15개 언론사노조가 ‘자유언론’과 ‘권익쟁취’의 깃발을 들고 「전국언론노조협의회」를 창립하였다. (『80년대 언론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김금녀, 1991, pp.85~86) 이러한 연대를 보다 발전적으로 하여 88년 11월 26일에는 전국의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노조가 모여 전국언론노동자 1만 3천여명, 41개 언론노조가 참가하는 「전국언론노동자연맹」을 결성하였다.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환 외, 조국, 1989, p.249)

O11

언노련은 산하 단위 노조간의 연대를 통해 임금 복지후생 근로조건개선 등 노동조합의 일상적 요구는 물론, 과거의 굴절된 언론기능을 회복해 민주언론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창립과 더불어 ‘언론해방투쟁원년’을 선언한 언노련은 한겨레신문 이영희 논설고문의 구속사건을 비롯해 MBC, 서울신문, 연합통신 등의 파업사태에 연대투쟁을 벌였으며 전교조 등 재야단체와도 일정한 수준 연대하였다.(『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년, pp327) 또한 5공언론의 청산과 전국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투쟁의 전개, 타산업 노동운동 및 부문운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활동, 편집권 독립 및 공정정보를 위한 <민주언론 실천위원회> 활동과 민족언론, 통일언론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남북언론인 교류추진 위원회>의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80년대 언론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김금녀, 1991, pp94~103)

O12

권영길(초대위원장, 1대~3대), 이형모(4대~5대 위원장), 최문순(6대 위원장, MBC), 김용백(6대 보궐위원장, 국민일보), 신학립(7대위원장, 한국일보)

O13

전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O14

‘언론노보’(『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년, pp327) /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환 외, 조국, 1989 / 『80년대 언론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김금녀, 1991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창립 선언/강령」(88.11.26), 215~216쪽

O1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O2

극협

O3

O4

O5

1988.12.01~?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197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온 연극 운동의 역량은 80년대 중반에 들어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의 영역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유화국면 이후 넓혀진 공간을 따라 서울에서 만도 대여섯개의 전문연극운동단체들이 생겨나고 지방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운동 역량의 전반의 추적 및 전문화, 분업화의 객관적인 요구가 상응하면서 이루어졌다. 전문 '극협'의 발기단체는 '현장', '아리랑', '새뚝이', '울림', '미알', '한강', '민족극연구회' 등이었으며 1988년 3,4월 종로 미리내소극장에서 펼쳐졌던 '제1회 민족극 한마당'에 참여했던 20여개 단체가 주체가 되어 극협 건설의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말』27호, 1988. 9, pp126~131)

O11

O12

O13

O14

『말』, 27호, 1988. 9

01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02

통불협

05

1988.12.04~1992.?

06

07

공개 / 합법

08

09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발족선언문> : 오욕과 굴종의 역사를 극복하고 참 자유와 평등의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해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이 땅의 국민들은 서서히 그리고 무겁게 나아가고 있다. 자아와 세계의 실상을 여실히 보고 허위의식과 전도된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 일생동안 한시각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어받은 우리 불교도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 속에서 모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부여받고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의 위대한 불교적 문화업적과 한때의 영화나 전설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숨결 속에 녹아 있는 한반도 역사의 정신적 지주인 것이다.

해방 이후 이 땅은 일제식민지시대 속에서 배태된 제국주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했고 뒤이어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에 의해 또다시 정신적, 사상적 혼란과 전도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 왔다. 불교의 위대한 사상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박제된 유물로 전락하였고 위정자들의 끊임없는 탄압과 소외 속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나약하고 체념적이며 권력 종속적인 내용만이 부각되었다. 이는 민족문화와 사상에 대한 제국주의의 구조적인 탄압에 기인하지만 오늘의 불교 현실은 사부대중의 자기책임도 막중하다. 부처님 오신 날은 그저 공휴일이고 크리스마스날은 민족의 축제처럼 되어 버린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불교도는 지난날의 안일과 무관심을 엄정히 반성하면서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돌이켜 보면 불교 내부적으로 박제된 교리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선지식은 끊임없이 수행·정진해 왔다. 해방이후 왜색화된 불교를 극복하고 민족적 정신을 불교 속에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으며 유신폭압 하에서도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입장에서 하와중생의 상구보리를 귀중한 짝으로 키우고 지켜 왔다. 9·7해인사 승려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현현이었고 이후 끊임없는 대사회적 노력은 불교도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었다. 제 24회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치름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한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념 하에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를 결성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나 불교 본부는 올림픽이라는 구체사안의 한시적 협의기구였기에 민족통일의 그날까지 모든 불자의 염원을 모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불교도의 염원을 모아 민족자주 통일 그날까지 모든 불자의 염원을 모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 불교도의 염원을 모아 민족자주, 통일 불교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민족자주 통일 불교운동협의회는 첫째, 정법수호의 기치 하에 통불협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한다. 둘째, 파사현정의 기치 하에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용맹정진한다. 셋째, 불교중흥의 기치 하에 불교를 혁신하여 역사발전에 동참한다. 넷째, 민족자주의 기치 하에 민주 통일된 불국정토를 건설하자.

자주·민주·통일의 선봉장으로서 민족의 등불이어야 할 이천만 불교도여!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열망은 한줌의 무리가 휘두르는 반통일적이고 외세종속적인 세력을 척결할 당위성과 정통성을 부여한다. 또한 부처님의 근본사상으로의 회귀는 역사의 중심에 위치하여 역사의 조타수 역할을 불교도가 떠맡음과 동시에 역사의 담지자가 된다. 가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 손에 파사현정의 칼을 들고 한 손에 대자대비의 인간존엄성을 안고 정법구현의 불국정토로 향하여.

1988년 12월 4일

불국정토구현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생회, 동국대학교석림회, 정토구현광주불교협의회, 대한밀교청년회, 조계사거사회, 봉선사거사회, 대한불교청년회서울지구 서울불교청년회, 동국대학교불교도연합, 조계사학생회, 동산반야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통불협 4대강령> 통불협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한다. /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용맹정진한다. / 불교를 혁신하여 역사발전에 동참한다. / 민주·통일된 불국정토를 건설한다. (『월간 흐름』, 1989. 2, 형성사)

O10

불교운동진영은 87년 대통령선거 이후 분열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지지 문제로 승가운동 측이 분열되어 88년 들어 김체국면을 일정시기 맞이하게 되는데 ‘군정종식’이라는 목표의 좌절과, 특정 후보지지를 둘러싼 운동단체들 사이의 갈등의 표출, 정토승가회의 특정후보 지지 성명과 민중불교운동연합 간부의 정치적 진출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불교계와 민중불교운동은 ‘88올림픽 공동개최’라는 국민적 정서를 적극 수용하여, 이후 사회적 분위기와 통일을 연결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벌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국정토구현전국승가회, 중앙승가학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진보적인 불교단체들이 총결집하여 1988년 12월 4일 ‘민족자주·통일 불교운동협의회’라는 상설적인 연합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80-90년대의 “민중불교운동”에 관한 연구』, 김혜숙, 2000. pp.18~21)

O11

80년대 불교운동권의 대표적 단체로 - 불교 혁신과 자주성 회복을 위한 불교중흥 -외세로부터 민족자주성 구현 - 참된 민주주의 실현 - 통일된 민족공동체 구현을 과제로 삼고 ‘백담사출정투쟁’(88.12.5~12), 3.1민족해방운동 계승 애국 불교도 법회(89.3. 1), 10.27법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회를 개최하는 등의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p322)

통불협은 89년부터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불교계 반미운동 주도, 핵철폐·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불교도 서명운동 전개 등을 앞장서 이끌었다. 그리고 90년 8월에는 통일문화제 개최를 통해 자주적 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기했다. 한편으로는 통일학교를 개설하여 활동인력을 발굴하고, 전국청년불자지도자간담회를 마련하여 불교운동의 전국적 연대와 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불교통일운동의 현단계』:『불교평론 5호』, 2000, 조병환)

O12

지선(통불협 의장)

O13

불국정토구현전국승가회, 중앙승가학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O14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 『80-90년대의 “민중불교운동”에 관한 연구』, 김혜숙, 2000 / 『불교통일운동의 현단계』:『불교평론 5호』, 2000, 조병환 / 『월간 흐름』1989. 2,

형성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발족선언」(88.12.04), 189~190쪽

O1

서울지역아파트노조

O2

O3

O4

O5

1988.12.07~?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서울시내 35개 단위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조조합장 35명 연합노조인 <서울지역아파트노조> 설립총회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외, 조국, 1989, p.361)

O11

서울지역아파트노조는 88년 12월 노조를 창립한 후 89년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단지별 단체협상을 진행한 결과 121개 단지에서 결렬되었다. 당시 각종 수당 포함 33만 2,235원의 임금을 요구하였고 또한 협약체결 당사자로 입주자대표의 참가를 요구하였다. 이어 90년 1월 9일 파업찬반투표 중간개표 결과 5,612명 중 3,000여 명 찬성투표로 1월 11일부터 파업돌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월 12일 서울지역아파트노조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 3자교섭체의 수락, 파업을 유보하였다.(『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pp.367~368)

O12

홍성부(위원장)

O13

O1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한국사회연구소, 『1991 한국사회연감』, 백산서당, 1991

O1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

O2

건설노협

O3

O4

O5

1988.12.10~1989.05.17

O6

O7

공개 / 임의단체

O8

건설노협은 전체 건설업 노조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각 조직기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원대회는 건설노협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입노조에서 선출된 1년 임기의 대의원들로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소집되지 못했다. 둘째,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임원진과 각 노조의 위원장들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월 1회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 쟁의대책,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등 건설노협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 셋째, 건설노협 임원들과 5개 집행부서의 국장들로 구성된 상임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수입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2주 1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집행부서로는 기획국, 복지국, 조직국, 교육선전국, 쟁의지도국 등을 두었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2절 3.)

O9

O10

건설업 사무직 노조의 경우, ‘한국건설업 노조 결성 보고대회’에 참석했던 대림, 삼환노조 위원장 등이 협의회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0월부터 새롭게 결성된 건설업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네 차례에 걸쳐서 순회모임을 갖고 건설업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에 대해 서로 이해를 돕는 친목모임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상급조직인 연합노련이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인식하고 연합노련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여 ‘건설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세영 한일노조 위원장)’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직결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 결성은 크게 세 직종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즉, 시공분야(대림, 삼환, 한일), 설계분야(대림엔지니어링, 삼우기술단), 중기분야(대우, 현대)로 나누어 협의체 건설을 위한 소모임 활동을 전개하여 1988년 12월 10일 ‘건설노협’이 결성되었다. 건설노협은 설립취지문에서 노동자로서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과 건설사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등 5개의 강령과 기업인들의 경영관 쇄신, 원가절감과 건설품질 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2절 3.)

건설노협은 이후 89년 5월 17일 연맹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해체한다.

O11

O12

김세영(추진위원장, 한일노조 위원장)

O13

건설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추진위원회,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O14

『전노협 백서』 1권

01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

02

전국회의

03

전국회의는 총 15개 지역조직과 연전노협, 병노련, 전교조, 민출노협, 외기노협 등 5개 업종조직 그리고 노우협이 참가하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6년에 대한 자체평가』, 전선: 민주노총 자료, p.4)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경기지역노동조합연합, 성남지구노동조합총연합, 대전지역노동조합건설준비위원회, 전라북도노동조합연합회, 광주지역노동조합협의회, 동광양시민주노동조합협의회, 대구경북지역노동조합연합, 구미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마산창원지역노동조합총연합, 진주지역민주노동조합연합, 부산지역노동조합연합, 울산지역노동조합협의회준비위, 거제지역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협의회, 시설관리노동조합협의회, 외국인기업노동조합협의회,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협의회 (합계 550여개, 20여만명) / 참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전문기술직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 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협의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회의, “출장보고서”, 1989년 하반기 / 전노협 백서』, 제4권 6장 1절)

(연구팀 의견) 가입조합과 조합원수의 경우 각급 조직의 불안정에 의해 수시로 변동되어 조직현황 보고서마다 차이가 있다.

04

05

1988.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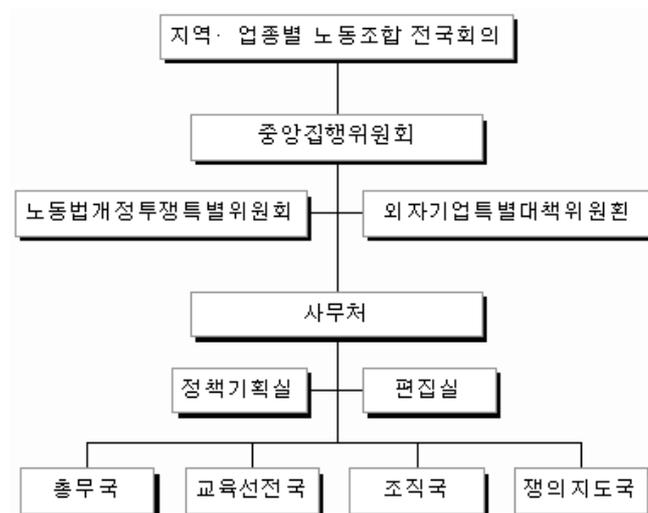
06

전국

07

공개 / 임의단체

08



(『전노협 백서』, 제4권 6장 1절)

O9

O10

1988년 11월 12일, 노동자계급은 여의도 5만여 명이 결집함으로써 ‘전국적 단결’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전국적 단결은 곧 ‘정치적 단결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1988년 11월 13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전국에서 온 3만여명의 노동자가 ‘전태일 정신 계승 및 노동법 개정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 연구팀) 88년의 성장을 11월 전국대회로 과시한 후 그 조직적 성과로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가 결성되었다.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p.131)

1988년 12월 22~23일 전주에서 금속노련 부천지역본부(준), 대구경북노련(준), 마창노련, 서노협, 인노협, 전북노련, 진민노련, 민출노협, 전국건설노협, 전국외기노협, 전국노운협 등의 대표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노조단체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주요하게 1988년 노동법개정투쟁에 대한 평가와 전국적인 노동자조직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전국조직 건설과 관련한 논의의 주된 쟁점은 대표자회의의 명칭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표자회의로 그냥 둘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장시간의 토론 끝에 대표자회의의 명칭을 ‘지역, 업종별 전국회의’로 결정, 이 날의 회의를 ‘제1차 지역, 업종별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로 확정했다. 또한 전국회의의 주요 임무로써 첫째,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 건설을 추진하고, 둘째, 당면한 투쟁을 수행하며, 셋째, 민주화투쟁에서 타계급과의 연대를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1989년 임금인상투쟁과 노동법 개정투쟁 등 당면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국회의’산하에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이하 ‘전국투본’)를 설치하기로 하고 전국투본 본부장에 단병호(서노협 의장), 부분부장에 이석행(진민노련 의장), 김승호(전국노운협 운영위원)를 선임하고, 그 사무실을 서노협에 둘 것을 결정했다. (『진노협 백서』, 제4권 6장 1절)

O11

전국회의는 총 15개 지역조직과 연전노협, 병노련, 전교조, 민출노협, 외기노협 등 5개 업종조직 그리고 전국노운협이 참가하였다. 전국회의는 88년 12월 22-23일 진주지역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매월 1회씩 전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었고 89년 12월 11-12일 부산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제13차 회의를 끝으로 만 1년만에 전노협창립준비위원회로 전환되면서 마감되었다. 전국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지역, 업종협의회를 토대로 개량적이고 어용적인 한국노총과 대별되는 전국중앙조직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사업을 당면투쟁사업, 전국조직건설사업, 민주화투쟁에서 타계급과 연대 등을 설정하고 특히 당면 투쟁과제와 관련 ‘전국노동법개정과 임금인상 투쟁 투쟁본부’를 구성키로 하고 본부장에 단병호 위원장을 선임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89년 1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임투와 탄압저지투쟁으로 4월 부천 49개 노조 총파업, 서울 50개 노조 총파업, 인천주안지구총파업 등으로 거의 전지역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나갔다. 또한 4월 30일 노동절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11월에는 철통같은 원천봉쇄를 뚫고 노동악법철폐와 전노협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6년에 대한 자체평가』, 전선:민주노총 자료, p.4)

O12

단병호(段炳浩, 전국회의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장, 서노협 의장), 이석행(전국회의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부분부장, 진민노련 의장), 김승호(전국회의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부분부장, 전국노운협 운영위원)

O1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O14

『전노협 백서』, 제4권 /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참조) ‘전국회의’에서 ‘민주노총’까지**

-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전국회의)(1988. 12.23)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1990. 1.22)
  - 14개 지역노조협의회 및 2개 업종별 노조협의회 결성
  - 지역중심, 금속업종 중심, 중소기업 중심
-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1990. 5)
  - 진보성향의 사무잡전문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13개 업종별 연맹 결성 및 전노협과 연대하여 활동
-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조협의회 : 16개 대기업노조가 협의체수준의 대기업연대회의 결성(연대회의) (1990.12)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1993. 6)
  - 전노협, 업종회의, 현충련, 대노협 등 4개 단체를 주축으로 결성
  - 민주노조진영의 조직적 단결 모색 (제2노총 설립 준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탄생 (1995.11.12)
  - 전노협, 전노대 등의 재야단체 운동이념 계승
  - 정치세력화추구, 경영·정책참가 등의 정치적 성격 강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합법성 인정 (1999.11)

O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O2

민예총

O3

O4

O5

1988.12.23~현재

O6

전국

O7

공개 / 합법

O8

(민예총 소개 : <http://www.kpaf.org/introduce/history.asp>)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해방이후 민주화와 함께해 온 문화예술운동의 성과를 대중화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예술인의 구심점입니다.

민예총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대안문화 창조를 위해 민예총은 끊임없이 변혁을 지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표현의 자유확대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문화민주주의적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때까지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민예총은 지자체가 뿌리내려 가는 지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방화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문예운동 DB, 민족예술 네트워크 등 문화예술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개발하여 더 많은 민중이 우리의 민족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민예총은 부정적 과거유산의 극복과 사회개혁을 통해 민족문화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할 것입니다. 남북문화교류에 힘쓰며 통일문화를 끊임없이 준비해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개방시대에 대응하여 민족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 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민예총 산하 문화정책연구소와 민족미학연구소에서는 빈약한 문화정책의 대안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문예아카데미의 성과를 집약시켜 대안교육의 장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문화예술 대학 설립 등 정통성있는 민족예술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988년 12월 23일 창립하여 10년 동안 민족예술의 울퉁은 뿌리를 내려 온 민예총이 이제는, 그렇게 뿌리 내린 단단한 힘으로 온 누리, 7천만 민족과 함께 100년을 이어갈 민족 예술을 키워 갈 것입니다.

O9

O10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된 민주화운동에 부응하여 1988년 11월 26일 고은·백낙청·이건용·임진택 등이 발기인대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23일 민족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주로 진보적인 문학가를 중심으로 예술·영화·연극·음악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참여하였다. (<http://www.kpaf.org/introduce/history.asp>)

O11

민예총은 1990년 신공안정국 속에서 민족예술운동의 상징적 구심체로서 활동하였다. 1990년부터 부문별 협의체 성격을 띤 연합회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1993년 사단법인화를 추진하였고 1994년부터 조직이 각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참조: 민예총 10년사 : <http://www.kpaf.org/introduce/history.asp>)

19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의 현대사가 그렇듯이, 민예총의 10여년에 걸친 역사도 몇차례의 굽이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예총의 변화를 크게 나누어 보면 대략 6개의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88년 12월의 창립 전후,

1989년 신공안 정국 속에서 민족예술운동의 상징적 구심체로서 활동하던 시기,

1990년부터 장르단체의 발전에 따라 이들의 협의체적 연합으로 증집회의를 운영하던 시기,

1993년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그 위상을 확립하던 시기,

1994년부터 지역민예총의 확장으로 민예총이 전국적인 기반을 갖추던 시기,

그리고 1997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장르와 지역의 전국적 연대들을 모색하는 시기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직 위상의 변화는 내부 논의의 결과로 조직 방향이 새롭게 결정되어 변화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 - 민족예술운동의 새 역사를 연 민예총 창립총회

1989년 - 상징적 구심체 시기

1990년 - 장르 단체의 협의체적 연합 시기

1991년 - 장르 조직의 확대를 위한 노력

1992년 - 민족예술 역량의 대중적 확산 도모와 문화 개혁 방향의 모색

1993년 - 사단법인 민예총 정립 시기

1994년 - 지역민예총 건설의 확산 시기

1995년 - 통일의 원년, 역사 바로세우기

1996년 - 전국적인 조직의 확산 시기

1997년 - 장르와 지역의 강고한 연대조직화

1998년 - 민예총 창립 10주년

1999년 - 본격적인 정보화 사업의 시작

O12

고은(高銀), 백낙청, 이진용, 임진택

O13

O14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paf.org>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립 선언」(88.12.23), 228~230쪽

O1

자주민주통일 그룹 (☞ <사건편>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자민통 사건) 참조)

O2

자민통

O3

O4

O5

1988.12~1990.12.26 (안기부 발표)

O6

O7

비공개 / 비합법 (안기부 발표)

O8

O9

O10

안기부는 90년 12월 26일 자주민주통일 그룹 사건을 발표하고 이 조직이 한국민주전선(KNDF)의 투쟁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지하혁명조직이라고 밝혔다. (『말』56호, 1991. 2, pp82~87)

안기부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혁명 노선에 따라 활동해 오던 서울대, 고려대, 외국어대, 전남대 등의 7명은 88년 1월부터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북한의 대남혁명지도지침을 수행할 조직을 결성키로 하고 준비에 착수, 88년 12월 28일 충남 계룡산에서 전국 10여개대학 주사과 핵심세력 2백여명과 3일간 합숙하면서 북한의 한국 민족 민주전선의 강령을 따르는 자민통을 결성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0.12.27)

O11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자민통 공작위원회는 89년 4월 한민전의 투쟁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대협, 서총련을 장악하기 위해 고려대 윤진호, 외국어대 김기석, 경희대 송규봉, 전남대 송갑석 등을 조직원으로 포섭, 주체사상과 한민전 노선으로 사상무장을 시킨 후 이들을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도록 지원·조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송갑석과 윤진호를 각각 전대협과 서총련의 의장에 뽑히게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자민통 공작위원으로 지목되어 검거된 최원극씨(외국어대)는 면회과정에서 “안기부가 마치 자민통이 사전에 모의하여 전대협 의장을 당선시킨 것처럼 조작한 것은 자주적인 학생회연합체인 전대협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자주적인 학생운동을 탄압하려는 음해공작”이며 재판과정에서 “자주민주통일 이념의 정당성과 학생운동의 자랑스런 전통을 뒤흔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말』56호, 1991. 2, pp82~87)

O12

안기부 발표 : 송갑석(전대협 의장, 전남대), 김재웅(전대협 대변인, 한양대 총학생회장), 최원극(외국어대), 윤진호(고려대), 김기석(외국어대), 송규봉(경희대)

O13

O14

『말』, 56호, 1991. 2 / 『조선일보』, 1990.12.27

O1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안양PD그룹) (☞ <사건편> 치안본부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안양PD그룹) 검거사건 참조)

O2

O3

O4

O5

1988.말~1989.9.13 (날짜 차이: 박원순의 『국가보안법 연구 2』 292~293쪽에는 9월 12일: 연구팀)

O6

O7

비공개 / 비합법 (치안본부 발표)

O8

O9

O10

88년 상반기 이후 전국적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 과제로 안양, 군포 활동가를 규합하여 건설하였다.

O11

‘안양민주노동자일동’이란 안양, 군포 지역 노동자들에게 민중 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반의 투쟁을 모아 내기 위해 몇몇 유인물에 밝힌 이름이다. 즉 안양지역의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진영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이념에 입각한 정치 조직의 공식 명칭이 아닌, 이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던 소그룹, 서클로 존재하면서 광범한 민중민주주의 대오를 통칭한 것이었다. 그러나 치안 본부와 검찰의 사건 조작, 왜곡은 서클 수준의 조직을 거대한 지하 조직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즉 이 이름 자체는 이러한 왜곡, 조작에 의해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1991, 소나무, p.123)

1989년부터 1989년 상반기의 투쟁을 거치면서 제기된 전국적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 과제를 안고, 안양, 군포 등의 사업장에서 해고된 활동가들이 1989년 4월부터 구속된 9월까지 1차적으로 정치조직 건설의 올바른 경로 및 필요성을 선전하기 위한 연구 토론 활동을 하였다. 내용으로는, 노동자정치 조직은 왜 필요하고 올바른 건설 경로는 어떠한 것인가, 노동자 대중 조직과 정치조직은 각각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노동자 계급의 올바른 당 건설 경로에 대하여’: 초안) 등의 연구 및 시기와 사안별로 지역 유인물(‘메이데이 100주년 기념 한국 노동자 대회에 부쳐’, ‘현정세의 성격과 민족 민주 운동의 과제’, ‘경기 남부 지역 임투 평가’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1988년 말부터 1989년 초까지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사상 무장을 하고 안양, 군포지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급 투쟁을 선전, 선동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안양민주노동자일동 그룹’이라는 이적 단체를 구성하여 불법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 지역 476개 기업체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조직 확대 및 노동 쟁의를 배후 조종하고,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갖은 고문, 협박을 통해 작성된 자술서를 그대로 베낀 공소장을 작성, 1989년 9월 13일 김학원 등 6명을 구속시켰다.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1991, 소나무, pp.122~123)

O12

김혁, 김학원, 김대영, 이숙희, 이성호, 이기동

O13

O14

「운동 MAP」 / 이진경, 김진국, 김학원, 노회찬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1991, 소나무

<참조: 김선수(변호사),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http://www.yangsimu.or.kr>, 연도미상>

**\*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

치안본부는 1989. 9. 12. 이기동, 김혁, 이성호, 김학원, 김대영, 이숙희 등이 안양민주노동자일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안양과 군포 두 군데에 자취방을 얻어놓고 근로자들을 의식화시켜 기아산업 등 일대 14개 기업체에 들여보내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위 단체는 지역내 노동운동 상황을 토론하고 몇 개의 문건과 유인물을 작성한 학습씨클단계의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즉, 안양·군포·안산 등의 사업장에서 현장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활동가들이 민중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일정에 동참하고자 1989. 4. 편집팀을 구성하고 1989. 9.까지 6개월 동안 “노동자 정치조직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노동자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은 각각 어떤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서로 어떤 연관을 갖고 활동해야 하는가” 등등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방안에 대하여 연구, 토론하였을 뿐이고 확고한 정치조직의 건설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판·검사의 불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숙희에 대한 구속기간이 1989. 10. 18. 만료되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19일에야 발견하고 구속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서 18일에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전국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노동자 사상·조직결성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노동자정치조직 사건 백서』, 1990. 7., 22-23쪽). 김혁, 김학원, 김대영, 이성호, 이기동, 이숙희 등은 재판과정에서 “노동자계급정당의 결성이 시급합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O1

신갈기흥청년회

O2

O3

O4

O5

1988.~?

O6

공개

O7

신갈

O8

O9

O10

1987년 기흥독서회로 출발하여 활동하다가 88년 신갈기흥청년회로 발족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7)

O11

노동청년단체로 활동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7)

O12

기흥독서회

O13

O14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

---

〈1989년〉

- 01.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 01.20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청대협)
- 01.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 01. 부천여성노동자회
- 02.10 전국해직언론인원상회복쟁취협의회
- 02.11 (구속일자)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부>노회)
  - 02.25 인천여성노동자회(인여노)
  - 02. 전국시설관리노조협의회
- 02. 부천지역 임금인상 및 노동법개정투쟁본부
  - 02. 민족해방활동가조직(사건)
  - 03.01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
  - 03.25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철연)
  - 03. 인천노동자대학(노대)
  - 04. 한국교육연구소(한교연)
  - 04.23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전일노)
- 05.01 성남지구노동조합총연합(성남노련)
- 05.16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 건설을 위한 서울지역민주주의학생연맹(서민학련)
  - 0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 05.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
- 07.22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부노협)
- 07.31 (구속일자)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회(사건)(전해투)
  - 08.20 (구속일자) 한미문제연구소
- 08.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 09.23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노문연)
- 10.14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 10.28 한국여성연구회(여성연)
- 11.04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천주교전국공동위원회(천공위)
  - 11.0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11.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애청)
    - 11.11 전국민민연합(전민련)
    - 11.12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12.14 (구속일자) 반제애국청년회
  - 12.16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건설노련)
    - 12.16 교육문예창작회
    - 12.18 전국여성농민위원회
  - 12.28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경기노련)
- (날짜미상)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 (날짜미상) 성남터사랑청년회



O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O2

민주법연

O3

O4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국가인권기구공동추진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  
대회의

O5

1989.01.05~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고문-회장-운영위원회(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특별위원회)

O9

O10

전통적인 체제법학이 국민주권을 내세우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이념적 구호로 삼아 지배계급의 이해관  
계와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논리적 정당화 작업을 제공해 줌으로써,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은폐하고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며, 법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조직적으로 차단  
시키는데 가담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법분야의 민주화운동이 절실히 요청됨을 인식하고 현재  
의 지배적인 법논리가 가지는 허구성을 폭로하는 한편 무엇이 참된 법인가에 대한 과학적 대  
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제도와 법문화의 민주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1989년 1월 5일 소장교수  
와 변호사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  
183)

O11

1989년 5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민주법학』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민주법학』은 민주주의법학  
연구회의 새로운 법학이론 구축을 위한 노력의 표현이다. 1992년까지는 단행본 형식으로 발행  
하다가 1993년부터 도서출판 관악사에서 정기간행물(연2회)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법적 쟁점  
들을 다루는 월례발표회, 심포지움 개최,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 183~184)

O12

국순옥(고문), 손동원

O13

O14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O1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 <단체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한청협 참조)

O2

전청대협

O3

부산, 울산, 마산, 전주, 대구, 전남, 청주, 대전, 구리, 수원, 인천, 서귀포, 속초, 서울 5개 단체 이상 18개 단체

O4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국민연합

O5

1989. 1. 20 ~ 1992. 2.23

O6

O7

공개 / ?

O8

O9

O10

전국의 청년운동을 단결시키기 위한 운동은 89년 불과 10여개 남짓 단체의 참여로 전청대협이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정세연구』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p.108)

O11

전청대협은 광주 순례 사업,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사업, 지역 문화 대동체(체육대회), 전국과 지역 간부수련회, 범민족대회 참가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청협(전국청년단체협의회)으로 발전하기 위한 논의 및 조직 발전 등을 모색해 나갔다. (『정세연구』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p.108)

O12

이범영(의장), 박태근(부의장)

O13

O14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정세연구』, 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0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 <사건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창립대회 참조)

02

전민련

03

부문단체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민주교육실천협의회, 기독교사회운동연합, 천주교사회운동연합,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연합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분과

지역단체 : 서울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충북 민족민주운동연합, 대전·충남 민족민주운동연합, 대구·경북 민족민주운동연합, 부산 민족민주운동연합,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전북 민족민주운동연합, 광주·전남 민족민주운동단체대표자회의, 경기북부 민족민주운동연합(준), 경기남부 민족민주운동연합(준), 강원 민족민주운동연합(준), 민주쟁취 국민운동제주본부 / 참관단체 :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운동-Map』, 조현연 제공)

04

05

1989.01.21~1991.12.

06

07

공개

08

전민련의 최고 의결기관은 대의원대회이고, 그 다음의 의결기관은 중앙위원회인데, 대의원대회는 1년 1회의 정기회의의 외에는 중앙위의 결의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단이 소집하게 되어 있고, 중앙위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중집위의 결의 또는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단이 소집하였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와 민중운동 1,2위원회가 평상시 지역과 부문의 의사를 수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집행위와 상임집행위는 집행기관으로서만 규정되어 있으나 평상시 일상적인 업무의 실질적인 결정기관, 지도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중집위는 의장단, 회원단체대표, 사무처장, 정책기획실장, 편집실장, 각 특위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전민련의 출범이후 활동평가와 향후 방향』,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pp.44~45)

09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결의문> : 1. 우리는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주범의 처벌 없이는 그 어떤 민주화도 가짜요, 기만임을 선언한다. 5공유산의 척결은 하수인 몇 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등 특별조사기구의 설치, 5공비리의 핵심인 정치자금에 대한 완전한 규명, 광주학살의 발포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주범인 전두환의 구속·처벌과 그 공범자 노태우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양보할 수 없는 민주화의 대전제임을 단호히 천명한다! 1. 우리는 그동안 독재정치의 무기로 사용되어 민중의 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해온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집시법, 노동악법, 교육법 등 모든 악법을 개정 혹은 철폐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더 이상 조국분단의 족쇄를 방치할 수 없다. 우리 앞에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노태우 독재정권의 시차 교차승인, 시차 유엔가입, 허구적 민족공동체안 등 분단고착화 기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의 해소와 통일국시의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위해 투쟁하고 노태우 정권의 기만적 창구단일화론에 반대하여

각계 민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적 통일운동에 떨쳐나설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1. 우리는 우리 민족의 분단과 억압의 화근이 되어온 미국의 지배를 청산하는 것에 조국의 활로가 있음을 확인한다. 한반도의 군사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남북 팀스피리트군사훈련을 단호히 반대하며 군작전권의 탈환 및 굴욕적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 한미 간의 모든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고 강도적 수입개방압력을 분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민족생존과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핵무기의 즉각 철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거족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1. 우리는 친인공노할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주범들의 활개치는 이 땅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게 야만적 테러행위와 공권력 확립을 빙자한 구속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중운동에 대한 노태우정권의 폭력적 탄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온 민중과 더불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민중생존권투쟁으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장기 복역중인 정치범들, 그리고 명예선언으로 구속된 애국적 군인 등 모든 양심수를 전원 즉각 석방할 것과 제5공화국시절에 저질러진 의문의 죽음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지역간·부문간 불균등 발전정책을 타파하고 그간 군사정권 유지의 골간이 되어 온 정치·경제·문화의 중앙집중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며 지역주민의 기본권확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제의 즉각적인 전면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군사독재정권과 밀착된 특권적 독점재벌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정의와 평등에 입각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투쟁과 민주노조활동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며 이를 가로막는 노태우정권의 폭력적 탄압을 저지하고 노동3권 보장, 생활임금 쟁취, 8시간 노동제 확립 등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농수축산물의 생산비보장과 농어가부채 탕감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정책과 수세, 의료보험 정책 등 각종 반농민적 정책의 철폐를 촉구하고 토지의 농민소유와 농협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투기를 조장하고 독점재벌만 살지게 하는 재개발·철거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임대주택 등 도시서민의 주거생활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도시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교육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출판계, 학계, 법조계, 의료 등 전문지식인 등 각계 각층의 민족문화건설 노력과 민주 민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사회제도화되어 있는 남녀차별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 불평등고용법 등 온갖 성차별에 대한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전두환·노태우 등 극소수 정치군인에 의해 만신창이로 앞장선 애국적 군인들의 충정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내며 군이 이제는 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모든 정치개입행위를 중단하고 소수정치군인을 축출함으로써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모든 야당정치세력은 친미보수연합에 야합하지 말고 광주학살, 5공비리, 반민주악법 등 5공유산의 척결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주대연합투쟁의 정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제3세계 민중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양심세력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모든 민족민주세력은 자랑스러운 전민련의 깃발아래 총단결하여 지난 시기의 분산과 분열을 청산하고 단결투쟁, 계속혁신의 길로 매진하자! 7천만 동포와 더불어 그리고 그들 속에서 자주·민주·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멸사·헌신·투쟁해 나가자!

1987년 대통령 선거, 1988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심한 분열양상을 보였던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노동자·농민 등의 기층 대중운동의 성장을 토대로 1987년 10월경부터 민족민주세력의 구심을 형성하기 위한 <전국민중운동연합> 건설논의를 시작하였다. 1988년 9월 2일 <전국민중운동연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12월 22일 제14차 회의에서 전민협 결성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 이후 몇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참가단체를 확대하고 집행부 구성을 확정시킴으로써 1989년 1월 21일 전민련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자·농민 등 8개 부문단체와 전국 12개 지역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전민련은 기층민중운동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전선운동과 차별성을 가지지만 노선과 입장의 대립, 불일치가 남아 있다는 점, 전민련에 가입된 각 부문 및 지역단체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점, 통일전선운동으로서의 전민련 활동을 이끌어 나갈 주도세력이 부재하다는 점 등의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다. (『운동-Map』, 조현연 제공)

전민련은 1989년 1월 21일 결성식에서 결성선언문 및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대북관계 및 5공청산 등 대내-외 정치문제에 대해 제도정치권과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력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조선일보』, 1989. 1.22)

#### O11

88년 전민련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목표로 전개되었다. ①5공청산과 광주학살책임자 처단투쟁을 통해 노 정권의 동요의 폭을 극대화한다. ②대중투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치투쟁으로서의 진전을 위한 반민주악법개폐투쟁을 전개한다. ③미-노 일당의 기만적 북방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두 개의 한국정책을 지지한다. 전민련은 위와 같은 목표 아래 5공청산과 광주학살 원흉처단 투쟁, 반민주악법 개폐투쟁, 조국통일 촉진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8.18 영등포을구 재선거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영등포을구 선거를 둘러싼 이견은 ‘합법정당 논쟁’을 거쳐 전민련의 분열로 이어졌다. 89년 5월 전민련 상임집행위에서의 ‘정치세력화 소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다시 표출된 합법정당 결성추진의 움직임은 영등포을구 선거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합법정당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 내 성원들은 그 직을 사임하고 추진”한다는 전민련 2차 중앙위의 결의에 따라 9월 28일 전민련 간부 중 합당추진 인사의 사직,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11월 10일)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한국사회운동사』, 조희연, 죽산, 1990, pp.386~390)

이후 전민련의 등장에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보수야당들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진 집중 탄압의 결과로 의장단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 대부분이 구속, 수배됨으로써 구심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활동의 마비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내부 원인과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정치력 또는 정치적 지도력과 투쟁력의 상실을 초래했다.

내부 원인을 바라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첫 번째 견해는 전민련이 역량의 통일에 의해 일사분란한 투쟁 대열을 형성하고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구사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의사결정과정의 지나치게 복잡한 조직의 구조적 취약성, 더 크게는 전문성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력의 발휘, 구체적 정책 청사진의 제시, 대체세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였다. 이는 ‘대체정치세력의 가능성 부각=대체정치세력화의 문제’로 결국 전민련이 가진 문제는 합법정당 건설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었다. 두 번째 견해는 투쟁과정에서 대중의 적극적 참여가 촉발되지 못하고 투쟁의 급속한 확산과 진전이 제약된 이유로 지배권력의 분할지배전술, 운동진영의 대중을 대상화시키는 오류, 운동의 전망과 전략적 과제에 대한 모호함과 통일의 결여, 조직운동의 미흡함과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전민련의 조직 강화를 해결책으

로 제시하였다. (『운동-Map』, 조현연 제공, pp.43~44)

O12

이부영(李富瑩, 상임공동의장), 이창복(李昌馥, 공동의장), 이우재(李佑宰, 감사), 장기표(張琪杓, 사무처장), 김근태(金權泰, 정책실장), 이재오(李在五, 조국통일위원장), 정문화(鄭文和, 선전국장), 조춘구(趙春九, 민중생존권대책위원장), 박용일(朴容一, 인권위원장), 문익환(文益煥, 고문), 이소선(李小仙, 고문), 박형규(朴炯圭, 고문), 백기완(白基玩, 고문), 계훈제(桂勳梯, 고문)

O13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 추진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O14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 선언』, 52~55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전민련의 출범이후 활동평가와 향후 방향』, 1989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조현연, 『운동-Map』

『조선일보』, 1989. 1.22

#### (참조: empas 백과사전)

19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열했던 재야는 1988년 이후 다시 힘을 결집해 1989년 1월 민족민주세력의 통일전선조직인 전민련을 발족시켰다. 서울민족민주운동연합회 등 지역운동단체 12개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와 전국농민운동연합 등 부문운동단체 8개 등 20개 단체가 주축이 되고, 개별운동단체 약 200개가 참여하였다.

조직의 목표는 민중해방과 진정한 자유·평등 사회의 실현으로,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서 반외세자주화·반독재민주화·조국통일을 설정하였다.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 토지공개념 도입, 민주자유당 해체 등의 반파쇼 민주화운동과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반미자주화 운동 그리고 8·15범민족대회 등의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90년 4월 21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약칭 전노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등 13개 재야단체와 함께 국민연합을 결성하는 등 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합법정당의 건설을 위해 이부영(李富瑩) 등이 탈퇴하고, 강기훈 유서대필(공방전: 연구팀) 사건 등 정권의 탄압으로 조직역량이 약화되었다. 1991년 12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이 결성되면서 해체되었다.

O1

부천여성노동자회

O2

부천여노회

O3

O4

O5

1989.01~현재

O6

부천

O7

공개 / 합법

O8

O9

<기관 소개>

부천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사업, 취업훈련 및 자활 공동체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교육, 조직, 조사연구활동, 정책 대응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권익신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온갖 굴레를 깨고, 하늘의 절반인 여성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바로, 당신의 벗과 희망입니다. (부천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http://www.pwwa21.org>)

O10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과 가난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극복해나가며, 인간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989년 1월 부천여성노동자회가 창립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인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울아카데미, 2001, p. 324)

O11

창립 후 1989년에는 활동기반을 다져가며 일하는 엄마를 위한 탁아소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1990년에는 여성노동자의 지도력개발 사업을, 1991년엔 신·구 회장의 이·취임식과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사업을 기획, 추진하였다.(『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인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울아카데미, 2001, p.324)

O12

최순영(회장)

O13

튼튼이 아가방,

O14

「일하는여성」(91 계간)(『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334) /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인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울아카데미, 2001

O1

전국해직언론인원상회복쟁취협의회

O2

O3

O4

O5

1989.02.10~?

O6

O7

공개 / ?

O8

O9

O10

전국해직언론인원상회복쟁취협의회는 10일 오후 3시에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을 정하는 한편, 윤활식, 정동익씨 등 7명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회칙에서 '75년과 80년의 언론사 해직자들의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쟁취해 자유언론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89. 2.11)

O11

O12

윤활식(尹活植), 정동익(鄭東益)

O13

O14

『조선일보』, 1989. 2.11

O1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 (☞ <사건편>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 사건 참조)

O2

인(부)노회 (연구팀 의견: 박원순, 김선수 변호사의 자료의 경우 ‘인노회’라고 되어 있으나, 당시 불리  
위졌던 것으로 하면 약칭을 ‘인부노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O3

O4

전민련, 전국노운협

O5

89.02.11 (구속일자)

O6

인천, 부천

O7

비공개 / 비합법 (검찰 발표) (관련자측-공개 / 합법)

O8

O9

<회칙>

첫째, 노동형제와 조국을 위해 의로운 삶을 살며 상부상조하고 노동자로서 올바른 품성을 함양한다

둘째, 회원 나아가 노동형제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선다

셋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모든 노동단체와 단결하며 각계 각층의 민주단체와 협력한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연도미상, <http://www.yangsimisu.or.kr>, pp15~16)

O10

서울지방검찰청은 1989년 2월 11일 손형민 등 6명에 대하여 “이들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  
념으로 하는 지하조직인 인(부)노회를 결성하여 각종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최근에는 진두환·이  
순자 부부 구속촉구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 백영엽 판사는 “인(부)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단순  
한 노동운동단체로 보이며 이들이 제작한 유인물도 이적표현물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을 목적  
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윤종현, “집회·결사의 자유”, 대한변호  
사협회, 『인권보고서 제4집 1989년도』, 역사비평사, 1990., 107쪽) 그러나 검찰은 2월 17일 다시  
손형민, 이동진, 신정길, 이성우, 고남석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조희  
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293~294)

O11

치안본부는 나아가 1989년 4월 3일 인(부)노회와 관련하여 강병권, 한기성, 송명진 등 3명을 『고추잠  
자리』, 『김일성선집』 등의 소지 혐의로 구속하였고, 1989년 4월 최동을 구속했고, 1989년 6월 5  
일 안재환 인(부)노회 회장을 구속했다.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 인(부)노회측에서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민주노동운동단체로  
전민련, 전국노운협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회칙상 인(부)노회의 목적은 “첫째, 노동형  
제와 조국을 위해 의로운 삶을 살며 상부상조하고 노동자로서 올바른 품성을 함양한다, 둘째  
회원 나아가 노동형제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선다, 셋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모든 노동단체와 단결하며 각계 각층의 민

주단체와 협력한다”로 되어 있다. 인(부)노회가 실제로 해온 활동은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원, 노동법개정을 요구하는 유인물 작성, 광주항쟁기념순례단 참여, 노동자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송년대잔치 개최,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유인물 작성 등이다.

인(부)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손형민에 대한 상고사건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77). 위 판결의 요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최동은 조사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문과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고 출소 후에도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문후유증으로 1990. 8. 7.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에서 시너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였다(박찬운,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편, 『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5집』, 1991., 60-61쪽)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연도미상, <http://www.yangsimso.or.kr>, pp15~16)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293~294)

O12

손형민, 강병권, 한기성, 송명진, 최동, 안제환(회장)

O13

O14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연도미상, <http://www.yangsimso.or.kr>

## <연구팀 자료>

### \* 최동:

#### □ 항거대상

○ 노동운동을 탄압한 노태우 정권.

-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좌익운동으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1988. 12. 23.) 결과와 법무부 장관의 ‘전국검사장회의 지시사항’(동년 12. 26.)을 집약하여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동년 12. 28.)하였음.

- 대통령 주재 공안관계장관회의(1989. 3. 22.)와 공안합동수사본부 발족(1989. 4. 3.), 총리 주재 ‘노동대책관계장관회의’(1989. 4. 14.)를 개최하여 강경대응방침을 전하였음.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관련기관의 가혹한 수사관행.

#### □ 항거행위

○ 관련인 망 최 동(1960. 8. 14. 생, 1990. 8. 7. 망)은 <심사자료 I>의 ‘가’, ‘나’호 기재사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

- 관련자가 가입했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라는 노동운동단체의 결성 목적은 ‘자주, 민주, 통일’의 이념아래 각계 민중과 연대하여 남북통일과 반독재 민주화에 힘쓰기 위한 데 두고 있음.

- 1988년 결성 이후 1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 지원, 노동약법 개폐운동에의 참여 등 공개적, 체제내적 활동을 해 왔음.

○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 사건 관련자 1차 구속 당시 서울형사지법 백영엽 판사는 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적단체라기보다는 단순한 노동운동단체로 보이며 이들이 제작한 유인물도 이적표현물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음 (윤종현, 집회·결사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편 『인권보고서』, 1990, 107쪽).
-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 2』는 러시아혁명을 정리한 역사서에 불과함. 공식 출간된 책을 관련자가 단순히 소지, 탐독한 것이 유죄판결의 증거가 되었음.
  - 민주화에 기여여부
    - 관련자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 민주화운동과 피해(질병후 사망)와의 관련성
    - 관련자는 관련기관에서 강압 수사를 받다가 2회나 자해하였으며, 심리적 압박과 신체적 충격을 받음으로써 질병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 (동아일보 1990. 8. 8.자).
- 관련자는 1심 재판 이후(1989. 9.) 정신과위원회에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김병후정신과의원 확인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아 민주화운동과 피해사실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됨(한겨레신문 1990. 9. 8.자).

O1

인천여성노동자회

O2

인여노

O3

O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O5

1989.02.25~현재

O6

인천

O7

공개 / ?

O8

O9

O10

1970년대 동일방직, 삼원섬유, 반도상사 민주노조 사수 여성노동자투쟁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조직적인 여성노동자운동을 시작한 것은 1988년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을 개원하면서부터였다. 지역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선선, 기술훈련과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해 온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은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요구에 의해 1989년 2월 25일 ‘인천여성노동자회’로 이름을 바꿔 조직적인 발전을 일궈냈다.(『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인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울아카데미, 2001, pp.323~324)

O11

지역 내 여성노동자의식의 발전과 여성사업장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인천 여성노동자회는 그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여성노동자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착을 위한 회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1년 현재 60여명의 회원들이 현장분과, 부인분과, 탁아분과, 단체회원 모임 속에서 사업장, 지역, 탁아소, 공부방, 운동단체 등 자신이 처한 현장을 기반으로 여성노동자운동의 발전을 위한 모색과 실천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인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울아카데미, 2001, p.324)

O12

김지선(회장)

O13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O14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인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울아카데미, 2001

O1

전국시설관리노조협의회

O2

O3

O4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O5

1989.02~1993.07 (전국시설관리노조연합)

O6

O7

공개 / 임의단체

O8

O9

O10

1989년 2월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직영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단위노조 12개사(조합원 2,000여명)가 불법용역 철폐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로 전국시설관리노조협의회를 건설하였다.(『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1

전국시설관리노조협의회는 본격적인 전국적 조직의 활성화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자본측의 끊임없는 협박과 방해 속에서 참가조직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대기 발령 등으로 나왔으나 2,000여명의 조합원대중과의 대투쟁 속에서 조직을 지켜냈다. 그동안 TV매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불법용역 사업주들을 고발하고 국회국정감사 등을 이용해 중간착취의 실태를 폭로하였으나 지역 또는 업종들의 이해 부족과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해서 연대사업의 큰 애로를 느꼈으나 93년 7월 연맹 결성을 목표로 한 경인지역 18개노조 지방조직 7개 등 총 25개 노조(조합원 7,000여명)로 구성된 전국시설관리노조연합을 출범하게 된다.

O12

O13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합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

부천시역 임금인상 및 노동법개정투쟁본부 (☞ <단체편> 부천시역노동조합협의회(부노협) 참조)

O2

O3

O4

O5

1989.02~?

O6

부천

O7

공개 / ?

O8

O9

O10

1989년 들어 조직논쟁과 함께 임투 준비 체계를 놓고 의견대립이 확대되어 갔다. 먼저 ‘부금노련 준비위’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노총과의 역할분담 하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고, ‘부노협’을 주장했던 곳에서는 ‘임금인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러한 의견대립이 쉽게 결론지워지지 않자 양자 모두는 지역 연대조직을 1989년 임금인상투쟁을 치른 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2월에 ‘부천시역 임금인상투쟁본부(이하 ‘투본’, 본부장 한경석 신광전자 위원장)’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부천시역 최초의 실질적인 연대기구이자 부노협의 전신인 ‘투본’이 탄생한 것이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4)

O11

‘투본’은 급조된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조결성 지원, 파업지원 활동을 전개했으며, 임투 속보와 ‘부천시역 임금인상 기초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투본’은 1989년 임투를 거치면서 123개의 신규노조 결성을 지원했음은 물론이고, 기존 노조들의 임투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신규사업장의 확대와 투쟁 승리의 여파를 타고 4월9일, 임투승리 결의대회가 원천봉쇄된 성심여대에서 부천역으로 옮겨져 강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역 최초의 가두시위가 전개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경석 투본의장과 임동섭 상황실장이 구속되자 13, 14, 15일에 걸쳐 총49개 노조 5,000여 명이 참가한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그 후로 한국피코 투쟁, 5.1절 가두투쟁이 투본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5월12일에는 당시 파업중이던 8개 노조가 ‘임금인상 및 민주노조 사수 공동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급박하게 진행된 투쟁의 과정에서 ‘부노협을 건설하자’라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통일된 슬로건으로 형성되어 갔다.(『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4)

부천시역 임금인상 및 노동법개정투쟁본부 산하 50개 노조중 노사분규로 이미 파업중인 7개 노조를 제외한 43개 노조 5천여 노조원들은 15일 하룻동안 시한부 동맹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 노조원중 2천5백여명은 오전 8시 출근과 동시에 노조별로 동맹파업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전 10시 부천시중구내동 대흥기계와 원미동 (주) 대아 등 3곳에 모여 구속된 투쟁본부장 한경석기(28. 신광전자 노조위원장)와 상황실장 임동섭씨(34, 전 원방노조위원장) 등 2명의 즉각 석방과 지난 9일 부천역부근 시위때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한 노동자 6명에 대한 치료비 보상 등 3개항 등을 요구하여 항의 농성을 벌였다.

또 이들은 오후 2시 부천역 광장에서 갖기로 한 경찰폭력규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가두진출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시내 곳곳에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오후 7시까지 산발시위를 벌였다. (『조선일보』, 1989. 4.16)

O12

한경석(韓景錫, 투쟁본부장, 신광전자 노조위원장), 임동섭(林東燮, 상황실장, 전 원방노조위원장)

O14

『조선일보』, 1989. 4.16

O1

민족해방활동가조직 (☞ <사건편> 민족해방활동가조직 사건 참조)

O2

O3

백두, 천리길, 진달래, 다크호스

O4

O5

1989.02.~1991.06.05

O6

서울

O7

비공개 / 비합법

O8

중앙상임위원회 - 각 단과별 조직, 사상서클

O9

O10

치안본부 대공3부는 1991년 6월 5일 '주체사상에 따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종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건설된 이른바 「민족해방 활동가조직」구성원 18명을 붙잡아 방민수씨(24.서울대 정치학과 86학번)등 12명을 구속하고 김용호씨(서울대 사회학과 85학번)등 현역 군인 6명은 국군기무사로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1991. 6. 6)

O11

경찰은 방씨 등은 모두 서울대학교 재학생이거나 제적, 휴학, 졸업생들로서 89년 2월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을 결성한 뒤 「백두」, 「천리길」, 「진달래」, 「다크호스」등 지하 사상서클을 만들어 사상무장 학습을 실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들은 중앙조직인 '중앙상임위원회' 밑에 각 단과대학별로 조직을 두고 '주체형의 활동가가 되자'는 등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했으며 각종 교내의 시위를 주도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1. 6. 6)

O12

방민수(方敏秀, 서울대 정치학과 86학번), 김용호(金容鎬, 서울대 사회학과 85학번)

O13

O14

「조선일보」, 1991. 6. 6

<연구팀 의견: 관련 당사자 증언을 들어볼 필요>

O1

전국농민운동연합 (☞ <단체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참조)

O2

전농연

O3

O4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O5

1989.03.01~현재

O6

O7

공개 / ?

O8

대의원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파견하는 대의원과 전국의장단, 감사, 사무처장, 정책기획실장, 각 국장 등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중앙상임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사무처(총무국, 조직국, 교육국, 조사국, 선전국, 투쟁국, 연대사업국, 협동사업국)(『전국농민운동연합 제2차 대의원총회 자료집』, 전국농민운동연합, 1989, pp.34~38)

O9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대회 결의문> : 1. 농민생존권투쟁과 법·제도개선투쟁을 통해 다양한 대중투쟁전선을 확장하여 반미반독재투쟁으로 집중시키자! 1. 군·도단위의 자주적 농민대중조직 건설과 통일단결에 총력을 경주하여 전국단일조직 건설을 앞당기자! 1. 자주적 민주농협쟁취·수입개방저지 및 농산물제값받기·토지투쟁을 중점과제로, 수세폐지·부채해결·의료보험개혁 등 일상과제와 결합하고 집중시키자! 또한 계기적 과제로 지자제선거를 통하여 농민의 정치의식을 고취하고 지위와 역할을 드높이자! 1. 농축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민은 생존의 갈림길에 와 있다. 제국주의의 모순을 최종적으로 떠맡고 있는 우리농민들의 처지는 농촌이 강력한 반제투쟁의 근거지로 될 수밖에 없다. 수입개방저지 등 농민생존권투쟁을 농민대중의 자주의식 고취와 반미자주화투쟁의 내용으로 발전시키자! 핵무기와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단호히 분쇄하자! 휴전협정을 조속히 평화협정으로! 1. 천인공노할 광주학살, 5공비리의 공범자요 상속자인 노태우독재정권의 반농민적 실태를 1천만농민의 위대한 힘으로 심판하여 공세기에 있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또한 그동안 농민을 암살하기 위해 독재의 무기로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집시법, 농민관계악법, 노동악법, 교육법 등 모든 악법을 개정, 철폐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자!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농민, 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테러와 대량구속 등 폭력적 탄압에 결연히 맞서 싸우고 모든 구속농민, 노동자의 석방을 위해 투쟁하자! 1. 오늘날 우리 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의 고통의 뿌리는 분단세력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농민생존권투쟁을 남북농민교류, 반핵군축평화운동, 조국통일촉진투쟁과 직결하여 농민대중이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서도록 투쟁하자! 1. 우리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 생활임금, 8시간노동제쟁취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연대해나갈 것이다. 1. 모든 민족민주세력의 자랑스런 연합체인 전민련의 깃발아래 총단결하여 자주민주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천만농민과 함께 단결, 투쟁하자!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pp110)

O10 85년 이후 농민운동의 자주적 대중조직화가 진전되고, 87, 88년을 거쳐 수세폐지 투쟁, 고추제값

받기투쟁, 범농민적인 농축산물수입저지투쟁 등 수십만의 농민대중이 투쟁으로 진출하는 성과에 힘입어 농민운동의 전국적 조직통일이 매우 중대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88년 중반부터 각도 단위를 중심으로 군단위 농민운동의 구심과 연대기반이 형성되면서 11월부터 농민운동의 조직통일사업이 본격적으로 추동되었고 89년 2월 13일 여의도 농민대회를 거치면서 솟구치는 농민대중의 투쟁열기를 조직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농민운동의 조직통일은 더욱더 절박한 과제로 놓여지게 되었다. 농민운동의 실질적인 조직통일을 위해서는 1군1조직화의 원칙에 따라 단일한 대중조직으로서의 군농민회가 통일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따라 군조직을 하나로 통일하고 농민운동의 전국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과도적 연합체로서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전국 1백5개 군농민회(준비위원회) 중 85개 군조직이 '전농연'에 가입했으며, '전국농민협회'와 일부 독자적인 군조직이 가입을 보류하거나 불참하였다(전국 군숫자 1백37개군).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p314) 농산물 제값받기투쟁과 수세거부투쟁의 성과를 결집한 농민운동은 해방 직후의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이후 최대의 농민조직인 전농연의 결성을 이룩했다. 전농연의 결성은 1989년 2월 13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대한 정권의 왜곡과 탄압에 대한 반영이기도 했다.

전농연의 결성은 2차례에 걸친 전국농민운동대표자회의와 6차례에 걸친 준비소위원회 회의, 2차례에 걸친 준비위원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농연의 결성은 논의의 과정만을 거쳐 이룩된 것은 아니다. 85년 소몰이 시위부터 시작되어 작년 9·10월 농산물제값받기투쟁과 수세거부투쟁 그리고 농민운동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유감없이 과시된 2월 13일 여의도 농민투쟁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투쟁의 과정을 통하여 전농연은 결성된 것이다. 전농연은 88개군의 참가와 7개군의 참관으로 이루어졌다. 3월 1일의 결성대회에는 59개군의 대표자와 참관 6개군이 참석했다. 60년대 이후 농민운동을 주도해왔던 한국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총연합이 참여하였다. (『월간 흐름』, 1989. 4, 형성사)

관계자들은 전농연의 탄생이 농민들의 정치적인 힘을 대폭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숫자만 많을 뿐 지역적인 분산으로 결집력이 약한데다, 농경문화에서 비롯되는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집단으로서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의 한계가 전농연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극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접들은 지난 13일의 여의도농민시위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당시 집회 및 시위가 발족을 앞둔 전농연 조직의 '파워테스트'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전농연은 앞으로 가농 기관지 「농민의 소리」와 기농 기관지 「농민신문」을 통합, 「전국농민연합신문」(가칭)을 창간하고 농민지도자를 선정, 훈련함으로써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농연은 자주민주통일을 3개 기본 노선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주요사업과제로는 - 농민권익의 실현 - 생존권문제해결을 위한 농업정책대안 제시 - 민주화, 통일운동에의 적극 참여 등을 설정해놓고 있다. (『조선일보』, 1989. 3. 2)

O11 전농연 출범 이후 각 군농민회의 조직통일사업은 급진전되어 단일조직으로서의 자주적 군농민회가 광범위하게 조직화되었다. 89년부터 농민운동은 '전농연'의 결성으로 통일적인 전국적 대오와 전국단위의 농민운동조직으로서의 조직운동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 전국농민협회 등 불참조직과의 명실상부한 조직적 통일과 전국적 단일조직화의 과제를 남겨놓게 되었다. (『월간 흐름』, 1989. 4, 형성사) 주요한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989. 3.4 공화당사에서 통합일원화 의료보험 쟁취를 위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89. 3.10~15(장날 선택) 기간에는 '89영농발대식을 군 단위로 개최하였다. 또한 1989. 5.2~3일에는 수입저지와 제값받기 긴급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대전 농민

회관에서 전국 44개군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정명채·민상기·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p.65)

O12 윤정석(초대 의장), 정광훈(부의장), 나상기(사무국장),

O13

O14

『월간 흐름』1989. 4, 형성사 /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 『전국농민운동 연합 제2차 대의원총회 자료집』, 전국농민운동연합, 1989 /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정명채·민상기·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조선일보』, 1989. 3. 2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선언 / 결의문』(89.03.01), 108~110쪽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농연” 통일문제관련 성명』(89.04.12), 111~113쪽

O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O2

한철연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9.03.25~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5명의 한국철학계 원로는 고문으로 위촉하고 그 밑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의결기구로 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 학술국, 교육국, 사무국의 집행부서와 기관지 편집을 맡아 보는 편집위원회가 있다. 학술국은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곳이며, 교육국은 대내적인 회원 교육과 대외적인 공개강좌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사무국은 학회 전체의 재정과 회원 관리 등의 일을 맡는다. 따라서 학회의 주된 활동은 학술국 중심의 연구와 교육국 중심의 교육활동이다.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학원 재학중인 경우는 일정 기간 신입회원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육부 과정을 마친 다음 일정 기간 분과활동을 거쳐 정해진 연구성과를 제출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연구원이 된다. 하지만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인 경우는 추천과 심의를 거쳐 바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연구원은 학회가 지원하는 연구비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이밖에도 한철연에서는 자료 회원이라는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료 회원은 정회원으로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한철연이 발행하는 각종 자료나 학술지 등을 구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술운동은 크게 분과연구와 학술회의 및 학술지를 통해 이루어진다.(『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72)

O9

O10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창립된 것은 1989년 3월이었으며 창립 목적은 철학 연구를 통해 과학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이를 확산 심화시킴으로써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다. 창립의 모체는 1980년대 초부터 싹텄다. 당시 한국은 오랜 시간 군부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모순이 심화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 변혁을 위한 다양한 철학적 모색들이 일어났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2~30대 소장 학자들의 모임인 사회철학연구실과 해결철학연구회가 그런 작업에 앞장을 서고 있었다. 바로 이 두 단체가 하나로 합치고 여기에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보태면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를 창립해 내었다. 이같은 연원 때문에 연구의 폭이 많이 넓어졌어도, 사회철학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뒤 1996년 7월 더 나은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75)

O11

학술운동은 크게 부과연구화 학술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술회의는 봄, 가을로 개최하는 심포지움과 월례발표회가 있으며, 기관지 『시대와 철학』을 발간하였다. 한철연의 연구성과로는 『철학대사전』, 『철학소사전』, 『삶, 사회 그리고 과학』, 『삶과 철학』, 『우리들의 동양철학』, 『강좌한국철학』,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중국의학과 철학』(번역), 『현대중국의 모색』(편역), 『페레스트로이카 정론』, 『현대사회와 마르크스주의 철학』, 『인간의 철학적 이해』, 『현대 신유학 연구』, 『이야기한국철학』, 『철학의 명저20』, 『현대철학의 흐름』 등이 있고, 이 밖에도 북한철학연구, 신과학운동 비판, 사회민주주의 검토 등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이 가운데 여러 책은 전국 대학의 교양과목 교재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한철연 아카데미를 통한 연구강좌와 대중강좌, 기획강좌를 개최하여 왔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75~277)

O12

O13

사회철학연구실, 헤겔철학연구회

O14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O1

인천노동자대학 (☞ <사건편> 인천노동자대학(노대) 사건 참조)

O2

O3

O4

O5

?~?

O6

인천

O7

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인천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대중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296)

O11

인천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대중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설립을 주도하다가 이적단체구성죄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노동자대학’ 사무국장 신언직씨를 포함하여 조직부장 박재영, 집행위원 김기나씨가 1990년 3월 22일경 구속되었다. 이들에 대한 ‘이적단체구성죄’의 공소사실의 결론부분은 다음과 같다.

“..... 동 행사를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그 골간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혁명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노동자대중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맑스·레닌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사상무장을 시키고 계급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노동자대학’의 발족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인천지방검찰청 90형 제13886호. 피고인 신언직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장)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입장을 인식·교육하는 일이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비약되어 탄압을 받았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296~297)

O12

신언직(사무국장), 박재영(조직부장), 김기나(집행위원)

O13

O14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연구팀 자료>

\* 신언직:

사안 3. 노동자대학 설립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

항거대상

○ 전두환 정권

□ 항거행위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 1항 위반에 대하여>

- 노동자대학은 노동자대중의 정치교육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교육 기관을 지향하고 있었고 문익환, 백기완, 이호용, 김문수 등 민주화운동 단체 주요 인사들이 자문위원 또는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였음[김민호(1997), 「노동교육운동 연구에 관한 연구-인천 ‘노동자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100쪽 참조].
- 노동자대학설립 제안 신문광고, ‘노동자문화발전 기금을 위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 공연, 실무진의 공개모집, 노동운동가 초청 강연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체제’를 분쇄하자라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배포, 공개교양강좌, 교육 내용 및 교과목 등을 소개하는 노동자 대학 신문 발간, 신문 등을 통한 학생 공개모집 등 공개적 활동을 하였음,
- 노동자대학의 교육 지표는 ‘독재와 분단을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변혁자로 나선다’ 등이었음.
- 교재 내용중 “아 세상에 말이지, 자신이 이런 세상, 이런 체제하에서 살고 싶다고 정직한 신념을 표시한다든가, 올바른 사회개조 방법으로서의 자기 계급의 계획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화되고 엄청난 탄압을 당하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까? 국가보안법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야만법이다”라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음.
- 노동자대학의 교과목에는 철학, 경제학, 세계역사, 한국역사, 노동운동, 사회운동론, 문화 등이 있었음.
- 압수물에는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노동해방문학』, 『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 『민족현실과 문학운동』, 『마르크스레닌주의민족이론』 등 국내에서 출간된 인쇄물이 있었음.

□ 민주화를 위한 기여 여부

○ 신청인은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 전과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회복,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연구팀 자료>

\* 양석중:

<사안> 1989. 12. 19. 노동자대학(인천 부평 소재)강연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에 항의 중 입은 상의의 건.

□ 항거 대상

○ 노태우 정권

□ 항거 행위

- 신청인 양석중(1964. 7. 15. 생)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4년 재학시 인천시 북구 부평5동 소재 노동자대학(교장 백기완)의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 「심사자료 I」의 ‘가’항과 ‘나’항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임시강연회(연사 김문수: 현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에 항의함.

□ 민주화에 기여 여부

○ 신청인은 노동자대학 설립과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민주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노동기본권 회복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됨.

□ 민주화운동과 피해(상이)의 관련 여부

- 신청인은 위 항의에 대한 연행과정에서 경찰버스 안에서 집단구타를 당해 척추 및 갈비뼈가 골절 되었다고 주장함.
- 「인천신문」(1989. 12. 20.) 기사에 의하면 “19일 하오 9시 30분 인천 노동자대학에서 노동자, 학생 등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문수씨(39, 구 서노련 지도위원)를 초청, 임시강좌를 개최했다. … 이날 강좌는 당초 하오 7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전경 1개 소대 80여명을 동원, 집회장소를 원천봉쇄 … 이날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집회장소로 들어가려던 노대집행위원 양석준씨(26) 등 20여명이 경찰과의 몸싸움과정에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양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는 바 신청인 주장과 상당부분 부합함(기록 제61쪽).
- 당시 진료기록은 병원의 전산화과정에서 모두 폐기되어 남아있지 않으나, 부평 안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점은 카드형의 환자접수증(기록 제71쪽)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인우보증인 이윤정과 김미현 그리고 참고인 박계영과 김기나 등의 진술에서 당시의 일자 등의 기억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신청인이 위 시위와 관련하여 “경찰버스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했으며 허리와 갈비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안병원과 길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함(기록 제31-48쪽).
- 최근의 진료기록으로는 인천의 중앙길병원 발행의 진단서(2000. 10. 21., 기록 제49쪽)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3요추척추분리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척추단순사진상 상기 소견이 보였고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복적인 물리적인 스트레스나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함”으로 되어있음.

< 부정적 측면 >

-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진단서 등의 객관적 진료기록이 없음.

□ 기타 검토사항

- 신청인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1989. 12. 23. 부평경찰서 서장 김수환을 폭행, 직권남용, 독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고소장에 당시의 진단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록에 첨부한 바와 같은 「사건처분결과증명원」(기록 제72-73쪽)에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직권남용감금”의 죄명에 대해 “각 혐의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 참고사항

- 위 노동자 대학의 임시강연회는 1989. 11. 7.부터 총 7~8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하오에 진행되었는데, 매회 경찰의 원천봉쇄와 이를 뚫으려는 노동자·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검거·구속 및 고발과 고소가 있었음(「한겨레신문」, 1989. 11. 4., 동년 동월 10일, 11일, 17일, 동년 12월 8일, 28일 자, 기록 제63-69쪽 참조).

O1

한국교육연구소

O2

한교연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9.04~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한국교육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변혁적 관점에서 교육연구와 실천을 하고자 하는 발기인의 뜻을 모아 1989년 4월 창립되었다. 한국교육연구소는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자생적인 교육이론의 정립과 교육현장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민주교육의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24~230)

O11

한국교육연구소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연구자들과 초·중·고교 및 교육운동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실천가들이 결합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실천적인 교육학을 정립하는데 기여를 해오고 있다. 한국교육연구소를 이끌어온 인사들의 경우 그야말로 한국교육학자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망라되어 활동했고, 현장교사와 학부모들도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운동단체의 핵심적인 전문가들이 연구소의 주체를 이루거나 참여해왔다. 그래서 한국교육연구소는 공식적인 학계나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성과와 관계없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이론 측면에서는 한국교육학회의 보수성에 쌍벽을 이루는 학회의 역할을 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연구소는 전교조를 비롯한 실천적인 교육운동 단체들을 도와서 현장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이 이만큼 추진되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 활동 내용을 보면 매년 2~3회씩 학술대회 혹은 세미나를 개최해왔고, 연 2회의 학술지 「한국교육연구」를 발간했으며, 중간에 상당히 어려웠던 기간을 빼면 거의 매월 연구세미나를 열고 분과활동을 전개해왔다. 1998년 9월 교육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공인된 활동을 시작했다.

\* 대표적인 출판물(1989~1993) : 농촌은 교사에게 무엇인가(자료집, 1989), 교원노조의 국제적 도향(자료집, 1989), 교육비평(창간호, 푸른나무, 1990), 한국교육의 성격과 교직원 노동조합(푸른나무, 1990), 교육비평(제2호, 우리교육, 1991), 학교는 왜 가난한가(우리교육, 1991), 한국근현대교육사(풀빛, 1993), 참교육 그 이해와 오해(내일을 여는 책, 1993) 외 한국교육연구(1994~) 등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24~230)

O12

<1989~1990> 이사장 : 성래운(광주 경상대 학장) / 이사 : 김경태, 김금수, 김동현, 김성재, 김정환, 김

진균(金晋均), 노향기, 송기숙, 윤영규, 이규환, 이부영(李富瑩), 이석태, 이영희, 이오덕, 이우재(李佑宰), 이재원, 정성은, 정진관, 정해숙, 최용섭 / 소장 : 이규환(이화여대 교수) / 부소장 : 유상덕 / 연구기획실장 : 정진곤(한양대) / 자료실장 : 하정숙(연세대) / 교육출판기획실장 : 윤재철 / 총무 : 이수일

<1991~1993> 이사장 : 성래운 / 이사 : 김정환(고려대 교수), 손병순(영남대 교수), 이규환(이화여대 교수), 이석태(변호사), 임선희(충남대 교수), 최명규 / 소장 : 이규환 / 부소장 : 심성보 / 연구국장 : 강영혜 / 사무국장 : 고재호

O13

O14

학술지 『한국교육연구』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O1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

O2

전일노

O3

O4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O5

1989.04.23~1992.11.07~1998.02.~1999.12.17

O6

O7

공개 / 임의단체->합법

O8

O9

O10

88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건설일용노동자도 자주적인 단결과 권익실현을 위하여 88년 3월 10일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을 선두로 인천, 성남, 성루남부, 광주, 여천, 서산, 대전, 울산, 전주, 포항, 구미, 전기공 등 각 지역에서 건설일용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각 지역의 합법성쟁취 투쟁으로 여천을 시작으로 포항, 구미, 전주, 울산, 광주가 합법성을 쟁취하였다. 합법성 투쟁 과정에서 12명이 구속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각 지역의 투쟁을 성과로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88년 11월에 이르러 그간 분산되어오던 일노 건설을 위한 노력은 한발 나아가, 전국조직의 건설을 내세우게 되면서 마침내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 추진위(전일노추)를 결성하게 되었다.(영등포, 성남, 전기공, 인천, 서산, 남부, 대전, 전주, 울산, 광주, 여천 9개 지역 11개 조직 참여) 88년 12월부터 8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89년 4월 23일 대전카톨릭 농민회관에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전일노련 연혁>

1989. 04. 23. :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약칭 전일노) 창립. 초대 위원장 이규재 선출

1992. 11. 07. : 서울, 인천, 성남, 포항 4개 조직의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로 재편

1994. 11. : 대의원대회 제2기 집행부 구성 위원장 이규재 연임

1994.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에 참가

1995. : 민주노총(준)에 공식 가입

1995. : 민주노총 가맹조직(대의원 파견)

1997. 02. 21. : 제3기 집행부 구성 - 위원장 이규재 재선

1998. 02. : 제3기 2차 대의원대회 개최, 건설노련과의 통합 결의

1998. 11. 20. :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으로 합법성 쟁취

1999. 02. 26. : 제4기 1차 대의원대회 제4기 집행부 구성 - 위원장 공석

1999. 06. : 수도권 지역본부(14개 조직), 충청남권 지역본부(8개 조직)

영남권 지역본부(6개 조직) 등 3개 지역본부 28개 조직으로 구성

1999. 12. 17. : 건설노련과 통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출범

O11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전일노)의 일상활동은 각 지역의 합법성쟁취 투쟁에 지원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분산 고립성을 전일노에 곧게 결속시키는 사업을 강화시켰다. 산재투쟁을 계기로 건설일용노동조합운동을 한단계 끌어올림으로 이 사회의 주인이고,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노동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고용불안, 일자리부족, 일거리부족, 지역이동성이 심해 지역조직에 어려움도 안겨다주었다. 지역조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일조직 형태의 조직규율성과 집행성이 낮은 관계로 조직형태를 조직협의체로 바꾸어 활동하게 되었다. 서울, 인천, 성남, 포항, 구미, 마산창원(참관) 6대 조직이 구심체가 되어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조직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2

O13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

성남지구노동조합총연합

O2

성남노련

O3

O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O5

1989.05.01~?

O6

성남지역

O7

공개 / ?

O8

O9

강령초안 : 1. 우리는 성남지구의 노동자가 하나의 조직으로 정비하에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자주적 노동운동에 앞장서며, 본연합의 모든 활동속에서 노동대중이 주체임을 관철시킨다. 2. 우리는 생계비 쟁취, 노동시간 단축, 기타 노동조건 개선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확보한다. 3. 우리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자본과 권력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탄압에 대해서도 단호히 공동대처한다. 5. 우리는 불의와 억압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모든 노동자,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한다.

O10

88년 6월 광명전기 노조탄압규탄 공동집회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성남노동조합협의회, 노총 성남지구협의회)협의회 공동 주최로 제1회 성남노동자체육대회를 가졌고 이후 함께 노동법개정투쟁에 나서는 등 공동실천을 통해 통일, 단결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이러한 실천과정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성남노동조합협의회와 노총 성남지구협의회의 통합에의 열망을 모아 89년 3월 7일에는 성남노련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준비위가 6차례의 회의를 거듭하며 강령, 규약, 조직체계 초안등을 준비해오는 한편, 3월 15일 「임금인상 완전승리와 노동악법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등 크고 작은 집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며, 노동운동탄압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성남노련 결성의 대중적 토대를 다져왔다. 그 결실로 89년 4월 28일 성남지역의 73개 노동조합 대의원 138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남노련 결성 대의원대회가 열려 규약 확정, 임원단 선출 등을 하였으며, 세계 노동절 100주년을 맞은 5월 1일에는 5천여 노동자의 참여 속에 성남노련 결성대회를 가짐으로써 정식으로 그 출범을 알렸다. (『월간 흐름』, 1989. 6, 형성사)

O11

성노협과 시험을 발전적으로 해산한 성남노련 결의대회가 5월 1일 열리고 89년 5월 3일 노총 성남시협의회가 재건되었다. 이후 성남노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간부 40여명이 구속되고 간부의 공백은 소속노조의 구심을 확고히 모으지 못하고 통합 당시의 열기를 상실해 가는 과정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많이 줄어들고 흩어진 조직을 노련으로 집중시킬 것을 주요한 과제로 하면서 90년 10월 성남노련 2기가 출범하였다. 91년 임투와 5월

투쟁을 통해 노련은 탄압의 공백을 딛고 조직력을 일정정도 복원해 내었고 분임토의의 실천 등으로 조합원 중심의 노조활동에 역점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91년 10월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에서는 사상 최초로 조합원 직선제로 제3기가 출범하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 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2

손길수(초대의장, OPC노조위원장), 오길성(4기 의장), 박연수(4기 부의장), 이강호(4기 회계감사), 오세현(4기 사무처장)

O13

성남지역노동조합협의회, 성남시협의회

O14

『월간 흐름』, 1989. 6, 형성사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 <연구팀 자료>

\* 배대열:

\* <사안> 1989. 5. 1. 「성노련 결성선포 겸 세계노동절 100주년기념 및 노동운동탄압분쇄결의 대회」에 참가·시위중 총기탈취의 건.

□ 항거 대상

< 긍정적 측면 >

○ 노태우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

- 1988년에는 4·26 총선 이후 조성된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고, 청문회가 도입되는 등 의회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이 5공화국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었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5공청산작업(광주청문회, 5공비리청문회)’이 진행되는 등 일정한 한계 속에서도 사회의 민주화 과제들이 수행되었음.
- 그러나 5공청산 과정에서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및 5공 세력의 비리 등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노태우 정권의 정통성은 약화되었음. 이에 노태우 정권은 1988년 말부터 시작하여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을 계기로 물리력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으로 회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5공청산작업을 회피함.
- 1988년 12월 28일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하여 “최근 범질서 문란현상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에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탈법적·파괴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하고, “각종 이익집단들의 폭력적인 집단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함 (대한변호사협회편, 『인권보고서』 제4집, 역사비평사, 1990, 112쪽)으로써 각종시위 및 노동쟁의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방침을 밝힘.
- 1989년 3월 22일 공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폭력행위 강경대응 지시가 내려진 직후, 조종석 당시 치안본부장은 시·도 경찰국장회의에서 ‘과출소 화염병 투척자에 대한 발포’ 및 ‘경찰 기본무기 M16으로의 전환’ 등을 지시함 (『한겨레신문』, 1989. 3. 23).
- 1989. 4. 3. 국가안전기획부 주도하에 검찰, 경찰, 노동부, 보안사 등으로 구성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키고, 산하에 12개 지역 공안합수부를 설치함.

-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 ‘노동대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1989. 4. 14.) 노동현장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투와 개입을 막고 노동자와 재야·학생간의 연계활동을 차단하며, 국가기간산업이나 주요 전략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경우 군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함 (위 『인권보고서』, 145쪽).
- 1988년 12월 29일 노동관계 당정협의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의함. 이어 국회에서 통과한 노동관계법에 대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 (1989. 3. 24.).
- 1989. 3.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여야 합의로, 노동조합법은 야3당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
-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던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체 수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완화하고, 사용자 의 직장폐쇄권을 강화하며, 쟁의행위시 냉각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었고,
- 야3당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자개입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음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302-306쪽 참조).
-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노동자 파업현장, 농민시위, 학생시위 등은 공권력에 의해 강경진압되었고, 시위우려가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불허조치가 내려지는 등 당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상당히 제약되는 상황이었음.
- 1989. 1. 2. 풍산금속, 같은 해 3. 16. 서울 지하철, 같은 해 3. 30.~5. 5. 현대중공업(주), 같은 해 4. 14. 동원산업, 기영산업, 같은 해 4. 19. (주)우일, 영풍공업사, 새론기계공업(주), (주)대흥로크, 같은 해 4. 22. 삼양유지사료, 같은 해 4. 27. 유한전자 등에 잇달아 공권력이 투입됨 (위 『인권보고서』, 137~138쪽).
- 1989년 4월 30일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노동절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찰의 사전불허조치로 대회장이 원천봉쇄됨.

□ 항거 행위

< 긍정적 측면 >

- 신청인 배대열(1966. 7. 13. 생)은 (주)샤니케의 노동조합원으로서 1989. 5. 1. 「성남지구노동조합연합회(약칭 성노련)」 주최의 「성노련결성선포 겸 세계노동절 100주년기념 및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노조탄압 중지하라, 민주노조 사수하자, 구속동지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음.
- \* 1989년 노동절(5월 1일) 행사는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 노동자대회 위원회」(대회의장: 서울 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단병호, 집행위원장: 마창지역노동조합총연합회 의장 이홍석, 고문단: 이소선, 백기완, 문익환, 박형규, 계훈제, 강희남, 권처홍, 송건호 등) 주관으로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원천봉쇄로 연세대에서 규모가 축소되어 진행되었으며, 당시 주요 이슈는 ‘전국적인 노동운동 조직의 건설과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항거’로서 주장되어진 중심 구호는 “천만노동자 총단결로 전노협을 건설하자”, “천만노동자 연대투쟁으로 노조탄압 분쇄하자” 등이었음. 한편 성남지역에서는 이날 13:00부터 각 노조별 총회투쟁을 전개하고, 18:00부터 약 5~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노련 결성 선포대회를 가졌음(『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80-1989 백서: 01 기나긴 어둠을 찢어 버리고』, 제514~531쪽).

< 부정적 측면 >

- 위 시위 중 출동한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 1정과 실탄 6발을 빼앗았다가 약 10일 후 돌려줌.

O1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 건설을 위한 서울지역민주주의학생연맹

O2

서민학련

O3

O4

O5

1989.05.16~

O6

O7

공개

O8

O9

O10

1989년 5월 16일 오후 2시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에 모여 전국 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 건설을 위한 서울지역민주주의학생연맹(서민학련) 발대식을 가진 10여개대의 학생 4백여명은 집회를 마친 오후 4시 50분쯤부터 교문앞으로 나가 화염병과 돌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집회에서 ‘동의대사태 후 전대협이 비폭력평화시위방침을 발표한 것은 파쇼폭력정권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적 투쟁마저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치투쟁을 벌어나갈 것’을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운동권내 소수파인 ‘통일민주학생연맹(통민학련)’, ‘민주화학생연합(민학련)’ 소속 학생들로 두 조직을 통합, 기존학생운동을 주도해온 전대협의 노선에서 벗어나 반합법적인 투쟁을 이끌어갈 전민학련을 결성키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정권은 노동자와 학생등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일삼으면서 유독 학생들의 화염병사용만을 모든 폭력의 근원인양 몰아붙임으로써 전체민중세력의 민주화 투쟁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나가려다 저지하는 경찰에 돌과 화염병 수백개를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초반에는 최루탄을 쏘지 않고 학생들의 교문밖 진출을 저지하다 시위가 과격해지자 최루탄을 쏘며 강제해산했다. (『조선일보』, 1989. 5.17)

학생회가 대중자치조직의 고유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대중적 정치투쟁의 활성화를 이루는데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므로, 일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쟁을 기동력 있게 담보하고 학생회와 상호보충적 관계를 이루는 진보적 학생대중정치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1989년 5월에 건설(『한국사회운동사』, 조희연, 죽산, 1990, p.271)

O11

O12

O13

통일민주학생연맹, 민주화학생연맹

O14

『조선일보』, 1989. 5.17 / 『한국사회운동사』, 조희연, 죽산, 1990

O1

전국교직원노동조합(Korean Teacher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 <사건편>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철회 요구 구로고생 시위 및 류호철 투신부상사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결성대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결성대회 / 부당징계 철회 및 전교조 합법성 쟁취 범국민결의대회 / 부당징계 철회 및 전교조 사수를 위한 전교조 120개 지회 단식농성 결단식 /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사건 참조)

O2

전교조

O3

O4

전노협지원공대위, 국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O5

1989.05.28~현재

O6

O7

공개 / 1989.05.28~1999.06.30 범위 / 1999.07.01~ 합법

O8

본부-지부-지회-분회로 구성되어 있다. 의결기구로는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이 있어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제적으로 집행한다. 지부별로도 자체사업을 위한 의결과 집행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지부대의원대회, 지부집행위원회), 급변(유치원·초등), 설립자별(사립), 직능별(참교육실천위원회), 영역별(여성), 특별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위해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산하기구를 설치, 각종 상담소, 연구소, 신문사, 출판사, 교과모임협의회, 기타 기구 등이 있다.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장기평, 형성사, 1989, pp.195~202)

O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

겨레의 교육 성업을 수임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이다. 일제 강점기의 민족교육이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일꾼을 길러내는 과업을 담당해야 했듯이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우리 교직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하여 국민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진실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독재권력이 강요한 사이버 교육은 교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고 교단의 존경받는 스승은 더이상 발붙일 수 없이 지식판매원, 입시기술자로 내몰렸다.

누가 우리더러 스승이라 부르는가?

역대 독재정권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악용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민족과 역사앞에서 제 구실을 잃어 버렸다. 가혹한 입시 경쟁교육에 찌든 학생들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고 있으며, 학부모는 출세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를 강요 받았다.

이러한 교육모순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학부모에게 위임받아 책임져야 할 우리 교직원들로 하여금 교육 민주화의 대장정으로 떨쳐 일어 나서도록 만들었다. 교육민주화를 향한 대장정은 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의 물결을 헤치고 4.19 교원노조 선배들의 목숨을 건 눈물겨운 투쟁을 시발로 5.10 교육민주화 선언,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전국교사협의회 결성으로 이어져 왔다. 작년 교원들의 교육법 개정의 뜨거웠던 열기는 올해 말기인 대회로 이어져 드디어 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의 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교원 스스로 민주주의의 실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교실이다. 이 사회의 민주화가 교육의 민주화에서 비롯됨을 아는 우리 40만 교직원은 반민주적인 교육제도와 학생과 교사의 참 삶을 파괴하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더이상 민주화를 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직원이 교육 민주화 운동의 구체적 실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건설에 앞장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동안 독재정권과 문교부, 대한교련 등 교육 모리배들은 우리의 참 뜻과 순결한 의지를 폭압적으로 왜곡하고 짓밟아 왔다. 역사의 진로를 막으려는 광란의 작태가 춤을 추고 있다.

그러나 보라 ! 민족사의 대의에 서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강철같이 단결한 40만 교직원의 대열은 저간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무위로 돌려 놓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 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 함께 떨쳐일어선 동지여 ! 우리의 사랑스런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

교육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동지여, 전교조의 깃발 아래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

민족교육 만세 ! 민주교육 만세 ! 인간화 교육 만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만세 !

1989.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홈페이지 : <http://www.ktu.or.kr>)

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한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p.218)

O10

1960년 4.19 이후 교원노조 결성이 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된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20년 동안 교사운동과 교육운동은 미비했다. 1970년대 들어서서 양심적 교사들에 의해 비공개적 소모임이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이러한 작은 모임의 활성화가 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을 태동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1980년대 교사운동은 1982년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가 창립되고 1986년까지 21개의 지방 Y중등교육자협의회는 1983년 11월 '상록회사건', 1985년 '민중교육' 사건 해직교사들을 중심으로 민주교육실천협의회가 86년 5월 15일 창립되어 87년 전국교사협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공개적인 교사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7월

부터 진행된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시작한 사학민주화, 교육민주화 투쟁을 바탕으로 교사조직은 전국적인 틀을 모색하였고 9월 27일 한신대에서 민주교육실천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을 창립하였다. 전교협은 교육법개정운동과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갔으나 협의회라는 임의조직 형태로는 더 이상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결정하여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초대위원장 : 윤영규)하였다.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장기평, 형성사, 1989, pp.1~21)

O11

전교조는 결성 후 정권의 극심한 탄압으로 1500여명의 해직이라는 사태가 야기되었고 이후 해직교사 복직투쟁과 전교조 합법화, 교육대개혁 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1993년 5대 집행부 출범 이후 현장 중심 개혁을 중요시하여 일상투쟁을 중심으로 전교조를 지향하며 10월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조건적 복직안을 수용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노사정위를 통해 전교조 합법화가 논의되었으며 2월 6일 전교조를 99년 7월부터 합법화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1999년 7월 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합법화를 이루어내었다.

O12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1대 윤영규, 이부영(李富瑩, 1989), 2대 윤영규, 이부영(1990), 3대 윤영규, 이영희(1991), 4대 이영희, 최교진(1992), 5대 정해숙, 유상덕(1993-1994), 6대 정해숙, 이부영(1995-1996), 7대 김규식, 이수호(1997-1998), 8대 이부영, 김은형(1999-2000)

O13

민주교육실천협의회,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O14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장기평, 형성사, 1989 / 전교조 홈페이지 : <http://www.ktu.or.kr>

<연구팀 자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운동 관련 사건(1986년 5월~ 1998년 2월)

1. 사건개요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은
  - 1982. 1.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약칭 ‘Y교협’) ⇨ 1986. 5. 15. 「민주교육실천협의회」(약칭 ‘민교협’) ⇨ 1987. 9. 27.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교협’)의 발전과정을 거쳐 1989. 5. 28. 결성된 교원 노동조합 단체
  - ‘전교조운동관련사건’은
    - 노태우 정권이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결성된 교직원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교직원노조 간부들을 대거 구속시키고 전교조로부터 탈퇴하지 않은 교원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등을 근거로 해직시킨 사건뿐만 아니라, 전교조 결성 전후(1986. 5. 10. ‘교육민주화선언’ 이후부터 1998. 2. 6.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보장 합의 전까지)로 전교조와 관련되어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한국 교육에 내재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교원을 탄압한 사건

- 전교조 운동의 주된 주장은,
  -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질적 보장,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권 최대한 보장, 교육 자치체의 조속한 실현, 자주적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요구(1986. 5. 10. '교육 민주화선언')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를 추구하고,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 획득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등 참교육 실현(1989. 5. 28. '전교조 강령')을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 전교조 운동에 대해 과거정부는
  - 1989. 3. 16. 6급이하 공무원의 노조 조직과 단체교섭 인정하는 국회개정안(3. 9.)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 ※ 노동법개정안 제8조 제1항: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정공무원·소방공무원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 1989. 5. 25. 전교조 관련 국·공립 교사 37명 직위해제
  - 1989. 8. 7. 교원 파면 143명, 해임 120명, 직권면직 112명, 직위해제 995명 조치시행
  - ※ 1989. 8. 21 총 1,528명이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 사립학교법(제55조, 제58조)위반으로 해직됨.
  - ※ 헌법재판소, 교원 해직 근거 조항인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한 합헌판결(1991. 7. 22. / 1992. 4. 28.)
  - 1994. 3. 10. 교육부,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287명 특별채용 방식으로 임용
- 현 정부에 들어서
  - 1998. 2. 6.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 합법화를 우선 추진 과제로 합의
  - 1999. 1. 6.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으로 합법화 됨.
  - ※ '노조'를 인정하되 노동 3권중 2권(단체행동권 제외)만 인정하는 노동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합의
- 국제적으로 전교조에 대해서
  - 1993. 3. 4. ILO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권고문 채택
  - 1995. 5. 19.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에서 교원노조 허용 권고
  - 1997. 3. 25~27 OECD 및 ILO 전교조 인정 촉구

## 2. 사건의 검토

### 1) 전교조 운동의 전개과정

- 권위주의 체제인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교육이념과 교과내용에서 민주주의 이념보다는 특정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및 반공이념을 최우선시하고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거나 어용화 하고, 학생의 자주적 활동을 약화·위축시키면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치적·관료적 통제가 심화되자 교육의 전문성 등 교직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교육의 자율성 보장요구가 1980년대 후반 전교조 운동으로 나타남.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자주적인 교원단체 설립과 '학교민주화' 요구하는 전교조 운동은 1986. 5. 10. '교육민주화선언'에서 시작하여 1986. 5. 15. 「민교협」, 1987. 9. 27. 「전교협」 결성, 그리고 전교협의 121개 시·군·구별 구성, 단위학교별 평교사회 구성 등의 과

정을 거치면서 발전함.

- 교원들은 교육의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법 체계속에서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1989. 5. 28. 전교조를 결성하고 그 입장을 강령으로 발표
- 이에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을 빌미로 이른바 공안 분위기를 조성한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 결성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 전교조 결성 활동에 적극적인 일부 교사들을 이른바 ‘좌경의식화 교사’라는 매도와 실정법 위반 논리 및 참교육의 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공세, 그리고 주도교사와 일반교사 분리를 통해 전교조의 고립화, 와해 시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전교조 가입과 전교조의 지부, 지회, 분회 결성이 계속 진행되자, 당시 문교부는 전교조 참여교사에 대해 활동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가입교사를 단순히 실정법 위반차원이 아닌 체제수호차원에서 대처함.
  - 1989. 8. 7. 전교조와 관련해 파면 143명, 해임 320명, 직권면직 112명, 미탈퇴자 1,938명 중 995명 직위해제 조치
- 정부의 강경방침 이후 전교조 운동은 7. 9. ‘전교조합법성쟁취를위한범국민대회’ 개최, 방학 후 7. 26부터 8. 5. 까지 명동성당에서 징계철회 요구 단식농성을 실시하며, 타부문 운동과의 연대 모색속에서 국가권력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정치투쟁화 함.
- 특히 ‘공안정국’ 속에서 침체를 벗지 못하던 당시 사회운동권이 ‘전교조사수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됨.
-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994년 3월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전교조 해직 교원이 신규임용의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김대중 정부에 의해 1999년 1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합법화되기 전까지 전교조 운동은 전교조 합법화와 교육차치 및 교육여건 개선,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 교육민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지만, 전교조합법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됨.

## 2) 사건의 성격

### □ 항거대상

#### < 긍정적인 점 >

#### ○ 권위주의적 통치사향

- 첫째, 노태우 정부가 교육의 자유 등 교육기본권을 침해한 점
  - 국가는 교육기본권 신장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권을 독점하고서 학교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민주주의 이념보다는 특정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 등 부당한 간섭과 지나친 국가주도 교육체제 운영으로 초래된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의 왜곡, 국민의 교육참여 제한,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억압, 획일적 교과서 제도 등 권위주의적 교육제도와 교육현실
- ※ 교육기본권은 학습권(인간적 성장발달권)을 중핵으로 하고, 개별 기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제22조)와 교육받을 권리(제31조)를 포괄하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자유권성과 생존권성을 동시에 가짐.
  - 교육기본권 = 모든 인간의 학습의 자유와 권리 + 교육의 자유(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 + 교육평등(차별금지과 기회보장)
- 둘째, 노태우 정부가 침해된 교육기본권 회복 등 교육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원들의 집단적·조

직적 노력의 하나인 교원단체의 노동조합화를 억압한 점.

- 교원 노동 3권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입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를 봉쇄하기 위해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기구를 운영하면서 대량으로 교사의 구속·징계, 경찰 연행, 탈퇴 강요 등으로 전교조 와해 활동을 함.<부록 - 4 : 교원노조 결성 관련 국가개입 현황> 참조)

#### ○ 권위주의적 통치 여부

##### ① 교육의 자유 등 교육기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서

-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함.
- 교육내용 결정구조가 특정집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교육내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어야 하며, 교과서는 특정집단에게 편향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내용이 수록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 교육제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국가나 교사, 국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제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권의 주체로서 국가, 교사, 국민은 교육제도에 대한 통제권을 분점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는 교육권을 독점(학부모, 교사 배제)하고서 권위주의적 정권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획일적 관료조직, 교육과정령 및 국정교과서제도 등을 통해 교사집단과 교육내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교육이념과 목표를 왜곡한 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 교직의 자율성, 교육자치 등), 학생의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진리학습의 자유,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같은 교육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료됨.

##### ② 침해된 교육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억압한 점에 대해서

- 교원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교육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며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은 교육법시행령 제36조 제2항(교육회조직)에 의거 교원의 자주적 단체 결성권을 통제한 점은 국민의 교육기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사료됨.

※ 교육법시행령 제36조 2는 중앙과 각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 단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함

- 교원 단체의 노조화와 관련 다양한 쟁점(<부록 - 2, 3> 참조)에 대해서 전교조 불인정 입장과 전교조 인정 입장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 노조 불인정 입장 : 문교부(1989), 정원식(1990), 이상규(1990), 김상철(1990), 헌법재판소(1991, 1992), 서울민사지방법원(1990) 등

노조 인정 입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1989), 평화민주당(1988), 신인령(1989, 1990), 이원희(1989), 양건(1989), 성낙인(1990), 강경선(1990), 신현직(1990)과 헌법재판소 판결(1991, 1992)의 변정수 의견 등

- 노태우 정부는 1988. 3. 15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서 세계의 거의 모든 민주국가들과 ILO 제87호 조약(1948년 ‘결사의 자유및단체조직의권리보장에관한협약’) 및 ILO-UNESCO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안(1966)’ 등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면직 한 점은 교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사료됨.

※ 1948년 체결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조약(결사의자유및단체조직의권리보장에관한협약)은 “근로자는 사기업 고용이든 공무원이든 직업, 성별, 인종, 신념, 국적의 차별없이 사전

에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설립할 불가침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사립을 막론한 모든 교원들의 노조결성권을 보장.

- 노태우 정권은 근로자 개념이 그 종사직무가 공무원 사무원, 노동의 종류가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 이나를 불문하기 때문에, 교원이 제공하는 노동이 신성하고, 독특하고, 그리고 직무 내용이 공공성을 띤다고 해서 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함.
  - 특히, 사립학교 교원을 공교육 실천자라고 하여 특별권력관계 아래로 포섭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극우적 경향의 국가사회주의적 논리로서(강경선, 1991) 공무원도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면직 처분한 점은 사립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한 노동권 보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결권까지 박탈한 점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침해함(헌법재판소, 1992 ; 변정수 의견).
  -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특별유보조항(헌법 제33조 제2항)은 제1, 2공화국 헌법에는 없었는데 5·16군사쿠데타로 탄생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된 이래 약간씩 표현을 달리하면서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을 거쳐 제6공화국 헌법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부록-1> 참조)으로서 권위주의시대의 잔재(변정수, 1992)이고, 헌법논리필연의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 가운데 제정된 것이 아니고 국회다수파의 당파적 견해인 헌법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데 불과함.
  - 노동조합법 역시 1953년 제정 당시의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군속·경찰관리·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한 1961년 개정 국가공무원법(37조)과 1963년 제정 노동조합법(8조)에서 오늘날과 같은 내용으로 개악됨(신인령, 1989).

< 부정적인 점 >

- 헌법재판소에서 교원의 노동3권 제한 법률이 합헌판결을 받았고 아직 다른 결정이 없는 점
- 1991. 7. 22.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전교조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한 점에 대해서 교원근로의 특수성과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법정주의)을 근거로 하여 교원의 근로3권을 인정하지 않고 합헌판결을 함.
- 또한 1992. 4. 28.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근거로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면직처분한 점에 대해서 헌법 제33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합헌 판결을 함.
  - ※ 헌법재판소는 1989. 9.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면서 정식 발족하여 헌법수호의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 ‘노동쟁의조정법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등을 함.
- 헌법재판소는 상기의 판결에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참조)
-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조합법 8조는 노조결성의 자유설립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그 단서에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밖의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고,
  - 이 조항을 「교육공무원법」에서 준용(제53조 제4항)함으로써 모든 국·공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고, 이를 다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사립학교법 제55조)하여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교원의 노동3권은 부인된다고 함.

- 교원이 법적인 측면에서 노동자이지만 교원은 특수한 근로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같은 근로관계법 적용을 반대하고 교원 노조결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봄
- 교육행위의 본질과 이를 담당하는 교사의 기능과 역할은 “일반 노동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사회적 기능을 갖는 것”이며 “고도의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함.
- 교원의 근로관계의 특수성으로 ㉠ 교육활동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을 비롯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 교원의 근로기본권의 행사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 교원의 사용자들이 교원의 부당·과다한 쟁의행위 내지 요구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함 점, ㉣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는 성질상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결정절차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 특히 교원의 경우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를 적용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규정할 수 있다고 보며
- 「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근로3권에 갈음하여 교원의 신분에 걸맞은 교직원단체인 교육회를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
- 교원들의 교직원단체의 노조화 주장과 노조결성 행위가 교육문제의 해결, 교육의 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다르게 교원 단체의 노동조합화는 교원의 권익신장 등 근로조건향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교육민주화와 관련이 없고, 그리고 교육민주화를 위해 교원노조화가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점.
- 교원의 권익신장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신장으로 직결되지 않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점.
-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중심적인 수혜자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으로, 교육대상자가 가지는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가 존중되어야 함. 교원노조를 결성하여 활동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의 파업 등의 단체행동과 같이 최종적으로는 수업거부, 학교 내외에서의 시위·농성 등을 수반할 경우, 일반기업의 경우와 달리 교원의 사용자는 교육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고,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필요에 따른 제약으로 말미암아 학교시설의 폐쇄라고 하는 대응수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권(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입장

#### □ 항거행위

- 전교조 운동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를 추구하고,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 획득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목적으로
- 첫째, 교육기본권 신장과 관련하여 교육관계법 개정운동, 사립학교 교원지원을 위한 투쟁, 단위학교 운영개선 투쟁, 교사의 권익옹호 투쟁 등을 하고,
- 둘째, 교원의 자주적 단체 구성을 위해 교원노조 결성 및 합법화 투쟁 등을 전개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 5> 참조)
- 교육기본권 신장과 관련하여
- 전교조 운동의 초기 내용은 교육법개정 투쟁과 사립학교의 비리 척결 및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

한 사립학교 투쟁을 지원함.

- 교육관계법 개정운동은 1987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1988년 하반기 ‘교육법개정 투쟁기’를 거쳐 1989년 상반기부터 교직원노조결성 투쟁으로 전환되었고, 전교조 결성이후에는 교육악법·노동악법 철폐로 발전
  - 자주적 교원단체의 결성의 보장, 올바른 교육자치제 실시,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 교원의 신분보장, 교육내용의 자율적 결정, 학생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관계법(헌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개정 공청회와 서명운동 전개
  - 중·고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향상 투쟁은 1984년부터 시작되어 1987년 들어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1987년 6월항쟁이후 사립학교에서 ‘평교협결성’, ‘학생회 직선제 쟁취’, ‘기부금 반환 투쟁’ 등이 전개되자 학교현장 지원방문·시위, 모금운동, 시·도 교육위원회 항의농성 등으로 지원
- 또한 전교조운동은 교육기본권 신장을 위해 단위학교 운영개선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1991년부터 1996. 6월까지 16차례 교육정책에 대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1992. 4. 교육대개혁안을 수립하고 촉구하면서 전개됨.
  - 단위 학교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비민주적 운영을 바로잡고 관료체제 극복을 위해 육성회비 운영 공개, 학년회의 교과회의 부별회의 활성화, 교무회의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주요 학내문제에 대한 평교사 의견수렴 장치 마련, 교내 인사위원회 설치, 학생회 자치회 구성 등을 주장하고 민주적 학급운영방법, 학생자치활동 민주화방안 등에 대한 자료집 발간·배포
- 한편으로 1988년부터 교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청원 및 서명운동 전개
  - 교원들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퇴근시간 지키기, 일숙직 폐지, 출장비 정상 지급, 정당한 연수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각종업무 경감을 위해 노후 책결상 교체, 교원의 법정 정원확보, 교무실 전화기 설치 등 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각종 제안

※ 교직원 복지 및 권익신장 요구는 전교조 운동을 교육기본권과 관련없는 단순한 교원 권익신장으로 비침.

- 교원의 자주적 단체 구성을 위한 교원노조 결성 및 합법화 투쟁과 관련하여
  - 교원들은 7·80년대 유신독재의 탄압과 정권홍보용으로 황폐해진 교육현장을 개선시키고 교사들의 권익과 교직수행의 자율성, 교육의 정치에의 종속화의 방지,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교사들이 중심이 된 자주적 교원단체 결성과 노동조합화 주장
    - 교원노조 결성 및 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① 노조대동기(1982. 1 Y교협창립 ~ 1989. 2. 19. 전교협 대의원대회) ➡ ② 노조건설준비기(1989. 2. 19. 전교협 대의원대회 ~ 5. 14. 발기인대회) ➡ ③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조직건설기(1989. 5. 14 발기인대회 ~ 7. 9 전국교사대회) ➡ ④ 전교조 사수투쟁기(1989. 7. 9. 제1차범국민대회 ~ 9. 9 중앙위원회) ➡ ⑤ 조직복원기( 1989. 9. 9. 중앙위원회 ~ 12. 10. 대의원대회)로 발전하며 투쟁 전개

※ 유치원 교사들도 1989. 4. 29. 전주에서 「전국유치원교사협의회」 창립대회를 가진 후, 6. 11. 「전국공립유치원전임강사노동조합」 결성

- 이외에도 전교조 운동은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연대 투쟁전개
  - 공안통치에 대항하여 ‘민주개혁’과 ‘제반 악법 철폐’ 등을 주장한 「교사시국선언」을 통해 사회민주화를 촉구하였고, 민중기본권쟁취 투쟁과 사무직 노동운동 등 사회개혁 투쟁에 적극 참여

□ 민주화에 기여여부

< 긍정적인 점 >

- 첫째,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교육법 등 교육제도의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점.

- 국가독점 교육통치구조 개편과 교직 자율성 확대 요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자치제 실시, 미시적 차원에서 교사·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화, 학교운영에 평교사 참여 기회 확대,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 구성 등으로 단위학교의 민주화에 기여
- 교육재정 GNP 5% 확보운동 등으로 낙후된 교실환경, 교사의 근무여건 등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신장과 교육권리 확대에 기여
- 둘째, 권위주의 정부시기 하에서 교육부문을 넘어서 타 민주화운동세력과 연대하여 사회민주화운동의 저변확대에 기여
- 노태우 정부의 3당합당 이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사들을 사회의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게 하는 교사시국선언 등으로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구심역할을 함.
- 셋째, 최근 교원의 교원 노조결성이 합법화되면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학부모·학생의 자주적·민주적 단체 결성으로 교육주체의 교육참여기회 확대
- 교원의 자주적 단체결성의 영향으로 그동안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교육주체인 학부모·학생이 학습권 신장을 위해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교육민주화 운동의 지평 확대

#### < 부정적인 점 >

- 교원의 적극적 노동권 행사가 국민의 학습권을 훼손하였다는 견해가 있음.
- 전교조 결성 이후 전교조 운동이 전교조 사수 투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교조 운동은 교직원 복지 및 권익신장 운동으로 비취졌고,
- 합법적인 투쟁으로 인해 국민의 학습권을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교조 운동은 교육민주화나 교육기본권 신장과 관련성이 미약하다는 입장
- 교사의 교육행위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교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교사의 기존의 법 규정을 무시한 시위·농성 등 집단행동은 잠재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있는 점.
- 법 준수 측면에서 학생들의 행동양식 및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교원들간에 분열·갈등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나 학부모 집단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

#### □ 기타 검토사항

- 전교조 운동으로 해직된 교원 다수가 복직되었지만 특별채용 형태로 복직되었기 때문에 해직기간에 대한 교육경력, 임금, 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명예회복 주장
- 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 및 임금보상, 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금의 불이익해소 등 요구
- 해직의 형태를 보면 파면, 해임, 직권면직, 강제적 의원면직으로 구분됨.
- 전교조운동을 단순하게 교원의 노동기본권 신장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경우 향후 국·공립교수 및 일반 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결성 추진(예 : 전국공무원연합회, 전국대학교수회)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갖는다는 점

O1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 (☞ <단체편>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맹 참조)

O2

O3

O4

O5

1989.05~1991.10.13

O6

O7

공개 / 임의단체

O8

O9

O10

87년 7,8,9월 투쟁의 열기가 전두환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쟁취와 함께 폭발적으로 분출해 오르던 민중 역량에 당황한 민자당 후보 노태우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비롯하여 민중생존권에 관한 몇몇 공약을 급박하게 내세웠다. 그 중 하나가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였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시를 무기한 연기했다가 민중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89년에 이르러서 그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졸속적이고 왜곡된 제도로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다. 89년 5월 87.88년 전국적으로 공개채용된 의료보험직원 8000여명은 각 시도 지역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현 의보총련의 전신인 의보노동자 전국조직으로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1

89년 10월 23일~90년 1월 15일 지역의보노조전국협의회는 의료보험제도 개혁, 단체협약, 임금 등의 이슈를 걸고 전국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각 단위노조마다 50-70여일간의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90년 5월 23일 전국 노조원 90% 이상이 참여하여 전국 동시 월차휴가를 실시하였다. 10월 의보제도 개혁과 89투쟁 계승을 위한 전국 집회가 3000여 노조원이 장충단공원에 집결된 가운데 개최되었다. 91년 5월~8월 전국 총파업, 서울 경기지역 노조원 서울 집결, 반민자당 투쟁에 동참하여 대규모 가투를 벌였으며 인천지역 노조원은 112일간의 파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1991년 의보총련을 결성하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2

O13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합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

부천시지역노동조합협의회 (☞ <단체편> 부천시지역 임금인상 및 노동법개정투쟁본부 참조)

O2

부노협

O3

O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O5

1989.07.22~?

O6

부천

O7

공개 / 임의단체

O8

O9

1.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활동과 조합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굳건히 연대하여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1. 우리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자본과 정치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물리치고 이에 단호히 맞서 공동으로 대처한다. 1. 우리는 자본가와 정치권력의 이해에 기초되는 제반 노동악법의 개정 및 폐지를 위해 투쟁하며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주5일 근무제 확립과 생계비 쟁취 등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의 역량강화와 민주적 노동조합의 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우리는 지역, 업종을 떠나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지역적, 전국적 통일과 단결을 높혀 나간다. 1. 우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 및 민주세력과 적극 연대한다.

O10

부천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부노협')은 1989년 7월 22일 부천시지역 42개의 민주적 노동조합 4,000여 명으로 출범하였다. 이어 7월 24일에는 부천공진 운동장에서 2시간씩 총회시간을 빼서 조합원 2,00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부노협 창립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노협 준비소위'의 북부지구 대표였던 경원세기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 대의원대회에서 부노협 참여가 부결되었고, 이후 '부천시지역 금속사무소'로, 한국노총으로 합류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부천시지역 민주노조 진영이 그 역량을 총집결하여 '부노협'을 결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부천시지역에서는 1987년 9월부터 자본가들의 탄압이 휘몰아 쳤다. 새서울산업, 우진전자, 한국스파이서 등에서 위장 취업자에 대한 구속, 조합원들과의 이간질, 구사대를 통한 폭압적인 탄압이 거세어졌고, 작업물량을 하청으로 빼돌려 회사의 위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9월을 경과하면서 민주노조 진영에서는 탄압에 대한 공동대처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싹트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이러한 연대의식은 노조결성 당시 지원을 받은 '한국노총 부천시협의회'로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한국노총 부천시협의회가 새서울산업의 민주당사 16일 농성과정에서 성명서 한 장 내는 것조차 이 핑계, 저 핑계 끝에 끝내 거부하고 말자 특히 신규노조들이 부천시협의회를 불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초 '원방'에서 노조탄압 중지와 부서폐쇄 계획 철회, 적정 작업물량 보장을 내걸고 파업농성에 돌입하였고 이에 대한 지원투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노총 부

천시협의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

한편 원방에 대한 지지투쟁은 부천지역과 인천지역 신규노조와 민주노조들을 중심으로 37개 노조(인천 14개)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일 지원투쟁을 벌인 결과 6일만에 파업투쟁을 승리하게 되었다. 부천지역에서는 이를 계기로 15개 내외의 노조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연대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보적인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1988년 들어 부천지역에서는 89개의 노동조합이 새롭게 결성되었다. 이는 금산전자, 유한전자, 대아, 건화상사 등의 투쟁이 연이어지면서 지역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결과였다. 특히 범우전자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지역 규찰대가 그곳에 상주하면서 도와주었는데 이러한 활동은 지역내 연대활동을 한층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5월에 있었던 한국노총 부천시협의회 의장 선거는 지역연대 조직체 건설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선거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 '적극 참여'와 '독자적 구심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오랜 토론을 거친 끝에 경원세기 위원장 장진수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그 어느 쪽 입장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88년 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임금인상투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6~7월부터 '부천지역 민주노조 진영의 구심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민주노조들의 핵심적인 과제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름 위원장단 수련회를 거치고 난 후인 9월에는 위원장단을 중심으로 '부천지역 금속노동조합연합 준비위원회(이하 '부금노련 준비위')'가 결성되었다.

한편 19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치면서 부천지역 노동자들 사이에는 지역협의회 건설을 두고 본격적으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부금노련 준비위'가 '노총민주화론'을 발상함으로써 조합원대중의 결의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토론회가 12월 '대우전자' 식당에서 개최되었지만 상호간의 의견차이만 뚜렷해진 채 1989년을 맞게 되었다.

1989년 들어 조직논쟁과 함께 임투준비 체계를 놓고 의견대립이 확대되어 갔다. 먼저 '부금노련 준비위'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노총과의 역할분담 하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고, '부노협'을 주장했던 곳에서는 '임금인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러한 의견대립이 쉽게 결론지워지지 않자 양자 모두는 지역 연대조직을 1989년 임금인상투쟁을 치른 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2월에 '부천지역 임금인상투쟁 본부(이하 '투본', 본부장 한경석 신광전자 위원장)'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부천지역 최초의 실질적인 연대기구이자 부노협의 전신인 '투본'이 탄생한 것이다. '투본'은 급조된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조결성 지원, 파업지원 활동을 전개했으며, 임투속보와 '부천지역 임금인상 기초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투본'은 1989년 임투를 거치면서 123개의 신규노조 결성을 지원했음은 물론이고, 기존 노조들의 임투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신규사업장의 확대와 투쟁 승리의 여파를 타고 4월9일, 임투승리 결의대회가 원천봉쇄된 성심여대에서 부천역으로 옮겨져 강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천지역 최초의 가두시위가 전개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경석 투본의장과 임동섭 상황실장이 구속되자 13, 14, 15일에 걸쳐 총49개 노조 5,000여 명이 참가한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그 후로 한국피코 투쟁, 5.1절 가두투쟁이 투본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5월12일에는 당시 파업중이던 8개 노조가 '임금인상 및 민주노조 사수 공동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급박하게 진행된 투쟁의 과정에서 '부노협을 건설하자'라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통일된 슬로건으로 형성되어 갔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4)

부노협 창립 후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공안정국의 한파로 부노협 결성 이후 8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권력의 침탈을 받았다. 부노협은 시흥지역과 일상적 교류 및 노동자대회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90년 3월 입투승리 대동문화제, 5월 부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91년 3월 춘계 문화제를 개최하였고 91년 3월부터 9월까지 총대표자회의를 6회 개최하였으나 점차 시지부 사업장들은 불참하였다. 부노협은 지역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모색과 노동조합의 위기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91년부터 부천시흥 공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9월 부천시흥 총간부수련대회를 개최한다. 그 해 12월 공대위 준비소위를 구성하고 92년 1월 공대위 1차 대표자회의를 거쳐 92년 2월 26일 부천시흥공대위를 정식 발족한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2

부노협 초대 의장은 창립 당시 한국신광전자 위원장이었던 한경석(韓景錫)이 선출되었다. 부의장에는 김용국(화인보원 위원장), 장정임(금산전자 위원장), 오신근(우일 위원장), 윤원구(대운전자 위원장)가 선출되었고, 회계감사에는 민복기(유신정밀 위원장), 사무처장에는 양용진(동양에레베타 위원장)가 선임되었다. 그밖에 조직국장 임동섭(林東燮, 전 원방위원장), 교육국장 임한철(삼령정밀 위원장), 홍보국장(미정), 정의지도국장 윤석인(삼근물산 위원장), 문화국장 김진웅(대흥기계 문화부장), 조사통계국장 박미경(홍양 위원장), 여성국장 김순덕(공성통신 위원장) 등을 사무처 집행국의 국장에 선임했다.

O13

부천시지역 임금인상투쟁본부, 부천시흥공대위

O14

『전노협 백서』 1권 / 『조선일보』, 1989. 4.16

O1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회 (☞ <사건편>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회 사건 참조)

O2

전해투

O3

O4

O5

89.07.31 (구속일자)

O6

O7

비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반미의식과 반미운동은 이제 전경들에게까지 불어왔다. 1989년 7월 31일 구속된 양승균씨 등은 ‘친미 군사정권의 사병’임을 거부하는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를 조직하였다가 이적단체구성죄로 기소되었다. 다음은 위 단체에 대한 공소장이다.

“ 전해투의 조직성격은 ‘비합법적 애국전경조직이자 미제국주의와 친미군사독재정권의 사병인 파쇼경찰의 전경이기를 거부하고 반독재통일구국투쟁에 동참한 혁명운동동력의 일부분인 애국군인으로서, 전해투의 조직 목적은 .....미제와 반통일세력인 사대매국세력을 타도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자주·민주·통일운동에 복무하는 것으로 .....논의, 확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노선을 찬양, 동조하여 이를 이룩케 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전해투’를 구성하고.....”(서울지방법검찰청 89형 제65436호 사건 공소장, 5~8쪽)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502~503)

O11

O12

O13

O14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연구팀 의견: 관련 당사자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음>

O1

한미문제연구소 (☞ <사건편> 한미문제연구소 설립기도사건 참조)

O2

O3

O4

O5

89.08.20 (구속일자)

O10

1989년 7월 30일 국가안전기획부는 전민련 간사 고현주씨와 1982년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의 문부식씨, 그리고 전 고대총학생회장 김윤태군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평양측 전북한측 준비위와 전대협간의 전문을 수신, 전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문부식씨는 부산외국어대 등 전국 13개대학에서 “광주학살의 주범은 미국이다”, “우리의 현대사는 반미민중항쟁의 투쟁의 역사이다”라는 등의 반미주제의 강연을 해왔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한겨레신문』 1989년 8월 1일자 기사) 그러나 같은 해 8월 20일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 김영애씨 부부가 구속되면서 위 사람들과 함께 한미문제연구소를 설립하려 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었다.(『동아일보』, 1989년 8월 21일자 기사) 이들에게 이적단체구성예비·음모죄를 적용케 한 한미문제연구소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501)

O11

O12

고현주, 문부식, 김윤태, 김현장, 김영애

O13

O14

『한겨레신문』 1989년 8월 1일자 기사, 『동아일보』, 1989년 8월 21일자 기사,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501

<연구팀 의견: 관련 당사자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음>

O1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 <사건편>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 참조)

O2

혁노맹

O3

O4

O5

1989.08~?

O6

O7

비공개 / 비합법 (치안본부 발표)

O8

O9

O10

치안본부 발표에 의하면 1987년 3월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를 결성한 뒤 1989년 4월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노동자동맹’을 바꾸고 다시 1989년 8월 ‘혁노맹’으로 개칭

O11

1990. 8. 22. 박대호 등 17명이 반국가단체인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을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제헌의회(CA)과 핵심요원 출신으로 1987. 3.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를 결성한 뒤 1989. 4. 조직명칭을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노동자동맹’으로 바꾼 뒤 1989. 8. 경기도 소재 ‘작은 자리’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혁노맹’으로 개칭해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고 발표했다.(유선호, 「집회·결사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편, 『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5집』, p130)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825) (김선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수사 당국은 혁노맹이 ‘종래의 이적조직과는 달리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전복을 위하여 혁명군대가 수행하여 할 준비사업과 군사행동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도 마련“했으며 ”타 지하혁명조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별기관인 군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두어 혁명군사 양성을 획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노맹 사건은 10명의 현역군인들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발표돼, 이것이 사실이라면 6·25 이후 최대의 군대내 혁명조직사건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구속자 가족 일동은 9월 5일 ‘혁노맹 군사위원회는 조작’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혁노맹 사건은 “8월 18일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이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과 박치원 전 치안본부 5차장을 비롯한 대공경찰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전국민적 반감을 무마시키고자 불법연행과 조작수사 끝에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조사받은 병사들은 연행 후 2주일이 지나도록(9월 5일 현재) 가족들과 면회조차 못했다며 밀실 고문수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최진섭, <보안사의 혁노맹사건조작 진상> 월간 말 1990년 10월호 164~167쪽)

O12

O13

혁명의 불꽃,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노동자동맹

O14

김선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연구팀 의견 : 과장 및 조작 가능성 농후-관련 당사자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음>

O1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O2

노문연

O3

O4

O5

1989.09.23~?

O6

O7

공개 / ?

O8

O9

O10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은 1984년 이래의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민중문화운동연합(민문연)의 두 번째 변신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적 변신의 가장 큰 특징은 ‘민문협’ 창립 이후 5년간의 일관된 슬로건이었던 ‘민중문화’가 ‘노동자문화’로 변화된 것이었다. 이는 피지배 민중 내부의 계급적 차별성에 주목하고 점차 민중 각계층 내부에서 노동자계급이 갖는 진보성·주도성을 드높여가는 전체 민족민주운동권의 변화와 실제로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이후 현격하게 민족민주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노동자대중의 현실적 진출을 문화운동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창립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동해방의 사상, 노동자계급의 진리를 광범한 노동자대중과 전민중 속에 가져가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변신은 또한 우리 노동자계급이 자기계급의 문화를 수립하기를 그만큼 갈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의의는 컸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pp.329~330)

노문연은 문예연(문학예술연구회)과 민문연(민중문화운동연합)이 통합해서 결성한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자 문화운동 조직으로서, 당시 문화운동의 장르와 매체 중 거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던 예술, 문화운동, 선전의 대조직이었다. 80년대 초반 광주항쟁 이후 최초로 결성된 대표적인 재야 문화운동단체 ‘민중문화운동협의회’에 뿌리를 둔 민문연은 이미 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문화운동의 모든 장르를 포괄할 단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통합 이전에 이미 ‘새벽’(음악), ‘한강’(연극), ‘서울영상집단’(영화-후에 탈퇴), ‘블립’(춤) 등과 같은 여러 장르 조직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뛰어난 성과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민문연은 통합 직전에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에 기반을 둔 문화운동조직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회와의 통합이 제기되었다. 연구회와는 87, 88년 ‘문학 강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간의 소통을 긴밀히 하고 있었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162)

O11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연구단체, 예술 단체 스스로가 활동 내용상로나 조직 체계상로나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역사적 요청에 대한 정당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당시 애초의 조직 목표였던 당시의 3대 문화운동단체(민문연, 서노문협, 한문협)의 통합과 여기에 문예연이 참여하는 대통합이 무산되고 민문연과 문예연만의 소통함으로 귀착된 점은 아쉬운 점이였다. 이 점은 노문연이 두고두고 내외에서 과도하게 ‘민족민주파’ 조

직체로 인정된다거나(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다), 대중적인 문화운동 조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태의 급진전으로 인해 필연적이기도 했지만), ‘문화적 선전 조직’으로 경사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노문연이 지방의 많은 지역 문화조직들을 통합할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당시에 전국적으로 부상하고 있던 노동자 현장 조직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노동운동, 노동자 대중들의 문화적인 요구들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163)

O12

문학예술연구회, 민중문화운동연합, 문학예술연구소

O13

O14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창립선언/강령」(89.09.23), 233~240쪽

O1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 <단체편> 연전노협 참조)

O2

전문노련

O3

산업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한국개발연구원 노조 등 1993년 말 현재 57개 노조 13,000여 조합원 포괄

O4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국제사업사무전문기술노조연맹(FIET), 전국업종노조회의, 국제공공부문노조연맹, 전국노조대표자회의

O5

1989.10.14~?

O6

O7

공개 / 법외 (1993. 7.30 합법화)

O8

연맹의 지도위원 및 가맹노조간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중심으로 4개 협의회 운영(정부출연기관노조협의회-연합기술노조협의회-경제단체노조협의회-과학기술노조협의회)

O9

- 우리는 전문기술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신장과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전문기술 노동자로서 그 사회적 역할과 역사적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들 노동의 생산물이 전체 노동자와 전 국민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굳게 단결하여 자본과 권력의 지배와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통하여 민주사회건설과 노동해방의 선봉에 선다. -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제 세력과 연대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선다. -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O10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연전노협)를 전신으로 1989년 10월 14일 40개 노조, 140명 발기인으로 결성되었다.

O11 결성 후 1990년 2월 국제 상업사무전문기술노조연맹(FIET)에 가입하였고 1990년 5월 전국업종노조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92년 4월 국제공공부문노조연맹(PSI)에 가입하고 93년 전국노동대표자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O12 김문철(위원장)

O13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연전노협)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 『말』제54호, 1990.12

O1

한국여성연구회

O2

여성연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9.10.28~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한국여성연구소는 국과 연구실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소의 학술사업을 총괄하는 학술국, 『여성과 사회』등의 출판사업을 담당하는 출판국, 대중교육과 신입회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국, 연구소 회원과 재정 등을 관리하는 사무국 등이 있으며, 가족연구실, 노동연구실, 문학연구실, 이론연구실, 정책연구실 등의 연구주제별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다.(『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59)

O9

O10

한국여성연구소의 뿌리는 한국여성연구회의 창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여성연구회는 1989년 10월 28일 기존의 여성학술운동단체인 아현여성연구실과 여성사연구회가 여성학술운동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통합함으로써 창립되었다.

여성학술운동은 87년 5월 여성사연구회의 창립과 87년 9월 여성한국사연구회의 재창립으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사연구회는 여성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여성운동에서의 막중한 임무를 집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성』지를 발간하는 등의 작업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진행해 왔고, 여사연도 마찬가지로 여성연구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1987년 재창립으로 그 의지를 표명하였다. 재창립 1년 후 여사연의 재창립의 의미와 의지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아현여성연구실이 여사연으로부터 독립하였다.

89년 2월 여성사연구회와 아현여성연구실을 같은 이념을 가진 두 단체의 통합을 모색하는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여성학술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에 합의하여 한국여성연구회(약칭 : 여성연)의 창립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여성연구회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 여성의 억압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여성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는 여성학술운동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57~259)

O11

한국여성연구회가 목표로 하는 바는 첫째, 여성억압의 현실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연구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둘째,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과학적 이론과 올바른 여성정책의 수립에 일조하는 한편, 셋째, 여성운동단체와의 연대 및 이론적 지원 사업을 통하여 여성운동의 선진적 부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며, 넷째, 올바른 여성해방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진보적 여성연구자를 양성하

는 것이다.

1998년 연구회에서 연구소로의 조직을 개편하고, 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였다. 한국여성연구소는 여성 문제에 대한 제반 연구와 조사, 여성관련 간행물의 출판 및 강연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대중화, 연구발표회(월례회) 및 토론회 개최,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유관 단체와의 연대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정기간행물 『여성과 사회』를 발간하였으며, 1990년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1991년 『여성임금 노동자와 임금』(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와 공동작업), 1991년 『여성학 강의』, 1992년 『한국여성사』, 1992년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현재와 미래』 등을 발간하였다.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257~259)

O12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공동대표), 강이수(상지대 교수, 공동대표)

O13

아현여성연구실, 여성사연구소, 한국여성연구회

O14

『학단협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O1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천주교전국공동위원회

O2

천공위

O3

O4

O5

1989.11.04~?

O6

서울

O7

공개 / ?

O8

O9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천주교공동위원회 발족선언>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하지 못한 사실을 하느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광범위한 통일염원을 수렴하여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목적 대안 마련에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올해 6월6일 임진각 미사를 통해 발표한 「민족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선언」을 더욱 구체화하여 통일운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노정권이 발표한 7·7선언과 현행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관계임을 직시 하며, 통일의 장애요인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핵무기를 반대하기 위해 반핵 평화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평화는 전쟁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세력간의 균형유지만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사목헌장 78) 우리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민족의 모든 양심들과의 연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형제적, 동지적인 나눔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O10

문규현 신부 파북사건 이후 천주교·사회 운동권에서는 '사제단'의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조국 통일운동, 반핵 평화운동 등을 전문적, 적극적으로 담당할 주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운동을 대중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결합이 요청되었는데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천공위'는 전국기구 차원의 조직위상 설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발족하게 되었다.

O11

O12

O1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1999년 7월 12일)

O14 자료미상

O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O2

경실련

O3

O4

O5

1989.07.07~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총회->중앙위원회->상집위원회의 의결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에 중앙을 두고 있는 사무국 개별 기구, 부설기관, 유관조직과 지역경실련이 있음.

O9

<경실련 발족선언>(1989.11.4)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도시 빈민가와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관철시키고 있다. 만연된 사치와 향락은 근면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손쉬운 투기와 불로소득은 기업들의 창의력과 투자욕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는 국민 간의 균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안정 기반이 동요되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인 윤리 전반을 문란케 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땅을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극심한 소득차, 불공정한 노사제,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해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적 집중, 사치와 향락, 공해 등 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 실현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 이의 실천이 없이는 경제 성장도 산업평화도 민주복지사회의 건설도 한갓 꿈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가장 시급한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인위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귀중한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산과 생활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토지 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투기화, 그로 인한 지가의 폭등은 국민생활의 근거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극도로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 폭등 및 노사 분규의 격화, 거대한 투기 소득의 발생 등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부정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며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살리면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분배의 편중, 독과점 및 공해 등 시장 경제

의 결함을 해결하는 민주복지사회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향할 목표이다. 사회의 발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곤란을 극복하는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민주복지사회의 건설도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의 선한 의지와 힘을 모으고 조직화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민 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다. 탐욕을 억제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하면서 경제 정의, 나아가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의 안일한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함께 일어나 경제정의의 실천을 위하여 발언하고 행동하자. (경실련 홈페이지: <http://www.ccej.or.kr>)

#### < 우리의 실천 과제 >

-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정부는 시장 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 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p276)

#### O10

시민 차원에서 ‘토지공개념’ 실천 등 경제정의를 적극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경실련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89년 7월 7일 : <경실련>의 출범

-89년 7월 8일 : <경실련> 발기인대회. 종교계를 중심으로 500명 참석

-89년 11월 4일 창립총회 및 ‘토지공개념’ 강화입법과 주택문제해결촉구 시민대회. (이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시민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정감시단을 구성, 민생 관련 법안을 다루는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pp.275~276)

#### O11

89년 토지공개념 입법 촉구와 주택문제 해결 촉구 활동, 90년 세제개혁 촉구운동 전개, 92년 경제부정 고발센터 개설 및 재벌 감시활동, 경제정의 평가 모형 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31)

#### O12

#### O13

#### O14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O1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O2

애청

O3

서울지역민주기독교청년연합, 서울지역천주교교회청년연합

O4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O5

1989.11~?

O6

서울

O7

공개 / ?

O8

개신교 청년단체인 '서울지역민주기독교청년연합', 카톨릭 청년단체인 '서울지역천주교교회청년연합'과 성서, 노래, 풍물, 시사, 여성 등 5개의 동아리라는 3가지 체계로 이루어졌다. <총회 - 중앙위원회- 의장단 - 서민기청 선교위, 서교청 선교위, 동아리>의 조직 체계를 가짐.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3)

O9

O10

1989년 11월 크리스찬 운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크리스찬의 회개 - 자주적 신앙고백 - 자주적 신앙 실천이라는 모토로 창립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p103)

O11

애청은 서울지역민주기독교청년연합, 서울지역천주교교회청년연합, 성서, 노래, 풍물, 시사, 여성 등의 소모임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며 크리스찬 운동 내에서 청년의 선봉대적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회보 '애국 크리스찬'을 발간하였고 성서교실, 음악강좌, 풍물강좌, 여성 학교 등의 대중강좌를 개최하였다.(『'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3) 또한 천사협, 기사련 및 크리스찬 청년 단체들과 연대사업을 가졌다.

O12

회보 「애국 크리스찬」: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3)

O13

서울지역민주기독교청년연합, 서울지역천주교교회청년연합

O14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3

O1

전국빈민연합

O2

전빈련

O5

1989.11.11~현재

O6

O7

공개 / ?

O8

O9

O10

87년 이전 도시빈민이 갖는 계층적 특수성 때문에 빈민운동은 빈민들 스스로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카톨릭 개신교 등 주로 종교계에 의존해 왔었다. 그러나 87년에 들어와서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의 미관상 재개발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많은 빈민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강제철거당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지역별로 자구책을 구하기 위해 각종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재개발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산되자 철거민대책위원회와 각 지역의 세입자대책위원회들이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철협)를 결성했다. 이것은 도시빈민들이 처음으로 자주적으로 결성한 대중조직으로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함께 '전빈련'은 88년에 들어와서 '서철협'과 「전국노점상연합회」, 「천주교도시빈민회」, 「기독교빈민협의회」 등이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면서 그 기반이 마련됐다. 결성과정에서는 지역탁아소연합 일용건설노동조합 추진위원회가 함께 참여했으나 '서철협'과 전국노점상연합회 일용건설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자신들의 조직 성격상 참여를 보류했다. 전빈련의 목표는 주거, 직업, 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p.311)

O11

O12

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

O13

O14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국빈민연합 창립선언」, 87~88쪽

O1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사건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 백태웅(사노맹 중앙위원장) 등 사노맹 조직원  
검거사건 참조)

O2

사노맹

O3

O4

O5

1989.11.12~?

O6

O7

비공개 / 비합법

O8

O9

O10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독자후보파의 한 분파를 형성했던 CA계열의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에 속해 있던 핵심 활동가들은 대선 투쟁과정에서 당면정세에 대한 판단 및 전략전술적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심화, 이러한 대립의 결과 노해동은 1988년 4월경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립하였다. 이 가운데 민중집권과 민중주도성의 목적의식적 추구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 소수파가 재결집하여 결성한 것이 바로 사노맹이다. 소수파는 ‘사노맹출범 준비위원회’(당시의 명칭으로는 ‘노동조합지도자대회 준비위’)를 결성하여 사노맹 건설을 본격화하였고 1989년 11월 12일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발표, 조직을 공식화하였다. (『말』, 54호, 1990.12)

O11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이라는 과제에서는 인노련(->인민노련: 연구팀) 등 민중민주파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 정세판단이나 당면한 정치투쟁의 방향, 그리고 변혁의 과정과 목표 등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두 조직의 연대나 통일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오히려 민중당이나 전노협, 국민연합 등에 파견된 자파 소속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노동자계급 블록’을 형성시킴으로서 조직 내부의 헤게모니 장악과 이론적 우위성 확보를 위해 인노련(->인민노련: 연구팀)이나 다른 정파 등과 상호 대립적인 양상으로 보이기도 했다. (『말』, 54호, 1990.12)

사노맹은 1988년 ‘제현의회(CA)그룹’과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이 수사로 말미암아 와해되자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1989. 1.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하는 핵심세력 140명을 규합하여 1989. 11. 12. 공개적으로 그 결성을 선언했다. 사노맹은 각종의 유인물과 책자, 월간지 『노동해방문학』 등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민중통일전선 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전국 규모의 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노동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1집』, 노동인권회관 편, 1990, pp79)

1990. 9. 19. 현정덕(중앙위원) 등 3명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1990. 10. 중순경까지 18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 10. 30. 사노맹은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고

자 하는 지하조직으로서 노동계, 학원, 종교계, 청년운동단체에서 1,600여명이 활동해 왔으며 당시 40명을 구속했고 150명을 추적·수배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노맹에 대한 수사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당시 구속된 사람은 남진현(중앙위원), 이명애, 현정덕(연락국장), 정은희, 이수한, 전금숙, 장오영, 이귀영, 황성록, 전광철, 정중혁, 심재섭, 최영준, 정현민, 조정래, 정은미, 장해숙, 윤경수, 김옥현, 정미화, 이동기, 차무정, 전해룡, 유경중, 최병규, 한두석, 윤진환, 권종길, 전인현, 박강태, 서상덕, 이동균, 김은미, 이성주, 공인현, 이덕기, 이성철, 이우철, 박형민, 임준, 최성철, 이영자, 정주용, 양봉안, 이중섭 등이다. 핵심지도자인 박기평(필명 박노해), 김진주 부부가 1991. 3. 구속되었다. 박기평에 대하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노동운동탄압에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되고 선고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연도미상)

사노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혁명이념으로 삼아 노동자 계급 중심의 폭력투쟁으로 현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노선을 추진해온 지하조직이라고 안기부는 규정했다. (『조선일보, 1992. 5.16)

O12

중앙상임집행위원(총책 백태웅(白泰雄), 중앙조직국장 정명섭, 중앙정책국장 은수미, 연락국장 현정덕)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 朴基平), 남진현(南晋鉉), 이은경, 김진주(金眞珠), 박홍순)

O13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O14

『말』, 54호, 1990.12

『노동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1집』, 노동인권회관 편, 1990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연도미상 / 『조선일보』, 1991. 3.13 / 『조선일보, 1992. 5.16

**(참조 : 이광일, “한국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운동-민주적 실천과 역사적 희생”, 조희연 편, 『국가 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2002)**

89년 출범한 사노맹은 합법활동을 거부하고 계속 비합법활동을 고수하였다. 이 조직은 제헌의회사건 이후 그 구성원들이 결성한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이른바 노해동)의 소수파가 분리하여 만든 것으로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이전의 진위조직을 지향한 운동조직과 비교해 상대적이지만 의미 있는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노맹 또한 90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조직원들이 검거되고 92년 4월 29일 핵심 인물인 백태웅이 구속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활동을 더 이상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들에게도 장기구금과 고문이 행해졌다. 남진현은 구타와 잠안채우기 등의 고문을 당했으며, 특히 백태웅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약물이 투여되었다고 주장하였다(사노맹관련구속자가족대책위원회, 『희망을 여는 사람들』, 1992.11, 20-25). 이러한 과정을 경과하며 사노맹 또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다.

동구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되고 자유주의적 정치 개방이 진전되면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했던 사노맹의 운동 이념과 목표, 비타협적인 전투적 운동방식 등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판되기도 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가해진 인권유린 등 국가의 불법행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 80년대 반파시스트투쟁과정에서 유입, 소개되어 이미 일반화된 ‘사회주의 사상’

에 대해서는 그것이 근대 기본권의 핵심목록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그것의 포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갔다. 이것은 극우보수세력이 압도하는 사회관계가 변화되는 것과 맞물려 시민사회 내에서 진전된 인권,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리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및 확산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와 달리 재판과정에서 사건관련자들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 옹호하고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선언하는 양태로까지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진보정치운동을 ‘공안조직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된 반공규율을 호명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권위주의 혹은 파시스트 권력의 자의적인 시도가 의도한대로 관철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87년 6월항쟁 이후 진전된 자유주의적 개방과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속에서 출범한 사노맹은 기존의 비합법활동을 포기하고 ‘신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자신들과 같은 사회주의 세력을 합법화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노맹의 이러한 노선 수정은 한국노동당의 노선전환에 이어 진보정치세력들이 합법적 공간에서의 정치활동을 정치세력화의 중요한 경로로 설정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표 4-6>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주요 관련자 형량

관련자	직책(직업)	1심형량	확정형량
남진현	중앙위원	징역12년	징역12년
백태용	중앙상임위원장	무기	징역15년
박홍순	중앙위원	5년	5년
현정덕	연락부장	8년	8년
장오영	연락부원	3년	2년
장민성	노문실장	5년	5년
소종민	노문실원	2년	2년
강제윤	노문실원	3년	3년
이원혜	노문실원	2년	2년
이성수	민중당 관련	3년	3년
이성철	민중당 관련	2.6년	2.6년
김옥현	민중당 관련	2년	2년
차무정	민중당 관련	2.6년	2.6년
권종길	민중당 관련	2년	2년
유경중	민중당 관련	2년	2년
이귀영	새벽바람	4년	4년
한두석	새벽바람	2년	2년
윤진환	새벽바람	2년	2년
김동균	지하철노조	2년	2년
전인현	가민청	3년	3년
박강태	가대연	2년	2년
황정일	가민청	2년	2년
원종석	한양대	4년	2.6년
임봉근	한양대	4년	2.6년
안병진	서강대	4년	2.6년

	직책(직업)	1심형량	확정형량
김진주	편집위원	6년	4년
장계환	승실대		
진기영	성균관대		2.6년
신하송	산업대	1년	
이은택	한양대	1.6년	
양희성	한양대	4년	
박기평	중앙위원	무기	무기
정주용	인쇄소책임자	4년	4년
이영자	인쇄부원	2.6년	2.6년
양봉만	인쇄부원	3년	3년
최성철	인쇄부원	3년	3년
박관우	노문사	2년	
전현선	노문사	2년	
표광소	노문사	4년	

출처: 사노맹관련구속자가족대책위원회, 「희망을 여는 사람들」(1992. 9), 25.

<참조: 김선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 (가) 사노맹

1990. 9. 19. 현정덕(중앙위원) 등 3명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1990. 10. 중순경까지 18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 10. 30. 사노맹은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하조직으로서 노동계, 학원, 종교계, 청년운동단체에서 1,600여명이 활동해 왔으며 당시 40명을 구속했고 150명을 추적·수배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노맹에 대한 수사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당시 구속된 사람은 남진현(중앙위원), 이명애, 현정덕(연락국장), 정은희, 이수환, 전금숙, 장오영, 이귀영, 황성록, 전광철, 정종혁, 심재섭, 최영준, 정현민, 조정래, 정은미, 장해숙, 윤경수, 김옥현, 정미화, 이동기, 차무정, 전해룡, 유경중, 최병규, 한두석, 윤진환, 권종길, 전인현, 박광태, 서상덕, 이동균, 김은미, 이성주, 공인현, 이덕기, 이성철, 이우철, 박형민, 임준, 최성철, 이영자, 정주용, 양봉안, 이중섭 등이다.

사노맹은 1988년 ‘제한의회(CA)그룹’과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이 수사로 말미암아 와해되자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1989.

1.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하는 핵심세력 140명을 규합하여 1989. 11. 12. 공개적으로 그 결성을 선언했다. 사노맹은 각종의 유인물과 책자, 월간지 『노동해방문학』 등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민중통일전선 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전국 규모의 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노동인권회관편, 앞의 『노동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1집』, 79쪽).

핵심지도자인 박기평(필명 박노해), 김진주 부부가 1991. 3. 구속되었다. 박기평에 대하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노동운동탄압에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되고 선고되었다.

1993. 8. 26.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원주지부 소속 지재근(지부장), 이중희(사무장), 성낙운, 전훈, 공인표, 이수진, 박홍렬, 이은영 등이 이유도 모른 채 연행되었다가 8. 28. 사노맹 관련으로 구속되었다.

1993. 12. 15.과 16. 민중정치연합 광주전남협의회와 광주지부 소속 심우춘(공주지부 사무국장), 최유락

(광주전남위원회 중앙위원), 박종인, 고용출, 정찬호, 김남수, 유상렬, 송원주, 김선희, 김동성, 봉철의, 장평기, 이판재 등이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구속되었다.

1994. 2. 16.과 17. 민중정치연합 순천지부장 김영기, 광주지부 연대사업부장 신현숙광주지부 조직부장 김병규, 송진이, 김화정 등이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하여 연행되었다.

1994년 해체 이후에도 85명이 검거(73명 구속, 10명 불구속, 2명 이첩)되었다고 한다(추미에 의원 요청 국회 국정감사자료).

1994. 11. 2. 민정련 포항지부 박창호(지부장), 김숙향, 박은영, 이은아, 김용억, 여은희, 신윤정이 사노맹 관련으로 포항지방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사노맹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조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조항이 적용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박기평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원공보』 제922호, 1992. 6. 15., 1774-1776쪽). 대법원의 관련 부분은 “원심은 …… 사노맹은 현실의 사회체제는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단순대립구조라고 획일화한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소수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 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의 사회라고 인식하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만이 노동해방을 이루는 길이라고 단정하여 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헌법 개정 등의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불가능하고, 제1단계로 전위활동가들에 의한 비합법적인 선전선동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중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임을 표방하면서, 지옥불 훈련과정을 거쳐 조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조직원들을 선별하였으며,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상무를 담당하는 상임중앙위원회를 두어 그 상임중앙위원으로 피고인과 공소의 백태웅이 취임하고, 중앙위원회와 그 산하에 정책분과위원회, 조직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각 위원회 및 전국에 원심판시와 같은 각 조직편제를 두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 및 지시와 그 집행 및 보고가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조직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었고, 원심판시와 같은 강제모금활동과 철저한 암호체계 및 점조직으로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노동자대학, 노동해방문학사 등 원심판시의 각 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비밀인쇄소를 통하여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였고, 노사분규 현장에의 개입, 파출소 습격 등 사회혼란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당, 학원, 노동, 종교단체 등에 조직원을 은밀히 투입시켜(소위 프락션망) 거점을 확보하는 등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또한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사노맹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백태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739 판결-『법원공보』 제948호, 1993. 7. 15.)은 위와 같은 판시에서 나아가 “사노맹이 스스로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선전·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노동자계급 중심의 봉기를 일으킬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전·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의 조장도 폭력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므로 사노맹이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노맹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법원공보』 제994호, 1995. 6. 15.)은 사노맹이 근자에 이르러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 활동방향이 다소 수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 조직 및 노선 등 기본적 골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비록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을 선전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무장력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일정지역을 점령하거나 점령하려고 시도한 바도 없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일단 사노맹이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이후에는 관련자들은 모두 반국가단체 가입 또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 (나) 노동문학실(노문실)

장민성, 소종민 등이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실체를 알면서 이에 가입한 다음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노문실을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노맹의 방계단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의율한 것인데, 대법원에서도 노문실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장민성의 상고사건에 대한 판결, 『법원공보』 제914호, 1992. 2. 15., 720-722쪽).

#### (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황주석, 조국 등이 반국가단체인 사과원을 구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반국가단체가 아닌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의 이적단체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 1813 판결).

대법원 판결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적단체 역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된다 할 것이니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 판결은 사과원이 그 직접적이고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이론을 연구하여 이를 선전·전파하고 장차 성립하게 될 사회주의정당의 강령을 기초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 사과원이 그 자체로써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로서 단순한 사회주의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다.

O1

반제애국청년회 (☞ <사건편> 치안본부 반제애국청년회 구속사건 참조)

O2

O3

O4

O5

89.12.14 (구속일자)

O6

O7

비공개 / 비합법 (치안본부 발표)

O8

O9

O10

O11

치안본부는 1989년 12월 14일 반제애국청년회라는 지하조직을 재건, 「김일성전집」 등을 교재로 북한의 혁명노선에 동조해왔다는 혐의로 김성기, 박동철군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조선일보』, 1989년 12월 15일자 기사)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504)

O12

O13

O14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O1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O2

건설노련

O3

O4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O5

1989.12.16~1999.12.17

O6

O7

공개 / 법외 / 합법(1993년 합법필증 교부)

O8

O9 1.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1. 우리는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매진한다. 1. 우리는 민주노동조합간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을 단호히 배격한다. 1. 우리는 건설업 특유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제반 비민주적, 비인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직장의 안정과 민주화를 실현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교육과 문화향상 및 복지증진을 강력히 추구한다.

1. 우리는 창의와 협동을 바탕으로 부단히 연구 노력하며, 신공법 개발 등을 통해 건설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민주 우방국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O10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는 89년 5월 17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89년 12월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을 창립한다. (93년 건설노련 합법필증 교부)

<건설노련 연혁>

1988. 12. 10. :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 결성

1989. 12. 16. :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결성 (초대위원장 배석범)

1990. 05. 30. : 전국업종노동조합협의회 참여

1991. 04. 25. :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 가입

1991. 06. 01.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결성 참여

1993. 01. 20. :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제2대 위원장 선출 (배석범 위원장 연임)

1993. 06. 16. :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합법성 쟁취(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1995. 11. 1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참여

1995. 12. 29. :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 선출 (3대 위원장 배종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결의

1996. 12. 26. : 건국이래 노동자 최초의 '노동법개정' 정치총과업 투쟁에 조직적으로 참가

1998. 12. :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설립(전일노련과 공동사업)

1998. 12. :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 선출 (이용식 위원장)

1999. 12. 17. : 전일노련과 통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출범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 <http://www.kfcitu.org>)

O11

O12

O13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

교육문예창작회

O2

O3

O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O5

1989.12.16~?

O6

O7

공개 / ?

O8

초등분과-중등분과, 지역별, 소설분과-시분과-평론분과

O9

O10

교육문예창작회는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인 1989년 3월 교육문예운동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교육문예창작단’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운동을 하고 있는 문예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시도하다가, 전교조 결성 이후 조직논의가 본궤도에 올라 1989년 12월 16일 「교육문예창작회」의 창작회를 가졌다. (『정세연구』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pp160)

O11

「교육문예창작회」는 전교조 전체 체계 상의 구분에 의하면 초등분과, 중등분과로 나뉘고 각 지역별로 다시 나뉜다. 초등분과는 ‘삶의 동화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으며 초등 수준의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직접 선생님(현직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이나 학부모(목동아파트 지역의 예가 있음)가 동화를 창작한다.

중등분과는 매년 여는 창작교실을 통해 중·고등학생에게 글쓰기 지도를 하며 백일장을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문예창작회 내부에 소설분과, 시분과, 평론분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180여명(정확한 수치는 아님)의 전, 현직 교사가 창작 및 비평, 연구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2, 3개 지역이나 서울에서의 창작분과 모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직이 정기적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명망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합평회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세연구』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p.160)

O12

O13

교육문예창작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O14

『정세연구』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O1

전국여성농민위원회

O2

O3

O4

O5

1989.12.18~1992.01.

O6

O7

공개 / ?

O8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조직은 크게 중앙 단위와 지역 단위로 나뉘어지며, 중앙 단위조직은 지역 단위조직들의 연합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체계는 기본적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 단위기구로는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 임원단(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및 사무국이 있다. 또 사무국에는 정책연구부, 조사선전부 및 조직교육부 등 세 개의 부서가 있다. 이들 세 개의 부서가 사업전반을 분장해야 하므로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사무국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어 타 단체에 비하면 훨씬 과중한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조직으로는 군여성농민회와 면 조직 및 마을 단위조직이 있는데 군 조직은 전여농의 기본 가입 단위가 된다. 기본가입단위(전여농의 회원단체)는 2개 마을 이상의 여성농민조직이 있는 군, 1개 이상의 면 여성조직이 있는 군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 여성농민회 또는 마을 조직 대표(2개 이상 마을)가 가입할 수 있다.

군 단위조직은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대로 지역별로 조직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형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재정은 회원단체(군여성농민회)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사업수익금과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회원단체들의 조직이 아직 광범위양계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기존의 조직들도 전반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 사무실 운영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정명채·민상기·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pp.87~88)

O9

O10

여성농민운동은 1977년 카톨릭농민회 여성부와 카톨릭농촌여성회(후에 카톨릭 여성농민회로 개칭)가 출범하면서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농촌여성의 의식화를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때의 활동내용은 농촌여성의 계몽 및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생활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약품함관리, 작은 가축 기르기), 공동체적 삶을 체험하기 위한 협동활동(공동모내기, 공동빨래터, 공동취사장) 등이었다. 이렇게 진행되던 여성농민 활동은 1980년대 들어 개방농정이 실시되면서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즉 1980년 광주사태이후 농민운동이 자주 발생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들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농민절반(즉 여성농민)의 역할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여성농민들도 정권 내지는 정책에 대항하여 농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농지세 시정운동, 농협 민주화 운동, 부당경지정리 반대운동 및 각종 잡부금 거부운

등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1987년 6.29 선언으로 그 동안 자체돼 왔던 국민의 요구가 분출되는 가운데 '87, 1988년에도 일련의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수세거부, 고추싸움,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및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운동에 여성농민 일부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하여 농민운동에 직접 동참하거나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농민 나름대로의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차원 여성농민 활동가 만남이 연 1회 정도 마련되었으며, 모임 때마다 여성농민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실천과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위원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그 역할이 막연하고 조직적 강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 다른 활동이나 성과가 없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후 별 다른 상황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88.12에 여성농민운동가들의 간담회가 망년회를 겸해 열렸다. 전국에 흩어져 나름대로 농민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농민운동상황, 여성농민운동 조직화의 사례와 여성농민조직의 위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농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조직구성작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89. 3에는 제 1차 활동가 간담회에서 '전국 여성농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89. 8 제2차 활동가 간담회에서는 전국조직의 활동내용과 역할 및 위상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조직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진행되어 '89.12.18 전국에서 50여개 군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여성농민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단일 여성농민운동조직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각 지역별로 도 및 군 단위 여성농민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결성되거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전국여성농민위원회는 1990년(->1992년: 연구팀)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정명채·민상기·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pp.84~85)

## O11

전여농이 1989년 말에 창립되기는 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활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또 조직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활동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었다. 따라서 전여농은 창립당시부터 조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데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왔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일반농민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 동안 여성농민들의 경우 주체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기보다는 가장인 남성의 지휘나 통솔하에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여성농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한 여성농민들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수수에 불과해 여성농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역활동에 참여시키고 이를 지속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개별 여성농민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전여농은 창립당시부터 조직활성화를 위해 지역적인 공동관심사를 찾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마을 단위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최대과제였다.

여성농민들의 공동 관심사는 지역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모성'보호, 탁아, 육아의 문제, 농부병, 부인병 등 여성건강 문제 등이었으며, 때로는 지역의 당면 문제로 대두된 골프장 건설반대와 같은 환경 문제 등이 여성농민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활동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기에는 인적 물적 여건이 취약하여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농의 사업이나 활동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여성농민회가 창립한 이후 전개한 활동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및 농어촌 발전대책에 대한 반대 등 농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의 농정실패에 대한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중에는 여성농민회 단독으로 전개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농 및 기타 농민단체 또는 재야운동조직들과 연대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비조사에 근거한 제값받기 운동 및 수입농산물의 유해성과 국민건강, 민족자존의 문제에 대한 선전, 교육을 전개하였다.

둘째, 학교급식 완전실현을 위한 운동이다. 1992년도 하반기 활동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쌀 전량수매를 위한 학교급식 완전실현 서명운동'전개를 결의하고 학교급식 완전실현을 위한 서명활동을 1992.10. 1부터 시작하고, 11.12에는 '쌀 전량수매 학교급식 완전실현 92 전국여성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내용은 학교급식의 목적에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의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학교급식의 확대보급을 도모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92.11.12 대회에서 '여성농민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들 수 있다. 개혁안에는 여성농민의 생활과 지위 향상을 위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성농민이 이 사회의 어느 집단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특히 국민을 먹여 살리며, 국가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업을 지키는 중요한 농업노동의 절반을 담당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대가와 지원,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②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젊은 사람들이 누구도 놀려 살려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편의시설이나 문화, 복지, 의료, 주거, 교육, 교통 등의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에서 농업을 지키고 사는 만큼,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농어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③ 여성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항상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게 여성농민 지도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며, 또한 아직 우리사회, 특히 농촌 지역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봉건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등이다. 회원들에게 이러한 개혁안 내용을 홍보, 교육하기 위하여 기관지('여성농민') 및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 마을 단위 교육시에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각종 토론회나 좌담회의 개최 및 참가, 성명서 발표 및 경제활동사업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 지역에서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위주로 해당 지역 여성농민회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골프장 건설반대,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등 운동적인 성격의 활동과 아울러 젓갈류 판매사업 등 경제사업도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정명채·민상기·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pp.84~85)

89년 12월 전국여성농민위원회로 창립하여 92년 1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으로 개칭하였다. 92년 11월 전량수매와 학교급식 실행을 위한 전국여성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p.314~315)

O12

임순분(회장)

O13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O14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정명채·민상기·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O2

경기노련

O3

O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O5

1988.12.28~?

O6

경기남부 지역

O7

공개 / 임의단체

O8

경기노련은 독립성이 강한 3개의 지구를 포괄하고 있는데다가 추진세력들 사이에 민주노조의 실질적인 역량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결성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주요한 쟁점은 지구협의회와 독자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며, 경기노련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의 성격을 연합체로 할 것인가, 협의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논란 끝에 결국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여 ‘각 지구의 독자적인 활동과 운영을 인정하되 전 지역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조직성격은 ‘협의회적 수준을 인정하되 연합적 성격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연합’의 명칭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각 지구마다 독자적인 사무실과 집행체계를 갖추고 경기노련에는 총무국과 선진국이라는 최소한의 체계만을 두었으며 경기노련의 통일성을 강화해가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였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3)

O9

1.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굳건히 연대하여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물리치고, 자주적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1. 우리는 노동3권의 완전한 확보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8시간 노동제 확립과 생계비 쟁취,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개선, 노동 현장의 민주화에 매진하여 노동자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 1. 우리는 개별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결성, 그리고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적극 지원한다. 1. 우리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어떠한 탄압과 간섭에도 단호히 맞서 공동으로 투쟁한다. 1. 우리는 전국의 모든 노동조합과 지역, 산업, 업종 등을 떠나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적극 연대, 협력하며, 노동조합운동의 적극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착취와 억압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민주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월간 흐름』, 1989. 2, 형성사)

O10

경기남부지역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많은 민주노조들이 결성되었지만, 여타 지역에 비해 적극적인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투쟁이 활발했던 안양지구의 경우 금성전선, 대우중공업, 만도기계, 오뚜기식품, 농심, 삼풍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파업투쟁이 전개되었지만 8월 중순 이후 집요해진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의해 안정적인 민주노조를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수원지구의 경우에는 삼성재벌 산하 대기업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평택의

금성사, 한일합섬 등 극히 소수의 대공장에서만 투쟁이 전개되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결성투쟁이 줄기차게 이어져 이들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각 지구별 위원장단 모임, 간부교류를 확대해 공동 체육대회, 문화행사 와 같은 대중적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8년에 접어들어 서울에서 진행된 맥스테크사 위장폐업 철회투쟁은 경기지역 노동자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지원방문, 집회참가와 같은 방법으로 연대투쟁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보적 연대활동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은 1988년 임투를 앞두고 조직된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 임금인상 대책위원회(이하 '임대위')'였다. 1988년 1월 11일에 결성된 '임대위'는 안양지구의 경원제지, 수원지구의 풍원산업, 안산지구의 삼양금속, 덕부진흥 등을 '간사 노조'로 선출하고 주변 노동조합과 지역내 노동운동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임투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임대위'는 임투를 앞둔 준비기간 동안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각 노동조합을 어느 정도 지원했지만, 정작 임금인상투쟁에 돌입하자 조직적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안양지구에서는 1988년 임투를 통해 '노동자 문화제', '택시총파업 지지대회', '노조탄압 규탄대회' 등 공동집회를 개최했으며, '안양, 군포, 의왕지구 노조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안산지구에서는 '동양고압고무 구사대 폭력난동', '삼양금속 장기파업'등을 지원하면서 연대역량을 모아나가 삼양금속이 승리함으로써 연대의 성과를 확실히 확보하기 시작했다. 수원지구에서도 아주파이프와 천지산업에 대한 지원투쟁이 결실을 보아 승리를 거두면서 연대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각 지구별 연대투쟁의 성과는 1988년 7월 '안양전자 공장이전 철회투쟁'을 계기로 경기남부지역 차원으로 모아졌다. 안양전자는 조합원60~70명 규모의 작은 사업장에 불과했지만 자본가의 노골적 탄압책동인 위장이전, 폐업에 맞서 지역내 노동자들의 지원과 연대투쟁을 이끌어내 마침내 승리를 거둬으로써 경기남부지역 연대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안양전자 이진 반대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3개지구를 포괄하는 경기남부지역 차원의 연대조직 건설을 결의하고 각 지구마다 '경기노련 추진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경기노련 건설을 위한 활동이 본격도에 올랐다.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추진위원회(이하 '경기노련 추진위'는 1988년 7월 22일 안양지구에서 먼저 결성되었고, 8월 12에는 안산지구, 11월 24일에는 수원지구에서 결성됨으로써 1988년 말에 각 지구별로 경기노련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각 지구별 '경기노련 추진위'는 하반기 동안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공동으로 지원하면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해 나갔고, 10월 들어 '경기노협 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공동교육, 일상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1988년 노동법 개정투쟁은 경기노련 건설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즉 전국노동자 등반대회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경기남부지역 노동자들이 하나의 지역단위로 참가하면서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국노동자대회에는 800여 명이나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하반기 사업을 치른 후 12월 28일 32개 노조 78명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을 창립하였다. 각 지구별 참가현황을 보면 안양지구가 14개 노조 3,000여 명, 수원지구에는 8개 노조 3,000여 명, 그리고 안산지구 10개 노조 약 2,000여 명 등 총32개 노조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노협 백서』, 1권 3장 1절-3)

O12

임석순(초대 위원장, 경원제지 위원장)

O13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추진위원회

O14

『전노협 백서』1권 / 『월간 흐름』, 1989. 2, 형성사

O1

서울사회과학연구소 (☞ <사건편>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서사연 사건 참조)

O2

서사연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89.~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역사는 전신인 상도연구실이 출범한 198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상도 연구실은 김진균 교수(서울대 사회학)를 중심으로 주로 사회학을 전공하는 소장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80년대 진보적인 학술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다. 1989년에 상도연구실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술운동을 위해 서울사회과학연구소로 개편되었다. 개편된 연구소에는 기존의 상도연구실 회원들 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새롭게 회원으로 가세하면서 명실상부한 사회과학연구소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O11

80년대 말 사회과학연구소는 절정에 달했던 사회구성체 논쟁과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던 사회주의의 위기라는 정세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민중운동진영 내의 이론적 논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 이른바 '서사연 사건'으로 다수의 연구원들이 구속되는 한편, 연구소 운영 및 방향을 둘러싼 내부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연구소는 위기를 겪게 된다.

서사연 사건이란 91년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연구원들이 국군기무사령부 및 검찰요원에 의해 연행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새로운 사회주의 진보 이념 모색을 위해 공동 집필한 저작인 '사회주의의 이론, 역사, 현실'이 공안당국에 의해 문제가 됐다. 93년~94년 새로운 성원들이 참여하면서 맑스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 공동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 192~193)

O12

김진균(金晋均, 서울대 사회학)

O13

상도연구소

O14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O1

성남터사랑청년회

O2

O3

O4

O5

1989.~현재

O6

성남

O7

공개 / ?

O8

O9

O10

성남지역에서 청년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역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광주항쟁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군부독재의 탄압에 고통받고 있던 1980년대 초반부터 성남에서는 '성남지역대학생연합'(성대연)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야학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또한 5.18의 진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쿠데타와 국민을 살육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1987년 6월항쟁 때는 당시 인구 40만인 성남시민 중에 3만여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전국민적인 항거로 직선제를 쟁취하는 투쟁에 '성대연'이 앞장서기도 하였다. 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성대연'은 '성남시학우회연합'(성학연)으로 발전하여 성남지역 대학생을 망라하는 단체로 발전하였고, 성남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성남청년회를 건설하였다. 87년 이후 성남지역 청년들은 민주화 과정에 돌풍처럼 휘몰아친 노동자대투쟁 때도 적극적인 연대로 성남지역에 민주노조를 세우는데 함께 하기도 하였다.

'성학연'은 1989년에는 대학생만이 아니라 직장청년과 함께 하기 위해 '터사랑청년회'로 발전함으로 성남청년회와 함께 성남지역을 대표하는 청년회가 된다. 당시 군부독재를 벗어나고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활동이 당시에는 청년들의 중요한 역할로 받아들였기에 성남지역 투쟁의 현장엔 청년회 회원들이 반드시 함께 하였다.

O11

이후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최초의 문민정부 출범이 현실화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지역 청년들의 문화 교양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터사랑청년회'에서는 '성남청년학교'를 개최하게 되고 1993년에는 '성남청년회'에서 '성남청년문화학교'를 개최하게 된다. 그리고 1995년 분당지역에 '분당청년회'가 만들어져 '분당청년문화학교'가 개최된다. 1995년까지 각 청년회에서 매년 1.2차례씩 문화교양강좌를 개최해 오다가 1996년부터는 '터사랑청년회' '성남청년회' '분당청년회'가 하나로 합쳐 제1기 '성남청년대학'을 개최하게 된다.

2003년 현재 풍물교실, 역사기행교실, 등산교실, 노래교실, 문학교실 등은 1992년 '성남청년학교'로부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전한 성남청년대학은 이후 성남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제2기 성남청년대학을 개최하고 제3기 청년대학에는 성남지역만이 아니라 용인, 하남, 여주, 이천 등으로 발전하여 함께 개최하게 된다.

제4기 청년대학 때는 성남, 용인, 여주, 이천지역의 청년들과 각 지역별로 함께 청년대학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는 자체로 노동자대학을 개최하고 주부들은 주부대학을 개최하여 발전하게 된다.

제5기 청년대학에는 각 지역별로 청년대학을 개최하게 되며, 성남지역도 '성남청년대학'과 '분당청년대학'을 따로 개최하였다.

성남청년대학은 햇수를 거듭할수록 자체의 발전은 물론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청년만이 아니라 노동자, 주부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O12

O13

성남지역대학생연합, 성남시학우회연합, 성남청년대학

O14

<http://www.idongari.com>



---

〈1990년〉

- 01.09 오산 다함께일어서는사람들(다섬)
  - 01.16 전노협지원공동대책위원회(전노협지원공대위)
    - 01.2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
    - 01.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 02.13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
  - 02.15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기문노련)
    - 03.21 한국노총직원노동조합
  - 03. 부천사랑청년회(부사청)
  - 04.28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
  - 04.13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 04.14 민족문화사연구소(민문연)
  - 04.21 민자당 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국민연합)
    - 04.24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 05.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 06.01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 07.10 한국정신대연구소
    - 07.13 (구속일자) 아라리연구원
  - 07.18 성남지역노조탄압분쇄공동대책위원회
    - 07.19 서울지역대학생문예연합
  - 08.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 09.05 전노협후원회
  - 09.25 단협변경명령철회 및 노조활동자유사수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 10. 상계어머니교실
    - 11.10 민중당
  - 11.1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 12.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연대회의)
-



O1

오산 다함께일어서는사람들

O2

다섬

O3

O4

O5

1990.01.~

O6

오산

O7

공개 / ?

O8

노동, 문화, 역사 3개 분과

O9

O10

O11

다섬은 오산 지역 문제에 대하여 논의 및 발전을 꾀하고 노동, 문화, 역사 등의 분과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역 노동단체로 활동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6)

O12

O13

O14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O1

전노협지원공동대책위원회

(☞ <단체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전노협후원회 참조 // ☞ <사건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창립대회 참조)

O2

전노협 지원공대위

O3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한국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전국농민협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빈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문학작가회의,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민족미술협의회, 노동과 건강 연구회, 전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공해추방운동연합, 서울노동자문화예술단체협의회,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범민족평화문화협의회,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국회의원 이철, 이해찬, 이상수, 노무현

O4

O5

1990.01.16~?

O6

O7

공개 / ?

O8

전노협 지원공대위는 참가조직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와 민교협, 전민련, 여성단체, 기독교 쪽에서 각 1인씩의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선임하고, 대표자회의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두었으며, 집행위원장은 전국노운협과 진교조 중에서 맡기로 내정되었다. 그밖에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총무, 기획, 홍보, 선전 담당자를 두어 일상적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전노협 백서』, 제1권 8장 5절)

O10

1989년 11월 26일에 있었던 민중대회를 계기로 여러 민중운동 단체들은 민중연대 전선확보를 위한 투쟁의 한 발판을 전노협 건설 지원투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노태우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이 전국회의 산하 지역조직, 이후 전노협의 핵심 골간조직이 될 지노협을 휩쓸고 있었고, 이러한 탄압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은 다시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특히 전노협 건설과 상반기 임금인상 투쟁을 겨냥한 이데올로기 공세도 거세져 ‘경제위기론’과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옥죄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회의는 전노협 창립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전국노운협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단체, 전민련으로 대표되는 전국민족민주단체, 전농연과 전빈련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단체, 민교협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와 학생운동진영은 ‘전노협 건설 지원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중연대 투쟁의 전선을 확고하게 구축하기로 하고, ‘전노협 지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던 것이다..

전노협 지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노협 지원공대위’)는 11.26민중대회 이후 그 결성을 위한 논의가 제기되어 오다가 12월17일 전노협 창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자 이를 계기로 표면화되기 시작

한다. 특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주도적으로 전노협 지원공대위의 산파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 1월 16일 오전 11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전노협 지원공대위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오후 1시 약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이 개최되었다. (『전노협 백서』, 제1권 8장 5절 )

O11

전노협 지원공대위의 전노협 지원활동은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전노협 건설까지 전노협 건설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전노협 지원공대위는 90년 1월 10일, 회원용 소책자를 발간하여 전노협 건설의 정당성을 밝혔고, 1월 15일에는 공개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노협의 활동방향에 대한 문제들을 환기시켰다. 1월 15일 오후 2시 성문밖교회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전노협 지원공대위가 각계각층과 가진 전노협 건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설명 및 간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전노협 건설을 앞두고 전노협 건설을 확보하기 위한 각 계각층의 지지서명운동을 1월17일부터 1월20일까지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노협 지원공대위 소속 단체인 민교협은 학단협의 후원을 받아 ‘전노협 건설의 당위성 평가’라는 주제 하에 공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후 전노협 지원공대위는 전노협 건설을 전후한 1월21일에서 1월23일 사이에 대대적인 광고지원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중 전국노동자신문에 “전노협! 민주노조의 전국적 구심체인 전노협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입니다. 전노협 지원공동대책위원회는 전노협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는 1천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의 의지를 한데 모아 현정권과 소수독점재벌의 부당한 탄압을 뚫고 민주, 평등 세상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전노협 지원공동대책위원회는 전노협이 자본과 정권에 의해 집중적인 탄압을 받고 있을 때 중요한 지원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위원회는 자본의 엄혹한 탄압을 민중연대를 통해 돌파하려 했던 ‘국민연합’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수행했으며, 민교협, 민변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노협후원회’를 만들어 내는 모태가 되어 그 이후 지속적인 전노협 지원사업을 전개했던 것이다. (『전노협 백서』, 제1권 8장 5절 )

O12

O13

전노협후원회

O14

『전노협 백서』, 제1권 8장 5절

O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O2

건약

O5

1990.01.21~현재

O10

87년 6.10항쟁이 전국을 민주화 열기로 달아 올리던 그 때. 보수적이라고만 치부해 왔던 약사사회에서도 호헌 철폐를 위한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6월항쟁 이후 서명을 주도했던 약사들은 자신들이 있는 지역 곳곳에서 뜻 있는 약사들을 규합해 단체를 형성하는데, 부산 「약성(약사의 소리)」, 서울 「건강사회실현약사회」, 대전 「타래」, 광주전남 지역 「건강사회실현약사회」, 대구 「청년약사회」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지역 약사 조직들은 88년부터 서로 교류하다가 1990년 1월 21일 전국 단일 조직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창립한다.

O11

1987년

의료의 상품화와 독점화, 의료 소외현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 사회의 참된 약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84학번 10여명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인 모임 시작.

1988년

\* 9월 : 가칭 '대구지역 청년 약사 모임 준비위원회(약칭 : 청약)' 결성.

\* 12월 : 전국 지역 대표자 모임 참가.

1989년

\* 2월 : '전국약사조직건설 준비위원회' 결성.

1989년

\* 6월 : 전국 약사수련회 개최.

\* 9월 : 전국 대표자회의 개최

\* 10월 : 사무실 입소식 및 노동분과의 건강진료실 개소식.

\* 12월 : '한국 의료보장의 실태와 약사의 역할' 세미나 개최(첫 공식행사).

1990년

\* 1월 : 21일 / 전건약 창립대회(대한약사회관. 발기인 총 452명)

\* 2월 : 농촌진료실 개소식(고령 개진면)

\* 4월 : 8일/ 제1회 총회 및 지부 결성대회(오후 2시. 한국화장품 4층 강당)

\* 10월 : '산업보건연구회' 신설

\* 11월 : 개국약사 모임 결성.

\* 12월 : 이웃교회 진료실 해체.

1991년

\* 3월 : 낙동강 폐놀 오염사태에 대한 성명서 발표.

\* 5월 :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망 규탄 보건의료인 대책위 참가. 강경대 살인 규탄 보건의료인 모임 참가.

\* 7월 : 개국약사모임 - 생활보건운동, 폐건전지 수거운동, 건강계시판.

\* 9월 : 향약강좌, 대한약사회 직선제 정관 개정을 위한 추진기구 참여.

1992년

- \* 5-6월 : 개국약사모임-'폐건전지 수거운동' 활성화
- \* 7월 :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공동사업'
- \* 8월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 발족.
- \* 11월 : 전국적인 보건의료정책 홍보를 위해 보건의료인 1만인 서명운동

0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단체편>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 / 전노협 지원공동대책위원회 참조 // ☞ <사건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 창립대회 참조)

02

전노협

03

서노협, 인노협, 경기노련, 성남노련, 부노협, 대전준비위, 전북노련, 광노협, 마창노련, 부양노련, 대구노련, 진민노협, 포항노협준비위, 울노협준비위 등 14개 지역조직과 연전노협, 병노련 등 2개 업종조직 600여 노조 193,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 (전교조는 참관)

04

05

1990.01.22~1995.11.12 (민주노총 결성)

06

07

공개 / 비합법 (정부당국 규정)

08

전노협 조직체계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지역은 80년대 노동조합의 연대투쟁의 핵심적인 공간이었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성장한 민주노조들은 자연스럽게 지노협으로 결집하였다. 따라서 전노협이 지노협을 자신의 기간조직으로 삼은 것은 누구에게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전노협은 대공장노조와 사무직 업종노조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하에 '대공장노동조합 특위'와 '업종분과위원회'를 통해 조직확대 강화사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90년의 대기업연대회의 결성을 기점으로 대공장과 업종이 전노협에 포괄되기보다는 전노협과는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면서 전노협의 확대 강화사업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계속 탄압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전노협이 새로운 민주노조 건설운동이나 신규가입사업에 힘을 쏟을 여지도 없었기에 전노협의 조직규모는 계속 감소해 갔다.

전노협의 사무총국은 90년 2실 9국으로 출발하여 94년 2실 14국으로 더욱 분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규모가 방대하여 비효율적 운영문제도 발생하였고 국장과 부장들의 결원시 이를 메꾸낼 인원의 부족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사무총국의 각 국장은 지역에서 차출된 대표자가 역임하기로 되어 있지만, 국장의 공백으로 부장들이 국장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상황도 존재하였다. 전노협은 민주노총(준)이 결성되어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체편이 시작되자 주요 상근 활동가들을 민주노총(준)에 파견하고, 전노협 내부는 조직팀과 정책팀으로 축소 운영하였다. 한편 전노협 중앙조직과 단위노조를 연결하는 조직체계는 상당히 취약했다. 기업별 노조에서 각 지역내 단위노조의 대표자들을 모두 중앙조직의 의사결정권자로 보낼 수는 없었기에, 중앙조직의 사업기획과 지도력이 각 단위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전노협의 조직운영은 실무집행을 담당하는 활동가 중심의 사무총국과 모든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규약상 조합원들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총회와 대의원대회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은 중앙위원회 혹은 대표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은 지노협의 대표자 혹은 간부, 주요 단위사업장의 노조대표자들이었다. 94년 11월 이전까지 전노협의 중앙위원회는 약 1개월에 1회 정도 개최되었다. 회의

안전 역시 전노협의 모든 사업을 포괄하였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와 특징』, 『산업노동연구』, 제1권 2호, 김진균, 1996)

O9

<강 령> 1990. 1. 22. 제정. 1990. 1. 20. 개정. 1993. 3. 7. 개정 : 1. 우리는 주 40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한다. 1. 우리는 직종, 남녀, 학력간 차별임금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 1. 우리는 해고, 실업의 방지와 실업자에 대한 생활대책 및 취업보장을 위한 고용안정 보장 제도를 쟁취한다. 1. 우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쟁취한다. 1. 우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완전 쟁취한다. 1. 우리는 전국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자본과 권력의 노동운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노동자와 전 민중의 생활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확립, 무상의무교육과 의료보장제도의 실시, 불평등한 조세제도의 개혁 및 복지재정지출 확대, 물가안정, 공해방지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쟁취한다. 1. 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철폐와 모성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퇴폐적인 외래문화를 척결하고 건강한 민중문화를 확립한다. 1. 우리는 노동자와 전 민중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한다. 1. 우리는 제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세계노동자들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와 특징』: 『산업노동연구』제1권 2호, 김진균, 1996)

O10

88년 상반기 임투를 거치면서 공장울타리를 넘어 지역별, 업종별로 단결하였던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단결권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벽을 부셔내기 위하여 88년 8월에 모든 지역, 업종조직을 망라하고 당시 민주노조운동에 힘쓰고 있던 노동운동체와 결합하여 '89년 12월 16일 전노협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그 해 11월에는 전국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대모가 결집하여 '천만노동자 총단결로 노동악법 철폐'를 내건 노동자대회가 치러졌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곧 '지역, 업종별노동조합 전국회의' 구성으로 이어졌고 89년 '전국임금인상 및 노동법개정 투쟁 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전국적 공동투쟁을 추진하였다. 89년 12월 16일 전노협 창립준비위원회 발족하였고 89년 1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를 필두로 4월 부천 49개 노조 총파업, 서울 50개 노조 총파업, 인천 주안지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11월에는 철통같은 원천봉쇄를 뚫고 '노동악법철폐와 전노협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러한 투쟁 과정을 통하여 전노협은 90년 1월 22일 보수세력이 3당 합당선언을 하는 그 날 경찰의 한 원천봉쇄를 뚫고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하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6년에 대한 자체평가』, 전선:민주노총 자료, 1995)

그러나 이날 대회는 전노협이 앞으로 가야할 다른 진로를 예상케 해주는 듯 순탄치 않게 진행되었다. 정부당국은 이미 전노협이 비합법단체임을 공식선언해 놓고, 구체적인 적용법규까지 공표했었기 때문에 한판 격돌이 불가피한 국면이었다. 우선 이날 적지 않은 연행자가 발생, 당국이 과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전노협은 이날 대외에 당국의 원천봉쇄작전에도 불구하고 8백여명의 인원을 동원함으로써 상당수준의 결속력을 과시한 셈이다. (『조선일보』 1990. 1.23)

O11

90-91년까지는 전노협을 창립하고 자본과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에 맞서 가열찬 탄압저지투쟁을 전개하여 조직을 사수하는 데 주력했던 시기이다. 온갖 탄압을 뚫고 전노협이 창립되자 90년에는 업무조사, 노조전임자임금 불지급, 공권력투입, 지도부 구속, 수배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전

노협 와해공작을 강화하였으며 드디어 현대중공업노조 파업투쟁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기점으로 5월 1일 역사적인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90년에 이어 91년에도 박창수, 강경대열사 폭력살인을 계기로 조성된 범국민적 5월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운동탄압저지와 반민자당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91년에는 탄압저지투쟁과 더불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자대중의 요구를 폭넓게 담아내기 위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집행력을 보완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실태에 기초한 최저생계비모형을 제작하여 제시하였고 고용불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노동법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들을 수행하였다. 90년 창립이후 지속적인 탄압으로 조직력이 일정 정도 약화되었지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와 민주화된 대기업노조들과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전개하고 90년 11월 노동자대회를 업종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91년 하반기에는 한국정부의 ILO 가입을 계기로 국내외 노동정세가 변화됨에 따라 'ILO 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라는 한시적인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하여 민주노총 총단결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92-93년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저지하고 전노협을 사수한 뒤 상대적으로 조직이 안정된 시기로서 그간의 투쟁에서 훼손된 조직을 정비, 확대, 강화함과 동시에 현장대중과 결합하기 위한 일상활동이 강화되는 등 전노협의 조직력강화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서 그동안의 투쟁과정에서 확대된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민주노조 총단결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 노동자책임론, 5대 더하기 운동, 총액임금제 등 이념공세를 강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압박해 나갔다. 92년 사업은 첫째 전노협 조직의 정비 및 확대강화, 둘째 공동임투를 통한 임금억제정책의 분쇄와 생계비 확보, 셋째 ILO공대위의 확대강화와 이를 토대로 한 노운탄분쇄 및 노동법개정투쟁의 전개, 넷째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다섯째 노동자의 정치역량강화와 민중연대 강화라는 주요 목표를 가지고 전개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노협조직의 정비 및 확대강화, 공동임투를 통한 임금억제정책의 분쇄와 생계비 확보, 공대위 확대강화와 이를 토대로 한 노운탄분쇄 및 노동법개정투쟁의 전개, 고용안정대책 마련, 노동자의 정치역량강화와 민중연대라는 사업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6년에 대한 자체평가」, 전선:민주노총 자료, 1995)

O12

단병호(段炳浩), 양규현

O13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 전국임금인상 및 노동법개정투쟁 투쟁본부, 민주노총

O1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6년에 대한 자체평가」, 전선:민주노총 자료, 1995 /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와 특징」, 『산업노동연구』, 제1권 2호, 김진균, 1996 / 『조선일보』 1990. 1.23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宣言으로 본 80년대 民族·民主운동』, 「전노협」 건설로 총진군하자」(89.11.12), 89~92쪽

**(참조) '전국회의'에서 '민주노총'까지**

-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전국회의)(1988. 12.23)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1990. 1.22)

- 14개 지역노조협의회 및 2개 업종별 노조협의회 결성
- 지역중심, 금속업종 중심, 중소기업 중심
-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1990. 5)
- 진보성향의 사무잡전문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13개 업종별 연맹 결성 및 전노협과 연대하여 활동
-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조협의회 : 16개 대기업노조가 협의체수준의 대기업연대회의 결성(연대회의) (1990.12)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1993. 6)
- 전노협, 업종회의, 현충련, 대노협 등 4개 단체를 주축으로 결성
- 민주노조진영의 조직적 단결 모색 (제2노총 설립 준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탄생 (1995.11.12)
- 전노협, 전노대 등의 재야단체 운동이념 계승
- 정치세력화추구, 경영·정책참가 등의 정치적 성격 강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합법성 인정 (1999.11)

(참조: 신철영/전 전국노운협 공동의장, “전노협을 돌아본다”, 『현장에서 미래를』, 5호, 1995.12.)

민주노총의 출범에 따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가 발전적으로 해산한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전노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했었다는 인연으로 이 글을 요청받고 망설임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애써온 분들에게 혹시 누라도 끼치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염려 때문이다.

(전노협의 출범과 3당 합당)

1990년 1월 22일은 눈이 많이 내렸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자 수도권 일대의 교통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날 전노협은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비밀리에 창립 총회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전노협이 생기기 몇 달 전부터 노태우 정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단골로 써 먹던 용공시비에서부터 이후의 업무 조사까지 동원되었기에 새로이 탄생하는 조직의 앞날이 험난함을 예견할 수 있었다. 결성대 회 당일엔 갑자기 눈이 내린 탓으로 비밀리에 연락하여 참석이 예정되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채 속전속결로 결성식이 끝났고 이후 들이닥치는 경찰과 대치를 하였다. 오래 전부터 수배를 받고 있던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는 식을 끝내자마자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이날 3당 합당이 선포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소위 여소야대 정국으로 궁지에 몰렸던 노태우씨가 민주당(김영삼 총재), 공화당(김종필 총재)과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전노협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가득함을 예고하였다.

(88년 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법개정 운동)

88년은 노동법개정 운동을 전국적, 대중적으로 전개한 해이다. 87년 노동자 대파업투쟁의 여세를 몰아 민주노조들이 지역별, 업종별로 단결하기 시작하였다. 88년 하반기에는 이런 힘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노동법개정 운동을 펼치고 이를 모아서 민주노조의 전국조직화를 한 다는 공감대들이 광범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법개정 운동의 깃발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이하 전국노운협)가 먼저 들었다. 당시의 전국노운협은 노동운동을 지원해 온 전국의 거의 모든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다. 6월초에 공청회를 시작으로 노동법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야 3당의 공조체제로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전국 적 움직임의 총화는 그해 11월 13일 전국 노동자 대회로 절정을 이루었다.

1970년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안고 분신했던 전태일씨의 분신 18주년이기도 했던 이 날 전국에서 모인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세대 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평화행진을 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커 올라 온 노동자들의 힘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필자도 노우협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준비과정에서는 노심초사하였지만 막상 이날 행사를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맛보았다.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와 전노협)

88년 노동자 대회를 거치면서 앞으로 각 지역과 업종별 노동조합 조직의 대표자들이 정례적인 회의를 하면서 이후의 공동사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틀 후에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전국회의)"로 이름지었고 전국노우협도 참가 단체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전국회의는 89년 중반에 형성된 소위 공안정국으로 인하여 몇 달 뒤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울산에 가서 숙박꼭질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던 기억 등이 새롭다.

1년여에 걸친 이런 과정을 거쳐 전노협이 탄생되었다.

(전노협 결성 시기를 둘러싼 논쟁)

89년 여름이 되자 전국노우협 내부에서 전노협의 결성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한쪽은 "7월경에 조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다른 한 쪽은 "상당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조직을 하여야 된다"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하여 양측이 팽팽하게 논쟁을 하였다. 물론 전노협을 만드는 시기는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결정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지도부들에게도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일이었다. '조직을 하기 전에 전국적인 조사를 하여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89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전노협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 논쟁은 절충 조정되었다.

지역조직들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7월이나 또는 직후에 전노협을 조직하는 것은 어렵다 는 것이 판명되었고 이후 최대한 서두른 결과가 90년 1월 22일이었다.

(생산직과 사무전문직의 갈등)

민주노총의 결성을 보면서 한 가지 감회가 있다. 이미 89년 초반에서부터 제조업과 사무 전문직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조업 노조 지도부들은 사무전문직을 싸안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과 포용력이 부족했던 약점을 갖고 있었다. 당시는 최근처럼 많은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이 생겨나지 못했던 때였다. 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 전문노련, 건설노련 정도가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제조업 노동조합은 전투성이 강한 반면에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경우 전투성은 떨어졌지만 제조업 노동조합과는 다른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차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전문직 노조 지도부들은 노동조합 전국조직화(전노협)에 함께 참여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문제와 지도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만한 여 유가 제조업 노동조합의 지도부에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전노협은 사무전문직노동조합 을 아우르지 못하고 제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사무전문직과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아쉽지만 "대중운동이 성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교훈이기도 한 것 같다.

(전노협에 지워진 정치적 부담과 대중성)

전국회의에 참가하거나 전노협 회의에 참관하는 기회에 여러가지 아쉬움을 느꼈다. 우선,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은 기본적으로 과격한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당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3당 합당을 통하여 일거에 거대여당을 만들어 낸 정부로서는 전노협이 유연한 대중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전노협=과격단체”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이를 몰아 세우기에 급급하였고, 반면 전노협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야운동도 전노협에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 대중조직으로서 전노협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였다.

전노협의 회의 때마다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다. ‘전국적인 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에 조합원들의 현실적 조건이 따라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결정하는 현상이 안타까웠다. 대중조직에 대한 넉넉한 이해를 바탕으로 훨씬 유연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새로 탄생한 민주노총을 정부는 인정하지도 공식적으로 상대하지도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여전히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이제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주변에 보다 많은 세력들이 노조를 지지하고 국민들의 마음 속에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확산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적인 넉넉함과 유연함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전노협의 발전적인 해체가 한국노동조합운동이 국민 속에 튼튼히 뿌리내리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O1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 (☞ <사건편>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 사건

O2

90.02.13~ (연행 및 구속일자)

O3

O4

O5

O6

O7

비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O11

공안수사기관은 1990. 2. 13.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최종명, 이승용, 왕해전, 박남일, 이병기(2. 13.), 이경숙(3. 12.), 임종명, 김형철(4. 29.) 등 공개단체인 북부노동자회관 노동자정치학교 강사 등을 연행하여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노맹 조직원 신형록이 진술한 상부선의 인상착의가 최종명과 비슷하여 수사기관이 최종명을 연행하면서 비롯되었다. 수사기관은 최종명에게 사노맹의 중앙위원이라는 자백을 강요하다가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최종명이 활동하고 있던 서울 북부지역의 노동단체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노동인권회관 편, 『노동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1집』, 역사비평사, 1991, 75쪽).

당초 서울시경은 ‘북부지역노동자연맹’(이하 북노련)을 이적단체로 발표하였다. 즉 1990년 3월 11일 “서울 북부지역 및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군 일대의 기업체 근로자와 제적된 운동권 학생들인 ‘북노련’ 노동자정치학교장 왕해전씨 등 4명은 ‘서울북부노동자상담소, 노동자교육연구소, 노동자 사랑방’등을 개설, 주체철학을 남한변혁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세워 헌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이룩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것이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8~299쪽)

그러나 서울 북부지역의 노동현장 활동가들을 시경 대공과에서 연행하여 20여일 동안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로 ‘조직사건’으로 만들려다가 어렵게 되자 『노동운동론 연구』(백산서당 간)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으로 기소한 것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8~299쪽)

O12

최종명, 이승용, 왕해전, 박남일, 이병기, 이경숙, 임종명, 김형철

O13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u.or.kr>, 연도미상  
노동인권회관 편, 『노동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1집』, 역사비평사, 199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연구팀 의견: 기소내용 변경 및 선고 형량 등을 볼 때, 사건의 조작 가능성 농후>

O1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 <사건편>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기문연) 사건 참조)

O2

기문노련

O5

90.02.15 (구속일자)

O6

O7

공개 / 비합법 (치안본부 발표) (관련자측-단체 실체 부인)

O8

O9

O10

O11

치안본부는 1990년 2월 15일 이승재, 최은석, 이덕준, 김근주, 김선희, 임영환, 민병근, 강문대, 이덕주, 박현희, 조선경, 박문재 등을 구속하고, 이들이 기문노련을 결성하여 서울대와 구로공단 주변에서 대학생 및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족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의식화학습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대에 공식 등록된 씨클인 기독교문화연구회 내의 노동부문 모임인 “기독교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기소하였고, 공개적인 회지인 ‘대학기독신문’, ‘복음청년’이 이적표현물로 기소되었다.

관련자들은 야학활동, 농촌봉사, 공장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념에 의거하여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억눌린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신앙고백적인 선교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p.18)

또한 “치안본부가 발표한 소위 ‘기독교문화노동연합(기문노련)’이라는 단체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대책위의 공식적 입장이었다(『기문노련사건에 대한 복음주의 기독교인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라는 성명서, 1990. 3. 10, 5쪽)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p296)

O12

이승재, 최은석, 이덕준, 김근주, 김선희, 임영환, 민병근, 강문대, 이덕주, 박현희, 조선경, 박문재

O13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연구팀 자료>

\* 최은석:

<사안1> 1990. 2. 14.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

□ 사건개요

○ 1990년 2월 15일 치안본부는 “서울대와 구로공단 주변에서 대학생 및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족민주

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의식화학습을 해온 최은석·이덕준·임영환·강문대 등 1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고 발표한 사건임.

- 사건관련자들은 “야학활동·농촌봉사·공장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억눌린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신앙고백적인 선교활동이었으며 기독교문화연구회라는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검찰의 발표와 같이 이적단체인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을 구성한 적은 없고 조직개편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임.

□ 항거대상

- 노태우 정권

□ 항거행위

- 신청인 최은석(1964. 12. 6. 생)은 1986년 5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휴학 중, 1986년 6월 주변의 기독교학생들과 함께 「기독교문화연구회」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사회과학, 신학과 관련된 서적을 중심으로 학습모임을 진행함.

- 1986년 11월부터 1년 이상을 신길동 소재 남서울교회에서 「신길야학」을 개설하여 야학교사로 활동하고, 1987년 5월에 봉천5동 세칭 가마니골에 들어가 기초공동체를 구성하여 청소년공부방과 탁아소, 의료지원활동 등을 하였으며 1988년 5월 이후에는 방위로 복무하면서 구로5동에서 탁아소를 개설하고, 11월에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제일교회에 「목동야학」을 개설하여 야학교사로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함(사건경위서 기록 114쪽).

※ 「기독교문화운동연합」 조직의 구성은 기독교문화연구회와 봉천5동 기초공동체와 야학 교사, 대학기독교신문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조직임. 활동 주 내용은 “공정선거 감시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복음주의 청년학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정선거감시활동과 그 이후 빈민지역 공부방, 탁아소, 야학, 사회과학세미나 등임.

- 1988년 6월 6일부터 1989년 8월까지 한국자본주의 성격, 80년대 학생운동 및 그 논쟁사, 해방후 노동운동사, 제3세계혁명운동사,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등을 주제로 학습모임을 진행함.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 이념학습(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 1988년 6월 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대학촌교회에서 박군재, 강문대, 유욱, 이종철, 임영환, 김성주, 민병곤, 김근주, 김선희 등과 만나 기독교문화운동연합(이하 기문연) 제 2차 대회 모임을 갖고 “민족사적 입장에서 본 기문연 위상” 제하의 유인물을 교재로 학습을 함.

※ “민족사적 입장에서 본 기문연의 위상”에 대한 사상 학습모임 내용- …한국의 경제적 토대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이며, 따라서 사회구성체상으로 자본주의, 단계상으로는 국가독점 자본주의이고, 사회성격상 식민지 반봉건 사회이며 이에 따라 기본모순은 계급모순으로 주요모순은 민족모순으로 본다… 한국사회의 모순구조인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미제를 축출시키기 위한 민주화, 자주화의 과제 달성을 위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기문연의 위상이다. 민족사적 입장에서 기문연은 사회변혁을 위해 보수교회의 영성으로부터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변혁의 전위에 서야 한다.

- 1989년 5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1”, “한국자본주의 성격에 관하여”, “80년대 학생운동 및 그 논쟁사”, “해방후 노동운동사”, “러시아 혁명사”, “제3세계혁명운동사”, “동학사상과 갑오농민전쟁”, “농민의 사회적 존재형태”, “노동사회화의 진전”, “한국독점 자본과 임노동”, “89공장활동 지침서”, “최근 사회변혁운동과 노동운동”등의 내용으로 학습모임을 진행함.

○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제 7조 3항, 1항)

- 1989년 8월 3일 박문재, 이승재, 이덕준, 강문대, 임영환, 김선미와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4동 이문재의 자취방에서 기문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조직을 재편하여 대중운동단체로 뿌리내리기 위해 수련회 개최를 합의함.
- 1989년 8월 25일부터 3일간 경기도 용문산 서울모텔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기문연 역사와 평가, 하나님나라의 운동론, 정치노선, 조직노선, 정세분석,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련회를 개최함.
- 1989년 8월 27일 「기독교 노동자회」산하에 노동위원회, 학생위원회, 지역교회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에 조직원을 두어 활동하게 함으로서 이적단체를 구성함.

※ 「기독교문화운동연합」 정치노선, 조직노선, 강령(판결문 기록 34~43쪽)

- 정치노선 :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인 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따른다.
- 조직노선 : 기문연을 전투성과 조직보위력을 갖춘 조직으로 하기위하여 공개·비공개조직과 합법·반합법조직으로 구분하여 비밀의 집중과 분산을 동시에 기한다. 공개 대중운동기구로서 「기독교문화운동연합」을 두고 소속단체인 노동기문연, 학생기문연, 기초공동체는 완전히 독자적인 논의구조와 집행체계를 가진다. 비공개조직으로는 기독교노동자회를 두고 투쟁을 통해 단련된 활동가로 구성된 총회성격의 중앙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 기획기관으로서 정책기획실, 전문적 부문운동을 담당하는 산하단체로서 노동위원회, 학생위원회, 지역교회위원회를 둔다. 비공개 조직인 노동위원회, 학생위원회에 정치소조를 둔다. 노동기문연, 학생기문연, 지역교회위원회에 비공개 간사 1인씩을 임명하여 지도와 연락을 담당케 한다. 공개조직은 학습과 대중선전을 담당하고, 비공개조직은 정치투쟁을 담당하며 공개조직을 내용적으로 지도한다.
- 조직사업 : 학생기문연은 전체사업 집행을 위하여 캠퍼스 연합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치학습과 성경공부를 캠퍼스별로 한다. 노동기문연은 외곽단체인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대중조직을 꾀한다. 기초공동체운동은 기문연 운동의 매개고리 역할을 하며 지역운동성을 과도하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 교회운동은 기문연 회원을 각 교회에 파견하여 사람을 견인하는 활동을 한다. 선전사업을 위해 기존의 대학기독신문을 기문연 선전책의 관장하에 두고 노동자교육을 위한 정치신문을 발간한다.
- 강령(하나님 나라 운동론- 인간해방선언): "남한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 반동권력은...예속독점 자본의 이익에 목적의식적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집단이자 조직화된 폭력이다...예속적 군사파쇼와의 투쟁 그 자체는 제국주의의 축출과...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의 수립으로 나아가는 핵심적 과제이다. "변혁운동의 성격과 당면과제": "...물질적 정치적 조건을 제약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옹호자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을 분쇄하고자 하는 것이 당면 변혁의 성격이다...프로레타리아가 중심이 되어 사회변혁을 향한 대의에 입각하여 당면변혁을 민중의 힘으로 성취시킬 때 변혁의 결과는 군사파쇼타도와 제국주의 축출에 이어 급격히 사회변혁으로 나아갈 현실적 토대를 갖게될 것이다...". "기문연의 조직적 과제": 기문연은 한국사회 변혁과정에서 같은 노선의 정파와는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하고 혁명세력내의 온갖 기회주의적 조류와 비타협적인 사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혁명세력내의 사상적, 조직적 통일에 힘써야 한다.

□ 검토의견 - 이적성 및 민주화운동 여부

-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사건의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의 시에는 재판부의 판결대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활동과 궤를 같이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인지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억눌린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신앙고백적인 선교활동 이

었으며 기독교문화연구회라는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검찰의 발표와 같이 이적단체인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을 구성한 적은 없고 조직개편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적성과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적성 여부>

○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조직한 계속적 결합체인 '결사'나 일시적 결합체인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적어도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는 갖춘 단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강령이나 목표,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함.

○ 당시 재판부에 의하면

- "우리 사회에 대하여 부르조아 파쇼권력을 매개로 미·일 등 제국주의 및 국내독점자본이 민중에 대한 폭력적 수탈을 자행하는 신식민주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노동자·농민·도시민을 중심으로 민중통일전선을 구축 미·일등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권력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혁명으로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내용이 북한의 정치노선, 대남선전·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이익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독교노동자회를 구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적단체 구성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 1989년 8월 기문연 4차 총회에서 발표된 "인간해방선언"은 기문연에서 성경강해를 맡아하던 박문재 전도사가 마르크스의 휴머니즘과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체계화시킨 것이고, 이 대회는 그 이전까지 소박하게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대선시 공감단 활동, 개별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던 기문연의 활동방식을 바꾸어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해보자는 의도였음. 평생 민주화운동을 하려면 노동운동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현장이전을 준비하려는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

- 기문연은 총회(전진대회)가 있는 지 한달 후 1989년 9월 조직내부의 불미한 사건으로 인해 조직을 해산하였고, 기독교노동자회는 존재한 적이 없는 단체라고 주장함.(사건경위서 기록 111~112쪽)

○ 신청인의 주장으로 볼 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탁아소, 공부방, 야학활동), 노동운동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진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보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 사례인 것으로 판단됨.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 의식화 학습 및 조직활동은 1980년대 학생운동출신들의 활동가들의 일반적인 활동으로서, 신청인의 기문연 활동은 국민기본권을 억압하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와 소외된 이들에 대한 신앙 고백적 활동을 통한 노동자·빈민의 권익신장과 이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보안법 위반 유형 가운데 3형(국가보안법 단독사건: 항거활동>이적성=균형성 고려) 및 5형(국가보안법 단독사건: 표현물의 위해성 無, 이적목적 無, 항거활동 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국민기본권 신장을 위한 탁아소, 공부방, 야학활동, 학습모임운영 등 활동경력을 고려하여 관련자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O1

한국노총직원노동조합

O2

O13

O4

O5

1990.03.21~?

O6

O7

공개 / ?

O10

결성대회는 치렀으나 구청에서 신고증교부 거부함(『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O11

한국노총직원노조는 90년 4월 노조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최영철 노동부장관과 관할 영등포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O12

이명호(위원장)

O13

O14

『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O1

부천사랑청년회

O2

부사청

O3

O4

O5

1990.03~?

O6

부천

O7

공개 / ?

O8

O9

O10

1989년 5월 준비위를 발족하여 1990년 3월 창립하였다.

O11

부천사랑청년회는 지역적 특수성이 큰 부천의 민주적 구심으로, 건강한 청년문화의 전파자로 서기 위해 문화, 교양 소모임을 조직의 기본 골간로 부천지역의 단합을 도모하는 사업과 비정기 기획사업(말씀씨, 건강교실 등)을 전개해 조직의 확대, 강화 작업을 꾀하였다.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p.105)

O12

양시모(회장)

O13

O14

『'90전국청년단체간부수련회 자료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1990

O1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단체편> 전국대학강사협의회 참조)

O2

전강노

O3

O4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O5

1990.04.28~?

O6

O7

O8

O9

1. 우리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민주화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2. 우리는 대학강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선다.
3. 우리는 학문, 사상의 자유로운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외의 단체들과 연대한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소개> (전강노 사이트 : <http://kangno.com>)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하 '전강노'로 약칭)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대학강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 획득 및 교육,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 전국의 대학강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열악한 대학 여건의 모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대학강사들은 그러한 자신의 불리한 처지에 대해 적절히 대항하기보다는 하루바삐 전임교수가 되어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임용제도만 하더라도 그 동안 대학당국과 강사간의 공식적인 '계약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촉이나 형식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 시험출제, 성적처리와 같이 강의에 필수적인 여타 작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사들의 불안정한 신분구조와 열악한 처우상태는 곧바로 강사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계수단의 확보를 위한 학문 외적인 일(소위 아르바이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부실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위험을 낳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았던 것입니다. 곧 대학강사의 교육, 연구 여건의 미비, 열악한 생계조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학강사제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강사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기란 매우 어려우며 게다가 각 대학에 빨빨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강사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학행정의 주요 골격이 교육부의 지도와 통제에 의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이 강사로 책정 등 세부적인 문제를 대부분 담합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고립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대학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전국대학강사협의회에서 출발하여 강사들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각 대학마다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단위 대학별로 도움을 주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 공동의 문제를 전국의 강사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사들을 위한 전국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강노의 결성과 활동이 가져온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대학강사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상을 지니는가에 대해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강사라는 자리가 잠시 거쳐가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강사들은 실제로는 교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으로는 교원이 아닌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도 대학교육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 대학강사는 전임교원으로 가는 짧은 연결통로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교원으로 직업화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대학 강의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의 수가 대학 전임교원의 숫자와 비슷한 이러한 강사들, 바로 그들을 교수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사회에 대해 전강노는 대학강사들도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적 지위를 지닌 존재임을 명확히 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육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독자적으로 혹은 연대하여 기울임으로써 대학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강노는 교육노동자로서 교육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조직으로서 자기 위상을 정립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으로는 교원이 아니라 (일용직)노동자라는 노동부 및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전강협은 노동자로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노동조합법 제 3조) 노동조합(즉 전강노)을 결성하고 임의단체가 아니라 노동부로부터 그 합법성을 인정받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설립신고필증을 얻어내어 합법성을 쟁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전강노는 대학강사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으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각종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강사가 노동자로 구분된다면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법적 지위와 혜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전강노는 그것을 위해 5만 강사들의 조직적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 O10

전국 28개 대학 시간강사 300여명 고려대 강당에서 '전국대학강사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전국대학강사협의회'는 90년 4월 28일 서울대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위원장에 조재희(31, 고려대 정치학과 강사)를 선출했다. 이들은 결성선언문에서 '강사들은 대학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면서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민족민주학문창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대학운영의 민주화 등을 이룩하자고 결의했다. 전강노는 서울대 고려대 전남대 등 3개 대학을 포함, 13개 대학강사협의회를 분회로 전환해 전국단일노조로서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내고 13개 업종별노조연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0. 4.29)

#### O11

전국대학강사 노동조합은 전국단일노조로 소속노조 및 조합원수는 1,500여명에 이르렀다.(『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2

조재희(趙在喜, 위원장)

O13

전국대학강사협의회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 「조선일보」, 1990. 4.29

O1

민중의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

O2

민연추

O3

O4

O5

1990.04.13~

O6

O7

공개 / ?

O8

O9

O10

1989년 8.18 영등포을구 재선거 이후 전민련 제2차 중앙위원회(9월 25일-26일)에서 합법정당 건설을 둘러싸고 시기상조론 대 양날개론 등 공개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내외의 주객관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공식적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밝히고 합법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조직내 성원들은 그 직을 사임하고 추진토록 한다고 결정하였고 10월 6일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등 전민련 탈퇴파 30여명이 중심이 되어 '새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10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새정당의 이념을 민중민주주의로 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목표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진보련(연구팀: 진보정치연합)과의 꾸준한 교섭 결과 10월 26일 진보련 제8차 전국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통합이 성사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11월 10일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진보정당 준비모임, 대표간사: 이우재)'이 발족하였다.

1990년 2월 20일 전민련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당활동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이 결의안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3월 3일 제2기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정당활동의 지지를 주장해 왔던 이부영, 이재오, 여익구 등이 전민련을 탈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3월 12일 백기완, 박형규, 계훈제, 이소선 등 4명의 재야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민련 고문직 사퇴와 함께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결성을 공식 제안하였다. 3월 21일 '진보정당 준비모임'이 민연추 결성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면서 진보정당 건설은 급박한 국면으로 돌입하였고 4월 13일 447명의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민연추(집행위원장 : 이부영 / 조직위원장 : 장기표)가 공식 출범하였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독자적 진보정당 건설에 주력하던 노동운동가들도 1990년 4월 11일 '민중정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6월 '민중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 위원장 : 김문수 / 집행위원장 : 유인렬)'를 결성하고 민연추와 결합하였다. (조현연, 「운동MAP」)

O11

이미 독자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야당과의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논쟁이 재연(민주연합당론 대 독자정당론)되었다. 5월 29일 이부영, 고영구, 박계동, 제정구 등 야권통합파 14명이 일괄사퇴서를 제출하였고 5월 31일 '범민주 수권정당 결성을 위한 통합추진회의(통추회의)'를 결성하여 야권통합을 위한 독자적인 행동에 돌입하였다.

통추회의 공동대표(기독교: 김관석, 박형규 / 불교: 지선 / 여성: 이우정, 박순경 / 법조계: 유현석, 박세경 / 학계: 장을병 / 문화예술: 고은, 김규동 / 호남: 명노근 / 영남: 최성목) 상임실행위원 (오충일, 이부영, 제정구, 이재정, 박종화, 김동완, 여익구, 윤순녀). 1990년 12월 21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각각 선호하는 야당을 기준으로 민주연합과 신민주연합으로 분리되어 각각 민주당과 평민당으로 흡수되었다. (조현연, 「운동MAP」)

O12

이소선(李小仙), 박형규(朴炯圭), 백기완(白基玩), 계훈제(桂勳梯)

O13

O14

조현연, 「운동MAP」

O1

민족문학사연구소

O2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90.04.14~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대표-기획실-연구실-편집위원회-사무국

O9

연구소 창립의 목적은 연구소 규약 2조에 “우리 민족문학사를 과학적·실천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민족문학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창립의 취지는 창립취지문에 잘 요약되어 있는 바, ① 연구소의 과제로, “그 동안의 연구작업의 고립분산성과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현재의 민족사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적, 실천적이며 체계적인 문학사 연구”를 들고 있고, ②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과정 및 결과의 사적 소유라는 기존 연구풍토의 지양’과 ‘조직적인 공동연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평과 연구의 결합’을 제시한 점도 인상적이다. ③ 아울러 당시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철학, 법학, 예술 각 분야에서 태동하고 있던 진보적 학술운동에의 적극적 동참을 다짐하고 있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p.170~171)

O10

군사독재 시절 아카데미즘이 노정해온 비실천성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연구소 창립을 위한 물밑 노력은 그 이전부터 싹터 왔던 바, 1987년 2월 10여명의 소장, 중견 국문학자들이 모여 ‘민족문학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국문학 연구의 방안’이라는 주제를 토론을 가진 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절감, 이후에 정기적·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회를 가지면서 ‘민족·민중 현실에 대한 실천적 관심과 국문학연구의 결합’이라는 이념적 바탕 위에서의 공동 연구에 동의하는 회원들을 확충해 나갔다. 1989년 8월에는 일정한 연구역량이 확충된 데다가, 공동연구를 좀 더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연구소의 창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동의, 연구소 창립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으며, 독자적인 연구 공간을 마련하고 회원 배부용 회지인 「민족문학사연구소 회보」를 매월 발행하는 등 연구소 조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90년 4월에 60여명의 회원으로 정식 창립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170)

O11

1990년 4월 14일 연세대 알렌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 이래 1991년 7월 첫 연구성과로서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창작과 비평사)을 발간했으며 현재 연구소의 기관지인 『민족문학사연구』를 비롯한 활발한 간행사업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O12

<1990> 이선영(공동대표), 임형택(공동대표), 김영(기획실장), 최원식(연구실장), 김종철(연구부실장), 김윤태(사무국장)

<1991> 이선영(공동대표), 임형택(공동대표), 최원식(편집위원장), 홍정선(기획실장), 윤재민(연구실장), 김현양(사무국장), 이주형(감사), 김영(감사)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178)

O13

O14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O1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

(☞ <사건편>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 결성대회 참조)

O2

국민연합

O3

전대협, 전민련, 전노협, 전교조, 민교협, 진보정당준비모임, 전농준비위, 민자통, 전민련, 전청대협, 자민통, 전노운협, 기사련, 여연, 건약, 인의협

O4

O5

1990.04.21~?

O6

O7

공개 / 반합법(?)

O8

O9

O10

1989년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은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전국적인 통일전선체 조직으로서 대중정치투쟁을 주도해 왔고, 민중생존권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민련은 참가범위의 협소함, 조직적·정치적 위상 및 성격과 관련된 조직 내부의 논쟁, 대중적 정치지도력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1989년 한 해 동안 투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지 못했다. 이에 민중운동진영은 1990년 전노협 결성을 계기로 ‘민중 중심의 반정부투쟁 주도, 실질적인 민중생존권 투쟁의 지원’ 등을 담당할 한시적 공동투쟁체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투쟁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회의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4월 국민연합 결성시까지 진행되었다. 이어서 국민연합은 1990년 4월 민자당 일당독재 음모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한시적 공동투쟁체로 결성되었다. 국민연합이 내건 목표는 첫째, 민자당의 장기집권 음모를 분쇄하고 민중기본권의 쟁취 둘째, 민중진영이 중심이 되어 민자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한 대중투쟁 전선의 구축 셋째, 이를 통한 민중의 정치의식 고양 및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 지향 등이었다. (『전노협 백서』, 제3권 5장 3절)

전노협, 전교조 등 14개 재야단체는 학생과 재야인사, 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3시 연세대강당에서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결성식을 가졌다. (『조선일보』1990. 4.22)

O11

국민연합은 1990년 4월 이후 투쟁의 선봉에서 활동하면서 전노협, 전국노운협, 전농, 전민련, 전교조, 전대협 등이 참가한 민중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전민련에 참가하지 않은 주요 대중단체를 총망라한 투쟁의 구심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국민연합은 4월 28일 제5차 대표자 회의, 5월 7일 제6차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를 기치로 하는 민자당 창당일 투쟁 계획, 광주항쟁 10주년 기념과 국민대회, 주택문제 및 민중생존권 투쟁 지원 계획, 현대중공업 파업투쟁 및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 지원 계획 등을 제시하고 1990년 5월 초의 민중투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심수의 전면 석방과 수배 해제,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철폐와 부동산 투기의 근절, 영구임대주택 건설,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반민주악법의 철폐, 농민 생존권 보장

등의 당면 8대 투쟁강령을 발표하고 투쟁하였다.

국민연합은 1990년 6월 10일 이후 조직 진로와 야권과의 협상 등 조직문제에 집중하여 조직 내외적으로 조직적 위상과 성격, 그리고 향후 조직적 발전전망과 투쟁과제에 대한 대대적인 논쟁을 전개하였다. “현 국민연합이 한시적 공동투쟁체이기는 하나, 1990년 들어서면서 전체 대중투쟁을 주도해왔고 1990년 5월 정국을 이끌어 왔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약한 결합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층 대중운동 단체를 비롯하여 전체 민족민주운동 단체를 포괄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렇듯 사실상 전체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합에 걸맞게 국민연합의 장·단기적인 투쟁방향과 조직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연합의 조직발전과 관련해서 제기된 핵심적 내용은 “첫째, 전민련을 강화하고 범민주연합 전선을 위해 국민연합을 해소하자는 주장 둘째, 민중정당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견해 셋째, 국민연합은 한계가 있는 조직이지만 성과를 발전적으로 수렴할 것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이었다. 특히 세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합을 명실상부한 민중통일전선인 민중대연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중통일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국민연합은 한시적 공동투쟁체에서 상설 공동투쟁체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합은 협의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연합체적 단일조직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연합은 대중적 투쟁역량을 갖춘 투쟁기관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연합은 투쟁의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기획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합은 합법·반합법·비합법을 막론하고 모든 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노협 백서』, 제3권 5장 3절)

O12

O13

O14 『전노협 백서』, 제3권

O1

전국농민회총연맹 (☞ <단체편> 전국농민협회(전농협) /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련) 참조)

O2

전농

O3

O4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O5

1990.04.24~현재

O6

O7

공개 / 합법

O8

군농민회로 구성하고, 군농민회 산하 회원을 전농의 회원으로 하였다. 군농민회는 3개이상의 면지회 혹은 50명 이상의 산재 회원의 결합으로 결성하며 3개이상의 마을분회 혹은 20명 이상의 산재 회원의 결합으로 면지회를 결성하였다. 분회는 5명 이상의 마을 회원으로 결성하였다. 조직체계는 전국-도연맹-군농민회-면지회-마을분회로 이루어졌다. (『말』, 51호, 1990. 5, pp111~113)

중앙 단위에는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 상임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상설의결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실무집행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와 감사, 의장단, 대변인, 특별위원회, 작목별위원회, 경제협동사업단, 사무처 및 정책실이 있다. 중앙 단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에는 조직국, 선전국, 교육국, 총무국, 연대사업국, 협동사업국, 문화국, 투쟁국, 후생복지국, 국제국, 조직통일국 등이 있으며, 각종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 및 대안을 준비하는 정책실에는 정책연구부, 편집부, 정세분석부, 조사자료부 등이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그 동안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경제협동사업 특별위원회, 조국통일 특별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정명채·민상기·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p.72)

O9

1. 경자유전에 입각하여 농민적 농지소유와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한다. 1.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형 농업을 이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득보장형 농업을 실현한다. 1.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전개한다. 1. 민족자존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대비형 농업을 추진한다. 1. 전업적 가족농을 기반으로 농업의 협동화를 구축한다. 1. 농축산물 가공, 저장, 유통을 농업 생산과 연계하여 농민적 경영을 확대한다. 1. 농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체계를 개혁한다. 1. 현장 중심의 실용성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민교육을 전문화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한다. 1. 농업산재 및 농작물 재해대책을 완비하여 농업재해 방지, 복구 및 보상을 제도화한다. 1. 농민의 노후 생활과 복지를 실현한다. 1. 농민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농민건강권을 실현한다. 1.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한다. 1.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적 공동체 문화를 확산한다. 1. 생산농민으로서 여성농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농촌지역의 여성억압적 봉건잔재를 일소한다. 1. 농협 등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한다. 1. 농업관련 행정을 민주화하여 농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한다. 1. 농업보호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 조세, 금융정책을

실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농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한다. 1. 나라의 민주화, 민족의 자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한다.(<http://junnong.org/main2-3.htm>)

O10

전농의 조직적인 싸움 89년의 쌀값투쟁에서 싸웠다. 작년 89년 9월 8일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련), 전국농민협회(전농협), 독자적 군농민회(독자농)의 대표들은 쌀값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정부가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한 자리수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조직으로 '쌀값보장과 전량수매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책위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공동투쟁을 합의했다. 쌀대위는 정부의 건국대, 세종대에서 쌀대회를 강행하고 도,군단위별로 현장투쟁에 주력하기로 함으로써 쌀값보장, 전량수매를 요구하며 쌀투쟁에 나섰으나 농민 조직의 분립으로 인해 투쟁은 부진하였다. 따라서 쌀대위 집행부는 쌀대위 평가를 통해 전농련과 전농협이 조직의 통일에 사심없이 복무해줄 것을 촉구했다. 쌀 투쟁의 평가를 바탕으로 세 갈래 농민운동진영은 '단일조직건설'의 절박성을 공동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농련과 전농협은 공식, 비공식 협의를 진행시켜, 90년 1월 11일 두 단체 의장단·실무자연석회의에서 '단일조직을 시급히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농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는 ▲공개 합법 대중 조직의 원칙 ▲군농민회 주체원칙 ▲빈,소농 주도 원칙 ▲사회변혁 지향원칙 등 전농 결성의 4원칙을 채택하였다. 전농은 4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결성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말』, 51호, 1990. 5, pp.111~113)

O11

1990년 'UR협상거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분쇄 및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1991년 3월 23일 '국민의료보험법 쟁취 및 90, 91년 쌀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 4월 24일 국민의료보험법 재의결 촉구대회, 5월 고 강경대 열사 추모투쟁 및 공안통치 분쇄와 노태우 정권 퇴진 투쟁 전개, 10월-12월 '쌀수입 저지 및 쌀값 보장·전량수매 시군 농민대회'와 '추곡수매 상임위 날치기통과 규탄, 본회의 통과 저지 긴급 농성투쟁'등 4차례에 걸친 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쌀투쟁은 92년까지 이어져 1월 부시방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고 9월 쌀값보장 전량수매 농업대개혁 쟁취를 위한 농민대회 등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http://www.junnong.org>)

(활동일지) (<http://www.junnong.org>)

(1990)

4. 24.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및 창립대의원대회(의장 권종대)

※ 72개 군농민회, 6개도연맹(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 창립

9. 7. UR협상거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분쇄 및 제값받기 제1차 전국농민대회

: 3만5천명 참석, 연행자 3천9백96명, 4개도연맹 의장 및 사무국장 수배령 떨어짐.

9. 22. UR협상거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분쇄 및 제값받기 제2차 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

: 9.7 대회를 시군으로 확산하여 45개 군, 7천여명 참석.

11.10-20 쌀값보장·전량수매쟁취 및 UR협상거부 3차 전국농민대회

: 50여개 군에서 1만3천명 참가, 벼가마 태우기, 이장단의 수매거부 및 사표제출, 고교생의 수업거부, 고속도로 점거 등 전개

11월 초- 12월 말 : 공판장을 중심으로 수매정책에 분노한 농민들의 벼가마 태우기가 전국적으로 확산, 이장단의 집단사표 제출, 조합장으로부터 전량수매의 각서를 받아내기도 하였음.

12. 4 50여명 국회의원회관 진입, 농성투쟁 전개 (4시간만에 해산)

(1991)

2. 7. 제2기 대의원대회 (의장 권중대)
3. '91 영농발대식
3. 23. 국민의료보험법 쟁취 및 90, 91년 쌀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 (전남대) : 1천여명 집결. 조선대에서 전야제를 치루었으나 새벽, 전남대로 대오를 이동. 새벽 5시 30분 경 경찰병력 2,000여명이 조선대를 침탈하여 벼 1백가마와 막걸리, 안주 등을 탈취해 감. 이후 도경국장을 특수강도로 고발.
4. 24 국민의료보험법 재의결 촉구대회
4. 26 국민의료보험법 재의결 촉구 전농 선봉대 국회 정문 앞 농성투쟁 돌입. 이날 전원 연행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강경대군 타살사건으로 인한 정세변화로 전원 석방됨.
5. 고 강경대 열사 추모투쟁 및 공안통치 분쇄와 노태우 정권 퇴진 투쟁 전개 : 의장의 비상명령권 발동, 농번기를 극복하고 민족민주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냄.
10. 쌀투쟁 1.-추수과업 전개 : 평야별 결의대회 전개 - 10/1 예당평야 결의대회, 10/8 호남평야 결의대회 이후 하루 추수과업 전개. 10/25 강원영서지역 결의대회, 충북 중부지역 결의대회, 나주평야 결의대회
- 10말-11월 쌀투쟁 2. - 쌀수입 저지 및 쌀값 보장·전량수매 시군 농민대회 - 57개 군 농민회가 참여
- 11.26. 쌀투쟁 3. - 미국쌀 수입저지 및 쌀값보장 전량수매 전국농민대회 : 농민 1만 5천여명, 시민 학생 포함 2만 5천여명 참가.
12. 쌀투쟁 4. - 추곡수매 상임위 날치기통과 규탄, 본회의 통과 저지 긴급 농성투쟁 - 220명의 농성단이 5차례의 연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농성과 선전전 전개, 18명의 선봉대가 국회진입에 성공.

(1992)

1. 6 쌀투쟁 5. - 부시방한 반대투쟁 : 영등포역에서 1백여명의 농민의 참여속에 부시방한 반대 및 쌀수입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한 후 종각, 미대사관, 광화문 등에서 가두시위 전개.
1. 21 오전 6시, 명동성당 나락 400가마 적재.
3. 3. 제3기 대의원대회 (의장 배종렬)  
※ 1개군 농민회 가입 (총87개), 경기·강원도연맹 창립
3. '92 영농발대식
4. 29.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이취임식
9. 1. 쌀값보장 전량수매 농업대개혁 쟁취를 위한 농민대회: 6개 도연맹, 8천5백여명이 참여함.
9. 3 가트 사무총장 던켈 방한저지 투쟁 : 100여명 세종문화회관 앞
10. 13 추곡수매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전농, 전여농, 한농연, 농단협, 민주당, 국민당)
10. 17 전농 일담배 생산자회 담배인삼공사 항의방문 - 5%인상철회와 생산비 1kg 6,200원 보장
10. 26. 농정대개혁안 공청회 (농업기술자협회 회관)
11. 9, 10 과천정부종합2청사 진입투쟁, 여의도 상경투쟁  
: 정부의 추곡수매 5%인상과 8백50만섬 수매에 대한부당성 폭로, 철회를 요구하며 1천1백만섬 수매 및 15%인상을 요구. 전남 200여명 과천청사 진입, 1층 로비 점거. 7층 경제기획원실 방문하여 장관과의 면담요청 - 7층에서 전경에게 포위됨.  
250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 전원연행.

(1993)

1. 27. 제4기 대의원대회(의장 배종렬)
2. 15. UR협상거부 및 쌀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O12

권중대(勸鍾大, 1기 의장), 손명재(1기 의장), 민일근(1기 부의장), 정광훈(1기 부의장), 강기중(1기 사무처장), 신연관(1기 정책실장), 김대환(1기 감사), 모영주(1기 감사), 김만철(1기 감사)

O13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련), 전국농민협회(전농협), 독자적 군농민회(독자농)

O14

『말』, 51호, 1990. 5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unnong.org>

O1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O2

업종회의

O3

언론노련, 사무노련, 전교조, 건설노련, 전문노련, 민출노협, 전강노, 대학노련, 화물노련, 시설관리노동조합

O5

1990.05~?

O10

전면적 대정부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던 90년 KBS투쟁을 계기로 사무직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가 1990년 5월에 마침내 건설되었다. 14개 연맹 586개 노조, 20만 조합원으로 출범. 업종회의에는 언론노련,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등이 함께 했다. 건설된 '업종회의' 의장은 권영길 언론노련 초대위원장이 겸임.

O11

O12

권영길(의장)

O1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사건 참조)

O2

O3

O4

O5

1990.06.01~?

O6

O7

비공개 / 비합법 (치안본부 발표)

O8

O9

O10

O11

치안본부는 1990년 11월 20일 김진철, 김진웅, 설상웅, 송명재 등 8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1990년 6월 1일 사무실을 빌려 『국가와 혁명』 등의 자료집을 만들어 사상학습활동을 해오면서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국가건설을 획책해왔다고 발표했다(『한겨레신문』, 1990.10.25) 1991년 12월 2일 송영인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법정에서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결성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위 단체가 정치적 조직이 아닌 씨클적 수준의 조직이었고, 조직결성대회를 개최하거나 강령과 규약을 작성·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김진국 변호사 작성의 「사건개요」)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p.22~23)

O12

김진철, 김진웅, 설상웅, 송명재, 송영인

O13

O14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O1

한국정신대연구소 (☞ <단체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참조)

O2

O5

1990.07.10~현재

O9

<연구소 소개> (홈페이지 : <http://www.truetruth.org>)

한국정신대연구소는 1990년 7월에 문을 연 이후, 일제 시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정신대 연구소는 50여년 동안 역사의 그늘에 묻혀있던 이 문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 기록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피해 할머니 조사'와 '위안부 관련 자료 연구',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 및 '관련 운동 단체와의 연대사업'입니다.

연구소 발족이래 지금까지는, 위안부 할머니 한분 한분을 찾아보며 피해 당시의 증언을 상세히 채록하고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를 조사, 발굴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연구 활동에 한층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 사업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O10

O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채록과 발간 사업, 연구조사 사업, 교육 홍보 사업을 전개하였다.

조사연구활동 : 국내외에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실태 파악 및 증언채록 / 관련 자료 발굴 및 연구

출판활동 :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발간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서 발간 / 위안부 관련 알기 쉬운 대중서 발간 / 자료집 발간

학술교류활동 : 관련 연구자와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교육홍보활동 : 대중교육프로그램마련 / 위안부 문제 관련 대중 강연 활동 지원 / 위안부 관련 문서 및 도서 자료실 운영 / 정신대 연구소 소식지 발간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련 단체 지원 및 연대활동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 집 등 관련단체 지원 및 연대 / 정기 수요시위 참가

<활동 일지> (홈페이지 : <http://www.truetruth.org>)

**1990년**

정신대 연구회 발족

정신대문제와 관련된 문서 자료 조사

**199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원활동

피해자 신고 접수 지원 활동

피해자 조사와 실태 파악

**1992년**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0여명의 피해자 증언 채록

**1993년**

증언집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출간.

아시아연대회의 참석

한일합동연구회 참석

**1994년**

중국 무한지역 피해자 실태 조사, 증언 채록  
국제 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1995년**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발간  
학술대회 <청산하지 못했던 일제 시기의 문제> 개최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 실태와 연구에 대한 검토 보고서

**1996년**

증언2집 발간을 위한 증언 채록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 연대회의 참석

**1997년**

증언집2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출간  
논문집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에 다수 참여,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발간  
훈 할머니 증언 채록을 위한 캄보디아 방문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기초교육  
'한국정신대연구소'로 개칭하고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

**1998년**

증언3집을 위한 증언채록  
중국 동북지역 생존피해자 조사(경남정신대문제 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과 함께)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전시용 판넬 작성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관 공무원 및 활동가 교육> 실시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작성  
8월부터 소식지 <정신대연구소 소식> 발간

**1999년**

증언집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출간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진상규명을 위한 사할린 조사 및 국내 피해자 녹취작업 참여  
(사)시민운동지원기금 후원으로 <군'위안부' 문제와 우리 사회> 서울 워크샵 개최

**2000년**

증언4집을 위한 증언채록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진상규명을 위한 남태평양 조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바로 알기>(근간)  
중국증언집 2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근간)  
증언집4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근간)

O14

홈페이지 : <http://www.truetruth.org>

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O1

아라리연구원 (☞<사건편> 「제주4·3 민중항쟁」 아라리연구원 구속사건 참조)

O2

O3

O4

O5

90.07.13 (구속일자)

O6

O7

공개 / ?

O8

O9

O10

O11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책으로 출판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의 원장 김명식, 도서출판 소나무 대표인 유재현씨 등이 1990년 7월 13일 구속되었다. 4·3 사건과 미국의 책임을 밝힌 이 책자의 발행을 “제주 4·3 폭동이 미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남한지역을 해방시키는 반미구국투쟁이자 남한지역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으로 .....찬양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지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p.504)

O12

O13

O14

『국가보안법 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O1

성남지역 노조탄압분쇄공동대책위원회

O2

O3

O4

O5

1990.07.18~?

O6

성남

O7

O8

O9

O10

성남노련 산하 섬유업종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업무방해’, ‘불법’ 등 갖은 이유를 붙여 노조간부의 구속, 고소사태가 빈발하는 등 노조마다 비슷한 양상으로 노조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18일 노조탄압분쇄 공동대위를 결성하였다.

O11

생존권 사수와 노조와해 책동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해 갈 것을 결의하고 리본달기, 성명서 배포, 공단홍보 등을 진행하였다. (한영고부, 국동, 소예산업 등) (『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p.409)

O12

O13

O14

『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O1

서울지역대학생문예연합

O2

O3

O4

전국대학생문학연합

O5

1990.07.19~?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대학생문예조직은 학생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일찌감치 조직화에 성공하고 있었다. 일찍이 대학 내에는 문학동인이나 서클이 어디할 것 없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중반 이전 학생운동 내의 논의와 실천이 격화되면서 문학이 오히려 변혁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의식들이 팽배하여 많은 학생들이 문학의 곁을 떠났다. 그러나 87년 이후 학생들은 문학의 본성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문학을 주요 무기로 학생운동에 복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동인 또는 씨클형태로 존재하던 문학조직들을 체질개선하고 보다 튼튼한 문예조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 결실이 90년 7월 19일에 「서울지역대학생문예연합」의 출범으로 나타났고 각 단위에 지구별 조직을 꾸리고 있었다. (『정세연구』, 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p.159)

O11

O12

O13

전국대학생문학연합

O14

『정세연구』, 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O1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단체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사건편> 사노맹 사건 참조)

O2

사과원

O3

O4

사노맹

O5

1990.08(?)~1993.08.11

O6

O7

비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O11

경찰은 조국교수(울산대) 등 10명이 1990년 8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특히 조교수는 국가보안법연구등 진보적인 법학연구를 해오던 이로서 사노맹 총책(백태웅)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과, 『우리사상』 1호 발간에 잠시 기획자문을 해주었다는 사실, 사과원에서 그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관련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구속한 것이었다. 한편 검찰은 1993년 8월 11일 조국 교수 등 7명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일부에 대하여 반국가단체구성·가입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적단체구성·가입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기소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하였다. (<http://chunma.yu.ac.kr>)

황주석, 조국 등이 반국가단체인 사과원을 구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의 이적단체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 1813 판결).

대법원 판결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적단체 역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된다 할 것이니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 판결은 사과원이 그 직접적이고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이론을 연구하여 이를 선전·전파하고 장차 성립하게 될 사회주의정당의 강령을 기초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 사과원이 그 자체로써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로서 단순한 사회주의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p22)

O12

김경옥, 황주석, 조국

O13

사노맹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O1

전노협후원회

O5

1990.09.05~?

O10

1990년 6월 25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예술계, 학계, 법조, 의료, 문화, 종교, 여성 등에서 10인 내외로 하여 총 67명의 평의원을 구성)한 전노협 후원회는 1990년 9월 5일 전노협 후원회 결성식을 하고 1990년 11월에는 '재독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후원회'를 결성하였다. 전노협 후원회 결성식에는 총32명의 평의원 중 18명이 참석하였다. 평의원 이외에 전노협 고문인 백기완을 비롯하여 지도위원, 중앙위원, 사무국 임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전노협백서」 제2권 6장 1절)

O12

김진균

O14

「전노협백서」 제2권 6장

O1

단협변경명령철회 및 노조활동자유사수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O2

O3

인노협, 인천지역노조활성화추진위, 의료보험노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노총 인천지역본부 등  
80여개 노조

O4

O5

1990.09.25~?

O6

인천

O7

공개 / ?

O8

O9

O10

‘단체협약 변경명령 총회투쟁보고 및 인천지역대책회의’를 열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대위는 인노협, 인천지역노조활성화추진위, 의료보험노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노총(한국노총: 연구팀) 인천지역본부 등의 인천지역 전노조를 포괄하는 최초의 연대기구였다. (『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p.413)

O11

인천지역 노조를 대상으로 단협변경명령 철회 및 노조활동자유 사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p.417)

O12

O13

O14

『1991 한국사회연감』, 한국사회연구소, 백산서당, 1991

O1

상계어머니교실

O2

O3

O4

빈민여성교육선교원

O5

1990.10~현재 (상계어머니학교)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90년 10월 나눔의 집과 소망의 집 연대사업으로 시작하여 상계어머니교실을 개원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p298)

O11

이후 92년 3월 상계어머니학교로 확대하여 빈민지역 여성교육을 전담하고 지역내 교육사업, 결연사업, 환경운동, 지역 단오잔치 및 마을신문 제작 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p298)

O12

최광기(대표)

O13

상계어머니교실

O14

‘사노라면’(정기간행물)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

민중당 (☞ <단체편> 통합민중당 참조)

O2

O3

O4

O5

1990.11.10~1992.02.07 (통합민중당)

O6

O7

공개 / 합법

O8

민중당은 상임대표위원을 포함한 3인 공동대표제를 채택했다. 당헌의 계급·계층조직으로는 노동·농민·여성·청년학생·교수위원회 등 5개 부문위원회를 두었다. 5개 핵심조직과 함께 당의 집행·정책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기획조정실·정책위원회 등을 두고 조국통일위원회 등 9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말』, 54호, 1990.12, pp.42~45)

O9

전문 16개항과 본문 14조 53개항으로 이루어진 당 강령은 ‘민중권력 수립’의 전제하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전반에 대한 변혁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당의 강령은 오세철(연세대)·이병천(강원대)·김형기(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한 교수위원회와 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정책위원회(위원장 장기표) 등의 세 분과가 모여 구성된 ‘정강정책기초위원회’의 수십 차례의 회의 끝에 완성되었다. 민중당의 경제강령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담은 민중 주도의 계획적 시장경제 체제(자본주의+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독점재벌해체나 기간산업 국영화 등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가운데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계획경제 공평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편 시장경제의 부정부성·반민중성과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한다는 것이다. 원래 경제강령의 초안은 기간산업과 금융기관의 국유화로 되어 있었으나 재차 토론과 심의과정중에 국유화만이 현재 사회체제상 반드시 효율적인 경제체제는 아니라는 지적 속에 ‘공사합동’이나 ‘민영화’의 조항도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말』, 54호, 1990.12, pp.42~45)

O10

민중당 추진세력의 핵심은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백기완씨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던 ‘독자후보파’라고 할 수 있다. 이 ‘독자후보파’는 88년 총선에서 ‘민중의 당’으로 이어졌고 그 후에 진보정치연합(89.9) - 새 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89.10. 4) - 새 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89.10. 4) - 진보정당 준비모임(89.11.10) 형태로 조직을 변화시켜왔다. 재야운동권에서 ‘합법정당추진론’으로 불리는 이런 흐름에 동력이 붙은 계기는 90년 3월의 ‘전민련 제2차 대의원대회’였다. 전민련내의 이부영(전 전민련 상임위원장), 여익구(전 전민련 민주쟁취위원장), 이재오(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씨 등이 ‘합법정당추진 결성에 대한 안’을 제출했고, 이는 비록 부결되었으나 재야운동권에서 ‘합법정당’에 대한 논의를 전면으로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 곧이어 이부영씨 등 전민련 정당추진론자와 장기표(민중당 정책위원장) 등 ‘진보정당 준비모임’ 세력 등이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로 통합되면서 각계 각층의 정당결성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뒤에 민연추는 6월 21일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63명의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이우재, 김상기 집행위원장 이재오 / 상임고문: 백기완, 권처홍 / 사무처장: 이재오)로 탈바꿈했고, 9~10월경 각 지구당 창당대회를 거쳐 11월 10일 중앙당 창당

에 이르렀다. (『말』, 54호, 1990.12, pp.42~45)

진보적 노선을 표방하는 민중당이 90년 11월 10일 창당전당대회를 갖고 정식출범했다. 민중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대의원과 당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전당대회를 열고 상임대표위원에 이우재 창당준비비상상임대표, 대표위원에 김상기교수, 김낙중교수 등을 선출했다. 민중당은 또 이날 백기완씨를 당 고문에 추대했으며, 사무총장에 이재오, 정책위원장에 장기표, 기획조정실장에 정태윤, 대외협력위원장에 조춘구, 대변인에 정문화씨를 각각 임명했다. (『조선일보』, 1990.11.11)

#### O11

창당 당시 전국적으로 51개의 지구당(서울: 12, 부산: 1, 대구: 4, 인천: 6, 광주: 1, 경기: 8, 전남: 1, 전북: 1, 경북: 10, 경남: 4, 강원: 2, 충북: 1)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민중운동단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듯이 1980년대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의 총체적 응집체로 보기에는 왜소한 조직으로 출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민중당 창당시에 노동자계급과의 조직적 결합은 부족했지만 전국 51개 지구당 중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이 모두 1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민운동가가 15명을 차지함으로써 민중당 지구당은 대부분 노동운동가나 농민운동가들로 구성. 뿐만 아니라 전체 1,021명의 창당 발기인 중에서도 노동자가 314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구당의 경우 위원장 외에 주요 운동가들이 상당수 위원장 주변에 포진. 여기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직원이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인민노련: 연구팀) 조직원, 그리고 기타 PD파에 속하는 소수의 정파 조직원들이 상당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비합법운동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법공간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민중당을 견인하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조직원들을 참여시켰던 것이라고 보인다. (조현연, 『운동 MAP』) 1990년 8월 22일 '평화통일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정책토론회를 시발로 1991년 10월 21일 제10차 토론회까지 선거에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서울시 지하철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1990. 12. 2-22일), 낙동강 폐놀 유출사건 관련, 환경처 앞 항의시위(1991. 4. 24) 등 민생문제와 직결된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개입하였다.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제도개혁 노력, 수서비리사건과 강경대군 폭력살인에 대한 규탄투쟁에 주도적 참여 등 다양한 정치활동 전개하였고 민주당과의 비공식적 통합 협상 전개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조현연, 『운동 MAP』)

#### O12

고문 백기완(白基玩), 상임대표(이우재(李佑宰)), 공동대표위원(김상기(金祥基), 김낙중(金洛中)), 사무총장(이재오(李在五)), 정책위의장(장기표(張琪杓)), 기획조정실장(정태윤(鄭泰允)), 대변인(정문화(鄭文和)), 대외협력위원장(조춘구(趙春九)), 제1노동위원장(김문수), 제2노동위원장(신철영) 정치연수원장(지은희), 농민위원장(임수태), 인권위원장(박용일), 여성위원장(노영희), 조국통일위원장(손병선), 당기관지위원장(유인열), 청년학생위원장(이원주) 교수위원장(오세철), 중앙당기위원장(김결), 정책연구실장(이석원)

#### O13

진보정치연합, 새정당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 진보정당준비모임

#### O14

『말』, 54호, 1990.12 / 조현연, 『운동 MAP』 / 『조선일보』, 1990.11.11

O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단체편> 한국정신대연구소 참조)

O2

정대협

O3

22개 회원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자학자협의회, 여성교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존타, 기독여민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예장여교역자회, 예장신도회, KNCC여성위원회, 기장여교역자회, 감리교여교역자회, 경남정대연, 카톨릭여성복지위원회, 감리교여선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정신대연구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O4

O5

1990.11.16~현재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88년 7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내에 정신대 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90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등 37개 여성단체가 한일 양 정부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진상규명, 범죄 인정, 국회결의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90.11.16일 창립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p142)

O11

91년 1월 가이후 수상 방한에 즈음하여 정대협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신대 문제 관련한 첫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해 8월 군위안부 김학순(당시 67세) 할머니 기자회견을 갖고, 9월 정신대 신고전화를 개설하였다. 12월 김학순 할머니 등 3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것이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사건’이다. 92년 1월 정대협은 일본대사관 앞 제1회 수요 정기시위를 시작하여 매주 전개하였고 한국정부 전국의 시 구청에 피해자 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고 증언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제1회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고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p142)

O12

O1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O14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정대협 홈페이지 : <http://www.k-comfortwomen.com>

O1

대기업노조연대회의 (☞ <사건편>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 공동간부수련회 참가자  
전원 연행 및 구속사건 참조)

O2

연대회의

O3

O4

O5

1990.12.~?

O6

O7

공개 / 임의단체

O8

O9

O10

노동계는 전국16개 대기업노조로 구성된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출범시키면서  
다시 강경투쟁복귀 움직임을 보였다. (「조선일보」, 1990.12.12)

O11

정부는 이 연대회의의 출범으로 노동운동권이 3분쇄 선명성 경쟁만 가열될 경우 노사관계를 다시 악  
화시킬 것으로 보고있다. 또 대기업노조의 강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중소기업노조들까지 자극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0.12.12)

O12

O13

O14

「조선일보」, 1990.12.12



---

---

〈1991년〉

- 01.23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 02.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
    - 02.07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 03.14 (구속일자) 경수지역노동자연합
      - 03. 반핵평화운동연합(반평)
  - 04.27 고강경대열사폭력살인규탄 및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범국민대책회의)
    - 05. 강경대군 구타치사 범국민대책회의
  - 05.06 고박창수위원장 옥중살인규탄과 노동운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책위원회
    - 05.25 고김귀정열사 폭력살인대책위원회
    - 07.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창준위)
      - 07. (안기부 발표일자) 애국동맹
      - 07.14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 08.26 (구속일자) 반제반과소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제파그룹)
    - 09.19 살기좋은구로지역만들기여성회
  - 10.09 ILO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
    - 10.13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합(의보총련)
      - 11. 국제사회주의자들(IS그룹)
    - 11.12 (구속일자)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
    - 12.0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 12.15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정연)
- 
-



O1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O2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

O3

O4

O5

1991.01.23~1995.02.25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O7

공개 / 비합법

O8

O9

-93년 12월 16일 남북해외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범민련 강령·규약 선포.

-95년 8월 15일 범민족회의를 통해 강령, 규약 확정

1. 역사적인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2.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 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간다.
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북남)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한다.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5. 남북(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
6.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남과 북(북과 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7. 해내외 각계각층 단체들의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지지 고무하고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8.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평화 애호적인 나라들과 각계각층 단체들 진보적 대중들과 적극 연대한다.

O10

북한과 해외의 모든 민족성원이 참여하여 민족의 통일방안과 통일실천의 과제를 논의하자는 목적으로 출발한 제1회 범민족대회(1989개최->1990 개최: 연구팀)에서 조국통일 실현 과제인 민족통일대 연합전선의 범민족적 통일운동체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북한·해외동포가 통일의 주체로서 3자회담을 갖고 이 단체를 결성하였다.

같은 해 12월 범민련 해외본부, 1991년 1월 23일 남측 본부 결성준비위원회, 1월 25일 북측 본부를 각각 결성하였다. (<http://100.naver.com>)

O11

남측본부는 91년 30여 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한 가운데 준비위를 발족하였으나 준비위 결성 다음날 부터 시작된 집중 탄압(재경 실행위원 전원 탈퇴 협박, 실행위원장 연행 등)으로 남측본부 결성사업이 지체되다가 95년 2월 25일 남측본부를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http://www.tongil-i.net/top-1-3.htm>)

O12

O1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O14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http://www.tongil-i.net>

네이버 지식인 <http://100.naver.com>

<참조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O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O2

범민련

O3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범민련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새연합(범청학련)

O4

O5

1990.11.20~현재

O6

O7

공개 / 비합법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

O8

범민련은 남, 북, 해외 3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사무국을 두어 3본부의 의사소통과 연락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범민련은 최고의결기구로 범민족회의를 두고 있으며 90년대에는 8월 15일 개최되던 범민족대회 안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3자가 한자리에 모여 범민족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99년 방북한 나창순 고문과 서원철 대표가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비록 남북해외 모든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결성 이후 최초로 범민련 3본부 대표들이 함께 자리한 역사적인 회의로 성사시켰다.

범민련은 범민족회의 이외에 중앙의원 연석회의와 공동의장단회의(각 지역본부 25명 이내)를 두고 범민련 전체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되어 있으며, 공동사무국을 두어 범민족회의와 중앙의원 연석회의,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결의사항에 대한 집행과 그를 위한 각 본부들 간의 연락 및 연대 사업을 담당하며 대내외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일본 동경에 위치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http://www.tongil-i.net/top-1-3.htm>)

O9

1. 역사적인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2.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 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간다.

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북남)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한다.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5. 남북(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
6.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남과 북(북과 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7. 해내외 각계각층 단체들의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지지 고무하고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8.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평화 애호적인 나라들과 각계각층 단체들 진보적 대중들과 적극 연대한다.

(93년 12월 16일 선포, 95년 8월 15일 확정, 2000년 8월 18일 개정)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http://www.tongil-i.net/top-1-3.htm>)

#### O10

민족의 염원이자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민간이 주도가 되어 통일운동을 벌여나가자는 취지에서 결성되었다. 90년 1차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기초로 폐막결의문에서 '범민족적통일운동체결성'을 결의. (조현연, 「운동 MAP」)

범민련 결성운동은 90년 8월 15일 1차 범민족대회의 공동결의를 출발점으로 본격화되었다. 1차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에서는 "... 여섯째, 우리들은 통일애국세력의 연합을 확대 강화할 것이다..... 우리들은 남에 있는 북에 있는 관계 없이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굳게 묶어 세우기 위하여 헌신 분투할 것이다."라고 민족대단결 실현을 위한 조직결성 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모아내었다.

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남, 북, 해외 대표간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 통일기구 결성 3자 실무회담'은 범민족대회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기초 위에서 조직체계, 당면사업, 결성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을 내외에 공식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베를린 회담에서는 91년 1월말까지 남, 북, 해외 각 지역본부를 결성한 후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강령과 규약을 확정하는 등 범민련 결성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밟기로 하였다.

90년 12월 16일에는 故 윤이상 선생(재독 작곡가)을 의장으로 한 해외본부가, 91년 1월 23일에는 故 문익환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91년 1월 25일에는 윤기복 선생(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해외본부는 현재 미주,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호주, 유럽, 캐나다 등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범민련 공동사무국(초기 베를린, 현재 일본에 위치)을 운영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http://www.tongil-i.net/top-1-3.htm>)

#### O11

범민족대회는 1990년 8월 이후 10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남-북-해외 3자 연대 방식으로 남(서울)과 북(평양), 해외(주로 독일 베를린)의 3곳에서 동시에 열려왔다.

1990년 7월 27일 평화군축을 위한 국민건기대회를 시작으로 8월 3일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족식, 13일 범민족대회 학술제, 14일 범민족대회 통일문화제, 15일 판문점에서의 범민족회의로 이어졌다. 12개 지역, 66개 부문에서 연인원 20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제5차 범민족대회는 14~15 양일간 서울특별시와 평양시, 도쿄에서 분산 개최되었고 1999년까지 10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었다. 제10차 대회는 범민련의 위상과 역할을 민족대단결의 구심체로 확대

하였으며 범민련 조직을 확대·강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통일운동을 한 차원 높은 궤도로 올려놓았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북한이 '2000통일대축전'과 '제11차 범민족대회'를 2000년에는 열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서한을 보내 왔다. 2000년 6월 13~15일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범민련과 비슷한 목적으로 결성된 학생조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이 있다.

연방제 통일 지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세우고 있어,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http://100.naver.com>)

O12

초대 의장단 : 강희남(범민련 남측본부), 백인준(범민련 북측본부), 윤이상(범민련 해외본부)

O13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범민련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범민련 후원회

O14

<http://100.naver.com>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http://www.tongil-i.net>

조현연, 『운동 MAP』

O1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O2

서청협

O3

O4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O5

1991.02~?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87년 6월항쟁 이후 청년단체가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전국에 수많은 청년단체가 결성이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지역에 있는 청년단체들이 91년 2월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정세연구』, 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pp.157~158)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 통일에 이바지하며 청년들의 건강한 정서 함양과 민족문화의 창조와 향유, 청년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힘쓰'을 목적으로 91년 2월 창립하였다.

O11

주요 활동으로 대의원총회와 출범식, 농촌활동, 체육대회, 서울시민통일한마당 등을 개최하였다.

O12

전상봉(全相奉)

O13

O14

『정세연구』, 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O2

공선협

O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등

O4

O5

1991.02.07~현재

O6

공개 / 합법

O7

O8

O9

<공선협 소개> (공선협 홈페이지 : <http://www.voters.or.kr>)

출범과 목적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은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규약 제2조)"하려는 목적으로 1989년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4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명칭을 '바른선거유권자운동'으로 개칭한 바 있으나 2002년 10월 다시 명칭을 환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단체, 사무처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2003년 4월 17일 현재 63개단체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경부련, 공의정치포럼, 경실련에서 협동사무처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운동의 제반활동을 회원단체의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니다. ① 깨끗한 선거 정착을 위한 부정선거감시활동 ②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정책캠페인활동 ③ 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 자질 검증 활동 ④ 선거문화 혁신을 위한 유권자 의식개혁, 유권자 참여운동 ⑤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참가단체의 제한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운동의 공정성 유지와 공신력 확보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① 단체의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②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 ③ 단체의 공식입장으로 특정후보의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④ 법령에 의해 기본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

시민참여의 방법 : 유권자와 시민여러분께서는 우리 운동이 개설한 고발전화 1588-9898(고발고발, 전국단일)을 통해 각종 선거부정 비리에 대해 제보해 주십시오. 이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지역의 건전한 유권자 여론형성에 참여해 주십시오. 온라인 서명운동에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께서는 자원봉사를 신청해 주시면 보람된 시간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O10

87년대선 이래 공명선거감시단 운동을 결실하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91년 2월 발족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414)

O11

공선협은 기초의회 공명선거 활동 및 선거감시단을 운영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  
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414)

O12

O13

O14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

경수지역노동자연합 (☞ <사건편> 경수지역노동자연합 사건 참조)

O2

경수노련

O3

O4

O5

91.03.14 (구속일자)

O6

경기수원지역

O7

?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O11

1991년 3월 14일 이용석, 김진훈, 김태연, 장기영 등 6명이 이적단체인 경수노련을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23)

O12

이용석, 김진훈, 김태연, 장기영

O13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O1

반핵평화운동연합

O2

반평

O3

O4

O5

1991.03~?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반평은 1991년 3월 이 땅의 민중과 더불어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전쟁을 조장하는 국내외의 핵 옹호세력과 맞서 싸워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킨다는 목적을 위해 성립되었다. 이 평화운동의 중심 과제인 반핵에는 핵무기와 핵발전소가 그 일환으로 포함되므로 넓게 봐서 환경운동도 평화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반평은 공추련의 ‘반핵평화위원회’가 핵발전소 중심의 환경운동을 전개해 오는 과정에서 그 위원들 중 일부가 ‘핵문제에 관한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결성이 구체화되었다. 성립 당시 주요구성원들의 배경을 보면 평화문제에 관심을 두거나 학생운동에서도 통일과 군축에 관한 부문에 종사했던 이들이 많았다. (『한국 민간환경운동의 발전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경필,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pp.64~65)

O11

반평은 91년도에는 학생운동과 환경운동 세력(공추련,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과 연대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범민족 서명운동의 전개, 한반도의 군축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92년 이후에는 군사비 삭감과 일본의 자위대 해외 파병과 관련하여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저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핵기지·핵발전소 반대를 위한 지역연대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으로는 핵기지 철폐, 평화협정체결 쟁취, 핵발전소 신규조성 반대, 핵폐기물 처리의 안전성 촉구 등을 사업과제로 설정하여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민간환경운동의 발전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경필,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pp.65~66)

O12

O13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

O14

『반핵평화』 / 『한국 민간환경운동의 발전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경필, 서울: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O1

고강경대열사폭력살인규탄 및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 <사건편> 강경대(명지대생) 폭행치사 사건 참조)

O2

범국민대책회의

O3

O4

O5

1991.04.27~?

O6

전국

O7

공개 / ?

O8

O9

O10

1991년 4월 26일 민자당의 공안통치에 의한 명지대생 강경대군의 폭력살해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하여 야당과 국민연합 등 33개 재야 시민단체, 1991년 4월 27일 범국민대책회의의 구성. 범국민대책회의는 “강경대열사의 죽음은 단순히 ‘백골단’이라는 몇몇 폭력배들의 과격함에서 비롯된 돌발사고가 아니라 노태우 민자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폭압적 민중탄압의 결과”라며 노재봉 내각의 총사퇴와 정권의 방패막이인 백골단과 전투경찰의 해체를 요구. 이후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투쟁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

O11

<91년 5월 투쟁 일지>

- 4.26 명지대 강경대 시위 도중 백골단에 의한 폭행 사망
- 4.27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결성
- 4.29 전남대 박승희 분신 (5.19 사망) /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회, 전국 5만 참여 (범국민대책회의)
- 4.30 노재봉 국무총리 대국민 사과 발언
- 5.1 안동대 김영균 분신 (5.2 사망) / 세계 노동절 102주년 기념대회 (전노협)
- 5.2 노태우 대통령 간접적인 사과 발언
- 5.3 경원대 천세용 분신, 사망 / 민자당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단독 가결
- 5.4 백골단 전경 해체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 전국 20만 참여(범국민대책회의)
- 5.5 김지하 조선일보에 투고문 게재
- 5.6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의문사
- 5.7 박창수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안양병원 영안실에 백골단 투입, 강제부검
- 5.8 전민련 전 사회부장 김기설 분신, 사망 / 서강대 총장 박홍 ‘어둠의 세력’ 기자회견 / 전국 145개 대학 동맹휴업 돌입 (전대협)
- 5.9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 전국 50만 참여 (범국민대책회의) / 전국 98개 노조 시한부 총파업 (전국투본) / 민족문학작가회의, 김지하 제명

- 5.10 광주 윤용하 분신 (5.12 사망) / 노태우 정권 폭력규탄 및 교육자치 선포대회 (전교조) / 민자당 국가보안법·경찰법 수정안 단독 가결
- 5.11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대회(전노협) /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및 원진 직업병 살인 규탄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 (전국투본) / 검찰, 범국민대책회의 지도부 9명에 대한 검거 전담반 편성
- 5.13 전대협 소속 대학생 46명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 전원 연행
- 5.14 애국학생 고 강경대 열사 민주국민장 (무산)(범국민대책회의) / 해직교사 120여명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 (전교조)
- 5.15 범국민대책회의, '공안통치 분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로 개편
- 5.18 연세대 철교에서 이정순 분신, 사망 / 전남 보성고 김철수 분신 (6.1 사망) / 광주 운전기사 차태권 분신 / 노태우 정권 퇴진 제2차 국민대회 / 고 강경대 열사 장례식, 전국 40만 참여(범국민대책회의) /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과 폭력통치 종식을 위한 전국노조 총파업 (전국투본) /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 투쟁 돌입
- 5.20 광주 권창수 시위 도중 진압전경에 의한 폭행, 중태
- 5.22 광주 정상순 분신 (5.29 사망) / 노재봉 국무총리 사퇴
- 5.25 성균관대 김귀정 시위 도중 강경진압에 의한 질식사 / 공안통치 민생파탄 노태우 정권 퇴진 제3차 국민대회, 전국 17만 참여 (범국민대책회의) / 정원식 국민총리 임명 등 내각 개편
- 5.28 노태우 대통령 민심수습대책 발표
- 6.1 전대협 5기 출범식 (부산대)
- 6.2 노태우 정권 퇴진 제4차 국민대회 (범국민대책회의) / 고 박창수 위원장 공작살인 안기부 해체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대회 (전국투본)
- 6.3 한국외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달걀·밀가루 세례 사건 발생
- 6.7 검찰 민중운동 핵심간부 107명에 대한 검거전담반 편성
- 6.8 인천 삼미기공 노동자 이진희 분신 (6.15 사망) / 6·10항쟁 계승 및 노태우 정권 퇴진 제5차 국민대회, 전국 3만 참여 (범국민대책회의)
- 6.12 고 김귀정 열사 장례식 (범국민대책회의)
- 6.15 인천 공성교통 택시노동자 석광수 분신 (6.24 사망) / 국회의원회 선포식 (범국민대책회의 재편) / 민족민주열사 합동 추모제 (범국민대책회의)
- 6.20 광역의회 선거
- 6.24 유서대필 공방끝에 강기훈 검찰에 자진 출두
- 6.29 6·29 선언 파산선고와 노동운동탄압 규탄 제6차 국민대회 / 노동열사 고 박창수 위원장 전국 노동자 장례식 /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 투쟁 해제 (91년 5월투쟁 청년모임,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이후, 2002, 260~261쪽)

O12

O13

O14

양재원,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민족민주진영의 투쟁전략”, 『말』, 1991년 6월호 / 91년 5월투쟁 청년모임,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이후, 2002

O1

고박창수위원장 옥중살인규탄과 노동운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책위원회

O2

전국노대위

O3

O4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O5

1991.05.06~?

O6

O7

공개 / ?

O8

집행위원장 산하에 상황실장단, 상황, 선전, 투쟁기획, 진상조사, 연대사업, 문화, 언론홍보 등의 부서를 설치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O9

<우리의 요구>

현정권은 박창수 위원장의 직접적인 사인이 자살이나 또는 타살이나 뿐만 아니라 병원에 이르기 전에 구치소 내에서 벌어진 상황 전반에 대하여 숨김없이 진상을 공개하고, 진상조사단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공하라.

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를 모두 구속 처벌하고, 구속자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노동악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악법을 철폐하라.

옥중살인에 이르게 한 심각한 인권상황을 즉각 개선하라.

O10

전노협 중앙위원이자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인 박창수 위원장이 공작탄압에 의해 살해된 1991년 5월 6일, 노동운동진영은 박창수 위원장의 죽음은 '노동운동 탄압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1차적 투쟁 주체로 한진중공업 노조를 비롯한 전노협, 연대회의,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준비위원회 등 6개 노동단체로 '고박창수위원장 옥중살인규탄과 노동운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 대책위원회'(전국노대위)를 구성하였다. (『전노협 백서』, 3권 제2장 2절)

O11

전국노대위는 연세대와 안양, 그리고 전노협 사무실에 상황실을 두고 집행위원장 산하에 상황실장단, 상황, 선전, 투쟁기획, 진상조사, 연대사업, 문화, 언론홍보 등의 부서를 설치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노협 백서』, 3권 제2장 2절)

(관련 일지: 91년 5월투쟁 청년모임,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이후 2002, 260~261쪽)

- 5.6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의문사
- 5.7 박창수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안양병원 영안실에 백골단 투입, 강제부검
- 5.9 전국 98개 노조 시한부 총파업 (전국투본)
- 5.11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대회(전노협) / 고 박창수 위

원장 옥중살인 및 원진 직업병 살인 규탄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 (전국투본) / 검찰, 범국  
민대책회의 지도부 9명에 대한 검거 전담반 편성

- 5.18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과 폭력통치 종식을 위한 전국노조 총파업 (전국투본) / 범국  
민대책회의 명동성당 투쟁 돌입
- 6.2 고 박창수 위원장 공작살인 안기부 해체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대회 (전국투본)
- 6.29 노동열사 고 박창수 위원장 전국노동자 장례식

O12

O13

O14

『전노협 백서』, 3권

O1

고김귀정열사 폭력살인대책위원회

O2

김귀정열 대책위

O3

O4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O5

1991.05.25~?

O6

서울

O7

공개 / ?

O8

O9

O10

1991년 5월 25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 4가 대한극장 맞은편 진양상가 부근 차도에서 시위를 하던 성균관대생 김귀정열(25. 불문과 2부3년)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같이 시위하던 학생 20여명과 함께 넘어져 실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이에 범국민대책회의가 꾸려졌다. 범국민대책회의는 26일 새벽 1시 명동성당 교육관 1층에서 김귀정열 사망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진압현장 책임자와 시경국장, 치안본부장, 내무부장관을 구속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회의는 또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와 함께 '고김귀정열사 폭력사 대책위'를 구성하고 26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노정권 폭력살인 공권력만행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1. 5.26)

O11

대책회의 산하 '김양 폭력살인 대책위원회'는 91년 5월 28일 산하 특별기구로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양길승씨 등 11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김양의 사인규명을 위한 방증자료와 시위현장 목격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김양의 사인의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최루탄질식사'로 일단 추정된다'며 당시 시위현장에서 최루탄에 맞아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화상을 입은 충북대생 염구군(21. 과학교육과1)을 증인으로 내세웠고 가슴에 사과탄파편이 박힌 서강대생 배수진양의 X레이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일보」, 1991. 5.29)

O12

장기표(張琪杓, 위원장), 김귀정(金貴井)

O13

O14

「조선일보」, 1991. 5.26 / 「조선일보」, 1991. 5.29

O1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 <단체편> 한국노동당(가칭)창준위 / 통합민주당 참조 // ☞ <사건편>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사건 참조)

O2

한사노창준위

O3

O4

O5

1991.07~91.12.

O6

서울, 경기

O7

비공개 / 비합법

O8

O9

O10

민중민주파 계열의 비합법 노동운동 조직체 가운데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서울과 인천, 안양 등 수도권 지역의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전개), ‘민주주의민족통일노동자동맹’(삼민동맹), ‘노동계급’(서울과 인천,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던 노동운동가 일부와 학생운동권 출신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1989년 9월 결성) 등 세 정파세력을 중심으로 이른바 ‘3파연합’이 형성되면서 1991년 7월 ‘한사노 창준위’를 결성.

주객관적 조건의 뚜렷한 한계 속에서 계급정당 건설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부에서부터 공유됨에 따라 합법정치전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건설 노선이 제기. 비합법 전위정당 형태의 사회주의 노동당 건설노선이 비판적으로 재검토, 합법정당으로의 불가피성과 민중당과의 통합을 통한 선거전략이 이른바 ‘신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제출. 즉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인 합법정당을 건설하고 이러한 합법정당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정치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민주적 계급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 내부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합법적 노동자정당 건설로 방향전환을 결의, 1991년 12월 15일 241명의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를 발족.

노정추의 추진위원에는 박종현 광산노동자협의회 의장 등 20여명의 전현직 전노협 및 지노협 간부를 포함하여 60여명의 노조위원장과 40여명의 노조간부, 그리고 환경남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공동의장, 류민용 서울노동단체연합 의장 등 주요 노동단체의 대표와 간부 70여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여기에 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을 지속해 왔던 20여명의 노동운동가들이 주축을 이룸. 노정추의 신노선은 사노맹을 비롯한 민족민주파(ND)는 말할 것도 없이 기타 다양한 좌파의 소규모 노동운동 조직체들로부터 개량주의나 패배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특히 전국노련은 노정추의 출범에 대해 대중의 광범위한 투쟁보다는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반으로 정치세력화를 이루려는 ‘민중당의 재탕’이라고 규정하고 그 추진방식에서도 음모적이고 비대중적 활동방식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민족민주운동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이와는 달리 ‘민중회의’의 경우 노정추가 출범할 때부터 민중당과의 통합을 밝힌 것은 올바른 노선이었다고 평가하고 민중회의를 포함한 3자통합의 당위성을 주장. 전국노련의 경우 민주연합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자정당 건설은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였다고 주장하고 노정추의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할 것임을 표명.

1992년 1월 9일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지역에 지부 건설(수도권: 6 / 강원: 4 / 전라: 2 / 경상: 6), 창당발기인 2,500명 상회.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1992년 1월 19일 발기인 2,200여명을 포함해 모두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 결성. (조현연, 「운동 MAP」)

O11

내적으로는 이념의 혼란, 조직의 이완,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등 당건설을 위해 재정비해야 할 많은 문제 존재. 민중당과의 통합이라는 예정된 수순은 이러한 위기감이 외화된 결과로 제시된 것이기도. 따라서 한노당 창당준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남은 것은 단지 민중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방법과 조건들을 구체화하는 것 정도. 즉 사회주의 노동당 형태의 전위정당 건설론부터 합법정당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이념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간의 구체적 역관계의 자연스런 반영인 것. 한사노 창준위로부터 노정추, 한노당 창당준비위로 이어진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의 계급정당 창당 노력은 민중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일단락.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노동당 창당 노력은 민중민주파 중심의 소수 세력이 주도했던 창당 작업이었던 만큼 사회적으로는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했던 것도 사실.

노정추는 민중당과의 통합 협상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민중당내 자파 소속의 세력들과 민중운동권내의 좌파세력들을 규합하여 독자적으로 계급정당을 창당하려는 ‘2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립을 기대했던 전노협의 반대와 동참을 요구했던 민중운동권의 좌파세력의 반대가 강했고, 더 나아가 노동운동권의 주요 지도부들도 노정추의 독자창당에 소극적. 이런 어려움 속에 노정추 지도부의 구속은 노정추 계획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

전노협의 단병호 위원장의 경우 처음에는 노정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후에 다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등 중앙위원회 차원의 공식적 지지입장을 개진하지 못함. 업종회의의 권영길 위원장의 경우 시기상조론을 주장. 결국 인민노련이나 노동계급, 삼민동맹 등 한노당 창당준비위의 주체세력들은 비록 비합법 노동운동권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이들 조직이 공개된 합법공간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그 조직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또한 노동자대중과의 계급적 연대는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선진적 노동운동가 일부를 중심으로 하는 상층부 연대를 통해 노동자정당의 건설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증명. (조현연, 「운동 MAP」)

O12

위원장: 주대환

O13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한국노동당(가칭)창준위, 통합민중당

O14

조현연, 「운동 MAP」

O1

애국동맹 (☞ <사건편> 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애국동맹) 사건 참조)

O2

O3

8.28 청년학생연맹, 5. 1 노동동맹, 11.11 농민동맹, 부문대오

O4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O5

1991.07~1992.10 (안기부 발표)

O6

O7

비공개 / 비합법 (안기부 발표)

O8

부문대오 - 8.28학생동맹 - 5.1노동동맹(예비소조돌격소조 - 돌격소조(오중화 돌격소조, 박경학 돌격소조, 초인걸 돌격소조) - 현장노동자지도팀(시그네틱스 세포 - 노동자지도 세포), 사무직노동자지도팀) - '새날의 주인' 제작팀) - 11.11농민동맹

O9

O10

애국동맹은 구속된 민중당 성남을 사무국장 최호경(35)이 간첩단에 포섭되면서 이전에 노동운동과 야학활동을 할 때 맺은 인맥을 중심으로 조직한 주사파조직인 '95년위원회'를 흡수, 재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90년말쯤 북한의 대남 위장전선기구인 '한민전'이 '구국의소리방송'을 통해 '95년 통일원년'이라고 주사파를 선동한데 자극받아 자신이 학습을 지도한 학원과 노동계의 주사파조직원 2백41명을 규합, '95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민전의 노선을 각계에 전파하고 이를 실천한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지하조직이라는 것. 최호경은 이어 북한거물공작원 이선실(李善實)의 지시를 받은 황인오(黃仁五)에게 포섭되면서 91년 7월쯤 이 조직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끌어들이 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애국동맹'으로 이름을 바꾸고 강원도당 산하에 편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는 황을 만나기 전부터 한민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조직원 변의숙(邊義淑)을 제네바를 경유, 밀입북시키는 등 북한과의 연대를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992.10. 7)

O11

애국동맹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핵심전위조직으로, 그 밑에 '8.28(북한청년절) 청년학생연맹', '5. 1(세계노동자의 날) 노동동맹', '11.11(전농이 정한 농민의 날)농민동맹' 및 언론-문화-예술-산업선교회 등을 담당하는 '부문대오'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5. 1노동동맹'은 함정희(29.여)를 지도책으로 소속돼있는 노동운동조직으로, 각 공단지역내 현장 세포조직 결성을 통해 혁명주체를 양성하고 적화통일이 된 이후 공장위원회 건설의 기초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5. 1노동동맹' 산하에는 3개 '돌격 소조'와 '방송청취 소조(새날의 주인 제작팀)' 조직 및 물자관리, 중요 문서제작-관리업무를 맡는 '비서팀', 현장 및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2개 '지도팀' 등이 있다. '돌격 소조'는 북한책자인 '불멸의 역사 총서'에 등장하는 이름을 따 '박경학 돌격소조(군사이론연구)', '최인걸 돌격소조(사무직 노동자포섭)', '오중화 돌격소조(야학활동)' 등으로 나뉜다. (「조선일보」 1992.10. 7)

방송청취소조는 한민전의 노선과 정책을 학습-실천하기 위해 '구국의 소리 방송청취 소조'와 '평양방

송청취 소조' 등으로 나뉘어 '김일성대학 방송강좌' '중앙당 의견' 등의 북한 방송을 녹취한 뒤 '새날의 주인'이란 제목의 20쪽짜리 지하유인물을 제작, 핵심조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포해왔다고 안기부는 말했다. '애국동맹' 조직원들은 지난 4월 김일성생일에 김을 찬양하는 내용의 '애국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란 유인물 1천장을 만들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강원 지역 주민 5백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등 북한정권 축하일에 맞춰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1992.10. 7)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등은 기자회견은 통해 “아무런 확인과 검증도 없이 문익환 목사, 임수경씨 등의 방북에 이선실 개입 가능성, 전국연합의 결성배경, 민가협. 전대협 등을 거론해 마치 재야가 간첩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처럼 발표해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며 “국민과 재야, 그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데 그 정의가 있는 듯 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는 “대선결과에 따라 비상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반공소동을 벌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안영배,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5대 의혹>, 월간 말 1992년 11월호 110~116쪽)

O12

최호경(崔虎敬)

O13

95년위원회

O14

『조선일보』 1992.10. 7 / 안영배,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5대 의혹>, 월간 말 1992년 11월호

O1

전국노동단체연합

O2

전국노련

O3

우리노동문제연구원, 안양노동상담소 등 전국 28개 노동관련단체

O4

O5

1991.07.14~현재

O6

O7

공개

O8

O9

O10

우리노동문제연구원, 안양노동상담소 등 전국 28개 노동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 노련, 공동의장 한경남씨, 46)이 1991년 7월 14일 오후 4시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근로자, 재야 인사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조선일보』, 1991. 7.15)

O11

O12

한경남(韓慶南, 공동의장)

O13

O14

『조선일보』, 1991. 6. 6

O1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 <사건편>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제파그룹) 사건 참조)

O2

제파그룹

O3

O4

O5

91.08.26 (구속일자)

O6

O7

비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O11

1991년 8월 26일 박성인, 김용수, 유명석, 위성남, 강우근, 이근화, 고진숙, 이창우, 고춘완, 고민택, 김재환, 고성범, 정현영, 민경서, 박종관, 유재천 등이, 1991년 10월 2일 서민호가, 1991년 10월 5일 박춘석이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p.23)

O11

보안국은 1991년 8월 26일 '지하노동당을 결성해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아래 각종 이적문건을 배포하는 불법시위를 주도해온 혐의로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약칭 「제파그룹」)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제파그룹」 중앙위원 박성인씨(32.연대사회학과3년제적) 등 1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지난 1월 무장봉기를 통한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단위노조와 노동단체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의식화학습을 하는 한편,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다른 지하조직을 규합, 읍-면 단위까지 「지하노동당」을 조직하기 위해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유인물 2만여장을 제작해 각종 시위현장에서 배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1991. 8.27)

O12

박성인(朴成寅, 중앙위원) 김용수, 유명석, 위성남, 강우근, 이근화, 고진숙, 이창우, 고춘완, 고민택, 김재환, 고성범, 정현영, 민경서, 박종관, 유재천, 서민호, 박춘석

O13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 『조선일보』1991. 8.27

<연구팀 의견: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음>

O1

살기좋은구로지역만들기여성회

O2

살구여성회

O3

O4

O5

1991.09.19~현재

O6

공개 / 합법

O7

서울

O8

총회, 운영위, 교사회, 분과위 등으로 나누어지며 상근간사와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운영위가 제반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한다. (『연대연구분과 자료집』, 구로시민센터, 1997)

O9

O10

1991년 8월 구로 지역을 여성들이 만들어보자는 데 동의한 10여명의 성원들이 모여 지역내의 여성조직으로 ‘살기좋은 구로지역만들기 여성회’를 결성, 9월 창립하였다. 이후 구로구가 금천구로 분화됨에 따라 금천구로 명칭 변경(살기좋은금천구만들기여성회)

O11

제1기 살구여성교실을 진행하였고, 초등학교 공부방을 개설하였다. 92년 제1차 살구주부대학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독거노인 돕기 등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2

김주숙

O13

O14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

ILO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O2

ILO공대위

O3

전노협, 업종회의, 전국노운협, 전국노련

O4

O5

1991.10.09~1992. (한시적 공투체)

O6

O7

공개 / ?

O8

대표자회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노협 6명, 업종회의의 6명, 전국노운협과 전국노련 각 1명 등 총14명으로 구성하여 부정기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2년 3월부터 월 1회 회의를 정례화하였다. 실무기획단은 전노협 2명, 업종회의 2명, 전국노운협과 전국노련 각 1명 등으로 구성하여 대표자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기획단의 운영은 각조직의 공식 집행기구를 통해 의견을 모아 이를 조정하고, 안으로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조직에서 1명씩 파견하여 대략 주 1회 정도의 회의를 가졌다. ILO공대위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는 ILO공대위 사업이 조합원들과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일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각공대위 소속 조직들의 부서를 결합한 단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정책·국제·문화·조직·쟁의팀들이 사안에 비상설적으로 따라 운영되었다. (『전노협 백서』, 제4권 2장 5절)

O9

<기자 회견에서 밝힌 투쟁방향> : “첫째, 노동법 개악 저지와 현행 악법 개정은 천만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이며 민주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사활적인 사항인 바, 우리는 전노협,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전국노운협, 전국노련 등이 참가하는 ILO공대위를 구성하였다. 우리 ILO공대위는 이후 모든 민주노조와 노총까지 포함하여 개악 저지, 악법 개정을 위해 노동진영의 총력대응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ILO공대위는 악법 철폐와 민주개혁을 원하는 국내외 모든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각 지역별로 생산직, 사무직 업종, 여타 민주노조와 단체들을 포괄하여 중앙 공대위 산하 지역 공대위를 구성해 나갈 것이며, 노동법 개악 저지와 악법 개정을 위해 지역별 설명회와 공청회, 문화제, 선진전 등 각종 대중적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의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개악안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키려 할 경우에 우리는 ‘전국비상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을 긴급 개최하여 총력투쟁의 결의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개악 저지 결사투쟁을 결행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중앙과 지역에서 공청회 개최와 개정 요구안의 국회 청원, 개악 저지 항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11월 전국노동자대회로 집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현행 악법의 노조권리 제한 등을 ILO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인 홍보선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의 노동법 개정투쟁은 1991년 하반기에만 하고 그치는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다. 이번의 대중적인 사업과 투쟁, 그리고 정치·사회적 쟁점화를 바탕으로 하여 1992~3년의 권력교체기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이후에는 보다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O10

노동법 개정 투쟁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애의 제거와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정치국면하에서 노동조합 공동의 결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했다. 전노협·업종회의·노동운동단체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당면 투쟁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더 큰 단결을 뒷받침할 공동투쟁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ILO기본조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ILO공대위)'는 전노협과 업종회의 등 민주노조진영이 추진한 1990년 전국노동자대회, 1991년 노동절대회 등의 공동투쟁과 고 박창수 위원장 노동자대책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사안별 연대 사업들의 축적된 성과를 기초로 결성되었다. ILO공대위는 한국의 UN, ILO 가입과 총선·대선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국내의 노동정세의 변화가 노동법 개정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주적 단결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의 실질적 개정'과 '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을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전노협·업종회의·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등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1991년 10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시적인 공동투쟁체'로서 결성되었다. (『전노협 백서』, 제4권 2장 5절)

O11

1991년 10월 9일 ILO공대위 출범 이후 ILO공대위는 공청회를 통한 노동법 개정시안 마련 및 국회 청원, 그리고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성공적 전개에 힘입어 ILO공대위 대표자들 간의 노조 운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1992년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 두 차례의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총액임금제와 시간제근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조직하였다. 평가를 토대로 1992년 ILO공대위 사업 및 조직 강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ILO공대위 대표자회의의 정기적인 소집과 실무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종회의 내에 집행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노협 상임집행위원회와 업종 집행위원회를 근간으로 실무기획단을 운영함으로써 집행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실무부서의 일상적 결함을 도모하기로 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비상설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ILO공대위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으로 일단 지역공대위를 확대, 조직하고 대공장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ILO 제소활동 및 ILO대표단 파견사업이 추진되었고, 주요하게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와 총액임금제 저지대책위 구성 및 활동이 전개되었다. ILO공대위는 여타 미가입 대공장, 중간노조를 포괄하여 광범한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ILO공대위 중심으로 총액임금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ILO제소 및 노동절 투쟁, 총액저지 투쟁, 부분적인 일상 활동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 사안들이 ILO공대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ILO공대위의 대중적인 위상을 부분적으로 강화, 미가입, 중간노조의 결함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노동조합들과 사무직 노동조합간의 요구와 정서의 차이, 대중적 결함을 높이기 위한 대중사업의 결여, 협의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한 ILO공대위 사업의 결정 및 집행구조의 한계, 더 나아가 ILO공대위의 향후 조직적 발전전망에 대한 이견 등이 드러나면서 ILO공대위사업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데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노동절대회 이후 ILO공대위는 노동법 개정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를 중심으로 하반기사업이 전개되었고 선거 국면을 맞이하여 '전국노동자선거대책본부' 활동이 전개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MBC투쟁지원 활동,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방침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지만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를 공표하였으며, 다수 미가입노조들을 포괄한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노조 총단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업내용과 이를 위한 지도,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단적으로 대통령 선거시 노동자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활동도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대표자회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조직되지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하였다. (『전노협 백서』, 제4권 2장 5절)

O12

O13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O14

『전노협 백서』, 제4권

<참조 : 이은숙/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1997.4.12>

민주노조운동은 90년과 91년의 대규모 파업투쟁을 거치면서(대표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의 콜리아웃투쟁과 KBS파업투쟁으로 상징되는) 91년 하반기에 'ILO(국제노동기구)공대위'(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노협 창립과정에 합류하지 못한 업종 및 대규모 사업장 노조까지 포괄하게 된다. 이 ILO공대위는 전노협 이후 민주노조 '총단결'의 첫 조직적 결실인 셈이다. 전노협 결성에서부터 ILO공대위가 결성되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민주노조운동'에 가해진 정부와 자본의 탄압은 전국적 조직실체로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한 전노협에게로 집중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전노협을 이른바 '법외노조' 또는 '불법노조'로서 규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불법'화하였다. 노조파괴 공세가 이어졌고, 지도부에 대한 구속/수배가 계속되었다. 전노협은 90년대 초반기에 악전고투하며 '민주노조운동'을 지켜낸 대신에 91년 하반기에 들어오면 그 조직적 규모가 창립 초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한편 업종노조들은 또다른 의미에서 악전고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넥타이부대'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토양은 노동조합으로서 자신들을 조직해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무전문직'의 동질성 형성에 우선 관심이 두어져 있었다. 이들이 ILO공대위를 통하여 전노협과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은 그런 점에서 커다란 조직적 결의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이라는 대의를 '넥타이부대'가 대중적으로 수용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91년 하반기에 ILO공대위로 민주노조운동은 새로운 조직적 정비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칭이 말해주듯이 ILO공대위는 '공동대책위'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민주노조 총단결이라는 대의가 전국중앙조직으로 수렴되는 데는 4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다. 94년 11월 민주노총 준비위가 결성될 때까지 '민주노조운동'은 그 내부적인 결합력 강화와 조직적 확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민주노조 '진영'은 정부와 자본의 '총액임금제' '노조업무조사' '구속/수배' '해고' 등 친사용자적인 노동정책 및 노조탄압에 맞서 싸워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92년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전노협, '업종노조대표자회의', 대공장, 미가입 노조가 망라되어 1,071개 노조와 47개 단체가 함께 조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93년 6월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건설된 것은 민주노조 진영의 조직발전을 향한 또 하나의 전기이다. 이것은 이후 94년 11월 민주노총 준비위 결성과 95년 11월의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지는 것이다.

O1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합 (☞ <단체편>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 참조)

O2

의보총련

O3

O4

O5

1991.10.13~?

O6

O7

공개 / ?

O8

O9

우리는 강고한 단결투쟁으로 우리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전국 단일노조를 건설하고 사회복지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선다. 우리는 민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다른 노동자, 노동자조직들과 함께 중앙조직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의료보장을 쟁취하고 나아가 완전한 사회보장 실현에 앞장선다. 우리는 모든 민주세력과 굳게 단결하여 억압과 착취구조의 철폐를 위해 노력한다.

O10

87년 7,8,9월 투쟁의 열기가 전두환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쟁취와 함께 폭발적으로 분출해 오르던 민중 역량에 당황한 민자당 후보 노태우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비롯하여 민중생존권에 관한 몇몇 공약을 급박하게 내세웠다. 그 중 하나가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였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시를 무기 연기했다가 민중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89년에 이르러서 그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졸속적이고 왜곡된 제도로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다. 89년 5월 87,88년 전국적으로 공개채용된 의료보험직원 8000여명은 각 시도 지역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현 의보총련의 전신인 의보노동자 전국조직인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는 의료보험제도 개혁, 단체협약, 임금 등의 문제로 단위노조별, 전국 단위 총파업을 계속해가다가 1991년 10월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1

89년 10월 23일~90년 1월 15일 지역의보노조 전국협의회는 의료보험제도 개혁, 단체협약, 임금 등의 이슈를 걸고 전국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각 단위노조마다 50-70여일간의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90년 5월 23일 전국 노조원 90% 이상이 참여하여 전국 동시 월차휴가를 실시하였다. 10월 의보제도 개혁과 89투쟁 계승을 위한 전국 집회가 3000여 노조원이 장충단공원에 집결된 가운데 개최되었다. 91년 5월~8월 전국 총파업, 서울 경기지역 노조원 서울 집결, 반민자당 투쟁에 동참하여 대규모 가투를 벌였으며 인천지역 노조원은 112일간의 파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1991년 의보총련을 결성하고 92년 광주지역 노조 전면파업에 이어 전국 4693명이 동시 다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서울, 부산, 경남지역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2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

O13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

국제사회주의자들 (☞ <사건편> 국제사회주의자들(IS) 검거사건 참조)

O2

IS

O3

O4

O5

1991.11.~?

O6

O7

비합법 / 비공개

O8

O9

O10

트로츠키의 사회주의 영구혁명론에 입각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 11월경 ‘국제사회주의자들’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p.25)

O11

1992년 2월 20일 김주서, 2월 22일 박효근, 오민환, 박정미, 장선, 은영숙, 김동창, 한상수, 권병섭, 조승희, 3월 2일 이성복, 김주희, 이정구, 김용운, 3월 3일 정수경, 조현정, 3월 13일 박진희, 신순례, 3월 24일 부혜진, 9월 2일 양효식, 10월 28일 최일봉 등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트로츠키의 사회주의 영구혁명론에 입각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 11월경 ‘국제사회주의자들’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위 조직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발행한 기관지와 소책자 등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고 사상학습과 토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1991년 11월경 위 최일봉이 주도적으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표로 하여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제작하여 집회시위 현장에 이를 배포하여 자신의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1994년 10월 15일경부터 서울지역에서 최일봉, 남수경, 이혜숙, 정원현, 국경하, 안우춘, 한규환, 한은술, 박순봉, 이택규 등이, 영남지역에서 1994년 9월 10일 김영민, 9월 11일 김태현, 10월 14일 최은광, 10월 15일 김동철, 정필재, 박정수, 고희용, 한은희, 서수진, 정도근, 정은경, 최은정, 임유현, 박정주, 10월 16일 임철진, 12월 8일 이혜선 등이 구속되었다. 정은경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1995년 1월 17일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석결정하여 석방했다.(『인권하루소식』 제327호, 1995. 1. 19) 1998년 5월 7일 박종호, 주수영, 박효근, 문명주, 류민희, 한규환, 한은술, 이정원 등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김동철, 유영미, 조영재 등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이 때 26명이 구속되었는데, 그중에서 1심에서 21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5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지속적인 검거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직보위진술을 구사하여 그 조직을 유지하여 왔고,

1998년 8월 31일까지 국제사회자들 혐의로 103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경찰청이 추미애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국정조사자료 참조) 이 단체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관련자 중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만 하고 간인과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다만 임의성은 인정하였는데 이 때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로 되었다.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임됨으로 말미암아 이적단체가입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공길숙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판례공보』 1999. 5. 15., 964쪽)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학습 토론하거나 조직에서 발간한 신문과 책자를 집회장과 대학가 등에서 판매한 것이 전부이고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한 바가 없다. 결국 이 단체 관련자들의 행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원리의 선전에 그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민변 등 위임,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사람생각, 1999, 32-35쪽)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p.25~26)

O12

김주서, 박호근, 오민환, 박정미, 장선, 은영숙, 김동창, 한상수, 권병섭, 조승희, 이성복, 김주희, 이정구, 김용운, 정수경, 조현정, 박진희, 신순례, 부혜진, 양효식, 최일봉

O13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민변 등 위임,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사람생각, 1999.

O1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 (☞ <사건편>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 사건 참조)

O2

O3

O4

O5

91.11.12 (구속일자)

O6

O7

O8

O9

O10

1991년 11월 12일 김현성, 김영지, 최형 등 3명이, 1991년 12월 2일 유화숙이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23)

O12

김현성, 김영지, 최형, 유화숙

O13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O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사건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조)

O2

전국연합

O3

부문단체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준비위원회 / 참관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사회운동연합

O4

O5

1991.12.01~ 현재

O6

O7

공개 / 반합법

O8

대표(상임의장), 고문단, 상임지도위원,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문예위원장, 사무처장

O9

<강령 및 규약 전문> : 우리 현대사는 외세와 압제자들로부터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함께 일어섰던 찬란한 민중투쟁의 역사였다.

갑오농민전쟁의 봉화가 오른 이후 우리 민중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중의 해방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일제 패망과 조국분단 이후 통일을 향한 장엄한 투쟁 행렬은 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러한 전통은 4월혁명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산봉우리를 넘어 6월 민중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영웅적으로 재현되었다.

공장에서 농촌에서 도심의 곳곳에서 지금도 민중 투쟁의 전통은 맥박치고 있다. 마침내 위대한 우리 민중은 좌절과 고통을 딛고 외세와 독재의 아성을 허물고 분단의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민중은 참된 민주사회 건설과, 민중생존권 실현,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향한 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장엄한 투쟁 행렬 속에서 우리 민중의 압도적 다수는 더욱 각성하게 되었고 통일단결의 기운을 한층 드높여 왔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이러한 민중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1년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로서 출범의 닦을 올리게 되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시대의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아래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세력을 단결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반미자주화 투쟁을 기본으로 민중생존권 투쟁과 조국통일운동을 결합시키는 광범위한 민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정세 속에서 조국의 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예측과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자주적인 통일강국으로 나아가는 서광을 비쳐주고 있다. 이 같은 정세 흐름에 발맞추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구현하며, 번영된 범민족 통일국가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기필코 완수할

것을 천명한다. (전국연합 홈페이지 : <http://www.nadrk.org>)

<강령> :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각계각층민중들의 총단결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자주민주통일 실현의 정치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친미예속성을 타파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1) 자주적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한다. 2) 자주적 민주정부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각층, 정당, 사회단체, 개인을 망라하여 구성한다. 3)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 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과거를 불문하고 최대한 포용한다.
2. 국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폭넓은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1) 민족민주 유공자를 우대하고 그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자녀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이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 철폐한다. 3) 금권정치를 타파하고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수립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4) 지방자치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친 자치를 확대한다. 5) 모든 형태의 인권 유린을 금지하며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한다. 6)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되 언론의 공익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나라의 부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민족 자립경제를 수립한다. 1) 외래 투기자본의 활동을 억제하고 관련 협정을 파기 혹은 전면 개정함으로써 경제주권을 확립한다. 단 외국인투자는 민족자립경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동을 보장한다. 2) 재벌을 해체하고 중소 기업은 적극 육성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독점 대기업과 국가 기간산업에서의 공공성을 구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반적인 산업민주화를 통해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3) 민족 자립경제의 필수 요소인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억제하며 농가부채를 해소하고 농민 자치의 협동조합 건설을 통해 가족농에 기초한 협농업 체계를 구축한다. 4) 남·북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원료, 식량 등 민족자립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한 민족경제 전반의 발전을 도모한다. 5)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4. 사회 발전의 기본 목표인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한다. 1) 부의 편중을 억제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소득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다. 2)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철폐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킨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평균생활을 보장한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한다. 3)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하여 농지의 농민적 소유를 확립하고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적인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4) 중소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5)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형평성을 확립한다. 6) 토지는 만인의 소유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 공개념을 엄격히 적용 관리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며 이를 기초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7)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사회적 형평에 맞는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하며 장애인, 노인, 고아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실업자를 구제한다. 8)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요건인 쾌적한 환경 보장을 위해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엄금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

5. 민족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족교육을 확립한다. 1) 자주 민주 통일의 지향에 맞는 참교육 이념을 확립하고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실현한다. 2) 교육의 상품화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전반에 걸친 공공성을 확립한다. 3) 학교 내에 전근대적이고 관료적인 제도와 관습을 청산하고 교사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된 데 기초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정착시킨다. 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6. 국민의 삶이 건강하고 풍부해지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풍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민족문화를 진작시킨다. 1) 퇴폐적인 외래 문화 사조를 엄격히 배격하고 민족 주체성에 기초한 생산적 문화를 발전시킨다. 2) 국민 모두가 문화의 창조자이자 향유자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민족예술인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예술기관 설립을 확대한다.
7. 성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 평등의 원칙을 확립한다. 1) 여성을 속박하는 전근대적인 제도와 관습을 청산하고 성의 상품화를 근절한다. 2) 임금과 직급 체계에서 성차별을 철폐한다. 3) 여성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역할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4)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다.
8. 민족 자주권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1)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 작전권을 회수하며 미국 등 외국과 맺은 불평등한 군사협정을 폐기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모든 기지와 시설을 국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한다. 2)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하고 모든 형태의 핵무기 사용이나 이를 위한 훈련을 반대한다. 3) 남북의 군사력을 민족 보위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대폭 감군 하고 절감된 비용을 국민의 생활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9.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1)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추진한다. 2) 전 민족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남북정치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3) 남북의 제도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에 입각하여 통일한다.
10. 자주·평화·중립외교정책을 구현한다. 1)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선린외교를 실현하고 제국주의와 침략주의를 반대하는 나라와의 유대를 우선적으로 강화한다. 2)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지지 옹호한다. 3) 어떠한 형태의 패권도 배격하며 블록에도 참가하지 않는 영세중립국가를 표방한다. 4) 외국과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나 협정은 폐기 혹은 전면 개정한다. 5) 해외 거주 민족 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외국인 노동자 등 그 목적이 정당한 국내 진출 외국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한다. (2002년 3월 2일 개정)

O10

89년 1월 21일 노동·농민·청년·종교·문화운동단체 등 각계 조직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후신. 1991년 5월 투쟁정국에서 결성된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의 무기력한 조직역량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당시 국민연합과 전민련, 그리고 비상시국회의 등으로 분산된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새로운 민족운동연합체 건설이 제기. 1991년 12월 1일 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민협의회,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민련 등 대중조직의 주도적 역할

에 힘입어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이 대부분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다. (「운동-Map」, 조현연)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이 1991년 12월 1일 창립대회를 가짐으로써 재야세력이 하나의 조직체로  
묶여지게 됐다. (「조선일보」 1991.12. 1)

O11

민중생존권의 요구를 민족자주전선으로 결집,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기치의 통일운동(‘미국반대 전쟁반  
대 평화정착’운동,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민족대토론회 추진, 자주적 교류운동 전개), 공안탄압저  
지와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폐지를 위한 사업,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사업,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맞선 국제연대운동 (「운동-Map」, 조현연)

O12

의장단 : 권중대(勸鍾大, 1기), 고광석(高光錫)(2기), 윤영규(尹永奎, 2기), 이창복(李昌馥, 3,4,5,6,7기)

O13

O14

조현연, 「운동 Map」 / 전국연합 홈페이지 : <http://www.nadrk.org>

O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O2

천정연

O3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카톨릭노동청년회전국본부, 한국카톨릭농민회

O5

1991.12.15~현재

O8

- 정 기 총 회 : 매년 2월에 정기총회

- 상임위원회 : 분기별 회의

- 실행위원회 : 월례회의

- 사무국회의 : 주례회의

(각급 위원회)

- 평화 통일 위원회 :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사업 기획과 활동

- 교회 쇄신 위원회 : 교회쇄신을 위한 사업 기획과 활동

- 국제 협력 위원회 : 국내외 단체들과의 교류협력사업

- 천주교열사추모사업위원회 :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신하신 천주교 열사의 정신 계승 사업

- 장기수가족후원회 : 장기 구금 양심수 후원 및 송환 추진위원회 활동

- 재 정 위 원 회 : 재정자립을 위한 기획과 회원, 후원회 조직 관리

- 기 획 위 원 회 : 활성가 양성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활동

O10

1954년 11월 '대한가톨릭학생회'가 대학, 본당,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전국적 대표체인 '대한가톨릭학생총연합회'(총연)을 조직.

1958년 서울의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 조직.

1961년 최초의 '전국평의회'를 개최하여 천주교사회운동의 싹을 틔움.

1964년 JOC 내부에 '농촌청년부'를 신설.

1966년 JOC에서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를 발족하여 농민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주력.

1972년 초 '한국가톨릭농민회' 출범.

1968년 또한 일부 JOC 회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도시민민운동' 개척.

1984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창립.

1985년 천주교도시민민회 창립.

1985년 4월에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창립하여 80년대 사회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1988년 11월 14일 (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창립하면서 목포연합, 전주연합, 전북연합, 대구연합, 부산연합, 마산연합, 경남연합, 상주연합, 대전연합, 인천, 수원 등 지방조직 창립.

1989년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가톨릭민주청년공동체, 우리신앙공동체, 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등 청년단체 창립.

1990년 신앙인사회학교 개강,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창립, 인권위원회 발족.

1991년 장기수가족후원회 발족, 12월 15일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통합하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으로 재창립.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은 교회쇄신과 사회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신도단체의 연합조직으로 폭넓은 신앙쇄신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을 기치로 하여 양심적인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단체로 출발하였다. 90년대 변화하는 교회와 사회를 제대로 바로 봄으로써 교회쇄신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이 창립하기 시작했다.)

O11

1994년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와 우리신학연구소 창립 공동선 창간.

1996년 인천 가톨릭청년연대 창립

1997년 동송동에 천정연 회관 마련. (현재 7개 단체 입주 활동)

1998년 나라사랑 예수사랑 사람사랑의 한길을 가는 천주교 청년공동체 창립.

2000년 평화를 여는 가톨릭 청년 창립.

2001년 7월 가톨릭 평화지기 출범.



---

---

〈1992년~1993년〉

- 01.10 (구속일자) 노동자권력쟁취를위한국제사회주의자일동(일동그룹)
  - 01.13 안양사랑청년회(안사청)
  - 01.19 한국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 01.21 (구속일자) 안산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 02.07 통합민중당
    - 02.10 빈민여성교육선교원(빈여교선)
    - 02.12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 02.20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선감연)
    - 02.23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 02.26 부천시흥공동대책위원회(부천시흥공대위)
    - 07.12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08.15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
  - 08.29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대학노련)
  - 09.27 (구속일자) 노동자문화마당 ‘일터’
- 10. 혁명적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혁사노)
- 11.05 주한미군의윤금이씨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11.23 (구속일자) 노동자정치활동센터
  - 12. 평화와통일을위한남북나눔운동

93. 02.18 시민환경연구소

---

---



O1

노동자권력쟁취를위한국제사회주의자일동(일동그룹)

(☞ <사건편> 노동자권력쟁취를위한국제사회주의자일동(일동그룹) 사건 / 혁명적국제사회주의노동자 투쟁동맹: 역사노 사건 참조 // <단체편> 혁명적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 역사노 참조)

O2

O3

O4

O5

92.1.10 (구속일자)

O6

O7

비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O11

1992년 1월 10일 정창교, 이응석, 유곤정 등이 구속되었다.(김선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23)

O12

정창교, 이응석, 유곤정

O13

O14

김선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O1

안양사랑청년회

O2

안사청

O3

O4

O5

1992. 1.13~현재

O6

안양

O7

공개 / ?

O9

<청년회 소개> (안사청 홈페이지 : <http://anyanglove.jinbo.net>)

안양사랑청년회는 대부분 직장에 다니는 20대부터 30대의 청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사청 회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청년회에 들러 서로의 생활을 나눕니다. 이것은 청년회 회원들간의 각별한 애정과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사청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이 땅 곳곳에 통일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O10

91년 5월 강경대 열사의 타살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투쟁상황에서 안양지역에서는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안양병원에서 시신을 탈취하려는 세력들과의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안사랑 회원들과 안양지역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의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청년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92년 1월 13일 "조국사랑은 지역사랑에서부터"라는 기치를 드높히 들고 안양사랑청년회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O11

출범이후 안사청은 회원들의 헌신성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안양지역에서 자주 민주통일을 수행하자는 중심조직으로 발전시켰고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지역청년들과 함께 하는 대중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철거민들과의 민중연대사업(99. 5), 범민족대회(99. 8), 소모임별 다양한 대중사업을 전개하던 중 조직사건 발생, 회원 9명 연행 4명 구속. 지역 민주단체들과 '안양사랑청년회 구속자 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함. 이 과정에서 제 단체들과 경기남부 지역의 단체, 전국의 청년단체들까지 광범위한 연대가 형성, 2000년 하반기부터 '역사반'을 중심으로 청년회를 새롭게 정비,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달리기 대회'등의 활동 개최

O12

O13

O14

안사청 홈페이지 : <http://anyanglove.jinbo.net>

O1

한국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 <단체편>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창당준비위원회 / 통합민주당 참조)

O2

O3

O4

O5

1992.01.19~1992.02.07 (통합민주당 창당)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인민노련, 민주주의민족통일노동자동맹(삼민), 노동계급 등 세 정파가 조직사건으로 파괴되자 1991년 7월경 노동자 정치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나 1991년 12월 3일 자체 논의를 통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 1991년 12월 15일 241명의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를 결성하고 합법적인 공개정당 결성을 준비하였고, 1992년 1월 19일 한국노동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p24~25)

O11

1991년 12월 15일 241명의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를 결성하고 합법적인 공개정당 결성을 준비하였고, 1992년 1월 19일 한국노동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 한국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는 92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27개 지역별 노조대표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동당(가칭)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주대환)를 공식 발족시켰다. 창당준비위측은 이날 발기취지문을 통해 ‘정치불신, 경제 불안 등 모든 문제들은 오직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일정규모이상 대토지의 국유화 ▲국빈축소 및 군복무기간단축 ▲노동3권 완전보장 ▲농수산물수입개방저지 등 당면과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노동당측은 내달 중순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선일보』 1992. 1.20)

그런데 정부는 공개적인 정당의 결성과 활동을 선언한 이들을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혐의로 체포, 구속하였다. : 1992년 1월 11일 주대환, 민영창, 이용선, 전성, 김동호 등이, 1992년 4월 1일 구인회, 이상민, 최정익, 여을환, 정광필, 임영탁 등이, 1992년 4월 28일 신형록, 송은하, 이호성, 이지연, 한삼현, 이정태 등이 각 구속되었다. 이들을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구성하고자 기도하였으나 이적단체로 몰려 처벌받은 것이다. / 인민노련, 민주주의민족통일노동자동맹(삼민동맹), 노동계급의 세 정파가 조직사건으로 파괴되자 1991년 7월경 노동자 정치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한겨레신문, 1992. 1. 16.자) 관련자들에 의하면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991년 12월 3일 자체 논의를 통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고 한다. /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구속자들이 비합법 전위노선을 폐기하고 폭력혁명노선을 부정하며 합법정당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운동권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구속자 중에는 징역 7년 구형을 받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p.23~24)

한국노동당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은 재야 노동운동가와 전, 현직 노조간부들. 이중 당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인텔리출신 노동운동가들이다. (『조선일보』 1992. 1.20)

O12

주대환(周大煥, 창당준비위원장), 민영창, 이용선, 전성, 김동호 / 1992년 4월 1일 구인회, 이상민, 최정익, 여을환, 정광필, 임영탁, 신형록, 송은하, 이호성, 이지연, 한삼현, 이정태

O13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창당준비위원회,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 『조선일보』 1992. 1.20

O1

안산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 <사건편> 안산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구속사건 참조)

O2

O3

O4

O5

92.01.21 (구속일자)

O6

안산

O7

비공개 / 비합법

O11

1992년 1월 21일 박태하, 김기연, 임현택, 박지연, 김금옥, 황용수 등이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p.24)

O12

박태하, 김기연, 임현택, 박지연, 김금옥, 황용수

O13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O1

통합민주당

O2

O3

O4

O5

1992.02.07~1992.04.14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진정추로 명칭 변경)

O6

O7

공개 / 합법

O8

O9

O10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14대 총선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선거정국에 대한 대응문제였다. 1991년 12월 23일 민주당은 노정추로부터 양당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접수, 통합의 원칙과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통합방식과 당면 문제가 통합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월 6일까지 총 15차례에 걸친 통합교섭을 마무리하고, 2월 7일 통합기자회견문 발표. 정치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다른 두 세력이 서로의 필요조건에 의해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통합을 성사시켰다. 형식적으로는 당 대 당의 통합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노당 창준위는 민주당에 흡수통합되었다.

1992년 한노당 창준위와의 통합과정에서 민주당의 조직기구와 지도부는 거의 그대로 관철(한노당 창준위의 주요 지도부가 구속 또는 수배상태에 있었다는 현실적인 배경이 크게 작용)되었다. 그러나 한노당 창준위의 발기인이나 적극적 지지자들은 결과적으로 통합 이전의 민주당 지도부를 새로운 지도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입장과는 구별되는 당내 제2의 정치블록을 형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민주당의 위상이나 선거전략 그리고 선거 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은 역시 민주당 지도부에 집중되었다.

O11

1992년 3·24총선(제14대)은 민주당이나 한노당 창준위 모두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으나 통합 민주당은 51명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의회진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에 있어서도 아주 저조한 결과를 산출(전국적으로 319,041표를 얻어 유효득표율의 1.5% 획득)하였다. 정당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율인 2%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선거정당처럼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서둘러 해체과정을 밟게 되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의 민중의 당부터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 3년여 동안 독자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해 왔던 그동안의 노력이 선거 실패와 함께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지향했던 창당 논리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을 표방했던 의의까지도 의심케 할 만큼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독점된 민주당의 정치전략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국면을 전후로 해서 결정적인 혼란 초래. 선거참여와 그 결과를 통해, 즉 1.5%라는 낮은 득표율을 얻은 상황에서 창당과정에서의 전략적 기초인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수정. 현실정치 수준에서 지도부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①조직을 유지, 확대하여 새로운 창당작업을 시도하는 방안 ②조직을 반합법 정치단체로 유지하는 방안 ③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민주당 창당과

정에서 강조했던 창당 논리에 따른다면, ①의 방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도부는 최악의 방안인 ③의 방안을 선택하였다.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나서 1992년 4월 5일 중앙집행위원회 소집하였다. 장기표의 안(①선거에서 제도적 결함과 주체적 역량부족으로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된 사태에 직면하여 이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당을 해체한다 ②사회 각계의 민주세력과 광범위하게 협의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이 표결 결과 8 대 5(기권 2)로 중집위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4월 8일 제15차 중앙위원회에서 민중당 해체문제를 놓고 민중당 지도부측과 한노당 창준위측의 의견 대립을 재연하였다. 민중당 지도부를 포함해 중앙위원 16명 퇴장, 속개된 제15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집위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전회식의 안(장기표 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민중당 해체보다는 새로운 정치조직체로의 전환 주장)이 42 대 1로 가결. 이에 반발, 이우재, 이재오, 장기표 등 민중당 지도부 및 핵심 간부들이 4월 15일 민중당 해체를 선언하는 신문광고를 내고 4월 21일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민사협)'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였다. 이에 맞서 주대환, 노회찬 등 한노당 창준위 측의 주요 활동가들은 민중당을 계승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체 건설에 집중하였고 즉 제15차 중앙위원회에서의 민중당 조직 전회의 결의에 따라 4월 1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조직의 명칭을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대표: 최윤)'로 결정. 이로써 민중당은 사실상 민사협과 진정추로 분리되었고 형식적으로는 진정추로 조직이 계승되었다.

O12

장기표, 이우재, 이재오, 주대환, 노회찬, 정태운(鄭泰允, 대변인) 황선진(기획조정실장)

O13

진보정당추진위원회

O14

조현연, 「운동 MAP」

O1

빈민여성교육선교원

O2

빈여교선

O3

상계어머니학교, 전국여성농민회, 송림동나눔의집, 서로사랑공부방, 햇살의집, 새롭공부방, 동두천야학,  
인천여성노동자회, 예은여성학교, 청주일하는사람, 섬나의집, 들꽃어린이집

O4

O5

1992.02.10~현재

O6

공개 / 합법

O7

O8

O9

O10

‘빈곤가정의 가난한 여성과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자립심을 키워주고 민주시민으로 교육훈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룩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92년 2월 창립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1

1992년 8월 제1회 탁아방, 공부방 교사 및 자원활동가 교육실시를 시작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93년 1월 제1회 글잔치, 그림잔치 시상식 및 발표회를 시작하여 빈곤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1

O12

O13

O14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O1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O2

평불협

O3

O4

O5

1992.02.12~현재

O6

O7

공개 / 합법

O8

O9

<평불협 소개> (평불협 홈페이지: <http://www.bubtanet.org>)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약칭 평불협)은 1992년 2월 12일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이며, 사부대중의 범종과적인 모임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개척과 선두 역할을 해 온 통일운동 단체이다.

해방 후 반세기를 넘기고도 한반도는 남, 북으로 갈라져 대치 긴장상태에서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의 역사적 소명을 인식하고 깨달음과 자비의 상징인 불타의 사상과 역사관을 기본으로 조국의 평화통일 성취에 기여하고 민족 단결과 중흥을 실현을 위하여 남, 북한간의 문화교류, 통일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물론 북한동포 돕기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국내 불자들의 화합과 동감대를 형성하여 조국평화통일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민족통일 의식으로 지역간 단체간 교류연대 및 문화사업을 실천고져 한다.

(목적사업)

- ① 남북한 종교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협력사업
- ② 남북한 전통문화(재)의 교류협력 및 교육사업
- ③ 남북한 종교 관련 행사 및 세미나의 정기적 개최
- ④ 북한동포돕기 사업을 통한 남북불교 교류와 협력사업
- ⑤ 종교활동 및 교류를 통한 회원간의 친목도모
- ⑥ 종교예술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의 개최
- ⑦ 목적사업에 관련된 간행물 발간 및 연구사업
- ⑧ 기타 남북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O10

92년 2월 12일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불교로 이룬다.”는 모토를 내걸고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가 창립됐다.

O11 평불협은 이후 한민족의 통일 이념 발굴 및 교류협력, 북한 불교와의 인적 물적 교류, 남북한간의 불신해소와 일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92년 6월 8일에 통일원에 사회단체 등록을 마치고 99년 10월 20일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제75호)를 받은 평불협은 89년부터 7차례 방북한 법타 스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북한불교연구소를 개원했다. 또한 매년 불교통일학당, 남북불교세미나, 통일연수원 참가교육 등 교육사업과 남북불교회의 및 북한방문의 교류사업, 인권 및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사업, 북한 문화재의 복원과 국수공장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통일운동의 현단계』: 『불교평론 5호』, 2000, 조병환)  
<평불협 10주년 사업실적> (평불협 홈페이지: <http://www.bubtanet.org>)

### 1. 남북교류현황

#### ▶북한 방문 (평양, 금강산 회의)

89년 신법타스님의 최초 방북 이래 평불협 임원들이 현재까지 총 24회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불교도연맹을 중심으로 각계와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 기초를 다져왔음.

#### ▶제3국 남북불교회의 (북경, 동경, 미국)

95년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의 중국 북경 또는 일본 동경, 미국 등지에서 남북불교회담을 가짐

### 2. 대북 지원현황

#### ▶조선불교도연맹 및 금강국수공장 지원

조선불교도연맹 지원현황 :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하여 각 사찰에 불교용품을 지원하여 왔고, 현재까지 밀가루, 옷, 식용유, 자전거 등 총 33회, 금액으로는 10억 8천 9백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음.

금강국수공장 운영현황 : 97년 설립이래 매월 60톤 기준 총 23회 1,368톤과 국수공장 기계설비 및 부대용품을 지원중

금강국수공장 개요 : 황해북도 사리원시 만금동(성불사에서 4Km이내) / 국수기계 2대 / 노동자 50명 / 생산량 : 1일 2톤 - 7천 7백그릇 / 급식범위 : 병원, 유치원, 학교, 성불사 신도

### 3. 인권·문화사업

#### ▶남북 결식아동돕기 통일음악회

내 용 : 2002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및 시민사회 통일의식 고취, 남북한 결식아동을 돕기위한 기금 마련 등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교계 최초의 열린음악회 수준의 규모와 다양한 내용으로 개최될 예정임.

일 시 : 불기 2546(2002)년 3월 17일 오후 7시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추진사업

89/6 - 법타스님 북한방문시 조불련과 관계당국에 북한사찰 복원에 관한 협의.

98/3/4 - 북한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금강산국제그룹과 금강산 문화재 복원을 위한 합의서 작성

98/6/18 - 금강산문화유적복원 추진위원회 창립 / 종단협 강당

99/1/25 ~ 현재 - 통일부에 금강산 신계사 복원 협력사업자 승인유보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검토 및 승인요청 中

2000/11/2~10 - 조계종에서 금강산 신계사터 현장지표 조사

#### ▶세계적인 작곡가 故 윤이상선생 명예회복 운동 추진

윤이상선생은?

군사독재시절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로서 세계적인 작곡가이다.

98/6/8 故윤이상선생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창립 기자회견 및 발족식(조계사 불교회관)

99/5/28 윤이상선생 명예회복을 위한 청원서 제출(대통령, 국무총리)

2000/11/1 제19차 윤이상통일음악회 및 윤이상거사 열반 5돌 추모법회(평양 광범사)

2001/9/24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에 1,300여만원 상당의 악기 및 악기부품과 생필품 지원

현재 윤이상선생이 작곡한 음악은 자유로이 연주되고 있으며, 탄생지인 충무시에

서는 해마다 대대적으로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있음.

#### ▶통일서예대전

서예를 통한 통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97년 12월 15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제1회를 개최한 이래, 4회 대회부터는 대통령상을 시상하게 되었고, 금번 2001년 12월 11일 제5회 통일서예대전을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개최하였음.

▶북한불교사진전

92년 5월 5일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이래 전국 각 도시를 순회하며 현재까지 총 23회 개최하여 북한의 불교·사찰 및 명산과 중요문화재를 소개하였음

▶북한사진 달력(카렌다) 제작 보급

매년 북한 사찰과 문화재가 담긴 달력(카렌다)를 제작하여 회원, 서울구치소, 공무원불자회 등에 보급하여 북한불교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고취.

▶북한 유명작가 작품전

2000년 7월 인사동 삼정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

인민화가를 중심으로 북한미술세계를 소개하는 자리가 됨

4. 출판사업 회지 하나로 : 매월 발행(2002년 3월로 통권 75호 발행)

중원에 서서(대흥기획, 89.5.31.)

북한불교답사기(민족사, 94.8.15.)

아리랑 그 슬픈가락이여(대흥기획, 94.5.16.)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대흥기획, 95.11.20)

북한불교연구(민족사 2000.2.22)

북한의 절과 불교(90.11.25)

민족통일의 비전(협찬 97.12.15)

평불협 10돌 백서(2002.2.22)

O12

송월주

O13

O14

조병환, 「불교통일운동의 현단계」, 『불교평론 5호』, 2000 / 평불협 홈페이지: <http://www.bubtanet.org>

O1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O2

선감연

O3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련), 한구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대책위원회(KNCC 언대위,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한국사회언론연구회(한언련), 중앙언론연구회

O4

O5

1992.02.20~?

O6

O7

공개 / 합법

O8

92년 대선 당시 선감연은 각 참여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를 두어 실제 활동을 총괄하였다. 대표자회의는 민언련의 정동익회장을 상임대표로 하여 김상근, 이효성, 한명숙, 오세완, 진관 등 6명의 각 단체대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선감연의 활동은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종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운영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의 분과장들과 참여단체의 실무자 대표, 그리고 선감연 상임대표 등 17명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자회의가 대외적으로 선감연을 대표하는 성격의 모임이라면, 운영위원회는 선감연의 실제 활동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각계의 관련인사들로 짜여진 자문위원회는 김규동(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김승훈(金勝勳,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 김용복(기독교아시아연구원장), 김중배(한겨레신문 이사), 리영희(한양대 교수), 박권상(언론인), 박상중(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서영훈(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송월주(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장), 이기형(시인), 이돈명(변호사, 전 조선대 총장), 이상희(서울대 교수), 조화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씨 등 각계 인사 13명으로 이루어졌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위원회(위원장 이병수), 모니터위원회(위원장 안동수), 홍보위원회(위원장 서영복), 재정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정지석)를 두고 있었으며, 선감연의 대변인은 홍보위원장이 겸임하였다. 핵심적인 활동부서라 할 수 있는 모니터위원회는 교육분과(별도의 분과자 없음), 신문분과(분과장 김종배), TV분과(분과장 박인환), 라디오분과(분과장 안동수), 지역언론분과(분과장 손중양)로 나뉘어 모니터요원 교육 및 매체별 모니터활동을 담당했다. 각 위원회와 분과는 위원장 외에 상임간사를 1명씩 두어 업무를 담당했으며, 운동에 참여한 일반 조직원들은 각 위원회 및 분과에 소속하였다. (『한국사회 시민언론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김형일, 1994, pp.45~47)

O9

O10

80년대 초기 종교 및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수용자교육 중심의 운동으로 전개되던 우리 사회의 시민언론운동은 80년대 중반 KBS-TV 시청료 거부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된다. 또한 시청료 거부운동이 촉발시킨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시민사회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선거보도감시운동 역시 시민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나타난 시민들의 적극적 운동유형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87년 6월항쟁의

결실로 치러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공정감시단」, 「KBS -TV 시청료 거부 범시민운동 여성연합」 산하 모니터그룹 등이 결성되어 이듬해 총선에 걸쳐 선거보도감시 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감연은 14대 총선 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대책위원회(KNCC 언대위,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한국사회언론연구회(한언련), 중앙언론연구회 등 5개 단체가 연대하여 1992년 2월 20일 선감연을 결성하게 되었다. (「한국사회 시민언론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김형일, 1994, pp.32~35)

O11

총선기간 중 총 23회에 걸쳐 신문과 방송선거보도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자체 소식지 「선거보도감시」의 발간, 스티커, 안내책자 등을 배포하는 동시에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KBS와 MBC 양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운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전된 실천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특히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언론운동이 지니는 제한점을 극복, 신문의 보도 역시 모니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운동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모니터 내용의 질적인 한계와 뉴스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부재, 수도권 중심의 지역성 등이 과제로 남았으며 기타 자체 소식지의 조직적 배포 부족과 공선험 등 시민운동단체와의 연대가 없었던 점, 감시전화의 이용부족 등을 자체 반성으로 지적하였다. (「한국사회 시민언론 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김형일, 1994, pp.34~35)

O12

정동익(상임대표), 김상근, 이효성, 한명숙, 오세완, 진 관, 유중순(운영위원장)

O13

O14

김형일, 「한국사회 시민언론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1994

O1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 <단체편>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참조)

O2

한청협

O3

서울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한물결청년회, 봉천동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한국과학기술청년회, 홍사단청년아카데미, 장애인운동청년연합)

경기 : 성남청년회, 터사랑청년회, 해동머리, 수원사랑청년회, 해누리민주청년회, 용인민주청년회, 인천민주노동청년회(부천사랑청년회, 안양사랑청년회, 인천직장청년회(준))

강원 : 춘천민주청년회, 원주민청년회, 강릉명주민주청년회

충청 : 청주지역민주청년회, 대전민주청년회(대전한얼청년회, 온양사랑청년회, 천안지역청년회(준), 대덕청년회)

부산, 영남 : 부산민주청년회, 당진사랑청년회, 울산새날을여는청년회, 대구새로운청년회, 진주지역민주청년회, 마산창원민주청년회(김해민주청년회, 삼천포향토사랑청년회, 안동사랑청년회, 사천향토사랑청년회, 김제사랑청년회, 포항새날을여는청년회)

호남 :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 광주민주청년회, 목포참세상청년회, 전주새길청년회(부안사랑청년회, 군산옥구나라사랑청년회, 고창농민회청년회)

제주 :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제주민주청년회(대정나라사랑청년회)

O4

O5

1992.02.23~1998.09.20

O6

O7

공개 / ?

O8

O9

O10

전국의 청년운동을 단결시키기 위한 운동은 89년 불과 10여개 남짓 단체의 참여로 진청대협이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정세연구』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p.108) 약 3년간 노태우정권의 소위 공안탄압으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속에서도 89년과 90년의 광주집결투쟁과 91년 5-6월투쟁 등 반독재투쟁에 앞장 서고, 범민족대회 성사 투쟁과 범민련 결성 투쟁 등 자주통일운동에 모범적으로 나서면서 전국 청년운동의 단결의 수준을 높여나왔다. 이에 기반하여 조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91년 9월 29일 300여 명의 전국 청년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진청협 건설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마침내 한청협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92년 2월 23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정세연구』, 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p.108)

O11

한청협은 1993년 이후 지휘부의 개량화로 1998년 9월 20일 해산하였다.

(<http://youthkorea.org/soge-1.htm>)

O12

이범영(의장)

O13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O14

『정세연구』, 통권 제32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2. 4

<http://youthkorea.org/soge-1.htm>

O1

부천시흥공동대책위원회

O2

부천시흥공대위

O3

부노협 13개 조직, 지역노조 경원세기 등 북부 5개조직, 시흥 5개 기타 3-4개 조직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4

O5

1992.02.26~?

O6

부천시흥지역

O7

공개 / ?

O8

부노협 13개 조직, 지역노조 경원세기 등 북부 5개조직, 시흥 5개 기타 3-4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9

O10

89년 공안정국의 한파로 부천지역 노동운동은 크게 위축되기에 이른다. 이에 부노협은 지역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모색과 노동조합의 위기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91년부터 부천시흥 공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9월 부천시흥 총간부수련대회를 개최한다. 그간 부노협과 시흥지역의 일상적 교류와 9월 간부수련대회의 성과를 배경으로 그 해 12월 공대위 준비소위를 구성하고 92년 1월 공대위 1차 대표자회의를 거쳐 92년 2월 26일 부천시흥 공대위를 정식 발족한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1

공대위는 지역 민주노조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한 일보 전진, 민주노조 조직발전의 전망을 담보하는 조직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활동을 전개해 갔다.(『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2

조영초(의장)

O13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부노협)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O2

한여노협

O3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성남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1999, pp333)

O4

O5

1992.07.12~현재

O6

O7

공개 / ?

O8

O9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소개> (한여노협 홈페이지 : <http://www.kwwnet.org>)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하 한여노협)는 1987년에 “일하는 여성의 손과 지혜가 미치는 곳에 무한한 생명력이, 일하는 여성의 힘찬 함성이 있는 곳에 눈부신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기치 아래 일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된 여성노동단체입니다.

1987년 3월 서울을 기점으로 수출자유지역과 공단,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되었고, 여성노동자회들은 89년부터 실천사업들을 교류하고 공동의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교육, '일하는 여성'발간작업등을 공동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각 지역에서 전개하는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정책대응력을 높여내기 위해 1992년 7월 11일 전국조직인 한여노협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노협은 일하는 여성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여성학교,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많은 교육·문화활동을 해왔으며, 성차별을 비롯해 직장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사안(성희롱, 임금체불, 고용불안, 모성보호, 직업병 등)들에 대한 노동상담을 통해 사회생활을 통한 각종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IMF시기에 여성실업대책본부를 8개 지역에 설치하여 여성실직자들을 위한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정부정책 모니터링 등 여성실업문제해결을 위한 각종활동을 전개하였고, 직업훈련기관과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정책시행을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여성노동 정책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행법에 보장되어있는 법적 권리를 알리고,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전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평등한 비정규여성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개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성단체와의 연대뿐 아니라 외국 여성노동자와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세계화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리고,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남녀 평등한 사회,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인천, 안산, 부천, 전북, 광주, 마산창원, 부산지역에 지부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의 차별문제, 고용불안정문제, 취업기회의 부족, 육

아문제 등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현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O10

1987년 3월 서울지역에 한국여성노동자회(1992년 전국조직 결성과 더불어 서울여성노동자회로 개칭)가 창립되어, 여성노동자운동단체의 깃발을 올렸다. 당시 창립주체는 1970년대 노조운동의 중심이었던 콘트롤데이타, YH, 세진전자 등의 여성노동자들과 여성평우회의 여성활동가들이었다. 한여노 창립 이후 각 지역에 여성노동자회 결성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지역의 창립주체들도 1970, 80년대 노조운동의 여성지도자들과 학생 출신 운동가들이었다. 1989년 인천여성노동자회(1988년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에서 출발), 부천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성남민주여성회에서 개칭), 1992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1997년 전북여성노동자회, 그리고 1998년 안산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되었다. 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회)들은 1988년부터 정책개발, 교육선전, 이슈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해오다 1992년 7월 전국조직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을 창립했다.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인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올아카데미, 2001, p.476)

O11

1992년 부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 1993년 변화하는 상황과 여성노동자운동의 발전전망, 1993년 탁아운동의 방향과 여성노동자운동의 과제, 1994년 및 1995년 여노회 새로운 조직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1996년 지방자치와 여성노동자운동 등 대중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인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올아카데미, 2001, p.477)

<주요 활동> (한여노협 홈페이지 : <http://www.kwwnet.org>)

1987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3.20)

100만원의 보증금으로 영등포에 사무실 마련

1989

구로구 구로본동 482-1번지 80평 건물로 이전

여성노동자복지회관 개관

튼튼이 어린이집 개원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창립

1990

방과 후 초등학생을 위한 공부방 시작

노동계, 여성계, 학계, 예술계 등 100여명 설립회원의 모금, 문화공연, 어린이집 자모들의 바자회, 수익사업 등으로 여성노동자복지회관 건립추진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95년 부산여성회와 통합, 개칭) 창립

1992

구로구 구로본동에 여성복지회관(대지 43평, 건평 75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건립

지역여성을 위한 어머니교실, 주부대학 설치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서울여성노동자회로 개칭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창립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의 전국조직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창립

1995

방과 후 공부방을 어린이 창조학교로 전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

5개 지역에 평등의 전화 상담실 개설

튼튼이 어린이집, 구로구 모범 보육시설로 선정

1997

전북여성노동자회 창립

부산 동래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2001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

1998

안산여성노동자회 창립

안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개관

부천여성노동자회 활동 재개

서울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2001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운영 5개지역

1999

여성실업대책본부 8개지역 9개소 확대운영(서울2, 인천, 마창, 부산, 광주, 전북, 안산, 부천)

부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개관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발족 9개지역(서울, 인천, 마산·창원, 부산, 광주, 전북, 안산, 부천, 대구)

2000

노동부 위탁 고용평등상담실 5개소 운영(서울, 인천, 마창, 광주, 부산)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2개소(부천, 인천)

2001

노동부 위탁 고용평등상담실 7개소 확대운영(서울, 인천, 마창, 광주, 부산, 안산, 부천)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7개소 확대운영(서울, 안산, 마창, 광주, 부산, 부천, 인천)

O12

한명희, 이철순, 장석희

O13

O14

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 강인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01 / 한여노협 홈페이지 : <http://www.kwwnet.org>

O1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O2

범청학련 남측본부

O3

O4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O5

1992.08.15~현재

O6

O7

공개 / 비합법

O8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25명(의장단, 사무부국장, 의장단에서 추천한 중앙위원)

남측본부 의장단회의 11명

남측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장, 상임부의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 총회의 남측본부는 한총련 중앙위원(각대학 총학생회장)이 총회 구성원임

(범청학련 홈페이지 : <http://bchy.jinbo.net>)

O9

1. 조국통일 3대헌장의 정신이 구현된 6.15남북공동선언을 범청학련의 통일운동강령으로 틀어쥐고 2000년대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2. 민족의 내부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3. 조국통일의 최대 장애물인 남조선 강점 미군과 그의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시키고 남과 북(북과 남)의 군축을 실현하여 조국반도를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4.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재무장화를 반대, 배격하며 일본의 재침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5.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유일한 길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임을 천명하며 그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6. 각계각층 통일애국 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온갖 책동을 반대하고 남과 북 (북과 남) 해외청년학생들간의 자주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7. 같은 동포형제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장기수들의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투쟁한다.
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남과 북(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모두 망라하는 유일한 애국적 통일운동단체임을 인정하며 범민련의 선봉대로서 투쟁한다.
9. 조국반도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전 세계 진보적 청년학생들과의 적극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범청학련 홈페이지 : <http://bchy.jinbo.net>)

O10

1991년 8·15 청년학생통일대축전은 범청학련의 결성을 합의하게 된 주요한 계기였다. 이미 남북해외 청년학생 차원의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는 했었지만 8·15통일대축전을 통해 확인된 청년학생의 통일열기는 연대조직의 결성의 필요성과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1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 총화회의를 통해 남녘의 전대협과 북녘의 조선학생위

원회 그리고 해외동포 청년학생들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애초에 전대협은 조국통일범민족학생연합, 즉 범학련의 결성을 제안하였으나 해외측 대표단은 해외의 경우 제일본조선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민족대학이 없으며 주요 역량이 청년단체들에 있는 점을 들어 조직명칭에 청년을 추가할 것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으로 명칭이 수정되었다)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자는 결성준비 사업을 위해 베를린에 연락본부를 건설하기로 하였고 전대협은 이 연락본부에 박성희 성용승 두 대표를 파견하였다. 1991년 12월 베를린에는 남 북 해외 청년학생들의 최초의 공동기지, '범청학련 결성을 위한 남, 북, 해외 공동연락본부(이하 공동연락본부)'가 건설되었다. 공동연락본부는 범청학련의 결성 이전부터 남북해외의 3자의 상시적인 회담의 장으로서, 연결의 매개고리로서 남쪽의 파견대표가 직접 상주 운영하였다. 이는 그 어떤 정형도 없던 3자연대운동을 균형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 범청학련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었다. "남과 북 해외에서 벌어지는 통일투쟁을 하나로 집결하며, 3자연대 연합을 실현하고 통일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1991년 8·15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총화보고문 중에서)"는 말처럼 그간 반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통일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해외가 연대운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해외가 연대운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전민족적 통일운동체의 건설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당시까지 조직적으로 완결되지 못했던 범민련을 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각 계급계층별 연대조직의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이남학생운동 자체의 요구성에 기인한다. 88년 이후 이남의 청년학생 통일운동은 점차 대중적인 지평을 넓혀가고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구체적인 경로까지도 모색되어지고 있었다. 이 속에서 이남의 청년학생 통일운동은 남북해외 청년학생들과의 본격적인 연대를 통해 분단 2세대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민족대단결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오게 된다. 그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편지교환투쟁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공동연대의 틀을 형성하는 문제는 매우 절실한 과제였다.

1992년 3월 25일 전대협은 92년 8·15에 범청학련을 결성할 것을 목표로 남북해외에서 4월 중순에 공히 범청학련 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자는 것을 제의했으며 이에 따라 4월 12일 범청학련 건설을 위한 남측준비위원회, 북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해외의 경우 "범청학련건설을 위한 제일 동포 청년학생준비위원회"(후에 범청학련 건설을 위한 해외준비위원회로 확대됨)가 발족되었다. 건준위가 주요하게 생각한 향후 사업은 4월 28일 평양회담, 6월 25일 서울회담을 통해 2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과 범청학련 결성식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남당국의 극심한 방해책동으로 범청학련 남측건설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원활하게 가져갈 수 없었다. 7월 15일로 예정된 2차 실무회담을 팩스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며 8월초에 이르러서야 8·15 청년학생통일대축전(서울)행사와 범청학련 결성식에 사용될 각종 문건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결국 8월 15일 범청학련은 평양과 서울에서 결성을 선포하였는데 남측본부의 경우 대회장의 침탈로 결성식 하루 전에 의장이 연행되었고 장소를 옮겨가며 행사를 진행한데다 범청학련의 결성식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또 대회장이 침탈되어 '너무 매워서 눈을 감고 결성선언문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선언한다'라는 얘기밖에 못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웃지 못할 눈물겨운 이야기들로 범청학련은 탄생의 순간을 맞았다.

이러한 범청학련의 결성은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반국적 통일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게 하였으며, 전민  
족적 통일운동체의 건설에 있어 청년학생들이 사명을 실천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범청학련 홈페이지 : <http://bchy.jinbo.net>)

O11

1993년부터 범청학련 축전 개최(범청학련 홈페이지 : <http://bchy.jinbo.net>)

O12

윤기진(의장), 정재욱 한총련 의장(상임부의장), 황선 대변인(부의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서총련의장(부의장), 경인총련의장(부의장), 충청총련의장(부의장), 남총련의장(부의  
장), 대경총련의장(부의장), 부경총련의장(부의장), 청년대표(부의장), 해외본부(부의장)(범청학련  
홈페이지 : <http://bchy.jinbo.net>)

O13

범청학련, 범민련

O14

범청학련 홈페이지 : <http://bchy.jinbo.net>

#### <참조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O1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O2

범청학련

O3

O4

조국통일범민족연합

O5

1992.08.15~현재

O6

O7

공개 / 비합법

O8

범청학련 총회(남북해외 각 200인 총 600명으로 구성) - 범청학련 중앙위원회(남북해외 각 25인 , 총  
75명으로 구성) - 범청학련 공동의장단(남북해외 각 11인(해외는 의장2인), 총 34명으로 구성)  
- 범청학련 지역조직(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 일본지부, 중국지부, 러시아지부, 미국, 카  
나다,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산하에 지회를 두고 있다.) - 범  
청학련 공동사무국: 현재 해외본부에서 임시 공동사무국의 역할을 진행중 (범청학련 홈페이지  
<http://bchy.jinbo.net>)

O9

1. 조국통일 3대헌장의 정신이 구현된 6.15남북공동선언을 범청학련의 통일운동강령으로 틀어쥐고  
2000년대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2. 민족의 내부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3. 조국통일의 최대 장애물인 남조선 강점 미군과 그의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시키고 남과 북(북과 남)의 군축을 실현하여 조국반도를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4.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재무장화를 반대, 배격하며 일본의 재침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5.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유일한 길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임을 천명하며 그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6. 각계각층 통일애국 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온갖 책동을 반대하고 남과 북 (북과 남) 해외청년학생들간의 자주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7. 같은 동포형제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장기수들의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투쟁한다.
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남과 북(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모두 망라하는 유일한 애국적 통일 운동단체임을 인정하며 범민련의 선봉대로서 투쟁한다.
9. 조국반도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전 세계 진보적 청년학생들과의 적극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범청학련 홈페이지 : <http://bchy.jinbo.net>)

#### O10

1990년 범민련, 전국연합, 자동위, 전대협 등이 '범민족대회추진본부(범추본)'을 구성, 8월 제3차 범민족 대회에서 거족적 청년학생조직인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을 결성하였다.

92년 2월 22일에 91년 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발표에 발맞추어 이남지역과 평양에서 '합의서 채택 지지와 이행촉구 및 팀스피리트 훈련 완전철회'를 위한 남북청년학생 공동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3차 범민족대회는 정권의 엄청난 탄압으로 대회장이었던 중앙대가 경찰에 의해 침탈당해 전대협 6기 태재준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학우들이 연행되었고 학교는 10여 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파괴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학생들은 서울대에서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 통일대추전을 성사시키고 범청학련을 결성하였다.

#### O11

범청학련은 여러 가지 3자연대 활동을 통해 남북해외의 연대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 내용적 질적 연대를 심화시켜 나갔다. 먼저 범청학련은 1993년 베를린에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대협에서는 박승희, 성용승, 최정남 대표를 파견하여 범청학련 사업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범청학련은 자주교류 사업을 활발히 벌임으로써 민족대단결과 3자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갔다. 이러한 힘은 당시 북미간 핵공방이 이루어지고 조국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6월 12일 '조국반도의 평화실현과 자매결연을 위한 판문점 회담 성사투쟁'으로 모아진다. 물론 판문점으로 향하던 남측대표단 전원이 연행되어 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땅의 진정한 책임일군인 청년학생들이 나서 외세에 맞서 민족대단결로 조국반도에 평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는 것은 무척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범청학련은 범청학련 공동의장단 회의를 전화연락으로 성사시킴으로써 범청학련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그 속에서 범청학련의 발전전망을 내올 수 있었다.

#### O12

북측본부: 김인호(의장), 최국건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부의장), 조영민 사무국장(부의장), 박정철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부장(부의장), 최대영 문화성청년동맹 1비서(부의장), 환호영 평양시청년동맹 비서(부의장), 양순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부의장), 장원섭

강원도 학생위원회 위원장(부의장), 리남섭 량강도 학생위원회 위원장(부의장), 옥수복 평안북도 학생위원회 위원장(부의장), 성영순 평양제사공장 청년동맹 비서(부의장)  
남측본부 : 윤기진(의장), 정재욱 한총련 의장(상임부의장), 황선 대변인(부의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부의장), 서총련의장(부의장), 경인총련의장(부의장), 충청총련의장(부의장), 남총련의장(부의장), 대경총련의장(부의장), 부경총련의장(부의장), 청년대표(부의장), 해외본부(부의장)  
해외본부 : 강성실 제일 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위원장(공동의장), 고덕우재일본조선청년동맹중앙상임위원회위원장(공동의장)

O1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O14

범청학련 홈페이지 <http://bchy.jinbo.net>

O1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O2

대학노련

O3

O4

ILO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전국노조대표자회의

O5

1992.08.29~1998.11.06 (전국대학노동조합 결성)

O6

O7

공개 / 합법

O8

O9

- 1. 우리는 대학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 1. 우리는 대학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쟁취하고, 민주행정을 구현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한다.
  - 1. 우리는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저해하는 모든 대내외적 요소를 척결하고, 민족민주교육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 1. 우리는 사회민주화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기여한다.
-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0

1992년 8월 29일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와 ‘대학노동조합연합’은 몇 달 간의 사전 논의를 거쳐 대학노조가 더 이상 분열되어 있는 것은 조직발전과 대학교육노동자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판단 아래 통합을 선언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통합 조직으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게 된다. 1992년 8월 29일, 전국의 47개 노조 99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산업 대학교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이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연맹은 전국 대학교육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학원의 자주와 민주, 행정의 독립과 전문성 확보, 사회의 민주화, 민족민주교육을 통하여 조국통일에 기여할 것을 내용을 하는 강령과 선언을 채택하고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1

O12

O13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대학노동조합연합

O14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수련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3

O1

노동자문화마당 ‘일터’

O2

일터

O3

O4

O5

92.09.27 (구속일자)

O6

인천

O7

비공개 / 비합법 (공안수사기관 발표)

O8

O9

O10

O11

1992년 9월 27일 김동호, 우현정, 어성찬, 김진선, 장규덕, 이상돈이 인천에서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p.24)

O12

김동호, 우현정, 어성찬, 김진선, 장규덕, 이상돈

O13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isu.or.kr>, 연도미상

O1

혁명적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 (☞ <단체편> 노동자권력쟁취를위한국제사회주의자일동(일동그룹)  
// <사건편> 노동자권력쟁취를위한국제사회주의자일동(일동그룹) 사건 / 혁명적국제사회주의  
노동자투쟁동맹 : 역사노 사건 참조)

O2

역사노

O3

O4

O5

1992.10.~? (경찰청 보안국 발표)

O6

O7

비공개 / 비합법 (경찰청 보안국 발표)

O8

O9

O10

경찰청 보안국은 1993년 7월 22일 유창민을, 1993년 7월 24일 김영미, 박형순을, 1993년 11월 9일 장  
운, 안훈찬, 최문실, 오세중, 김미라, 이진영, 이용철을, 국군기무사는 1993년 11월 9일 윤종현,  
김진원을 각 연행하고 이적단체인 역사노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남한통치기구  
를 파괴하고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한 뒤 국제적 연대로 공산화혁명을 완성한다”는 강령을 채택  
하고 기관지로 ‘노동자 권력의 깃발’을 배포하고 전국적인 지하당을 건설해왔다고 발표했다.(인  
권하루소식’ 제63호, 1993. 12. 8) 역사노는 91년 5월 결성된 ‘노동자 권력 쟁취를 위한 국제사  
회주의자 일동’ 그룹(일동 그룹)이 1992년 10월 초순 지리산 대회에서 선조분파와 사조분파의  
대립으로 현장노동자의 조직화를 중시하는 선조분파가 역사노로 변경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u.or.kr>, 연도미상, p.26)

O11

1994년 3월 28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조돈희, 백형록과 동흥전기 노조위원장 이완순, 삼익악기 해고노  
동자(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조직부장) 함평기가 역사노 가입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1994년 7월 11일 천석복이 경남지방경찰청에 연행·구  
속되었다.

1995년 1월 28일 이진형, 함평기, 김미라, 오세중, 강미자, 김태무 등이 구속되었고, 1995년 8월 12일  
정미숙이 구속되었다.

구성원 중에 한 명(최문실)이 이완순의 재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역사노는 준비위원회의 성격  
으로 구 ‘일동’ 그룹의 명칭을 변경한 동일한 조직으로서 새롭게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강령이  
나 규약도 존재하지 않고, 조직원 가입은 중앙위원회에 ‘후보사원 신청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간의 활동에 근거하여 중앙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인정된 사람만이 가입되도록 되어 있고 조직  
원은 역사노의 모든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모든 문건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스켓으로 유  
통되고 조직원에게는 차량 이름의 통신명이 부여되는데, 지지자에게도 통신명이 부여되나 차량  
이외 명칭이 부여되고 ‘깃발’ 정도의 문건만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완순씨는 조직원이 아니라  
지지자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u.or.kr>, 연도미상,  
p.26)

O12

유창민, 김영미, 박형순, 장운, 안훈찬, 최문실, 오세중, 김미라, 이진영, 이용철, 윤종현, 김진원, 조돈희  
(현대중공업), 백형록(현대중공업), 이완순(동홍전기 노조위원장), 함평기(삼익악기 해고노동자),  
천석복

O13

노동자 권력 쟁취를 위한 국제사회주의자 일동

O14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O1

주한미군의윤금이씨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사건편>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인만행 시민규탄대회 및 추도식 참조)

O2

윤금이공대위

O3

인권, 종교, 여성, 시민, 청년, 학생 등 48개 단체

O4

O5

1992.11.05~1993.10.26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발족)

O6

서울, 경기

O7

공개 / ?

O8

O9

O10

주한미군병사(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변태적으로 난행당해 잔인하게 살해된 윤금이씨(尹今伊 26, 접대부) 사건을 둘러싸고 경기도 동두천민주시민회와 대학생회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대응에 나섰다. 윤씨는 1992년 10월 28일 동두천시 보산동의 전세방에서 이마를 둔기로 맞고 체내에 콜라병과 우산대가 박혀있는 시체로 발견됐으며, 용의자인 케네스 마클 이병(20)은 31일 윤씨의 피가 묻은 바지 등을 입은 채 귀대하다 부대 정문 앞에서 한국경찰에 검거됐으나 곧바로 미군범죄수사단(CID)에 인도됐다. 이에 따라 용의자가 한국경찰의 기초수사도 없이 미군수사당국에 넘겨진 것에 항의, ▲한국 법에 의한 사건의 처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4일부터 가두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오는 7일에는 미2사단 정문앞에서 대규모 시민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선일보』, 1992. 11.6)

O11

윤금이씨 살인만행 시민규탄대회가 1992년 11월 7일 오후 4시 경기도 동두천시 미2사단 포병여단 정문앞에서 백기완씨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고광석씨 등 재야인사와 동두천시 민주시민회 등 49개단체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선일보』, 1992.11. 8)

(-->이교정, <다시 태어난 동두천>, 월간 말 1993년 1월호 240쪽의 경우, 참석인원을 2천여명으로 기록: 연구팀)

1992년 11월 17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과 복도를 가득 메운 가운데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주한미군에게 죽임을 당한 윤금이씨 추도식 및 시민규탄대회가 열렸다. (『조선일보』, 1992.11.18)

1993년 9월 5일 윤금이 공대위 활동 평가회를 가지고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적인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10월 26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로 정식 발족하였다. (<http://www.usacrime.or.kr>)

O12

O1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조 : 사건 결과>** (<http://www.usacrime.or.kr>)

사건이 발생하자 의정부 경찰서 강력계 형사1부에서는 현직 형사 40명을 동원하여 수사에 나섰고, 미군측에서도 군 수사대를 출동하여 한·미합동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윤씨의 자궁 속에서(시체 부검 중) 발견된 맥주병의 지문을 근거로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1993년 4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윤씨의 유족이 미정부로부터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여 이른바 민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고인 케네스 이병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4년 4월 2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각되어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미국의 공식 사과와 범행미군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빗발쳤으나 범인은 끝내 구속되지 않았다. 1994년 5월 17일야 비로소 신병이 한국측에 인도되어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 제22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어 케네스 이병이 미국으로 송환되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윤금이씨 살해미군 케네스 마클 교도소안 난동)

미군 케네스가 교도소 내에서 난동과 행패를 일삼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케네스와 더프 리차드 씨는(더프는 살인 미수범이다. 그는 1993년 12월 16일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한 에드워드 기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한창열씨의 목을 뒤에서 칼로 찔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천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천안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들이다. 이들은 공동 모의하여 1995년 5월 5일 10시 30분경 교도소 외국인 수용 사동인 제5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날은 어린이 날이었다. 미군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식사와 편지의 전달이 다음 날로 늦추어진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케네스는 유리로 된 커피병을 집어들어 복도의 아크릴 창을 향하여 던져 창을 깨뜨렸다. 더프는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 1개를 교도관 박성문과 송창호에게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케네스는 복도에 있는 분말 소화기를 집어서 교도관들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그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하고 한국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마클과 더프는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의 죄명으로 추가 기소되어 1995년 1월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O1

노동자정치활동센터

O2

O3

O4

O5

92.11.23 (구속일자)

O6

O7

? / 비합법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

O8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무국, 조직부, 선전부, 대외협력부 등의 상부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전사’, ‘밀알’, ‘붉은 바위’ 등의 이름으로 소모임을 두었다.

O9

O10

O11

1992년 11월 23일 문순덕, 한영숙, 정서영, 이경재, 강영심 등이 구속되었다.

노동자정치활동센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도 1369 판결-변은영의 상고사건에 대한 판결, 『판례공보』 제39호, 1997. 8. 1.자, 2230쪽). 대법원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는 혁명적 임시정부로 파쇼정권을 타도하여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는 민중정권을 수립하고 대공장을 무상 몰수하며 모든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현실을 파쇼정권과 독점재벌이 함께 노동자계급을 탄압·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자본주의경제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실시와 혁명적인 방법에 의한 노동자계급 지배하의 사회주의정권의 수립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의 ‘당면 3대 투쟁강령’을 그 강령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를 두고 사무국, 조직부, 선전부, 대외협력부 등의 상부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전사’, ‘밀알’, ‘붉은 바위’ 등의 이름으로 소모임을 두어 조직원들을 지도·통제하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쓰게 하며 조직원들을 심사하여 조직에서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의 비밀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며, 조직원들에게 일정한 과제나 임무를 부과하여 수시로 조직에 보고하게 하였으며,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게 하는 등으로 계속적이고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추으로써 실질적인 단체를 형성한 것이므로 결국 노동자정치활동센터는 그 지향하는 바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 조직이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p.25)

O12

문순덕, 한영숙, 정서영, 이경재, 강영심

O13

O14 김선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http://www.yangsimso.or.kr>, 연도미상

01

평화와통일을위한남북나눔운동

02

03

04

05

1992.12(사무실 개소)~1993.04.27(창립대회)~현재

06

공개 / 합법

08

대표-협동사무총장-사무총장-재정위원회, 기획위원회, 연구위원회

09

<창립선언문> (홈페이지 : <http://sharing.net>)

우리는 1980년도 후반이래 격변하는 세계사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이념 대립의 냉전 질서가 무너지고 민족 통합의 기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냉전의 움직임은 이미 동아시아에도 확산되기 시작하여 가까운 중국과 대만까지도 민족간의 화해와 공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열강들의 이념 대립의 침범 역할을 계속하는 한편 동족간의 대결을 첨예화함으로써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이념 대립 구도를 한반도에 고착시킨 열강들 스스로는 이미 냉전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유독 우리 한민족만이 민족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남북간의 접촉과 통일을 위한 노력은 '남북기본합의서' 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발효시켰지만 그 합의 내용은 거의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해방이후 한국교회는 과거 일제의 우상을 물리치지 못하고 민족 분단을 저지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면서 민족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1960이래 예언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희생을 감당하려 했던 한국교회는 민족 속에 통일의를 일깨우는 한편 남북 간의 화해를 구체화하기 위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나눔운동' 을 시작했습니다. '나눔운동' 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케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화해와 일치 사명을 새로이 깨닫고 분단 극복의 과제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남북간의 이질적 이념을 초월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이북 교회와 협력하여 나눔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랑의 나눔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구축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스스로가 파쟁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반성하며, 과거의 파쟁과 분열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세속적 물질주의와 정치적 이념에 매여 한국 사회에 대한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 최대의 십자가인 분단 극복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세속적 물질주의와 정치적 이념을 초월 극복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단합하며, 나아가 경건과 절제의 기반 위에 한국교회의 진정한 권위 회복을 뜨겁게 소망하면서 '나눔운동' 을 힘써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한국교회가 민족통일에 이르는 긴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민족사회의 통합 과정에서 주님의 도구로 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이 땅의 참 주되신 만군의 여

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1993년 4월 27일 저녁 남북나눔운동 창립대회 참석자 일동

O10

92년 12월 남북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취지로 '평화통일을위한 남북나눔운동'을 결성하였다. (조현연, 「운동MAP」)

O11

범교회적 사회적 경건과 절제운동의 전개, 남북공동선교에 관한 정보교환과 협력, 물질과 재화의 모금 및 나눔운동 전개,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및 학술세미나·강연회 개최, 연구결과 및 나눔운동 소식에 관한 사업을 전개한다. (<http://sharing.net>)

O12

김성수(대표), 협동사무총장: 김한옥, 김동완, 김성광, 이만열 (<http://sharing.net>)

O13

O14

홈페이지 : <http://sharing.net> / 조현연, 「운동 MAP」

O1

시민환경연구소

O2

O3

O4

학술단체협의회

O5

1993.02.18~현재

O6

서울

O7

공개 / 합법

O8

O9

O10

각 분야에 축적된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통합하여 환경운동의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환경운동의 발전과 지속가능 사회구현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에 참여해 온 환경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시민환경연구소'를 1993년 2월 18일 창립하여 객관성,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민간환경운동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노력하고자 하였다.(『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194)

O11

창립 첫 해인 1993년에는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는 측면에서 “환경의 이해”를 출판하였고, 환경운동연구 분야에서는 “민간환경운동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시범평가“사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 환경운동연구, 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정보제공, 학술 교류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단협 10년사』, 학술단체협의회, 1999. p.197)

O12

최열(이사장)

O13

환경운동연합

O14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 10년사』, 1999

<부록>

일 지

80.01

~

92.02



## ◇ 연도별 일지 ◇

### <1980년>

- 01.15 ‘YWCA 결혼식 위장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양순직 등 14명과 불구속기소된 윤보선 등 3명에 대해 수도권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1차 공판
- 01.15 이봉우 등 32명의 노동자, 연합노조 서울지역지부 사무실에서 남화전자노동조합 결성식 개최. 분회장 이봉우 선출
- 01.21 섬유노조 집행위, 김영태 한국노총위원장 사퇴 권고
- 01.22~23 제적 대학생 복학 결정 (01.22 연세대, 1974년 긴급조치 1호와 4호,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 발동후 학원민주화와 학내 시위와 관련해 제적된 학생 56명 전원을 복학시키기로 결정 / 01.23 고려대, 긴급조치위반혐의로 제적된 학생 84명, 서울대, 학칙개정후 296명, 서강대 27명, 이화여대 14명, 경북대 34명 등)
- 01.25 수도권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YWCA 결혼식 위장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1-4년형 선고 (이우회 징역4년, 김정택·최열·양관수·홍성엽 징역 3년, 윤보선·양순직·김종태·김병찬·백기완 징역 2년, 함석헌 징역 1년)
- 01.29 ‘서울대 법대 동문 정교회 사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친목단체인 정교회 회원 김정강 등 구속
- 01.30 청계피복노조 전태삼 조직부장 등 노조원 21명,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이사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AAFLI)에서 노동법 개정, 청피노조 부활, 서울시장 사퇴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6시간 동안 점거농성
- 02.04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 1차 공판
- 02.07 남민전 사건 관련, 박헌채 등 구속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 02.12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 학원민주화 결의
- 02.24 서강대 학생회 부활추진위, 결의문 발표
- 03.01 해태제과 노동자, 8시간 노동제 실시 쟁취
- 03.04 남화전자 노조결성
- 03.10 YH해고자들, 노동절 식당에서 취업요구 시위
- 03.15 ‘민주헌정동지회’ 사무실 개소
- 03.15 신민당, 민주화 촉진 쉼기대회 개최
- 03.28 중앙대, 학원민주화 시위. 약대생 1백여명 ‘폭력교수’의 공개사과 요구하며 농성
- 03.28 동덕여대 4백여명 조용방(趙容郁)학장 등 3명의 사퇴요구 농성
- 03.28 명지대생 1백여명 이사장실 점거·철야농성
- 03.28 서울대, 학생회 6년만에 부활, 회장에 심재철(沈在哲, 사범대 영어과 4년) 선출
- 03.28 한신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결성
- 04.01 경희대(~5.6)·인천대 등 전국 14개 대학, 어용교수퇴진·학원자율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 농성
- 04.02 고병익(高柄翊) 서울대총장, 학생회 공식 인정 발표

- 04.02 홍익대 <학생회부활추진위> 주도 4백여명, 총학생회장 직선을 요구하며 농성 / 경기대생, 1백여명 학장과 어용교수, 재단이사진 사퇴 요구 시위 / 한국체대·서일공전, 학원민주화시위
- 04.03 세종대(~5.3), 재단과 학원의 분리 어용교수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 / 홍익대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 경기대 학원민주화 시위
- 04.07 농성중인 경희대생 5백여명, [趙永植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희인의 백서] 배포 / 유도대생 3백여명, 학원민주화 요구 시위
- 04.08 청계피복노동조합 임금인상·퇴직금제 요구 농성
- 04.09 홍익대, 학원민주화 시위
- 04.09 한양대, 농성학생 폭행
- 04.09 국제대, 학원민주화 시위
- 04.09 청계피복노동조합 농성
- 04.10 한양대생 1천 5백여명, 오전 10시 본관 앞에 모여 9일 오전 농성학생 폭행사건에 깡패들을 난입시켰다고 주장, 김연준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총장실 집거 연좌농성
- 04.10 중앙대생, 총장사퇴와 재단과 학교운영의 실질적 분리 등을 담은 '4.10선언문' 배포
- 04.10 성균관대생, 입영집체훈련 거부
- 04.11 서울대, 4월혁명 기념제 및 故김상진 장례식을 5년만에 거행
- 04.11 서울대생, 4월혁명 기념제 및 김상진 추모식
- 04.11 서울지역 9개대학 대표, 학원사태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04.11 롯데·동양·크라운제과·서울식품 등이 서울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에 의해 8시간노동제를 실시
- 04.12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지투쟁위원회, 복지요구 거리 선전전 및 가두시위
- 04.13 세종대생, 학장사퇴 농성
- 04.13 성균관대생, 군사교육반대 유인물 배포
- 04.13 경희대생, 총장사퇴 단식농성
- 04.14 서울형사지법,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 관련 이재문 등 8명 사형 구형
- 04.15 청계피복노조 노사분규 타결
- 04.15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YMCA 결혼식 위장 사건 항소심 선고. 윤보선·함석헌 항소 기각
- 04.16 서강대생, 입영집체훈련거부 결의
- 04.16 해태제과 노동자들, 사측 폭력에 대한 호소문 배포
- 04.17 전국금융노조 농성
- 04.17 주안의 모 음식점에서 109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대한마이크로전자노조 결성식 개최. 위원장에 박순복 선출
- 04.18 청계피복노조, 농성 해단식에서 '8백만 노동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발표
- 04.18 인천 반도상사 노동자 700여명, 8일간 농성투쟁 후 임금인상 쟁취
- 04.19 250명의 여성 노동자, 한국지퍼(Y·K·K)노동조합 결성식 개최. 분회장 고정열 선출
- 04.21 산업선교회 총부 서경석과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정명자 구속
- 04.21 대한모방 노동자 470여명, 5일간 조업중단
- 04.22 통혁당재건사건 상고심 선고
- 04.22 송전대생, 총장사퇴 농성
- 04.23 서울대 농대생, 어용교수 퇴진 농성
- 04.24 서강대 1학년생들, 병영집체훈련 거부

- 04.24 서울대 총대위원회, 병영집체훈련 거부 결의
- 04.24 일신산업 노동자들, 임금인상 및 노조집행부 퇴진 요구농성
- 04.24 재경 종합대 교수 대학민주화 요구성명 발표
- 04.24 성균관대 1학년생들, 집체훈련거부 농성
- 04.24 항공대생, 학원민주화요구 농성
- 04.25 인천제철 노동자들, 경영진퇴진 등 요구 작업거부농성
- 04.25 일신제강 노동자들, 임금인상 및 노조지부장퇴진 요구 작업거부 농성
- 04.25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30여명, 복직 및 노조집행부퇴진을 요구하며 한국노총 위원장 사무실에서 철야농성
- 04.25 일신제강 600여 노동자, 노조지부장 사퇴 및 임금인상 요구 작업거부 농성
- 04.27 NCC 인권위 등 고난받는 형제를 위한 기도회 개최
- 04.28 국민대생, 학원민주화 농성
- 04.28 서울대 농대생, 어용교수퇴진 농성
- 04.28 태양금속 노동자들, 임금인상 및 노조정상화 요구 농성
- 04.28 원진레이온 노동자들, 해고자복직 및 임금인상, 노조정상화 요구 철야농성
- 04.29 건국대생 20여명, 이사진 전원사퇴 요구하며 농성
- 04.29 반도상사, 금성통신, 대한모방 임금인상 농성
- 04.30 고려대 서클연합회, 시국선언문 발표
- 05.01 성균관대생, 집체훈련반대 농성
- 05.02 서울 버스 운수 노동자 근로조건 및 임금제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
- 05.02 서울대생, 민주화 대행진
- 05.02 서울형사지법,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 관련 이재문 등 4명 사형 선고
- 05.03 서울대생, 비상계엄해제 등 요구 시위
- 05.03 대우중공업 노동자, 어용노조규탄 및 단체협약준수 요구 농성
- 05.03 세진전자 등 금속노조남서울지역지부 산하노조 9개분회 노조민주화요구 농성(지부사무실)
- 05.04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학원민주화 및 비상계엄해제를 주장하는 성명 발표
- 05.05 노동운동을 변혁운동으로 전화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05.03부터 2박 3일간의 창립대회를 거쳐 이태복·김철수·신철영·양승조·박태연·김병구·유해용·유동우·윤상원·하동삼 등을 주축으로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결성. 중앙위원장 이태복 선출
- 05.06 경기도 오산 소재 대성모방 노동자들, 노조결성방해 중지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작업거부 농성
- 05.06 부평 수출4공단내 서움전자 등 5개사 노동자들,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농성
- 05.06 이화여대생, 계엄철폐요구 시위
- 05.06 한신대생, 비상계엄해제 등 시국선언문 발표 및 농성돌입
- 05.06 외대생, 민주화촉진대회 개최
- 05.06 학원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대학연합 가두시위
- 05.07 외대, 연세대 교수, 시국성명 발표
- 05.07 한신대 대학원생,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선언' 발표
- 05.07 연세대생, 시국성토대회 개최
- 05.07 연세대 대학원생, '민주화운동에 즈음한 우리의 결의' 발표
- 05.07 홍익대생 1천여명, '범민주화촉진대회' 개최

- 05.07 외대생 8백여명, 야간 가두시위 전개
- 05.08 전국 각 대학 시국성토대회
- 05.08 서울지역 대학신문들, '시국에 대한 대학신문 결의' 채택
- 05.08 중앙대 총학생회, '5·8 선언문' 발표
- 05.08 이화여대 교수, 선언문 발표
- 05.09 연세대생, '연세대학교 민주화투쟁선언문' 발표
- 05.09 숙명여대, 한양대생, 햇불시위
- 05.09 건국대, 인하대생, 시국성토대회
- 05.09 전국금속노련 산하 조합원, 노조집행부 규탄 및 해고자복직 요구 농성
- 05.09 이화여대생, 연좌대모
- 05.09 중앙대, 숙명여대 교수, 비상계엄해제 등 시국성명 발표
- 05.09 서울대 학부, 대학원생 계엄해제요구 철야농성
- 05.10 롯데제과노동조합, 민주후보 신태웅 지부장 선출
- 05.10 동국대 교수, 시국선언문 발표
- 05.10 전국23개 대학 총학생회장, 비상계엄해제 요구 성명서 발표
- 05.10 단국대생, 시국성토대회
- 05.11 인하대 교수, 언론자유보장 등 시국선언문 발표
- 05.13 한국노총, '노동기본권 확보 전국 쫓기대회' 개최
- 05.13 대원전기 노동자 600여명, 노동자 인권유린 항의 작업거부 철야농성
- 05.13 서울지역 대학생, 계엄철폐 시위
- 05.13 노동기본권확보 전국쫓기대회
- 05.13 원풍모방, 청계피복, 금속노조민주화추진위 소속 노조,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등 3,000명, 노동3권보장 전국서명운동 전개, 여야 총재의 노동권보장 확답요구, 어용노조간부퇴진 등 요구 농성
- 05.14 전국 27개대학 총학생회장단, 가두시위 결의
- 05.14 서울시대 21개대 대학생과 지방 11개대 대학생 15만여명, 자정까지 가두시위 전개
- 05.14~16 롯데제과노조 2,700여명의 조합원, 전면 파업 전개
- 05.15 지식인 134명 시국선언 발표
- 05.15 전국 60여개대 수십만명의 대학생, 계엄철폐 요구 가두시위 전개. 서울지역의 경우 10여만명의 대학생, 서울역에 집결하여 연좌시위. 시위지도부, 격론 끝에 '서울역 회군' 결정
- 05.16 기자협회, 보도검열지침 반대 선언
- 05.16 롯데제과 영등포공장, 임금인상 등 요구 철야농성
- 0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실시
- 05.17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연행
- 05.17 서통노동조합 결성식 개최. 지부장 배옥병 선출
- 05.17 원진레이온 농성
- 05.22 계엄사, 김대중씨가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 05.23 정치범동지회, 광주사태중지 요구 '민족양심에 호소한다' 유인물 배포
- 05.30 서강대생 김의기,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옥상에서 광주항쟁 관련 유서 살포 후 투신 사망
- 05.31 롯데제과 노조파업 및 노조원 구속
- 06.02 롯데제과노조 부지부장과 부녀부장, 영등포 경찰서 연행
- 06.04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상고심 선고

- 06.09 신군부, 서동구·노성대 등 현직언론인 8명을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구속
- 06.09 김종태, 신촌 이화여대 앞 4거리에서 광주학살 규탄과 민주인사 석방을 주장하는 유인물 살포 후 분신 사망
- 06.24 권운상·황인오 등 6명,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자행한 헌정질서의 문란과 광주항쟁 유발·언론 말살·민주인사 구속탄압·사북항쟁 등을 세계에 알릴 목적으로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는 ‘진공탄’을 사용하여 미국 CBS방송에 의해 생중계되는 대회장을 점거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한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 미수사건’으로 구속
- 07. 우영제(외대 복직생위원회 회장), 학원민주화, 학생활동 자율화와 계엄령철폐, 구속인사석방, 전두환 퇴진을 목표로 교내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청량리 경찰서 연행 구금(80.07.30 학사제적)
- 07.01 월간중앙 6월호 기사관련자 해직, 파면 및 월간중앙 휴간
- 07.04 계엄사,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사건’ 발표. 김대중 등 37명을 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에 구속 송치
- 07.11 노동부, 남화전자 폐업조치. 노조 자동 해체
- 07.12 광주사태 관련 유언비어 유포혐의 가톨릭계 인사들 연행
- 07.16 성북경찰서장 차상록, 80.05.05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던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신계륜)과 화해의 약속을 한 것이 이유가 되어 경찰서장직에서 강제로 해직(<연구팀 자료>)
- 07.23 김태성 등 3명, 이념서적 출판으로 구속
- 07.24 한국주재 외신기자 다수 연행
- 07.26 김용준 등 고려대 교수 6명 해직
- 07.26 임기윤 의문사
- 07.30 신문협회, ‘자율정화결의’ 발표. 언론인 933명 강제해직
- 07.30 연세대, 학생 징계 처분
- 08.04 고려대, 반정부시위 가담 학생 27명 제적
- 08.04 한신대 교수 3명, 반정부발언 관련 사임
- 08.07 CBS, 기자 12명 해임
- 08.09 성균관대, 시국관련 교수 4명 해임, 학생 11명 제적
- 08.12 박용길 장로,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연행
- 08.17 한국지폐(Y·K·K)노조 고정열 분회장 등이 순화교육 등급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를 그만 두면서 민주노조 사실상 와해
- 08.20 한신대, 학내시위관련 학생 7명 제적
- 08.20 이영순(콘트롤데이터 노조지부장), 유옥순(콘트롤데이터 노조부지부장) 등 한국노총 산별노조 위원장급 12명, 노동청 제1차 정화조치에 의해 강제 사직
- 08.20 중앙정보부, 석달윤 불법 연행, 08.21~10.06까지 약 47일간 불법구금. 물고문, 통닭고문 등 고문 수사.
- 08.21 노동청장, ‘노동조합 정화지침 전달’ 공문에 따라 신군부의 민주노조 탄압 구체화(제1차 노동계 정화조치). 이에 따라 160여개(?106개 / 118개 노조->숫자 불일치: 연구팀) 전국 지역지부 해체
- 08.31 각 대학, 시위관련 학생들 제적
- 09.05 서울고법,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문, 신향식 사형선고
- 09.17 김대중 사형 선고
- 09.20 제2차 노동계 정화조치로 민주노조간부 191명 강제 사포
- 09.25 적십자간호전문대생, 반정부유인물 배포

- 10.08 한신대 추도식사건
- 10.11 5.17이전 고대 강연내용과 청계피복노조 임금인상 농성 배후조종 등의 혐의로 이소선 구속
- 10.17 고려대생 시위, '반과소민주화의 횃불을 들라' 선언문 배포
- 10.17 서울대 농대생, 전두환 처단 요구 등 유인물 배포 및 시위
- 10.18 서울대생, '민주화학우선언' 유인물 배포 및 시위
- 10.21 경기공전생, 교내 반정부 유인물 배포
- 10.21 중등고 유인물배포 미수 사건
- 10.23 서울시립대생, 반정부 시위
- 10.27 10.27법난(경신대법난)
- 10.28 조화순 목사 등 3명, 유언비어유포 혐의 구속
- 10.31 원풍모방 노조탄압 사건
- 11.03 김대중 향소심 사형선고
- 11.04 경희대 반정부유인물 배포사건
- 11.05 NCC 인권위 사무실 수색 및 간사 연행
- 11.14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 임시총회 개최, 신문·방송·통신사 통폐합 결의('언론통폐합')
- 12.02 반도상사노조, 전·현직 지부장 회사출입금지조치 항의 집회
- 12.07 합동수사본부, 청계노조 지부장(임현재) 및 노조 간부 7명 강제 연행
- 12.08 원풍모방노조 간부, 대의원 연행
- 12.08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배옥병 등 서통노조 간부 6명 연행
- 12.11 서울대 '반과소학우투쟁선언' 살포, 교내 시위 전개. 관련자 다수가 경찰에 연행 또는 강제 징집 ('무림사건')
- 12.16 전직 CBS 기자 3명,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구속
- 12.23 대법원, 남민전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문, 신향식 사형 확정

\* (날짜미상) 강은기, 민주화운동 관련 인쇄물을 출판하여 오던 중, 계엄사령부의 사진검열을 받지 않은 채 '김재규 구명책자'를 제작·배포한 이유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수도권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 (<연구팀 자료>)

## <1981년>

- 01.06 서울시,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
- 01.22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 01.23 대법원, 김대중 사형 확정. 전두환, 관련자들을 무기로 감형
- 01.30 청계피복노조, '아세아 아프리카 자유노동기구'(AAFLI, 아프리) 사무실 점거 농성
- 01.31 경찰 2개 중대 병력 투입, 아프리 사무실 농성자 전원 연행. 이 과정에서 신광용 전치 4주 부상.
- 02.05 정연주 동아투위원 연행
- 02.10 아프리사무실 점거농성 관련자 11명 구속
- 02.28 대일화학, 노조원 10명 해고
- 02. 이선근 등 5명의 발기인 및 중앙위원을 중심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결성
- 03.03 대통령 취임관련 소요예방 차원의 30여명 민주인사 연금
- 03.05 신홍교통 안내양 95명, 부당처우개선 및 체불임금지급, 부당해고자 복직 요구농성
- 03.07 안기부, 박동운을 03.07~05.08까지 62일간 불법 구금. 물고문, 성기고문 등 고문수사. 증거가 없자 "모든 증거를 '망치'로 때려 부셔서 버렸다"고 조작, 망치가 유일한 증거물.
- 03.13 반도상사노조 해산
- 03.19 문용식·박태건 등 서울대생 300여명 기습 교내시위, 유인물 '반파쇼반민주투쟁선언' 2백여장 배포
- 03.25 서울대생 교내시위, 동맹휴학선언 유인물 배포
- 03.31 성균관대생 윤익수, 이현배·강석신 등과 함께 성대 교내에서 '반파쇼행동강령' 및 '반파쇼시국선언'이라는 제목의 반정부 유인물 500여장을 살포하면서 학내 시위 주도.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
- 03.31 중앙대생, 민주구국선언문 배포
- 04. 안기부, 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손유형 및 국내에 있던 그의 가족들 함께 연행, 구속. 일본에서 유류절약용 첨가제판매회사를 경영하던 손유형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
- 04.03 연세대 반정부유인물 배포혐의로 기독교학생회회원 10여명 연행
- 04.03 서울대생, 구속학생석방요구 동맹휴학 결의
- 04.09 동방산업 노동자들, 노동시간연장 항의파업
- 04.22 남민전, 전학련 사건 관련자로 연세대생들 추가 구속
- 04.28 이념서적 소지 혐의 대학생들 구속
- 04.30 NCC 인권위, 양심수 349명 명단발표
- 05.06 서울 제일교회 전도사와 교회청년을 치안 본부 대공분실로 연행, 대학부 조작조사
- 05.06 연세대생 '국풍81'반대 유인물 배포 시위
- 05.07 중앙대생 시위, '동대민주학우반파쇼5월투쟁' 유인물 배포
- 05.12 권선준·심재환 등 성균관대생 교내 기습시위 주도, 경찰과의 투석전 전개, 80년 광주항쟁 이후 최초의 가두시위로 진행. 관련 학생 6명 구속 및 제적
- 05.12 안기부, 1970년 동경 엑스포 때 부친의 초청을 받고 도일, 일가친척도 만나보고 관광도 하고 부친으로부터 도장기계와 사업자금을 얻어 귀국하여 사업에 열중하던 **김장길** 연행. 김장길은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된 81.06.25까지 약 45일간의 불법구금기간 동안에 "변호사에게조차 한동

안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다가 처의 메모를 보고서야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을 정도”의 고문을 당함

- 05.14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발족
- 05.15 양심수 가족들, ‘5·17 1주년을 맞으며’ 성명서 발표 및 농성
- 05.27 서울대 광주항쟁 희생자 위령제 행사 진행중,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김태훈(서울대 경제학과) 투신 사망
- 05.28 서울대생 신림동 가두시위
- 05.29 중앙일보 연재소설 ‘옥망의 거리’ 관련, 작가 한수산 및 손기상·권영빈·이근성 등 관련기자 7명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 3일에서 5일간 고문수사
- 05.29 서울대 김태훈 장례식 시위
- 05.30 훈련병 박성혁 시국발언으로 구속
- 05.30 우성산업 노조분회장 및 간부3명 해고
- 06.01 서통노조 노보 ‘상록수’ 출간 관련 서통노조간부들 연행. 전 지부장 배옥병과 전 섬유노조 기획전문위원 이목희 구속
- 06.09 서적구입 편지 관련 전 대명공민학교 교장 이관복 구속
- 06.10 도서출판 광민사 대표 이태복(전민노련 중앙위원장),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불법연행.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전국민주학생연합(전민학련) 사건(일명 ‘학림사건’) 발생
- 06.16 이선근·이덕희 등 전민학련 관련자 수십여명 연행, 약 한달에서 60일간 외부와 완전 차단된 채 고문수사 진행. 전민노련과 함께 전민학련 와해.
- 06.20 전정배 의문사
- 06.30 동오실업, 현대시멘트, 남화전자 등 노조탄압
- 07.11 노동부 폐업조치로 남화전자노조 해체
- 07.23 전국민주학생연맹, 전국민주노동연맹 사건 관련자로 이태복 등 30여명 구속
- 08.03 노동수기 ‘어느 돌맹이의 외침’ 저자 유동우 연행
- 09.03 신문기사 소재 강의 관련 항공대생 김희구 구속
- 09.12 무협지 ‘무림파천왕’ 저자 연세대생 박영창 구속. 한국 무협소설사상 초유의 필화사건으로 그 후 출판이 금지되어 10년 동안 출판되지 못하다가 1993년 마침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됨
- 09.19 한울출판사 대표 김종수, 아민 서적 출간 관련 구속
- 09.29 외국어대와 경희대생,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 10.07 서강대생 김호경, 학내에서 ‘군사정권퇴진’ 시위를 주도. 구속 및 체적
- 10.12 영등포 교도소 양심수 농성
- 10.13 보안사, ‘재일교포유학생 간첩사건’ 발표. 재일교포유학생 김태홍 및 그에 포섭된 우대형과 박성우, 김태홍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전경 이태수와 이기현 등 구속
- 10.21 민중문화사 대표 정진영, 이념서적 배포혐의로 구속
- 10.24 연고전후 연세대와 고려대생, 가두시위
- 11.09 고려대와 외대생, 문무대 입소후 군사집체훈련반대 시위
- 11.13 전태일열사 11주기 추도식
- 11.22 순복음교회 유인물배포 혐의로 안기석 구속
- 11.25 연세대생 양희경, 학생회관에서 ‘군사독재타도’ 관련 유인물 살포 후, 투신
- 12.02 이해동 목사, 설교내용 관련 연행
- 12.04 북한방송 모방 단국대생 구속

- 12.06 안기부, 12.06~82.02.26까지 약 62일간 안승윤 불법구금
- 12.11 경찰, NCC인권위 사무실 난입
- 12.12 서울구치소 양심수들, 처우개선 요구 농성
- 12.20 대학생불교연합회 노동야학사건(일명 '사원화운동사건')
- 12.30 부평특수 사목팀 연행

## <1982년>

- 01.18 대학생불교연합(대불연) 수련회프로그램 관련 용공조작
- 01.22 이태복 무기징역 등 전민노련·전민학련 사건 관련자 25명 실형 선고
- 02.07 의정부교도소 수감 대학생들, 처우개선 요구 단식농성
- 02.08 보영전자 해고자 14명, 성명서 배포
- 02.11 경찰, NCC인권위원회 주최 강연 ‘교회와 이데올로기’의 사례연구 발표집 압수
- 02.12 안기부, 강화군 ‘미법도 어부일가 간첩단사건’ 발표. 황용운, 한금분, 황순애 등 3명 구속 송치
- 02.19 연동교회 대학생부 수양회 탄압
- 02.19 콘트롤데이터노조 긴급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쟁의 돌입
- 02.20 종로교회 청년부 수양회 참가자 수색
- 02.20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 그의 시대’ 등 금서 부분허용 조치 발표
- 02.22 서울대, 이념교육 신입생 교양필수과목화 방침 발표
- 03. 안기부, 차풍길 연행, 66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의 결과 간첩혐의를 뒤집어씀. 차풍길은 1975년 경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하수구일등 막노동을 하면서 지냈으나 돈도 못 번 채 귀국하였는데, ‘7년 전 일본체류 당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 당한 뒤 귀국,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 03.15 콘트롤데이터노조 탄압사건
- 02.23 콘트롤데이터노조, 23일부터 25일까지 태업 전개
- 03.12 사측, 콘트롤데이터노조 이영순 전 지부장·유옥순 전 부지부장 등 6명 해고 조치
- 03.15 콘트롤데이터노조, 철야농성과 정상근무를 반복하면서 투쟁 전개
- 03.15 원풍모방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장으로 정성순 선출, 조직 재정비
- 03.19 서울대 사범대 졸업생, 시위가담전력 관련 교사임용 보류
- 04.01 콘트롤데이터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결의문 채택
- 04.05 시국관련 수배자 은신혐의로 최기식 신부 등 카톨릭계 인사들 연행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수배자 원주교구 은닉 사건’)
- 04.11 김수환 추기경, 부활절 강론에서 천주교 탄압 항의
- 04.12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정부당국에 묻는다’는 제목의 천주교 탄압 항의 성명서 발표
- 04.13 기독교청년연합회(EYC)서울지구, 부활절 예배후 시위
- 04.13 코리아스파이서사, 노조원 부당인사조치
- 04.13 안기부, 서울 및 안동거점 고정간첩·포항 거점 일본우회 간첩·해외 취업자 간첩 등 3개 ‘간첩망’ 검거 사건 발표
- 04.15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서 발표. 검찰, 성명서 발표 후 박형규·권호경·정상복 목사 등 관련자 11명 연행
- 04.16 기독교청년단체들, 부활절강연회 후 시위
- 04.24 목요일예배 관련 김상근 목사 연행
- 05. 한국공해문제연구소(공문연) 창립
- 05.01 송영인(서울대생) 및 서대문구치소 양심수 1백여명, 교도행정의 반민주성에 항의하면서 처우개선 요구 단식농성 돌입
- 05.03 원풍모방노조 쟁의 돌입
- 06.04 새벽 2시 30분경 경찰 기동대 2백여명, 콘트롤데이터노조 회의장에 난입하여 조합원 49명 강제

연행. 당국은 노조를 도시산업선교회(도산)와 연계시키고자 했고, 언론에 의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더욱 강화

- 05.09 군사우편물 내용 관련 현역사병 구속
- 05.14 고려대생 시위
- 05.17 일신제강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 요구 시위
- 05.26 성공회 서울교구 사제단, '5·18 추모예배 구속신도를 위한 특별미사' 집행
- 05.27 서울대생 김태훈추모제 개최
- 05.31 태창섬유노조 탄압
- 06.10 문양수(외대 3년), 교내 사회학관 5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인 「반과쇼민주쟁취선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유인물의 내용을 낭독하는 등 시위 주도
- 06.11 '타는 목마름으로' 출간 관련 창작과비평사 세무탄압
- 06.14 예장청년회 전국연합회,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개최
- 06.30 서준식, 사회안전법 적용 구금기간 재연장
- 07.10 노동부 현관 앞에서 장관 면담을 요청한 콘트롤데이타노조 조합원 50여명,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 07.15~16 사측, 콘트롤데이타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 집단폭행
- 07.23 정성희(연세대생), 군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 공권력의 위법행사로 인한 사망 인정)
- 08.05 NCC,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 개최
- 08.20 서울대생, 일본교과서 왜곡 반일시위
- 09.02 서울대 반정부 유인물 배포 사건
- 09.09 중앙대생 로프시위
- 09.09 '노가바'(노래 가사 바꾸기)의 가사와 곡을 모은 책자 '노동과 노래' 발간인 허병섭(이철용의 '꼬방동네 사람들'의 실제 주인공) 목사 연행
- 09.10 안기부, 송창섭과 한경희의 가족과 친인척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울·충북 거점 간첩단 29명 검거 사건' 발표
- 09.15 서울대 일본교과서왜곡문제 토론회
- 09.27 원풍모방노조 사무실에 구사대가 난입하여 폭력 행사, 정성순 조합장과 노조사무원 김인숙 감금. 노조 농성 돌입
- 09.30 회사 고용 폭력배와 경찰, 원풍모방노조 농성장 1차 강제진압, 노동자 가두시위 전개
- 10.01 경찰, 원풍모방노조 농성장 2차 강제진압. 연좌 농성 노동자들, 전투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36명의 연행자와 72명의 부상자 발생
- 10.04 이신범, 신병치료와 교도소처우개선 요구 단식
- 10.05 서울대생, 노동자투쟁 지지 유인물배포
- 10.07 원풍모방노조원, 출근투쟁 전개. 경찰, 원풍모방사태 관련 기도회 개최 예정장소인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관 원천 봉쇄, 기도회 무산. 노동자와 학생 등 영등포 일대에서 연대가두투쟁 전개
- 10.13 대림동 강남성심병원 앞에서 원풍모방노조 탄압 규탄 시위 전개
- 11.03 대학가, 학생회날 기념식. '군부독재 타도',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서울지역 대학연합 시위 전개
- 11.04 지방자치제 실시의 필요성을 주장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동서 교수의 논문 '국정지표와 지방행정'을 게재한 내무부 산하 단체 지방행정공제회의 「지방행정」지 회수

- 11.23 최윤봉, 한신대 예배실 시위사건으로 구속(83.04.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 받음)
- 12.05 안병규, 서울농대에서 시위주도. 지도휴학당함
- 12.10 안기부, 재일교포 김장호를 51일 동안 불법구금. 구치소에 입소한 뒤에도 3번이나 안기부에 끌려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협박받음
- \* (날짜미상) 안기부, 김준보 간첩 검거사건 발표. 김준보의 경우 일본거주 아버지를 만나러 1967년,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조총련계인 아버지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 지하당을 구축하려 한 간첩'으로 만들어짐

## <1983년>

- 01.19 원풍모방노조원, 그동안 기숙하고 있던 산업선교회관에서 해산 결정 (83.01.19 인명진 목사, 노조 간부들에게 정리 요청)
- 02.17 원풍모방노조 관련 구속자, 감옥에서 5일간 제1차 단식투쟁 전개
- 03.08 제적생복교대책위, 구속자석방 등 6개항 요구
- 03.10 안기부 제약회사 간부였던 김성규를 59일간 불법감금과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준 고문수사를 통해 간첩 혐의로 구속. 1980년 11월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선으로 일본 제약업체 시찰단으로 독일 중 자유시간에 잠시 육촌 누이내외를 만나 두 시간여 동안 점심을 함께 먹으며 가족의 안부를 전하고, 카메라, 양말, 시계 등 선물을 받고 돌아와 당숙모에게 전해준 일이 발미가 됨
- 03.18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창립총회
- 03.21 서울시내 택시기사 사납금인하 요구 승차거부
- 03.25 한일합섬 이사 김근조 고문 치사
- 03.26 도산 집착 혐의 일본인 대학생 미쓰다 연행
- 03.27 청계피복노조복구준비위원회 결성
- 03.30 김현동(성균관대 81년 입학), 학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던 중 이를 이유로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강제징집’ 및 ‘강제휴학’을 당함. (<연구팀 자료>)
- 04.30 영등포구치소내 원풍모방 수감자들, 차별시정을 요구하면서 5월 16일까지 16일간 제2차 단식농성
- 05.03~04 이윤성(성균관대생) 군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인정)
- 05.16 원풍모방 구속자 가족 및 노조간부 단식농성
- 05.18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단식농성(~6.9)
- 05.21 콘트롤데이터 성명서 사건 관련 구속자 무죄 선고 신판근 판사 사표
- 05.25 원풍모방노조 대책위원회, 천주교 홍제동성당에서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를 통하여 원풍노조에 가해진 당국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야만성 규탄
- 05.31 함석헌 등 5명 ‘긴급민주선언’을 발표 후 단식농성
- 06.08 봉천5동 470번지 강제철거
- 06.17 양심수가족협의회, NCC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치범 석방 요구 농성
- 06.17 김영삼 비서실장 김덕룡 구속
- 06.18 김두황(고려대생) 군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운동 및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관련성에 대한 진상규명 불능 판단)
- 06.18 ‘여성평우회’ 창립총회 개최. 공동대표로 조형, 지은희, 이미경 등 3인 선출 (06.18, 기관지 「여성평우」 창간호 발간)
- 06.30 주양건설 해외취업 노동자 100여명, 체불임금 항의 농성
- 07.02 한영현(한양대생) 군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판단)
- 07.07 태창메리야스 해고노동자들, 단식농성
- 07.07 원풍모방노조 관련 구속자들 7월 15일까지 3차 단식 농성
- 07.13 안기부, 리비아기능공 간첩·부산거점 일본우회 침투·재일민단 위장전향 간첩 등 ‘3개 간첩망 6명 검거사건’ 발표
- 07.23 정성희 의문사 사건(연대)

- 07.23 안양교도소 양심수들, 처우개선 요구 단식농성
- 08.01 가톨릭농민회, 농협조합장 직선제 실시 100만서명운동
- 08.12 구속된 원풍모방노조 간부들, 광복절을 맞이하여 형집행정지로 모두 석방
- 08.12 기장 청년회원 800여명 연행 사건(해방절 예배에 참석하려는 것을 저지)
- 08.13 최온순 의문사 사건
- 08.23 민주인사 30여명, 아키노 암살 항의 시위(주한 필리핀대사관)
- 08.27 치안본부 직속 비밀수시기관, 야학교사들에 대한 불법연행과 가택수사 등 전면적인 탄압 ('야학 연합회 사건')
- 08.29 서울구치소 수감 대학생들, 집시법 철폐등 요구 단식농성
- 09.13 안기부, 정영을 약 40일간 불법구금, 발가벗긴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고 전신구타 등 고문 수사
- 09.15 이경옥, '전두환 정권의 학원사찰 중지, 학도호국단의 어용화 반대, 졸업정원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 학내시위 주도. 시위과정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이를 이유로 징역1년6월의 유죄판결과 퇴학이라는 학사징계를 당함)
- 09.30 박찬중 저서(『부끄러운 이야기』) 출판 관련 일원서각 세무사찰
- 09.30 70년대 학생운동 출신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창립. 의장 김근태·부의장 장영달을 비롯, 5명의 집행부 선출
- 09.30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가두 시위
- 10.06 인하대 전두환 정권 반대집회 중 윤호영, 독재에 대한 거부 및 민주주의 요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학내 이승만 동상 철거
- 10.20 태평특수섬유 블랙리스트에 의한 노동자 4명 부당해고
- 10.24 백산서당 편집장(서기원) 구금
- 11.08 서울대생 황정하 시위중 추락사
- 11.09 레이건 방한 관련 재야인사 가택연금 및 요주의 대학생 특별보호조치
- 11.09 성종규(연세대생), 교내에서 학생 300여명과 함께 레이건 방한반대 및 군부독재 타도 시위 전개.
- 11.11 서울시내 대학생, 레이건 방한반대 가두시위
- 11.30 강제징집 연세대생 유동현 사망
- 12.03 경찰,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의 초·중·고 교과서 분석과 관련, 유상덕 등 현직 교사 9명에 대해 통일과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해직 교수 강만길·리영희 연행
- 12.06 이리·인천 지역 해고노동자, 블랙리스트철폐운동 전개
- 12.11 한희철(서울대생) 군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인정)
- 12.15 JOC, 블랙리스트 철폐 단식 농성 전개
- 12.16 미쓰이 물산 서울지점 한국인 직원 80명, 민족차별·부당해고 반대농성
- 12.20 '해직교수협의회' 발족(변형운 교수 등 중심)
- 12.21 제적생 1,363명, 복교허용조치 발표

\* (날짜 미상) 83년 초. 김유능, 비민주적으로 권력을 획득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상시적인 학원사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정부비판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다 구속. 민주헌정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연구팀 자료>)

## <1984년>

- 01.04 서울지역 13개 대학 제적생 복교에 관한 성명서 발표
- 01.05 통일문제사건 공대위 결성
- 01.06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 결성
- 01.10 치안본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의 '통일문제 관한 교과서 분석 사건'(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발표. 강만길·리영희 교수 및 원장 조승혁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1.13 '서울철강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1.14 각 대학 제적생 총회
- 01.17 '서울영동운수노동조합' 결성식
- 01.18 '동아운수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1.18 '삼익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1.19 '민주노동자 블랙리스트 철폐위원회' 결성(위원장, 문익환 목사)
- 01.25 경인지구 제적생 복학대책위 결성
- 02.01 '서울성부중개화물노동조합' 결성식
- 02.04 '서울상신운수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2.18 경인지구 제적생 총회
- 02.18 '삼미기업노동조합' 결성식
- 02.29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농가부채 탕감운동
- 03. 민청련, 기관지 「민주화의 길」 발간
- 03.04 한국자동차보험(주) 노동자들, 부당해고 항의 철야농성
- 03.07 '서울현대상운노동조합' 결성식
- 03.09 서울대 등 6개대 제적생 총회
- 03.09 대한광학 노조결성
- 03.09 '대한광학노동조합' 결성식
- 03.09 서울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결성
- 03.10 홍제동성당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 창립선언대회 개최. 운영위원장으로 방용석 선출
- 03.11 '청구화공노동조합' 결성식
- 03.15 방배동 빈민철거 사건
- 03.15 성균관대 학원자율화 문제를 위한 3자 공개간담회 개최
- 03.16 대학가, '학원자율화(또는 학원민주화)추진위' 구성
- 03.20 강제징집 사망자 추도식
- 03.24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결성
- 03.24 민청련 기관지, '민주화의 길' 창간
- 03.24 대우어패럴노조원 민욕자, 노조탈퇴 강요에 음독자살 기도
- 03.27 청계피복노조 복구준비위원회 결성
- 03.29 연세대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 03.29 고려대 학도호국단, 고려대 자율화추진위원회 결성 결의
- 03.30 서울대 군입대 사망자 한희철 추도식
- 03.30 서강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결성

- 03.30 철도노조회관에서 46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에스콰이어노조 결성. 위원장에 조동언 선출 (04.06 신고필증 발부)
- 03.31 에스콰이어노조 1,200여 조합원,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우리의 결의’ 발표
- 04.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기관지 「민주노동」 발간을 통해 선전 및 교육활동 전개
- 04.02 서울대 학도호국단 및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학생회관에서 학내 민주화 요구 단식농성
- 04.03 화학노조 우성실업 임금인상투쟁
- 04.03 서울대 ‘교수와의 공개 좌담회’ 요구 시위
- 04.03 ‘서울문화교통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4.03 성균관대생, 강제징집 사망자 이윤석 추도식 및 가두시위
- 04.04 서울대 강제징집 희생자 추도식
- 04.06 서울대 학도호국단과 학자추, 언론 성토대회 및 관제언론 화형식 개최
- 04.08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노동자 343명 및 내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피복노조 복구대회’ 개최. 전 노조위원장 민중덕을 위원장으로 선출.
- 04.10 대련 화학노조 임금인상요구 작업거부
- 04.10~12 서울대 학원자율화 요구 도서관 철야농성
- 04.12 민청련 외 7개 기독교청년단체, ‘대학생 강제징집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04.12 이화여대 공개간담회 요구 철야농성
- 04.13 전국 55개 대학 학원민주화 요구 시위 및 농성
- 04.13 고려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결성대회
- 04.14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 발족
- 04.14 서울지역 대학생들, 강제징집 사망자 추도식
- 04.14 노조원 80여명과 문익환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노조 사무실에서 청계피복노조 현판식 개최, 노조 재결성
- 04.14 해직언론인협의회 발족
- 04.14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 창립
- 04.17 주안의 한 음식점에서 109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마이크로전자 노조 결성식 개최. 위원장에 곽순복 선출
- 04.17 고려대 강제징집 사망 김두항 추도식
- 04.19 서울지역 17개대생, 4·19 기념식
- 04.20 연세대 강제징집 사망자 정성희 추도식
- 04.24 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결성
- 04.27 ‘서울동해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4.28 대학생불교연합회, ‘정법수호선언문’ 발표
- 04.30 기독교청년협의회, 반폭력투쟁위원회 결성
- 05.01 15개 민주·민권·종교단체 대표들,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에 관한 공개토론회’ 및 합법성 쟁취대회 개최.
- 05.01 금강제화 파업
- 05.04 서울지역 6개대학 학자추, 강집사망 6명에 대한 합동위령제 거행
- 05.06 기독교청년 평화대행진
- 05.08 ‘신양제지노동조합’ 결성식
- 05.17 서울지역 17개 대학, 광주학살규탄대회 및 가두시위 전개

- 05.18 서울대 ‘광주민중항쟁영령 위령제’ 개최
- 05.18 서울동부지역 4개대학 대학생 2천5백여명, 외대에서 광주학살규탄대회 개최 및 경찰과의 투석전 등 가두시위 전개
- 05.18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발족
- 05.19 민청련, 광주항쟁희생자 추도식 거행
- 05.19 ‘한일칼라노동조합’ 결성식
- 05.20 ‘삼원기업노동조합’ 결성식
- 05.21 금천여관에서 32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금강제화노조 결성대회 개최. 위원장 이상명 선출
- 05.24 ‘서울상진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5.25 서울대생, 노동3권 등 보장 요구 가두시위
- 05.27 ‘경용기계노동조합’ 결성식
- 05.28 보성운수 버스 안내양 시위
- 06.07 ‘서울삼희통운화물노동조합’ 결성식
- 06.08 ‘삼양중기노동조합’ 결성식
- 06.08 57명의 노동자들이 금속연맹에 모여 가리봉전자노조 결성식 개최. 위원장 지혜숙 선출 (07.09 노조현판식)
- 06.09 노동자 105명, 섬유노련 회관에서 대우어패럴노조 결성. 위원장 김준용 선출.
- 06.11 노동자 73명이 섬유노련 사무실에서 선일섬유 노조결성. 위원장 김현옥 선출
- 06.13~14 마장동 우시장 노점상 강제철거 및 노점상 항의농성
- 06.20 블랙리스트 해고노동자 복직촉구대회
- 06.20 영등포 산업선교회관에서 경수지역 해고노동자 복직대회 개최
- 06.23 ‘서울뉴코리아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6.24 ‘협진화학노동조합’ 결성식
- 06.27 ‘동인석재노동조합’ 결성식
- 06.29 민청련을 비롯, 사회 각 민주세력이 그동안 합법영역에서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 결성. 조직단위 가입을 원칙으로 노동자, 농민, 언론인, 문화인, 청년, 종교인 등 부분운동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출발. 공동대표로 김승훈·김동완·이부영 선출
- 07.08 ‘한국칼라노동조합’ 결성식
- 07.13 ‘성남성아운수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7.14 노동자 59명이 모여 섬유노련 회의실에서 효성물산(구로공단 소재) 노조결성식 개최. 위원장 김영미 선출(07.25 설립신고증 교부)
- 07.14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복권추진협의회 발족
- 07.18 ‘서울영미교통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7.18 ‘서울범양교통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7.20 ‘서울하진기공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7.24 대왕제지노조 결성. 위원장 박남홍 선출
- 07.31 ‘서울협진상운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8.02 대왕제지 사측, 박남홍 위원장 해고. 이에 ‘노동조합을 지키겠습니다’는 혈서를 박위원장 씀
- 08.07 55명의 노동자, 성남 상대원동의 한 음식점에서 ‘라이프제화노조’ 결성
- 08.07 ‘서울광일실업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8.11 ‘슈어프로닥츠노동조합’ 결성식

- 08.11 '서울영원운수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8.12 '동서기연노동조합' 결성식
- 08.13 '성남성신운수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8.13 '동두천중앙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8.15 '유성기업노동조합' 결성식
- 08.15 대학생들, 8·15 기념식 및 가두시위
- 08.16 '성남대중산운수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8.22 창진운수 안내양, 승차거부
- 08.25 '서울영부운수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8.27 서울시의 목동·신정동 신시가지 조성계획 발표에 항의, 목동 주민 양화교 집거 농성
- 08.29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대학생 2천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관계토론회' 개최. 이후 대학생 서울 시내 도심 가두시위 전개
- 08.29 '서울세창운수택시노동조합' 결성식
- 09.01 33명의 노동자, 금속연맹 사무실에서 유니전노조 결성식 개최. 위원장 현윤실 선출
- 09.03 일본재침략저지 민족운동대회 발기인 단식농성
- 09.03 망원동 수재민, 마포구청 항의시위 전개
- 09.04 청량리경찰서, 경희대 여학생 성추행
- 09.04 성균관대에서 19개대 연합 방일 반대 가두시위
- 09.06 일본재침략저지 민족운동대회, 민족궐기대회 및 민주협 전두환 방일반대성명서 발표
- 09.06 풍납동 수재민 200여명, 강동구청 앞과 풍납동 4거리에서 생계대책 요구 가두농성
- 09.06 서울대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 결성식
- 09.07 난지도 주민, 수해철거대책 항의시위 전개
- 09.08 강동2동 주민, 철거항의 시위
- 09.09 정성국 장로 등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 반대파 신도 및 가족 40여명, 교회 무단집거 및 당회장 퇴임 요구. 박형규 목사지시 신도 50여명 교회밖에서 철야농성
- 09.14 한국양심범사면추진협의회 발족
- 09.17 서울대북학생협의회 발족
- 09.17 서울대 북협 발족식 직후 '서울대 학원프락치(임신현)사건' 발생
- 09.17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쟁취대회
- 09.17 서울대 학원프락치 사건
- 09.17 유니전노조 간부들, 사측에 의한 민주노조 탄압 경위와 결의를 담은 '노동조합 소식'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해고
- 09.18 63명의 노동자, 금속연맹 시협의회 사무실에서 협진양행노조 결성식 개최. 위원장 곽상순 선출 (구로구청·경찰·사측의 방해와 협박 등으로 노조 설립 무산)
- 09.19 전태일 분신 장소인 인간시장 장소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대회'가 경찰 봉쇄로 무산. 노동자와 학생 등 2천여명, 동대문 일대에서 가두시위 전개. 122명 연행,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 속출
- 09.20 고려대 총학생회 부활
- 09.21 제2차민족운동대회
- 09.22~10.07 대우어패럴, 선일섬유, 효성물산 노조 조합원들, 연3주간(1박2일)의 공동숙박교육 실시, 노동자간의 친밀감과 공감대 형성

- 09.22 반도기계 사망자 유가족 사내 집단농성
- 09.25 연세대 총학생회 부활
- 09.26 5개대학생연합 반일시위
- 09.27 한국노협, 노동법개정촉구 인천대회 개최
- 09.27 서울대 총학생회 부활
- 09.29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빈민문제 공청회 개최
- 10.01 '서울대 프락치사건'으로 유시민 등 구속
- 10.01 민민협, '민중의 소리' 창간
- 10.04 서울시경, 서울대프락치 사건 수사결과 발표. 서울대 사회대 과대표단, 학생회 간부 제명처분  
향의농성
- 10.04 이화여대생 졸업정원제폐지 요구 농성
- 10.05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 '총학생회 탄압을 중지하라' 성명서 발표
- 10.05 서울대생, 학원수호비상총회 및 철야농성
- 10.05 민주협, 박형규 목사 테러 및 서울대프락치사건에 관한 성명 발표
- 10.07 '민주화추진위원회'(민주위, 일명 '깃발'그룹, 위원장 문용식) 결성 (결성 일자는 검찰 추정 발표)
- 10.08 중앙대 불문과 일문과 학생 및 학부모 폐과조치 향의 철야농성
- 10.08 연세대와 고려대생, 학생회인정 요구 가두시위
- 10.08 경희대생, 공대이전 반대시위
- 10.09 통일문제연구소(통문연) 발족
- 10.10 경희대 러시아어과생, 폐과조치 향의농성
- 10.10 세종대 지리학과, 일문과생, 학과조정 반대농성
- 10.10 서울대 복학생들, 유시민 복협회장 구속 향의, 관악서 연좌농성, 전원 연행
- 10.12 고려대생, 총학생회인정 요구시위
- 10.12 민주화추진위원회(민주위) 산하 서울대 '민주화투쟁위원회'(민투) 결성
- 10.12 '제2차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를 위한 노동악법개정촉구대회' 개최
- 10.13 노동자복지협의회, 국회에 제3자개입금지 조항 철폐 등 '노동법개정청원서' 제출
- 10.13 박영두 의문사 사건
- 10.15 상명여대 이전반대 시험거부 및 철야농성
- 10.16 민주·통일 국민회의 결성
- 10.16 경희대생, 수원이전 반대시위
- 10.17 대우어패럴노조, 회사 옥상위 집단농성
- 10.19 서울대생, 부마항쟁5주년기념 반독재민주화연합투쟁 실천대회 및 가두시위
- 10.19 안기부, '테러전문 남파간첩 정해권 검거사건' 수사 발표
- 10.19 재야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상징적 정치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 결성. 의장 문익환 선출
- 10.19 서울지역 7개대생, 민주화투쟁실천대회(서울대)
- 10.20 14개대 여학생회 연합, 여대생 추행사건 규탄대회
- 10.20 대우어패럴노조 조합원, 사측의 노조 탄압을 폭로하고 사회여론화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점거농성.
- 10.22 수해를 입은 망원동 주민 23명,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신청서 제출
- 10.22 제2차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가 경찰 제지로 무산. 2천여명의 노동자와 학생 가두시위

- 전개
- 10.22 서울교대생, 졸업생임용보장 요구시위
  - 10.22 부천반도기계 유가족, 사망자 사인규명요구 농성
  - 10.23 선영상사 체임 노동자들, 농성
  - 10.24 서울대생, 학원프락치사건 관련 중간고사 집단거부
  - 10.24 서울농대생, 학내 경찰진주 항의농성
  - 10.24 동아투위 및 조선투위,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10주년 기념 성명발표
  - 10.25 외대생, 폭력교수퇴진 요구 교내시위
  - 10.25 대우어패럴노조 조합원,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농성
  - 10.26 서울지역 대학생, 남대문과 가리봉5거리 등에서 노동악법개정요구 가두시위
  - 10.27 유니전노조 재결성
  - 10.27 한국노협, 노동법개정촉구대회
  - 10.27 민주위 노동문제투쟁위원회(노투), 민중지원투쟁(민지투) 차원에서 구로공단·부평역 시위 전개
  - 10.28 서울대생, 서울대 프락치사건 진상규명 요구 민한당사 농성
  - 10.30 서울대 '반독재민주화축제' 개최
  - 10.30 반도기계 유가족, 2차 사망자 사인규명 농성
  - 10.31 대우어패럴노조 조합원, '노동3권 보장, 김우중 회장 및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민한당사에서 농성
  - 11.01 서울대 '메아리' 회원 10여명, 용공혐의로 연행
  - 11.02 연세대생 임용준(심리학과 4년) 군 의문사. 군당국, 탄약고 경계근무중 자살한 것으로 발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 2003년 11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망 원인 규명 감정 의뢰)
  - 11.02 성균관대 민주화추진위원회 및 총학생회부활준비위 결성 및 시위
  - 11.02 한성여객 안내원, 동료해고 항의 집단이탈
  - 11.02 대우어패럴 노조원 50여명 민한당사에서 농성
  - 11.03 서대문경찰서, 연행 고려대 여학생 성추행
  - 11.03 연세대에서 개최된 학생의 날 기념연합집회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4개 대학의 민주화투쟁위원회('민투')가 주축이 되어 민주화추진위원회(민주위)의 외곽조직으로 '전국 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 결성
  - 11.04 한성여객 안내양, 부당해고 항의 기숙사 탈출사건
  - 11.05 42개 대학생 연합, 학생의 날 기념식 및 군사독재정권퇴진 쫓기대회
  - 11.05 협진양행, 유니전 해고노동자 9명, 금속노련회관 점거 단식농성 (농성자들, 5일간의 조사 끝에 10~20일의 구류처분)
  - 11.05 송전대생, 무능교수퇴진 농성
  - 11.06 민투학련, 연세대에서 철야농성중 민정당사 점거농성 계획 논의
  - 11.07 협진양행, 유니전 해고노동자, 시위 전개
  - 11.08 서울지역 대학생, 핏불시위
  - 11.08 유니전·협진 농성노동자, 경찰에 강제연행
  - 11.10 대우자동차 노동자, 군복무기간의 근무기간 합산 요구 농성
  - 11.12 대우자동차 노동자 700여명, 근로기준법 준수 등 요구 준법투쟁
  - 11.13 전태일열사 14주기 추도식, 남대문시장과 구로공단 등지에서 가두시위
  - 11.14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 소속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대학생 264명, 민정당 중앙

- 당사 점거 투쟁, 노동약법 개정, 전면해금 실시 등 14개항의 요구조건 발표 (이후 기습점거식 투쟁방식은 대중투쟁방식과 실천적인 결합을 모색할 때까지 유행처럼 확산)
- 11.16 14개 대학 여학생회 연합 ‘여학생 추행사건 진상조사위’, 추행사건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 내외신 기자회견
  - 11.18 청계피복 노조원, 노동자, 청년 등 600여명, 모란공원에서 전태일열사 추도식 개최
  - 11.19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발족
  - 11.20 여학생 성추행사건 규탄대회
  - 11.21 ‘여학생 성추행사건 대책협의회’ 결성
  - 11.22 서울대생, 양평동철거 항의시위
  - 11.22 연세대생, 강제철거중단 가두시위
  - 11.30 택시(민경교통)노동자 박종만 분신
  - 12.01 박종만 분신자살 항의 노동자 200여명, 세브란스 병원 농성. 경찰, 60여명 강제연행
  - 12.07 신답역에서 박종만열사 추모시위
  - 12.12 전국대학연합 선거대책위원회 결성
  - 12.15 74명의 노동자, 회사 근처 중국집에서 협진화섬노조 결성식 개최. 위원장 김진숙 선출 (12.28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 12.19 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기자협의회 회원들, 장충동 베네딕토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의장 송건호) 창립총회 개최 (98.03.27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으로 개칭)
  - 12.26 노조 대의원 및 적극적인 조합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자동차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 발족, 소식지 배포
  - 12.27 대우자동차 사측, 이용선과 송경평 해고. 부당해고에 맞서 출근투쟁 전개

<1985년>

- 01. 목동 철거민, 시청앞 향의 농성. 강제해산과정에서 9명 중상, 주민 수백명 연행
- 01.14 경인지역 9개 사업장 해고노동자 10명, 민한당 총재실 점거 농성
- 01.14 민주총선쟁취 학생연합 1차대회 개최. 학생운동진영, 본격적인 총선투쟁 돌입
- 01.14 중국집 영풍루에서 인천 소재 경동산업 노조 결성. 위원장 김홍섭 선출. 사측과 한국노총·금속노련·노동부·인천시청·부평경찰서·안기부 등의 합작으로 노조파괴공작 전개
- 01.14 '재야간담회' 결성
- 01.15 일신통신기기 노동자 93명, 해고 향의농성
- 01.16 서울대생 50여명, 신민당사 농성
- 01.19 대우어패럴노조, '상여금 차별대우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이를 바탕으로 '차별대우를 뿌리뽑자'는 운동을 전개, 사측으로부터 75%의 추가상여금 쟁취
- 01.21 민한당사 농성노동자 지지시위자 20여명, 경찰연행
- 01.22 목동철거민 농성 강제해산중 주민 김종연 사망
- 01.22 청량리경찰서, 신입생들에게 총선반대 유인물 배포 및 제작혐의로 경희대 총학생회 문화부장 김현중과 간부 김소영 연행
- 01.23 김지형 등 용접반 소모임 구성원을 중심으로 진도노조결성준비위원회 구성
- 01.25 영등포 영보극장 부근에서 '노조탄압 중지' 및 '민정당 타도' 가두시위
- 01.29 연세대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대, 성균관대 등 서울지역 6개대생 1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총선쟁취 학생연합 2차대회 개최 및 '최저임금보장, 선거법 개정, 전면해금실시' 등을 주장하며 시위 전개
- 01.29 용산경찰서, 01.25 영등포 영보극장 가두시위에 참가한 단국대생 김기원과 양원철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
- 01.31 진도노조 정상화추진위원회 결성
- 02.02 당산동 진철역 부근 시위. 민주총선 보장 요구 유인물 배포. 이와 관련 서울대생 임동식 등 3명 구류처분
- 02.05 민주통일국민회의 주최, '민주제도 쟁취 국민운동대회', 경찰 원천봉쇄로 저지. 학생, 노동자, 시민 등 1천5백여명, 파고다 공원 앞에서 가두시위 전개
- 02.05 서울 동작 유세장에서 중앙대생 이철우와 서울대생 서정호, 군사독재 결사반대를 외치며 민정당 허청일 후보에게 암모니아수병 투척
- 02.06 동보전기노조 설립
- 02.07 한국노협 인천지역협의회 결성
- 02.08 서울 김포공항에서 '김대중선생 귀국환영대회' 개최
- 02.15 민주총선쟁취 학생연합 3차대회 개최
- 02.25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언론기본법 개정운동 전개
- 02.25 고려대 총학생회, 김준엽 총장의 강제 사표 제출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교내 향의시위 전개
- 02.26 한국스텐레스 부당처우개선추진위원회 결성
- 02.26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 중앙위원회,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와의 통합 결의
- 02.27 영창악기 노동자 1,000여명, 중식시간에 임금인상요구 서명 및 농성
- 02.27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 확대집행위원회,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와의 통합 결의
- 03. 반공해운동의 실천적 전개를 목표로 '반공해운동협의회' 발족 (5월말 온산공단 공해문제와 원자

- 력발전을 포함한 핵문제 전반을 특집으로 다룬 부정기간행물 「공해」 발간)
- 03.03 노동자 81명, 금속연맹 교육실에서 성원제강 노조결성대회 개최. 위원장 송태규 선출
- 03.03 관악산에서 동일제강노조 결성준비위원회 발족
- 03.04 성원제강 사측, 노조설립신고서류 폭력 탈취. 노동자들, 탈취서류 반환 때까지 작업거부 농성 결의
- 03.06 건국대생, 함석헌 초청연설회 취소 항의 시위
- 03.06 고려대생 7백여명, 김준엽 총장 강제 사퇴와 관련 ‘교권수호·학원민주화 대토론회’ 개최
- 03.08 제1회 3·8여성대회 개최
- 03.09 어용노조의 반노동자적 태도에 반발, ‘해태제과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해태제과노민주) 구성
- 03.10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근로자의 날’기념행사 및 노동악법개정 요구 시위
- 03.10 기독교노동자연맹 노동절대회 1,500여명, 가두시위
- 03.14~19 성원제강 노동자, 민주노조 인정 및 어용노조퇴진 요구 작업거부 및 철야농성. 경찰에 의한 강제해산과 어용노조에 신고필증 발부. 농성가담자 중 9명 연행, 이 중 6명 훈방조치, 3명 구류 10일 처분
- 03.15 고려대생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경대와 문과대 교수 50명과 총학생회가 공동상주가 되어 ‘민중고대정기 장례식’ 개최. 문과대와 정경대, 3월 23일까지 수업 거부
- 03.19 구로역전에서 성원제강 노동자 파업 지지 시위
- 03.20 안기부, 서울·안동거점 간첩단, 입북간첩, 조총련 연계 간첩, 자수간첩 등을 엮어 ‘4개 간첩망, 14명 검거사건’ 발표
- 03.20 목동철거 반대 시위
- 03.20 ‘총장 사퇴 결사반대 고대 총궐기대회’ 개최
- 03.21 섬유노조 면방분과, 방협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요구 철야농성
- 03.23 고려대에서 학원민주화 19개 대학 연합집회 개최
- 03.29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 중앙위원회 결의(02.26)와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 확대집행위원회 결의(02.27)를 바탕으로 두 단체가 통합,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출범. 의장 문익환, 부의장 계훈제·김승훈 선출
- 03.31 해태제과노민주의 어용노조 불법행위 고발과 임금인상투쟁 등 활동에 맞서 사측, 남성노동자들을 극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동원. 이 과정에서 껌부 남성조합원 김철수 사망
- 04.03~05.08 가리봉전자노조 임금인상투쟁 전개, 17.5%의 인상안 쟁취
- 04.04 협진화섬 어용노조 출범. 이를 계기로 성남지역에 ‘협진화섬노조탄압대책위’ 구성
- 04.09 한국음향기기도노조 설립
- 04.10 한국음향노조위원장 등 18명, 민주협 사무실에서 농성
- 04.10 서울대에서 경인지역 12개 대학 대표가 모여 ‘경인지역학생연합회’(경인학련) 및 ‘반외세민족자주수호투쟁학생연합’ 결성
- 04.10 인천지역 해고노동자와 구로지역 해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경인지역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결성
- 04.11 한국음향 여성노동자 18명, 민주협 사무실에서 단식농성
- 04.12 서울대생, 협진노조 탄압중지 가두시위
- 04.12 청계노조합법성쟁취 4차대회 개최
- 04.16~25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 2,000여명, 파업투쟁 전개. 인천공장 노동자 200여명 동정파업 (04.19 철야농성 돌입. 04.22 사측 휴업 결정, 노동자들 경찰 철수 요구 가두시위. 04.25 단체협

- 상 합의)
- 04.16 금속노조 단위노조 대표 40여명, 노총회관에서 한국음향노조 인정 요구 농성
  - 04.17 고려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학생 2천여명,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결성식 개최. 의장 김민석(서울대 총학생회장), 부의장 오수진(성균관대 총학생회장) 등 4명 선출, 그 산하에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고려대 총학생회장 허인회) 설치. '현 정권에 보내는 경고장' 채택하고 '매국방미 결사반대', '수입개방 결사반대' 농성 전개
  - 04.18 섬유노조 생사분과위원회, 생사수출조합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요구 단식농성
  - 04.18 유유산업 노동자 80여명, 임금인상요구 농성
  - 04.19 대우자동차 400여 조합원, 철야농성 돌입
  - 04.19 서울지역 17개대생, 4·19 교내 시위. 4·19묘소에서 전국 26개대생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학련 주최의 '4·19혁명 25주년 기념식' 개최. 가두시위 전개, 시위 관련 대학생 320명 경찰연행
  - 04.22 대우어패럴노조, 라인당 2~3인의 조합원이 작업복에 임금인상 '몸벽보'를 붙이는 투쟁 전개
  - 04.23 안기부, 성묘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귀국하던 김길옥을 부산국제공항에서 입국 즉시 연행, 간첩 혐의로 구속. 김길옥은 40여일간의 불법구금과 고문 속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
  - 04.23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송경평, 제3자개입으로 구속
  - 04.25 효성물산 노조원 임금인상요구 파업농성
  - 04.25 부산파이프 구로공장 노동자 150여명, 인원감축 항의농성
  - 04.26 대우어패럴 파업
  - 04.30 동일제강 노조결성 (노조신고서 반려 이후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으로 민주노조 결성투쟁 실패)
  - 05.01 메이데이 집회 및 노학연대 가두시위
  - 05.03 동일제강 노동자 50여명, 부당노동행위 항의 사내시위 및 농성
  - 05.03 부평 소재 동보전기 노동자 200명, 임금체불항의 파업농성
  - 05.03 이천 소재 진로 노동자 660명, 임금인상 요구 잔업거부
  - 05.03 신용보증기금노조, 민정당원 우대발령에 항의농성
  - 05.04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에서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창립
  - 05.04 동일제강 노동자 34명, 금속노조연맹 사무실에서 부당노동행위 철회요구 농성
  - 05.04 대우자동차 파업 주도 노동자 5명 구속, 6명 불구속입건
  - 05.0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초판 전량 압수
  - 05.06 고려대에서 전학련 2차대회 개최
  - 05.07 서울대 삼민투 결성
  - 05.08 오리엔탈 노동자 59명, 노조 결성
  - 05.09 성남 소재 상일가구 노조 결성
  - 05.11 금속노련 간부, 동일제강노조 설립선고서 반려 항의, 구로구청 농성
  - 05.14 연세대에서 전학련 3차대회 개최
  - 05.16 서울지역 14개대생 8천여명과 지방 25개대생 7천여명 등 전국적 차원에서 각 대학별로 광주항쟁 진상규명 요구 시위 전개. 경찰, 서울 지역 시위와 관련해 상명여대생 14명과 성균관대생 1명 등 15명 연행
  - 05.16 성균관대생 1천5백여명, 경찰과 교문앞 투석전 전개, 이후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철야농성
  - 05.16 건국대생 1천5백여명, '광주사태 해명하라'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 투척 및 횃불시위 전개

- 05.16 민통련 회원 및 간부 40여명, 광주항쟁 관련 성명서 발표 및 분도회관에서 농성 돌입
- 05.17 출판계 인사, 서적단속 항의 성명 발표
- 05.17 광주항쟁진상규명 시위
- 05.20 한국노총, 문화체육관에서 근로여성대회 개최
- 05.23 함운경 등 삼민투 소속 대학생 73명(서울대 13명, 연세대 20명, 고려대 10명, 서강대 8명, 성균관대 22명), 서울미문화원 점거 농성 (05.26 농성 해제, 전원 경찰 연행, 25명 구속, 전학련 의장 김민석과 삼민투 위원장 허인회 등 7명에 대해 수배조치) (공안당국이 민주위를 그 배후로 지목, 민주위 핵심간부들이 대거 체포, 민주위 사실상 와해)
- 05.23 서·인노련 노동자 16명 한미은행 영등포지점 점거
- 05.24 대우중공업노조 대의원, 대의원대회 정상진행 보장 요구 철야농성
- 05.25 대우중공업 노동자, 어용노조퇴진 등 요구 가두시위
- 05.29 광주학살정권퇴진을 위한 국민대회
- 05.29 서울대생 500여명, '광주 민주영령 및 김태훈 추모제' 행사 개최
- 05.29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 황석영 연행
- 05.29 경인여객 안내양과 기사 24명, 대의원 공정선거 실시 요구 농성
- 05.31 공해문제연구소 주최 성직자협의회에 참석했던 신·구교 목사 52명이 주축이 되어 '공해문제성직자협의회' 결성. 환경주일을 설정, 각 교회에서 환경주일행사 개최 결의
- 06. 민언협, 기관지 『말』 창간
- 06.01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당시 조성된 반합법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구민련) 결성
- 06.01 구로지역 해고노동자 및 학생, 공단 연대가두시위
- 06.04 한일스텐레스 노조원 200여명, 폐업위협 항의농성
- 06.04 조상훈(서울대 서양사학과 휴학중, 서울 구로동 소재 성원제강에 일반기능공으로 입사), 구로지역에서 '구로지역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연합' 명의의 유인물을 통해 노동악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노조결성 탄압말라' 등을 구호로 외치는 등 노학연대 시위를 하여 구속(85.10.28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고 만기출소) (<연구팀 자료>)
- 06.07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제13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85 반공해선언」 발표
- 06.07 전학련, 서울대에서 '광주항쟁 및 군부독재에 대한 범국민자유토론회' 개최
- 06.07 동일제강 노동자 100여명, 민주노조 인정 등 요구 사내 옥상점거 파업농성
- 06.11 대림통상 해고자 및 민주노조운동가 40여명, 부당해고 및 사내폭력항의 시위
- 06.13 검찰과 경찰,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삼민투'에 대한 전면수사 착수 (그 결과 전국 19개대 총 수사대상자 86명중 63명 검거, 이중 56명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 06.14 한일스텐레스 노조간부 13명 해고
- 06.18 경인지역 해고노동자 18명, 신민당사 농성
- 06.22 대우어패럴노조 집행부 김준용(위원장)·강명자(사무장)·추재숙(여성부장), 경찰에 연행
- 06.23 대우어패럴, 가리봉전자, 효성물산, 선일섬유노조 동맹파업 결의
- 06.24 대우어패럴 노동자, 구속자 석방 및 노조탄압 중지 요구 농성
- 06.24~29 구로동맹파업. 구속 43명·불구속 38명·구류 47명 등 총 1,500여명의 대규모 피해 발생 (06.24~29 대우어패럴노조 파업 / 06.24~26 효성물산노조 파업 / 06.24~27 가리봉전자와 선일섬유노조 파업 / 06.25~26 남성전기와 세진전자와 롬코리아노조 준법농성 / 06.27~28 삼성제약노

- 조 중식 거부 / 06.28 부흥사노조 파업)
- 06.30 우수열(서울대 국문과 4년)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사건 진정 기각 결정)
- 07.01 효성물산 위원장 등 5명 구속
- 07.02 구로동맹파업 관련 24명 구속
07. 민청련·EYC·전학련, '민중민주화운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회의' 구성, 성명 발표. 김병곤 (민청련 상임위원장) 구속, 이범영(민청련 집행국장) 수배
- 07.08 마이크로전자 노동자, 노조탄압중지 등 요구 농성
- 07.10 가리봉전자 노조위원장 등 2명 구속
- 07.10 서울대생, '민중·민주화운동탄압 반대궐기대회' 개최
- 07.15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최초 공판 및 관련자 재판 거부
- 07.16 종로경찰서, '민중교육' 출판기념회 원천봉쇄
- 07.18 대검 공안부, '삼민투위 사건' 수사 발표 및 관련자 56명 구속
- 07.18 시교육위, 민중교육지 관련 교사들 소환
- 07.18 구로동맹파업 관련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민통련 사무실에서 항의농성
- 07.20 '1985년 한국미술 20대의 힘' 전시회 작품 강제철거
- 07.22 민중교육지 관련 유상덕·김진경 교수 경찰 연행
- 07.23 구로동맹파업 관련 해고노동자 23명, 가리봉5거리 연좌농성
- 07.25 「월간 민족문학」(자실 발간) 압수 및 배포금지
- 07.25 대한마이크로전자 노조위원장 등 4명 구속
- 07.31 한국노총, 노총간부 5명 부당해고 조치
- 08.01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학인 401인 선언' 발표
- 08.01 민통련 기관지 「민중의 소리」 압수
- 08.02 대성목재에 위장취업한 김형성,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의 역사』, 『노동조합사』, 『임금이란 무엇인가』 등을 교재로 의식화시킨 혐의로 구속
- 08.07 Y중등교사회, '민중교육 집필교사 징계사건에 우리의 주장' 성명 발표
- 08.11 민중교육지 관련 연행교사 5명 구류 처분
- 08.12 문교부, 학원안정법 시안 발표
- 08.12 민통련 등 39개 민주단체, '학원안정법반대투쟁위원회' 결성
- 08.15 성남지역 노동자생존권투쟁위원회 결성
- 08.15 서울시내 12개대생, 학원안정법 제정 반대시위
- 08.17 안병무·김성식 등 대학교수 14명, 학원안정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 성명 발표
- 08.17 민중교육지 관련 김진경·유재철 교사 및 실천문학사 송기원 주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민중교육지 사건')
- 08.19 한국화장품 노동자 340여명, 임금인상요구 철야농성
- 08.19 서울지역 12개대생, 학원안정법반대 야간 가두시위
- 08.23 민중교육지 출판과 관련, 실천문학사 폐간 조치
- 08.23 18개 출판사 대표, 일월서각 대표 연행 항의농성
- 08.25 구로노동자연대투쟁연합, 청계피복노조,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구민추) 등 4개 조직의 연합으로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 위원장에 민종덕(청계피복노조위원장), 지도위원에 김문수 선출. 대중정치조직(MPO)을 표방하면서 삼민헌법과 생활임금 주장.

- 08.27 해태제과 해고노동자 3명, 반노동자정책 항의 시위농성
- 09.04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 등 3개단체, 언론기본법철폐 요구 항의 성명 발표
- 09.04~09.20 김근태(민청련 의장)에 대한 물고문과 전기고문 수사
- 09.05 전학련, 삼민투 재건대회
- 09.07 서노련, '서노련신문' 창간
- 09.09 안기부·보안사, '구미 유학생 간첩단사건' 합동 수사 발표. 양동화·김성만·강용주·황대권 등 '재미유학생 학원침투간첩단' 관련자 20명과 '서독유학생간첩단' 관련자 2명 구속
- 09.17 경원대생 송광영, 학생운동세력의 정권타도 투쟁을 봉쇄하려는 학원안정법 제정에 항거하기 위해 "학원악법 철폐하고 독재정권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분신(4일 뒤인 10.21 사망)
- 09.20 민통련 2차통합대회 개최, 민청련, 서노련, 개신교의 몇몇 단체 등 11개 공개단체 가입
- 09.21 인천지역 노동자 400여명, 송림동5거리에서 노동3권쟁취 요구 가두시위
- 09.24 전학련 복구대회 및 삼민투 결성식
- 09.26 프로맥스 노동자 50여명, 체불임금청산 요구 농성
- 09.27 종로, 남대문 일대에서 전학련 주최 가두시위 전개
- 09.28 민청련 내 '고문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 구성
- 10.05 서노련, 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려), 안양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 등, '전국노동자 삼민헌법쟁취 투쟁위원회'(전노삼민헌쟁) 구성
10. 김진택,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4천만 동포여 자각하라'라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분신자살을 기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 10.05 '전국노동자 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위원회' 결성
- 10.07 서울지역 2천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대에서 '군부독재 타도, 민족자주 쟁취, 민중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학련 제1차 투쟁선언대회' 개최
- 10.08 영등포 신길동에서 전학련 남부지역평의회 소속 대학생 800여명의 가두시위를 비롯, 서울지역 12개대 2,500명, 지방 5개대 900여명이 IMF-IBRD총회 결사반대 등을 주장하며 교내시위, 가두시위 전개
- 10.11 서노련 중심의 '전국노동자 삼민헌법쟁취투쟁위원회'와 전학련 공동주최로, IMF·IBRD 서울총회 반대 '미국의 경제침략규탄과 외채정권타도를 위한 범민중궐기대회' 개최. 대림시장 앞에서 가두시위 전개
- 10.11 민추위 관련 수배자 우종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4년) 의문사 (10월 11일은 사망 추정일) (의문사진상규명위, 진상규명 불능 판정)
- 10.16 부평 소재 대림자동차 노동자 200여명, 공장이전대책 수립 요구 파업농성
- 10.17 민청련 '고문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민통련·민추협·신구교 성직자·불교승려·주요사건 구속자 가족 등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문수사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고문공대위) 결성
- 10.18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저지투위 관련 노동자 3명 구속
- 10.19 금강운수 안내양 80여명, 노조간부 복직요구 농성
- 10.22 서노련과 청계피복노조에 대해 '불법단체' 해산 명령
- 10.26 연세대에서 전학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성명서 발표와 개헌 서명운동 결의
- 10.26 서울대에서 '유신잔재척결과 파쇼악법철폐를 위한 민주화실천대회' 개최

- 10.26 성남지역 노동운동단압규탄대회 및 광성화학노조총회 가두 개최
- 10.27 8개대생 3천여명, ‘삼민헌법 쟁취, 수입개방압력 철회’등을 주장하며 교내시위 전개. 서노련이 제기한 삼민헌법이 학생운동에 최초로 등장
- 10.29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6개대, 대학별로 ‘삼민헌법쟁취투쟁위원회’ 발족. ‘삼민헌법쟁취 실천대회’ 개최
- 10.29 검찰, 민주화추진위원회(민주위) 사건(일명 ‘깃발사건’) 발표
- 11. 85년 7월에 열린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계기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민족미술협의회’ 결성. 대표 임옥상 선출
- 11.03 인천지역의 해고·구속자 가족들,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결성
- 11.03 민문협·자실협·언협, ‘살인적 고문 및 용공조작을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 11.04 고려대생 30여명, 새마을중앙본부 시위농성(수입개방 반대 요구)
- 11.04 서울대 등 서울시내 7개대생 14명,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 농성, 경찰에 전원 연행
- 11.04 서울지역 10개대생 1,500여명, ‘전학련100만학도학56회학생의날기념식’ 후 홍기일, 송광영, 우중원 합동추모제(‘미국에 대한 공개질의서’채택 및 미국상품화형식 거행) 진행.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회’ 발족
- 11.07 기청협(EYC), ‘반군부독재민중민주헌법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규 기청총무) 발족
- 11.08 혜화동 성당에서 고문공대위와 민동련과 기청협 군부독재타도와 악법철폐투쟁위원회(위원장, 이준호) 등,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를 위한 보고대회’ 개최. 경찰 원천봉쇄 후 가두시위 전개. 이어 민주협 사무실에서 연합농성 돌입
- 11.10 인천기독노동자총연맹 창립대회 개최
- 11.11 서울시립대 등 4개대 대학생 9명, 민정당 정치연수원 점거농성
- 11.11 고문공대위, 민주협 사무실에서 연합농성 돌입
- 11.12 전학련 중부지역 ‘삼민헌법쟁취범국민투쟁위원회’ 소속 서울대, 한신대, 성균관대 대학생 25명,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 기습 점거
- 11.13 전학련과 서노련 공동주최로 ‘고 전태일 동지 15주기 추도식 및 파쇼헌법철폐와 삼민통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실천대회’ 개최. 제기동과 용두동 일대 가두시위 전개. 이후 12월 중순까지 가히 ‘점거농성의 시대’라 칭할 만큼 전국적이고 다발적인 점거농성투쟁 전개  
황명진(청계피복노조 대의원)·이재환(청계피복노조 쟁의부장), 경동시장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노동삼권 보장하라’ 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군부독재헌법 철폐하여 민중, 민주, 민족통일 헌법 쟁취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군중들에게 나누어주고, ‘(노동조합)해산명령 철회하라’, ‘노동운동 탄압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 (<연구팀 자료>)
- 11.14 서울지역 사립대사범대생 1,700여명, ‘순위고사차별조항폐지’ 및 ‘교원대학철폐’ 요구 수업거부 및 교내 철야농성
- 11.17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동지 추도 15주기 추모시위
- 11.18 전학련 ‘민중민주정부수립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 산하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회’ 소속 14개대 대학생 191명, 강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원장 정창화) 본관 건물 점거 농성투쟁 전개. 20개 요구사항 발표. 여학생 56명, 여성문제와 관련된 독자적인 성명서 별도 발표
- 11.18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서울지역 7개대생 2천여명, 각 교내에서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보고대회’를 가진 뒤 교내시위 전개

- 11.18 서노련, ‘생활임금쟁취위원회’ 구성, 86년 임금투쟁 대비
- 11.19 인천 아퐁 해고노동자, 근로자생활대책위 결성투쟁
- 11.20 민통련 등 23개 단체, ‘민주헌법쟁취위원회’(민헌쟁위) 구성, 개헌투쟁 전개
- 11.21 NCC 회장단 및 소속 6개단체 회원 500여명, 세종문화회관에서 미국의 과도한 저작권보호요구 반대 결의대회 개최
- 11.21 서울지역 10개대생 2천여명,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파쇼헌법철폐를 위한 범국민대토론회’ 개최, 교내시위 전개
- 11.28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폐쇄 항의, 80여명 농성
- 12.02 민주헌법쟁취 1차실천대회 개최
- 12.04 백용현·전명숙 등 감신대생 6명, 전국섬유노련 사무실 점거 농성. “파쇼헌법 철폐하고 군부독재 타도하자”라는 유인물을 배포, “노동운동 탄압하는 파쇼헌법 철폐하라,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침
- 12.09 보안사, ‘일본인 유학생 간첩(이바나 유다카) 검거 사건’ 발표
- 12.09 창작과비평사 등록 취소
- 12.09 중원전자 노동자, 상여금지급요구 농성
- 12.14 태광교역 노동자, 상여금지급요구 파업농성
- 12.19 김근태(민청련 의장), 법정에서 고문 진상 폭로
- 12.28 민청련 간부 구속자 가족을 중심으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결성. 초대 공동대표로 이청자 선출

<1986년>

- 01.07 태평양화학 노동자 400여명, 임금인상 및 생리휴가실시 요구 파업
- 01.13 재야 지도자 22명, '조국의 위기 타개를 위한 우리의 제언' 성명 발표
- 01.17 인천 소재 한신여객 노동자 120여명, 체불임금 및 상여금 지급 요구 파업농성
- 01.20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 범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지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발족
- 01.21 84.11.30 분신사망한 박종만 열사를 기리고 운수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 홍제동 성당에서 박종만추모사업회 발족. 회장은 김승훈 신부
- 01.22 부평 소재 영남개발 노동자 90여명, 체불임금 지급요구 농성
- 02. 이정배(고려대 경제학과 4년 재학),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 4개월 10일간 복역)
- 02.04 서울지역 14개대 대학생 1천여명,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헌법철폐 투쟁대회 및 개헌서명운동 추진본부'(-)><연구팀 자료>의 경우 대회명과 관련, '팻쇼헌법철폐 및 범국민개헌서명운동추진본부 발족대회'라고 되어 있음) 결성식 개최. 위원장에 오수진(성균관대), 중앙집행위원장에 유동철(고려대), 동부지역위원장에 이규해(외대) 등을 선출
- 02.05 오은경,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4년 재학중 영등포역앞 대한생명빌딩 옥상에서 '군부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는 시위로 구속(86.09.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의 유죄판결)
- 02.07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인노협)와 인천노동3권쟁취위원회가 연합, 노동자복지협의회와 관계를 정리하고 대중정치조직을 표방한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결성
- 02.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등 기독교단체 대표 20여명, 'KBS-TV 시청료 거부운동본부' 발족
- 02.12 신민당·민추협, '대통령직선제 개헌 1천만명 서명운동' 시작
- 02.14 한국콘티넨탈 노동자 25명, 임금투쟁
- 02.17 기독교계, '기독교민주헌법개정서명추진본부' 결성 준비회의 개최
- 02.20 인재근 등 민가협 회원 40여명, NCC인권위 사무실에서 '양심수석방, 용공조작음모중단, 고문책 임자퇴진' 등 요구 농성
- 02.21 성남 신생 노동자, 임금체불항의 대책위원회 결성 및 철야농성
- 02.26 경찰, 시위에 대비하여 서울대 교내에 사복경찰 1천5백여명 배치. 서울대 졸업생 4천여명, 졸업식장에서 집단퇴장. 오숙은(노문학과 2년), 전학련 명의의 유인물 배포로 경찰 연행
- 02.27 주안5공단 이성전자 노동자 700여명, 임금인상요구 전원 파업농성
- 03. 서울대 인문대를 중심으로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결성. 이후 성균관대, 연세대 등 다수의 대학으로 파급. 공동의장으로 김길오(서울대 민민투위원장)·김성택(연세대 민민투위원장·조용묵(성균관대 민민투위원장) 선출. 산하 기구로 '친미주구일당 처단과 민주적 권리쟁취 투쟁위원회'와 '노동자 해방운동 지원지원 연대투쟁위원회'라는 명칭의 기구를 두고 기관지로 '민족민주선언' 발간
- 03.01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국기도회 개최
- 03.05 부천 소재 미성통상 노동자들, 체불임금지급요구 파업농성
- 03.05 반월지역 해고노동자 8명, 안양 신민당 이택돈 사무실에서 농성
- 03.05 민통련, '군사독재퇴진촉구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선언' 발표
- 03.08 신민당 헌법개정추진위원회 서울시지부 현판식 개최

- 03.08 민통련 여성부를 비롯한 20여개의 여성단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구세군 서대문 영문본당에서 하여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 발족
- 03.08 심경숙, ‘광주학살 원흉처단’, ‘5공화국 헌법 철폐’, ‘독재정권 지원하는 미국 규탄’, ‘노동자 임금인상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전경련 사무실을 점거하는 행위를 통해 국민의 정당한 헌법 개정 요구를 탄압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 민주헌정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점 인정 (<연구팀 자료>)
- 03.09 김수환 추기경, ‘정의와 평화를 갈구하는 9일 기도’ 후 직선제 개헌 촉구
- 03.10 서노련과 기독교노동자총연맹 등, 성문밖교회에서 ‘86 임금인상투쟁전진대회’ 개최
- 03.10 한국노협, ‘노동운동탄압규탄 및 최저임금제 쟁취대회’ 개최
- 03.11 대한광학 노동자 100여명, 임금인상 및 부대해고 철회 등 요구 시위
- 03.11 부천 소재 경원기계 노동자 200여명, 어용노조반대 중식거부투쟁 전개
- 03.12 신영수 의문사
- 03.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개헌서명운동 동참 발표
- 03.13 여성계, ‘민주헌법쟁취 범여성추진위원회’ 결성
- 03.14 ‘서노련신문’, 12호부터 ‘노동자신문’으로 발전
- 03.15 부평 소재 하인벨 노동자 80여명, 부당인사조치에 전원파업결의
- 03.16 전옥현 등, 전경련이 민중생존권 보장을 방해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한다는 판단 아래 전경련 회장실 점거
- 03.17 구로 소재 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 임금인상과 작업조건 개선 요구 농성중 경찰과 대치 끝에 회사 옥상에서 분신 (03.18 사망)
- 03.17 구로 소재 협진양행 노동자 40여명, 임금인상 등 요구농성
- 03.17 신민당과 민통련,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 구성
- 03.18 한남동 소재 성우무역 노동자 130여명, 10일간 체불임금청산 등 요구 농성 전개
- 03.18 6개대 대학생 16명, 전경련 점거농성. ‘파쇼헌법 철폐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자’, ‘매관 독점재벌 응징하자’ 등의 구호를 외침
- 03.18 서울대 ‘반전반핵평화옹호투쟁위원회’ 발족
- 03.19 서노련, 구로공단 가리봉5거리에 위치한 모세미용실 점거, ‘생활임금쟁취’ 등을 요구하며 농성과 가두투쟁 전개
- 03.20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원 150여명, 부당인사조치 및 노조탄압 항의 철야농성
- 03.22~25 서노련과 인노련 공동으로 전태일기념관에서 농성 전개
- 03.23 박영진열사 장례식 투쟁
- 03.24 구로 소재 나우정밀 노동자 13명, 일당 5,000원 쟁취 및 강제잔업철폐 등 요구 농성
- 03.24, 서노련과 인노련, 주안6공단 가두시위 주도
- 03.24 구로 소재 삼경복장 노동자 18명, 임금인상 및 부당해고철회 등 요구 농성
- 03.24 연세대에서 ‘학기중 전방입소 거부에 관한 범연세인 실천대회’ 개최
- 03.25 안양 소재 동전산업 노동자 100여명, 임금인상요구 농성
- 03.26 대한변호사회, ‘개헌연구위원회’ 구성
- 03.28 전국 12개 신학대생들, ‘전국신학대학생연합회’ 결성
- 03.28 고려대 교수 28명, 시국선언문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발표
- 03.29 서울대 자연대 건물 22동 404호에서, 이른바 반체그룹(AI그룹)의 핵심인 단재사상연구회(단사그룹)를 모태로 ‘구국학생연맹’(구학련) 결성 (자민투는 비합법조직인 구학련의 공개투쟁기구)

(에학투련 발대식 이후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검거로 사실상 와해)

- 03.30 콘티 노동자 100여명, 일당 4,300원 요구 농성
- 04.01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한국교회1백주년기념관에서 KBS-TV 시청료에 관한 교육 세미나 개최
- 04.02 한신대 교수 42명, 시국성명서 발표
- 04.02 콘티 노동자 및 대학생 100여명, 성남공단 입구에서 '살인정권 타도' '생활임금쟁취' 요구 가두 시위 전개
- 04.03 '서울대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 결성
- 04.03 여성계, '민주헌법쟁취운동범여성위원회' 발족식
- 04.04 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 신부 24명, 시국선언문 발표
- 04.04 민가협 구속자가족 150여명,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구속자석방촉구대회' 및 '행형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
- 04.07 부평 소재 남일금속 노동자 80여명, 임금인상 등 요구 파업농성
- 04.07 대한변협, 헌법개정 요구
- 04.08 주안 소재 한양공영 노동자 250여명, 일당 및 상여금 등 요구 파업농성
- 04.10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 결성
- 04.11 성균관대 교수 35명, 서울대 교수 48명, 개헌관련 시국성명서 발표
- 04.11 민가협 회원 등 100여명, 서대문구치소 앞에서 '구속학생에 대한 가혹행위중단과 폭력교도관처벌' 요구 연좌농성
- 04.11 청계피복노조, '독재정권퇴진촉구대회' 개최
- 04.11 구로 소재 삼애실업 노동자 150여명, 파업농성
- 04.12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250여명, 부평역 가두시위
- 04.13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개헌서명운동 돌입
- 04.13 전국노동자임투위 및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 '노동운동탄압저지 및 군부독재정권과 미·일 제국주의타도를 위한 민중대회' 개최 원천봉쇄 후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기습 가두시위 전개
- 04.15 감신대 교수 10명, 시국성명 발표
- 04.15 성남 소재 신생 노조원들, 기아임금 항의 파업 및 철야농성
- 04.16 전국노동자임투위, '노동운동탄압저지 및 군부독재정권과 미·일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민중대회' 개최
- 04.16 구로 중원전자 해고노동자 5명, 부당해고 항의, 출근투쟁
- 04.16 자민투 산하 '반전반핵투쟁위원회', 남영동 미군기지 근접시위 및 전방입소 거부운동 전개
- 04.16 구로 소재 중원전자 해고노동자 5명, 부당해고 항의 출근투쟁
- 04.17 외대 교수 27명, 시국선언 발표
- 04.18 연세대 교수 32명, 시국선언 발표
- 04.18 한국기자협회 한국일보분회, '우리의 결의' 채택
- 04.18 대학가, 4·19 기념식 및 반정부 시위
- 04.18 이화여대 교수 10명, 시국선언
- 04.19 안양운수 기사와 안내양 5명, 취업카드철폐 등에 관한 유인물배포 및 시위
- 04.21 성균관대생 전방입소 거부시위
- 04.21 성남 소재 라이프제화 노동자 98명, 임금인상요구 파업농성

- 04.22 택시업체 장안실업 노조원 70여명, 동료 해고철회요구 농성
- 04.23 인하대 교수 20명, 시국선언 발표
- 04.24 서강대 교수 28명, 시국선언 발표
- 04.25 출판계 인사 80여명, ‘출판자유수호와 외국인저작권보호저지대책위원회’ 결성 및 ‘출판인의 자유와 권리쟁취를 위한 선언’ 채택
- 04.25 KBS-TV 시청료폐지운동여성단체연합, ‘KBS-TV 시청료폐지 촉진대회’ 개최
- 04.25 송진대교수 14명, 시국선언 발표
- 04.27 남양주군 모란공원에서 박영진 노동열사 장례식
- 04.28 서울대생 이재호(반전반핵평화옹호투쟁위원장)·김세진(자연대 학생회장), 신림동 4거리에서 전방입소 반대 가두시위 중 분신 (05.03 김세진 사망 / 05.26 이재호 사망)
- 04.29 한강성심병원과 영등포시장 일대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좌농성
- 04.29 경희대 교수 19명, 시국선언 발표
- 04.29 반제반과소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소속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생 1천여명, 연세대에서 ‘전국반제반과소민족민주투쟁학생연합’(민민학련) 창립결성대회 개최
- 04.29 외국어대 대학원생 117명, 시국선언문 발표
- 04.30 방화동 소재 삼환택시 해고노동자 변영진 분신 사망
- 05. <치안본부 발표> 86년 5·3인천투쟁 후 경인지역 노동운동권의 핵심 조직원들이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전노추) 결성. 의장은 신철영
- 05.01 서울지역 대학생(200여명), 가두시위(독산동) 및 유인물(‘5.1절 노동자해방투쟁의 날부터 광주민중항쟁까지’) 배포
- 05.01 전국천주교수녀대표모임 ‘한국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9일기도’ 돌입
- 05.01 서노련, 철산리에서 ‘노동자해방투쟁의 날’ 가두시위 주도
- 05.01 고문공대위, ‘최근고문 및 인권탄압 사례보고 대회’ 개최
- 05.01 민통련,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 탈퇴 성명 발표
- 05.02 성균관대생 2,000여명, 강제징집 사망 이운성 추도식 및 ‘5월실천투쟁 방향성 결의대회’
- 05.02 서울대 대학원생 630명, 시국선언 발표
- 05.03 5·3 인천투쟁. 5만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 참석
- 05.05 5·3 인천투쟁 배후주동 혐의 관련, 장기표(민통련 전 사무차장) 등 민통련 산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련), 한국노협 인천지역협의회(인노협) 간부 등 4개 단체 10명 수배
- 05.05 서울대생 4,000여명, ‘민주열사 김세진군 장례식’ 진행. 이후 200여명 신림동에서 가두시위 전개
- 05.06 신생노조원 60여명, 가두시위
- 05.08 5·3 인천투쟁 관련, 민통련 간부 및 학생, 노동자 32명 수배
- 05.08 5·3 인천투쟁 관련 민통련 기자회견
- 05.09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152명, 시국선언문 발표
- 05.10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소속 교사 546명, ‘교육민주화선언’ 발표
- 05.10 흥사단, 시국성명 발표
- 05.12 건국대 대학원생, ‘민중민주주의 위한 선언문’ 발표
- 05.15 민중불교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2,000여명, 제등행렬 참가 시위
- 05.15 중앙일보 기자, 선언문 발표
- 05.15 방통대 교수 16명, 시국성명 발표
- 05.15 연세대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외세반독재민족민주헌법제정민중회의쟁취투쟁본부

- 결성대회' 개최
- 05.15 서노련 관련자들에 대해 '용공이적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소요죄 적용, 구속영장 발부 ('서노련사건')
- 05.17 '민주교육실천협의회' 창립
- 05.17 반외세반독재민주헌법제정민중회의쟁취투쟁본부, '광주학살원흉처단과 민족민주헌법제정민중회의쟁취를 위한 민중대회' 경찰 원천봉쇄 후, 기습가두시위
- 05.20 서울대에서 약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제 행사의 하나로 문익환 목사의 강연 진행중, 학생회관 4층 옥상 난간에서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미 제국주의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이동수(서울대 농대 원예과 1년) 분신 사망
- 05.20~22 부조리한 시대에 대한 한 지식인의 뼈아픈 죄책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울대생 박해정, 한강 투신 사망
- 05.20 구로 소재 제일교통 노동자 70여명 및 가족 30여명, 노조파괴책동 항의농성
- 05.21 서울대생 2천여명, '이동수열사 분신경과보고대회 및 비상학생총회' 개최. 24일까지 수업거부 결의
- 05.21 서울대와 고려대생 전방입소 반대 시위
- 05.22 고려대에서 '헌법제정민중회의쟁취를 위한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2차 실천대회' 개최
- 05.22 서울대, '부산미문화원 점거농성 및 문익환 목사 연행 경과보고대회' 개최. 서울대생 9백여명, 도서관 점거 철야농성 돌입
- 05.23 서울대생 3천여명, 도서관에서 '민족민주열사 위령제' 및 '민주헌법 및 민족자주화를 위한 범국민대토론회' 개최
- 05.25 CBS 직원들, '언론자유회복과 CBS 기능정상화 촉구를 향한 우리의 견해' 성명서 발표
- 05.26 '서부지역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재건설 및 1차실천대회' 개최
- 05.27 서울지역 8개대생, 광주민중항쟁희생자 및 분신학우 추모제 및 교내시위
- 05.28 변경섭(민추협 회원), 종로 가두에서 직선제개헌서명을 받다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 5일 판결
- 05.30 서노련·인노련 소속 해고노동자 16명, 한미은행 영등포지점 점거농성
- 05.30 서울대생 1,000여명, 이재호·이동수 추모집회 및 '직선제개헌쟁취를 위한 쫓겨간 대회'
- 05.30 김경수(중앙대 3년) 등, 전두환 정권의 불법적 집권 및 이를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에 항의하기 위해, 한미은행 영등포지점을 점거 농성. "독재타도, 미제축출, 8시간노동 쟁취, 생활임금 쟁취, 집회자유 쟁취" 등을 요구
06. 정차기, 신도 및 주변사람들에게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학살을 책임져야 한다'고 전두환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 유언비어 유포·날조행위 위반으로 구류처분을 받음
06.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 결성 (결성시점 및 단체명칭은 서울지검 공안부 발표)
06. '남부노동자연맹'(남노련) 결성 (명칭과 관련, 87.05.01 치안본부 발표는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이라고 함.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의 경우, '남부노동자연맹'(남노련)이라고 표기->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으로 하는 것이 맞을 듯)
- 06.02 23개대 교수 265명, 한신대 수유캠퍼스 회의실에서 시국선언문 발표
- 06.03 노동현장 이전팀으로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의식화학습을 진행한 박홍순, 박인규, 홍진표 등 7명,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 06.03 서노련 간부 14명 구속, 3명 긴급수배

- 06.04 한신대 ‘평교수협의회’ 발족
- 06.04 권인숙(서울대 의류학과 출신, 위장취업), 부친경찰서에 연행.
- 06.05 NCC 교회와사회위원회 및 도시농어촌선교위, ‘제14회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성명서 발표 및 원자력발전소건설 반대 입장 표명
- 06.05 재수생 이경환, 전두환 군사정권의 민주·민중운동에 대한 탄압, 극도로 불평등한 노동문제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군부독재에 대한 경고의 글과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를 남기고 청량리 맘모스 호텔 옥상에서 투신·사망
- 06.05 한국공해문제연구소, ‘86 반공해선언’ 발표
- 06.09 반공해운동협의회, ‘한반도의 핵불모화 저지를 위한 반핵, 반공해운동을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 06.16, 권인숙, 교도소 송치 후 수감자들과 함께 문귀동 구속 등 요구 단식투쟁 돌입
- 06.20 이천전기 노동자 이수원,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구속
- 06.21 김성수 의문사
- 06.21 2백여명의 출판관계자들, 신문로 한글회관에서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한출협) 창립. 공동의 장으로 정동익(아침출판사 대표)과 최영희(석탑출판사 대표) 선출 (미국의 저작권보호압력에 대한 범국민적 항의운동의 일환으로 아메리카(America)의 표기를 ‘아름다울’ 美자 대신 ‘꼬리’ 尾자로 바꾼 ‘尾國’으로 할 것을 주장)
- 06.25 연세대 오연호(국문학과 4년, 총학생회 교육부장), 김원용, 박현수, 송다영 등 총학생회 집행부, 제도교육이 은폐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중고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 “진국 애국 중·고 청년에게 보내는 글” 제하의 유인물을 넣은 편지 2,000여통을 배포, 발송.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연구팀 자료>)
- 06.29 서노련, ‘6·24연대투쟁 계승 및 서노련탄압 규탄대회’ 개최
- 06.30 김영규, 5공화국 헌법 철폐 및 민주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과 전두환 정권 퇴진을 주장하기 위해, 구로구 시흥4거리 부근 육교에서 “현 정부는 군사 독재정부로서 그 타도 없이는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연설문을 낭독, “군부독재 타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라”, “헌법특위 분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연구팀 자료>)
- 07.03 권인숙, 인천지검에 강제추행혐의로 문귀동 고소, 진상규명 요구
- 07.0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변태적 성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 07.05 변호인단 9명, 문귀동과 옥봉환 부친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관 6명을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
- 07.08 성남 공단내 한성실업 노동자 50여명, 성남 지방사무소 임금체불 항의농성
- 07.09 신구교 단체대표 10여명(김동완, 이돈명, 이우정 등), ‘부친서성고문대책회의’ 및 ‘대책위’ 구성
- 07.09 ‘양심수강제징집저지투위’ 결성
- 07.10 민문협 및 전국인문과학서적상연합회, 민중가요테이프 압수조치 관련 성명 발표
- 07.11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 범국민운동본부 임원단, 시내에서 시청료 거부 가두캠페인 전개
- 07. 안기부, 이병설 교수(1973년 4월 일본문부성 초청 유학생시험에 합격하여 동경도립대학 기후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뒤 1976년 귀국,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 연행. 21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수사 끝에 일본유학시절 조충련 공작원 김향술에게 포섭되어 잠입, 제자들에게 북한을 찬양하고 제자들을 포섭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
- 07.15 안기부, 유상덕(민주교육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전 성동고교사)을 “북한공작원 이병설과 접촉, 「조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재일조선인 교육론», 「민족해방의 교육학」 등의 책자를 수령, 탐독,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

- 07.16 검찰, 부천시 ‘성모욕행위 무근거’ 공식 발표
- 07.16 신민당, 검찰 수사발표에 신뢰성의문 제기 및 독자진상규명 의사 천명
- 07.16 변호인단, 검찰 수사결과 불복 재조사 재정신청 표명
- 07.17 민교협,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민주교육탄압저지대회’ 개최
- 07.18 부천시 성고문대책위, ‘부천시 성고문사건 진상폭로대회’ 개최
- 07.19 경찰, 명동성당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고문·성고문·용공조작 범국민폭로대회’ 원천봉쇄, 명동 입구 및 주변 도심에서 산발적 시위 전개
- 07.21 고려대 정경대 교수 22명, 서명가담자 연구비 철회계획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 07.22 ‘전국노동자조직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실천대회’ 개최
- 07.22 부천시 성고문대책위, ‘성고문공대위소식 1호’ 발간
- 07.27 개신교 주최 ‘성고문규탄 기도회’, 경찰 원천봉쇄. 성공회 정문 앞, 성공회 주변 및 새문안교회에서 산발적인 비상기도회로 대체
- 07.27 ‘전국노동자조직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실천대회’ 개최
- 07.28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청소년대책전문위원 김형배, 부천시 성고문 관련 양심선언 발표
- 08.01 고려대에서 ‘기만적 헌법특위 분쇄와 망국 아주경기 결사저지를 위한 백만학도 실천대회’ 개최
- 08.06 부천시 성고문대책위, 사건관련 상임위 신민당의원 초청간담회
- 08.08~28 민족미술협의회,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그림마당 민’에서 ‘제1회 통일전’ 개최
- 08.09 제현의회(CA)그룹 결성
- 08.11 서울대에서 ‘김세진 열사 백일탈상 추모제’ 개최
- 08.12 민주열사 유가족들, 전태일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발족. 초대회장 이소선 선출
- 08.14 신민당사에서 ‘고문·성고문·용공조작 범시민폭로대회’ 개최
- 08.14 ‘8·15 민족해방절 기념식 및 기만적 헌법특위 분쇄와 망국 아주경기 결사저지를 위한 백만학도 실천대회’ 개최
- 08.15 구학련과 민민투, 남대문시장 및 신당동에서 가두시위 전개
- 08.16 노동자 33명, 연합노련 산하 동일기업노조 결성식 개최. 조합장 조병삼 선출
- 08.16 부평 소재 소야전기 노동자 150여명, 임금인상 및 보너스지급 요구 식당점거 농성
- 08.17 인천 부평역에서 ‘헌법특위분쇄와 조국통일촉진을 위한 범국민실천대회’ 개최
- 08.21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여성인권대회’(주제;“여성해방과 성고문”) 개최
- 08.28 구로 소재 제일택시 노동자 1,200여명, 해고자복직, 단체협약이행 및 체불임금지급 요구 파업
- 08.29 민교협, ‘민주교육실천대회’ 개최
- 08.31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김경숙 추도식’ 경찰방해로 저지
- 09. 안기부, ‘이병설 교수 간첩(단)사건’ 공식 발표
- 09.01 199명의 권인숙 변호인단 결성
- 09.02 구로지역 노동자와 학생 300여명, 구로독 독산동 고개와 코카콜라공장 앞에서 ‘동일기업노조, 연대투쟁으로 쟁취하자’, ‘군부독재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 전개. 67명 연행, 19명 구속
- 09.03 대알탈포린 노동자 백종수,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에서 ‘광주사태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 기도
- 09.04 안기부, “민주화과정의 혼란을 틈타 정치권에 침투한 간첩 장의균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 장

- 의균의 경우 한국고려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도일하여 교토대학 우에다 마사하키 교수의 연사연구실 연구원 자격으로 있으면서 조총련계 인사들과 어울린 것이 간첩으로 몰리는 불운의 단초가 됨
- 09.04 '친주교·개신교 재개발지역 공동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철거민을 위한 기도회'에서 '서울시 20개 재개발지역 주민연합' 결성
  - 09.06 민문협, 문화운동단체들과 함께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사무실에서 '민족통일의 길목에서 오늘을 바라본다'는 제목의 공동성명 발표. '양키매관문화척결 및 민족민중문화수호 투쟁위' 결성
  - 09.06 「말」지 특집호(86년 9월호) '권력과 언론의 음모-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 기사로 보도지침 폭로
  - 09.06 성베다교회에서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 주최로 예정된 '86 통일굿' 행사 개최가 경찰에 의해 저지. 행사 참가자들, 대학로에 운집하여 즉각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시위 전개
  - 09.06 민문협과 민언협, 문화운동단체들과 함께 민언협 사무실에서 '민족통일의 길목에서 오늘을 바라본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 발표
  - 09.07 조계종, 합천 해인사에서 '불교관계법철폐 및 전면개정을 위한 전국승려대회' 개최
  - 09.08 고려대 공대 건물 한 설계실에서 혁명적 대중조직(RMO)노선을 표방한 고려대 '애국학생회'(애학회) 창립대회 개최
  - 09.09 민언협·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성당 사제관 2층 소강당에서 보도지침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 09.11 대학가, 아시안게임저지와 헌법특위분쇄 요구 시위
  - 09.11 동국대생 700여명, '불교제반악법철폐를 위한 실천투쟁대회' 개최
  - 09.13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공민협) 창립식 개최 (11.06 회지 『공해와 생존』 창간)
  - 09.15 연세대 신학대 신학과 학회실에서 연세대 '반미구국학생동맹'(구학동) 전체맹원대표자회의 개최
  - 09.16 서울지역 15개대생 1,500여명, 고려대에서 '전학련결성촉구 및 아시아경기결사저지를 위한 애국청년학도 서울지역 실천대회' 개최
  - 09.16 각계 민주인사 207명, 나카소네 방한반대 성명 발표
  - 09.16 종교, 여성, 사회단체들, '아시아경기대회 반대' 성명 발표
  - 09.16 불교계 승려 500여명, 개운사에서 '불교관계악법철폐운동대책위 및 1백만 서명운동추진위' 발대식 개최
  - 09.29 'KBS-TV 시청료 거부 및 언론자유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결의
  - 10.08 IMF와 IBRD 서울총회를 계기로 민통련과 24개 운동단체들, '외채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개최
  - 10.09 서울시경, 서울 성수동 일대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모임을 구성하여 불온책자와 유인물 등을 통해 의식화교육을 실시했다는 혐의로 동부지역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소속의 신명식, 고경옥, 김영명, 김정녀 등 구속
  - 10.10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북한의 '민주조선' 10월5일자 내용을 그대로 옮긴 대자보 인문회관 벽에 부착. '서울대 대자보 사건' 발생
  - 10.11 치안본부, 서울대 대자보 사건 관련 수사 착수
  - 10.17 경찰, '구국학생연맹(구학련)사건' 발표
  - 10.18 서울영화집단 등 민중적 시각에서 영화운동을 해왔던 소규모 영화집단들이 발전적으로 해체·통합, 신촌 우리마당에서 '서울영상집단' 창립. 대표 홍기선 선출

- 10.18 치안본부,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전노추)결성사건' 발표
- 10.19 '박영진열사 추모사업회' 결성 집회
- 10.21 민통련 등 40여 민주운동단체 소속 200여명, 미국과 일본의 시장개방압력에 반대하여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미·일 경제침략저지국민운동연합' 결성
- 10.24 서울지검 공안부,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결성기도 사건' 발표. 대학생·교사·노동자 101명을 적발, 이중 27명을 검거해 지도총책 김선태 등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 9명 불구속 입건, 5명 훈방
- 10.2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농어촌 선교위원회, '전노추는 용공조작사건' 요지의 성명 발표
- 10.28~10.31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 및 건국대 점거농성사건(건대사태) 발생.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26개 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건국대 민주광장에 모여 애학투련 발대식을 벌이다 경찰의 진입으로 4일간 철야농성 전개. 경찰의 '황소 31 입체작전'으로 총 1,528명이 연행,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1,290여명이 구속, 397명이 구속 기소
- 11.04 검찰, '공산혁명분자 건국대점거난동사건' 발표
- 11.07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영화 「부활하는 산하」 상영. 그 제작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경찰, 홍기선(대표) 등 서울영상집단 회원 3명 연행
- 11.07 노동현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대학졸업생 이봉춘, 김창한, 조승수, 이의례 등이 『원시공산제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구속
- 11.09 동대문 경찰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10.2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농어촌선교위원회 성명서 관련 김동완 목사 연행
- 11.12 경찰, '반제(구국노동자)동맹당사건' 발표. 조정식 등 16명 검거, 관련자 20여명 수배
- 11.17 인천의 로얄동도주식회사 노동자 안기원, 인천카톨릭사목위원회에서 '근로자 자발교육'을 받고 동료들에게 "우리 나라의 체제도 사회주의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의 노동자·농민이 살기 좋은 이유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는 등의 발언 혐의로 구속
- 11.18 NCC 가맹 6개 교단,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회' 개최
- 11.20 안기부, '제헌의회(CA)그룹사건' 발표. 87년 1월말경 송치 때까지 고문수사 진행
- 11.21 권인숙 1심재판, 3년 구형
12. 윤익수와 그의 처 이현숙, 인노련(인천지역노동자연맹)에서 활동 중 안기부에 연행(이현숙은 민족해방노동자당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윤익수는 기소유예로 석방) (<연구팀 자료>)
- 12.02 민통련, 민주헌법쟁취 1차실천대회 개최
- 12.09~12 『말』지 보도지침 폭로기사 관련, 민언협 김태홍 사무국장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 혐의로 구속. 신흥범 실행위원 남영동 대공분실 연행, 구속
- 12.10. 보도지침사건 관련, 민언협 회원들 농성 시작
- 12.15 보도지침을 제공한 한국일보 김주연 기자 연행, 구속
- 12.23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태윤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언론자유 및 보도지침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 (날짜미상)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 결성 (<조사팀 자료>)
- \* (날짜미상) 최금희, 86년 성균관대 4년 중퇴 후, 안양에 있는 유한양행 앞에서 장기집권 음모분쇄를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주도하여 수배를 받던 중 안양경찰서에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 (<조사팀 자료>)

<1987년>

- 01.10 치안본부,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 발표
- 01.14 치안본부, 대학 전임강사·공무원, 회사 대표 등 사회 직장인들인 남춘호, 박재균, 윤윤규, 김종명, 성두현, 강상호 등 11명을 연행, 이적단체인 ‘노동운동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발표 (‘노동운동후원회사건’)
- 01.14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
- 01. 각계 민주인사 9천여명,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구성
- 01.15 경기도경, ‘정치신문 발간기도 지하조직’ 적발, 김상원·강석남 등 7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 01.15경부터 김영진, 김덕형, 박재국, 공계진, 박태연, 김진형 등 10명을 이적단체인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노해사) 구성 혐의로 연행
- 01.20 서울지검, ‘민중미학연구회(민미연) 사건’ 관련자로 조정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 01.25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 등 9개 노동운동단체,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고 박종철 동지 추모식 및 노동자대회’ 개최. 가두시위
- 01.27 서울지검, 「말」 지 사건 관련 구속자들(김태홍·신홍범·김주연)에 대해 국가모독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기소
- 01.30 인천지검, 해고노동자 조지영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
- 02. 검찰, ‘한국민중사 사건’ 발표, 『한국민중사 1·2』 발간을 이유로 풀빛출판사 나병식 대표 구속
- 02.03 서울지검 공안1부, ‘제현의회(CA)그룹 사건’ 발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민, 김철수, 김성식 등 구속
- 02.07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서울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고 박종철군 범국민추도대회’ 개최
- 02.13 성수동 제일피복 노동자 2백여명, 임금인상 요구농성 돌입
- 02.15 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서울기노련, 회장 한명희),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87년 노동자 임금향상을 위한 노동자대회’ 개최.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등 3개 단체 공동으로, ‘87 한국노동자 임금투쟁공동실천위원회’ 결성 공식 발표.
- 02.18 84년 여대생추행사건에 6개 여성단체가 첫 연대활동을 시작한 이래 상설연합체의 필요성을 절감, 그 기반 위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결성. 회장 이우정 선출
- 02.20 서울교대생 박선영, 목을 매 자결
- 02.20 김용권(1983년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 군 의문사
- 02.24 ‘민족해방노동자단 사건’ 발표
- 02.24 서울지검 공안부, ‘친북괴반미공산혁명기도 사건’ 발표, 김영환 등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2.26 치안본부,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노해사) 발표, 회장 김영진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들이 대학제적자들을 포섭해 용공지하단체를 결성하고 노동야학(한광야학, 신도림야학, 작은자리야학)을 개설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론으로 근로자들을 사상무장시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왔다고 발표. 그러나 공계진, 박태연, 김진형의 경우에는 이적단체구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게 되자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만으로 기소
- 02.26 10여개의 군농민조직 결집,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진정한 대중조직’과 자주적 농민운동의

- 기치 아래 '전국농민협회' 결성
- 03. <치안본부 발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의 전신인 '혁명의 불꽃' 단체 결성
  - 03. 정재룡, 단행본 「全世界의 拷問」을 발간, 전두환 정권의 고문행태를 고발. 이를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유죄판결
  - 03.01 청와대 뒷산 노철승 군 의문사
  - 03.01 인천지역 노동자 1천여명, 3·1절 집회(부천 석왕사) 후 부천역 가두시위
  - 03.03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고 박종철군 49제'와 '고문 추방 국민대행진' 진행
  - 03.06 미대사관 앞에서 표정두(1983년 호남대 무역학과 입학) 분신
  - 03.06 보도지침 사건으로 수배중이던 민언협 실행위원 박우정 구속
  - 03.09 민언협 사무국장 정상모, 농성중 경찰 연행
  - 03.10 한국노협·서울기노련·박영진추모사업회, '87 임금인상투쟁, 전진대회' 개최. 경찰이 저지하자 주변 가두시위 전개
  - 03.10 민족미술협의회,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그림마당 민'에서 '고 박종철군 추도 반(反) 고문전' 전시회 개최. 경찰, 작품들 강제입수 시도 (03.10 전시회장인 '그림마당 민' 폐쇄조치)
  - 03.20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경인지역 '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 재결성식, 87년 들어 첫 대학가 연합집회로, 집회 도중 1천 5백여명의 경찰병력 교내 투입
  - 03.20 한국병원 간호원 40여명, 기노련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요구 농성
  - 03.21 최초의 여성노동자운동의 기치를 들고 '한국여성노동자회'(여노회) 창립. 회장에 이영순(전 콘트롤데이터 노조위원장) 선출
  - 03.25 삼성제약 노동자 250여명, 임금인상 파업
  - 03.27 한국광전자 노동자 90여명, 철야농성 후 임금인상 15% 쟁취
  - 03.27 인천 세진음향 노동자들, 임금인상 요구 가두시위
  - 03.30 구로공단 공원 이상준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4. 제현의회(CA)그룹에서 갈라져 나와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결성 (88년초 민주연립정부를 주장하는 다수파와 민중집권을 주장하는 소수파로 결별. 이 가운데 소수파의 경우 사노맹 결성)
  - 04.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공식적인 학회로 '한국사회경제학회'(한사경) 창립. 「사회경제평론」 발간
  - 04.01~09 서울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집회' 개최. "과소억압 부당징계 즉각 철폐하라", "학원자율 침해하는 문교부는 자폭하라", "민족민주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친 조상구, 이를 이유로 유죄판결(<연구팀 자료>)
  - 04.09 서울택시기사 연대 파업
  - 04.23 인천 경동산업 노동자, 수당지급 요구투쟁 돌입
  - 04.27 시흥 기아산업 노동자 2천여명, 어용노조 및 저임금 규탄집회
  - 05. <안기부 발표> '노동계급그룹' 결성. 기관지로 「노동계급」 발간
  - 05.01 치안본부,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 발표, 위원장 유용하 등 1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5.03 부평 샘터교회에서 인천기노련 주최 메이데이 행사
  - 05.06 노동자 나병남, 명동성당 구내 나무 위에서 '독재타도' 외치며 투신, 중태
  - 05.08 서울지역 25개 대학 1,500여명의 학생들, 연세대에서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 발

- 죽. 의장 이인영 선출 (88.04.10 서대협 해소 결의)
- 05.15 'KBS시청료거부여성연합' 발족. 종래의 캠페인적 성격에서 탈피, 회원제 채택
  - 05.15 안양 창화공업사 노동자 1백여명, 임금인상 등 요구 파업농성
  - 05.18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진상 폭로
  - 05.19 인창산업 노동자 50명, 노동부 동부지방사무소에서 체불임금 지급요구 농성
  - 05.21 민가협과 남노련 사건 구속노동자 가족, 보안사 및 치안본부 고문사례 폭로
  - 05.24 인천노협 및 인천지역 민주단체연합, '광주영령추모 및 민주발전을 위한 시민대회' 개최 및 산발시위
  - 05.27 명동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 발족식 개최
  - 05.29 서울대 등 8개대 특별위원회의 결집체로 '호헌철폐와 민주개헌쟁취를 위한 서울지역학생협의회' 구성
  - 06.03 보도지침 폭로 관련 선고공판에서 김태홍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신흥범은 선고유예, 김주언은 징역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선고 (94년 7월 5일 사건 발생 8년만에 무죄 판결)
  - 06.05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 소속 13개대 총학생회 간부 20여명, 각 대학 총학생회실에서 '호헌철폐와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단식농성' 돌입
  - 06.06 고려대에서 서대협 주최 '연합대동문화제' 개최
  - 06.08 국본 산하 문화인공동위원회 결성
  - 06.09 연세대생 이한열, 교내시위 도중 직격 최루탄에 피격
  - 06.10~06.15 명동성당 농성투쟁, 투쟁 집행부 구성, 명동성당 주변에서 선전전과 투석전 전개
  - 06.10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6.10대회) 개최,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 시작.
  - 06.13 서울구치소 양심수 투쟁
  - 06.16 국본 산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불교공동위원회' 결성
  - 06.18 최루탄 추방대회 개최
  - 06.18 노동자와 학생 1만여명, 인천 송의동 로타리 가두집회
  - 06.20 논노상사 노동자 38명, 기독교회관에서 회사이전계획 철회 등 요구 농성
  - 06.25 용성지역 호헌철폐 및 군부독재 타도 학생협의회 공동의장 이재용, 경원대학교에서 다음날 집회 회의를 하던 중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교내로 진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도피하던 중 경원대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 06.26 경찰 저지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대회 무산
  - 06.26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 전국 33개 시, 군, 읍에서 180여만명이 시위 참가
  - 06.26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천명하면서 결성. 기관지로 「노동자의 길」, 「정세와 실천」, 「사회주의자」 발간
  - 06.29 성남지역 26개 택시회사 기사 2백여명, 월급제 요구 가두시위
  - 07. 7~8월 노동자대투쟁
  - 07.06 전국 17개 노동운동단체 대표, '민주헌법쟁취 전국노동자공동위원회'(민헌노위) 결성 (07.30 가맹단체 만장일치로 국본 가입 결정, 이후 국본 노동자공동위원회로 활동 전개)
  - 07.08 권인숙 가석방
  - 07.08 국본 산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농민공동위원회 결성
  - 07.12 '한국노총의 4.13조치 지지를 반박한다'는 성명서를 발표(87.05.08)했던 금융노련 13개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5개 산별연맹 산하 33개 단위노조 간부 112명, '노동조합민주화 실천위원회'(노민위) 결성

- 07.12 전 자유실천문인협 사무국장 채광석, 민주시민대동제 참여 후 귀가길에 교통사고 사망
- 07.13 해고 및 석방노동자 1백여명, 구속자석방 원직복직 요구 민주당사 농성
- 07.14 서울 홍제동성당에서 1,50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 '교육민주화를 위한 서울지역교사 대토론회' 개최
- 07.16 07.13부터 방송민주화투쟁을 전개해 온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공사(KBS)의 기자, 프로듀서, 방송기술진, '방송민주화투쟁위원회' 결성
- 07.16 인천 성진기업 노동자, 일일업적급제 요구 파업농성
- 07.17 양평동 철거 항의로 민주당사 농성에 참여했던 각 지역 철거민들, 농성 직후 도시빈민대중의 자발적 협의회로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서철협) 결성
- 07.19 87년 상반기 노동투쟁과정에서 해고된 서울지역 노동자들, 성문밖교회에서 '서울지역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서해투) 결성
- 07.19 8백여 해고노동자들, 인천 주안1동 성당에서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인해협) 결성
- 07.19 민현노위, 서울 동승동 흥사단 강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대회' 개최, 이후 가두투쟁 전개
- 07.21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 초대의장으로 김상기·김진균·송기숙 선출
- 07.21 인천 남일금속 노동자, 어용노조설립 항의농성
- 07.23 인천 우아미 가구 7백여 노동자, 제 수당 지급요구 농성
- 07.24 '로동당정책사' 토론을 한 이근원·김공림·한상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7.24 한성운수 택시기사 340여명, 성진기업 동조 파업농성
- 07.26 서울 동대문운동장 앞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철거 중지와 재개발악법 철폐를 위한 도시빈민대회' 개최
- 07.26 '노동조합민주화 실천위원회'(노민위),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자주,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근로자 공청회' 개최. 노민위 소속 70여개 단위노조 간부, 조합원 등 4백여 명이 참가
- 07.26 부천 원미동성당에서 '노동기본권쟁취 및 구속노동자협의회 발족 실천대회' 개최
- 07.27 안양 한국제지 노동자 150여명, 노조결성 및 근로조건 개선요구 농성
- 08. 진보적 정치학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국정치연구회'(한정연) 창립. 회장 이수인(영남대 교수) 선출
- 08. 서울 관악경찰서, 신창영·이명호·최중묵 등 3명을 북한방송 청취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8.04 논노패션 노동자 30여명, 노조탄압 항의농성(민정당 남재희 의원 사무실)
- 08.06~14 민통련, '가자! 민족통일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지역순회강연 개최
- 08.10 국본, '양심수 전원석방 및 민주화쟁취 국민대회' 개최
- 08.10 신촌운수 기사 40여명, 연좌농성
- 08.10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 1,500여명 파업농성
- 08.11 성남시내 택시기사들, 사납금 인하 및 임금인상 요구 2차파업
- 08.12 부평 삼익악기 1,500여명, 임금인상 및 어용노조퇴진 요구 농성
- 08.12 '서울지하철공사노조'(지하철노조) 결성. 위원장 배일도 선출
- 08.14 삼양교통 해고자 정병두, 복직 및 살인적 배차제폐지 요구 분신
- 08.16 국본 산하 노동자공동위, '민족해방을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8.15 민족해방 기념집회) 개최
- 08.17 인천 영창악기 노동자 1,200여명, 어용노조퇴진 요구 농성
- 08.17 대원시트 노동자 8백여명, 임금인상요구 농성
- 08.17 성남 오리엔트, 에이스 리오 등 3천여 노동자, 파업농성

- 08.18 철도노조, 우편노조 등이 함께 ‘공무원노조협의회’ 구성, 단체행동권과 단결권 허용 촉구
- 08.18 국본, 제1차 노동쟁의 실태조사보고서 발간
- 08.19 전국 95개 대학생 4천여명, 충남대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대회 개최. 전국 6개 지역-19개 지구별 대표들의 간접 투표를 통해 이인영(고려대 총학생회장, 서대협 의장) 의장 선출. 대전역 광장 등에서 가두투쟁 전개
- 08.19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협회 등 전국 10개 농민단체, 서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대강당에서 ‘헌법개정 농민공청회’ 개최
- 08.19 구로공단내 요업개발, 삼신방직, 진로 등 2,600여 노동자, 농성
- 08.21 인천 시내버스 총파업
- 08.21 한신대직원노조 결성. 위원장 성낙인 선출
- 08.22 52개노조 참여,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 08.22 한국공항 노동자 9백여명, 어용노조퇴진 등 요구 파업
- 08.23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전복지 및 해고반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국해고노동자복지투쟁위원회 결성 선언
- 08.25 민청련 제9차 총회, 소수 선진청년조직 중심에서 청년대중조직으로 근본적인 방향 전환 결의
- 08.27 판금도서 전시회 사건, 이우희·홍종도·오동진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8.31 영등포산선 신철영 간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
- 09. 민중미학연구회(민미연)을 모태로, 공식적인 학술단체로 ‘문학예술연구회’(문예연) 창립
- 09.01 서울시내 택시회사 총파업, 20여명 연행
- 09.02 ‘노조탄압 중지하라’를 외치며 조흥택시 노동자 이석구 분신 (09.19 사망)
- 09.02 성남 동양정밀 노동자 80여명, 민주당 철야농성
- 09.03 부천 시내택시 전면파업 돌입
- 09.04 서울 택시기사 4천여명, 교통회관 앞 가두시위
- 09.04 영창악기 노조위원장 등 3명, 경찰에 연행
- 09.08 ‘남로당 재건 기도사건’ 발표.
- 09.08 최우혁(84년 서울대 서양사학과 입학) 군 의문사
- 09.08 인천 이천전기 노동자 4백여명, 노사협의 결렬 항의 재파업
- 09.10 인천조선 노동자, 휴업기간 무급처리 항의 재농성
- 09.12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500여명의 남녀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 창립대회 개최. 회장 이효재 선출. 「함께가는 여성」 발간
- 09.13 서울기노련,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노동운동탄압저지 및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 개최
- 09.14 한국화장품 노동자 농성, 강제해산
- 09.14 한영알미늄 노동자 및 구속자가족, NCC 인권위에서 구속자 석방 요구 철야농성
- 09.14 경동산업 임시노조위원장 등 12명 구속
- 09.15 서울시경, 그림 <백두산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새날이여>을 그린 이상호·전정호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9.15 서울지검 공안부, ‘노동현장침투 좌경용공학습소조’를 조직하여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맑스철학, 세계공산주의혁명사 등을 학습해왔다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수철, 정태환, 권혁철, 김민숙 등 4명 구속
- 09.17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가 ‘민족문학작가회의’(작가회의)로 확대·개편, 재창립. 회장 김정환, 부회장 고은·백낙청 선출

- 09.18 국본 산하 '민주쟁취 청년학생공동위원회' 결성
- 09.18 NCC 농성 목회자 23명, 전경련 향의 방문시 경찰 전원연행
- 09.19 분신 이석구(조흥택시 노조위원장) 사망
- 09.20 국본 산하 노동자공동위 주최, '노동운동탄압 저지 및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09.20 국민운동인천본부, '언론왜곡보도 및 노동자 폭력탄압 규탄 인천시민대회' 개최
- 09.21 출판노조, 무극사 10명, 민주당 농성 합류
- 09.25 인회전자, 신진벨브 등 7개 회사 60여명, 민주당 농성 합류
- 09.26 민통련, '범국민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통련의 입장' 발표
- 09.27 경찰의 삼엄한 봉쇄를 뚫고 한신대에서 4·19교원노조 이래 최초의 전국적이고 자주적인 교사 단체인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창립대회 개최. 회장 윤영규, 부회장 이수호·이규삼·정해숙 선출
- 09.27 종로성당에서 '전국산업재해노동자연맹'(산재노련) 결성
- 09.27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개최, 전진하는 노동자투쟁 대열에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의
- 09.27 강남성심병원, 동산병원 등 노조원 200여명, 한강성심병원에서 임금인상요구 철야농성
- 09.29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 50여명, NCC 인권위원회에서 노동운동탄압 중지 요구 철야농성
- 09.30 고려대 구로병원 노조원 250여명, 노조탄압 및 부당인사 향의 농성
- 10.01 강남병원에서 조흥택시 노조위원장 이석구 장례식 진행
- 10.02 치안본부,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 그룹 사건' 발표. 윤영주 등 10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단계에서 검찰, 이적단체구성부분 제외, 단순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만으로 기소)
- 10.02 부평 신광기업 노조위원장 김치걸 등 4명, 사문서 위조혐의로 구속
- 10.03 서울시경, 『만화정신』 지 사건 발표. 민족미술협의회 만화분과위원장 손기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10.03 경기 성남경찰서, 김영주·고성범·오명록·손용석 등 4명에 대해 성남공단내 기업체에 위장취업한 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좌경의식화교육을 시켰다는 혐의로 구속
- 10.03 서울기독병원 노조원 70여명, 해고 위원장 복직 및 노조탄압 중지요구 농성
- 10.05 뽕랭땅 노동자 400여명, 화전빌딩에서 상여금 지급 등 요구 농성
- 10.07 JAL 한국지사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화 승리 및 조업재개
- 10.11 '전국대학씨클연합회' 결성
- 10.12 민통련 중앙위원회, 김대중을 대통령후보로 추천
- 10.12 인천 중앙병원에 입원중인 산재환자 800여명과 가족 200여명, '휴업급여 100% 지급, 근본적인 생계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투쟁 전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경인국도를 점거 농성하는 등 무려 12시간에 걸쳐 서울 오류동까지 가두행진 전개. 정부, 최루탄 발사 등 폭력적 대응
- 10.13 대한생명 노조원 100여명, 노조결성보고 대회 후 63빌딩에서 노조인정 요구 철야농성
- 10.15 부천 산재중앙병원 산업재활원 산재노동자 700여명, 생계대책요구 농성돌입
- 10.16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 (93.02 구로청년회로 확대개편, 지역 청년문화사업 지속적 전개)

- 10.18 서울지역 제화, 피복, 인쇄, 제과 업종 노동자 400여명, 명동성당에서 ‘노조설립 완전 자유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촉구 및 영세업 노동자 전진대회’ 개최
- 10.19 86.12.29 결성된 도시노점상복지회, ‘도시노점상연합회’(도노련)로 개칭
- 10.23 서울, 부산, 창원, 안양 등 해고노동자 11명,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위원회’ 결성, 민정당 서울시지부 점거농성 전개. 오재현 등 11명 전원 연행
- 10.23 시사영여사 노조원 47명, 노조활동보장 요구 농성
- 10.25 서대협, 전대협이 주축이 되어 ‘민주쟁취청년학생공동위원회’ 창립
- 10.25 고려대 운동장에서 ‘민주쟁취 청년학생공동위원회 창립대회 및 공정선거보장을 위한 거국국민내각쟁취 실천대회’ 개최. 여기에서 87년 대선 시기 ‘후보단일화를 위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천명하고 선거투쟁에 임하기 위해 전대협, 서대협 등이 주축이 되어 ‘민주쟁취 청년학생공동위원회’ 결성
- 10.25, 인천노협 및 공실위, 화수동 성당에서 ‘노동기본권쟁취 및 구속노동자석방 촉구대회’ 개최
- 10.27 국본 산하 노동자공동위, 서울 명동성당에서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회’ 개최
- 10.27 70여명의 청년들, 신촌 거구장에서 ‘민족통일에국운동청년단’ 결성 (89. 민족통일에국청년회: 민애청으로 개칭)
- 10.28 ‘서울운수노동조합협의회’(서울노협) 결성
- 10.29 박우섭, ‘건대항쟁 1주년기념 통일정책대강연회’ 강연 내용을 이유로 구속
- 10.29 국본 산하 민주쟁취 국민운동 천주교 공동위원회 결성
- 10.29 한국일보사 기자 및 직원노조 결성
- 10.31 인천 한광산업, 미지급 추석상여금 및 노조간부 상근 인정요구 파업농성
- 11. 비판적 지지를 천명한 서대협의 노선을 비판,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서울대, 연세대, 외대 등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비상학생협의회’(서비협) 결성
  - 11.01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경인지역 민중정당 결성 및 민중후보 학생추진위원회’ 결성식 개최
  - 11.01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노동3권쟁취 및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수도권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11.01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노동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서울노련) 창립대회 개최. 위원장 황인범 선출
  - 11.01~12 아양산업(택시업체) 노동자들, 파업투쟁
  - 11.03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창립대회
  - 11.03 산재노동자 김성애 투신자살 사건
  - 11.05 제2차 총회를 끝으로 국본의 명칭,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로 개칭
  - 11.05 부천 원방 노조, 조업단축 및 노조탄압 항의 파업
  - 11.06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하여’ 연세대 대자보 사건, 이를 작성·게재한 혐의로 이병광 경찰 수배
  - 11.11 ‘경인지역 민중정당 결성 및 민중후보 학생추대위원회’ 결성
  - 11.11 11개 대학 학생들과 노동자, 재야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백기완 선생 대통령 후보 임시추대위원회’ 결성
  - 11.13 ‘균형종식과 자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
  - 11.15 옛 서울고 자리에서 ‘민중대표 대통령후보 전국추대위원회 결성대회’ 개최. 전국추대위원장 이애주(서울대 교수) 선출
  - 11.18 민통련과 전대협의 비판적 지지론을 반대하고 후보단일화론을 주창한 서울대, 외대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17개 대학 대표자들, 건국대에서 ‘학살원흉 노태우 집권 분쇄를 위한 학생투

- 쟁연합' 결성
- 11.20 민통련, 각계인사 3천여명과 함께 '김대중선생 단일후보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
  - 11.20 공정선거감시 전국본부 결성
  - 11.20 건국대 사학과 강사 방기중, 「찢겨진 산하」 리포트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 11.21 4·13호헌조치 반대 의사들의 서명운동 과정에서 조직의 필요성 논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의협) 창립
  - 11.23 '군정종식·단일화쟁취 국민협의회'(국협) 결성
  - 11.23 서울노련, 경수노련, 인민노련, 서준위, 인준위 등, '수도권지역 노동자선거대책위원회' 결성
  - 11.23 '민중정당결성 및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전국학생민중후보 선거대책위' 결성
  - 11.24 민통련, '광주학살 및 12·12반란원흉처단 결의대회' 개최
  - 11.24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 19명, 단일화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11.25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투쟁본부' 결성
  - 11.25 동국대에서 '민중대표 백기완선생 선거운동 전국본부'(백분) 발대식 개최
  - 11.26 서철협·빈민활동가·천도빈·기빈협·도노련 등, 3만여 인파가 모인 가운데 상계동에서 '노태우 철거 없이 빈민생존 보장없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규모 도시빈민대회 개최
  - 11.26 '전국택시노조연맹' 결성. 위원장 이광남 선출
  - 11.27 제2금융권 노조 연맹체로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사금노련) 결성. 결성 당시 45개 노조, 약 1만 2천명의 조합원으로 출범
  - 11.27 인천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참가한 '인천지역선거투쟁연합'이 단일화를 표방하며 발족
  - 11.27~28 서울지역 비상학생협의회(서비협), 17개 대학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대에서 '노태우집권분쇄와 후보단일화를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 개최
  - 11.29 백분, 보라매공원에서 시국대강연회 개최
  - 12. 맥스텍크 노조, 폐업 및 노조탄압 항의 파업농성
  - 12.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보건의료회의) 결성
  - 12. 강서·양천지역 고등학교 동문 대학생들의 대선 공정선거 활동의 성과로 '한물결청년회' 출범
  - 12.01~02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한 청년학생들, 양김씨의 집과 평민·민주당사에서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농성 돌입 (날짜 차이: 돌베개에서 나온 「전대협」의 경우 12월 1일과 2일부터라고 되어 있는 반면, 조지훈의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사」의 경우 12월 5일부터라고 되어 있음)
  - 12.02 '서울지역 제화공노조' 결성
  - 12.04 '서울택시노련' 결성
  - 12.06 30여만 군중이 집결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군정종식과 민주연립정부 쟁취 범국민결의대회' 개최
  - 12.06 '단일화촉구 비상국민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노동자들, 명동성당 및 평민·민주당사 농성 전개
  - 12.11 전대협 소속 대학생, KBS별관 점거농성 사건. 정화려(한양대 총학생회 기획부장) 등, 12월 대통령선거에 대한 KBS의 왜곡·편파보도에 항의, KBS별관을 점거 농성하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 12.12 병원노조간의 원활한 연대투쟁과 단위 병원을 뛰어넘는 타업종부문 노조와의 연대를 위해 '전국병원노조협의회'(병원노협) 결성
  - 12.12 대학로에서 개최된 '군정종식과 민주연립정부쟁취 국민총궐기대회'에서 민주대연립 시도 좌절을 밝히며 백기완 후보 사퇴 발표
  - 12.16 구로구청 부정투표항의 농성 사건, 경찰의 무차별 폭력 진압으로 부상자 17명 발생

12.23 민통련 문익환의장, 87년 대선무효화투쟁에 전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단식투쟁 돌입

12.26 안전사 노조, 위장폐업 철회투쟁

12.31 월드아트 노조, 폐업조치 항의농성

(날짜 미상) 김낙중 등 5명, '사상정치교양학교 사건'으로 구속 기소

(날짜 미상)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 결성

(날짜 미상)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 결성. 노동조합 지원 및 야학을 중심으로 활동

**※ <사건편>에서 별도 정리**

▽ 1987년 출판사 압수 수색 사건

▽ 1987년 출판인 구속 사건

▽ 1987년 서점상 구속 사건

▽ 1987년 필자·역자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사건

▽ 1987년 서점 압수수색 사건

<1988년>

- 01. 구리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지역의 자주적 청년단체로 '해누리청년회' 결성
- 01. '성남청년회' 결성. 회장 김종재.
- 01.04 맥스텍 노조원 250여명, 위장폐업 항의 농성돌입
- 01.07 연세대 1학년생 정인택 의문사 (뇌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96.06.06 사망)
- 01.08 낙농육우협회 소속 농민 5천여명, 과천정부청사 앞 쇠고기수입 반대 투석시위
- 01.09~10 새터수련장에서 23개 사업장 위원장과 노조 간부 93명이 모여, '서울지역 민주노조 연대조직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01.14 성남 옥산봉제, 폐업조치 반대투쟁
- 01.15 구로구청피해자가족협의회, 국본, NCC 인권위, 천주교 정평위, 민주당, 평민당 등, '구로구청 부정투표합 밀반출 및 경찰폭력 희생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01.16 국본, '고 박종철열사 및 민주영령 추모제' 개최
- 01.17 서울지역 인쇄노동자 40여명, 종로성당에서 '서울지역인쇄공노조' 결성식 개최
- 01.19 출판언론관련 노조 조합원 300여명, '노동조합 탄압 공동대처 실천대회' 개최
- 01.22 민교협 등 '교원탄압규탄대회' 개최
- 01.24 영등포산전에서 '맥스텍 위장폐업철폐 촉구대회' 개최
- 01.25 통합신당을 위한 3단체 연석회의가 무산된 이후 민주위와 신지협의 다수파가 통합, '신당결성 전국추진위원회' 결성
- 01.25 성동구 용답동 전주식당에서 43개 사업장 대표자와 노조 간부 123명이 참석,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 준비위원회' 결성
- 01.27 맥스텍 조합원, 근로복지회관 점거농성
- 01.28 부천 제일병원 노조, 시청로비 점거농성
- 01.28 서울시경 기동타격대 연성흠 일경, 양심선언
- 01.29 종로구 연지동 여진도회관에서 '(가칭)민중의 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식 개최. 준비위원장 정태윤 (02.06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 01.29 <안기부 88.03.21 발표> '반미청년회'(의장, 조혁) 결성
- 01.31 사당2동 공터에서 '재개발반대 및 임대주택 쟁취를 위한 도시빈민대회' 개최
- 02. <치안본부 89.12.25 발표> 인천, 부천공단 내 기업체에 위장취업한 서울대 운동권 출신 10여명을 중심으로 '인천지역노동자그룹' 결성
- 02.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 민주화 쟁취를 목표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결성. 대표 김지철. 「자주통일」 발간
- 02.01 '전국대학노조협의회' 결성, 대학노조 결속
- 02.02 한국과학기술원 노조원 400여명, 하월곡동 연구원 본관에서 노조탄압 항의 농성
- 02.0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 60여명, 설립신고 반려항의 노총회관에서 철야농성
- 02.05 인천 동서가구 노동자 1,000여명, 임금인상 등 6개항 요구 파업농성
- 02.08 전국 병노협, 원미동성당에서 '부천 제일병원 노동자 생존권투쟁지지 및 병원노조 탄압저지대회' 개최
- 02.09 대법원, 권인숙 변호인단 재정신청 인정
- 02.11 '민주출판언론노조협의회'(민출노협) 결성. 의장 이광호(일요신문노조 위원장) 선출
- 02.11 구로공단 대동전자공업 노동자 100여명, 상여금 지급 등 요구 농성

- 02.15 성남 합동전자 노조간부 5명, 업무방해 및 폭력죄로 구속
- 02.16 한국개발연구원(KDI) 노조원 100여명, 단체협약 결렬 항의 농성 돌입
- 02.17 종로구 청진동 삼송빌딩 9층 강당에서 ‘한겨레민주당 창당발기인 대회 및 창당준비위 결성식’ 개최. 준비위원장 예춘호 선출
- 02.22 전교협, 교육민주화와 구속교사 석방 등 요구 농성돌입
- 02.23 청계피복 노조원 70여명, 노조합법성 쟁취 농성돌입
- 02.24 한기원(연세대 식품공학과 4년) 등 ‘청년학생 구국결사대’ 소속 서울시내 5개대생 5명,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
- 02.24 국본, ‘학살원흉 노태우 부정집권 규탄대회’ 개최
- 03. 87대선시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모였던 청년들, 지역청년단체의 필요성 절감, ‘수원사랑민주청년회(수민청)’ 준비위원회 결성 (89.03 창립)
- 03. 7명의 준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민주청년회 건설준비위원회’ 결성
- 03. 민청련 산하 지역청년단체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창립 (98.06.02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김종박 등 회원 9명 구속)
- 03. 옥산봉재 위장폐업 철회투쟁 전개
- 03.~04. 종로 미리내소극장에서 ‘제1회 민족극 한마당’ 개최. 여기에 참여했던 20여개 단체가 주체가 되어 ‘극협’ 건설 논의 활성화
- 03.01 인천 경기교통 노조 조합장 김장수 분신 사건(03.09 사망)
- 03.01 현대사회연구소 노조, 안영섭 소장 퇴진과 부당해고 철회 요구 농성 돌입
- 03.03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 창립대회
- 03.03 인천지역 택시노조, 인천택시 파업투쟁 지지대회
- 03.04 인천택시 농성장, 경찰 300여명 난입 및 무차별 폭행
- 03.05 국본,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조치 전면해제 쟁취 및 반독재투쟁 결의대회’ 개최
- 03.06 지하철노조, 무임승차투쟁 전개
- 03.06 ‘민중의당’ 창당. 최고대표위원 정태윤, 공동대표위원 송경평 선출
- 03.07 대원전기 노동자 300여명, 어용노조퇴진 및 임금인상 요구 철야파업농성 돌입
- 03.09 인천 한독금속노조, 파업돌입
- 03.09 인천 경기교통 김장수 열사 사망
- 03.10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전일노) 결성
- 03.10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성문밖교회에서 ‘88년 임금인상투쟁을 위한 노동자 전진대회’
- 03.11 서대협, ‘야권통합을위한청년학생공동위원회’ 발족
- 03.11 우상호·허인회·함운경·이남주 등 ‘야권통합을 위한 청년학생공동위원회’ 결성
- 03.11 한국린나이 조합원, 동일계열 후지카, 대원전기 구사대 폭력 규탄 동조파업 돌입
- 03.11 성남 옥산봉재 노동자, 공장이전 철회요구 파업농성 돌입
- 03.12 12개 노조 150여명 참석, 현대사회연구소 강당에서 ‘연구·전문기관노조협의회’ 결성. 의장 박태주(산업연구원노조 위원장) 선출 (88.06.14 기술직노조와 조직 통합,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로 명칭 결정)
- 03.13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연세대에서 ‘서울지역노동조합 전진대회 및 문화대동제’ 개최
- 03.15 인천지역 24개 택시노조 위원장단, 김장수 열사 보상 문제 관련 시한부 파업결의
- 03.16 서울지하철공사노조(지하철노조), 성동구 군자 차량기지에서 조합원총회 개최, 파업 결의 뒤 철

- 야농성 돌입. 경찰병역 7,000여명 즉각 투입, 25분만에 농성조합원 2,344명 연행. 정윤광 노조위원장 등 20여명의 지도부 구속 (이후 조합원 3,000여명 임시지도부 구성, 평민당과 민주당 점거농성투쟁 전개. 03.29 타결)
- 03.17 인천지역 운수노동자 300여명, ‘김장수 열사 분신 추도대회’ 및 길병원~시청에서 격렬 가두시위
- 03.20 고려대에서 ‘고 박영진, 오범근, 김장수 열사 추모 및 노조탄압 저지·규탄대회’ 개최
- 03.21 국가안전기획부, ‘반미청년회(총책-조혁, 고려대 노문과 4년 제적) 사건’ 발표, 장원섭(고려대 식물학과 3년 휴학)·윤은주(경희대 졸) 등 7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3.23 ‘현대그룹 노조탄압에 대한 전국노동단체대표자회의’ 결성
- 03.24 오토론 사측 조합원 20여명, 노조간부 8명 감금폭행
- 03.24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결성
- 03.25 고려대생 유병진, 87년 대통령선거 공정선거감시인단 활동하던 중 건물에 불이 나 4개월여 간의 투병생활 끝에 사망
- 03.26 논노상사 노동자 50여명, 명동 논노매장 앞 피켓시위
- 03.29 ‘한겨레민주당’ 창당. 상임대표위원으로 예춘호, 대표위원으로 조순형, 장을병, 제정구 등 선출
- 03.29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 김중기, 남북한대학생 체육대회 및 국토순례 제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
04. 학계·법조계·언론계 민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사회연구소’(한사연) 창립. 소장 정윤형 선출. 이사장은 예춘호·박현재·김중배
04. 일하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원여민회’ 결성 (92.04 수원여성회로 명칭 변경)
- 04.01 동양고압고무, 빙그레, 두산유리 노동쟁의
- 04.03 ‘노조탄압저지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연세대에서 ‘현대그룹노조탄압 규탄 및 구속노동자 석방촉구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04.04 삼익악기 노동자 6,000여명, 임금인상 요구 준법투쟁 돌입
- 04.06 대림통상 노동자 600여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농성
- 04.06 15개 언론사 노조, 자유언론과 권익쟁취의 기치 아래 ‘전국언론노조협의회’(언노협) 결성
- 04.09 안양지역 노동자 300여명, ‘택시노조파업투쟁 보고 및 지지대회’ 개최
- 04.10 건국대 ‘애학투련사건’으로 출소한 곽현정(한신대생), 구속중 폭행과 고문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자결
- 04.10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 해소 결의. ‘학간 연대조직재편위원회’ 구성 (조직건설상의 이견으로 서건추론과 서대협강화론, 서총협론으로 분리)
- 04.12 서대협 노선과 활동에 대해 비판하면서 서울대에서 ‘서울지역대학생총연합 건설추진위원회’(서건추) 결성. ‘단일후보’ ‘민주국회’ 기치 아래 총선투쟁 전개. 산하에 ‘총선대책위원회’를 두고 ‘민중의 당’ 지원투쟁, 부정선거감시·고발센터운영 등의 활동 수행 (07.22 해체 결의, 서총련과 통합)
- 04.14 88년 4·26총선을 앞두고 ‘반민정당총선투쟁연합’(총투련) 결성 (4·26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와해)
- 04.16 서총련준비위원회,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 04.16 ‘반민정당총선투쟁민주연합’(총투련), ‘전두환·이순자 소환 수사요구 1백만 서명운동’ 시작
- 04.17 고려대에서 지역노조설립 쟁취를 위한 공동실천대회 개최
- 04.19 서총련준비위원회·서건추, 수유리에서 ‘4·19 28주년 기념식 및 민정당 패퇴와 민주쟁취를 위

- 한 범국민 쟁기대회' 개최
- 04.19 구미공단 17개노조원 1,500여명, 계림요업 폭력사태 항의 가두시위
- 04.22 인천 코스모스전자 노동자 30여명, 파업
- 04.25 민주노조 탄압과정에서 고려피혁 노동자 최윤범 분신 사건 (04.30 사망)
- 04.25 동아건설 창동지부 노조원 100여명, 서소문 본사 점거농성
- 04.28 서총련준비위원회,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서총련 산하 '조국통일을 위한 특위연합(조통특위) 준비위'를 건설, 통일운동의 확산에 주력
- 04.28 나우정밀 500여명, 파업
- 04.28 대우전자 4개공장(인천, 주안, 구미, 광주) 파업
- 04.28 효성중공업 3개공장(창원, 영등포, 태능) 파업
- 04.30 고려피혁 분신 노동자 최윤범 사망
- 04.30 삼성제약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파업농성
- 04.30 인천지역 노동자 700여명, '세계노동자의 날 기념식 및 임금인상 완전승리 쟁취대회' 후 가두시위
- 05.01 연세대에서 '노동절기념 노학동맹투쟁결의 및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지지 결의대회' 개최. 김주환(연세대 대학원생), 「2만 연세인에게 보내는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 낭독, 구속. 징역10월 선고.
- 05.02 종로구청, 청계피복노조 노조설립신고필증 배부.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
- 05.03 안기부,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KPF) 사건' 발표, 송운학(안양노동상담소장)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5.05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유진곤, 옥중생활 후유증으로 사망
- 05.13 고정희 의문사 사건 (2001.09.0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건 진정 기각 결정)
- 05.13 서대협이 계승과 혁신을 통하여 서학련의 실질적 전망을 갖는 조직적 기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 04.10 서대협 해소를 결의한 후 서총련준비위원회를 거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발족
- 05.15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조성만(서울대 자연대 화학과 84년 입학) 할복 투신
- 05.17 민통련,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5.17 광주학살·부정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지역민주투쟁연합(서민투련) 결성
- 05.18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5월 공동투쟁위' 구성. 공투위 주최로 '광주진상규명 및 학살원흉처단 범국민결의대회' 개최
- 05.20 서총련 산하 '애국청년결사대' 미문화원 시위
- 05.26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등 8개 농민단체 회원 3천여명,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농축산물 수입반대 농민결의대회' 개최
- 05.28 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변론한 것을 계기로 결성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가 발전적으로 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 05.29 영등포 여성백인회관 6층강당,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 결성. 초대의장 배일도(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부의장 단병호(동아건설 창동노조 위원장)·이상학(대한교육보험노조 위원장)·차수련(한양대병원노조 위원장) 등 선출
- 05.30 한국과학기술원노조, 인사제도 개선 및 임금인상 요구 전면 파업
- 05.31 서총련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조통특위) 결성
06. '청년치과의사회' 결성

- 06.02 수사기관,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사건' 발표. 김종박, 강명옥 등 9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6.02 구초혜·한난석·현광일 등 3명, 노동운동 및 의식화학습을 위해서는 자료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987. 4.부터 『레닌주의의 기초』 등 700여종의 반체제 유인물 및 서적을 수집하였다는 혐의로 치안본부에 의해 구속
- 06.02 대한생명보험 750여명, 임금인상 요구 농성
- 06.03~04 서관모(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중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 논문 발표 및 검찰 소환사건
- 06.04 민통련 등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발족
- 06.04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박래전(82년 숭실대 입학) 분신
- 06.05 인천 대우자동차 6,000여명, 농성진행
- 06.06 대한광학 농성장에 구사대 200여명 난입, 노동자 1명 뇌 중상
- 06.07 정권과 자본측의 폭력적 노동운동탄압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각 노동운동단체가 모여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결성. 전국적 대중신문을 지향하는 「노동자신문」 발간
- 06.08 '6·10남북학생회담 성취를 위한 시민지지대회' 개최
- 06.09 인천 대우자동차 조업중단, 원용복 위원장 퇴진 요구 농성
- 06.09 광무택시 노동자 문용섭, 구사대 폭행 사망
- 06.09 제2기 전대협, 연세대에서 '6·10 남북 청년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백만학도 총궐기대회' 개최
- 06.10 전국 2만여 대학생들, 연세대에서 '6·10민주화투쟁 1주기 기념대회 및 관문점 출정식' 행사 개최. 경찰의 폭력 저지로 관문점 6.10남북학생회담 무산
- 06.11 가평 동운택시 노조원 45명, 파업농성
- 06.13 '도시노점상연합회'(도노련),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6·13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 개최. 80년대 노점상운동의 성과 가시화, 이를 계기로 회원이 1만여명으로 증가
- 06.13 리비아 시위관련 강제귀국 대우노동자 6명 구속, 24명 입건
- 06.15 웨스트팩 노조원 14명, 호주대사관 앞 시위
- 06.18 서울 등 7개 문화방송노조, '전국문화방송노조협의회' 결성
- 06.18 전대협, 고려대에서 2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토론회' 개최
- 06.18 효성동 성당에서 27개 사업장 4,000여명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배정된 대의원대회를 통해 '인천지역노조협의회'(인노협) 결성. 의장에 구속중이던 황재철(한독금속노조 위원장) 선출. 창립 이후 인천지역내 대공장들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
- 06.18 민통련, '전국민운연 준비소위'를 별도로 구성. 새로운 민운연 건설 논의 진행
- 06.18 '사월혁명연구소' 발족. 소장 김진균(서울대 교수) 선출
- 06.18 부평 한도물산 노동자, 임금인상 및 노조활동보장 요구 농성
- 06.20 경기도 화성 아주아파트 조합원 150여명, 파업농성
- 06.23 박인순(한신대 대학원생) 의문사 (국가인권위원회, 외인사라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
- 06.24 우인수(85년 성균관대 입학) 군 의문사
- 06.25 특히 서울지역의 도시철거민과 도시빈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인 성남지역 노동운동단체들, '성남지역노조협의회'(성남노협) 결성. 의장에 오길성(제화공노조 위원장) 선출 (07.23 성남노협 결성보고대회 개최)

- 06.29 부천 대호전자 ‘위장폐업철폐 및 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 개최
- 06.29 코리아헤럴드 노조원 200여명, 단체협약체결 요구 농성
- 07.01 민중불교운동연합사건
- 07.02 협성계공 노동자 문송면, 수은 중독 사망
- 07.04 민통련, ‘남북사회단체회담’ 제의
- 07.04 민족회의작가회의, 7·4 공동성명 14주년을 맞아 남북작가회담 제안. 당국의 봉쇄로 무산 ‘남북작가회담의 개최를 제창한다’는 제하의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단 명의의 이 제의서는 1988년 들어 붓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조국통일촉진운동이 문화예술운동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심화시켜 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 07.04 시흥 삼협노조원 360여명, 농성
- 07.04 수원 필립스 전자 노조원 350여명, 임금인상 요구 태업
- 07.05 민통련 등 50개 단체,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염원 범국민평화 대행진’ 전개
- 07.06 버스운전기사 1천여명, 천주교 종로성당에서 ‘서울운수노동조합협의회’(서운노협) 발족. 초대 의장 김경천(삼양교통노조위원장) 선출
- 07.06 미쓰이상사 서울지점 한국인 노조원 50여명, 지점장 집 앞에서 변태영업 중지 및 단체교섭체결 요구 시위
- 07.10 노동자 학생 200여명, 문송면 산재사망에 대한 노동부 규탄 시위
- 07.11 구로지역에 9개, 인천에 18개, 안산 4개, 안양 3개, 성수-성남 4개 기타 각 지역에 1-3개씩 분포해 있는 민중교회들의 목회자와 실무자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민중교회운동권, 반년 동안의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성문밖교회에서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한민연) 창립총회 개최
- 07.11 안양전자 노동자 280여명, 농성
- 07.11 부천 동양엘리베이터 노조원 530여명, 파업농성
- 07.12 서울 협성사 노조원 20여명, 직장폐쇄철폐 요구 시위
- 07.14 민통련, ‘광주학살 5공비리 진두환·이순자 구속 촉구’ 기자회견
- 07.14 서충련 소속 대학생들,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실 점거농성
- 07.14 한국 키스톤발브 노조원 36명, 파업
- 07.15 전국철도노조 소속 기관사 600여명, 법정수당 지급, 근무시간 재조정, 어용노조퇴진 요구 농성
- 07.16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연전노협) 결성. 단위노조 32개, 9,000여명의 조합원으로 출발
- 07.17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창립. 회장에 최병두(대구대 교수) 선출
- 07.17 세창물산 노동자 송철순, ‘파업기금 마련 연대집회’ 준비로 현수막 설치중 추락 사망
- 07.17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인천에서 ‘수도권노동자대회’ 개최
- 07.17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창립. 회장 최병두(대구대 교수) 선출
- 07.17 고 문송면군 산업재해 노동자장 거행
- 07.20 민통련과 제 민주단체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조통협) 결성
- 07.21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성남경찰서 권총발사 및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개최
- 07.21 병노협, ‘비민주적 인사행정 척결 및 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 개최
- 07.24 민통련, ‘구인제 거부권행사 및 광주학살 부정비리 원흉처벌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개최
- 07.25 KBS 노조원 250여명, 방송민주화·자율화·경영진 퇴진 등 요구 농성
- 07.25 안산 ‘신광염직노조탄압 규탄대회’ 및 문종필 삼양금속 위원장 구속

- 07.26 전국 철도기관사, 전면파업
- 07.26 한국야쿠르트노조 노조원 및 가족 160여명, 상공회의소 8층 본사 사무실 점거농성 돌입
- 07.27 조통협 주최로 ‘공동올림픽쟁취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
- 07.29 인천 삼호정밀, 한국대코레코, 부천 대호전자 노동자들, ‘위장폐업분쇄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07.31 서울 통일택시 농성노동자 40여명에게 구사대 난입 행패
- 08.01 노점상 규탄 대회
- 08.03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결성
- 08.03 고려대 강당에서 전국 28개 대학 시간강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학강사협의회’(전강협) 결성 (90.04.28 전국대학강사노조로 전환)
- 08.06 성남시내 택시노조, 임금인상 요구 전면파업
- 08.07 민통련 등, 08.07~08.16까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실천기간’ 선포, 통일운동 전개
- 08.08 고려대에서 1기 ‘통일선봉대’ 발족식
- 08.10 서울 서대문경찰서, 대학가에서 공연중인 <통일밥>의 작가이자 연출자인 주인석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8.10 중구 평민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50여명이 모여 ‘삼청교육대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 결성. 공동투쟁위원장으로 정인수, 유명근 선출
- 08.11~12 전국 대학가 8.15 남북학생회담 관련 출정식 및 저지 규탄대회 개최, 1천7백80명 연행
- 08.17 청구성심병원노조원 57명, 임금 및 수당인상·노조인정 요구 3일째 철야농성
- 08.18 인천 부평경찰서, <어머니 하나된 조국에서 살고 싶어요> 슬라이드 상영을 이유로, 박인규, 차영진 등 2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8.(중순경) (치안본부 대공3부 발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인천노동상담소) 결성
- 08.2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개최
- 08.26 문화방송(MBC) 노조 방송사상 첫 파업
- 08.28 원진레이온 대책위,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 규탄 및 공해가스 추방 결의대회’ 개최
- 09~11 신애전자 노동조합 수호 투쟁
- 09~ 공동올림픽 쟁취 투쟁
- 09.02 전국민중운동연합 건설 논의 속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 추진위원회’ 결성
- 09.03 ‘올림픽을 빙자한 민중운동탄압 규탄대회’ 개최
- 09.03 87 겨울 ‘한국근대사연구회’와 ‘망원한국사연구실’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자들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이래 한국사 전시기를 포괄하는 연구자대중단체의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 그 결과로 ‘한국역사연구회’ 창립. 회장 안병욱(성심여대 교수) 선출
- 09.03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결성. 회장 허인회 선출
- 09.0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서울시민결의대회’ 개최
- 09.10 공해추방·반핵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공해운동협의회(84.12 결성)·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87 발족)·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86.09.13 결성) 등 3단체가 발전적 해소, ‘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 통합 결성
- 09.10 ‘전두환·이순자 구속 처단 및 평화구역 철폐 전국대회’ 개최
- 09.11 ‘인천국민운동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체,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등 10개 운동단체가 참여,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 의장 이호웅 선출

- 09.11 성남 주민교회, 산자교회 신도 150여명, 신도블랙리스트 작성 항의 농성시위
- 09.12 14개 노조, 조합원 2,600여명으로 '전국화물운송노조연맹' 결성
- 09.13 민통련, '단독올림픽반대 성명' 발표
- 09.14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의 통합 논의의 성과 속에서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연합'(진보정치연합) 결성. 상임대표위원으로 제정구, 공동대표위원으로 최병욱·정태윤·이강철 선출
- 09.14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노조, 노조활동보장 요구 파업
- 09.15 '용인민주청년회' 결성
- 09.16 한국영화업 협동조합 소속 영화업자 80여명, 직배 반대시위
- 09.17 민청련 제11차총회, '민주화운동직장청년회 준비위원회'와 '주민청년위원회' 발족
- 09.22 민통련, 22개 단체와 연대하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규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 09.28 CPZ 노조원 200여명, 위장폐업철회 등 요구 6일째 철야농성
- 09.29 민청련 부설 '민족민주운동연구소'(소장 채만수) 창립
- 09.29 민통련, '양심수 전원석방대회' 개최
- 10.14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발족
- 10.15 민통련, 제 민주단체와 함께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자 구속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결성, 전·이구속투쟁 전개
- 10.17 '강제징집·삼청교육 사망자 유가족협의회' 발족
- 10.26 안양지역 노동자 1,000여명, '악덕일본인 기업주 규탄대회 및 노동법개정 결의대회' 후 철야농성
- 10.28 건국대에서 '부정비리주범 전·이 구속처벌 및 광주학살 5적처단을 위한 서울지역학생투쟁연합'(학투련) 결성. 산하에 '전·이 체포결사대' 구성
- 10. 민청련 지역조직으로 '동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동민청) 결성
- 10.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정치조직인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결성. 기관지로 「노동자의 깃발」 발간
- 10. 노점상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 '전국노점상연합회' 결성 (이후 11차총회를 통해 전국노점상연합으로 명칭 변경)
- 10.~11. 88년 노동법 개정 투쟁 (노동법개정투쟁 전국노동자 등반대회, 전태일열사 정신계승·노동악법 개정 전국 노동자대회, 노동법개정 요구 민주당사 농성투쟁 등)
- 10.02 치안본부, 윤영주 등 10명을 이적단체인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 결성 혐의로 구속(조직지도책으로 발표된 윤영주, 88.02.03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 10.06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가 따로 활동을 전개한 초기단계를 지나 '노동법개정 노조특위'와 '전국노운협 노동법개정특위'가 노동법개정을 위한 통일적인 집행부로 '88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 결성. 의장 이홍석(마창노련 위원장) 선출
- 10.06 서충련 소속 8개 대학 23명, 민정당 국회의원 정호용의 의원회관 사무실 점거 농성. 5공 비리 관련자와 광주학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전두환·이순자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 10.15 민통련, 제 민주단체와 함께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자 구속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결성, 전·이구속투쟁 전개
- 10.17 '강제징집·삼청교육 사망자 유가족협의회' 결성
- 10.18 김병구, 13대 대선 및 총선의 부정을 고발하며 연세대에서 투신 (90.09.02 병상생활 중 자결)
- 10.25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

- 라는 성명 발표, 진상규명을 위한 공정기구 구성 촉구
- 10.25 전국철도기관사 전면파업
- 10.28 88년 10월 하순까지 전국 각 대학별로 '광주학살·5공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 특별 위원회'가 속속 결성. 서울에서는 건국대에서 '부정비리주범전·이구속처벌및광주학살5적처단을 위한서울지역학생투쟁연합'(학투련) 결성
- 10.30 13개 농민단체들, 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농협) 결성. 농업-농민의 전반적인 생존권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범농민적 연대, 특히 농축산물수입개방 저지투쟁의 공동수행을 중점적인 과제로 설정
- 10.31 학투련 산하 '전·이 체포결사대', 전두환 집앞 초소 타격 투쟁 전개
- 11.01 대원여객 노동자 이문철 분신 (11.06 사망)
- 11.05 대학로에서 '전·이 구속을 위한 서울시민 쉼기대회' 개최. 전국 1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 투쟁 전개
- 11.05 서관모 교수 검찰 소환사건을 계기로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창립. 공동대표로 정석중(역사문제연구소/영남대 사학과 교수)·이우재(농어촌사회연구소)·최장집(한국정치연구회/고려대 정외과 교수)·안병욱(한국역사연구회/성심여대 국사학과 교수), 대표간사로 박호성(한국정치연구회/서강대 정외과 교수) 선출
- 11.05 서울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1,000여명, '민주교육법쟁취결의대회' 후 시위
- 11.06 대원여객 이문철 열사 사망
- 11.10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결성
- 11.12 민통련, 25개 민주단체와 함께 '반민주악법개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악법개폐투쟁 전개
- 11.12 망원한국사연구실의 한국근현대사연구회와의 통합 논의를 계기로, 한국역사연구회와는 분리되어 '구로역사연구소' 결성(93.08 역사학연구소로 개칭), 소장 윤한택 선출
- 11.13 연세대에서 전국 4만여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태일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 성공적 개최. 여의도까지 행진, 5만여 노동자들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국 민정당 규탄 및 노동악법 개정 촉구대회'와 '노동악법 옹호하는 독점재벌 규탄대회' 개최
- 11.15 현대사회연구소 노조원 21명,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허화평 소장 구속 요구 시위
- 11.15 대교문화사 노조원 200여명, 조합활동 보장 및 단체교섭 요구 4일째 철야농성
- 11.16~17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제5, 6공화국 재개발 비리만행 폭로규탄 및 깡패철거 결사 저지대회' 개최 및 서울시청 앞 농성투쟁
- 11.17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여의도 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 개최, 농협중앙회 점거 및 가두투쟁 전개
- 11.19 11.05에 이어 전·이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가두투쟁이 전국적 차원에서 분출
- 11.19 서울 지하철노조원 500여명, 노조간부 부당인사 철회 파업
- 11.20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여의도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교육법 쟁취 전국교사대회' 개최, 교육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까지 가두행진, 「국민에게 드리는 글」 등 유인물 12만장 배포
- 11.26 서충련 산하 '애국결사대' 소속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16개대생 42명, 전·이 구속처벌을 요구하면서 민정당 연수원 점거 농성, 주동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혐의로 구속
- 11.26 전국언론노조협의회(언노협)의 발전적 해체, 전국의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노조가 모여 전국언론노동자 1만 3천여명, 41개 언론노조가 참가하는 독자적 산별연맹체로 '전국언론노조연맹'(언노련) 발족. 위원장 권영길 선출

- 11.30 공항관리공단 노조원 340명중 300명, 집단휴가
- 11.30 서울노조협 등 노동자 1,200명, '노조탄압분쇄 및 노동악법 개정촉구를 위한 청와대 규탄대회' 및 시위
- 11.30 라이나생명보험 노조원 60여명 농성
- 12. <안기부 90.12.26 발표> '자주민주통일(자민통)그룹' 결성
- 12.01 '민족건축인협의회' 결성
- 12.01 현장, '아리랑', '새뚝이', '울림', '미얄', '한강', '민족극연구회' 등을 받기단체로 해서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극협) 결성
- 12.03 평민당 주최로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삼청교육대 의문사 진상보고대회' 개최
- 12.04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중앙승가학생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진보적인 불교단체들이 총결집, 상설적 연합단체로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통불협) 결성. 의장 지선스님 선출
- 12.05~12 통불협, '백담사 출정투쟁' 전개
- 12.05 인천 봉신중기·봉신산업·명신기계 노동자 150여명, 연합노조 결성
- 12.07 서울시내 35개 단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노조 조합장 35명, '서울지역아파트노조' 설립총회 개최
- 12.10 '전국건설노조협의회'(건설노협) 결성
- 12.14 수원시 구천동 소재 동방생명 앞 노상에서 약200여명의 수원, 용인지역 노동자들, '삼성노조 탄압 규탄 및 민주노조 쟁취 실천대회' 개최
- 12.14 정부출연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연전노협) 공동투쟁 및 파업
- 12.17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결성
- 12.23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전국회의) 결성. 산하에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설치. 전국투본 본부장 단병호(서노협 의장) 선출
- 12.23 민족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설립. 주로 진보적인 문학가를 중심으로 예술·영화·연극·음악에 종사하는 예술인들 참여
- 12.23 서울엔지니어링 노조원에게 구사대 폭력
- 12.27 모토롤라 코리아, 농성중인 노동자에게 불을 질러 3명 화상, 1명 중태
- 12.30 모토롤라코리아 노동자 28명, 동부서앞 연행노동자 석방 요구 농성

\* (날짜 미상) '산업재해노동자회' 결성

\* (날짜 미상) 88년 상반기 이후 전국적 노동자정치조직 건설을 과제로 안양, 군포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안양PD그룹' 결성

\* (날짜 미상) 87년 기흥독서회로 출발하여 활동하다가 88년 '신갈기흥청년회' 발족

<1989년>

- 01.05 법제도와 법문화의 민주화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장 교수와 변호사 및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창립. 기관지 「민주법학」 발간
- 01.05 이동균 대위(육군 제30사단 공병대대 2중대장) 등 현역장교 5명, 서울 기독교회관 3층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및 정치군인 각성 촉구 명예선언 성명 발표
- 01.08 현대그룹 노조탄압 경인지역 대책위원회 소속 노동자 2백여명,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 본관 앞에서, ‘현대그룹 노조원 및 해직자 테러 규탄대회’ 개최
- 01.19 삼성그룹 노동자들, 노태우 정권과 삼성그룹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항의, 삼성그룹 본관 점거
- 01.20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청대협) 결성. 의장 이범영 선출
- 01.21 노동자 농민 등 8개 전국단위 부문운동단체와 전국 12개 2백여 지역단체, 연세대 대강당에서 1천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창립대회 개최. 상임공동의장 이부영, 공동의장 이창복 선출 (민통련, 약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짓고 발전적 해체)
- 01.27 치안본부 대공3부, 1987. 7.부터 1988. 10.까지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홍보부장 및 홍보부원으로서 『민주노조』 1-23호를 제작·발간하여 노동자계급투쟁을 전개했다는 혐의로 유봉인·정규옥을 구속
- 01.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과 가난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극복해나가며, 인간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천여성노동자회’ 결성. 회장 최순영 선출
- 02.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직영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단위노조 12개사(조합원 2,000여명), 불법용역 철폐와 생존권 보장을 기치로 ‘전국시설관리노조협의회’ 결성
- 02. 부천지역 최초의 실질적인 연대기구인 ‘부천지역 임금인상 및 노동법개정투쟁본부’ 결성. 본부장 한경석(신광전자노조 위원장) 선출
- 02. <치안본부 대공3과 91.06.05 발표> 방민수 등 ‘주체사상에 따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종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민족해방활동가조직’ 결성
- 02.~04. 삼모노조 구사대 폭력, 김혜련 노조위원장 구속 (04.19)
- 02.08 ‘전문대학총학생회연합’ 결성
- 02.10 75년과 80년의 언론사 해직자들의 원상회보과 피해보상을 쟁취해 자유언론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해직언론인원상회보쟁취협의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윤활식·정동익 등 7명을 공동의장으로 선출
- 02.11 서울지방검찰청,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부>노회) 사건’ 발표. 손형민·안제환(회장) 등 6명 구속영장 신청(백영엽 판사 영장기각, 02.17 조희대 판사 5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 02.11 민가협과 유가협, 서울 명동성당에서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 및 광주학살 5적 처단을 위한 시민대회’ 개최, 20명 연행
- 02.13 전국 99개 군 농민 1만5천여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수세폐지·고추전량수매 농민대회’ (여의도 농민시위) 개최, 가두 시위 전개, 28명 연행
- 02.15 건국대 신입생 북한 오리엔테이션 사건, 총학생회 홍보부장 홍현주 즉각 수배
- 02.18 돈암·동소문동 세입자대책위 소속 정상을 피살
- 02.20 ‘범민족평화문화협의회’ 결성
- 02.21 서울지역 민중교육운동 탄압공대위 구성
- 02.25 88. 개원한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요구에

- 의해 ‘인천여성노동자회’(인여노)로 개칭
- 02.27 부시 방한 반대 시위
  - 03.01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 결성. 의장 윤정석, 부의장 정광훈 선출. 기관지 「전국농민연합신문」(가칭) 창간
  - 03.01 통불협, 3·1민족해방운동 계승 애국불교도 법회 개최
  - 03.02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무산, 이재오·백기완·계훈제·박형규 불구속 입건 (04.03 이재오 구속)
  - 03.08 전대협, 노태우 퇴진 투쟁 기간 선포
  - 03.14 전민련 등 8개 단체, ‘노정권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식 개최
  - 03.16 서울 지하철 노조 전면 파업,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지에서 3천여명의 노조원 파업 농성 돌입, 경찰에 의해 총 1,344명 연행, 약 700여명의 노조원 민주당사에서 철야농성 돌입
  - 03.19 노정권 퇴진을 위한 공투본 산하 8개 단체 소속 회원 등 5천여명,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노태우정권 불신입투쟁 선포대회’ 개최, 가두시위 전개
  - 03.20 작가 황석영(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변인), 평양 도착. 입북 목적을 분단의 비극을 가시고 문예부문에서의 남북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
  - 03.20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 결성
  - 03.22 공안당국, ‘인천노동자대학 사건’ 발표. 사무국장 신언직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3.25 문익환 목사·정경모·유원호 일행, 북경을 경유하여 평양에 도착
  - 03.25 철학 연구를 통해 과학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이를 확산 심화시킴으로써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철연) 창립
  - 03.26 장중훈(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서울동부지역 모임 총무) 의문사 사건
  - 03.27 남북작가회담 예비회담 무산, 고은·백낙청·현기영·김진경 등 불구속 입건
  - 04.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자생적인 교육이론의 정립과 교육현장의 개선에 도모함으로써 민족민주교육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국교육연구소’(한교연) 창립. 이사장 성래운, 소장 이규환(이화여대 교수)
  - 04.07 남태현(86년 서울고대 입학) 분신
  - 04.09~15 04.09 부천역에서 임투승리결의대회 강행. 이 과정에서 부천지역 최초의 가두시위 전개, 이를 이유로 한경석(투본본부장)과 임동섭(상황실장) 구속. 이에 대한 항의로 부천지역 민주노조 총파업 돌입
  - 04.09 산재노동자 최완용 분신사망
  - 04.12~05.08 이부영(상임의장), 조성우, 권형택, 이재오, 조성우, 이창복, 배종렬, 지선스님 등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4.12 리영희(한겨레 신문 논설고문) 연행, 탈출 예비음모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04.14)
  - 04.15 대학가 학원자주화 관련 무기휴업
  - 04.15 부천 49개 노동조합 총 4천여명, 노동자 총파업
  - 04.16 서울지역노조협의회(서노협) 단병호 의장 구속
  - 04.17 공안합수부,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압수 수색 및 정치학교 운영자 권오창(운영위원장), 홍경희(조직국장)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4.19 치안본부, 이은순(나우정밀노동조합 조직부장) 외 3명을 북한서적 탐독 및 노동현장 위장 취업 혐의로 구속
  - 04.20 전국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전국투본)과 서노협, 단병호 의장 석방을 요구하며 하루

동맹파업 전개

- 04.23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전일노) 결성
- 04.23 덕진양행 노조위원장 김윤기,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분신사망
- 04.25 치안본부, '평화통일시민배움터' 압수·수색
- 04.26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 결성
- 05. 고려대·연세대 대동제 기간 중에 총여학생회,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여성사진전시회' 개최. 연세대 총여학생회장 이은희 구속
- 05. '지역의료보험노조전국협의회' 결성
- 05.01 연세대에서 전국 노동자 5천여명, '세계노동절(메이데이) 10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 굴욕에 찬 지난날의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자랑스런 노동운동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 철야농성 및 가두투쟁 전개
- 05.01 5천여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지구노조총연합'(성남노련) 결성대회 개최. 의장 손길수(OPC노조 위원장) 선출
- 05.03 '전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전원협) 결성
- 05.04 서광 구로공장 노동자 김종수(노조 정의부장) 분신
- 05.10 구로공단 일대의 노조결성과 활동을 지원한 신원철(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구로노동상담소 실무간사), 이적표현물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 05.10 평화통일시민배움터 교무처장 함운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5.10 청량리경찰서, 경희대 직원노조 위원장 장백기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
- 05.11 평화연구소 사건. 안기부, 조성우(소장)와 김창수(연구조사부장)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5.16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서 10여개대 대학생 4백여명,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 건설을 위한 '서울지역민주주의학생연맹'(서민학련) 발대식 개최. 교문앞 시위 전개
- 05.24 영전기계 노동자 조정식(반제동맹사건 구속자), 산재로 사망
- 05.28 협의회라는 임의조직 형태인 민주교육실천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으로는 더 이상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결정, 연세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대회 개최. 초대위원장 윤영규 선출
- 06.05 문규현 신부 방북
- 06.10 전대협 소속 대학생 4천여명, 서울 종묘공원에서 '이철규열사 사인은폐조작 규탄 및 6월민중항쟁 계승대회'가 경찰 저지로 무산된 데 항의, 가두투쟁 전개
- 06.10 전대협 소속 대학생 2천여명, 연세대 도서관 앞 광장에서 '북한학생 서울방문방해규탄 평양축전참가 결의대회' 개최
- 06.13-14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철회 요구 구로고생 교내시위 전개. 총학생회장 류호철 중상
- 06.15 서울대에서 전교조 서울시지부 결성대회 개최. 경찰 폭력에 따른 수십명의 부상자 발생
- 06.17 '환경과공해연구회' 발족
- 06.23 한찬수(고려대 대학원 정외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6.26~07.02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사건. 김준기 교수(전 대변인)·이현수(상임의장) 등 6명 구속
- 06.27 방북을 이유로 서경원(평민당 국회의원) 전격구속
- 06.29 한양대에서 평양축전 참가 출정식 개최
- 06.30 전대협 의장 임종석 체포를 위해 경찰의 한양대 진입. 남대협 소속 오월대의 호위 아래 임종석

- 의장 등 전대협 지도부 무사 탈출
- 06.30 임수경(외국어대생) 방북
- 07.01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연) 상임지도위원 여익구, 의장 서동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7.02 안기부,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에 대해 불고지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발부
- 07.08 기아산업 노동자 이종대, 부당해고 항의 분신
- 07.08 지선스님(통일불교운동협의회 의장 겸 전민련 중앙위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7.09 전교조 교사 2천여명,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부당징계 철회 및 전교조 합법성 쟁취 범국민결의 대회 개최
- 07.12 공동창작 『어머니의 길』 관련, 문학평론가 백진기 외 6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7.22 부천시역 42개 민주노조 4,000여명의 구성원으로 ‘부천시역노동조합협의회’(부노협) 출범. 초대 의장 한경석(신광전자노조 위원장) 선출
- 07.26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문규현 신부 방북과견 발표 기자회견
- 07.26~07.27 전교조 소속 교사 4백50여명, 명동성당내 성모동산 앞에서 ‘부당징계철회 및 전교조사수를 위한 단식농성 결단식’ 후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07.30 안기부, 고현주(전민련 국제협력부 간사)·문부식·김윤태(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7.31 ‘전투경찰해체 투쟁위원회(전해투) 사건’으로 전경 양승균 등 구속
08. ‘노동자뉴스제작단’(노뉴단) 결성
08. (치안본부 발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결성
- 08.03 치안본부, 마혜식(전교조 사무처 직원)·권영대 등 2명을 중.고교생 대상 의식화 교육 실시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8.04 안기부, 평양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슬라이드 필름을 북한에 보낸 혐의로 홍성담 구속
- 08.05 남성 흥진 노동자 최성조, 구사대 폭력 구타 사망
- 08.15 이내창(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
- 08.16 서울지검 남부지청, 목동중학교 교사 김맹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8.17 그림 <모내기>를 그린 화백 신학철(민족미술협의회 전 대표) 구속
- 08.20 안기부, ‘한미문제연구소 사건’ 발표. 김현장(전민련 국제협력국장)·김영애 부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8.21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사건
- 08.28 ‘참교육학부모회’ 결성
- 08.30 KBS, MBC, CBS 노조 박송악법개폐추진위 결성
- 09.01 ‘인천노동법률상담소’ 개소
- 09.03 전교조 사수대회 무산
- 09.04 인천 경동산업 노동자 집단 분신 및 할복, 노동자 강현중과 노무관리이사 강의신 사망
- 09.04 9.4. 안기부, 미국유학을 마치고 7월말 귀국한 박태훈을, 1983년 1월 미국유학을 떠나 귀국할 때까지 재민한국청년연합 및 재미유학생단체 ‘석암회’에 가입, 미군철수 등을 주장해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09.07 김성규 동국대 총학생회장, 북한 가극 <피바다> 공연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 09.07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련), 전국농민협회(전농협), 독자적 군농민회(독자농)의 대표들, 쌀값문제

에 대한 대책회의 개최. 이 회의에서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한 자리수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조직으로, ‘쌀값보장과 전량수매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책위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공동투쟁 합의

09.08~19 문화방송 노조 전면파업. 1천40명 참가.

09.13 치안본부, ‘안양 민주노동자일동그룹(안양PD그룹) 사건’ 발표. 이기동·김혁·이성호·김학원·김대영·이숙희 등 6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09.23 문예연(문학예술연구회)과 민문연(민중문화운동연합)이 통합,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자 문화운동조직인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노문연) 결성

10. 안기부, 황석영의 북한기행문 「사람이 살고 있었네」 게재 혐의로 『창작과비평사』 주간 이시영 구속. 당시 이 글은 『신동아』에 1, 2회 게재되었으나 『창비』의 게재분만을 문제삼음

10.06 이우재·장기표·조춘구 등 전민련 탈퇴파 30여명을 중심으로 ‘새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 설치

10.06 여연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 ‘가족법특별위원회’ 발족

10.12 시집 『지리산』의 저자인 이기형 시인과 이를 출판한 정동익에게 징역 3년 구형

10.14 연구전문기술직노조협의회를 전신으로 해서 40개 노조, 140명의 발기인으로 ‘전국전문기술노조연맹’(전문노련) 결성. 위원장 김문철 선출

10.18 치안본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사건’ 발표. 오동렬·노병직·윤철호·최남기 등 15명 구속

10.24 인천시경, 박지훈(영신정밀공업사 노조 사무장)·차남호(덕창기업 노조 홍보부장) 등 2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

10.25 여성단체, 여의도에서 ‘가족법 개정 여성대회’ 개최

10.28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여성의 억압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여성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는 여성학술운동단체로 ‘한국여성연구회’ 창립.

10.29 협신사 노동자 이재호, 노조재건 활동중 피살

11. 크리스찬 운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크리스찬의 회개-자주적 신앙고백-자주적 신앙 실천이라는 모토로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애청) 결성

11.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발족

11.04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천주교전국공동위원회’(천공위) 결성

11.0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창립

11.10 전민련에서 사직(09.28)한 합법정당 추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진보정당 준비모임) 결성. 대표간사 이우재 선출

11.11 ‘전국빈민연합’(전빈련) 결성

11.12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범 선언문 발표

11.16 인천지역노조협의회(인노협) 소속 45개 노조 5천여명 노동자, 총맹파업 투쟁 전개, 130여명의 노동자 연행

12.01 안기부,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집필자인 이승환(필명 이재화)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2.14 치안본부, ‘반제애국청년회 사건’ 발표. 김성기·박동철 등 2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2.16 ‘전국건설노조연맹’(건설노련) 결성

12.16 전교조 산하 ‘교육문예창작회’ 결성

- 12.16 전노협창립 준비위원회 결성
- 12.18 전국에서 50여개 군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여성농민위원회’ 결성. 회장 임순분 선출 (92.01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으로 개칭)
- 12.19 경찰, 인천 노동자대학(부평 소재, 교장: 백기완) 강연(연사: 김문수) 원천봉쇄. 그 향의 과정에서 양석중(상임집행위원) 집단구타
- 12.25 치안본부, ‘인천지역노동자그룹 사건’ 발표. 김능구·김영민·정찬·서경선 구속
- 12.28 32개 노조 78명의 대의원이 모여 ‘경기남부지역노조연합’(경기노련) 결성. 위원장 임석순(경원제지노조 위원장) 선출. 각 지구별 참가현황을 보면 안양지구가 14개 노조 3,000여 명, 수원지구에는 8개 노조 3,000여 명, 그리고 안산지구 10개 노조 약 2,000여 명 등, 총32개 노조 8,000여 명이 참여

- \* (날짜 미상) 80년대 초반 김진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결성된 ‘상도연구실’을 모태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술운동을 위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창립 (91. ‘서사연사건’으로 다수의 연구원들 구속)
- \* (날짜 미상) 성남지역 대학생들의 모임인 ‘성남시학우회연합’(성학연)이 대학생만이 아니라 직장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성남터사랑청년회’로 발전

<1990년>

- 01.09 지역노동단체인 '오산 다함께일어서는사람들'(다섬) 결성
- 01.11 인천 명성전자노조 위원장 김기자(인노협 사무차장), 홍보부장 한선화 등 노조간부 3명, 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서적을 이유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총무부장이 노조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조선통사』 등의 사진을 찍어가 1989. 8.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문제로 됨. 고발 당시 노조간부들이 위 책을 조합원이 맡겨놓아 소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오히려 회사의 무단침입과 사진촬영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여 그대로 무마되었던 것인데, 임금인상 투쟁을 앞두고 갑자기 노조간부들이 구속되었던 것)
- 01.15 박태호(필명 이진경), 안기부 연행 (01.1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1.16 민교협의 주도적 역할로 30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교협 사무실에서 '전노협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01.17~20 '전노협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전노협 건설을 확보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지지서명운동 전개. 이 과정에서 전노협 지원공대위 소속 단체인 민교협은 학단협의 후원을 받아 '전노협 건설의 당위성 평가'라는 주제 하에 공개 학술심포지움 개최
- 01.21 87년 민주화투쟁과정에서 약사사회도 서명운동을 조직화. 6월민주항쟁 이후 지역단위 단체들이 결성되어 상호 교류하다가 전국단일조직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창립
- 01.21~23 '전노협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대대적인 광고 지원 전개
- 01.22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창립대회 개최, 위원장 단병호 선출. 노동자와 학생 등 141명 연행
- 02.02 '일꾼 도서관' 관리자인 이성희· 이정희· 이미경,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구속
- 02.07 치안본부, 윤명선(태평양화학노조 서울지부장)을 월간 『노동해방문학』에 실린 김우중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비판한 박노해의 '김우중 회장의 자본철학에 대한 전면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인쇄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연행. (02.09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2.12 안기부, '노동계급 사건' 발표. 안민규· 박태호 구속, 이미경 불구속 입건, 10명 수배
- 02.15 치안본부,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기문노련) 사건' 발표, 최은석 등 12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3. '부천사랑청년회'(부사청) 결성
- 03.11 서울시경,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 사건' 발표. 왕해전 등 4명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으로 기소
- 03.15 서강대생 문영규(총학생회 부회장)· 노효준(문화부장) 등 2명, 대학축제기간 중 <꽃파는 처녀> 공연으로 구속
- 03.20 백기완· 박형규· 계훈제· 이소선 등 재야 원로 4명, 기자회견을 통해 전민련 고문직 사퇴와 함께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 결성 공식 제안
- 03.21 '한국노총직원노조' 결성. 위원장 이명호 선출 (90.04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이에 대해 최영철 노동부장관과 관할 영등포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
- 03.22 '노동자 대학' 사건 발표. 신연직(사무국장), 박재영(조직부장), 김기나(집행위원) 등 3명,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
- 04.01~05.27 전교조,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참교육 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대회' 개최
- 04.04 대봉전선 노동자 강민호, 산재 사망

- 04.11 '민중정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 준비위원회' 결성
- 04.12 치안본부 대공3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 사건'(인천노동상담소 사건) 발표. 양재덕 등 7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형사지법 이영대 판사, 양홍영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04.13 447명의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민중의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결성. 집행위원장 이부영, 조직위원장 장기표 선출
- 04.13 KBS 노조, 서기원 사장 퇴진 요구 무기한 제작거부 투쟁
- 04.14 연세대 알렌기념관에서 '민족문화사연구소' 창립총회 개최. 공동대표 이선영·임형택 선출
- 04.15 공추련의 적극적인 참가 속에서 '전국 핵발전소 추방운동본부' 결성
- 04.21 전노협, 전교조 등 14개 재야단체,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강당에서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국민연합) 결성대회 개최, 가두투쟁 전개, 학생과 시민 659명 연행
- 04.24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련)과 전국농민협회(전농협)의 단일조직 건설 합의 및 공개 합법 대중조직의 원칙, 군농민회 주체원칙, 빈·소농 주도 원칙, 사회변혁 지향원칙 등 결성의 4원칙 채택 속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창립. 의장 권종대 선출
- 04.25 치안본부,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사건' 발표. 박윤배, 김태진 등 14명 구속
- 04.27 '서울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 결성
- 04.28 전국 28개 대학 시간강사 300여명, 고려대 강당에서 전국대학강사노조(전강노) 결성. 위원장 조재희 선출
- 05. '전국대학민주동맹협의회'(전민동) 결성. 대표 이창복 선출
- 05.01 전노협,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
- 05.03 (주)통일 노동자 이영일 분신
- 05.04 건국대 학생회관 앞 운동장에서 '(주)통일 근로자 이영일 분신자살 추모집회' 개최
- 05.09 민자당 창당일인 이날 전국 18개 지역에서 20만여 명(참가 수 차이: 「전노협백서」의 경우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자당 해체 노태우정권 퇴진 국민궐기대회' 개최
- 05.13 경찰 신구전문대 학내에 진입, '학생 무더기 징계 철회 및 등록금 인상분 환불' 등을 요구하며 분관 및 학생회관을 점거 중이던 학생 59명 연행
- 05.15 한겨레신문 독자모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한편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동참하고 민족 염원인 평화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민모임 한겨레' 결성
- 05.1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
- 05.15 한겨레신문 독자모임으로 '시민모임 한겨레' 결성
- 05.17 성남 하대원동 철거 반대투쟁에 참여해 온 이원기, 자결
- 05.18 대유공전생 신장호,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다가 열차 추락사
- 05.19 경실련 소속 회원 시민 등 300여명, 서울 종로구 파고다 공원에서 '재벌토지투기 은폐기도 규탄 및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시민대회' 개최
- 05.29 이부영·고영구·박계동·제정구 등 야권통합파 14명, 민연추에 일괄사퇴서 제출
- 05.31 야권통합파, '범민주 수권정당 결성을 위한 통합추진회의'(통추) 결성 (90.12.21 공식적 해체, 각각 선호하는 야당을 기준으로 민주연합과 신민주연합으로 분리, 각각 민주당과 평민당으로 흡수)

- 06. '민중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 결성. 위원장 김문수, 집행위원장 유인렬 선출. 이후 민연추와 결합
- 06.11 한상봉(인천 선미산업 노조사무장) 등 3명, 인천시경 대공분실로 연행, 『노동자의 철학』 등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
- 06.16 민교협,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재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개악된 사립학교법 철폐운동 전개
- 06.22 치안본부,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7.01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 결성
- 07.10 '한국정신대연구소' 발족
- 07.12 김진석, 3당합당 이후 민자당의 각종 법안 날치기 통과를 권위주의 통치로의 회귀로 인식하고 이에 항거하기 위해, 제150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진입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민자당을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악법양산 임시국회 온 국민이 분노한다. 장기집권 획책하는 민자당을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침. (<연구팀 자료>)
- 07.13 치안본부 대공3부, '아라리연구원(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사건'(『제주4·3 민중항쟁』 출판사건) 발표. 김명식 원장 등 4명 구속
- 07.18 성남노련 산하 섬유업종의 생존권 사수와 노조활동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성남지역 노조탄압분쇄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리본달기, 성명서배포, 공단홍보 등을 진행
- 07.19 동인 또는 씨클형태로 존재하던 대학 문학·문예단체들의 체질개선의 결실로 '서울지역대학생 문예연합' 결성
- 08. <93.08.11 검찰 기소 내용> 황주석, 조국 등을 중심으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결성
- 08.06 경찰 저지로 범민족대회 대표단 방북 무산
- 08.07 노동자 최동(인<부>노회사건 출소자·80년 성균관대 입학), 출소 후에도 고문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한양대 사회과학대에서 분신사망
- 08.15 연세대에서 '제1차 범민족대회' 개최
- 08.15 범민련 및 범청학련 관련 통일운동가 구속사건 발생
- 08.22 치안본부·보안사, 현역군인 10명이 포함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 발표. 박태호 등 8명 구속
- 08.30 금강공업 노동자 집단분신 사건. 박성호·원태조 사망, 정만교·신강식·방호천 화상
- 09.02 88년 10월 18일 대선 및 총선의 부정을 고발하며 연세대에서 투신한 김병구, 병상생활중 자결
- 09.05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후원회' 결성
- 09.19 사노맹 활동가 현정덕 등 3명 구속
- 09.20 전국 대학가 반민자당 투쟁 선포식
- 09.25 인노협, 인천지역노조활성화추진위, 의료보험노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등 인천지역의 전노조를 포괄하는 최초의 연대기구로 '단협변경명령 철회 및 노조활동 자유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결성
- 10. 빈민지역 여성교육 차원에서 '상계어머니교실' 개원. (92.03 상계어머니학교로 개칭). 대표 최광기
- 10. 전국산업재해노동자연맹(87.9.27 결성)과 산업재해노동자회(88. 결성)가 통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결성
- 10.05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양 이병(외대 러시아어과 4년 제적)

- 양심선언, 보안사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 10.10 치안본부, '대학가 북한영화 상영'을 이유로 윤진호 고려대 총학생회장·권오중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발부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홍철 판사 기각)
  - 10.12 보안사 불법사찰 규탄 보라매 집회
  - 10.13 '보안사 불법사찰규탄과 군정종식 국민대회' (보라매 집회) 개최, 2만여명 시가행진, 대학생 등 163명 연행
  - 10.15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 공식화
  - 10.18 전대협 반미구국결사대, 미대사관 점거사건. 우루과이라운드 결사 저지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요 슬로건으로 주장
  - 10.30 안기부 제1차장 김영수, TV기자회견을 통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
  - 11.05 안기부, '통일노래 한마당' 사건 발표. 경희대 성악과 졸업생이며 전대협 간부를 지냈던 허정숙, 1990년 3월초 전대협 의장 송갑석군의 지시로 연세대에서 열린 '8·15 범민족대회성사투쟁'에서 '통일노래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풍물노래패 등을 동원, 문화행사를 주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11.08 한양대생 최응현(87년 입학), 민주화 투쟁에 제대로 복무하지 못함을 자책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 (88년에 전방입소 반대투위 부위원장 활동 중 구속, 11월 집행유예 출소)
  - 11.10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당' 창당전당대회 개최. 상임대표위원 이우재 및 대표위원 김상기·김낙중 선출, 고문 백기완 추대, 사무총장 이재오·정책위원장 장기표·기획조정실장 정태윤·대외협력위원장 조춘구·대변인 정문화·제1노동위원장 김문수·제2노동위원장 신철영·정치연수원장 지은희·교수위원장 오세철 등 임명
  - 11.16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진상규명, 범죄인정, 국회결의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결성
  - 11.20 치안본부,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사건' 발표. 김진철 등 8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11.30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탄압 및 구속사건'. 조용술·이해학·조성우·이창복·김희택 구속
  - 12. 전국 16개 대기업노조로 구성된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연대회의) 출범
  - 12.06 김병곤, 위암 투병생활 중 사망
  - 12.12 인권변호사 조영래,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
  - 12.21 전노협 중앙위 회의장에 백골단 난입, 김영대 직무대행 등 지도부 31명 연행
  - 12.24 용산경찰서, '노동자들에게 폭력혁명을 내걸고 의식화 학습을 해 온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김민승 구속
  - 12.26 안기부,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발표. 송갑석(전대협 의장)·최원국(외국어대) 등 전대협 및 자주민주통일그룹 관련자 3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991년>

- 01.05 원진레이온 노동자 김봉환 직업병 인정 투쟁중 사망
- 01.18 전국 54개 대학노조 조합원 6,200여명, 대학노조 사수를 위한 총회과업투쟁 전개
- 01.23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발족. 준비위원장 문익환 목사 (발족 다음날부터 재경 실행위원 전원탈퇴 협박 및 실행위원장 연행 등 집중탄압으로 인해 정식 결성이 지체되다가 95.02.25 범민련 남측본부 정식 결성)
- 02.~04. 대우자동차 노조 탄압 항의 농성 및 가두시위, 회사측 고소 고발로 노조간부 62명 수배
- 02.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 결성
- 02. 엄천용(부천 한일초음파노조 사무장), 술자리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구속
- 02.03 남현진(외국어대생·전대협 한라선봉대 용성총련 대표) 군 의문사
- 02.07 87년대선 이래 공명선거감시단 운동의 성과에 바탕하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발족
- 02.09 의정부 다락원에서 열린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 수련회 참가자 60여명 간부 전원 연행
- 02.17 ‘민족문제연구소’ 발족
- 02.20 송종호(87년 서울대 입학) 군 의문사
- 02.20 향린교회 홍근수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3. 공추련의 ‘반핵평화위원회’가 핵발전소 중심의 환경운동을 전개해오는 과정에서 그 위원들 중 일부가 ‘핵문제에 관한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인식, ‘반핵평화운동연합’(반평) 결성
- 03.02 민중당, 파고다공원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서특혜은폐 조작 부패정권 규탄대회’ 개최, 가두행진
- 03.09 ‘수서비리규탄 국민대회’ 개최
- 03.11 안기부, 사노맹 중앙상임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 시인 검거 발표
- 03.12 안기부, 박노해·최성철 등 사노맹 관련자 6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03.14 ‘경수지역노동자연합’(경수노련) 결성 혐의로 이용석 등 6명 구속
- 04.24 ‘폐놀폐수 오염사건 규탄대회’ 개최
- 04.26 명지대생 강경대, 시위 도중 백골단에 의한 폭행으로 사망
- 04.27 ‘고 강경대열사폭력살인규탄 및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범국민대책회의) 결성
- 04.27 한겨레연구소 연구원 김영환,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
- 04.29 연세대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폭력살인정권규탄 범국민결의대회’ 개최, 가두시위 전개
- 04.29 민교협과 학단협, 강경대 폭행치사사건 및 현 정세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 05.~06. 91년 5월투쟁
- 05. ‘노동자권력 쟁취를 위한 국제사회주의자 일동’ 그룹(일동그룹) 결성
- 05.01 세계노동절 102돌 기념대회
- 05.01 원진레이온 직업병 살인 및 강경대 폭력살인 규탄대회
- 05.03 경원대생 천세용 분신 사망
- 05.04 범국민대책회의,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백골단 전경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 가두시위 전개
- 05.06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전노협 중앙위원), 안양병원에서 변사체로 발견

- 05.06 한진중공업노조·전노협·연대회의·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전국노운협·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준비위원회 등 6개 단체를 중심으로,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과 노동운동 탄압 분쇄 전국노동자 대책위원회’ 결성
- 05.08 여성단체연합(여연), 명동성당 앞에서 ‘백골단, 전투경찰 해체 및 폭력전권 규탄 여성대회’ 개최
- 05.08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분신사망
- 05.10 성남피혁 노동자이자 민주화운동직장청년연합회원인 윤용하, 전남대에서 분신 (05.12 사망)
- 05.11 서울지역의료보험 노조 파업 투쟁
- 05.12 태평양화학 노조 파업 투쟁, 구사대 폭력에 맞서 1,100여명의 조합원 농성투쟁 전개 (06.06 공권력 전격 투입, 이수홍 위원장 등 6명 구속)
- 05.13 전대협 구국결사대 소속 대학생 47명, 민자당사 점거. 전원 연행
- 05.14 고 강경대군 1차 장례식. 민교협 교수들, ‘사랑하는 제자 죽인 노태우정권 퇴진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참석
- 05.18 고 강경대군 2차 장례식. 전국 34개 시군에서 광주항쟁 계승과 노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대회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 전개
- 05.18 연세대 정문 앞 철교에서 이정순 분신
- 05.25 성균관대생 김귀정, 경찰에 의한 폭력적 시위진압과정에서 압사
- 05.25 범국민대책회의와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고김귀정열사폭력살인대책위원회’ 구성.
- 06.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전교조 공동주최로 성인 1,500여명, 어린이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평화 한마당’ 개최
- 06.03 외대생, 정원식 총리서리에게 계란투척. 310명 연행. 정원택 외대 총학생회장 등 수배
- 06.05 치안본부 대공3부, ‘민족해방활동가조직 사건’ 발표. 구성원 18명 체포, 방민수(86년 서울대 정치학과 입학) 등 12명 구속
- 06.08 인천 삼미기공 노동자 이진희 분신 (06.15 사망)
- 06.15 인천 공성교통 노동자 석광수 분신 (06.24 사망)
- 06.27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 회원 유재관, 사무실 침탈 우려 속에 인사연 사무실을 빠져나오다가 실족사
- 06.27 국군기무사령부와 검찰,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연구원들 연행, 구속.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사건’ 발생
- 07. <92.10. 안기부 발표> 최호경(민중당 성남을 사무국장)이 간첩단에 포섭되면서 90년말경 주사파 조직원 241명이 결성한 ‘95년위원회’를 흡수·재편하여 ‘애국동맹’ 결성. (“애국동맹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핵심전위조직”)
- 07. 민중민주(PD)계열의 비합법 노동운동 조직체 가운데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민주주의민족통일노동자동맹’(삼민동맹), ‘노동계급’ 등 세 조직을 중심으로 이른바 ‘3파연합’이 형성,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창준위) 결성. 위원장 주대환 선출 (91.12.03 자체 논의를 통하여 해산 결의)
- 07.04 강경대 폭행치사건 재판 관련 법정소란죄로 박정기·강민조 등 민가협, 유가협 회원 구속 및 수배
- 07.14 우리노동문제연구원과 안양노동상담소 등 전국 28개 노동관련단체들,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결성. 공동의장 한경남 선출
- 08.03 신구전문대 제적생 고재욱·류정하, 수련회 도중 익사
- 08.15 범민족대회 사수 및 북측대표단 환영대회, 경찰봉쇄로 무산

- 08.22 합동물산 노조위원장 김처칠, 의사
- 08.26 경찰청 보안국,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제파그룹) 사건’ 발표. 박성인(중앙위원), 고민택 등 13명 구속, 3명 불구속 입건
- 09.17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공업화학과 박사과정), 총기사망
- 09.19 구로지역 내의 여성조직으로 ‘살기좋은구로지역만들기여성회’(살구여성회) 결성 (이후 구로구가 금천구로 분화되면서 금천구로 명칭 변경)
- 09.29 300여명의 전국 청년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청협 건설준비위원회’ 결성
- 10. 노동법개정 저지투쟁 전개
- 10.09 90년 전국노동자대회, 91년 노동절대회 등의 공동투쟁과 고박창수위원장 노동자대책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사안별 연대사업들의 축적된 성과를 기초로, 전노협·업종회의·전국노운협·전국노련 등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ILO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 결성
- 10.13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총연합’(의보총련) 결성
- 11. <공안당국 발표> “트로츠키의 사회주의연구혁명론에 입각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일봉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주의자들’(IS) 결성
- 11.10 6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
- 11.12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 사건’으로 김현성 등 구속
- 11.25~27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개최
- 11.26 전국농민회총연맹, 장충단공원에서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쌀값보장 전국농민대회’ 개최
- 12.01 연세대에서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결성대회 개최. 권종대·고광섭·지선·한상열 등 4명 공동의장으로 선출. 가두시위 전개
- 12.01 서충련, 서청협, 서울시노점상협의회, 서울노운협, 구로청년회 등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결성
- 12.01 권미경 투신 사건
- 12.03 ‘전국도시철도노동조합연맹’ 결성
- 12.09 미8군 기지이전정책 반대 평택주민 시위
- 12.15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카톨릭노동청년회전국본부, 한국카톨릭농민회 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정연) 결성
- 12.15 비합법전위정당 형태의 사회주의노동당 건설노선의 비판적 재검토를 통해 합법적 노동자정당 건설로 방향전환을 결의하면서 241명의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 발족

<1992년>

- 01.06 전농·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 쌀 시장 개방반대 전국시위
- 01.10 ‘노동자권력쟁취를 위한 국제사회주의자일동(일동그룹) 사건’으로, 정창교 등 3명 구속
- 01.11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사건’으로 주대환·민영창·이용선·전성 등 구속(92.04.01. 구인회, 이상민, 최정익, 여을환, 정광필, 임영탁 등 구속 / 92.04.28. 신형록, 송은하, 이호성, 이지연, 한삼현, 이정태 등 구속)
- 01.13 ‘조국사랑은 지역사랑에서부터’라는 기치 아래 ‘안양사랑청년회’(안사청) 출범
- 01.18 비전향 장기수 박관수 기관지 천식증세 악화로 사망
- 01.19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27개 지역별 노조대표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동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창당준비위원회(한노당창준위) 공식 발족. 창당준비위원장 주대환 선출(공안당국, 공개적인 정당의 결성과 활동을 선언한 이들을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혐의로 체포, 구속)
- 01.21 ‘안산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사건’으로 박태하 등 6명 구속
- 02.07 민중당과 한노당창준위, 3·24총선을 앞두고 02.06까지 총 15차례의 통합교섭을 마무리, ‘통합민중당’ 창당 기자회견문 발표
- 02.10 “빈곤가정의 가난한 여성과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자립심을 키워주고 민주시민으로 교육훈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빈민여성교육선교원’(빈여교선) 창립
- 02.12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불교로 이룬다”는 모토 아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창립
- 02.12 ‘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 범국민투쟁본부준비위’ 결성
- 02.20~10.28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발생, 관련자 구속사태
- 02.20 민연련·KNCC 언론대책위·한국여성민우회·한국사회언론연구회·중앙언론연구회 등 5개 단체가 연대하여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선감연) 결성. 상임대표 정동익 선출
- 02.23 ‘진청협 건설준비위원회’의 활동 성과에 힘입어 세종대 대양홀에서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창립대회 개최(98.09.20 해산)
- 02.26 지역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모색과 노동조합의 위기의식의 공감대를 형성, ‘부천시흥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의장 조영초 선출
- 02.27 ‘유죄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03.22 이지문 중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군 기무사 선거개입 폭로 기자회견
- 03.29 주체사상과 사건
- 04.08 통합민중당 제15차 중앙위원회, 민중당 해체문제를 놓고 민중당 지도부측과 한노당 창준위측의 의견 대립. 민중당 지도부를 포함해 중앙위원 16명 퇴장, 속개된 회의에서 전회식의 안(민중당 해체보다는 새로운 정치조직체로의 전환 주장)이 42 대 1로 가결
- 04.12 숭실대생 이상렬(87년 입학) 과로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
- 04.14 주대환·노회찬 등 한노당창준위 측의 주요 활동가들, 제15차 중앙위의 민중당 조직전화 결의에 따라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결성. 대표 최윤 선출
- 04.15 이우재·이재오·장기표 등 민중당 지도부 및 핵심 간부들, 민중당 해체를 선언하는 신문광고 게재
- 04.21 이우재·이재오·장기표 등 민중당 지도부 및 핵심 간부들,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민사협) 결성

- 04.28 송실대생 박현민, 과로사
- 04.29 안기부, 백태웅(중앙위원장) 등 사노맹 조직원 39명 검거 발표
- 05.01 경찰청 보안국, '남한사회주의학생동맹' 주요간부 20명 검거, 신형록 등 12명 구속
- 06.10 6월항쟁 기념식 및 민자당 타도 결의대회
- 07.04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대회
- 07.12 그동안 사안별 연대활동을 진행해온 전국 각 지역의 여성노동자회들의 전국조직으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여노협) 결성
- 08.01 92년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결성식 개최
- 08.08 신당동 철거민 철거반대 시위
- 08.15 제3차 범민족대회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 결성 선포.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선출
- 08.29 대구 경북산업대에서 전국의 47개 노조 99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학노조협의회와 대학노조연합이 '전국대학노조연맹'(대학노련)으로 발전적 통합
- 08.31 안기부, 전 민주당 대표 김낙중을 간첩 혐의로 구속
- 09.02~10.21 MBC 노조 공정방송쟁취 파업투쟁
- 09.27 '노동자문화마당 일터 사건'으로 김동호 등 6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인천에서 구속
- 10. <경찰청 보안국 발표> 91.05 결성된 '노동자권력쟁취를 위한 국제사회주의자 일동'그룹(일동그룹)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이 가운데 현장노동자의 조직화를 중시하는 분파가 '혁명적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혁사노)' 결성
- 10.06 안기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애국동맹) 사건' 발표
- 10.28 윤금이씨, 주한미군병사(케네스 리 마클 이병)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
- 11.01 노동자계급해방투쟁위원회(노해투위) 사건으로 성두현, 이철수, 김상희, 박철수, 문용주, 조휘택, 양승호, 양태석 등 구속
- 11.05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에 대해 경기도 동두천민주시민회와 대학생회 등 13개 단체, '주한미군의 윤금이씨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93.10.26 공대위 발전적 해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로 정식 발족)
- 11.07 미2사단 포병여단 정문 앞에서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의 윤금이씨 살인만행 시민규탄대회' 개최
- 11.12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쌀 전량수매 학교급식 완전실현 92 전국여성농민대회' 개최
- 11.14 전국 15개 대도시에서 '공정선거 실현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
- 11.17 '주한미군의 윤금이씨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에서 '주한미군에게 죽임을 당한 윤금이씨 추도식 및 시민규탄대회' 개최
- 11.23 문순덕 등 5명, '노동자정치활동센터 사건'으로 구속
- 11.28 장현구(경원대생), 제14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참석 중 성남경찰서에 연행. 조사과정에서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머리를 구타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받는 것을 성남시 산자교회 목사 김해성 등이 목격. (<연구팀 자료>)
- 12. 남북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취지로, '평화와통일을위한 남북나눔운동' 결성. 대표 김성수 성공회주교 선출

\* (날짜 미상) 92년 대선 당시 '민중의정치세력화를위한청년연석회의' 결성 (이후 진보민중청년협의회를 거쳐 96.03 진보민중청년연합: 진보민청으로 정식 출범-98.06.24 '진보민청사건'으로 김봉태

의장 등 구속)

\* (날짜미상) 전교조 해직교사 임희진, '전교조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암으로 사망

#### <1993년>

01.20 인권변호사 황인철, 지병인 직장암으로 사망

02.18 환경운동연합에 참여해 온 환경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객관성,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민간환경운동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노력하기 위하여 '시민환경연구소' 창립

##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1980년대 단체편

발행일: 2003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